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한국의 잠재성장력 과연 위기인가

-경제민주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2012. 11. 13.(화) 09:30~17:2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

공동 주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조선일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한국의 잠재성장력 과연 위기인가

–경제민주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자료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기획하여 수행된 협동연구사업 (잠재성장력 종합연구)의 중간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최종보고서는 연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등 록			
09:30~10:10	등록/준비		
개회식			
10:10~10:20	개 회 사: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제 1 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10:30~11:30	**사 회: 김정식**(한국국제경제학회장, 연세대 교수)		
	발 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1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2	**표학길**	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대 교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국제비교분석	**김진영**	한국경제학회, 고려대 교수
오찬 (11:30~13:00)			
[제 2 부]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13:00~14:20	**사 회: 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발 표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1)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2)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산업구조 및 산업 연관관계 개선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활동인구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부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하준경**	한국국제경제학회, 한양대 교수
[제 3 부]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14:30~16:00	**사 회: 백경환**(한국계량경제학회장, 성균관대 교수)		
	발 표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1	**신인석**	한국경제학회, 중앙대 교수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2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3	**신영수**	한국경제연구학회, 서울여대 교수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4	**김재영** **표학길**	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대 교수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5	**서승환**	한국응용경제학회, 연세대 교수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6	**이종은**	한국국제경제학회, 세종대 교수
[제 4 부] 종합토론			
16:10~17:20	**사 회: 박진근**(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토 론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양수**(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신석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영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항근**(한국응용경제학회, 중앙대 교수)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도준**(노무라종합연구소 부지점장)	
	표학길(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대 교수)	**황종률**(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가나다 순)

목 차

[제 1 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1.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 3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2.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1 ····· 21
신석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3.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2 ····· 39
표학길(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대 교수)

4.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국제비교분석 ····· 61
김진영(한국경제학회, 고려대 교수)

[제 2 부]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5.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1) ····· 77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6.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2) ····· 157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7. 산업구조 및 산업 연관관계 개선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 181
오영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경제활동인구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 221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9. 과학기술부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 237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10.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 263
원종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 295
하준경(한국국제경제학회, 한양대 교수)

[제 3 부]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12.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1 ····· 315
신인석(한국경제학회, 중앙대 교수)

13.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2 ····· 365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3 ····· 445
신영수(한국경제연구학회, 서울여대 교수)

15.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4 ····· 491
김재영·표학길(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대 교수)

16.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5 ····· 527
서승환(한국응용경제학회, 연세대 교수)

17.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6 ····· 579
이종은(한국국제경제학회, 세종대 교수)

[제 4 부] 종합토론

CONTENTS

제1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01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김동열

Ⅰ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이

1. 잠재성장률 하락세 지속 (HP 필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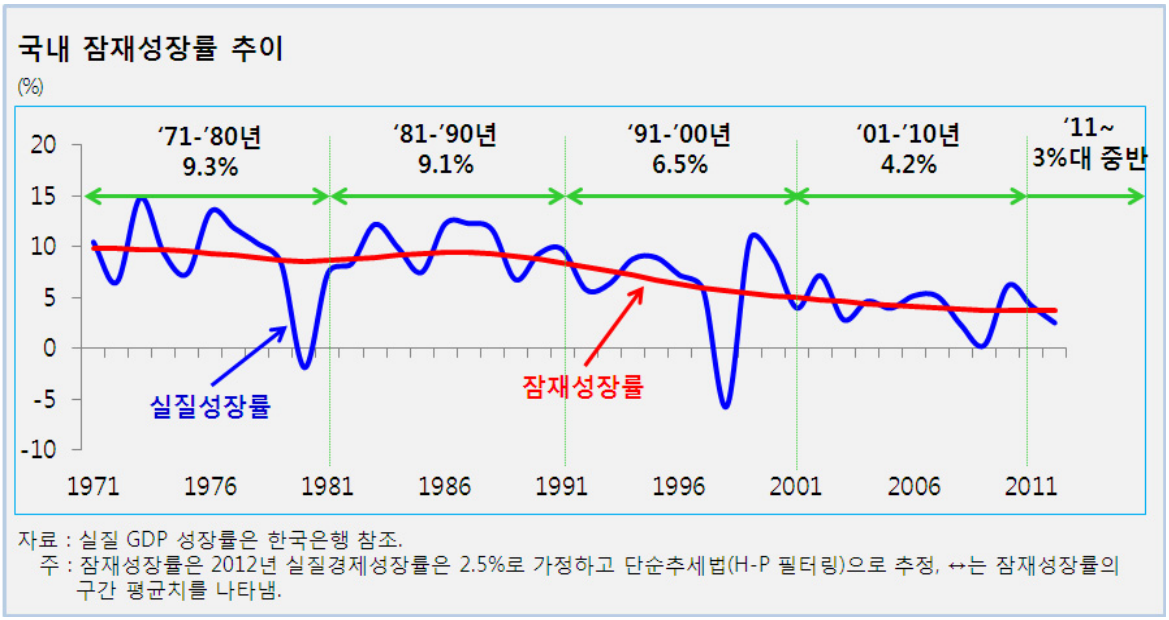
○ 시계열 접근법을 통한 추세 GDP 방식으로 잠재 GDP를 산출한 후, 국내 경제의 주요 분기점을 기점으로 기간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계산함

- 1970~2012년까지 실질 GDP를 이용하여 HP 필터링을 통해 잠재 GDP를 산출하였음
  - 2012년 경제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5%를 이용

○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반에서 움직일 전망

- 국내 잠재성장률은 1970~1980년대에 9%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급락
  - 국내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1971~1980년) 9.3%, 1980년대('81~90년) 9.1%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91~'00년)에는 6.5%, '00년대에는 4.2%, '11년 이후는 3%대 중반(최근 3.7%)으로 하락
  -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최근 5% 이하로 빠르게 하락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에는 실질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저성장기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1971~2012년)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
2. ↔는 잠재성장률의 구간 평균치임.
3. 2012년 실질경제성장률은 2.5%로 가정.

2. 잠재성장률 구성요소별 기여도 변화 (성장회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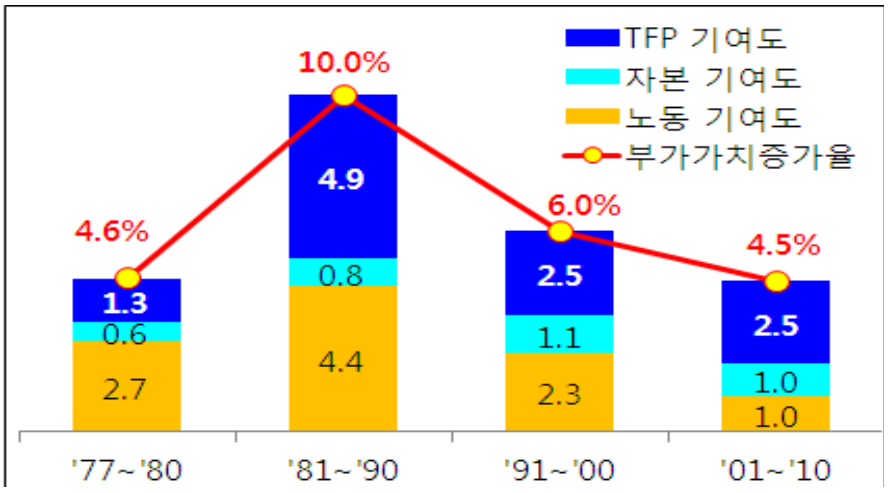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급락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패턴으로 전환

-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주도 경제성장이 시현되고 있으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대폭 하락

•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보면 1980년대 4.9%p에서 2000년대 2.5%p로 큰 폭 하락

•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총요소생산성 증가율/부가가치 증가율*100)은 2000년대 55.1%로 최대 수준에 달했으나, 이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의 기여율이 2000년대 들어 20% 초반대로 급락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시기별 전산업 성장 기여도 분해 〉



자료 : EU-KLEMS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EU-KLEMS 원자료는 1977-2007년까지 이용. 2008-2010년까지는 시계열을 연장하여 이용
2. 시계열 연장은 각 계열의 시간에 대한 회귀를 통해 구해진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여 추정

〈참고〉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잠재성장률과의 비교

- 거시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있던 주요 시점(1980년 오일쇼크, 1988년 서울올림픽,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근방을 기준으로 차우 테스트(Chow test)[1]를 통해 주요 경제적 사건의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 각 시점에서 실질GDP 데이터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 다만, 차우 테스트 결과에 따르는 시기구분을 통해 얻은 구간별 잠재성장률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1990년대 이후 양자 간의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구간은 양자가 동일한 값을 보이나, 추정 구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음

연대별 구간 설정	'71~'80년	'81~'90년	'91~'00년	'01~'10년	'11~'12년
	9.2%	9.1%	6.5%	4.2%	3.7%
차우 테스트를 통한 구간 설정	'70~'79년	'80~'88년	'89~'97년	'98~'07년	'08~'12년
	9.4%	9.1%	7.4%	4.7%	3.7%

1) 차우 테스트(Chow test)는 시계열 데이터의 기간을 나눈 후 각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얻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검정하는 테스트로 특정 이벤트로 인해 경제구조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아닌지의 검정에 이용.

Ⅱ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잠재성장률의 구성요소와 하락 원인〉

잠재성장률 구성요소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 미흡
		人的 자본	- 인적자본 형성 시스템 취약
	자본		- 국내투자 위축과 투자환경 개선 미흡
총요소 생산성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 등)		- 내수 위축과 내·외수 선순환구조 약화 -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부패, 낮은 신뢰 등으로 사회적 자본 미흡

1.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주력세대가 고령화

-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08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후 소폭 개선되었지만 2011년 1.24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임.

• 80년대 이후 상승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61.9%에서 2011년 61.1%로 소폭 하락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도 고도성장기('70~'79) 3.2%에서 금융위기 후('08~'11) 0.9%로 하락

〈인구구조 변화 통계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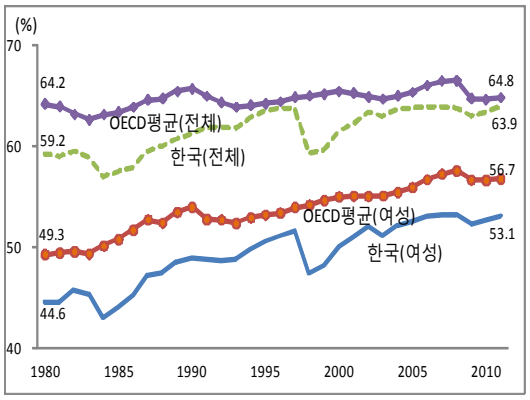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6	0.75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22	1.24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68.4	72.8
경제활동참가율	57.6	55.9	60.0	61.2	61.0	61.1
생산가능인구 비중	54.4	62.2	69.3	71.7	72.8	73.0

자료: 통계청. 주: 고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100

- (낮은 고용률과 생산주력세대 고령화)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으며,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고용 미스매칭과 경제 활력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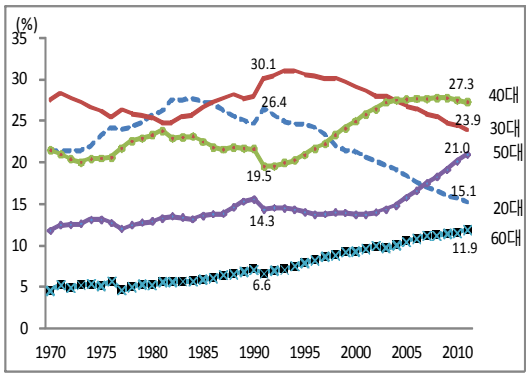
  • 여성 고용률이 낮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40~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주요경제활동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2. 인적 자본 형성 시스템 취약

○ 인적 자본의 중요성[2]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시스템과 인적 자본 형성 시스템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대졸자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지만, 창의적인 고급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졸자 비율은 2009년 25-34세 인구 중 63.0%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시장과 수요자의 수요 충족도 조사에서는 총59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침

2) 인적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제조업에서는 '91~'97년중 6.5%에서 2000~2005년중 10.8%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4.6%에서 17.1%로 상승(최요철 · 김은영,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2007년2월호, 한국은행)

- 또한, 2011년 현재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3] 있어서,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0년 기준 세계 3대 과학저널 논문 발표 순위는 미국 1위, 독일 3위, 일본 5위에 비해 한참 뒤진 15위[4]에 그침

- 2012년 기준 세계 100위 대학 순위를 보면 미국 31개, 영국 18개, 일본 6개, 호주 6개, 독일 4개, 한국 3개로서 아직은 만족할 수준은 아님[5]

〈대졸인구 비중 및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대졸인구 비중 (2009년 기준)	싱가포르 69.7%	한국 63.0%	대만 58.0%	캐나다 56.0%	일본 56.0%	미국(19위) 41.0% 독일(35위) 26.0%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핀란드 8.70	스위스 8.46	싱가포르 8.25	캐나다 7.82	아일랜드 7.52	한국(27위) 5.58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주: 대졸인구 비중은 25세-34세 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 수요충족도는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독일 8위, 미국 25위, 일본 36위를 기록.

- 실업계 고교 진학률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중등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도 효율적이지 못함

-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 83.8%로 영국 59.2%, 일본 56.2%, 미국 53.2%, 프랑스 41.0%, 독일 35.4% 에 비해 높고 세계 최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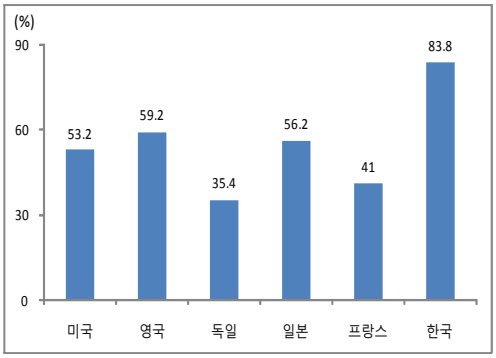
- 한국의 실업계 고교 진학률은 2008년 24.4%로 OECD평균 42.7%, 독일 53.2%의 절반 수준이며, 현장과 결합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임

3) 2011년 현재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미국 266명, 독일 30명, 일본 11명, 한국 0명 (IMD, 『국제경쟁력보고서』, 2012)

4)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12월28일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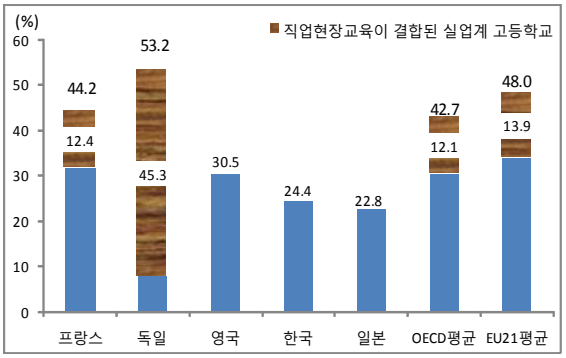
5) 영국 대학평가 전문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2년 세계 대학평가(www.top-universities.com) 순위. 200위 대학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54개, 영국 30개, 독일 11개, 일본 10개, 캐나다 9개, 호주 8개, 스위스 7개, 중국 7개, 한국 6개

〈주요국의 대학진학률〉



자료: OECD 통계.
주: 2008년 기준.

〈주요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1.
주: 2008년 고등학교 교육과정(ISCED3) 기준임.

3. 국내투자 위축과 투자환경 개선 미흡

○ 외환위기 이후 국내투자는 감소하고 해외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

- (국내투자 위축, 해외투자 급증)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의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80년대 12.8%, 90년대 5.5%, 2000년대에는 2.6%로 하락했는데, 특히 2006~2010년 평균 증가율은 2.3%에 그침

•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평균 20%에서 2000년대 이후 평균 2%대로 떨어졌고 건설투자 증가율도 1980년대 평균 12.9%에서 2000년 대 평균 3.9%대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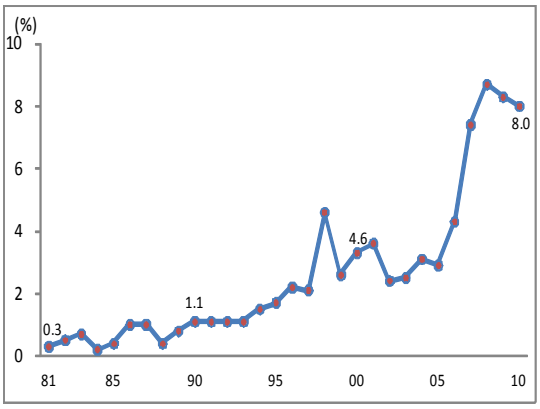
• 해외 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80년대에는 1% 미만에 머물렀지만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기준 8%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71~'80	'81~'90	'91~'00	'01~'10	'01~'05	'06~'10
총고정자본형성	14.9	12.8	5.5	2.6	3.2	2.3
설비투자	20.3	12.6	9.1	2.1	1.3	0.2
건설투자	11.3	12.9	3.4	3.9	4.4	6.3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은 명목기준.

- (투자재원도 감소) 저축률 하락 등으로 국내 투자재원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증가

  • 국내 총저축률은 '86-'90년 37.8%로 가장 높았으며, 2006~2010년 평균 30.9%까지 하락. 이는 기업의 높은 사내 유보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크게 낮아진데 기인

  • 개인 순저축률은 1986~1990년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여, 1996~2000년 기간에 15.5%를 기록, 2006~2010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3.6%로 급락

4.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 현상

○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R&D 투자 효율성은 여전히 낮음

-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43.9조 원, GDP 대비 비중은 3.74%까지 확대됨 (※'70년 0.37%, '80년 0.56%, '90년 1.72%, 2000년 2.30%)

  • 2010년 기준 이스라엘 4.40%, 핀란드 3.8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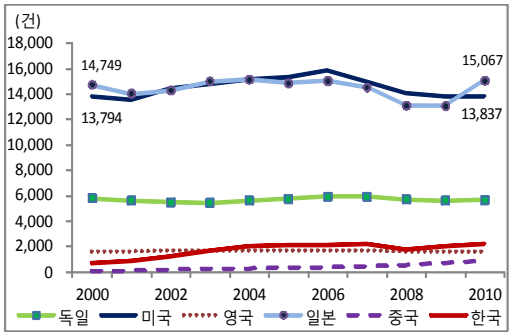
6) OECD(2012),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단, 낮은 수준의 3극 특허, 기술무역수지 적자 폭의 확대 지속, 연구개발투자에 못 미치는 기술경쟁력 등 R&D 투자의 효율성은 낮은 편임

• 한국의 3극 특허[7] 건수는 2010년 2,182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1만 5,067개와 미국 1만 3,837개에 크게 뒤질 뿐 아니라 독일(5,685개)과도 2배 이상 격차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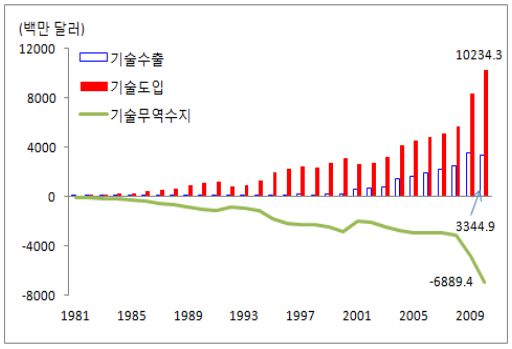
• 기술수출은 2010년 33.4억 달러, 기술수입은 102.3억 달러로 기술무역 수지적자 규모는 수출의 2배 이상 수준인 68.9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기술수출을 기술수입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비도 2010년 기준 미국 1.46배, 일본 4.60배, 영국 1.81배, 독일 1.21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33배 수준[8]

〈 세계 3극 특허 추이 〉



자료 : OECD(2012),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기술무역 수지 추이 〉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 또, R&D 투자 및 연구원의 상위 20대 기업 집중도가 높은 등 쏠림현상도 심화

• 2010년 현재 국내기업 R&D투자의 40.9%가 상위5대 기업, 46.2%가 상위10대 기업에 쏠려 있으며, 정부 R&D투자의 목적도 '경제발전'에 52.3%나 쏠려 있음

5. 내수 위축과 내·외수 선순환 구조 약화

○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취약하며 수출의 트리클다운 효과는 약화되고 있음

7) 미국, 유럽, 일본의 3개 특허청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말하는데, R&D 투자 효율성 대리 지표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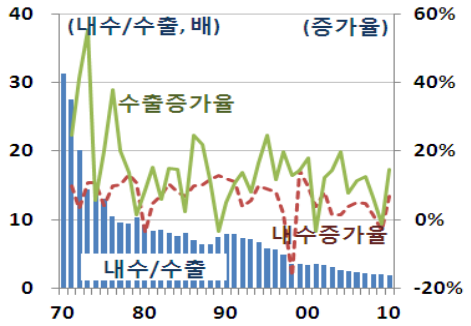
8) OECD(2012),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내수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내수 부문 비중이 위축되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실질 가치 기준 내수/수출 비중은 1970년 31배에서 1990년 7.9배 2000년 3.3배에 이어 2010년 현재 1.9배로 크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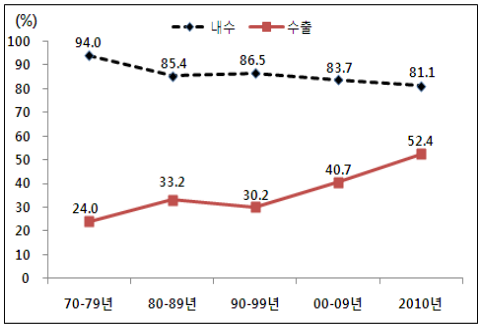
  • 다른 선진국들의 소득 2만 달러 달성 당시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GDP대비 비중은 53.5%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9]이며, 소비와 투자를 합친 내수의 GDP 비중은 1970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81.1%까지 내려와 있음[10]

〈내수/수출 증가율 및 비율〉



자료: 한은 통계(실질가치 기준) 이용 자체계산.
주: 내수=소비+투자, 수출= 재화와 서비스 수출

〈내수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주: 내수 = 민간소비 + 총고정자본형성, 명목기준

- 해외 현지생산의 증가, 부품·소재 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감소 등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어 있음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고용감축, 임금억제,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크게 약화됨[11]

  • 수출의 취업 유발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크게 감소[12]

9) 선진국의 2만 달러 소득 당시 민간소비의 GDP 비중은 프랑스 57.8%, 이태리 59.2%, 일본 59.3%, 캐나다 59.7%, 독일 60.4%, 영국 60.7%, 미국 61.3%로서 우리나라의 53.5%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었음

10)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GDP 비중 52.4%는 독일 46.0%, 영국 29.5%, 일본 15.2%, 미국 12.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11) 독일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수출이 2.4배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19% 증가. 일본도 2002년 경기회복세 이후 수출은 51% 증가한 반면 내수는 4% 증가에 그침(한국은행, '수출-내수 간 연계 약화- 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외, 2007.1.)

12)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0명에서 2005년 13.6명으로 감소했고, 소비는 21.4명에서 17.8명으로 각각 감소

6.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매우 낮고 영세함

- 서비스업은 2010년 현재 국내 총산출 가운데 37.7%를 차지하고, 취업자의 66.4%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산업

  • 2010년 기준 서비스업의 국내산출액은 1,177.4조원으로 국내 총산출 3,124.0조의 37.7%를 점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는 1,351.6만 명으로 총취업자 2,035.5만 명의 66.4%를 차지[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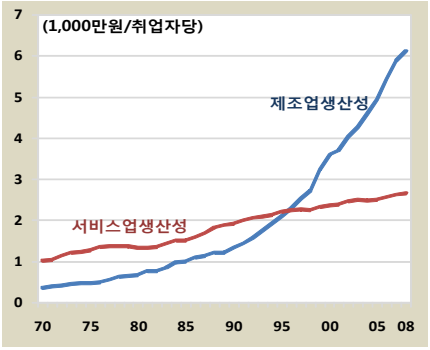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비효율성이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평균 사업체 규모는 2.2명에 불과하여 영세함

  • 1996년을 기점으로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월했으며, 2007년 현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5%(2008년 약 43%)에 불과한 수준임

  • 원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약 350만원에서 2008년 6,100만원으로 약 17배가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2.7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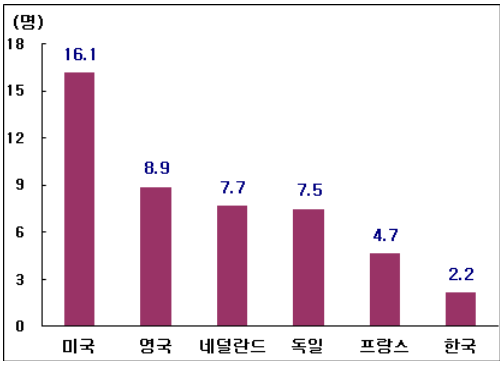
  • 평균 사업체 규모는 2005년 2.2명으로 영세함 (※독일 7.5명, 영국 8.9명, 미국 16.1명)

〈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실질가격 기준.

〈서비스업 평균 사업체 규모 국제 비교〉



자료: OECD
주: 사업체당 근로자 수 기준

13)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한국은행, 2012.5.31자 보도자료)

- 서비스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收支 적자가 1990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여행 관련 收支 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7.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 금융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고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 산업지원기능도 취약함

- (금융 부문의 발달 지체) 금융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금융 자금의 조달도 직접금융시장보다는 대출 등의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음

  • 국내 총부가가치에서 금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1%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현재 6.8%로 커졌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임

- (금융 부문의 낮은 국제 경쟁력) 국내금융은 선진국 대비 자금중개기능 약화, 은행 쏠림현상, 낮은 세계화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낮음

  • 국제화정도를 보여주는 초국적지수(TNI)[14]가 국내 은행은 4.99(2010년 기준)인데 해외 주요은행인 UBS 76.5, 도이치 방크 75.2, HSBC 64.7(2006년 기준)로 매우 낮음

  • IMD의 따르면, 국내 금융부문경쟁력은 1995년 37위에서 2005년 38위, 2010년 30위, 2012년 25위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큼. 항목별로는 금융기관 규제 정도와 금융서비스의 비즈니스 지원 수준이 전체 금융산업 효율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순위〉

항목	순위
금융산업 효율성	25위
은행자산/GDP(2011년 기준)	26위
금융기관 규제 정도	38위
금융서비스의 비즈니스 지원 수준	40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용이성	24위
주식시장 시가총액/GDP (2010년 기준)	15위

자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2012

〈예금은행의 대출금 추이〉

(단위: 조원, %)

	'98	'00	'05	'09	'10	'11
대출금	200.3	310.8	613.9	953.5	987.1	1,063.2
산업 대출	144.8 (72)	201.9 (65)	308.4 (50)	544.0 (57)	555.7 (56)	607.3 (57)
가계 대출	55.5 (38)	108.9 (35)	305.5 (50)	409.5 (43)	431.5 (44)	455.9 (43)

자료: 한국은행.
주: ( )는 총 대출금 대비 비중임.

14) TNI(Trans National Index)지수=(해외자산/총자산)+(해외수익/총수익)+(해외인력/총인력)*100/3. 한국금융연구원 외,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 2010.2.

- (금융의 산업지원기능 약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위주의 경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예금은행의 대출금 중 산업대출금[15]은 1998년 72%에서 2011년 57%로 낮아짐

  • 반면, 중소기업 중에서는 매년 40%대 이상이 자금사정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규 벤처투자금액도 2000년 2조 211억원에서 40% 이상 하락하여 신사업 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

8. 부족한 사회적 자본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 등은 경제·사회적 비용 증대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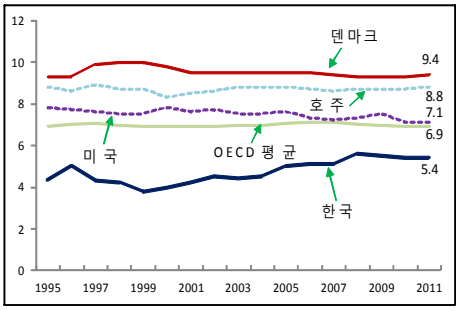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는 낮고 부패수준은 OECD 평균보다 심각

  • 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신뢰수준은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990년 전후 0.032에서 2000년 전후 0.050으로 더 커짐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보면 한국은 2008년 5.6점에서 2011년에는 5.4점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6.9점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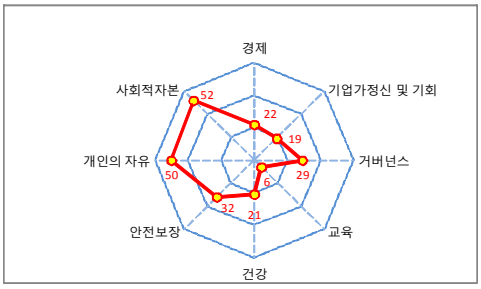
- 영국의 Legatum Institute의 Prosperity Index(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번영지수는 2011년 기준 세계 24위에 불과하며, 구성요소인 '사회적 자본'은 52위에 불과

〈 국가별 부패지수 추이 〉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Prosperity Index 중 사회적 자본 순위 〉



자료 : Legatum Institute(2012)

15)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중 산업대출금은 717.4조원으로 56.4%, 가계대출금은 554.2조원으로 43.6%를 차지.

-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 연평균 0.65%p 정도 추가 상승[16)]

〈 한국의 청렴도 제고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상승효과 〉

구분	평균 부패지수(p)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명목 GDP 상승효과
	OECD	소득 3만 달러 이상	소득 3만 달러 이하	한국		
'95~'10년 평균	7.0	8.3	5.4	4.7	138.5 달러	0.6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

Ⅲ 시사점 :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까지 9%대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이후에는 3%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이 더 이상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 따라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성장률의 구성요소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16)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경제성장', 경제주평 12-18 , 2012.5.25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例示)〉

구성요소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여성 · 청년 활용도 제고 - 저출산 대책 지속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퍼플잡(유연근무) 활성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
		人的 자본	-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 및 투자확대	-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훈련 - 세계 100위권 대학 및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 산학연 연계 내실화
	자본		-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투자관련 규제의 획기적 완화 -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총요소 생산성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성 제고	- 1등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화 - R&D 투자의 쏠림현상 해소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강화	-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부품소재분야 히든챔피언 육성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진입장벽 및 투자규제 완화 - 전문 금융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능 복원, -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신뢰, 공정 사회,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 양극화 현상 완화와 사회통합 - 정부-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 모든 조직의 사회책임 강화

02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1

한국개발연구원

신석하 연구위원 외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1

신석하 외

Ⅰ 연구의 개요 및 방법론

□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2012~2100년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 및 자본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됨.

○ 인구 증가에 대해 3개(중위, 고위, 저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전망

□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전망

○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

$$Y_t = A_t L_t^{\alpha} K_t^{1-\alpha}$$

* Y_t는 GDP, A_t는 총요소생산성, L_t는 취업자, K_t는 자본, 그리고 α는 산출물의 노동탄력성(0.654)을 나타냄.

○ 과거 GDP 증가율을 성장회계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고 추세치를 추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잠재 GDP 시계열을 구축

* Hodrick-Prescott 필터를 사용하여 추세치를 추출

○ 인구 고령화 효과를 반영한 요인별 전망치를 도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향후 잠재 성장률을 전망

* 생산요소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나, 이를 반영할 적절한 방법론이 없음을 감안하여 각 요소의 전망치를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

* 단 자본축적은 저축을 통해 성장률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

○ 도출된 성장률 전망치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함의, 관련 실증연구에서 확립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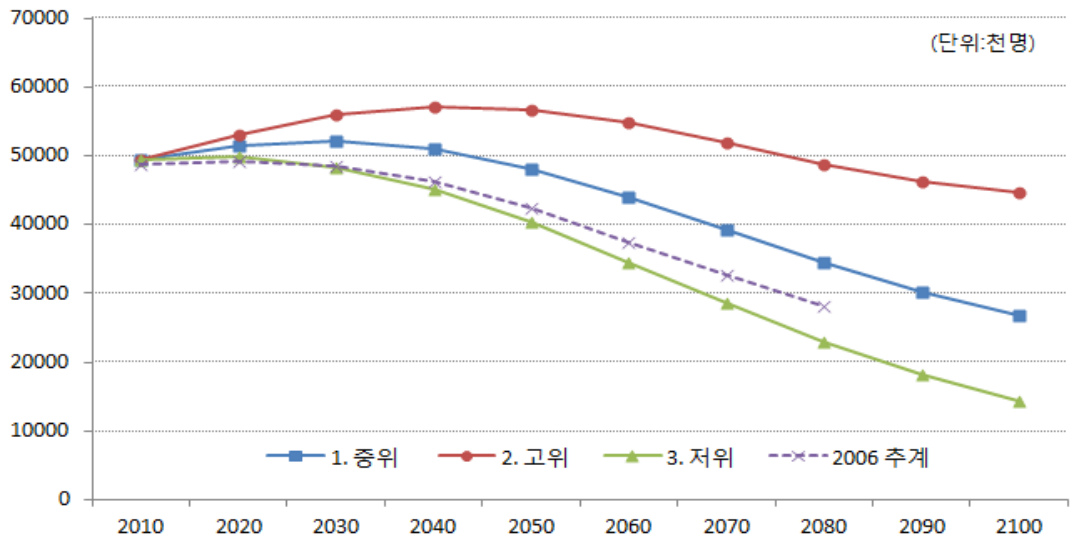
Ⅱ 노동 공급 전망

□ 시나리오별 인구 추이는 아래 [그림 1]과 같음.

○ 중위 가정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경부터, 고위 가정에서는 2040년경부터, 저위 가정에서는 2015년경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모든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장래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됨을 시사 (2030년 노인부양비(65세이상/15-64세인구 비율) 37.2~39.6%, 2060년 77.2~86.3%, 2100년 67.9~99.2%)

[그림 1] 시나리오별 총인구 추계 규모



□ 노동투입량(labor input)은 취업자수 또는 인-시간수(man-hour)로 측정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취업자수로 측정함.

○ 취업자수보다 인-시간수가 더욱 정확한 노동투입량 지표로 사료되나, 평균근로시간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치가 부족하고 제도 변화 등 장기전망이 용이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기로 함.

○ 다만 향후 근로시간 감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총요소생산성은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

□ 취업자수의 전망은 총 노동공급량, 즉 경제활동인구 전망에 자연실업률을 가정하여 산출함.

□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2012~2030년: 미시통계모형에 의한 전망

○ 성·연령으로 구분된 인구집단별(26개 그룹)로 경제활동참가율 모형을 추정하고, 각 설명변수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래의 참가율을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은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며, 연령, 학력수준,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농가인구비율 등 주로 예측가능한 인구 및 가구학적 특성을 설명변수에 포함

○ 학력변수의 예측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도출

* 15~19세의 평균 학력은 평균연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연령과 시간 추이를 고려한 로짓모형으로 2030년까지의 학력수준을 예측

* 20대 연령층의 학력수준은 이미 충분히 높아진 상태로 더 이상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아, 현재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학력 수준의 변동이 없는 연령대, 즉 여성 30대 초반 이후, 남성 30대 후반 이후 연령그룹의 학력수준에 대해서는 5년 전 자료의 5세 젊은 인구그룹의 학력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측치 도출

○ 가구주, 기혼(유배우자), 농가인구 등 가구특성 변수 예측치는 장래인구추계 및 장래가구추계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구성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스케일로 조정함으로써 변화 흐름(momentum)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고령층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과거 자료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정책적 고려 및 추세적 변화를 감안하여 보정함으로써 최종 전망치 도출

2) 2030년 이후: 추세적 연장

○ 2030년 이후 2100년까지의 전망에서는 미시통계모형보다는 외국의 추이와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감안하는 시계열 연장법에 의해 추계함.

○ 본 전망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추세, 성별 격차의 축소, 은퇴연령의 상승, 연령별 참가율 구조 변화 등의 요인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을 도입하였으며, 중간값 및 최종값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여 참가율의 시계열 연장을 시도하였음.

○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급속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6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70% 이상)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선진국의 2050년 수준(80% 중반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

○ 남성 핵심연령층(30~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30년까지 정체 내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될 수 있는 2030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전환

○ 여성과 남성과의 참가율 격차는 2060년에 대략 현재 수준의 3분의 1 수준으로, 2100년에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가정

- 여성의 연령대별 참가율 구조는 현재의 M자형 패턴에서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역U자형 패턴으로 변화되어 갈 것임.

○ 장기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고령자의 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되, 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70대 이상 고령자의 참가율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70대 초반 참가율은 2060년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75세 이상의 경우 고령화로 초고령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참가율 감소 (인구구성 효과)

- 여성에서 초고령자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여성에서 참가율 감소폭이 큼

○ 현재의 참가율 수준, 2030년까지의 변화추이, 성별 격차의 조정 등을 감안할 때, 2060년과 2100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표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1〉 우리나라 인구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의 최종값

(단위: %)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 이상
<2060년>													
남 자	25.0	62.0	83.0	95.0	96.0	96.0	96.0	93.0	90.0	75.0	57.0	33.0	20.0
여 자	25.0	68.0	88.0	81.0	84.0	86.0	86.0	82.0	78.0	62.0	45.0	24.0	12.0
<2100년>													
남 자	35.0	70.0	87.0	96.0	97.0	97.0	97.0	95.0	93.0	80.0	60.0	30.0	15.0
여 자	35.0	76.0	92.0	89.0	91.0	92.0	92.0	89.0	86.0	72.0	51.0	21.0	6.0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인구그룹별 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표 2〉 경제활동참가율(4주 기준) 전망

(단위: %)

	시나리오 1 : 중위			시나리오 2 : 고위			시나리오 3 : 저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61.4	73.2	50.0	61.4	73.2	50.0	61.4	73.2	50.0
2020	61.5	72.7	50.9	61.5	72.6	50.8	61.6	72.8	51.0
2030	59.9	70.0	50.3	59.4	69.1	49.9	60.5	70.8	50.8
2040	57.0	65.5	48.9	56.4	64.3	48.7	58.1	67.3	49.5
2050	55.5	62.9	48.5	55.2	61.8	48.7	56.0	64.3	48.4
2060	55.2	61.4	49.2	55.3	60.8	50.0	54.8	61.8	48.2
2070	54.7	59.9	49.6	55.6	60.2	51.2	52.9	59.0	47.2
2080	55.8	60.7	51.1	57.8	61.9	53.7	52.5	58.2	47.1
2090	57.0	61.6	52.4	58.9	62.8	55.1	53.3	58.9	48.0
2100	56.8	61.2	52.5	58.9	62.4	55.3	53.7	59.1	48.6

□ 경제활동인구에 실업률을 적용하여 취업자를 전망

○ 실업률은 최근의 하락 추세 및 인구증가세 둔화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 고령자의 정년 후 구직 증가로 완만히 상승하여 2060년 3.5% 수준(남성 3.8%, 여성 3.2%)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60년 실업률 수준은 2002~11년 기간 중 평균 실업률 수준과 유사

○ 취업자 규모는 2020년대 중반(중위가정: 2024년 26,34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전망

* 취업자 감소세는 인구집단별 참가율의 점진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하여 유발

〈표 3〉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단위: %)

	시나리오 1 : 중위	시나리오 2 : 고위	시나리오 3 : 저위
2011~2020	0.91	1.10	0.74
2021~2030	-0.02	0.21	-0.22
2031~2040	-0.58	-0.19	-0.96
2041~2050	-0.76	-0.24	-1.39
2051~2060	-0.99	-0.42	-1.72
2061~2070	-1.25	-0.49	-2.18
2071~2080	-1.05	-0.22	-2.22
2081~2090	-1.12	-0.37	-2.20
2091~2100	-1.23	-0.40	-2.24

Ⅲ 자본스톡 전망

1. 저축률

□ 본 연구에서는 피부양인구비율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저축률을 전망

○ 전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 자료만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보다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피부양인구비율 이외에도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등이 저축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설명변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어려움.

*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보다 패널자료를 통해 추정된 결과가 고령화에 따른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월할 것으로 판단됨.

○ 인구 노령화 등 당면한 우리경제의 상황을 감안하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4개국과 한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0~2010년임.

고정효과(fixed effect)가 감안된 패널 회귀분석 결과
(노령화 4개국 대상, 한국포함)

총저축률 = 0.3255 - 0.1605 × 피부양인구비율 (8.17)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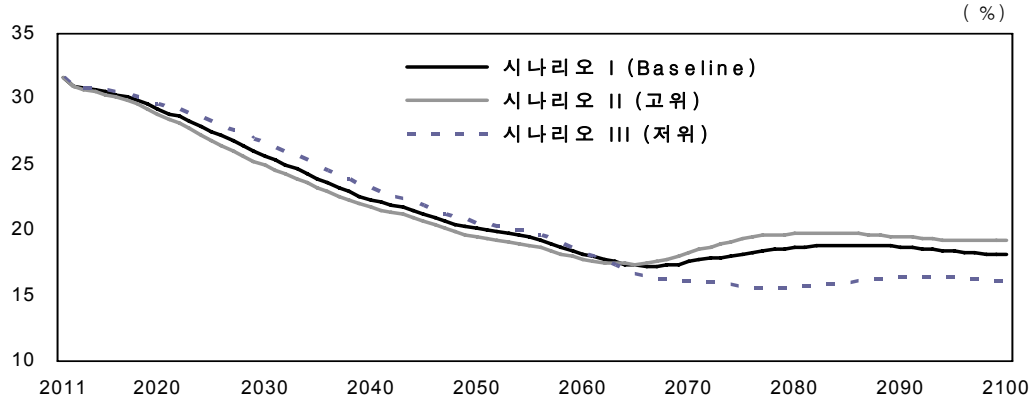
주: 1990~2010년 연간자료를 사용한 회귀식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임.
자료: OECD; WORLD BANK.

□ 국가별 패널분석으로 추정된 회귀식을 활용하여 총저축률을 전망한 결과, 저축률이 피부양인구비율의 상승에 기인하여 2040년에는 22.4%(baseline 시나리오), 2080년에는 18.7%, 2100년에는 18.2%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 회귀식에 비해 우리경제의 저축률이 높은 값을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회귀식과의 잔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저축률 전망결과를 조정

○ 이와 같은 저축률 전망 결과는 우리경제의 장기 저축률이 201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저축률 수준(19.7%)를 소폭 하회할 것임을 의미

[그림 2] 총저축률 전망 결과



2. 자본스톡

□ 자본스톡 전망은 다음의 세 가지 가정 하에서 이루어짐.

○ 첫째,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과거 Feldstein and Horioka(1980)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저축률과 투자율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와 인구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장기 저축률과 투자율을 별도로 전망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둘째, 한국의 경우 과거 경상가처분소득과 경상 GDP의 차이는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작다고 판단하여, 향후 전망에서 경상가처분소득 대비 경상 총투자비율은 경상 GDP 대비 경상 총투자비율과 같다고 가정

○ 셋째, 실질 GDP 대비 실질 총투자의 비율은 경상 GDP 대비 경상 총투자의 비율에 기준연도 대비 GDP 디플레이터와 투자디플레이터의 상대적 변화율을 추정하여 곱해줌으로써 계산

□ 전망결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률 하락으로 자본스톡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저위 시나리오(Ⅲ)의 경우,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2030년 이후 피부양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2060년대 중반부터 자본스톡 증가율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과 비교

(단위: 증가율, %)

	시나리오 I (baseline; 중위)	시나리오 II (고위)	시나리오 III (저위)
2011-2020년	4.3	4.3	4.3
2021-2030년	3.3	3.3	3.4
2031-2040년	2.2	2.3	2.2
2041-2050년	1.5	1.7	1.2
2051-2060년	0.9	1.2	0.6
2061-2070년	0.5	1.1	-0.2
2071-2080년	0.8	1.7	-0.4
2081-2090년	1.0	1.8	-0.3
2091-2100년	0.8	1.6	-0.3

Ⅳ 총요소생산성 전망

□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과거 추이 및 선진국의 경험, 결정요인의 추이 등을 정성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증가율을 전제하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

○ 회귀식의 경우, 자의성이 제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회귀식 설정의 오류(misspecification)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개별 설명변수에 대한 전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

○ 성장 관련 문헌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수렴할 것임을 시사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아직까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개선 속도가 과거 추세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선진국(G7) 대비 60%를 하회하는 소득수준은 우리경제가 따라잡기(catch-up)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따라잡기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여지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제도적 측면에서 대외개방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인적자본, 연구개발투자 등은 선진국 대비 개선된 반면, 규제관련 부분은 약화

□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60～90년 기간 중 1.3～1.9%(미국, 캐나다 제외)이었으나, 1990년 이후 기간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생산성 증가 추세 둔화는 부분적으로 1960～80년대 일본 및 유럽 각국의 미국 따라잡기 효과가 포함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방법론 및 자료 측면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으므로 엄밀히 비교하기 어려우나, EU-KLEMS 등의 분석 결과는 1990년 이후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0년 이후 1.5%~2.0% 수준인 것으로 사료됨.

○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

□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2년 1.6%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1.3%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제

* OECD(2012)의 장기전망에서 사용한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수준임.

Ⅴ 잠재성장률 전망

1. Baseline 전망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6%에서 2021~2030년 2.7%, 2041~2050년 1.4%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1%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상승에 따른 자본스톡 증가세 둔화 등 고령화의 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

○ 2050년 이후에는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GDP 증가율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

〈표 5〉 잠재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baseline): 요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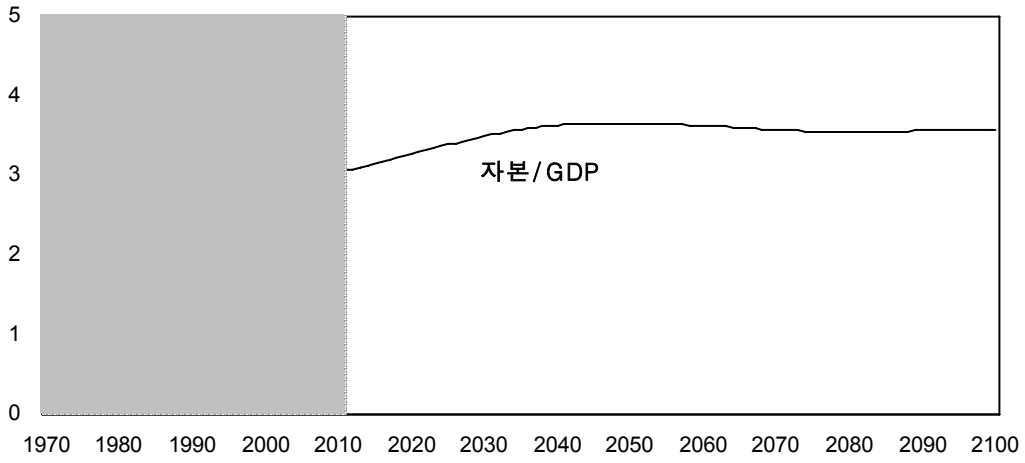
(단위: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TFP
1981~1990	8.6	4.3	1.7	2.5
1991~2000	6.4	3.4	1.2	1.9
2001~2010	4.5	1.9	0.8	1.8
2011~2020	3.6	1.5	0.5	1.6
2021~2030	2.7	1.2	0.0	1.5
2031~2040	1.9	0.8	-0.4	1.5
2041~2050	1.4	0.5	-0.5	1.4
2051~2060	1.0	0.3	-0.7	1.3
2061~2070	0.7	0.2	-0.8	1.3
2071~2080	0.9	0.3	-0.7	1.3
2081~2090	0.9	0.3	-0.7	1.3
2091~2100	0.8	0.3	-0.8	1.3

□ 한편 GDP대비 자본스톡의 비율은 점차 상승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3.5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

○ 이는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

[그림 3] GDP 대비 자본스톡(Baseline)



□ 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은 2011~20년 기간의 3.2%에서 점차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2% 내외(1.8~2.2%)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일인당 GDP 증가율의 둔화는 주로 취업자 일인당 자본스톡 증가율 (기여도)의 둔화 및 고용률(=취업자/총인구) 마이너스 기여도의 확대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고용률 마이너스 기여도의 확대는 주로 생산가능연령인구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6〉 일인당 GDP증가율 전망 시나리오 I (baseline):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일인당 GDP	취업자 일인당 물적자본	취업자/ 인구	TFP	취업자/ 15~64세 인구	15~64세 인구/ 총인구
1981~1990	7.4	3.4	1.5	2.5	0.4	1.1
1991~2000	5.5	2.8	0.9	1.9	0.5	0.3
2001~2010	4.0	1.5	0.7	1.8	0.5	0.2
2011~2020	3.2	1.2	0.4	1.6	0.7	-0.2
2021~2030	2.5	1.2	-0.2	1.5	1.0	-1.2
2031~2040	2.1	1.0	-0.4	1.5	0.7	-1.1
2041~2050	2.0	0.8	-0.2	1.4	0.5	-0.7
2051~2060	1.9	0.7	-0.1	1.3	0.5	-0.6
2061~2070	1.8	0.6	-0.1	1.3	0.1	-0.2
2071~2080	2.2	0.6	0.2	1.3	-0.1	0.3
2081~2090	2.2	0.7	0.2	1.3	0.2	0.0
2091~2100	1.9	0.7	-0.1	1.3	0.1	-0.2

□ 이러한 전망결과는 우리경제의 일인당 GDP가 2012년 현재 미국의 50% 수준에서 2020년에 60%, 2050년에 70~80%, 2100년에 80~100%수준으로 높아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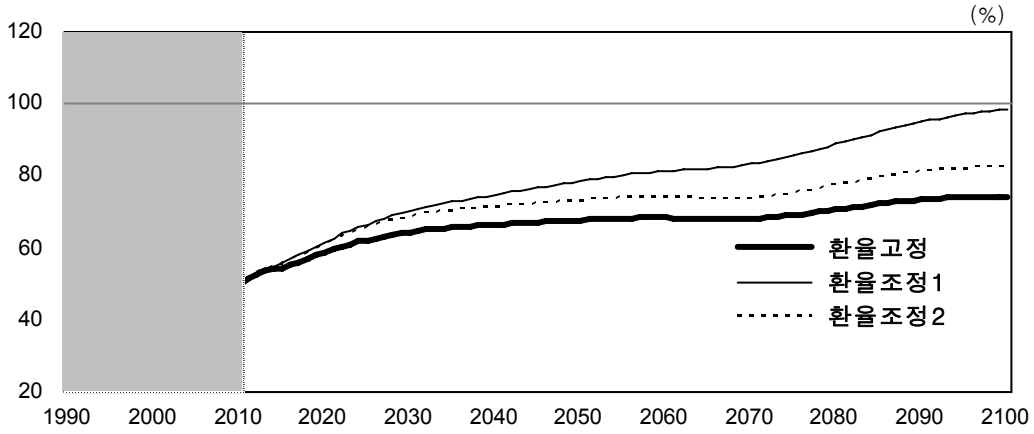
○ 미국의 일인당 GDP 성장률은 2040년까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이후의 성장률은 2040년 성장률 전망치(1.8%)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절상)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그림 4]의 환율조정 1은 일인당 GDP 증가율을 이용하여 실질환율 변화분을 추정한 것이며, 환율조정 2는 미국과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이용하여 실질환율 변화분을 추정한 것임.

○ 우리 경제의 일인당 GDP는 2020년까지 상대적으로 빠르게 미국과의 차이를 줄여가지만, 2020년 이후 고령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따라잡기 속도가 둔화되다가 2070년 이후 다시 미국과의 차이를 줄여갈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미국대비 한국의 일인당 GDP 비율(baseline)



2. 기타 시나리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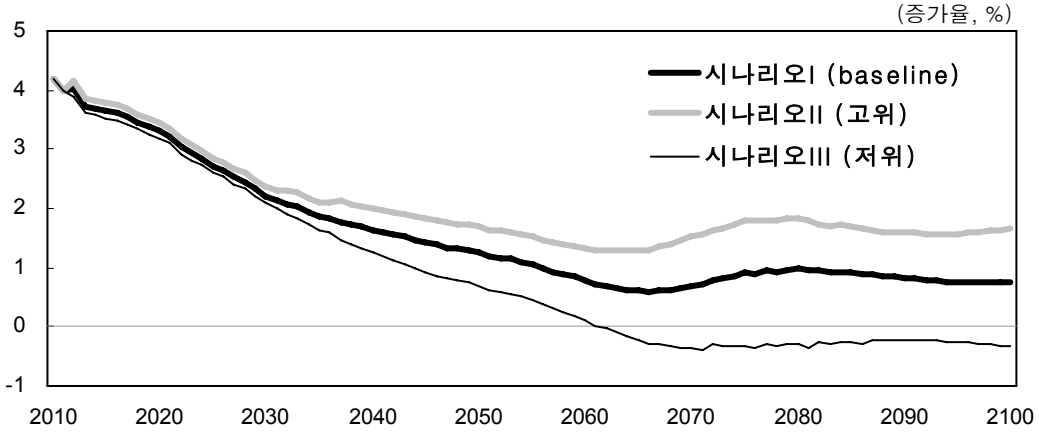
□ 인구 시나리오별 전망결과는 시나리오간 성장률 차이가 2030년 이후 점차 확대되는 모습

○ 인구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baseline 전망에 비해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3~0.8%p 높게 나타남.

○ 반면 인구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baseline 전망에 비해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3~1.1%p 낮게 나타남.

○ 이와 같이 시나리오간 성장률 전망치 차이가 2030년 이후 확대되는 것은 시나리오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시차를 두고 2030년대 이후 노동공급 및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5] 인구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추이



〈표 7〉 잠재성장률 전망 시나리오II(고위):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TFP
1981~1990	8.6	4.3	1.7	2.5
1991~2000	6.4	3.4	1.2	1.9
2001~2010	4.5	1.9	0.8	1.8
2011~2020	3.8	1.5	0.7	1.6
2021~2030	2.8	1.2	0.1	1.5
2031~2040	2.2	0.8	-0.1	1.5
2041~2050	1.8	0.6	-0.2	1.4
2051~2060	1.5	0.4	-0.3	1.3
2061~2070	1.4	0.4	-0.3	1.3
2071~2080	1.7	0.59	-0.14	1.30
2081~2090	1.7	0.6	-0.2	1.3
2091~2100	1.6	0.6	-0.3	1.3

〈표 8〉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Ⅲ(저위):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TFP
1981~1990	8.6	4.3	1.7	2.5
1991~2000	6.4	3.4	1.2	1.9
2001~2010	4.5	1.9	0.8	1.8
2011~2020	3.5	1.5	0.4	1.6
2021~2030	2.6	1.2	-0.1	1.5
2031~2040	1.6	0.8	-0.6	1.5
2041~2050	0.9	0.4	-0.9	1.4
2051~2060	0.4	0.2	-1.1	1.3
2061~2070	-0.2	-0.1	-1.4	1.3
2071~2080	-0.3	-0.2	-1.5	1.3
2081~2090	-0.3	-0.1	-1.5	1.3
2091~2100	-0.3	-0.1	-1.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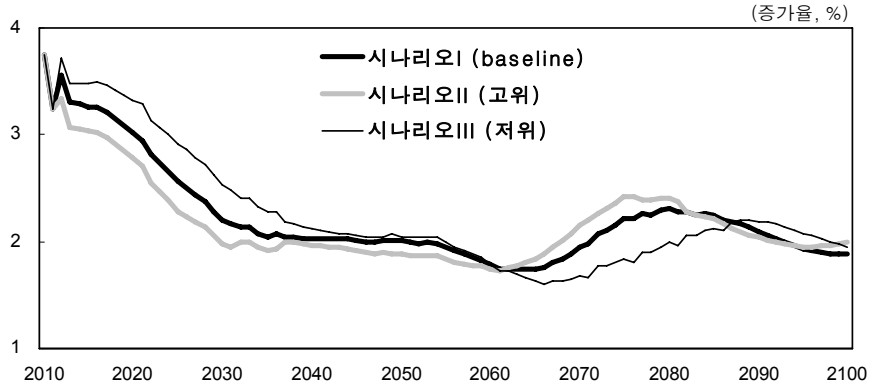
□ 인구 시나리오별 일인당 GDP 증가율 전망치는 대체로 2030년 이후 2% 내외 수준을 유지

○ 인구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baseline 전망에 비해 2060년 이전에는 0.1~0.2%p 낮고, 2060년 이후에는 0.1~0.2%p 높게 나타남.

○ 반면 인구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baseline 전망에 비해 2060년 이전에는 0.1~0.2%p 높고, 2060년 이후에는 0.2~0.4%p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시나리오간 전망치 차이는 2060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이 취업자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구증가 및 자본축적 둔화를 통해 일인당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6] 인구 시나리오별 일인당 GDP 증가율 전망 추이



〈표 9〉 일인당 GDP증가율 전망 시나리오Ⅱ(고위):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일인당 GDP	취업자 일인당 물적자본	취업자/ 인구	TFP	취업자/ 15~64세 인구	15~64세 인구/ 총인구
1981~1990	7.4	3.4	1.5	2.5	0.4	1.1
1991~2000	5.5	2.8	0.9	1.9	0.5	0.3
2001~2010	4.0	1.5	0.7	1.8	0.5	0.2
2011~2020	3.0	1.1	0.3	1.6	0.7	-0.4
2021~2030	2.3	1.1	-0.3	1.5	1.0	-1.3
2031~2040	2.0	0.9	-0.4	1.5	0.6	-1.0
2041~2050	1.9	0.7	-0.2	1.4	0.5	-0.7
2051~2060	1.8	0.6	-0.1	1.3	0.4	-0.5
2061~2070	1.9	0.5	0.1	1.3	-0.1	0.1
2071~2080	2.4	0.7	0.4	1.3	-0.1	0.5
2081~2090	2.2	0.7	0.1	1.3	0.2	-0.1
2091~2100	2.0	0.7	0.0	1.3	0.0	-0.1

〈표 10〉 일인당 GDP증가율 전망 시나리오Ⅲ(저위):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일인당 GDP	취업자 일인당 물적자본	취업자/ 인구	TFP	취업자/ 15~64세 인구	15~64세 인구/ 총인구
1981~1990	7.4	3.4	1.5	2.5	0.4	1.1
1991~2000	5.5	2.8	0.9	1.9	0.5	0.3
2001~2010	4.0	1.5	0.7	1.8	0.5	0.2
2011~2020	3.4	1.3	0.6	1.6	0.6	-0.1
2021~2030	2.9	1.3	0.1	1.5	1.1	-1.0
2031~2040	2.3	1.1	-0.3	1.5	0.9	-1.2
2041~2050	2.1	0.9	-0.3	1.4	0.6	-0.8
2051~2060	2.0	0.8	-0.2	1.3	0.5	-0.7
2061~2070	1.7	0.7	-0.3	1.3	0.3	-0.6
2071~2080	1.8	0.6	-0.1	1.3	0.1	-0.1
2081~2090	2.1	0.7	0.2	1.3	-0.1	0.2
2091~2100	2.1	0.7	0.1	1.3	0.2	-0.1

03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2

한국계량경제학회

표학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2

표학길

Ⅰ 서 론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이며, 이를 근거로 정책당국이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그 중요성은 상당하다. 단, 잠재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잠재 생산량은 관찰 불가능한(unobservable) 변수이므로, 관찰 가능한(observable) 변수들을 기반으로 이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 성장률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교, 검토하고, 각 방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계하는 데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잠재 성장률 추계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시계열적 접근방법과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분류, 소개하고 후자의 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계한다. 또한 이에 대한 두 가지 응용으로서 제Ⅲ장에서 기술적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고려한 확률변경생산함수를 도입한 모형과, 제Ⅳ장에서 해외부문(foreign sector)의 수요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량 변화를 고려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각각 소개하고 잠재성장률을 추정한다. 제Ⅴ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며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Ⅱ 생산함수 접근법에 기반한 잠재 GDP의 추계

잠재적 GDP의 정의는 최대 가동률과 최소 실업률 그리고 최소 기술적 비효율성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GDP로 정의한다.[1] 즉, 주어진 자원과 기술, 노동 그리고 자본 등을 최대로 활용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의 GDP이다. 또한 Kenny(1996)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적 GDP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 하에서의 생산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잠재적 GDP는 생산 수준을 의미하고, 실제 GDP는 총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므로, 이 둘의 차이인 GDP갭은 해당 국가의 경기변동 상태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잠재적 GDP 계산하는 방식은 1) 시계열적 접근 과 2)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시계열적 접근 방식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시간 추세 분해법(Split Time-trend Method)'과 'Hodrick-Prescott 필터링' 등이 있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을 상정하여 잠재 고용량과 잠재 자본량을 산출한 후 이 함수에 대입하여 잠재 GDP를 도출한다.

1. 시계열적 접근법

가. 시간 추세 분해법

아래 시간 추세 분해법은 Kenny(1995)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다음의 회귀식을 상정한다.

$$\ln Y_t = \alpha_o + \sum_{i=1}^{n} \alpha_i T_i + e_t \qquad (1)$$

* $\ln Y_t$: 실질 GDP의 log

T_i : 시간 추세변수

시간 추세 변수는 경제적 구조변화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특정 시기 이전에는 0, 그 이후 시기에는 시간에서 해당 시기를 뺀 값을 갖는 변수이다. 예컨대 1997년 이전에는 0, 1997년 이후에는 년도-1997년의 값을 갖는다. 이 식을 통해 단행한 회귀분석의 $\ln Y_t$의 예측치가 t 시점에서의 잠재 GDP가 된다. 단, 이러한 시간 추세변수의 설정에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Hodrick-Prescott 필터링

Hodrick and Prescott(1980)에서 제시된 기법으로, 다음 비선형식을 최소화하는 y* 값을 잠재GDP로 정한다.

1) Geraldine Slevin(2001), 『Potential output and the output gap in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sum_{t=1}^{T}(\ln Y_t - \ln Y_t^*)^2 + \lambda \sum_{t=2}^{T-1}[(\ln Y_{t+1}^* - \ln Y_t^*) - (\ln Y_t^* - \ln Y_{t-1}^*)]^2 \qquad (2)$$

위 식의 전항은 실제 GDP와의 차이, 후항은 잠재 GDP의 성장률의 차이에 λ 라는 가중치(weight)를 준 형태로 나타난다. λ 값은 사전에 주어지며, 낮은 값의 λ를 부여하면 잠재 GDP를 실제 GDP의 시계열과 가까운 형태로 도출되며, 높은 값의 λ는 선형에 가까운 잠재 GDP를 도출시킨다.

2. 생산함수 접근법

Girono et al.(1995)에 따르면, 전술(前述)한 두 방법론은 기술적(mechanistic)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의 이용가능성 여부에 의한 생산의 구조적 제한들이나 다른 내생적(endogenous) 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와 대조되는 생산함수 접근법의 경우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상정하여 잠재 GDP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 부문의 변수들을 이용해 다음 회귀식을 추정한다.

$$\ln Y = \ln A + \alpha \ln N + (1-\alpha)\ln K + \ln E \qquad (3)$$

위 식에서 Y는 민간 부문의 부가가치, N과 K는 민간 부문의 고용량과 자본을 의미한다. 위 식을 회귀분석한 잔여항(residual)인 lnE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다. 주어진 α 하에서, HP 필터링 등의 기법으로 조정한 lnE 와, 잠재노동량을 대입한 후 도출되는 lnY의 추정치에 정부부문의 생산량을 더해 잠재 GDP를 추정한다.

잠재 노동량 N*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N^* = LFS(1 - NAWRU) - EG \qquad (4)$$

NAWRU는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지 않는 실업률(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이며, LFS는 노동가능인구를 HP 필터링으로 조정한 값이며, EG는 정부부문의 고용량을 의미한다. Elmeskov(1993)의 방법에 의하면 NAWRU는 다음 식을 통해 도출 가능하다.

$$NAWRU = U - D^2 \log W^* (DU / D^3 \log W) \qquad (5)$$

3. 잠재 GDP의 추정 결과

전술한 Girono et al.(1995)의 방식에 따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잠재 GDP를 추계하였다.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는 한국은행(ecos.bok.or.kr)의 연간 실질 GDP(2005년 기준)자료에서 정부부문의 생산량을 빼고 도출하였으며, 자본스톡은 표학길(1998)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률이 상수라는 가정 하에 '다항식기준년접속법'의 식을 이용해 2000년과 2010년의 감가상각률을 추정해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은 각각 한국은행과 생산성본부(www.kpc.or.k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NAWRU의 계산 과정에 쓰이는 기초 데이터들-실업률, 노동가능인구 등-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임금수준은 한국은행의 년도별 '임금총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1〉과 〈그림1〉은 실질 GDP와 추정한 잠재 GDP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며, 〈그림2〉는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GDP 갭을 나타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대체로 잠재 GDP보다 실질 GDP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에서 제시된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성장률에 따르면, 실질 GDP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실질 GDP와 잠재 GDP 비교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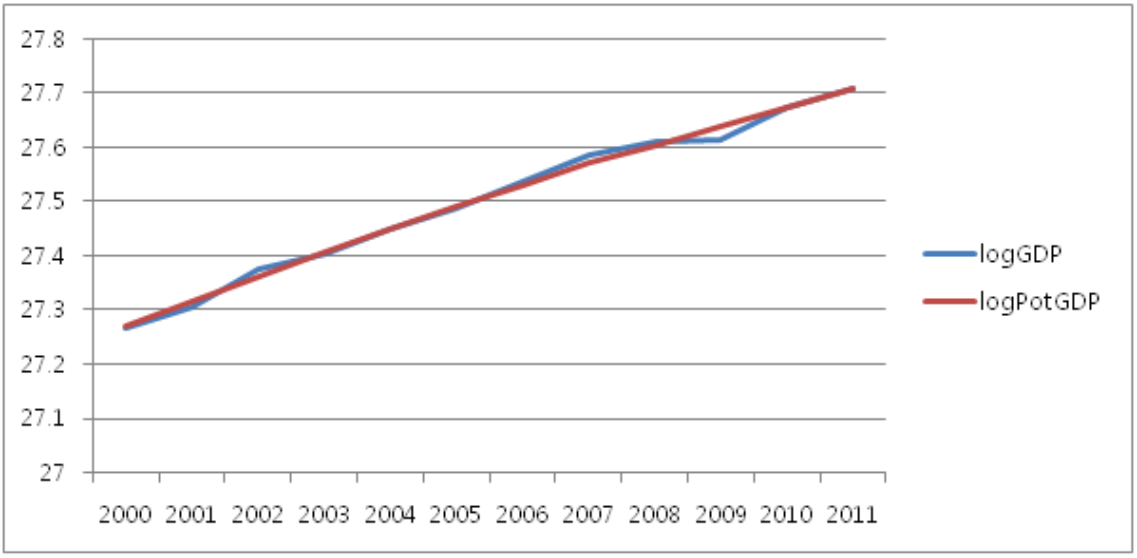
	GDP	Potential GDP
2000	694.63	696.93
2001	722.23	728.78
2002	773.87	763.16
2003	795.56	798.06
2004	832.31	832.59
2005	865.24	868.14
2006	910.05	904.51
2007	956.51	940.70
2008	978.50	972.86
2009	981.63	1005.98
2010	1043.67	1041.50
2011	1081.60	1080.00

〈표 2〉 실질 GDP, 잠재 GDP의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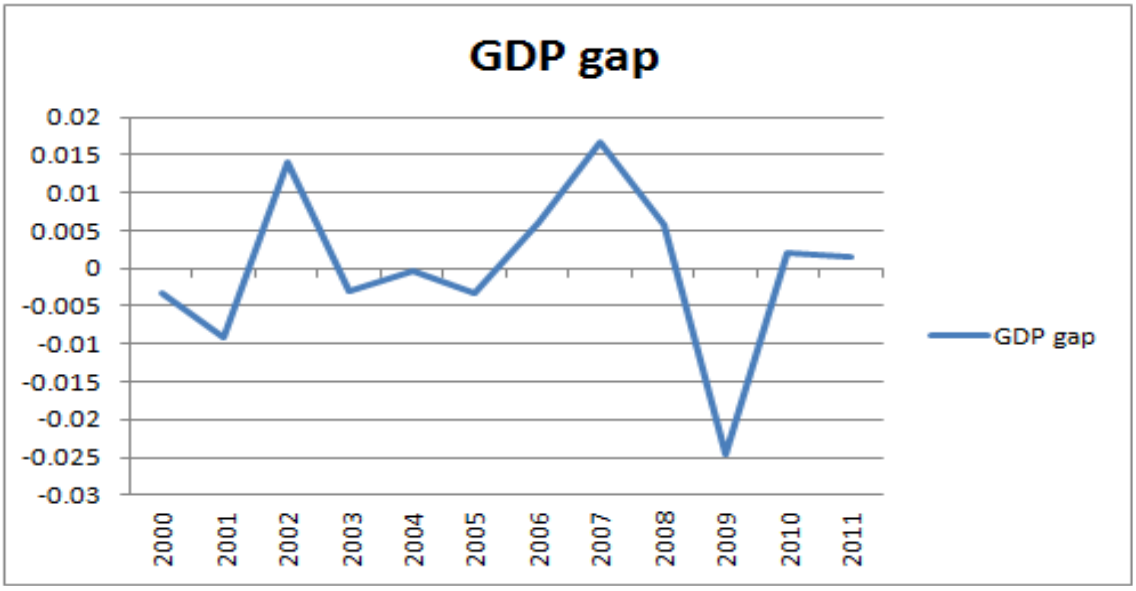
(단위 :%)

	GDP	Potential GDP
2001	3.97	4.57
2002	7.15	4.72
2003	2.80	4.57
2004	4.62	4.33
2005	3.96	4.27
2006	5.18	4.19
2007	5.11	4.00
2008	2.30	3.42
2009	0.32	3.40
2010	6.32	3.53
2011	3.6333.63	3.70
Average	4.12	4.06

[그림 1] 실질 GDP와 잠재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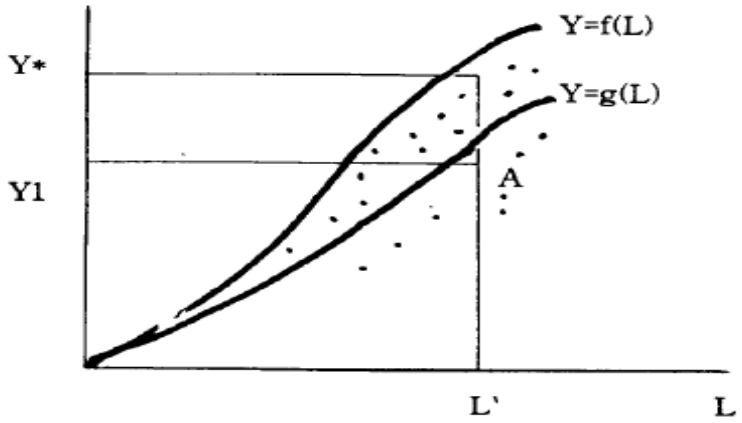
[그림 2] GDP갭(실질 GDP-잠재 GDP)



Ⅲ 생산확률변경모형을 이용한 잠재 GDP추계

1.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

생산확률변경모형을 이용해서 잠재GDP를 추정하는 방법은 잠재GDP를 추정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같이 GDP의 설명변수들로 GDP를 단순회기분석을 하면 평균생산함수를 추정하게 되므로 잠재GDP를 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확률변경모형을 이용해서 생산함수의 경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 f는 생산함수의 경계함수이고, g는 평균생산함수이다.



출처: 김병화, 김윤철(1992)

[그림 3] 비효율성의 존재를 무시한 생산함수추정의 문제점

확률변경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는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 기술적 비효율성을 고려한 생산함수를 최우추정량의 개념으로 도출하고 각 개별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다음은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식이다.

$$Y_{i,t} = \exp(x_{i,t}\beta + V_{i,t} - U_{i,t}) \qquad (6)$$

* $Y_{i,t}$: i번째 기업의 t기의 생산량

$x_{i,t}$: i번째 기업의 t기의 투입량

β : 미정계수(unknown coefficient)

$V_{i,t}$: i.i.d random error ($U_{i,t}$와는 독립)

$U_{i,t}$: 비음(non-negative) 확률변수 (기술적 비효율성) (truncated at zero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0, and variance, σ^2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경생산함수에 KIP(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를 이용해 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KIP database는 KLEMS 형식의 데이터로 실질총산출(Q), 실질자본스톡(K), 실질노동투입(L), 실질에너지투입(E), 실질원재료투입(M), 실질서비스투입(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확률변경생산함수 식을 KLEMS database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ln Q_t = \beta_0 + \beta_1 \ln K_t + \beta_2 \ln L_t + \beta_3 \ln E_t + \beta_4 \ln M_t + \beta_5 \ln S_t + V_t - U_t \qquad (7)$$

* $t = 1990, 1991, \cdots, 2009$

Q : 실질총산출

K : 실질자본스톡
L : 실질노동투입
E : 실질에너지투입
M : 실질원재료투입
S : 실질서비스투입
β : 미정계수(unknown coefficient)
V_t : i.i.d random error (U_t와는 독립)
U_t : 비음(non-negative) 확률변수 (기술적 비효율성) (truncated at zero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0, and variance, σ^2

본 연구에서는 KLEMS 데이터 중 자본과 노동인 K와 L만을 이용해서 GDP를 추정한다. 이 때의 Q는 총산출의 개념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개념이 된다. 또, KIP database는 72개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 더해서 각 년도별로 Q, K, L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이용가능한 부분인 2009년을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변경생산함수의 식이다.

$$\ln Q_t = \beta_0 + \beta_1 \ln K_t + \beta_2 \ln L_t + (V_t - U_t) \qquad (8)$$

이 식을 추정하여 도출한 년도별 비효율성은 〈표3〉과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4〉에서 도출된 β_1과 β_2는 각각 생산량의 자본 분배율과 노동 분배율을 의미한다. gamma 값이 0.68로 1에 가까우므로 기술적 비효율성에 근거한 생산함수의 추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3〉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상황의 기술적 비효율성은 높게 측정되는 반면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의 경우 비효율성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적 비효율성 추정결과 (1990년 ~ 2009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3%	2.3%	2.9%	4.4%	5.2%	5.2%	6.2%	8.0%	13.1%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6.9%	7.2%	5.6%	5.5%	5.4%	3.8%	3.4%	2.2%	2.1%	2.8%

〈표 4〉 생산함수 추정결과 (1990년 ~ 2009년)

	coefficient	standard-error	t-ratio
beta 0	2.77	5.64	0.49
beta 1	0.67	0.15	4.61
beta 2	0.38	0.59	0.64
sigma-squared	0.01	0.01	0.84
gamma	0.68	1.93	0.35

2. 자연실업률 및 자연자본가동률의 추계

가. 자연실업률 추계

잠재 GDP의 추정을 위해서는 자료로부터 자연실업률과 자연자본가동률을 도출할 필요가 잇다. 본 연구에서는 Ⅱ장 3절에서 소개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NAWRU를 활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정의하였다.

나. 자연자본가동율 추계

실제 자본가동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가동율지수'로 대체하여 사용하였고, 자연노동고용량은 자연실업률 수준에 대응하는 노동고용량이며, 자연자본고용량 계산에 필요한 자연자본가동률지수는 생산설비가 설치된 후에는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여 양자의 비율이 일정하게 된다는 Klein-Preston(1967)의 Putty-Clay 가설을 원용한 관계식, $\rho^* / \overline{\rho_t} = (1 - U_t^*)/(1 - \overline{U_t})$에 의해서 구하였다. 여기서 $\overline{U_t}$, U_t^*, 및 $\overline{\rho_t}$는 각각 자연실업률 추정시에 설정된 각 구간 내에서의 실제실업율의 최저치, 자연실업률, 및 실제가동률지수의 최고치이다. (김병화, 김윤철(1992)) 도출된 자연실업률과 자본가동률지수, 승수(multiplier) 등은 〈표5〉, 〈표6〉에 제시되어 있다. 자연실업률은 2005년과 2008, 2009년을 2000년 이후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자연자본가동율은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자연실업율과 자본가동율 지수

	자연실업율	자본가동율지수(2005=100)
2000	4.43%	97.9
2001	4.42%	93.9
2002	3.77%	97.7
2003	3.53%	97.6
2004	3.46%	100.4
2005	3.70%	100.0
2006	3.62%	100.3
2007	3.14%	100.4
2008	3.20%	97.2
2009	3.43%	93.8

〈표 6〉 자연자본가동율지수와 자본, 노동의 multiplier

	자연자본가동율지수	자본muliplier	노동 multiplier
2000	99.1	1.013	1.000
2001	99.1	1.056	0.996
2002	99.8	1.022	0.995
2003	100.1	1.025	1.001
2004	100.1	0.997	1.002
2005	99.9	0.999	1.000
2006	100.0	0.997	0.999
2007	100.5	1.001	1.001
2008	100.4	1.033	1.000
2009	100.2	1.068	1.002

3. 잠재GDP 추정

앞에서 추정한 자본과 노동의 multiplier를 곱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대의 노동량과 이용해 잠재GDP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ln(Potential\ Q_t) = \beta_0 + \beta_1 \ln K_t' + \beta_2 \ln L_t' \qquad (9)$$

$$GDP\,gap = (potential\ Q - Q)/Q \qquad (10)$$

이 식을 추정한 결과로 도출된 잠재 GDP와 GDP gap은 〈표7〉와 〈그림 4〉,〈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는 앞 장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작았다. 그 이유로는 앞의 방법은 생산함수를 추정할 때 비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DP 갭과 비효율성을 나타낸 〈그림5〉를 보면 수준(level)차이는 있지만 움직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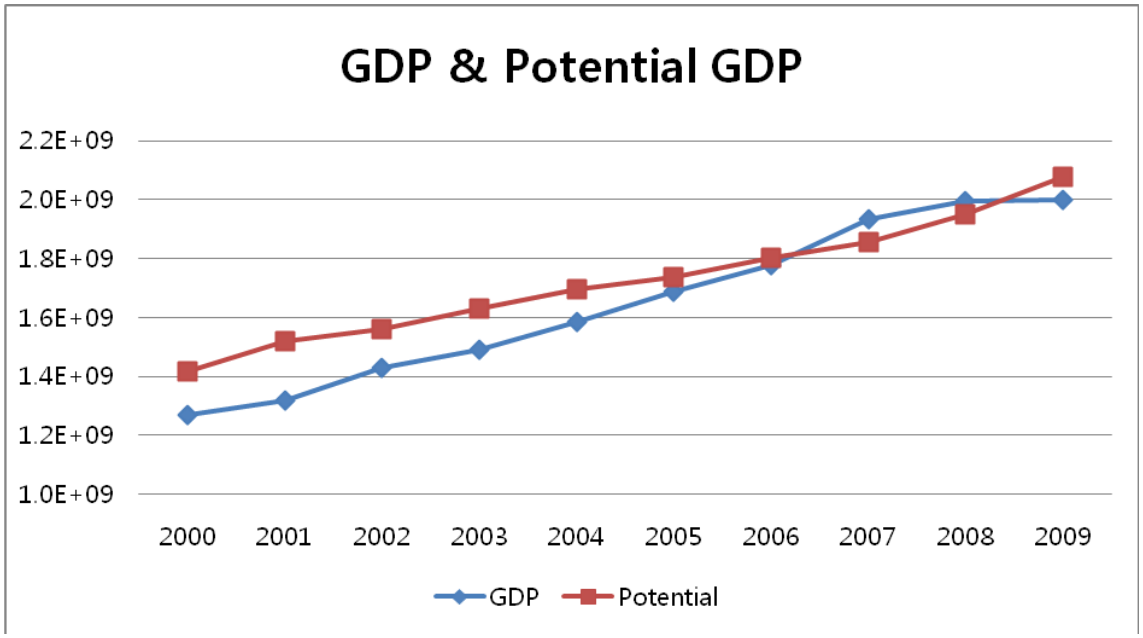
잠재GDP를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투입에 영향을 주는 실업율이나 자본가동율을 자연실업율과 자연자본가동율로 잠재력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두변수를 설명변수로 가지는 생산함수를 추정할 때에도 잠재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잠재 GDP를 구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비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때 비효율성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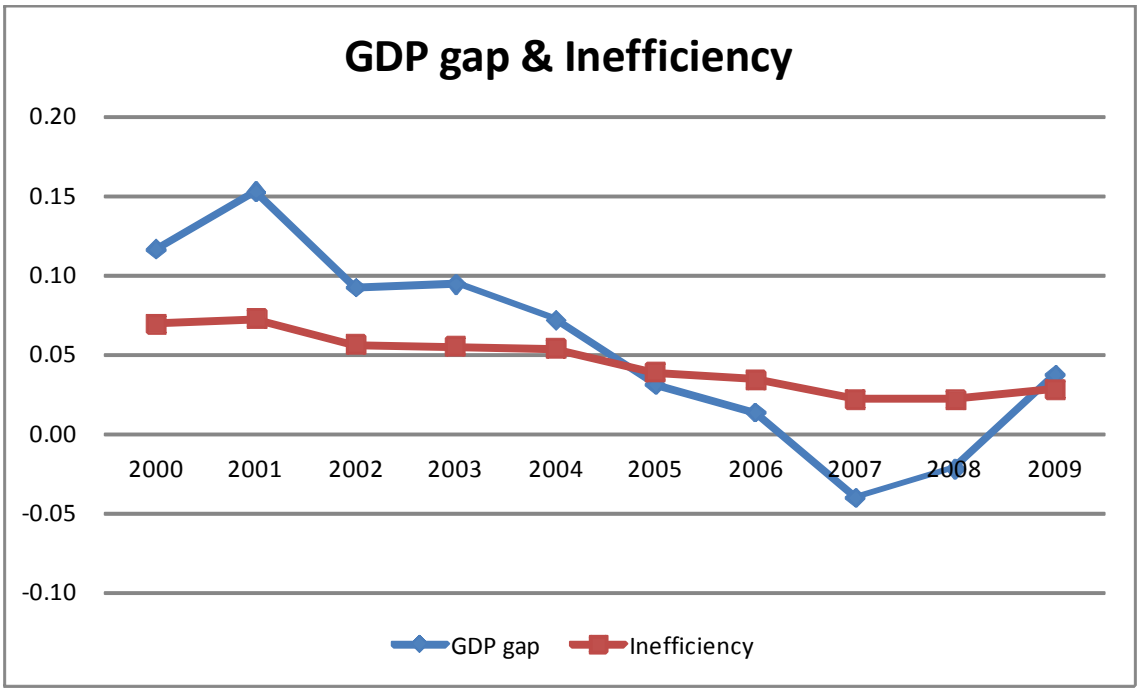
〈표 7〉 잠재GDP와 잠재GDP 갭

	Q	Poential Q	GDP gap
2000	1.3E+09	1.4E+09	11.6%
2001	1.3E+09	1.5E+09	15.2%
2002	1.4E+09	1.6E+09	9.2%
2003	1.5E+09	1.6E+09	9.4%
2004	1.6E+09	1.7E+09	7.2%
2005	1.7E+09	1.7E+09	3.1%
2006	1.8E+09	1.8E+09	1.3%
2007	1.9E+09	1.9E+09	-4.1%
2008	2.0E+09	2.0E+09	-2.2%
2009	2.0E+09	2.1E+09	3.7%

[그림 4] GDP와 잠재GDP



[그림 5] GDP갭과 비효율성



Ⅳ 소규모 개방경제의 잠재성장률 추계모형

기존의 잠재 GDP는 산출 가능한 최대한의 생산량의 개념이므로, 총생산의 접근이다. 잠재 고용량과 잠재 자본량을 각각 L*, K* 라 하면, 총생산과 총수요를 일치시키는 다음 균형식을 만족하게 된다.

$$Y^*(L^*, K^*) = C(Y^*) + I(r) + G + EX(Y^f) - IM(Y^*) \qquad (11)$$

C, I, G, EX, IM은 각각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을 의미하며, r은 국내실질 이자율이다. 위 식을 만족시키는 잠재 GDP는 해외수요, 즉 수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나, 생산함수를 통해 도출한 기존의 잠재 GDP는 위 식의 좌변, 즉 생산의 측면을 통해서만 잠재 GDP를 도출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생산량은 해외부문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잠재 GDP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 상태공간을 상정한 잠재 GDP의 추계

이와 같은 개방화가 진행중인 경제의 잠재 GDP 추계는 최공필(1996)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태공간(state-space)을 상정한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하였다. 칼만필터는 측정 가능한 변수들(observable variables)을 기반으로 측정 불가능한 변수(unobservable variables)를 추정하는 기법으로서, 본 연구의 경우 측정 불가능한 변수는 잠재 GDP에 해당한다. 측정 가능한 변수는 실질 GDP, 인플레이션의 변화율, 실질 GDP 대비 경상수지 변화율로 설정하였다. 개방화를 반영한 모델과 기존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1) 실질 GDP를 추세항과 순환 과정의 결합으로 나타낸 모형, (2) 모형 (1)에 인플레이션 변동식을 추가한 모형, (3) 모형 (2)에 실질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의 변화를 추가한 모형을 각각 상정하였다.

칼만필터를 이용하기 위한 상태공간(state space)은 관찰방정식(observation equation)과 이행방정식(transition equation)으로 구성된다. 전술한 세 모형의 구조를 이 두 방정식으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

관찰방정식 : $y_t = y_t^* + z_t$

이행방정식 : $y_t^* - y_{t-1}^* - \mu_y = \rho(y_{t-1}^* - y_{t-2}^* - \mu_y) + e_t$
$z_t = \phi_1 z_{t-1} + \phi_2 z_{t-2} + u_t$

y_t는 실질 GDP, y_t^*는 잠재 GDP, z_t는 GDP 갭을 의미하며, e_t와 u_t는 잔여항(residual)을 뜻한다. 관찰방정식은 실제로 관측되는 GDP가 잠재 GDP(y_t^*)와 경기변동항(z_t)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이행방정식의 경우 잠재 GDP의 성장률은 일정한 평균 μ_y을 가지고 있으며, 계수 ρ는 잔여항 e_t가 AR(1)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두 번째 이행방정식은 경기변동항(z_t)의 합이 AR(2)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것이다.

모형 (2)

관찰방정식 : $y_t = y_t^* + z_t$
$\triangle \pi_t = \mu_\pi + \gamma \triangle y_{t-1} + \beta z_{t-1} + \xi \triangle c_{t-1} + v_t + \delta_1 v_{t-1} + \delta_2 v_{t-2}$

이행방정식 : $y_t^* - y_{t-1}^* - \mu_y = \rho(y_{t-1}^* - y_{t-2}^* - \mu_y) + e_t$
$z_t = \phi_1 z_{t-1} + \phi_2 z_{t-2} + u_t$

모형 (2)는 모형 (1)에서 인플레이션의 변동률 식을 관찰방정식에 추가한 형태로, π_t는 인플레이션율, c_t는 GDP 대비 경상수지이다. 모형 (2)의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변동률 $\triangle c_{t-1}$이 인플레이션 변동률 $\triangle \pi_t$에 미치는 영향을 없는 것으로, 즉 $\xi = 0$으로 간주하였다.

모형 (3)

관찰방정식 : $y_t = y_t^* + z_t$
$\triangle \pi_t = \mu_\pi + \gamma \triangle y_{t-1} + \beta z_{t-1} + \xi \triangle c_{t-1} + v_t + \delta_1 v_{t-1} + \delta_2 v_{t-2}$
$\triangle c_t = \mu_c + c_1 z_{t-1} + w_t + c_2 w_{t-1}$

이행방정식 : $y_t^* - y_{t-1}^* - \mu_y = \rho(y_{t-1}^* - y_{t-2}^* - \mu_y) + e_t$
$z_t = \phi_1 z_{t-1} + \phi_2 z_{t-2} + u_t$

모형 (3)은 모형 (2)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의 변화율 식을 관찰방정식에 추가하고, $\xi = 0$ 이라는 가정을 완화한 모형이다. 개방화를 반영한 모형은 모형 (3)으로,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하여 개방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물가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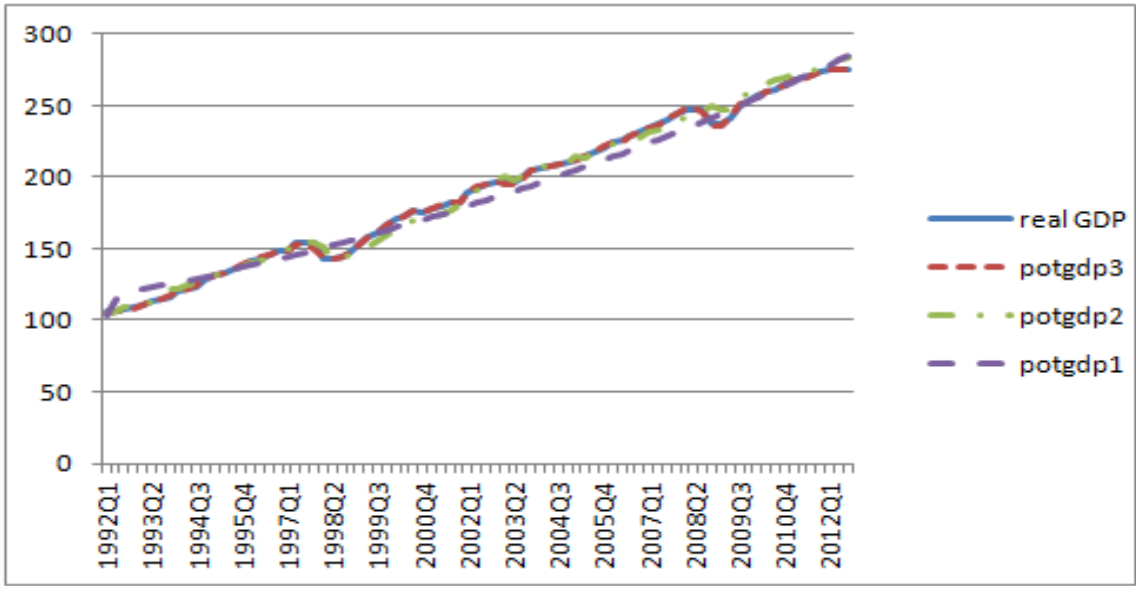
하는 데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로그차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추정에 사용한 데이터 분기별 자료들이며, X-11 ARIMA로 계절조정을 하였다. 각 변수들의 추정 결과는 부표에 제시하였다.

2.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그림 6〉 에 따르면, 개방화를 고려한 모형 (3)의 추정 결과는 모형 (1)과 모형 (2)에 비해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갭을 나타낸 〈그림 7〉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개방화로 인해, 국내 충격의 일부가 해외부문으로 흡수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제시된 잠재 GDP의 성장률은 모형 (1), 모형 (2), 모형 (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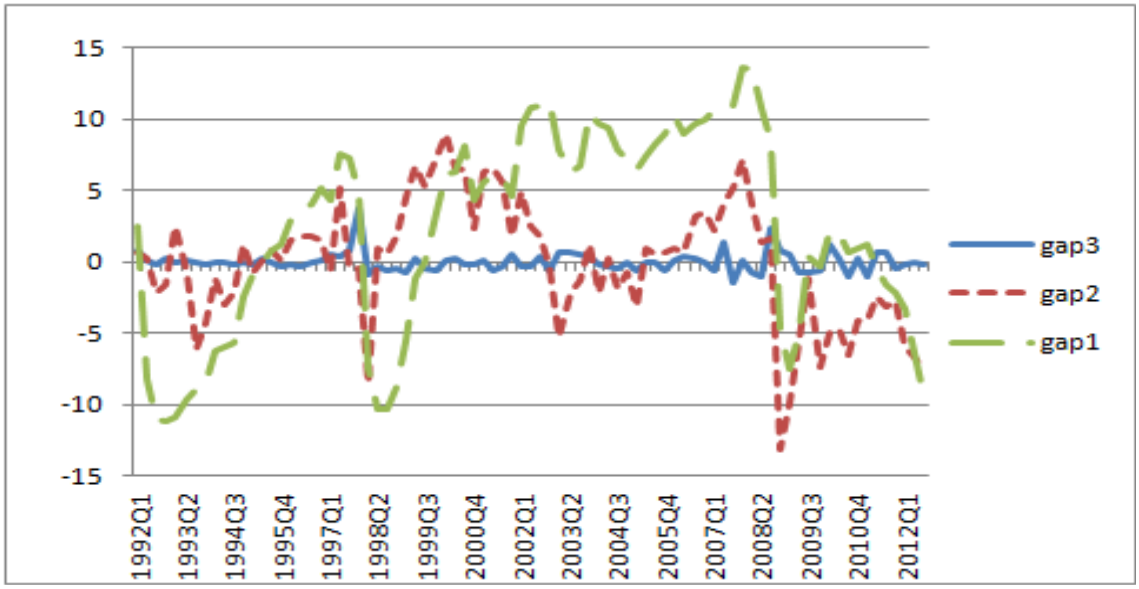
[그림 6] 실질 GDP와 모형 (1), (2), (3)으로 도출한 잠재 GDP 비교

(단위 :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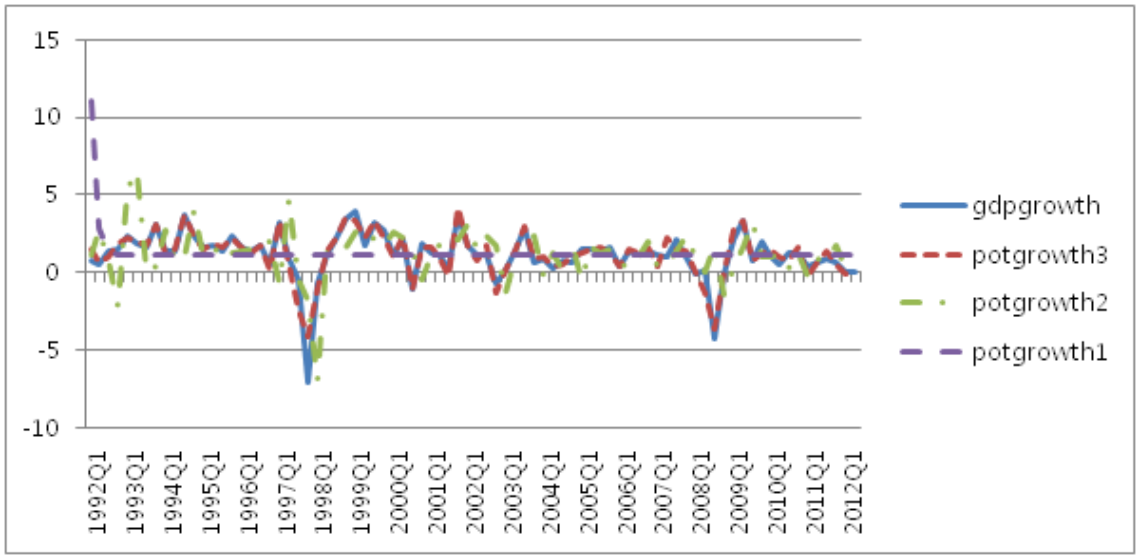
2) 각각의 잠재 GDP성장률은 모형 (1), (2), (3)이 평균적으로 각각 1.25%, 1.23%, 1.19%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모형 (1), (2), (3)의 GDP gap



〈그림 8〉 실질 GDP 성장률과 모형 (1), (2), (3)으로 도출한 잠재 GDP 성장률

(단위 : %)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잠재 GDP를 도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중 생산함수 접근법, 확률적변경생산함수 기법, 그리고 소규모 개방경제를 고려한 잠재 GDP 추정 기법에 KIP Database, 한국은행 자료를 적용, 우리나라의 잠재 GDP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GDP 갭은 1997년, 2007년을 전후로 음수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술적 비효율성은 1997년의 경우와 달리 2007년에 2.2%로 다른 년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추계되어, 두 시기의 경기침체의 원인과 그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방경제를 고려한 경우 잠재 GDP의 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 GDP와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법에 기반한 잠재성장률은 평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2012년도의 잠재 GDP 성장률은 대략적으로 3%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표 1〉 모형 (1)의 계수 추정 결과

Sspace: KALPRAC
Method: Maximum likelihood (Marquardt)
Date: 11/04/12 Time: 00:25
Sample: 1992Q1 2012Q3
Included observations: 83
User prior mean: SVEC0
User prior variance: SVAR0
Convergence achieved after 218 iteration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log(\sigma_e)$	-25.41266	1984614.	-1.28E-05	1.0000
$\log(\sigma_u)$	-8.599978	0.182176	-47.20698	0.0000
ρ	0.184914	0.458652	0.403168	0.6868
μ_y	0.010949	0.001007	10.87683	0.0000
ϕ_1	1.286130	0.148505	8.660489	0.0000
ϕ_2	-0.379828	0.135821	-2.796541	0.0052

	Final State	Root MSE	z-Statistic	Prob.
SV1	12.58137	0.015899	791.3549	0.0000
SV2	12.57042	0.015899	790.6662	0.0000
SV3	-0.044110	0.019792	-2.228681	0.0258
SV4	-0.044325	0.015899	-2.787981	0.0053

Log likelihood	235.1705	Akaike info criterion	-5.522181
Parameters	6	Schwarz criterion	-5.347325
Diffuse priors	0	Hannan-Quinn criter.	-5.451934

〈부표 2〉 모형 (2)의 계수 추정 결과

Sspace: KAL2NDMODEL
Method: Maximum likelihood (BHHH)
Date: 11/04/12 Time: 02:58
Sample: 1992Q1 2012Q3
Included observations: 83
User prior mean: SVEC2
User prior variance: SVAR2
Failure to improve Likelihood after 47 iteration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log(\sigma_e)$	-8.251812	0.003549	-2325.217	0.0000
$\log(\sigma_u)$	-10.08379	0.001035	-9741.065	0.0000
$\log(\sigma_v)$	-9.576362	6.49E-05	-147504.2	0.0000
$\sigma_{u,v}$	-7.33E-05	1.45E-08	-5042.117	0.0000
μ_π	-0.000185	1.25E-05	-14.87194	0.0000
γ	0.006492	0.001118	5.808901	0.0000
β	-0.008267	4.07E-07	-20325.87	0.0000
δ_1	-1.127197	0.000175	-6447.215	0.0000
δ_2	-0.071055	0.000642	-110.6429	0.0000
ρ	0.298746	0.000182	1641.811	0.0000
μ_y	0.009194	0.000737	12.47216	0.0000
ϕ_1	1.557809	6.34E-06	245662.4	0.0000
ϕ_2	-0.646425	3.22E-05	-20099.05	0.0000

Log likelihood	527.1896	Akaike info criterion	-12.39011
Parameters	13	Schwarz criterion	-12.01126
Diffuse priors	0	Hannan-Quinn criter.	-12.23791

〈부표 3〉 모형 (3)의 계수 추정 결과

Sspace: KAL3RDMODEL
Method: Maximum likelihood (BHHH)
Date: 11/05/12 Time: 14:23
Sample: 1992Q1 2012Q3
Included observations: 83
Partial observations: 2
Estimation settings: tol= 0.00050, derivs=accurate numeric
User prior mean: SVEC3
User prior variance: SVAR3
Failure to improve Likelihood after 33 iteration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log(\sigma_e)$	-8.606731	0.344422	-24.98889	0.0000
$\log(\sigma_u)$	-9.902462	0.659066	-15.02500	0.0000
$\log(\sigma_v)$	-10.32422	0.463226	-22.28765	0.0000
$\sigma_{u,v}$	-1.43E-05	1.57E-05	-0.908378	0.3637
μ_π	-0.002406	0.000726	-3.312589	0.0009
γ	0.231162	0.052706	4.385905	0.0000
β	-0.035296	0.031801	-1.109898	0.2670
δ_1	-2.138927	0.363515	-5.884014	0.0000
δ_2	0.763460	0.291913	2.615366	0.0089
ρ	0.604671	0.215087	2.811280	0.0049
μ_y	0.015091	0.008077	1.868366	0.0617
ϕ_1	0.723455	0.172800	4.186653	0.0000
ϕ_2	1.031835	0.453091	2.277323	0.0228
$\log(\sigma_w)$	-13.71609	0.394052	-34.80778	0.0000
μ_c	0.002561	7.73E-08	33138.86	0.0000
c_1	5.50E-05	0.000111	0.494796	0.6207
c_2	-28.11204	0.258133	-108.9054	0.0000
ξ	0.187263	0.066563	2.813319	0.0049

Log likelihood	649.9088	Akaike info criterion	-15.22672
Parameters	18	Schwarz criterion	-14.70215
Diffuse priors	0	Hannan-Quinn criter.	-15.01598

04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국제비교분석

한국경제학회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 외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국제비교분석

김진영 외

Ⅰ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 1970년대 이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8-10%대를 유지하는 고도성장을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성장추세의 둔화를 경험한 한국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와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변화 국면을 맞이함.

○ 한국 잠재성장률의 해외 전망

- OECD는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1년 이후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
- 국제통화기금(IMF)는 2012년 10월,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3.5%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3년 성장률 역시 3.6%로 전망.

○ 한국의 중장기 성장추세

- 과거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위기 이후 성장추세가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제기.

□ 연구의 필요성

○ 중장기적 경제정책 수립의 필요성

-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단기적인 정책의 올바른 이용과 적절한 중장기적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

- 특히,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에 대한 전망이 요구됨.

○ 잠재성장률 분석과 전망의 필요성

-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임.
-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유지하고 올바른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운용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률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정확한 전망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기존 연구 정리 및 분석

-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단기적인 정책의 올바른 이용과 적절한 중장기적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
- 특히,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에 대한 전망이 요구됨.

○ 잠재성장률 개별요인의 추정

-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임.
- 총요소생산성, 노동, 인적자본, 저축률, 물적자본, 국제무역 등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요인들을 제시하고, 각 요인들의 미래전망치를 추정하여 잠재성장률을 전망함.

○ 추정 개별요인

- 추정 될 개별요인은 노동, 인적자본 등 과거 자료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정 될 수 있는 것과 총요소생산성, 저축률 등 과거 자료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정될 수 없는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 아시아 주요국가 비교연구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일부 개발도상국의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정하여 비교.
- 한국 잠재성장률의 변화에서 각 요인들의 기여가 다른 아시아 국가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함.

Ⅱ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OECD

- 2012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3.5%의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와 내수불황으로 4월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
- 장기적인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제시.

○ IMF

- IMF는 2012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 경제가 2012년 3.3%, 2013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는 올 한해 2.7%, 2013년 3.6%의 성장을 전망함.
- 이 전망치는 2012년 7월 전망치에 비하여 하향 조정된 값임.

○ 국내연구

- 성장회계 접근법을 이용한 곽노선(2007) 등의 연구와 비교적 최근의 Lee and Hong(2012), 박무환(2012) 등의 연구들은 약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해 왔음.
- 특히, Lee and Hong(2012)은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생산요소의 추정을 통하여 이자율 및 주변 관련국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보.
- 김기호 · 이종원(2009)와 남광희(2012) 등은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의 둔화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므로, 기업을 통한 적극적인 R&D투자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자본축적의 성장률 기여도의 감소경향은 Lee and Hong(201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이 최근 성장 동력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개별요인분석

-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개별요인에 대한 미래 추정치를 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추정.
- 성장 결정 개별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 노동, 인적자본과 교육, 저축률, 국제무역 등이 포함.
- 이외에도 이자율, 중국 및 일본 등의 성장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등도 추정모형에서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개별요인 분석모형에 포함.

○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분석

- 개별요인분석 후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요인 중 어느 것들이 한국잠재성장률의 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가를 파악.

Ⅲ 한국의 잠재성장률 과거 추이

□ 잠재성장률 과거 추이

○ 기존문헌을 토대로 한 종합적 결론

- 한국은 1980년대 연 평균 약 9%의 고성장을 기록한 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는 연간 약 4%의 성장을 기록.
- 특히 생산요소 중 자본의 성장이 GDP 성장률의 약 50%를 설명.
- 한국은 점차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의 중요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인적자본의 기여도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양질의 노동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임.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의 성장이 GDP 성장률의 50%이상을 설명하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이 GDP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구조가 자본 중심의 성장임을 알 수 있으며 보다 일부 국가들은 자본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가능성을 전망함.

Ⅳ 경제성장률 전망을 위한 기본모형 추정

□ 경제성장의 동태 연립방정식 모형

○ 경제성장 결정요인 추정모형

- 각 생산함수 결정요인들은 초기조건(initial level)으로부터 균제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함을 가정.
- 각 성장률 결정요인들이 균제상태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상호간에는 몇 개의 관계식이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개의 관계식을 동태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최근 20년간의 국가 패널 자료를 기초로 추정함.
- 여기서 추정된 모형의 모수들과 외생변수들에 대한 예측들을 기초로 향후 1~2년간의 단기예측 뿐만 아니라 향후 10~20 년간의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제시하고자 함.

○ 총요소생산성(TFP)

-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Y = AK^{\alpha}(hL)^{1-\alpha}$를 가정하고 성장회계 방법을 통하여 TFP 성장률을 구함.

$$\triangle \ln Y = \triangle \ln A + \alpha \triangle \ln K + (1-\alpha) \triangle \ln h + (1-\alpha) \triangle \ln L \quad (1)$$

- 총요소생산성은 관측된 GDP 성장률, 자본 성장률, 인적자본 성장률 등을 조합하여 생산함수를 통하여 역산하여 산출함.
- 본 연구에서는 Bosworth and Collins (2003)와 Park (2012)에 제시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모형을 기초로 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기대수명, 인구, 인적자본, R&D 자본스톡 성장률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 의 경우 여기에 국가별 더미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성장률($\triangle \ln Y_{c,t-1}$) 변수를 각각 추가하여 3개국 상호 간 영향을 고려함.

○ 유형자본(physical capital)

- 자본은 유형자본으로 정의하며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통하여 계산함.
- GDP자료와 투자자료는 Penn-World Tables(PWT) 6.3에서 수집(Heston et al., 2009)
- 자본에 관해서는 Shioji and Vu (2012)에 제시된 자본증가율 결정모형을 이용하며 자본스톡의 수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저축률, 인구증가율, 대외개방도(GDP 대비 무역량),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재산권지수(property right index)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 인적자본(human capital)

- 인적자본은 아래의 식을 통하여 구성.

$$h = \mathrm{Exp}(\theta s) \tag{2}$$

- 이 때, θs는 노동 1단위 당 효율성 지표이며 자연지수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함.
- θ는 의무교육기간 외 추가교육기간의 한계수입의 평균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arro and Lee (2010)을 참고하여 8%로 가정함.
- s는 교육연수를 의미.
- 인적자본에 관해서는 Lee and Francisco (2012)에 제시된 인적자본 증가율 모형을 이용하며 각 교육수준의 등록률(enrolment rate)의 변화와 교육연령에 속하는 15-24세 사이 인구의 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 저축률

- 저축률 또한 총요소생산성과 마찬가지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임.
- 저축률에 관해서는 Horioka and Terada-Hagiwara (2012)에 제시된 저축률 결정모형을 사용하며 유아층 부양률 (생산가능연령 대비 14세 미만 인구의 비율), 고령인구 부양률 (생산가능연령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생산 수준, 성장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 기대수명이 상승할 경우 은퇴 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저축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GDP 성장률 및 의존성변수는 저축률을 높이는 변수임.

○ 경제성장률 동태 연립방정식

- 네 개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음.

$$\triangle \ln A_t = f\left(\ln A_{t-1}, \ln life_ex_{t-1}, h_t, \ln pop_{t-1}, \triangle \ln RND_t, \triangle \ln Y_{c,t-1}\right) \quad (3)$$

$$\triangle \ln k_t = f\left(\ln k_{t-1}, \triangle \ln A_t, \ln A_{t-1}, \left(\frac{S}{Y}\right)_t, \triangle \ln pop_{t-1}, open_t, prop_right_t\right) \quad (4)$$

$$\triangle \ln h_t = f\left(\triangle enrol_{j,t}, sh_pop_t^{15-24}\right) \quad (5)$$

$$\frac{S}{Y_t} = f\left(life_ex_t, dep_young_t, dep_old_t, \ln y_t, labor_part65_t\right) \quad (6)$$

○ 추정방법

- 제시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총요소생산성(A_t) 성장률, 자본(k_t) 성장률, GDP 성장률, 저축률 등은 내생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는 모두 외생변수이거나 사전에 결정(predetermined)되고 네 개의 내생변수의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여 3SLS 방법으로 추정함.
- 자료는 Penn-World Tables(PWT) 6.3,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재산권지수(property right index), Barro-Lee Human Capital Index 등에서 수집함.
- 성장모형이 시기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패널 표본을 최근20년, 또는 최근 10년으로 한정하여 추정하여 그 추정치를 비교함.

Ⅴ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및 국제 비교

○ 외생변수에 대한 전망치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외생변수에 관한 전망치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전망치와 타 연구에서 수집하고 그 이외의 변수들은 적절한 추정 모형을 설정하여 전망치를 생성함.

* 기대수명, 인구, 인구증가율, 유아층 부양률 (생산가능연령 대비 14세 미만 인구의 비율), 고령인구 부양률 (생산가능연령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등

* 인적자본에 관한 전망은 Barro-Lee (2010)에서 수집함.

* R&D 자본스톡 성장률, 대외개방도(GDP 대비 무역량), 재산권지수(property right index), 경제활동 참가율,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대한 적절한 가정 또는 전망치는 본 보고서에서 설정함.

- 내생 및 외생변수의 가장 최근 자료(t 기)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자본스톡의 변화율 및 다음기의 저축률을 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t+1기의 내생변수 전망치를 구함.

- 여기에 다시 외생변수 전망치(t+1)를 적용하여 t+2기의 내생변수들의 전망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T 기까지 전망치를 순차적으로 추정함.

○ 한국 잠재성장률 향후 전망(예상)

- 자본, 노동, 인적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의 미래 추정치들을 바탕으로 최종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 한국 GDP성장률은 단기적으로 3% 중반부터 4% 초반 사이로 예상.

- 10년 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3% 초반의 성장률을 거쳐 2% 대의 성장률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의 성장요인(예상결과)

- 한국 경제는 유형자본 및 인적자본 성장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적으로 총요소생산성 변화가 GDP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R&D 투자와 인적자본의 투자를 중심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주요 아시아 국가 간 성장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 비교연구

-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제 비교연구가 가능함.

- 아시아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노동투입과 인적자본의 확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각 국가별 성장률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아세안(ASEAN) 등의 국가 그룹 전망이 가능함.

Ⅵ 추정 결과

○ 표본

- 세 개의 전망기간(1981-1990, 1991-2000, 2001-2010)으로 구성된 61개국 불균형 패널이며, 총 159개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
- 각 전망기간의 첫 해를 초기년도(시작연도, t-1)로 설정하여 식(3), (4), (6)을 3SLS방법으로 추정.

〈표〉 동태 연립방정식 추정 결과: 3SLS

TFPgrowth

variables	estimates	t-stat
log(TFP)*	-0.022	-6.62
log(life_expect)	0.054	3.77
human capital	0.001	0.97
log(population)	0.002	2.99
R&D stock growth	0.054	2.75

*USA의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값

K/Lgrowth

variables	estimates	t-stat
log(K/L)	-0.025	-6.68
log(TFP)	0.028	3.47
TFP growth	0.996	3.73
population growth	-0.366	-1.45

saving rate	0.129	4.81
openness	0.000	1.14
property right	0.000	5.08

Saving rate

variables	estimates	t-stat
life expectancy	0.002	1.12
old dependency	-0.422	-2.50
young dependency	-0.144	-1.21
elderly participation rate	0.003	3.98
log(GDP per capita)	0.117	5.27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본 연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값을 이용하여 추정됨.
-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인적자본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R&D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자본 성장률

- 총요소생산성이 높고, 성장이 빠를수록, 자본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저축률이 높아지면 자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재산권 지수가 높을수록), 자본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저축률 추정

- 고령인구 부양률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저축률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유아층 부양률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 2020년까지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 성장회계 방법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인당 자본 증가율, 인적자본 증가율이 사용.

-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1.72%로 추정됨.

- 1인당 자본은 연간 3.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부터 1인당 GDP는 약 1.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인적자본 증가율은 Barro and Lee(2010)의 전망치인 0.03%를 사용하였으며, 이로부터 1인당 GDP는 약 0.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종적으로 1인당 GDP 성장률은 3.24%(1.72% + 1.50% + 0.02%)로 예측됨.

- 2015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자료를 더 구축한 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예정.

○ 요약

- R&D 자본스톡의 확충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위하여 필수적임.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함으로써 파급되는 저축률을 높이고,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권보호 수준 역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자본 성장 수준을 유지해야 함.

- 2020년까지의 3.24% 잠재성장률 전망치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53.09%로 생산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Ⅶ 연구 결과의 함의

-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확대와 신흥시장국 등의 자본유출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우려됨.

- 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확대로 인한 노동감소에 대비하여 여성 및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모색 및 이들의 사회적 근로 유인을 유지해야 함.

- 또한 인적자본의 증가를 위하여, 기초교육의 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조업 관련 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 외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 규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시도되어야 함.

제2부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05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1)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 외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1)

변양규 외

Ⅰ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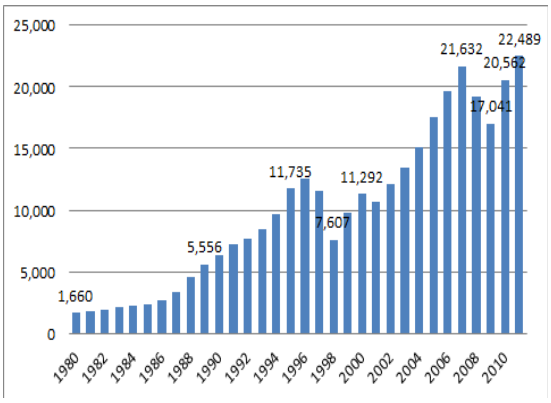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1981~2011년)간 연평균 6.7%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소득(GNI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2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다시 2만 달러에 재진입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 모멘텀을 가지지 못한 채 빠른 하강 국면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약 6.6%의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경제가 2000~2007년 중에는 4.7%로 2%p 가까이 하락하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겹친 2008~2011년 중에는 평균 성장률이 3.1%로 급락했다. 이처럼 가빠른 성장둔화가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3%대로 내려 잡는 추세가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올 5월 OECD는 2001～2007년 4.4%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 현재 3.4%로 하락한 상태이며 2018～2030년에 OECD 평균(2.2%)보다 약간 높은 2.4%로 떨어질 것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도 10월에 발표한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04~2007년 4.4%에서 2012~2016년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서 일국의 기초체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자본·생산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의 총체적인 공급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예견될 수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동측면에서의 공급능력의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동공급 감소는 민간소비 위축과 기업투자 감소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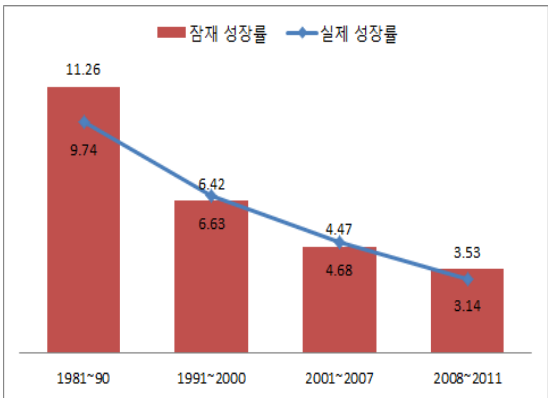
악순환과정을 통해 자본스톡 증가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요소투입증가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단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투입 확대의 한계를 보완해야할 생산성 향상, 또는 생산과정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우리나라 1인당 GNI



〈그림 1-2〉 실제성장률 및 잠재 성장률

(단위: %)



주: 잠재성장률은 HP 필터로 추정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및 소득감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됨은 물론이고 세수차질을 야기해 국가의 재정전전성을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대한 감당을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잠재성장률의 제고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정책개발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수많은 정책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에 개발된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 및 자본투입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실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추정 및 예측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전망을 시도하는 것은

잠재 성장률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노동투입의 확대 및 자본스톡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에 개발된 정책들이 지금까지 실천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전망

1. 추정방법론: 생산함수접근법

잠재성장률(잠재GDP 증가율)은 직접적인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량분석방법에 의존하여 추정하는 데 추정 방법은 크게 생산함수접근법과 시계열분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잠재GDP수준을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아래에서 생산요소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출물 수준으로 정의하고 각 생산요소의 추세적인 수준이 투입되었을 경우의 산출물수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시계열분석법은 GDP의 시계열속성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HP필터법, 은닉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등이 있다.
본고에서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함수 접근법을 고려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본이 되는 것은 생산함수접근법 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생산함수접근법의 장점은 성장회계방식을 통해 성장률의 요인을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 변동을 개별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고 요소별 미래예측을 전제로 향후의 잠재GDP 전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 시계열분석법은 현재까지의 실적치를 기초로 추세치를 추출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전망치 시산이나 요인별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생산함수는 각종 이론 및 실증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콥-더글러스(Cobb-Douglas)동차함수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양적성장체계

에서 질적 성장체계로 성장전략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잠재적 생산능력을 추정하려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단순한 양적요소로만으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투자나 인적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질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투입요소로써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까지 고려한 확장된 형태의 다음과 같은 솔로우-스완(Solow-Swan)모형을 이용하였다.

$$Y_t = A_t(N_t h_t)^{\alpha} K_t^{1-\alpha} \quad \cdots\cdots (1)$$

여기서 Y_t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N은 노동량, h는 인적자본, K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2. 자료와 변수의 구축

총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으로부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2005년 기준 실질GDP데이터를 이용하였다. 1981년부터 2011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6.7%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2001~2011년)가 가장 낮은 성장률인 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인 2008~2011년은 3,1%로 크게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노동투입에 대한 자료는 취업자수와 평균근로시간 등과 같은 양적지표와 인적자본지수로 구성된다. 양적인 지표로서 노동투입은 취업자수와 평균근로시간을 구하여 곱한 값을 이용하였다.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전 기간동안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율 추세는 80년대 3.05%에서 90년대 1.48%, 2000년대 1.06%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평균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인적자본지수는 한진희 외(2002), 곽노선(2007)에서와 같이 취업자의 각 그룹별 상대적 임금을 통하여 인적자본의 차이를 구하고 각 그룹별 취업 구성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h_t = \sum_e \sum_g w_{e,g} l_{e,g,t} \quad \cdots\cdots (2)$$

여기서 $w_{e,g}$ 는 학력별(중졸, 고졸, 대졸이상:e) , 성별(남성, 여성:g) 상대적 임금의 기간 평균이고, $l_{e,g,t}$ 는 학력별(중졸, 고졸, 대졸이상:e) , 성별(남성, 여성:g), 연도별(t) 취업자 비율이다. 학력별, 성별 상대적임금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학력구성의 변화를 인적자본지수의 변화로 측정한다는 변수 구성의 목적상 상대적 임금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을 구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그룹별 상대적 임금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2-1〉 성별 학력별 상대적 임금지수

(단위: %)

시점	학력별	남	여
1993	중졸	178	100
	고졸	184	110
	대졸이상	251	187
2000	중졸이하	161	100
	고졸	176	117
	대졸이상	249	185
2010	중졸이하	152	100
	고졸	172	117
	대졸이상	261	179
평균	중졸	164	100
	고졸	177	115
	대졸이상	254	183

자료: 통계청

자본스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부통계의 순자본스톡[1)]을 이용하였는데 현재 97년 이후 자료만 가능하여 이전 기간 자료는 국민계정의 실질 총고정자본과 감가상각액을 이용하여 80년까지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고에서는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노동분배율은 생산함수 추정법을 통해 추정된 노동탄력성 0.5551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 통계에 있는 피용자보수/(영업잉여+피용자보수)의 1980~2011년 평균값 0.5667과 유사하였다.

1) 순자본스톡은 추계기준시점에 생산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사용연수, 상태 등을 고려한 시장가액으로 투자된 자본재의 양적감소(폐기)와 질적감소(감가상각)를 모두 감안한 가액

$$\log(Y_t) = \log(A_t) + \alpha\log(N_t) + \alpha\log(h) + (1-\alpha)\log(K_t)$$

$$\Rightarrow \quad \log(A_t) = \log(Y_t) - \alpha\log(N_t) - \alpha\log(h) - (1-\alpha)\log(K_t) \quad \cdots\cdots (3)$$

〈표 2-2〉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

(단위: %)

	gdp	노동투입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취업자	월평균 근로시간			
80년대(1981~1990)	9.74	3.05	-0.65	0.46	7.86	4.56
90년대(1991~2000)	6.63	1.48	-0.04	0.64	8.11	1.89
2000년대(2001~2011)	4.12	1.06	-0.76	0.66	4.47	1.65
전체 (1981~2011)	6.74	1.83	-0.49	0.59	6.74	2.67

3. 잠재성장률 추정

잠재GDP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요소의 안정적인 추세를 구해야 한다. 즉, 위의 성장회계 결과로부터 얻어진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치, 노동 투입의 추세치, 인적자본 추세치 그리고 자본스톡 추세치 등이 구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HP필터(Hodrick-Prescott Filter)를 이용하였다.

추세적 취업자수는 90년대 들어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속도 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지수는 정의상 무한히 증가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추세적 인적자본지수는 최근까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인적자본지수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는 아직까지 관찰되고 있지 않다.

추정된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GDP식을 도출하였다.

$$Y_t = A_t(N_t h_t)^{\alpha} K_t^{1-\alpha} \quad \cdots\cdots (4)$$

식(4)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잠재GDP를 산출한 결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01~2011년중 잠재성장률은 4.16%로 90년대(6.43%)대비 2.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물적자본의 기여도[2] 하락이 1.40%p로 가장 높고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은 각각 0.64%p와 0.25%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스톡증가 둔화, 즉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에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9.1%에서 2000년대에는 3.9%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표 2-3〉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추이

(단위: %)

	잠재 성장률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취업자수	근로시간				
1981~1990	10.62	1.79	-0.35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99	-0.25	0.74	0.34	3.30	2.01
2001~2011	4.16	0.52	-0.42	0.10	0.37	1.90	1.76
1981~2011	6.98	1.08	-0.34	0.74	0.34	3.12	2.68

국내 주요기관들의 잠재성장률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8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에는 4%대, 2010년대에는 3%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0)은 잠재성장률이 80년대 9.1%에서 90년대에는 6.7%, 2010년대에는 4.3%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도 유사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초반 4.4%에서 후반에는 4.9%로 상승하지만 2011~2030년에는 4.3%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4〉 주요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단위: %)

<table>
<tr><th></th><th>현대경제연구원</th><th>한국은행</th><th>국회예상정책처</th><th>OECD</th></tr>
<tr><td>1981~1990</td><td>9.1</td><td>8.6</td><td>N/A</td><td>N/A</td></tr>
<tr><td>1991~2000</td><td>6.7</td><td>6.3</td><td>6.4</td><td>N/A</td></tr>
<tr><td>2001~2005</td><td rowspan="3">4.3</td><td>4.4</td><td rowspan="3">4.4</td><td rowspan="2">4.4</td></tr>
<tr><td>2006~2007</td><td rowspan="2">4.9</td></tr>
<tr><td>2008~2010</td><td rowspan="2">N/A</td></tr>
<tr><td>2011</td><td rowspan="4">3.5</td><td rowspan="4">4.3</td><td>3.8</td></tr>
<tr><td>2012~2016</td><td>3.7</td><td rowspan="2">3.4</td></tr>
<tr><td>2017</td><td rowspan="2">N/A</td></tr>
<tr><td>2018~2020</td><td>2.4</td></tr>
</tabl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10.
OECD Economic Outlook 91 long-term database,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2.10

2) 식(4)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dot{Y}=\dot{A}+\alpha\dot{h}+\alpha\dot{N}+(1-\alpha)\dot{K}$, $\dot{Y},\dot{A},\dot{h},\dot{N},\dot{K}$ 은 각각의 증가율

4.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2011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 경제의 2050년까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제예측이 그렇듯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 발생, 추정방법에 따른 다른 예상치 등 예측상의 한계점을 있다는 점을 감안, 아래에 제시할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략적인 방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각각의 예측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노동투입은 취업자수[3]와 평균근로시간의 곱으로 계산되는 데 취업자 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15세 이상 남녀인구 전망치에 AR(1) 모형으로 추정된 남녀 고용률을 각각 곱해서 산출하였다. 남녀 고용률은 완만한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은퇴이후의 취업인구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15세 인구의 감소의 영향으로 빠른 둔화추세를 보이다 2031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의 평균근로시간의 예측치는 최근의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근로시간[4],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 등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적절한 예측치로 판단된다. 취업자 수와 근로시간의 변화가 모두 감소추세로 추정되면서 이들의 곱으로 계산되는 노동투입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3) 일반적으로 잠재GDP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고 자연실업률을 고려하여 노동투입을 추정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직접 취업자 수와 평균노동시간의 추세를 전망하여 노동투입을 추정했다.

4) 우리나라의 월평균근로시간은 80년 223.9시간에서 2010년 176.7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표 2-5〉 고용률 및 취업자수, 근로시간, 노동투입 추세 증가율 전망

(단위: %)

	고용율		취업자수 증가율	근로시간 증가율	노동투입 증가율
	남성	여성			
1981~1990	73.01	46.05	3.09	-0.53	2.53
1991~2000	74.57	49.64	1.67	-0.46	1.30
2001~2010	74.33	52.22	0.91	-0.74	0.18
2011~2020	74.26	54.29	0.24	-0.80	-0.49
2021~2030	74.34	55.76	-0.97	-0.77	-1.74
2031~2040	74.41	56.23	-1.27	-0.75	-2.01
2041~2050	74.49	56.32	-1.28	-0.74	-2.01

물적자본인 자본투입에 대한 전망도 노동투입과 마찬가지로 AR(1)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자본투입의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5], 수익률 저하에 따른 보수적 기업투자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정결과 자본투입 증가율은 2011~2020년 3.83%, 2021~2030년 3.44%, 2031~2040년 3.15%, 2041~2050년 2.95%로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인적자본은 취업자들의 학력별 구성에서 고학력화의 정도가 반영되는데 AR(1)모형 추정 결과,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2011~2020년 0.71%, 2021~2030년 0.77%, 2031~2040년 0.82%, 2041~2050년 0.88%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대학진학률이 점차 하향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의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솔로우(solow) 잔차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은 어떤 계량적 방법을 통한 전망보다는 일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과거 추이를 보면 80년대 4.35%,

5) 총저축률은 80년대 이후부터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 10%대로 하락했고 2000년대에는 한자리수로 급락

	81~85	86~90	91~95	96~00	01~05	06~09
총저축률	28.2	37.8	36.9	34.7	31.9	30.5
개인순저축률	11.8	22.4	21.4	15.5	5.0	3.3

90년대 2.01%, 2000년대 1.76%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AR(1)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개방화 지속과 제도적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총요소생산성이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총요소생산성 개선 여지가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에 의하면 2011~2012년 약 3.45%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2013~2017년에는 3.08%로 낮아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40년대에는 1.6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50년 약 4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약 2.13%로 전망되는데 이는 향후 40년의 경제성장이 이전 30년(1981~2010)의 7.09%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6].

〈표 2-6〉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1981~2050)

(단위: %)

	잠재성장률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10.62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74	0.34	3.30	2.01
2001~2010	4.23	0.11	0.38	1.94	1.78
2011~2020	3.08	-0.21	0.40	1.69	1.19
2013~2017	3.01	-0.28	0.40	1.66	1.22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5. 잠재성장률 제고의 중요성

앞에서 살펴 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3% 중반으로 추락한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에 2%대로 추락하고 2030년대에는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무엇보다 일자리와 소득증가가 위축되면서 세수 감소와 더불어 국가부채 급증, 내수 부진 등 악순환의 덫에 걸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 시기도 지연될 수 있고 국제적인 경제위상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2000년

6)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한 이재준(2010)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1~2020년 4.1%%, 2021~2030년 2.7%, 2031~2040년 1.8%, 2041~2050년 1.2%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2위였던 한국의 GDP순위는 2011년 15위로 세 단계 하락한 상태이며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도네시아, 터키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에게 추월당할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2-7〉 2011년 세계 GDP 순위

(단위: 십억달러)

	2011		2010	2005
순위	국가명	금액	국가명	국가명
1	United States	15,094	United States	United States
2	China	7,318	China	Japan
3	Japan	5,867	Japan	Germany
4	Germany	3,571	Germany	United Kingdom
5	France	2,773	France	China
6	Brazil	2,477	United Kingdom	France
7	United Kingdom	2,432	Brazil	Italy
8	Italy	2,195	Italy	Canada
9	Russian Federation	1,858	India	Spain
10	India	1,848	Canada	Brazil
11	Canada	1,736	Russian Federation	Mexico
12	Spain	1,491	Spain	Korea, Rep.
13	Australia	1,372	Australia	India
14	Mexico	1,155	Mexico	Russian Federation
15	Korea, Rep.	1,116	Korea, Rep.	Australia
16	Indonesia	847	Netherlands	Netherlands
17	Netherlands	836	Turkey	Turkey
18	Turkey	773	Indonesia	Belgium
19	Switzerland	636	Switzerland	Switzerland
20	Saudi Arabia	577	Poland	Sweden

따라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끌어올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하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잠재성장률 1%p 제고는 절실하다. 2000년대 고용탄성치[7]를 고려할 때 성장률 3.0%는 평균적으로 약 22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평균 33만개[8]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률 3%로는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

7) 2001~2011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1.2%)을 경제성장률(4.1%)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0.30였다.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0.30% 늘어난다는 뜻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수 2,424만명에 비춰보면, 성장률 1%당 일자리는 약73,000개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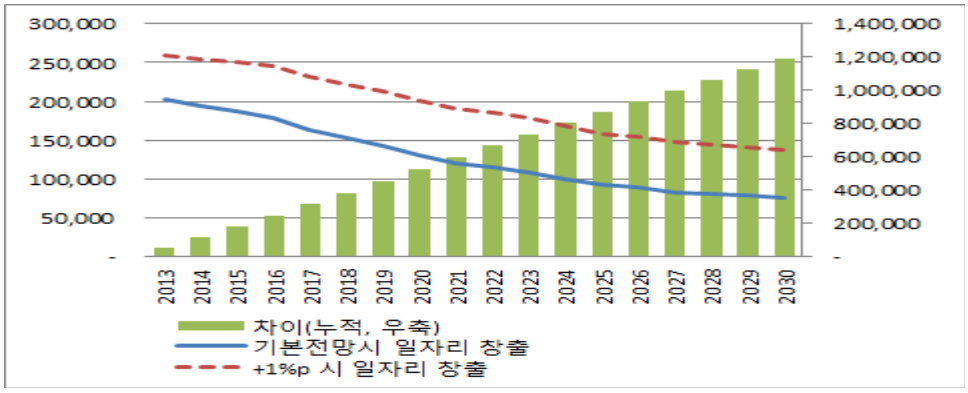
8) 향후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 61.5%, 실업률 3.4%를 가정했다.

히 고용탄성치를 가지고 추산해 보더라도 성장률이 1%p가 높아지면 매년 모자라는 일자리 11만 개 중 약 68%에 해당하는 약 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이번에는 차기정부의 2013~2017년 기간 중 성장률 1%p 제고가 창출하는 일자리를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2010년 기준 취업계수는 6.5명/10억원으로 2000년 12.24명/10억원 대비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취업계수는 매년 약 5%[9]씩 감소해 2017년에는 4.54명/10억 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정 결과 성장률 1%p 제고의 효과는 매년 취업자를 약 63,000명 증가시켜 5년간 약 31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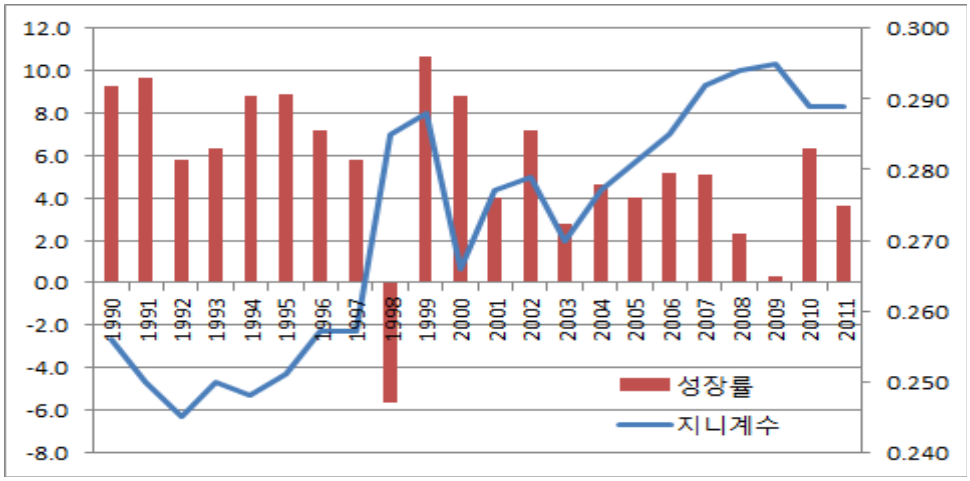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성장률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의 상관계수는 -0.51%로 서로 逆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고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성장률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지니계수 즉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오정근(2012)에 의하면 1990~2010년 중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소득불평도인 지니계수가 0.3%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경우 계층별 소득은 2분위 0.72%, 3분위 0.67%, 1분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시 소득증가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률의 제고가 졸실하다고 하겠다.

9) 취업계수는 2000년 이후 매년 약 6.1%씩 감소했는데 향후 그 감소속도는 완만해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2]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단위: %)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는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하게 보면 만약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3%이면 1인당 국민소득(GNI)은 10년 후 1.3배, 20년 후에는 1.8배가 되지만 4%이면 10년 후 1.5배 20년 후 2.2배로 증가한다. 하지만 환율이나 물가의 경우는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장률이 환율 및 물가에 미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즉 성장률에 대한 환율과 물가의 탄성치[10]만큼 증가율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3%대인 경우, 2011년 22,489달러인 1인당 GNI가 3만달러 달러가 넘는 연도는 2017년(30,584달러)이 된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1%p 높일 경우 물가 및 환율 변화를 고려하면 3만 달러 달성 시기는 2016년(31,172달러)으로 1년이 앞당겨진다. 더구나 성장률 1%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3%와 4% 각각의 경우 2024년(41,685달러)과 2020년(40,205달러)으로 4년의 격차가 생긴다. 203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1인당 GNI는 기본전망의 경우 53,122달러이지만 잠재성장률이 1%p 증가할 경우에는 72,114달러가 예상되어 그 격차는 2011년 GNI 수준인 18,993달러에 달하게 된다.

10) 2000~2011년 중 GDP디플레이터 연평균 증가율(2.4%)을 경제성장률(4.5%)로 나눈 물가탄성치는 0.53으로 우리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물가가 약 0.53% 늘어난다는 뜻이다. 환율탄성치는 -0.26으로 계산되었다.

〈표 2-8〉 1인당 GNI 전망

(단위: US달러)

연도	기본전망	+1%p	차이
2012	23,738	23,738	-
2013	25,009	25,434	425
2014	26,330	27,234	903
2015	27,706	29,145	1,438
2016	29,137	31,172	2,034
2017	30,584	33,278	2,694
2018	32,065	35,485	3,420
2019	33,582	37,800	4,218
2020	35,118	40,205	5,087
2021	36,684	42,719	6,034
2022	38,306	45,372	7,066
2023	39,983	48,171	8,188
2024	41,685	51,085	9,400
2025	43,420	54,126	10,706
2026	45,231	57,352	12,122
2027	47,081	60,726	13,645
2028	49,012	64,304	15,292
2029	51,030	68,103	17,073
2030	53,122	72,114	18,993

주: 기본전망은 앞에서 추정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는 경우로 물가상승률은 2.4%, 환율은 0%, 인구증가율은 통계청 인구전망을 활용함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는 자연스럽게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차이를 초래한다.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채발행이나 세금인상 없이도 차기정부 5년간 추가적으로 47조원, 연평균 9.4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세수 증대는 최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경제성장률 향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모두 복지재정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그만큼의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셈이 된다.

〈표 2-9〉 +1%p의 세수증대 효과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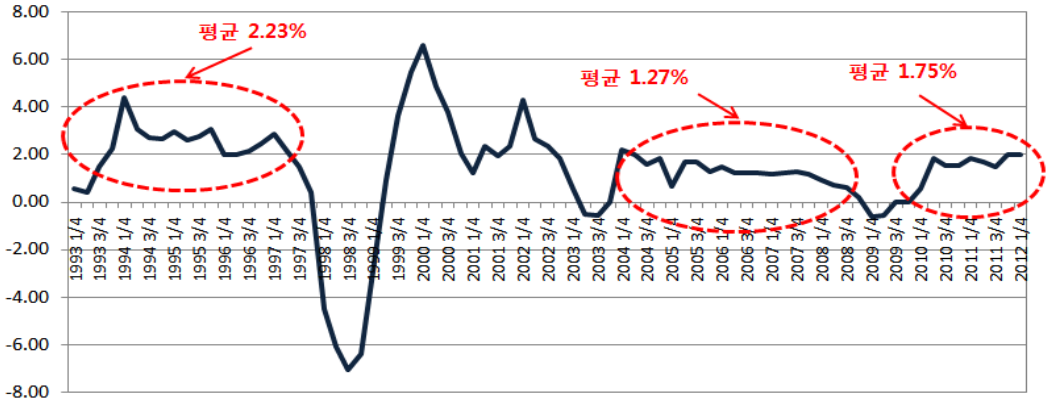
연도	기본전망	+1%p	차이
2013	268.8	271.3	2.5
2014	285.4	290.8	5.4
2015	304.3	313.0	8.7
2016	338.1	351.1	13.0
2017	355.7	372.9	17.2
합계			46.9
연평균			9.4

Ⅲ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투입 확대 방안 분석

1. 고용창출 추이의 하락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고학력 인적자본이 충분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투입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추이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93년 1분기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분기 사이 우리 경제의 평균 분기별 고용성장률은 2.23%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변동한 취업자 증가율은 최근 2004년 1분기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분기 사이 1.27%로 1%p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아직 1.75%에 그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3-1〉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고용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은 추세는 취업자 증가의 추세를 경기순환기별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표 3-1〉에 의하면 지난 1985년 9월에 시작한 경기변동 제4순환기부터 2005년 4월에

끝난 제8순환기까지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비로 약 39만8천 명 증가하여 약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6.8%였으며 고용탄력성은 0.37이고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경우 취업자는 약 7만 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진행된 경기변동 제9순환기를 살펴보면 취업자 증가는 26만3천 명으로 과거 평균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취업자 증가율 역시 1.1%로 과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고용탄력성도 0.37에서 0.24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경제성장 1%당 취업자 증가 역시 7만 명에서 5만4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6.8%에서 4.2%로 하락한 점을 감안해도 취업자 수 증가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 경기순환과 고용변동

(단위: 천 명, %)

	경기순환주기 기준 (저점~저점 간)		경기확장기간 기준 (저점~정점 간)	
	제4~8 순환기	제9순환기	제4~8 순환기	제9순환기
고용증가	398	263	482	305
고용증가 장기추세	391	218	412	254
고용증가율	2.2	1.1	2.7	1.3
경제성장률	6.8	4.2	8.0	4.9
고용탄력성	0.37	0.24	0.39	0.28
1% 성장시 고용증가	70	54	72	6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주1: 2005년에 시작한 제9순환기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08년까지의 자료만 사용하였음
주2: 장기추세는 HP filtering에 의해 계산

한편 경기변동 주기별 취업자 증가세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증가 중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추이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취업자 증가 중에서 장기추세에 의한 부분을 살펴보면 제4~8순환기 사이에는 취업자 증가 39만8천 명의 대부분인 39만1천 명이 장기추세에 의한 부분인 반면 제9순환기에는 26만3천 명 중에서 약 83%에 해당하는 21만8천 명 만이 장기추세에 의한 부분이다. 또한 두 기간 사이 취업자 증가세가 약 13만5천 명 감소했는데 장기추세는 무려 17만3천 명이나 감소했다. 따라서 제9순환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고용창출 부진의 상당 부분이 경기순환적 요소라기보다는 장기추세의 하락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경기변동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창출의 장기추세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특징이다. 변양규 외(2009)에 의하면 경기변동에 의한

고용변화를 제외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만 살펴볼 경우 제9순환기 고용증가세는 약 9만4천 명 감소하였지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 감소는 약 12~13만 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제9순환기 동안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여기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구 및 취업자 증감추이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연령	지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15세~)	인구	393	384	377	377	583	462	408	428	494	498	462	518
	취업자	416	597	-30	418	299	295	282	144	-71	323	415	468
	고용률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3
20~29세	인구	-73	-86	-112	-133	-196	-133	-88	-69	-88	-127	-128	-40
	취업자	-33	29	-152	-14	-113	-146	-69	-98	-115	-69	-58	-24
	고용률	60.2	61.3	60.2	61.1	61.2	60.2	60.0	59.1	58.2	58.2	58.5	58.5
30~39세	인구	21	23	6	-3	-52	-80	-100	-34	-62	-84	-84	-110
	취업자	30	45	-26	-5	-59	14	-101	-25	-173	-4	-47	-37
	고용률	72.7	73.0	72.6	72.6	72.3	73.2	72.9	72.9	71.3	72.0	72.2	72.5
40~49세	인구	358	305	277	186	147	70	36	71	49	16	14	16
	취업자	284	295	175	175	99	102	77	64	-24	29	58	16
	고용률	76.6	77.4	76.9	77.3	77.1	77.7	78.3	78.4	77.7	77.8	78.4	78.3
50~59세	인구	72	112	150	222	366	313	278	218	303	360	346	317
	취업자	60	139	76	160	265	236	258	207	198	294	291	286
	고용률	66.8	68.2	67.6	67.8	68.1	68.5	69.7	70.6	70.3	70.9	71.6	72.1
60세 이상	인구	232	245	228	200	342	236	182	206	246	280	303	384
	취업자	108	133	-62	115	124	122	115	18	54	47	149	225
	고용률	38.0	38.7	36.2	36.9	36.9	37.4	38.1	37.2	36.7	36.0	36.5	37.4

자료: 통계청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셀은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을 의미

이처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감소는 대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를 보면, 2003년 카드대란 및 2009년 금융위기에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그 외 년도를 살펴보면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9세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취업자세가 더 강해서 대체적으로 고용률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다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9세 노동시장의 약세는 최근 들어 30~39세 노동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아직 40세 이상 노동시장에는 이러한 약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 약화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취업자와는 달리 이들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새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겪었던 취업난이 나이가 들어도 30대가 되어도 상당 부분 지속되는 개연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취업난은 20대를 거쳐 30대 전체로 확산되고 그 이후에는 40대 및 50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세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생산성 하락과 성장 위축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성장이 위축되면서 고용창출 추세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저성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역시 저고용 추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노동시장제도가 경직적이게 되고, 그 결과 노동력을 사용할 유인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저고용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구구조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성장력 저하, 그리고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고용창출의 구조적 요인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역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경우 주어진 경제성장률 하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투입 확대를 통해 성장률 자체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잠재 GDP 및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갸선하여 보다 많은 노동투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정책 여건의 변화

①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저성장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용창출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이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경기침체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는 과거에 경험하였던 고용창출이 불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구조적 요인의 개선 없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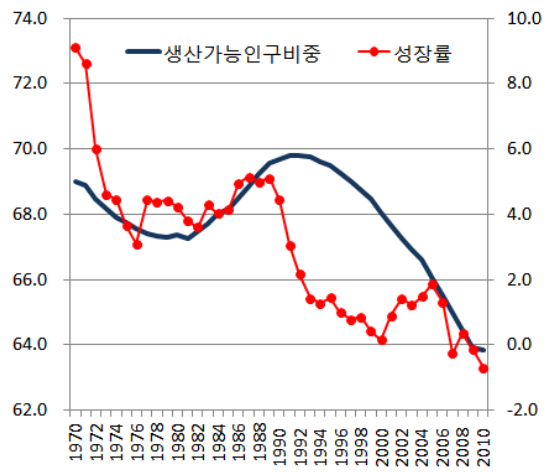
추가적인 노동투입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의존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고용탄력성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보다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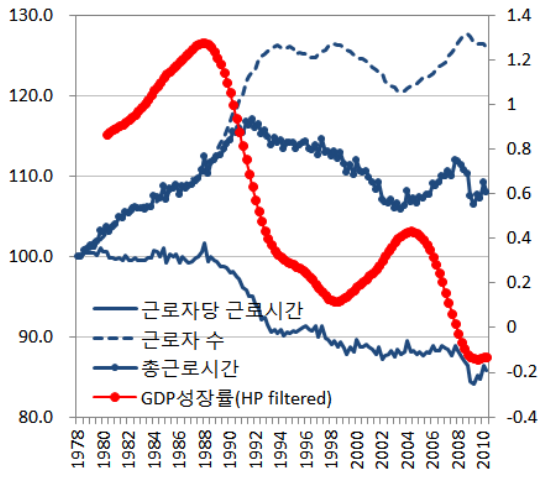
우리나라보다 20년 일찍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급진적인 금리인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증가한 유동성이 부실 중소기업 및 가계로 대출되면서 담보대출의 부실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켰고 직접적인 대출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버블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장기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 및 대응에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그림 3-2]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측면)



(노동공급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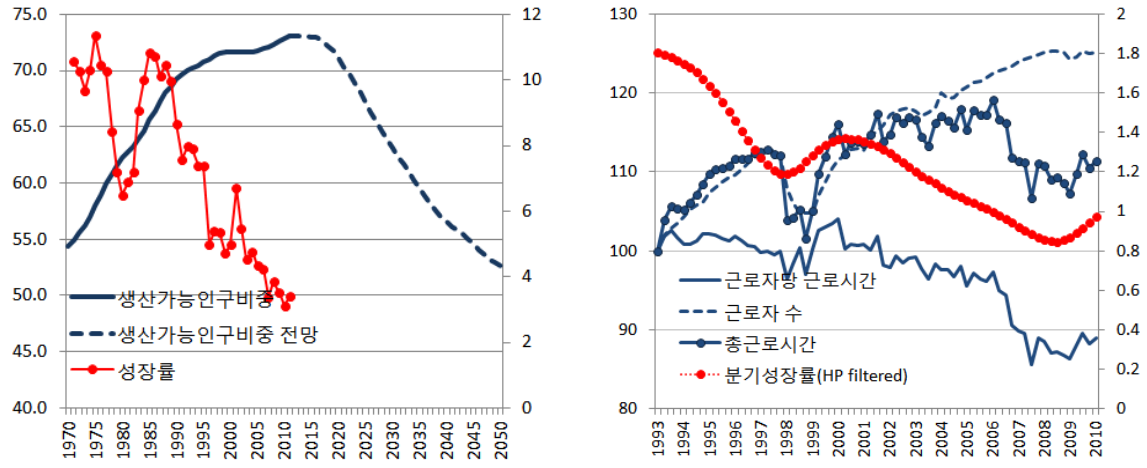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청 및 일본 후생노동성
주: 좌측 성장률은 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값이며 우측 노동공급은 1978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환산한 값

〈그림 3-2〉처럼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주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1980년 말부터 근로자당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일본 경제 전체의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공급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1990년대 초 시작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3-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역시 2015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일본과는 약간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성장률을 다시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근로자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근로자수의 증가세가 약해지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총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일본과 유사하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저성장 국면 진입을 새로운 정책 여건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투입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림 3-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측면) (노동공급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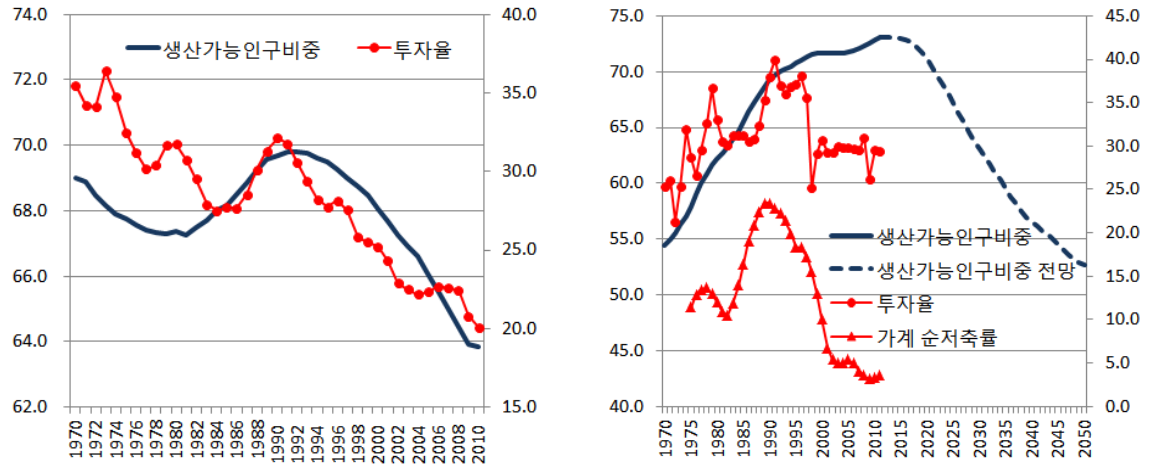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좌측 성장률은 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값이며 우측 노동공급은 1993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환산한 값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투자율이 감소하고 경제 전체의 탄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처럼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국내 투자자금이 감소하고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투자율이 30%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 또한 한때 25%에 근접했던 가계의 순저축률은 199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에는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부족에 의한 저성장기조 지속은 새로운 정책적 여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울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투자 위축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고된다면 궁극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낮아진 가계저축률을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노동투입 확대는 저성장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

[그림 3-4] 인구구조 변화와 투자위축

(일본) (한국)



자료: 한국 통계청, 일본 통계청 및 IMF
주: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은 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값

② 노동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기저성장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어진 경제성장에 대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의 장기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

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런 접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투입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부 정책에서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측면들이 관찰되고 있다. 우선 첫째, 일부 정책들은 근로자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일변도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위축되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고용위축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부 정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접근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을 감소시켜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규직의 사용이 증가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손쉬운 방법인 비정규직의 사용규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성장의 기조가 가시화되면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달리 대증요법(對症療法)적인 규제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에 있어 고용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용친화적 정책방향을 모색해야만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기존 노동시장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기존 취업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인해 외부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기회가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조합은 그간 각자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제 기업과 노동조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은 생산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기존의 취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고려하는 대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투입을 늘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정책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당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 실패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대타협의 자세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으로 인식할 경우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게 되며 그 결과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지난 1980년대부터 경험하여왔다. 그 이후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에서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란 개념으로 대체하고 노동사용에 대한 각종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이 된 '바세나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사대표 양측이 사회 전체를 고려하면서 이뤄낸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대타협이라는 전통이 근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1899년 이루어진 노사간의 '9월 대타협(September Compromises)'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는 정부의 간섭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했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반드시 상호 모순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수용하였고, 기업은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해 당사자 중 일부의 야보나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에는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임금은 유지하는 형태의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였으나 결국 실패하면서 1990년대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조정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나누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위기에 대한 공동의식이 있었으며, 그 결과 근로시간을 20% 감소시키고 임금도 16% 감소시키면서 고용안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 역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타협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집단이기주의적 대응을 자제하고 사회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투입을 증대시키려면 이제부터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를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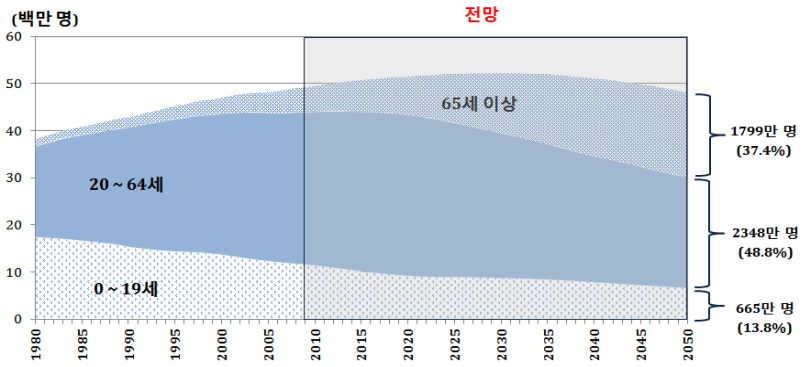
3.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노동투입 제고

본 절에서는 노동투입의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효과가 큰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및 '고용유인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주로 분석할 예정이며, '고용유인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정책'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① 여성 경제활동 추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 자체도 감소할 전망이다. 전망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림 3-5〉처럼 우리나라 인구는 약 2030~35년 이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그 이후 고령자의 인구비중은 더욱 확대되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4%가 65세 이상일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점은 2020년부터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동력 투입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통한 노동투입의 증대이다.

[그림 3-5]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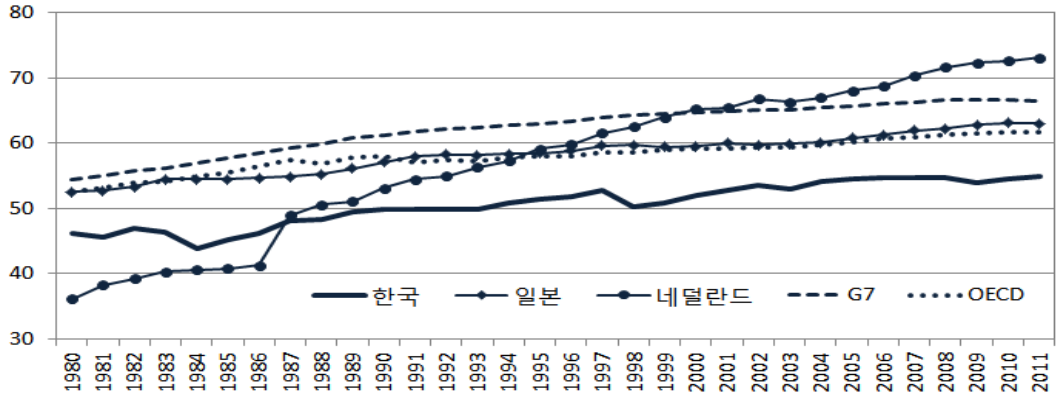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Survey-Korea(2012)에 근거한 계산

일단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6.3%에서 2011년 54.9%로 8.6%p 상승하였으나 2004년 이후 54%대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63.0%), G7(66.5%) 및 OECD 평균(61.8%)보다 약 7%p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이라도 가시적인 노동투입 확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기 이전에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통해 노동투입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 확립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아직 낮은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 3-7〉에 나타난 것처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관찰되는 경력단절현상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장을 거치면서 잠시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이후 상당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재취업 이후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보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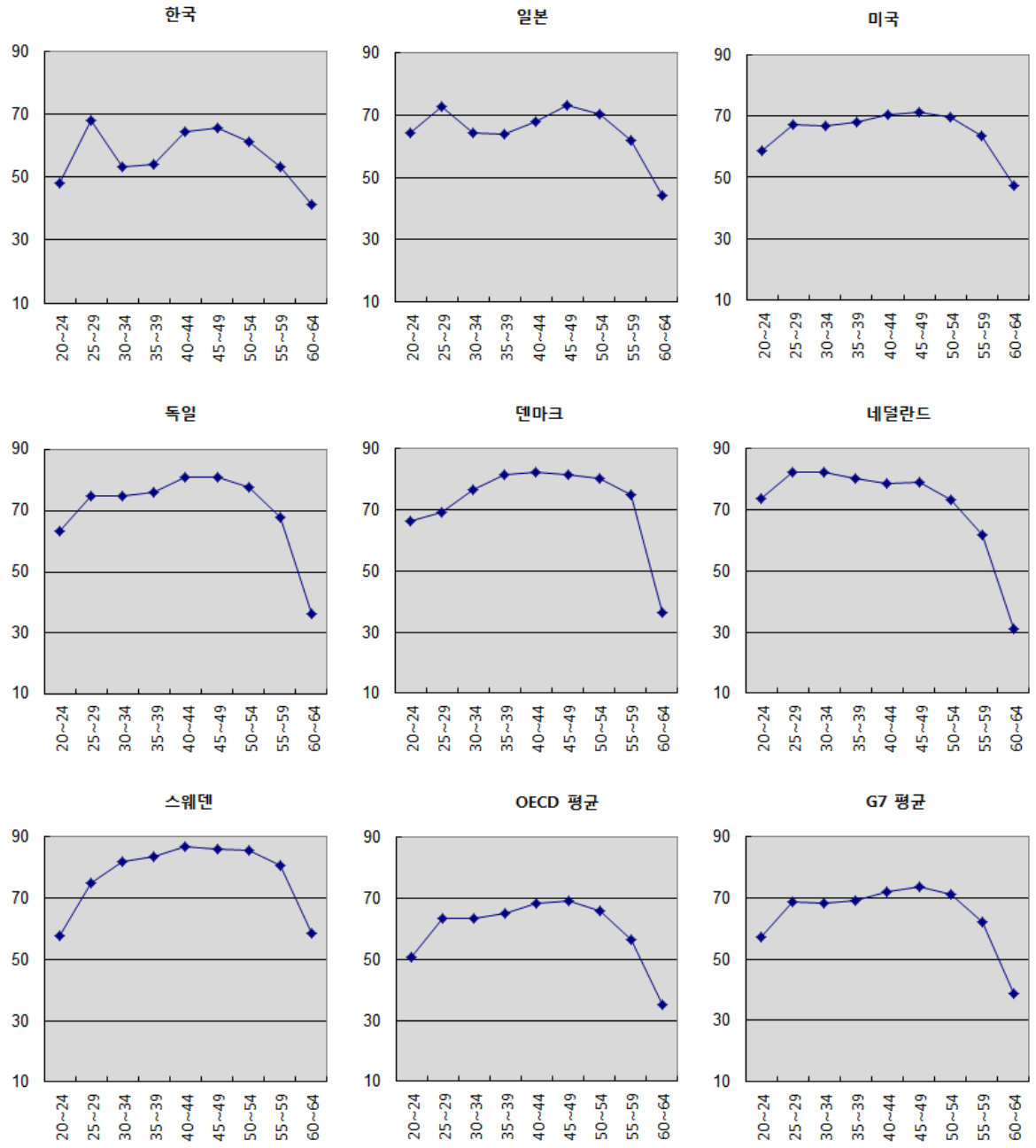
[그림 3-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OECD Stat(15~64세 기준)

[그림 3-7] 여성 경력단절현상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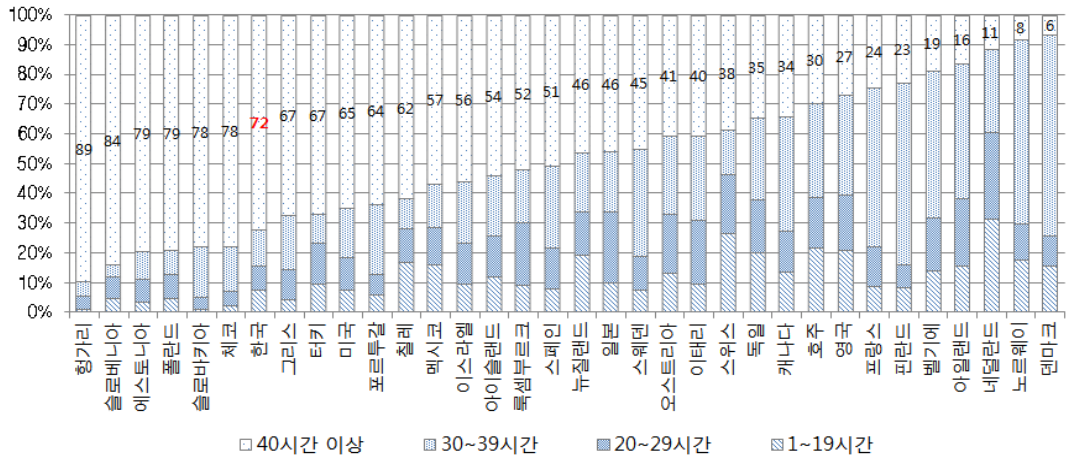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한편 경력단절현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경직성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10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2.9시간을 기록하여 OECD 평균 34.7시간보다 8시간 이상 길고 네덜란드(24.5시간)에 비해서는 무려 18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근로자 중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의 비중은 72.2%로 비교대상 OECD 34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구권 국가나 최근 OECD에 가입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실

질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여성의 경우 장시간근로 또는 경제활동 포기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2009) 『한국의 차별출산력 분석』에 의하면 근로형태별 출생아 수는 임금근로자 1.75명, 자영업자 2.13명, 무급가족종사자2.30명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임금근로자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처럼 경직적인 근로시간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8] 여성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국제비교(2010년)



자료: OECD.Stat

②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제고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시간적 제약 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고급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적자본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시간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가장 시급한 점이 바로 단시간근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이다. 우선 정규직에 비례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려를 강제하는 '균형배려의무원칙'은 오히려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기회

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금지시키는 '균등처우원칙'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직무분석에 근거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를 여러 산업에서 개발하고 단시간근로에 대한 공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풀타임 정규직을 임신·육아기 동안 단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고용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고용된 단시간 근로자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여 모집·채용비용 및 교육·훈련비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우선채용권부여 단시간근로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채용권이 부여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을 제고시켜 보다 많은 노동력 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전환고용모델뿐만 아니라 원격·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집중시간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보건의료, 보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 단시간근로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한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포함하는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경우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공급자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도 단시간 근로를 활용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에도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 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세대 내에서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세대전체의 수입이 감소하는 세제상의 수입역전현상을 해결하여 단시간근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제도(EITC)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성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추가로 근로할 경우 한계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홑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구간을 상향조정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③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 여건 및 제도 확립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파견근로에

대한 사유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을 자녀교육이라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우선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종일돌봄이교실로서의 기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의 경우 지원대상을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은 배식당번, 교통지도, 환경미화 등 학부모의 참여가 관례화되어 있는 각종 행사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대체인력이나 자원봉사단체의 투입을 유도해서 여성근로자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필요도 있다.

한편, 보육시설의 확충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혹은 대기업 간 컨소시움 직장보육시설을 거주지 위주로 확충하여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해야 한다. 또한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못한 이유로 '육아'보다 '자녀교육때문에'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탁아 수준을 넘어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내 보육시설에 교육기능을 강화한 형태인 사내유치원 보급을 유도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교실의 종류를 늘리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중산층 가구에 대해서도 여성이 근로할 경우 보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범부처에서 추진되는 여성인력양성과 활용 정책을 종합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통하여 상당수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으로, 비경제활동여성을 경제활동인구화 하는데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하는데 있어 취약계층으로 간주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각종 직업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원스탑 서비스이다. 이러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에서 여성 비취업자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력을 단절한 여성들은 여전히 육아 및 가사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목표는 여성들의 특성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3] 여성취업지원정책의 문제점

대상	분야	세부과제	문제점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경력단절 여성 새로일하기 사업	새로일하기 센터 수와 예산 부족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책공급자 중심의 정책전달: 여성특화사업에 대한 통폐합
	직업훈련	직업훈련개발계좌제	물량배정방식 제한으로 인한 훈련분야 편중
			취업성과 낮은 분야의 계좌발급 제한

자료: 김종숙 외(2010).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은 이미 상당수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약하고 입법부의 협조가 부족한 에 기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균등처우원칙'의 확대를 통한 단시간 근로의 보급 확대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는 초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입법부 역시 정치적 견해로 인해 여당과 야당 간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제도(EITC)의 개선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들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통한 노동투입 증대는 정책개발보다는 정부의 추진의지 확립과 입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4. 고용 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근로자 보호정책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투입을 늘리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주체는 사용주이다. 본 절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용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보호를 달성하고 노동투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규제 일변도의 근로자보호정책들이 대거 논의되면서 고용유인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유인이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취업기회가 감소하여 근로자보호도 달성하지 못한 채 잠재성장률마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① 비정규직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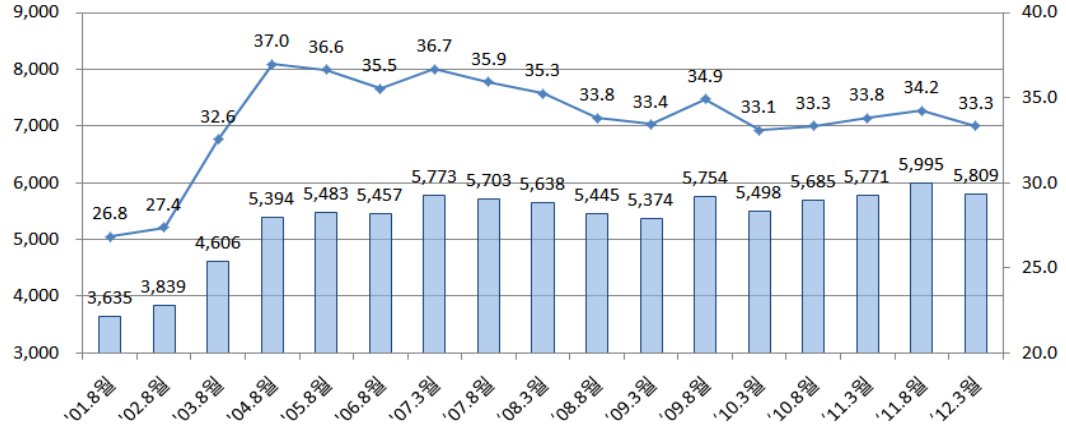
2011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599만5천 명으로 조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

했으나 이는 인구증가,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임금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의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2년 3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580만9천 명이며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04년 37.0%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의 비중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완전 적용 시점인 2009년 8월 48.9%에서 2010년 3월 43.5%로 크게 하락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5년 8월 19.0%에서 2012년 3월 29.3%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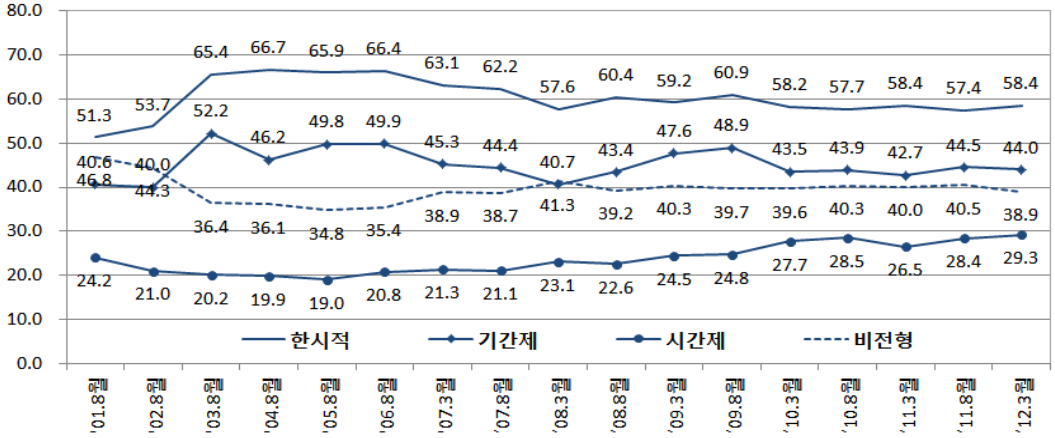
[그림 3-9] 비정규직 규모, 비중 및 구성

(단위: 천 명, %)

〈 규모 및 비중 〉



〈 구성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 중복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의 합이 100.0을 넘음.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인 관심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나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8월 60.9%에서 2009년 8월 54.6%로 크게 하락하였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3월에는 58.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2년 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66.3% 수준이며 이 중 비기간제근로자는 69.5%에 달한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의 25.3%에 그쳐 근로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런 근로시간의 장단을 고려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비교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당히 상승한다. 2012년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8.4%이나 주당 근로시간만 고려하여도 70.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성별, 혼인상태, 나이, 재직기간, 학력, 직종,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적 특성과 기업규모, 유노조 기업 여부, 산업 등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약 92.2~96.6% 수준까지 상승한다(이인재(2009) 참조). 또한 동일 사업체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별·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직종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는 12.6%, 시간당 정액급여의 격차는 7.4%에 불과하다(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2012.3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월 근로시간이 짧고 학력이 낮으며 임금이 낮은 특정산업, 직종 및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근로시간, 개인적 특성, 기업체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크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 임금격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화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인 월평균 임금이 낮다는 점이다.

〈표 3-4〉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상대임금

(단위: 만원, %)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3	2010.8	2011.3	2011.8	2012.3
임금근로자	124.2	132.5	146.6	154.2	159.3	165.6	174.5	184.6	185.2	194.6	194.9	202.6	203.2	211.3
정 규 직	137.7 (100.0)	145.6 (100.0)	167.8 (100.0)	177.1 (100.0)	184.6 (100.0)	190.8 (100.0)	200.8 (100.0)	212.7 (100.0)	220.1 (100.0)	228.9 (100.0)	229.4 (100.0)	236.8 (100.0)	229.4 (100.0)	245.4 (100.0)
비정규직	87.4 (63.5)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7)	119.8 (62.8)	127.6 (63.5)	129.6 (60.9)	120.2 (54.6)	125.3 (54.7)	125.8 (54.8)	135.6 (57.3)	125.8 (56.4)	143.2 (58.4)
-한시적	91.3 (66.3)	103.9 (71.3)	109.2 (65.1)	123.2 (69.5)	124.0 (67.2)	131.3 (68.8)	144.0 (71.7)	145.8 (68.5)	130.1 (59.1)	141.7 (61.9)	140.0 (61.0)	155.1 (65.5)	140.0 (62.9)	162.8 (66.3)
*기간제	93.9 (68.2)	105.6 (72.5)	108.2 (64.5)	118.7 (67.0)	125.8 (68.2)	129.3 (67.7)	141.9 (70.6)	148.9 (70.0)	131.1 (59.6)	138.4 (60.5)	136.0 (59.3)	148.7 (62.8)	136.0 (61.3)	160.2 (65.3)
*반복갱신	- -	116.4 (79.9)	147.8 (88.1)	170.4 (96.2)	169.2 (91.7)	177.4 (93.0)	194.9 (97.0)	185.4 (87.1)	193.1 (87.7)	-	-	-	-	-
*계속불가	81.2 (59.0)	79.0 (54.3)	89.6 (53.4)	92.0 (51.9)	92.4 (50.1)	95.1 (49.8)	94.5 (47.0)	105.2 (49.5)	103.9 (47.2)	-	-	-	-	-
-시간제	45.5 (33.0)	49.9 (34.3)	49.9 (29.8)	53.9 (30.4)	52.2 (28.3)	55.1 (28.9)	56.1 (27.9)	57.4 (27.0)	53.5 (24.3)	55.4 (24.2)	56.5 (24.6)	58.8 (24.8)	56.5 (25.3)	62.1 (25.3)
-비전형	89.1 (64.7)	97.5 (67.0)	97.6 (58.2)	106.7 (60.3)	108.1 (58.5)	104.6 (54.8)	111.2 (55.4)	119.7 (56.3)	119.1 (54.1)	121.9 (53.3)	124.9 (54.4)	126.6 (53.5)	124.9 (55.3)	134.9 (55.0)
*파견	101.9 (74.0)	114.8 (78.9)	110.4 (65.8)	127.2 (71.8)	131.6 (71.3)	126.1 (66.1)	134.1 (66.8)	147.3 (69.3)	141.4 (64.3)	-	-	-	-	
*용역	78.7 (57.2)	86.2 (59.2)	87.1 (51.9)	92.2 (52.1)	94.8 (51.4)	93.3 (48.9)	102.3 (51.0)	108.3 (50.9)	111.1 (50.5)	-	-	-	-	
*특수	107.9 (78.4)	119.8 (82.3)	127.2 (75.8)	139.0 (78.5)	142.2 (77.1)	132.2 (69.3)	142.2 (70.8)	155.3 (73.0)	152.9 (69.5)	-	-	-	-	
*일일	66.3 (48.1)	78.9 (54.2)	80.5 (48.0)	83.7 (47.2)	86.0 (46.6)	87.3 (45.7)	89.2 (44.4)	98.3 (46.2)	95.3 (43.3)	-	-	-	-	
*가내	51.0 (37.1)	53.0 (36.4)	41.2 (24.6)	56.4 (31.8)	56.7 (30.7)	59.6 (31.3)	56.8 (28.3)	48.6 (22.9)	60.0 (27.3)	-	-	-	-	

주: ( )안의 값은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임.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비록 실질적인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과 같은 근로여건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3-5〉에 나타난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이나 그 외 비정규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에서도 유사한 격차가 관찰되지만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역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근로복지의 수혜율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격차는 영세사업장일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에 의하면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율 격차는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당한 수준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격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영세사업장일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2010년)

(단위: %)

고용형태[5]			사회보험가입률				근로복지수혜율	
			고용보험[1]	건강보험[2]	국민연금[3]	산재보험[4]	상여금	퇴직금
전체근로자			86.0	87.5	87.5	96.8	62.3	76.1
	정규직 근로자		95.7	96.8	96.6	97.6	75.8	88.7
		비정규직근로자	52.1	49.5	46.9	93.1	20.9	37.5
		재택/가내근로자	15.9	19.0	20.5	73.0	12.6	17.7
		파견/용역근로자	88.0	87.7	87.9	96.3	32.0	82.1
		일일근로자	38.6	12.3	10.5	93.9	4.2	6.8
		단시간근로자	27.4	25.5	24.2	82.7	9.5	23.8
		기간제근로자	82.2	86.3	83.2	97.7	47.2	72.8
		한시적근로자	25.7	16.9	16.1	84.7	12.6	12.5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2011a)
주 1)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2)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이하, 8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3) 교육서비스업, 18세미만, 60세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이하, 8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4)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미만, 상용근로자 5인미만 농림어업 제외
5) 특수형태 근로자는 제외

〈표 3-6〉 고용형태 · 사업장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2010년)

(단위: %)

규모	고용형태	사회보험가입률				근로복지수혜율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전체	정규직	95.7	96.8	96.6	97.6	75.8	88.7
	비정규직	52.1	49.5	46.9	93.1	20.9	37.5
5인 미만	정규직	86.0	86.0	86.3	89.4	56.4	60.7
	비정규직	26.2	20.2	17.9	80.7	8.7	14.1
5-29인	정규직	97.7	98.7	98.4	99.1	69.5	92.6
	비정규직	68.9	58.4	55.9	97.2	25.4	44.1
30-299인	정규직	99.3	99.9	99.7	100.0	83.5	97.5
	비정규직	82.4	87.4	84.6	99.3	35.9	71.4
300인 미만	정규직	95.5	96.1	96.1	97.1	71.6	86.8
	비정규직	48.5	44.9	41.7	92.4	18.6	33.4
300인 이상	정규직	96.3	100.0	99.1	100.0	96.7	97.8
	비정규직	95.7	97.8	97.1	99.5	44.9	80.3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2011a)
주: 〈표 3-5〉의 각주 참조

② 기존 정책의 문제점: 임금격차 해소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나친 강조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계층이므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말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시간제 근로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근로시간, 학력, 성별, 연령, 재직기간 등 인적 특성과 기업규모, 유노조 기업 여부, 산업 등 기업특성을 고려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축소된다. 즉, 임금에 있어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임금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간의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이 차별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통해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모두 제공하려 했기 때문에 역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고용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확률을 조사한 고용노동부(2011b)를 살펴보면 2010년 4월에는 계약종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14.7%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다가 2011년 1월에는 32.6%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비정규직보호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계속고용의 형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비중이 55.4%에서 19.4%로 크게 감소한 것을 간과한 판단이다. 실제 정규직 전환(14.7%)이나 계속고용(55.4%)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70.1%에서 52.0%(정규직 전환 32.6%, 계속고용 19.4%)로 크게 하락하였다. 즉,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유지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표 3-7〉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시 조치 현황

(단위: 명, %)

월	계약만료자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
2010. 4	14,254 (100.0)	3,353 (23.5)	2,101 (14.7)	7,892 (55.4)	909 (6.4)
5	9,935 (100.0)	3,453 (34.8)	2,311 (23.3)	4,168 (42.0)	3 (0.0)
6	10,960 (100.0)	3,638 (33.2)	2,771 (25.3)	4,261 (38.9)	290 (2.6)
7	8,119 (100.0)	3,164 (39.0)	2,330 (28.7)	2,621 (32.3)	4 (0.1)
8	6,809 (100.0)	3,405 (50.0)	1,799 (26.4)	1,563 (23.0)	42 (0.6)
9	7,233 (100.0)	2,928 (40.5)	1,390 (19.2)	2,893 (40.0)	22 (0.3)
10	5,173 (100.0)	2,326 (45.0)	1,304 (25.2)	1,475 (28.5)	68 (1.3)
11	6,141 (100.0)	2,923 (47.6)	1,439 (23.4)	1,712 (27.9)	67 (1.1)
12	14,555 (100.0)	7,113 (48.9)	1,951 (13.4)	5,465 (37.5)	27 (0.2)
2011. 1	7,641 (100.0)	3,654 (47.8)	2,494 (32.6)	1,485 (19.4)	9 (0.1)

자료 : 고용노동부(2011), 기간제 계약 종료 비율 관련 보도참고자료(2011. 3. 24)

이와 유사한 부작용은 〈표 3-8〉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표 3-8〉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4년 70개월에서 2011년 79개월로 증가했으며,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 확대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71개월에서 79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24개월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정규직과 달리 26개월에서 21개월로 크게 감소했다. 비정규직보호법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용기간제한이 없는 비전형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근속기간이 일정한 반면 사용기간제한의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만 29개월에서 23개월로 크게 줄어든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표 3-8〉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단위: 개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53	54	54	55	57	59	59	61
*정규직	70	72	70	71	74	79	77	79
*비정규직	24	24	25	26	24	21	24	27
-한시적	26	26	28	32	29	23	27	31
기간제	23	25	25	29	28	23	26	29
-시간제	12	11	12	11	12	12	13	16
-비전형	22	22	20	20	21	21	23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부가조사』 2004.8~2011.8

이처럼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제공하려는 기존의 정책은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금 이외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교육·훈련 접근성 측면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는 비정규직 내 격차가 큰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③ 기존 정책의 문제점: 부작용을 수반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지난 정부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입법, 즉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 비정규직보호법이라 불리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직접고용 간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강제하려는 정치적 시도 등 기본적으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나 부정적인 효과가 법 시행 초기에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근로형태의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한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비정규직 내 임금분포가 양극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변양규 외(2012)). 이처럼 기존의 근로자보호 정책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경향이 강했으며, 그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위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우리나라의 근로자 보호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고용창출 유인 및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 및 사안에 따라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규제만 양산하였다. 그 결과 일부 근로자만을 위한 보호정책은 특정 근로자 계층의 보호만 강조하여 다른 계층의 고용가능성을 하락시켰고 심지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근로자만을 위한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규제보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및 실업자 등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보호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적 유인에 의해 작동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 중심의 대증요법(對症療法)에서 벗어나 경제적 유인(誘因) 제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회성 정책, 지속 불가능한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정책 제안: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부작용만 수반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적절한 보호 속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이유는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이 짧고 일부 특정 산업 및 직종에 제한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강제로 인상시키는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축소되지만, 이것이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만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간의 정책이 부작용을 수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첫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은 제공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제한만 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통칭하여 획일적 규제를 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고용보호 제공과 함께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폐지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근로조건이 보다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단, 단순히 사용기간 제한만 완화할 경우 기간제 양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고용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규정을 완화 내지 폐지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제외 집단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수요 및 공급 니즈(needs)에 부응하여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강제할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강사들에게 사용기간 제한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처럼 제한 적용제외 집단을 확대해야 한다. 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령(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비정규직법 시행령 3조)으로도 가능하며 택배운전사,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운전사, 학원 강사 등의 예외집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들의 고용안정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 계약 갱신은 사용기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부가조사』에 의하면 599만5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47.6%에 달하는 285만 명이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조건에 만족(44.4%)하거나 일자리의 안정성(23.2%)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3명 중 2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반복갱신근로자의 경우 무려 79.5%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75.3%)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혹은 근로여건 등에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들까지도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훼손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자발적 선택에 대해 획일적 규제를 적용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합의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말고 반복적 고용계약 갱신을 보장하여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과 훈

련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장기고용계약이 가능해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고용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훈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선 보다 많은 교육·훈련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기간 제한 완화 등으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고용계약이 가능해지면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세제지원 등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직접 교육·훈련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⑤ 정책 제안: 정규직 고용 유인 극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보다는 정규직 고용 유인을 극대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즉,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제공해서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의 과보호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차별시정을 강조할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기회 축소 및 고용안정성 훼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양규(2009)에 의하면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가 축소될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 모두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고용창출력을 훼손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중층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관련 조항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양자 간에 존재하는 고용보호(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의 격차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의 고용보호완화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근로형태를 개발하여 능력이 검증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정규직에 가깝게 전환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능력이 검증된 시간강사와 고용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하여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고용보호를 증대시키는 것이 좋은 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준정규직은 기

존 정규직과 새로운 경쟁관계를 유발하여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대를 축소시킬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단에 정리된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과 네덜란드의 Phase System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동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위축되어 고용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경직적인 접근보다는 해고가 빈번한 기업에 고용보험 요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정규직 전환을 실행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경제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빈번하게 해고와 고용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분을 증대시키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상대적으로 작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

- 1980년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유제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제한이 강화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과도한 고용보호가 제공되자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약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짐.

- 그 이후 기간제 사용규제를 철폐하였으며 그로 인해 1990년대 중반 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이 30%에 이름.
  - 정규직 해고비용: 근속기간 1년당 45일분의 임금, 최대 42개월분
  - 기간제 해고비용: 초기 3년 계약 중간에 해고 시 12일분의 임금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음

- 1997년 사회협약을 통해 기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형태의 준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의 준정규직 전환 비용을 경감시킴.
  - 준정규직 해고비용: 근속기간 1년당 33일분의 임금, 최대 24개월분
  - 사회보험비용 지원

- 2006년 '비정규직 감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도입
  - (준)정규직 신규채용 시 실업보험 사용자 기여분 감축

- (준)정규직 해고수당 경감 유지: 근속기간 1년당 33일분의 임금
- (준)정규직 전환에 대해 연간 800유로 임금보조금을 3년간 지급
- (준)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해 500~3200유로의 임금보조금을 4년간 지급

- 2006년 이후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영구계약 급증
- 2006년 12월 맺어진 계약 중 17%가 영구계약(전년동월대비 9%p 증가)
- 2006년 하반기 맺어진 전체 영구계약직은 122만 개(전년동기대비 47만개 증가)

〈네덜란드의 단계시스템(phase system)〉

- 1998년 이전 네덜란드의 파견법은 상당히 제한적
- 파견업은 허가업종이며 일부 산업과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파견은 금지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유의 제한은 없었으나 최대 사용기간은 6개월
-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보다는 계약종료 및 신규파견근로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이 관행

- 1999년 '유연안정성법(flexicurity act) 도입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
- 장기계약 파견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 위축이 우려됨
- 단계시스템(phase system)의 도입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증가할수록 법적 지위가 조금씩 향상되도록 함.
- (i)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계약 초기에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ii)능력이 검증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하고 근속기간 연장에 따라 안정성이 향상되어 정규직에 근접함.

- 단계시스템의 주요 내용
- 제1단계(고용관계 시작~26주): 고용보호가 전혀 없으며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 모두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결근 시 일당을 주지 않음.
- 제2단계는(27주~12개월): 기본적으로는 1단계와 같지만 이 기간에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를 만나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음. 결근 시 일당을 주지 않음.
- 제3단계(12개월~18개월 또는 24개월): 파견근로자는 반드시 파견사업주와 3개월 단위의 정식 고용계약을 맺어 채용되어야 함. 3단계는 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둘 이상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지속됨.
- 제4단계(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한 사용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그리고 둘 이상의 사용사업주에게 24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4단계에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계약)을 맺어야 함.

- 우리나라에의 적용
  - 우선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경우 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신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그 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기간에 비례하는 고용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개발해서 일시적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을 막아야 함.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형태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과도히 소요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고용계약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제조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고용계약 형태를 개발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탄력성을 확보하는 대신 노동비용 증대를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을 양보하는 대신 임금인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너무 빈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일시해고(layoff)를 통해 잠정적으로 해고하고 재고용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주는 대신 사용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투입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각종 노동시장정책들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이미 개발되거나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아직 저조한 상태이고 규제 일변도의 근로자보호정책으로 인해 고용유인마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 입법부의 협조 결여,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노력 결여로 정리될 수 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 의해 고용창출이 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이미 개

발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 유무형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여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입법부의 책임회피, 그리고 해당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고용창출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된 정책의 추진 방법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일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천 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이해상충,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입법기관의 책임회피 등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적극적 중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부 및 입법부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타협·양보가 결여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당사자의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그간 상당수의 정책들이 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특정 당사자의 희생이나 강제적 양보를 바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해당사 모두의 참여 속에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제 고용창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별로 구체적인 정책추진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추진의지 선언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적 관점서 접근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정 기간 내에 실천에 옮길 것을 행정부 및 입법부가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 타협, 양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서 사회적 대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특정 그룹의 희생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못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의 경우 시간제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희생하면서 이들보다 양호한 근로여건에 있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들은 단순한 법령 개정만으로 추진될 경우 부작용과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전제되어야만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지속가능성도 보장된다.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과 같은 보다 넓은 개념에 대해서도 대화와 양보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울 경우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을 의미한다. 즉, 특정 일자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노동시장의 고용보호가 높을 경우 실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동시에 실업을 빠져나올 가능성 역시 하락한다. 따라서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높을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11].

이처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으로 해석할 경우 안정성은 고용보호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또한 안정성과 유연성은 상호 병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근로자 계층의 고용보호를 강조할 경우, 비록 일부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용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정성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동시장 전체의 역동성이 결여되고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고용위축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 위축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여건에 있는 일부 근로자들의 보호가 절실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고용보호 강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직업의 안정성으로 해석되는 잘못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처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에서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란 개념으로 대체하고 노동사용에 대한 각종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

11) 예를 들어, Nunziata and Staffolani(2007)는 유럽의 15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Autor(2003)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의 고용(employment-at-will)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증가한 이래로 파견근로(temporary help services)를 통한 고용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상승할 경우 비정규직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하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기본으로 구성된 북유럽 유형의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임금조정과 고용유지를 근간으로 확립된 독일 유형의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해고가 필요할 경우 북유럽 유형을 따라 많은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보험과 재취업훈련이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유럽 유형 대신 기존 취업자들은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현재 취업자들의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독일 유형의 일자리 지키기가 우리 경제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점은 북유럽 유형과 독일 유형 모두 이해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양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경제에 어떤 유형의 정책이 더욱 유효할지, 혹은 우리 경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대증요법(對症療法)적 접근을 취할 경우 정책 목표의 실질적인 달성도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다. 이제는 어떤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할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Ⅳ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자본스톡 확대 방안 분석

살펴본 바와 같이 물적자본인 자본스톡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는 성장잠재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구조적으로 노동투입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부진 장기화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90년대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던 설비투자가 지난 해에는 3.7%증가에 그쳤으며 올 3분기 설비투자는 작년동기대비 7.1%나 급감했다. 투자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위축, 대외경쟁 격화 등에 따른 외부여건 악화 탓도 있지만 각종 기업 규제, 반기업 정서 확산, 저

축률 둔화, 그리고 정책리스크 등 내부적 요인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기업 투자 활력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주요 경쟁국들은 조세 및 현금 인센티브, 의료ㆍ교육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외국과 비슷한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국내 산업 기반의 급속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제 건수가 오히려 증가[12]하는 등 규제개선의 실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적 차단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도 중요하지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지속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 이유로 인해 훼손되는 일을 막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입법부의 협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 제거

과거 규제신설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정부 발의안에 비해 의원 입법안에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하는 입법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발의안과 달리 규제영향평가가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제평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의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일단 규제가 생성되면 피규제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발의 주체에 따라 입법절차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

12) 등록규제의 총 건수는 2009년 11,050 건에서 현재 13,396 건으로 2천 건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요규제만을 보더라도 같은 기간 6,740 건에서 7,066 건으로 300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칭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안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최대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규제 일몰제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심사기능 강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몇몇 정책들은 다른 정부정책과 상충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각각의 규제의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입법이 진행되는 경우 그 규제의 대상이 다른 정부정책의 대상과 중첩되지는 않는지, 중첩되는 경우 정책의 가치와 목적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지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는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역량·전문성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련 스스로도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행정부 이끄는 사람으로서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통한 이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

③ 진중한 연구와 토론 등 '소통'의 절차 강화

정치권은 출총제를 부활하려는 이유가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이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도만 심화되었다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실은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 이후 신규투자가 늘지 않고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출총제제한 집단과 비제한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변화는 출총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분석이 다수이다. 이처럼 각종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 논의만 진행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규제는 재산권과 경쟁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훼손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최근 논의 중인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가 단지 경제민주화의 명분아래 효율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된다.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투자활성화 목적의 다른 정책과 정합성에 모순적이지 않은지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건의는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규제자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피규제자의 반발을 초래해 규제의 실효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경제전체에 손실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정계, 학계는 물론이고 재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연구와 토론을 거치는 소통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2. 투자유인을 강화하는 조세정책

기업투자행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곽태원 외(2006)는 1985~2004년간 법인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포함한 법인세 정책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으며 김학수(2010)는 법인세율에 대한 기업투자의 단기 탄력성이 1.1로서 법인세율이 1%p 줄면 기업투자가 1.1%p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Lee and Gordon(2005)은 1970～1997년간 70개 국가에 대해 법인세율과 일인당 GDP 성장률 간의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10%p를 낮추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1～2%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체계 도입

높은 법인세율의 유지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고용창출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해외이탈을 유발하여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공화당은 25%까지 내리자고 주장한다.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이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6.3%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0%), 영국(24%) 등 선진국의 법인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의 법인세율의 현실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낮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항목이라는 점이다. 조세의 경제적 비용의 크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나타나 법인세가 가장 높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나라

(단위: %)

국가	세율변화	개정일
대만	25.0 → 17.0	'10.5
홍콩	17.5 → 16.5	'08.2
싱가포르	20.0 → 17.0	'10
영국	28.0 → 24.0	'12.4
뉴질랜드	30.0 → 28.0	'10.10
캐나다	22.1 → 16.5	'11.1

한편 법인세의 수준뿐만 아니라 누진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는 2011년 까지는 두 단계의 누진구조에서 2012년부터 세 단계의 누진체계로 바뀐 상태다. 누진구조는 형평성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귀착 관련 많은 연구들은 법인세 부담은 법인의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여러 부문의 경제주체들에게 전가(tax shifting)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법인세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법인세가 형평성을 달성하는 세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OECD국가의 법인세율 과세구간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개)

과세구간	국가
1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2	한국, 룩셈부르크, 헝가리,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3이상	영국, 벨기에, 미국

주: 한국은 2012년 3단계로 바뀜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개혁할 경우에, 하위 한계세율 대상에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반발이 심할 것이다. 오래 동안 익숙해 온 누진구조 제도에서 갑자기 단일세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정치적 반발도 높을 것이다. 제도변화에 따라 급작스런 세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시적으로 낮은 단계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낮은 단계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현재 세부담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낮은 단계의 세금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식은 낮은 단계의 세율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강구하는 분위기이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개정안이면서 동시에 단일세율을 도입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제의 단일세율 개혁은 세수측면이 아니고, 법인세를 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일시적이나마 세부담 증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우선 법인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세제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및 R&D 투자세액 공제 유지

임시투자세액(이하 임투세) 공제 제도 폐지는 투자의 세후 수익률 저하시켜 기업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13]가 높은 만큼 제도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제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의 주된 사유이지만 임투세의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이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투세 폐지로 대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파급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임투세를 대신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인력난으로 추가채용이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임투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세제로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임투세 공제는 부활되어야 한다.

13) 구미상공회의소가 4월 지역 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65%)이 비중있게 나왔으며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55%가 나왔다.

또한 R&D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14]은 당장의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준경(2012)은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늘지만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일한 금액 투자 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혔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이유다.

3. 서비스업 R&D투자 활성화

정부의 역할은 파급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고 보인다. 서비스업 분야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비스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1998년 이후 추세적으로 저하 또는 정체하는 모습이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도 2005년 이후에는 제조업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부문 연구개발비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2010년 기준)로 미국의 29.5%(2007년), 영국의 24.7%(2008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R&D관련 법/제도가 사업화, 인증, 공공구매, 품질보장, 기술금융 등 모두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OECD(2009)는 규제 과도, 경쟁체제의 미흡, R&D투자 부족 등과 함께 제조업대비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정부지원시스템을 우리나라 서비스업 저

14) 현재 국회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R&D 투자 세액 공제 폐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 40%에서 30%로 축소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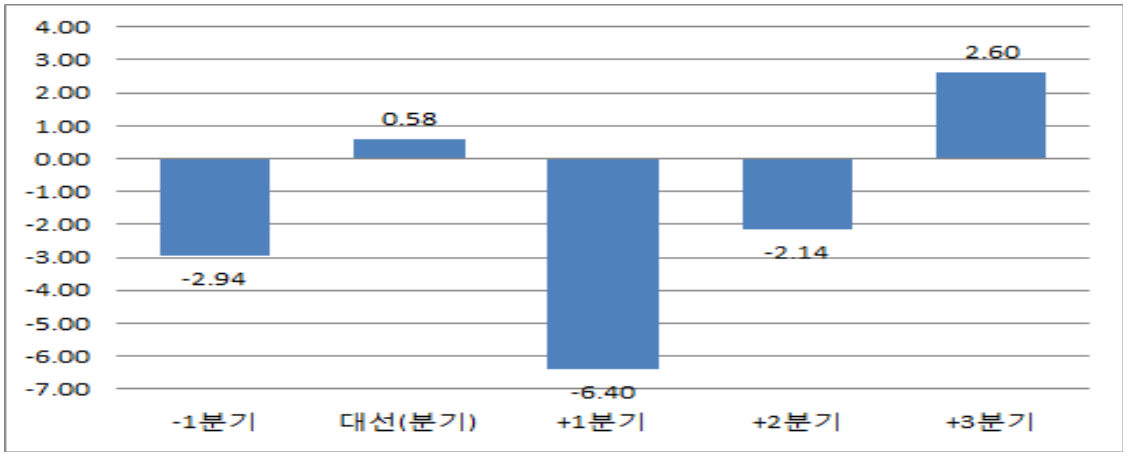
생산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R&D지원 방식에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으로 보완하고 R&D 관련 세제혜택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방향은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에 들어서야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다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4. 정책리스크 축소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

실제로 대선 직전과 직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선 리스크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을 통해 지난 13대 때부터 17대 대통령선거 직전 및 직후 설비투자 증감률(전 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대선 1분기 전에는 평균 -2.94%, 대선 직후 1분기에는 -6.4%의 감소폭을 보였다. 대선을 전후로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공격적 경영을 기피한 결과라고 보인다.

〈표 4-3〉 대선 전후 설비투자 증가율

(단위: %)



주: 13~17대 대선 전후 설비투자 증가율 평균
자료:매일경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리스크도 문제다. 지하철 9호선과 서울시의 최소수입보장 계약조건 재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소위 '말바꾸기'식 정책리스크가 반복된다면 민자사업에

있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정책 방향이 바뀜으로서 발생하는 행정 및 재정의 낭비도 막대할 것이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가변적인 정책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라는 것의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명확히 제시되고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① 중요 정책과제 분야별로 정책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제시

정책은 국민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어떤 경제문제든 시장원칙의 바탕 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부나 공무원의 재량과 자의성이 없는 정책의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 정책과제 분야별로 정책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②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경에도 있는 만큼 정책추진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책 일관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 확대 및 자본스톡 증대를 위해 개발된 정책들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규제개혁 사례나 서비스업 R&D 투자 활성화 과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심지어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해 정책의지의 방향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

의 정책의지를 명확히 할 부분도 있지만 입법부의 협조가 절실한 경우도 다수이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소통부재로 인해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것처럼 각종 정책의 대상이 되는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부족해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해 보면, 우선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은 이미 다수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나 정책적 의지의 불명확, 미약한 실천의지,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전혀 실천되지 못하거나 실천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기 정책방향과는 전혀 상이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투자 확대 및 자본스톡 증대를 위한 정책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이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의사소통 및 이견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

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방안 분석

1. 문제 제기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발전을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경제발전 초창기였던 60년대 70년대에는 기술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나 개량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중화학 공업 육성에 힘썼다. 1980년대에는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시작했고, 선진국 추격형의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기술도약을 위해 국가 R&D 체계를 강화하고 IT 등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다양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의 기술혁신 체계에서, 창조형의 기술혁신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즉, 향후 유망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초 원천기술 중심의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단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 과거의 자본과 노동투입 확대 중심의 경제 발전방식을 벗어나 혁신주도형 발전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과거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중심의 기술혁신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 대학 등 민간 중심의 혁신방식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접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은 혁신주도 성장으로 이행해야할 새로운 도전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먼저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로 인하여 물가가 치솟고 경기는 침체되는 등의 새로운 위험이 잠재된 가운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혁신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R&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기반을 흔들어 높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소위 녹색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흥국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국가 내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사회 및 구조 개편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국제협력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에 이르기 까지 기술혁신의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주요 국가 및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의 경제개방화로 인한 위험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R&D 시장에서의 구조개편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이러한 혁신주도 성장으로의 도전에 직면가운데, 한국의 성장패턴이 과연 혁신주도형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패턴을 보기 위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방법이 종종 사용된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들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과 비교할 때,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 외(2010)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 생산상 기여율은 일본이나 경쟁국들로 구성된 4NIEs 뿐 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7ADEs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기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혁신주도의 경제발전에 대한 노력이 경제성장율을 높이는데 까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술혁신 노력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그동안 한국정부에서 추진해온 기술혁신 관련 정책현황과 그 진행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과 OECD 국가들의 R&D 지출 총액 및 비중, 특허 출현 건수 등의 주요 지표를 통하여 한국의 혁신에 있어서 투입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한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술혁신 정책현황

한국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서 '과학기술전략(577)'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의 투자확대,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국가 중점 과학기술 개발(7대 R&D), 7대 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화를 강화시킴으로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7대 지표에서 과학기술강국에 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동 계획안은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개발투자 또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 및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중점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7대 연구개발 분야와 90개의 중점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주력기간 산업(cash cow) 기술, 신산업(green ocean) 창출,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 based S&T) 분야, 현안 관련 특정 위험관리 분야(risk science), 글로벌 이슈(mega trend science)에 적극 대응, 초·기반·융합 기술(national platform technology) 분야의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동 계획은 7대 시스템 선진화와 효율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강화 및 7대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7대 시스템을 선진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 중소기업 및 벤처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기초 원천 연구 투자의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R&D 및 시스템 중점분야를 발전시킴으로 논문 수 증가, 논문 피인용도 증가, 국제특허출원 및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IMD 과학기술 경쟁력 등에서의 발전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고자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동 계획에 대하여 지난 2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2012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577전략의 수행성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로,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정부는 08년부터 11년까지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총 52조원의 투자도 연 13.1%가 증가하였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 되었는데, 세제지원과 펀드조성 등에 힘입어서 민간 R&D는 07년 23. 1조에서 10년 31.5조원으로 연 11% 이상의 증가율로 크게 성장하였다(〈표 5-1〉). R&D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와 신 성장 및 원천 R&D 세액공제의 신설을 통해 투자의 확대를 이루었다.

〈표 5-1〉 민간 R&D 투자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재원	0.1	0.1	0.1	0.1	0.1
민간재원(A)	20.6	23.1	25.1	27.0	31.5
정부공공재원	6.6	8.2	9.2	10.9	12.3
합계(B)	27.3	31.3	34.5	37.9	43.9
민간재원비중(A/B, %)	75	73	73	71	71

자료: KISTEP (2011), p.7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대비 민간 비중의 비중은 2008년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2012년도 GDP 대비 국가 총 R&D 비율 5% 목표를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의 R&D 투자 부족에 기인한다.

둘째로,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정부는 이를 이루기 위하여 2010년에 부처별 R&D사업의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정부는 범 부처별 R&D 사업을 기술 분야 및 목적별로 통합함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연구관리 전문기관 또한 통합 개편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맥락에서 2011년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2012년 정부 R&D 예산을 재분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간에 중복이 발생하였고, 1년 단위 예산 조정과 배분에 따른 중장기 투자전략의 방향 설정이 미흡했으며, 개별부처 중심으로 효율화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처 R&D 정책 간에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로, 577전략을 통해 국가 중점 과학기술 즉 7대 R&D 분야에 총 24.1조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한국최초 우주인을 배출하고 천리안 위성을 개발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3대 분야에서 17개 기술에 총 8.2조원을 투자하였으며, 27대 중점 기술에 총 9조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에 있어서 SCI급 논문에서 수적인 면과 논문 피인용 회수 등에 있어서 양적인 증가는 이뤄졌으나 질적 수준의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제특허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기술이전 문제나 기술무역수지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동 전략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각종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영재교육을 확대했다. 또한, 기초연구와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초투자 비중의 35% 목표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개인 기초연구에 총 3.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비를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벤처 기술의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고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3년간 총 4.3조원 규모의 R&D투자비용을 증가시켰고, 고급 연구 인력을 증원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및 「구축지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및 지식재산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보호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책이행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발생했는데 우수 두뇌들의 해외 유출,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의 수준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확산되어지거나 활용 수준이 낮은 점,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출 비중 하락, 인프라간의 연계 문제와 공동 활용의 미흡한 점들의 개선 문제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a).

3. 기술혁신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① 기술혁신 선행연구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표적 연구인 Schumpeter (1942)에 따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생산능력, 규모의 경제 효과, 대규모 R&D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경쟁시장에 비해 독점적 시장에서 독점이윤이 발생하므로 시장구조적으로도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이와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 Arrow (1962)에서는 독점기업이 이미 상당 수준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으며, 시장구조도 경쟁적일 때가 독점적인 경우보다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실증적 연구들 가운데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규모 또는 시장구조의 영향에 관한 논의로서 잘 알려진 Cohen (1995)와 Gilbert(2006)은 기업규모와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규모와 R&D 지출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기업규모와 R&D의 생산성간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인 Aghion et al (2005)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유지(기존기업) 또는 획득(신규기업)하기 위한 시장의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간에는 역U자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Levin et al (1985)에 따르면 미국 FTC data를 활용하여 R&D 집약도와 기술혁신 빈도가 극대화되는 수준은 CR4가 각각 52%와 54%일 경우로 나타났다. 강성진·서환주(2005)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이 극대화되는 수준은 CR3가 35~58%인 경우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R&D 지출이나 과학자 수와 같은 대리 변수 들이 직접적으로 기술혁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령, 강성진·서환주(2005)에 의하면.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가 1% 증가할 경우, 특허출원스톡은 0.216~0.3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에서 경기확장기에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기동행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Guellec and Ioannidis(1997)과 Geroski and Walters(1995)가 각각 OECD와 영국을 대상으로 경기동행성을 설명한 바 있다. 강성진 · 서환주(2005)에서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특허출원활동의 경기동행성을 확인했다. 또 다른 논의로서 기술혁신의 국가 간의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Yang(2003)에서 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특허 등록이 내국인의 발명특허는 감소시키지만 실용신안의 등록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성진 · 서환주(2005)에 따르면, 동일 산업의 다른 국내기업의 특허출원과 미국 및 EU 기업의 특허출원이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공공기관, 대학, 일본기업의 특허출원의 경우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술혁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강화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표 5-2〉와 같다. 대표적 연구인 Kanwar and Evenson(2003)에서는 특허권 강화가 연구개발 지출로 측정한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Qian (2007)에 따르면 특허법의 시행만으로는 국내 기술혁신을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개발 수준, 교육, 경제 자유가 높은 국가에서의 특허법은 기술혁신을 증가시켰다. 이는 기술혁신과 특허법 사이에 역U형 관계가 있다는 Gallini(1992), Horwitz and Lai(1996)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즉, 적절한 특허법이 존재하며, 지나친 특허법의 강조는 기술혁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Kang and Seo(2005)에서도 특허권 강화만으로는 특허출원을 증대시키지 못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발전 수준, 인적자본 수준 등의 보완적 경제 환경에서만 가능함을 밝혔다. 서환주 · 정동진 · 송종국(2004)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서 특허출원 건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7차 개혁 시기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만 구조변환이 나타났지만 11차 개혁에서는 전체 산업에서 나타났다.

〈표 5-2〉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활동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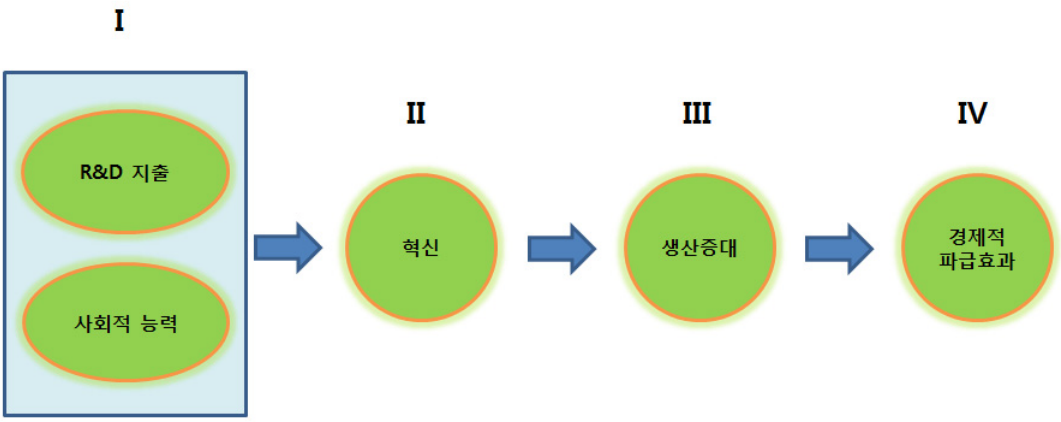
	주요 내용
Mowery & Zeidonis (2002) Mowery et al. (2001) Mowery & Sampat (2001)	Bayh-Dole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특허의 인용 빈도수가 낮아졌음. 즉 특허의 질이 하락하였는데, 기술이전에 있어서 특허보다는 세미나, 저널 등 전통적 메커니즘이 보다 효율적임.
Kanwar & Evenson (2003)	Ginarte-Park 지수를 이용하여 1981~1995년 기간의 29개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강화와 연구개발지출로 측정한 기술혁신 활동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몇 가지 통제변수를 고려할 때에도 특허권 강화가 연구개발 지출을 증가시킴
서환주, 정동진, 송종국 (2004)	한국의 경우 7차(1988년 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물질특허 도입) 및 11차(1994년 TRIPs 조약에 대비한 특허권 강화) 특허법 개혁(특허 기간 및 특허 대상의 확대)이 이뤄진 후 연구개발 투자 및 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함
Kang & Seo (2005)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권 강화와 특허출원 간의 상관관계를 1980~2000년의 기간에 대하여 추정하였는데, 특허권 강화만으로는 특허출원을 증대시키지 못함을 보임. 보완적인 경제환경(산업구조 고도화, 일정수준의 경제발전, 인적자본 수준, 인프라 발전(ICT), 개방 및 기업 간 경쟁)에서만 특허권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킴.
Kortum & Lerner (1998)	미국 내 특허건수 증가는 미국기업들이 주도하였음 특허등록의 증가를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였으며 특허증대는 연구개발트자의 생산성향상에 기인
Cohen et al. (2000)	Carnegie Mellon Survey 결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을 분석하였음. 기업들은 특허가 연구개발 결과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증가
Hall & Ziedonis (2001)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분석을 통하여 Cohen et al의 질문에 대답 대기업이 특허를 늘리는 것은 특허권 강화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특허출원을 확대한 반면에 연구 집약적 벤처기업의 등장을 촉진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특허권이 제공하는 독점지대를 목적으로 특허출원함을 의미

자료: 최성호 외(2010), p300

② 혁신주도형 성장에 대한 평가

혁신주도 성장(innovation-led growth)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 또는 자본 등의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방식을 벗어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기술혁신은 비단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의 기술이전형태를 탈피하여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말한다. 따라서 혁신의 개념이 단순히 요소투입의 차원을 넘어선 경우, 혁신주도형 성장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 생산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그림 5-1]).

[그림 5-1] 혁신주도형 성장경로



자료: 최성호 외(2010), p.302

[그림 5-1]은 R&D 지출 또는 사회적 능력이 전제조건으로서 부여되면(I), 이를 통해서 혁신이 이뤄지고(II), 이는 다시 생산성 증대를 통해(III) 부가가치 또는 고용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먼저 I~II 단계에서 R&D 지출 또는 기술인력 등이 투입되고 동시에 기업 및 시장특성, 특허권 등의 정책이 결합되면 혁신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III 단계는 이 기술혁신이 생산함수를 통해서 생산증대로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노동과 자본 투입에 대해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생산증대를 보여준다. 이는 마지막으로 IV 단계에서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가하고 경제성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혁신주도형 성장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R&D 투자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R&D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는 R&D 총 지출액과 GDP 대비 지출액 비중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R&D 총지출액과 GDP 대비 비중의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한국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으며 각각 〈표 5-3〉과 〈표 5-4〉와 같다.

먼저 R&D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 5-3〉을 보면, 한국 R&D 지출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1%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0년 현재 약 532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R&D 총 지출액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4,015억 달러), 일본(1,373억 달러), 독일(833억 달러), 프랑스(491억 달러)에 이어서 상위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당시 우리보다 지출액이 높았던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R&D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11%로서, 에스토니아(19%), 포르투갈(13%), 터키(13%)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한 〈표 5-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2000년도에 2.3%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현재 3.7%에 달한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4.4%), 핀란드(3.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 총 지출액 면에서 뿐 아니라 GDP 대비 비중 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R&D 투자 측면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산출물로서의 지표인 투자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과 OECD 국가들을 비교하였으며 〈표 5-5〉과 같다.

〈표 5-3〉 OECD 국가별 R&D 지출총액

단위: 백만 달러(PPP)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호주	7,942	9,885	11,695	15,449	19,029	-	-
오스트리아	4,476	5,230	6,003	7,379	8,854	8,839	9,254
벨기에	5,572	6,011	6,027	6,713	7,799	8,031	8,154
캐나다	16,690	19,145	21,676	24,076	24,722	24,568	24,067
칠레	-	-	-	-	964	-	-
체코	1,864	2,064	2,455	3,555	3,794	3,978	4,152
덴마크	.	4,147	4,335	4,856	6,236	6,479	6,816
에스토니아	81	117	170	290	379	378	444
핀란드	4,446	4,815	5,387	6,066	7,488	7,496	7,589
프랑스	32,967	38,153	37,972	41,996	46,548	49,143	49,991
독일	52,358	56,657	61,308	70,200	81,971	83,297	86,299
그리스	-	-	1,469	1,749	-	-	-
헝가리	977	1,493	1,437	1,852	2,058	2,358	2,383
아이슬란드	216	264	-	326	334	-	-
아일랜드	1,223	1,430	1,829	2,253	2,750	3,138	3,198
이스라엘	6,314	7,052	6,883	7,896	9,615	9,157	9,589
이탈리아	15,251	17,269	17,476	20,199	24,076	24,534	24,269
일본	98,896	108,166	117,420	138,498	148,719	137,314	140,833
한국	18,559	22,507	27,871	35,293	43,906	47,169	53,185
룩셈부르크	387	-	485	616	683	684	713
멕시코	3,360	4,171	4,748	5,576	-	-	-
네덜란드	9,065	9,698	10,416	11,723	12,468	12,374	12,969
뉴질랜드	-	-	-	-	-	1,646	-
노르웨이	-	2,792	3,063	3,712	4,631	4,693	4,742
폴란드	2,605	2,472	2,770	3,196	4,151	4,871	5,588
포르투갈	1,325	1,453	1,551	2,398	3,982	4,349	4,305
슬로바키아	384	398	404	482	594	590	800
슬로베니아	482	578	620	796	973	1,031	1,162
스페인	7,792	9,808	11,783	16,064	20,415	20,547	20,386
스웨덴	-	-	10,448	11,944	13,496	12,489	12,536
스위스	5,767	-	7,469	-	10,525	-	-
터키	2,824	3,009	3,568	5,193	7,744	8,816	9,582
영국	27,863	30,636	32,012	37,031	39,397	39,538	39,138
미국	268,121	277,066	300,293	350,923	403,668	401,576	-
OECD 전체	615,141	666,337	722,458	848,267	971,359	968,395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표 5-4〉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지출비중

단위: 백만 달러(PPP)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호주	1.5	1.6	1.7	2.0	2.2	-	-
오스트리아	1.9	2.1	2.2	2.4	2.7	2.7	2.8
벨기에	2.0	1.9	1.9	1.9	2.0	2.0	2.0
캐나다	1.9	2.0	2.1	2.0	1.9	1.9	1.8
칠레	-	-	-	-	0.4	-	-
체코	1.2	1.2	1.2	1.5	1.4	1.5	1.6
덴마크	..	2.5	2.5	2.5	2.8	3.1	3.1
에스토니아	0.6	0.7	0.9	1.1	1.3	1.4	1.6
핀란드	3.3	3.4	3.5	3.5	3.7	3.9	3.9
프랑스	2.2	2.2	2.2	2.1	2.1	2.3	2.3
독일	2.5	2.5	2.5	2.5	2.7	2.8	2.8
그리스	-	-	0.6	0.6	-	-	-
헝가리	0.8	1.0	0.9	1.0	1.0	1.2	1.2
아이슬란드	2.7	3.0	-	3.0	2.6	-	-
아일랜드	1.1	1.1	1.2	1.2	1.5	1.8	1.8
이스라엘	4.3	4.6	4.3	4.5	4.8	4.5	4.4
이탈리아	1.0	1.1	1.1	1.1	1.2	1.3	1.3
일본	3.0	3.1	3.1	3.4	3.5	3.4	3.3
한국	2.3	2.4	2.7	3.0	3.4	3.6	3.7
룩셈부르크	1.7	-	1.6	1.7	1.6	1.7	1.6
멕시코	0.3	0.4	0.4	0.4	-	-	-
네덜란드	1.9	1.9	1.9	1.9	1.8	1.8	1.9
뉴질랜드	-	-	-	-	-	1.3	-
노르웨이	-	1.7	1.6	1.5	1.6	1.8	1.7
폴란드	0.6	0.6	0.6	0.6	0.6	0.7	0.7
포르투갈	0.7	0.7	0.7	1.0	1.5	1.6	1.6
슬로바키아	0.6	0.6	0.5	0.5	0.5	0.5	0.6
슬로베니아	1.4	1.5	1.4	1.6	1.7	1.9	2.1
스페인	0.9	1.0	1.1	1.2	1.4	1.4	1.4
스웨덴	-	-	3.6	3.7	3.7	3.6	3.4
스위스	2.5	-	2.9	-	3.0	-	-
터키	0.5	0.5	0.5	0.6	0.7	0.8	0.8
영국	1.8	1.8	1.7	1.7	1.8	1.9	1.8
미국	2.7	2.6	2.5	2.6	2.8	2.9	-
OECD 전체	2.2	2.2	2.2	2.3	2.4	2.4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표 5-5〉 OECD 국가의 특허 출원 추이

단위: 건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호주	1,755	1,768	2,043	2,056	1,847	1,811	1,529
오스트리아	775	865	1,077	1,310	1,187	1,234	1,272
벨기에	805	801	973	1,096	1,087	1,096	1,120
캐나다	2,244	2,366	2,494	3,011	2,602	2,625	2,639
칠레	10	13	24	24	52	78	111
체코	86	94	125	154	207	177	117
덴마크	918	984	1,085	1,173	1,249	1,077	1,014
에스토니아	14	10	17	32	46	47	43
핀란드	1,396	1,311	1,522	1,645	1,500	1,460	1,532
프랑스	4,694	5,084	5,921	6,487	6,897	6,862	6,861
독일	13,313	14,150	15,964	17,590	16,991	16,563	16,243
그리스	53	83	61	92	109	105	73
헝가리	184	176	190	202	221	220	212
아이슬란드	33	50	37	38	26	35	26
아일랜드	217	257	303	358	427	372	304
이스라엘	1,523	1,343	1,655	2,034	1,785	1,635	1,409
이탈리아	1,822	2,209	2,617	3,335	3,196	3,030	2,925
일본	10,894	14,892	24,183	26,719	25,417	27,922	34,222
한국	1,963	2,590	4,248	6,436	7,150	8,305	7,871
룩셈부르크	56	34	49	51	53	51	46
멕시코	99	127	157	204	222	148	114
네덜란드	3,013	3,100	3,213	3,568	3,564	3,167	2,407
뉴질랜드	308	313	386	399	335	320	273
노르웨이	600	575	597	660	665	723	617
폴란드	111	162	118	140	194	246	248
포르투갈	33	35	46	106	133	127	103
슬로바키아	38	40	33	44	32	34	32
슬로베니아	63	83	86	103	141	127	117
스페인	639	844	1,162	1,396	1,619	1,608	1,740
스웨덴	2,864	2,219	2,224	2,827	2,998	2,794	2,688
스위스	1,504	1,679	1,973	2,146	2,249	2,128	2,169
터키	83	110	189	324	387	443	536
영국	5,808	5,941	5,957	6,549	6,007	5,461	4,966
미국	40,834	39,906	45,547	52,438	43,421	41,433	37,956
OECD 전체	98,752	104,214	126,276	144,747	134,017	133,464	133,534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표 5-5〉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성장률에 있어서도, 칠레와 터키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산출로서의 특허 출원건수에 있어서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쳐지지 않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적 측면에서 투자 대비 산출의 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많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특허의 영향력 지수(CII: Current Impact Index)에 따르면, 2006년에 미국(1.2), 핀란드(1.1)에 비하여 한국은 기준치인(1.0)에 못미치는 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의 낮은 질적 수준으로 인해 특허의 건당 특허료가 매우 낮다. KAIST 학술연구정보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당 특허료가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8억 9천만원, MIT는 1억 3천만인데 비해, 한국의 KIST는 800만원, KAIST는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결국 한국의 기술혁신 성장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R&D 투자가 적어서 라기 보다는, R&D 투자가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정책대안

①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 개혁

다변화 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인력 양성과정을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문대학 및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대인관계 능력 등의 기초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대학의 경우, 학사구조를 대학원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위원회(2012c)에 의하면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MIT대학의 경우 학부 대비 높은 비중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사 중심의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석사 중심의 전문대학원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립대학인 U.C. Berkeley의 경우에는 주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부생의 비중이 높지만 대학원은 철저히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대학 자체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별 학교의 환경을 반영하여 연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는 유효한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들은 이미 다수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 추진 주체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도 앞에서 살펴본 투자확대 방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이견조율 과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을 고려한 R&D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인력에 대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각 대학별로 기술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금융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성과과제는 후속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의 진행 단계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을 위해 공동 재원을 마련하고, 협력국과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의 국내유치를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의 PPP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의견 소통을 위한 상시적인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회적인 회의를 통해 이견이 조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시적인 대화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정부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력의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과 SNS 등을 통해 소통하고 정책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재능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c). 이처럼 소통을 통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반이 될 경우 기존에 개발된 다수의 정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② 기술시장의 촉진을 위한 기술 사업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애플과 같은 혁신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는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를 좌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및 특허사업 등이 신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R&D 투자는 양적으로 증가하나 그 성과는 투입에 비해 미비하다.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가 계속되고, 기술의 질도 선진국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창조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술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사업화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우수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금융지원 및 후속연구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의 기획부터 투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사업화의 중개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전문회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사업단계에서 기술금융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의 융합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기술지식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의 개발자와 사용자간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대기업은 미활용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지식경제부, 2011).

〈표 5-6〉 사례: 주요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국가	주요 프로그램
(미국)	· (기술개발-이전 연계) 연구결과 사업화, 산학협력 교류증진, 우수기술기업 성장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 CONNECT 프로그램 :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기술 및 생명공학 금융포럼, 우수혁신신상품 시상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 (기술이전 코디네이터) 에너지부(DOE)의 2011년 기술이전 혁신정책의 주요내용 · 기타 내용 : 민관 파트너십 강화, 제도개선, Technology Transfer Working Group 활용 등
(EU)	· (책임 있는 협력)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지식이전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제정(Responsible Partnering) · 구조적 프로세스, 공동연구와 지식교환에 관한 목표 정의, 상호학습과 정기적 상호작용 및 자체평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된 협력지침 마련
	· (이노베이션 바우처)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지식을 사업에 이용하도록 쿠폰 제도를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 · (Type 1) 개별기업 활용, (Type 2) 10개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의 문제 해결, (Type 3) 특별한 지식제공자와 공동작업
	· (고위험 R&D 지원) 민간과 공공기관의 고위험 R&D 프로젝트에 융자제공을 위해 신규 리스크 분담 재정기구 설립(Risk-sharing finance facility : RSFF)
(일본)	· (지식재산 群 관리)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지식재산을 집약하여 관리하는 사업화전문기구 신설 논의
	· (특허 DB) 기업에 라이센싱 가능한 특허공유 데이터베이스인 J-STORE 운영 · 특허 정보, 과학기술 Seeds 관련 정보, 연구보고서, JST 전문가 의견 등 제공
	· (신사업지원기관 지정) 신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인 '신사업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제공 ·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성과의 이전 촉진, 시장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경영능률 향상의 촉진, 자금유통의 원활화 등 업무를 추진
(중국)	· (해외 기술이전 로드맵) 해외 기술성과 및 인재활용을 위해 '全세계 혁신자원 지도'를 구축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 '11년 전세계 15개 국가 및 도시의 45개 기술이전 및 혁신서비스 기구와 국제 기술이전협력 네트워크(ITTN) 설립 · 운영
	· (국가 혁신기지 지정) 기술이전 시범기구 및 기관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 및 다양한 이전 모델 확산

자료: 지식경제부(2011), p.6

③ 산학연의 통합운용

한국은 산학연간의 부문 간 이동의 유인이 적고 인력교류가 적다. 또한 산학연 간 협력과제의 사업화율이 낮으며, 산출물의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기술이 타 부문으로의 이전이 적고, 부문 상호간 신뢰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산학연의 긴밀한 통합운용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계의 전문 인력들을 산학협력 교수로 겸임 채용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기업파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 인력을 유입을 위해 산학연 HUB를 조성하여 공동연구 시 대학 및 연구소의 시설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공동연구센터가 있는데, 이는 AIST의 공동연구시설(Open Space Lab)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AIST 인증 벤처기업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시 활용한다. 이용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을 승인함으로써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방법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b, p14).
다음으로 산학연 협력연구과제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자립화를 위해 TLO의 생애주기별로 차별지원해야 한다.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대표적 우수사례로 꼽히는 데 산업현장의 직업훈련기관으로 시작(1968)해서 중소기업 기술이전센터를 설치(1982)했으며, 컨설팅 및 R&D 센터를 설립(1998)하여 기업컨설팅과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해 1만개가 넘는 기업에서 서비스요청이 들어오며, 중소기업고객이 70%이상을 차지하며, 총 4,711명의 직원과 810개가 넘는 슈타인바이스기술이전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p.16).

마지막으로 요원한 산학연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국의 산학연 협의체로서 일본의 경우, 산학관 연계 서밋(Summit), 미국의 GUIRR (Governtment-University Research Roundtable), 그리고 독일은 산업-과학 연구연합(Industry-Science Research Alliance)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2b p.18). 특히 앞서 다른 정책에서 정부 부처나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산학연의 통합 운용을 위해 산학연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소통을 통해 현재까지 개발된 정책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균형적 R&D 지원대책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나 고용기준으로 30%내외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서비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현실의 변화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책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진흥책 그리고 R&D 지출의 제조업 편향성, 산업공단 내 서비스산업 진입 불가 등 많은 정책이 제조업 편향적이다. 특히 투자여력보다는 기술, 경영 및 마케팅 등이 우월한 외국인자본에 의한 국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서 자본유치라는 개발도상국형 정책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형 기술이전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사업이나 문화콘텐츠사업의 일부 업종만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제지원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담보자산이 부족해서 제조업에 비해 금융지원 측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R&D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Ⅵ 시사점

한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기본적으로 노동투입 확대, 자본스톡 확충, 생산성 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물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으며 여기에는 우리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생산요소의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미 상당수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니즈(needs)에 맞는 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고용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과 고용보호가 비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에 해당하는 준정규직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자본스톡의 확충을 위해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입법절차를 개선할 필요도 있으며 소통의 절차를 강화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각종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도 있으며 정부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리스크의 최소화도 필요하다. 한편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생산성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학연의 통합운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제조업고 서비스업에 대한 균형적 R&D 지원 또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상당수의 정책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실천 의지가 약하다는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간 모든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정책들이 표류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도 있다. 법령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여당 및 야당의 소통 및 타협 부재로 개정 법안들이 표류되는 현상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정책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모든 정책의 이해당사자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책이 일부 근로자나 실업자, 또는 사용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논의 참가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일부의 양보만을 강요한다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강화,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한 논의의 확충을 통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노선, “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 성장률 전망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곽태원·이병기·현진권,「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조정 토빈 q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실증분석」,『경제학연구』, 제54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6, pp. 5~39.

교육과학기술부, 2008, “577전략으로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국가R&D 성과분석 및 시사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a,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2012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b,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c,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안)”

김동석 · 이진면 · 김민수,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 1963~2000」, 한국개발연구원, 2002.

김학수, 법인세 감세효과: 세수회복의 관점에서, 미발표자료, 2011.

박양수 · 문소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양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보고서, 2005

박원암 · 허찬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과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04.

오정근,‘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경련, 2012.9

유장희, 「서비_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한국경제연구원, 2009.

지식경제부, 2009,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나아갈 길”

지식경제부, 2011, “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案)”

최성호 · 박정수 · 강석훈 · 강성진, 2010,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산업연구원

통계청, 「국부통계조사보고」, 1967, 1977, 1987, 1997.

한진희 · 최경수 · 김동석 · 임경묵,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2002.

하준경,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Aghion P, Bloom N, Blundell R, Griffith R, Howitt P. (2005),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 inverted-U relationship", QJ Econ, 120:701~728

Arrow K. J. (1962)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Invention", in R.R. Nelson, editor, The Rate and Direction of Economic Activ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N.Y.

Cohen W. (1995), "A repreise of size and R&D", mimeo, Carnegie Mellon Univerisity

Comanor, W. S. (1967) "Market Structur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ndustrial Research",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XXXI, No. 4, Nov. 1967.

Fischer, Stanley, " The Pole of Macroeconomic Factors in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4565, Dec.1993.

Gallini, N. (1992), "Patent Policy and Costly Imit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23, 52–63.

Geroski, P. A. and Walters, C. F. (1995) "Innovative Activity Over Business Cycle", Economic Journal, 105, pp.916~928.

Gilbert R.(2006a), "Competition and Innovation", Jouranl of Industrial Organization Education, Vol. 1(1).

Gilbert R. (2006b), "Looking for Mr. Schumpeter: Where Are We in the Competition-Innovation Debate?", in Jaffe A., Lerner J. and Stern S., editors, NBER book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6, pp.159-215.

Guellec, Dominique and Evangelos Ioannidis (1997) "Causes of Fluctuations in R&D Expenditures", OECD Economic Studies, No.29, 123~138.

Horowitz A. and Edwin L. (1996), "Patent Length and the Rate of Innov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7, 785–801.

Kuszczak , John and Richard Dion, "Potential Output Growth: Some Long-term Projections." Bank of Canada Review Winter 97-98, Bank of Canada, 1997.

Kwark, Noh-Sun, Rhee, Changyong and Yang, Dooyong,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Unpublished Manuscript, 2007.

Lee, Young, and Roger Gordo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2005, pp. 1027 ~ 1043.

Levin, R., W. Cohen and D. Mowery (1985), "R&D Appropriability, Opportunity and Market Struc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75, No.2.

OECD, 2005, "Oslo Manuel"

Pakko, Michael R, "What Happens When the Technology Growth Trend Changes?: Transition Dynamics, Capital Growth and the New Economy," Working Paper Series 2001-020A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Oct. 2001.

Qian, Y. (2007), "Do national patent laws stimulate domestic innovation in a global patenting environment? : A cross-country analysis of pharmaceutical patent protection, 1978-2002",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89(3): 436-453

Romer, P.,"Endogenous Techical Cha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0.

Scott, J. T. (1984), "Firm versus Industry Variability in R&D Intensity", in R&D, Patents, and Productivity, ed. by Griliches, Z., The univ. of Chicago Press.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Solow, Robert M., "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39, No.3, 1957, pp. 312~320.

Yang, C-H. (2003), "Protecting foreign inventors ro a learning channel? Evidence fro patents granted in Taiwan", Economic Letters, Vol.81, pp.227~231.

06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종합2)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본부장

2012. 11. 13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고 영 선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CONTENTS

한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

지속적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성장전략: 잘못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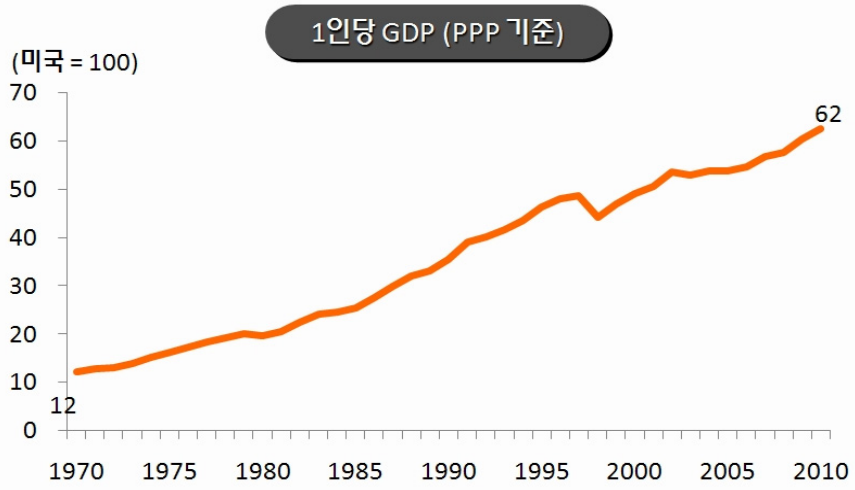
성장전략: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한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

KDI

- 1인당 GDP는 1970년 미국의 12%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62%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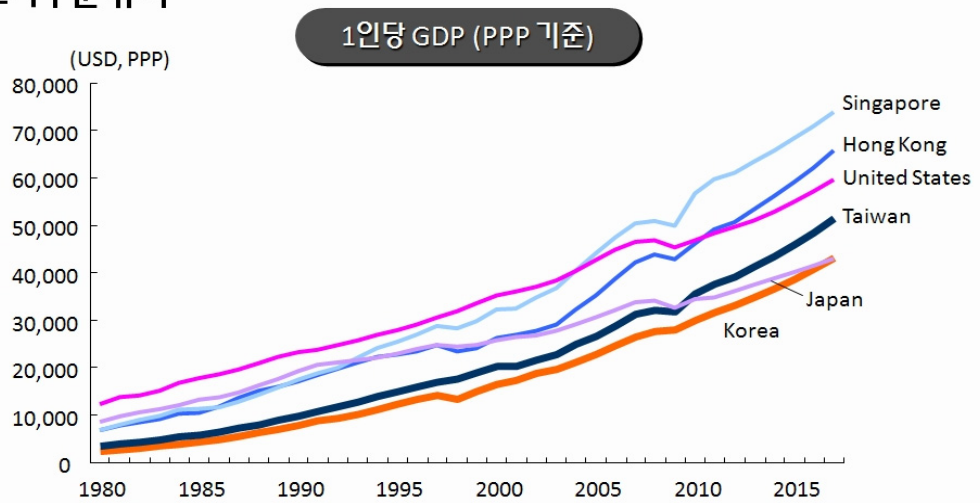
자료: OECD.

-4-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소득이 낮은 편

KDI

- 특히, 대만은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높은 소득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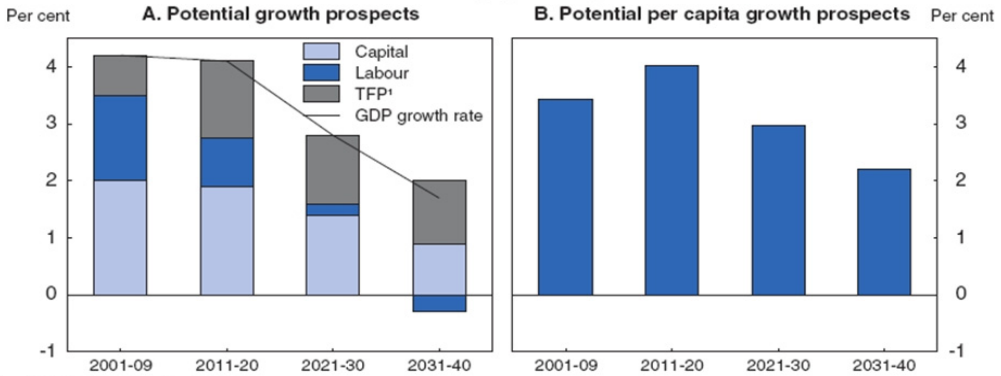
주: 2012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IMF.

잠재성장률 하락

KDI

- 인구증가 둔화, 저축률 하락, 추격형(“catch-up”) 경제성장 단계의 종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
  - 2001-09년 4.2%, 2011-20년 4.1%, 2021-30년 2.8%, 2031-40년 1.7%

Figure 1.3. **Korea’s potential growth prospects**
Annual average percentage rate



1. Total factor productivity.
Sourc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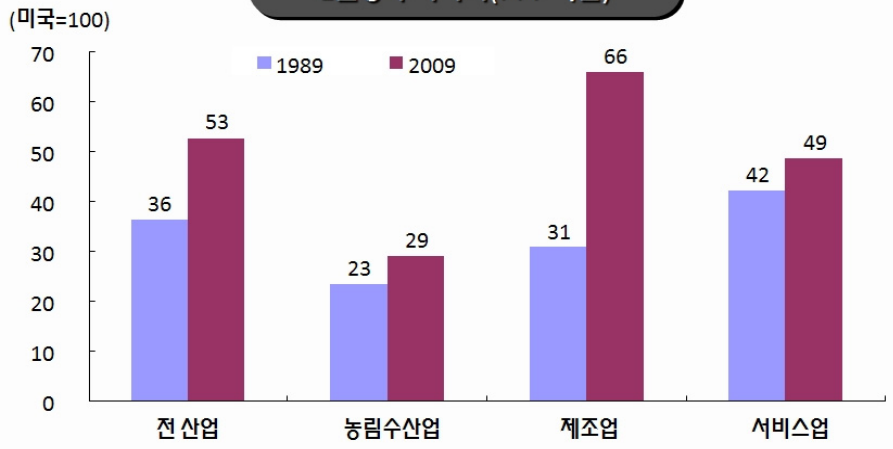
-6-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

KDI

- 1989~2009년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100) 대비 큰 폭(31→66) 증가
  - 반면 농업(23→29), 서비스업 (42→49)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미진

1인당 부가가치(PPP 기준)



자료: OECD STA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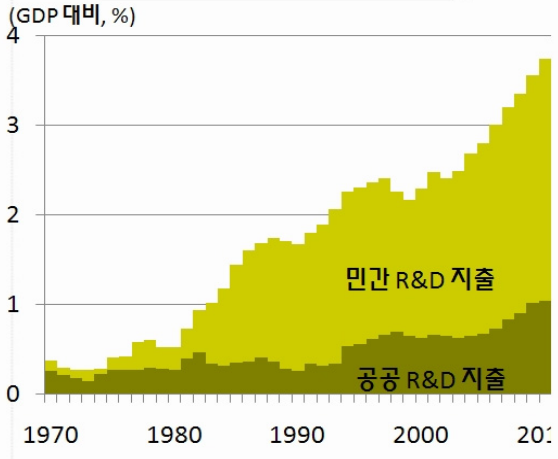
-7-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원천(1): 기술과 자본의 축적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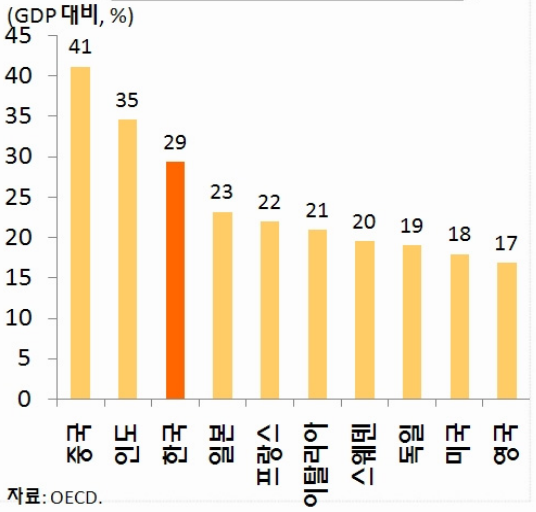
- 높은 수준의 R&D 지출과 투자율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이 빠르게 축적

R&D 지출 추이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총고정자본형성(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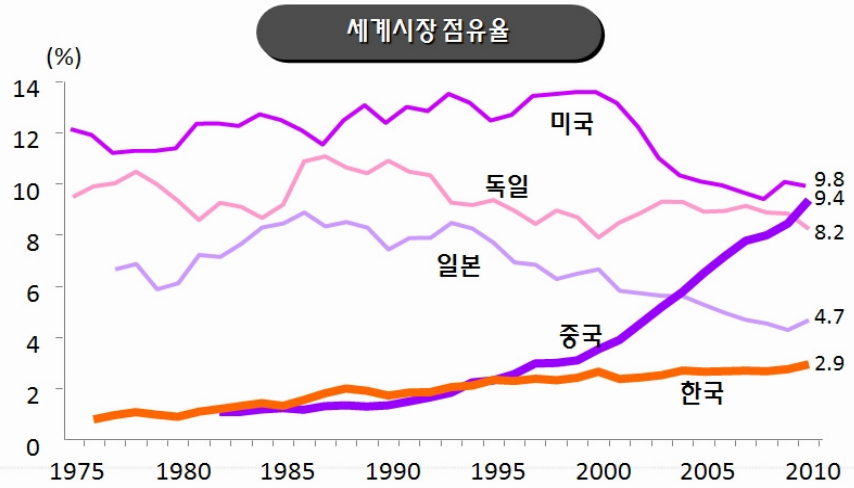
자료: OECD.

-8-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원천(2):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KDI

- R&D, 생산,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 없는 혁신이 불가피
  - 특히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은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산업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Gill and Khara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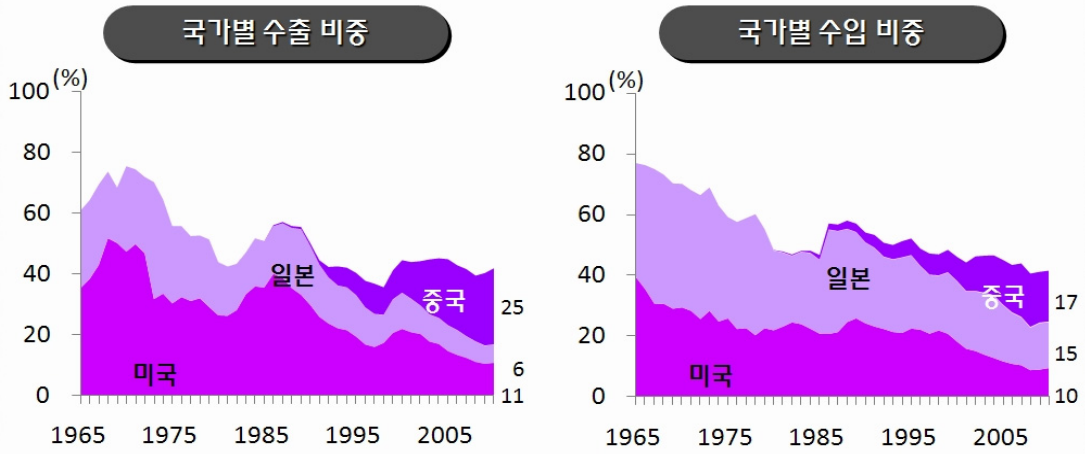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9-

중국은 국내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 차지

KDI

-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교역 파트너
  -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나 동시에 우리에게 넓은 수출 및 수입 시장을 제공



자료: 통계청.

-10-

지속적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1) 교육: 질적 수준 낙후

KDI

- 공교육이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낙후
  -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IMF 교육경쟁력 순위

평가 지표 (평가 대상국 수)	2005 (51)	2009 (57)	2010 (58)	2011 (59)	2012 (59)
1.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 자 비율)	4	2	2	2	2
2. 중등교육 학업성취도(PISA: 수학, 과학)	3, 4	3, 10	4, 6	4, 6	4, 6
3. 교육시스템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35	32	31	20	27
4.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43	51	46	39	42
5. 경영교육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도	-	42	43	35	43
6. 언어능력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36	34	39	31	32
7. 양질의 기술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도	45	50	-	-	

자료: IMD; 김영철, "고등교육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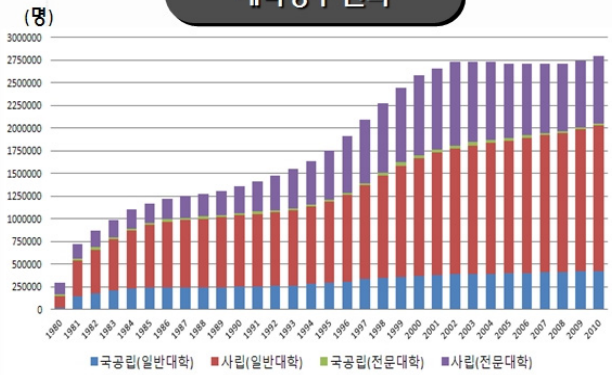
-12-

(1) 교육: 노동시장과의 연계 부족

KDI

- 일반대학 위주로 대학정원 증가
  -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일반대학과 유사한 교과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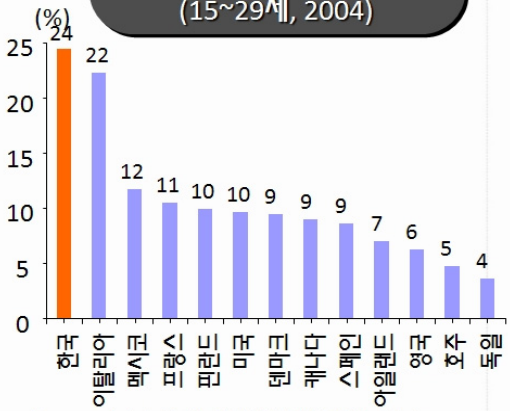
재학생수 변화



자료: 김영철, "고등교육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2012.

- 대졸자 중 NEET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대학졸업자 중 NEET의 비중 (15~29세, 2004)



주: NEET는 근로, 교육,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한국 및 뉴질랜드 2005년, 영국 2003년.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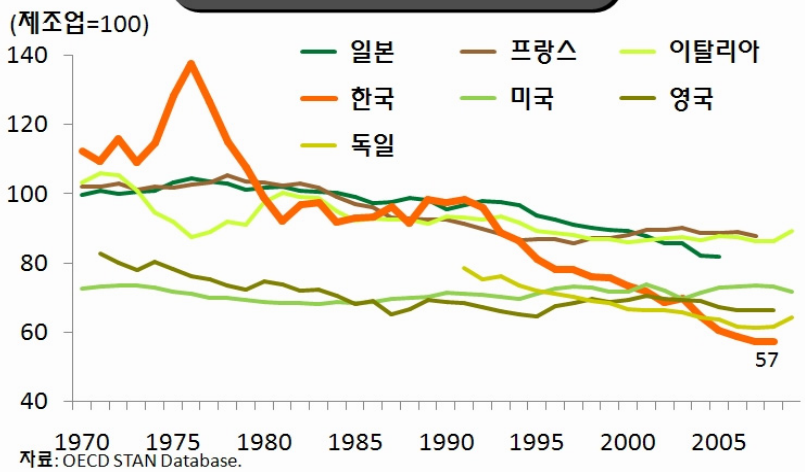
-13-

(2)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KDI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임금은 1990년대 초부터 급격히 하락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피용자 보수



자료: OECD STA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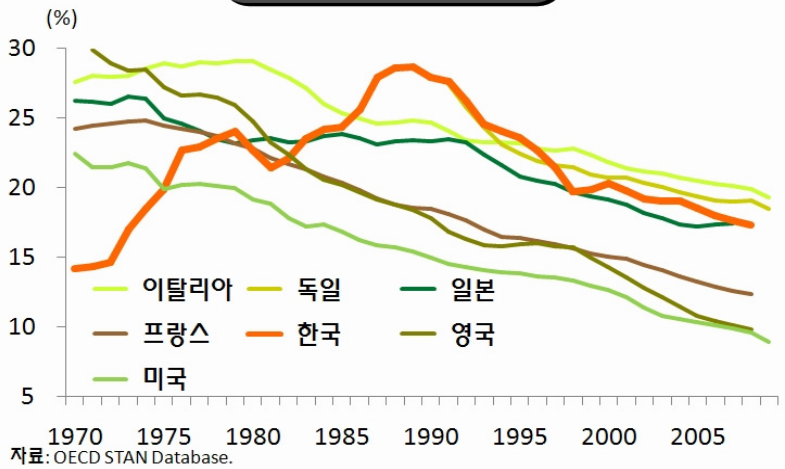
-14-

(2)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는 탈산업화와 연관된 문제

KDI

■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 저숙련 근로자는 서비스업 고용으로 흡수

제조업 고용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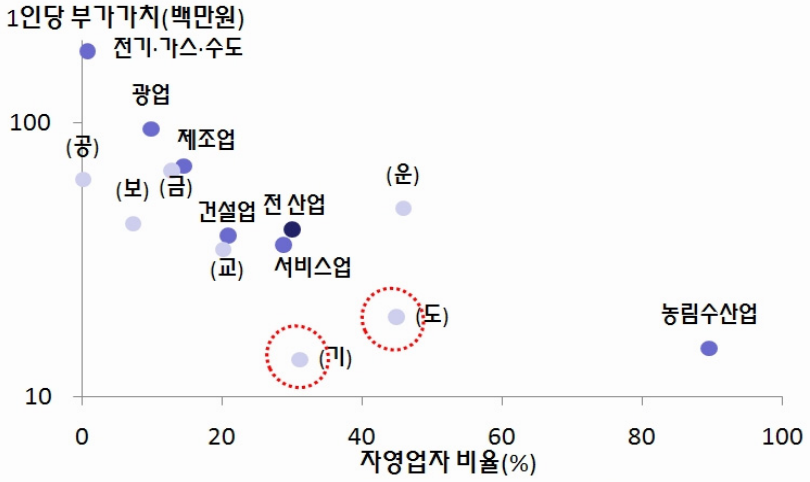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atabase.

-15-

(2) 서비스업: 특히 전통서비스업은 저생산성, 영세성

KDI

노동생산성과 자영업자 비중(2009)



주: (도) 도소매·음식·숙박, (운) 운수·보관·통신, (금)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공) 공공행정·국방, (교) 교육, (보) 보건·사회사업, (기)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자료: OECD STAN Database.

-16-

(2) 서비스업: 구조조정은 어려운 문제

KDI

- 고부가가치 업종은 확대, 저부가가치 업종은 축소될 필요가 있으나,
  -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고부가가치)과 규모화(저부가가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직면

부가가치	세부업종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고용비중(%)		
			한국(A)	미국(B)	A-B
고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67(100)	19	22	-3
중	• 운수·보관·통신 • 공공행정·국방 • 보건·사회사업 • 교육	45 (68)	32	42	-10
저	• 도소매·음식·숙박 •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18 (27)	50	36	14
서비스업 전체		36 (54)	100	100	0

주: 2009년.
자료: OECD STA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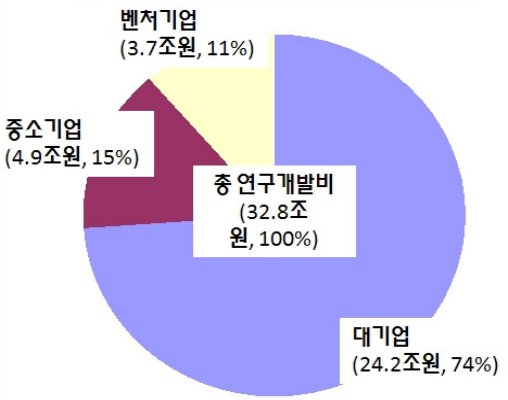
-17-

(3)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격차 확대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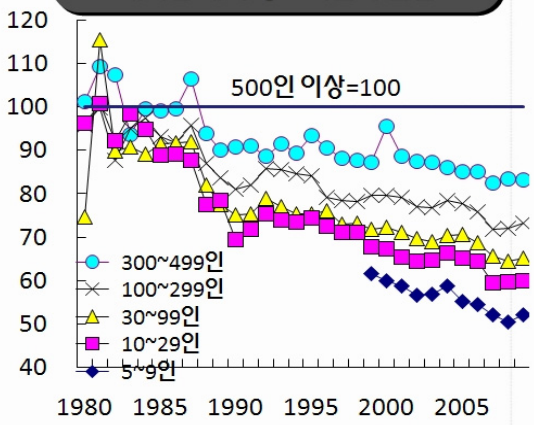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R&D 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
  - 중소기업의 임금은 1990년대 초부터 대기업 대비 계속 하락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2010)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자료: 통계청.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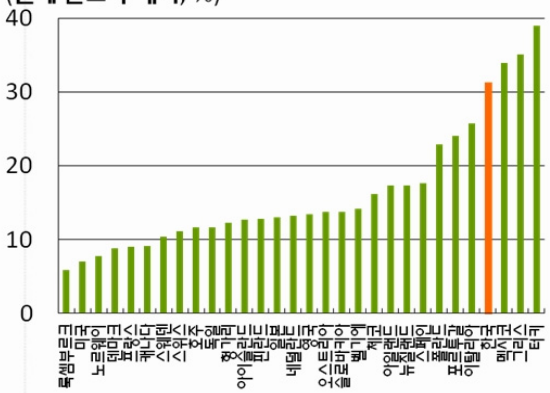
(3)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영세기업이 매우 많음.

KDI

-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약 30%)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자영업자 비중(2008)

(전체 근로자 대비, %)



자료: OECD.

- 전체 근로자 2천4백만명 중 1~4인 기업 40%, 5~299인 52%, 300인 이상 8% (2010, 통계청)
- 제조업에 국한할 때에도 영세기업의 고용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제조업, 2002)

(단위: %)

기업규모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1~9인	43	10	7	11	12
10~249인	44	45	38	58	41
250인 이상	13	45	55	3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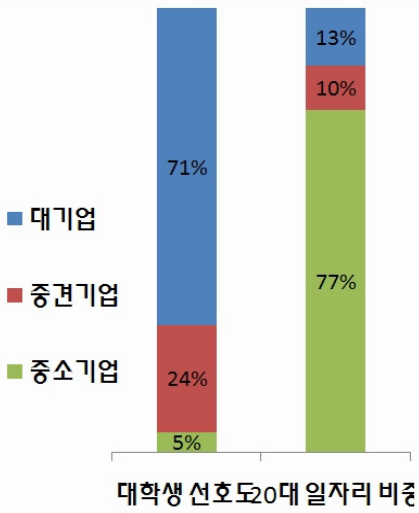
자료: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05.

-19-

(3)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이 매우 복잡

KDI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부족이 문제
-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
  - 고질적 인력난
  - 경영전문성 부족
-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인식
  - 대졸자는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
  -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대상
- 정부의 부적절한 지원
  - 과도한 금융·세제 지원 때문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 미흡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김희삼(20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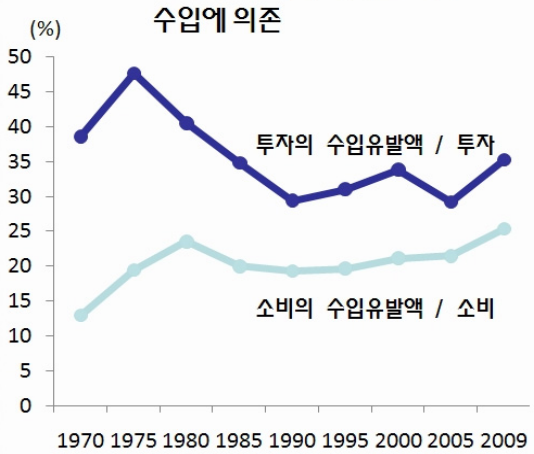
-20-

성장전략: 잘못된 대안

(1) 수출보다 내수: 수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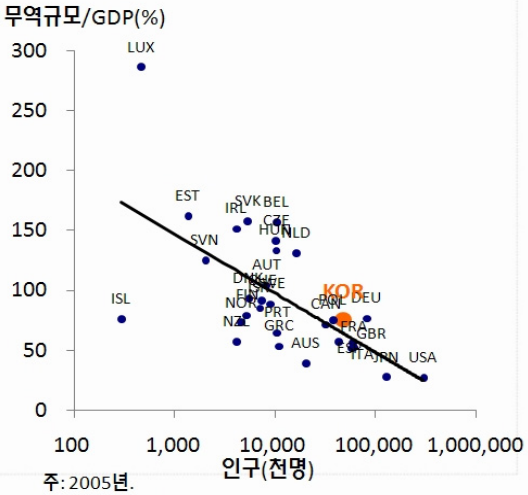
KDI

- "수출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 수출이 없다면 수입이 불가능
    - 소비의 25%, 투자의 35%를 수입에 의존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 "수출이 너무 많다."
  -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로 보아 무역규모가 너무 큰 것도 아님.



주: 2005년.
자료: OECD,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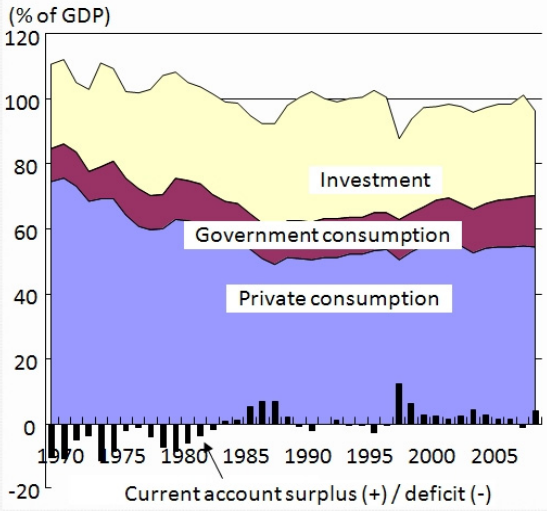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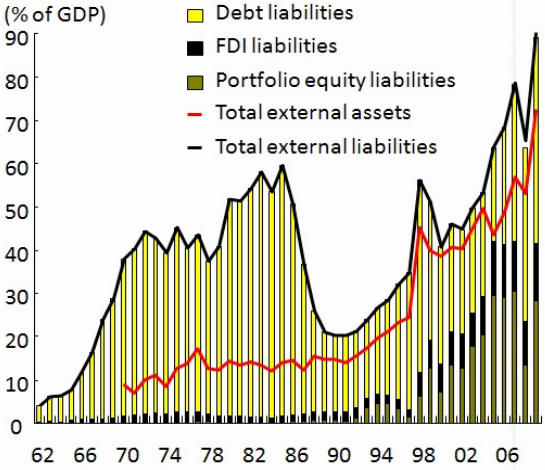
(1) 수출보다 내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의 증가 초래

KDI

■ 소비(C) 및 투자(I), 즉 내수가 증가하면 경상수지(X-M)는 감소, 외채 증가

- Y = (C + I) + (X –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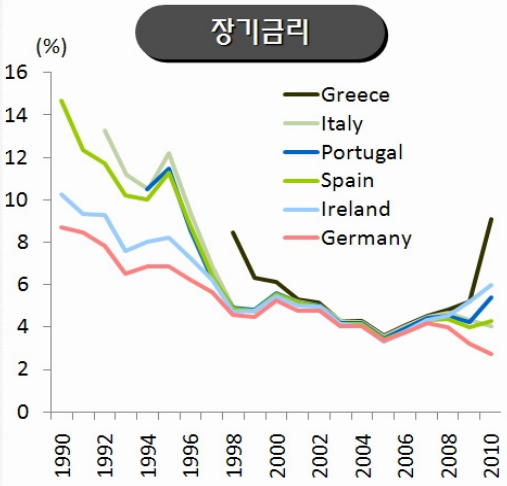
자료: Youngsun Koh,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Il SaKong and Youngsun Koh, (eds.)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KDI,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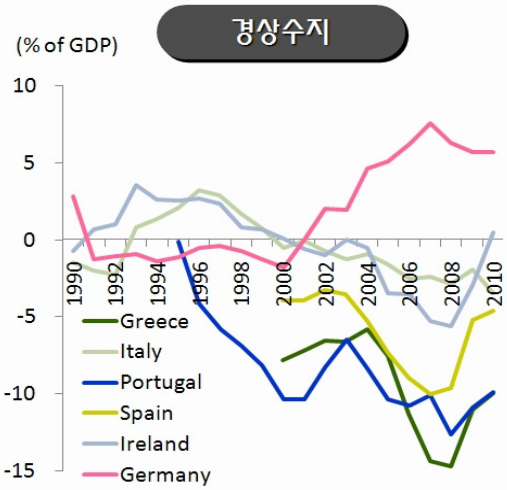
(1) 수출보다 내수: 남유럽의 사례

KDI

■ 유로 통합 이후 국제자본이 급격히 유입, 경기과열, 경상수지 적자 누적

- 통화정책이 ECB로 이양된 상황에서 재정이라도 긴축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함.





자료: OECD.

-24-

(2) 수출보다 내수: 중남미의 사례

KDI

- 20세기 중 경제적 포퓰리즘(economic populism) 출현
  -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근대산업 부문의 노동자 및 중산층을 기반으로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임금 인상, 농산물 가격 인하, 환율 절상 등을 추진
  - 해외시장을 상대로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대지주 계급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던 체제에서 도시 노동자 및 중산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했다는 긍정적 효과
- 과도한 투자와 재정지출로 인한 물가불안, 그리고 무리한 환율운용으로 결국 위기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심각한 피해 초래
  - 물가상승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을 절하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자 고평가를 유지
  - 재정 및 통화정책의 뒷받침이 없어 물가안정에 실패, 국제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누적, 위기 반복

-25-

(2) R&D: = 경제성장?

KDI

- 노동 및 자본투입 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 증가
  - 잠재성장률 = 취업자 증가율 + 자본스톡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이로 인해 R&D=경제성장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11-2015년간 총지출이 연평균 4.8% 증가하는 데 비해 R&D 지출은 5.3% 증가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단위: 조원, %)

	2011	2015	연평균 증가율
R&D	14.9	18.3	5.3
경제사업	57.2	57.0	-0.1
보건·복지·노동	86.4	108.3	5.8
교육	41.2	56.0	8.0
국방	31.4	37.9	4.8
기타	78.0	95.6	5.2
총지출	309.1	373.1	4.8

자료: 기획재정부,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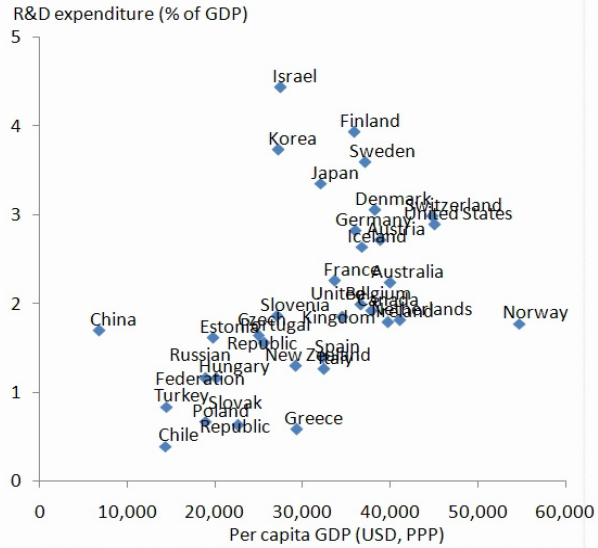
-26-

(2) R&D: 매우 큰 규모

KDI

-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
  - 절대수준에서 이스라엘, 핀란드 다음으로 큰 규모
  - 소득수준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R&D 투자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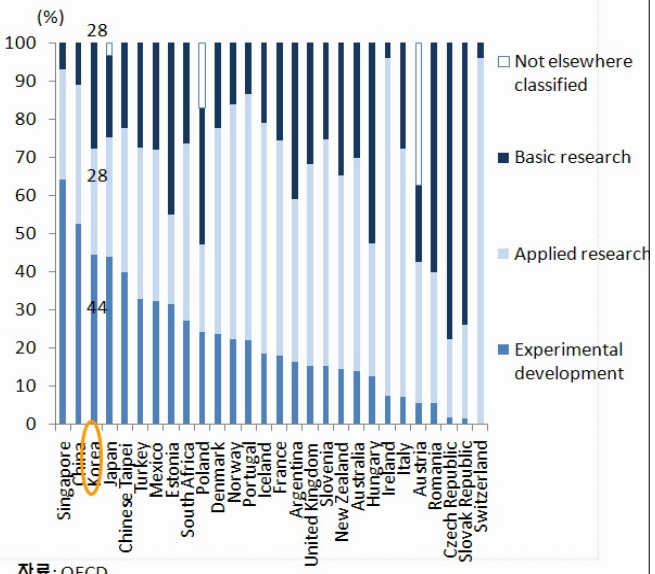
자료: OECD.

(2) R&D: 정부-민간 역할분담에 의문

KDI

- 시험개발의 비중이 매우 커서,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분담에 의문 제기
  - 정부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큰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전유(全有)가능성(appropriability)이 높은 개발단계의 투자는 민간이 담당
  -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정부 지원금의 20-40%만 기술료로 납부하면 특허권 등 투자혜택을 기업이 전유할 수 있어 기회주의적 행태를 조장

정부 수행 R&D 투자의 유형별 비중



자료: OECD.

(3) 산업 타기팅: "먹거리 산업"을 찾아서

KDI

- 역대 정부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 경주
  - 노무현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 44개 제품, 147개 기술 지원
  - 이명박 정부: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 2009-2013년간 24.5조원 투입
    - 2013년까지 신성장동력 글로벌 중소기업(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달러 이상) 300개 창출을 목표
    - 기술개발, 상용화, 자금지원 등 전 주기적 지원

10대 성장동력산업 (노무현 정부)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이명박 정부)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전지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관광

-29-

(3) 산업 타기팅: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은 전략

KDI

-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함으로써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에 성공
  - 이 과정에서 산업 타기팅을 통해 자원을 집중
- 그러나 빠른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됨에 따라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추진할 단계
  - 세계최고 대비 기술수준(산업연구원, 2011): 제조업 전체 81.9%, 중화학공업 81.9%, 경공업 78.6%, 정보통신산업 83.3%, 대기업 83.9%, 중소기업 81.5%
  -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기보다는 민간에서 다양한 혁신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생산성 제고에 있어 핵심적 과제

-30-

(3) 산업 타기팅: 新산업정책적 접근

KDI

■ 新산업정책

- 특정 산업의 선정 및 육성보다는
- 시장실패(정보 외부성, 조정 실패 등)를 찾아서 치유하기 위한
- 민간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적 탐색과정 강조

정보 외부성의 시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원칙

1. 정부지원은 '새로운' 생산활동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생산활동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3.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4. 정부지원은 산업이 아닌 개별 활동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5. 지원대상 활동은 외부효과를 창출할 명확한 잠재력을 지녀야 한다.
6. 산업정책 추진은 검증된 능력을 지닌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7.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최상위의 정치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산업정책 추진조직을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
8. 산업정책 추진조직은 민간부문과의 대화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9. 정부지원대상 활동이 성공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10. 새로운 발견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정책 추진조직은 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Dani Rodrik, "Industrial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004.

-31-

성장전략: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KDI

- 정부가 경제성장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높이기는 매우 어려움.
  - 국가경제의 생산능력(인적 및 물적 자원/생산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는 불가능
  - 유일한 방법은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것
- 반면 경제를 망가뜨리기는 매우 쉬움.
  - 특히, 중남미와 남유럽의 경우처럼 정합적이지 못한 거시경제정책 (재정/내수/물가/환율)을 추구할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본에 충실할 필요
  - 거시경제 안정화: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부실 누적 방지
  -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등 각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
  -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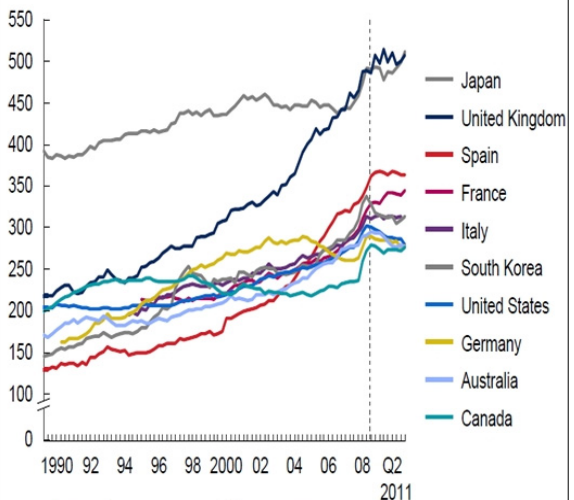
-33-

(1) 거시경제안정화: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부실 방지

KDI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과잉복지 등)이
  - 자산가치의 거품과 지속 불가능한 채무증가를 초래하여
  -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선제적 거시경제운용 필요
  - 통화정책: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
  - 재정정책: 위기 시 외에는 경기부양 자제, 재정건전성 유지에 초점
  - 금융시장정책: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부실 누적 예방

총부채(1990-2011.¼)



주: 총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부채 합계.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2012. 1.

-34-

(1) 거시경제 안정화: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KDI

- 안심할 수 있는 정부부채의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존재
  - Reinhart and Rogoff(2010): 90%
  - Cecchetti et al.(2011): 85%
- 그러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GIIPS 국가 중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재정이 건전하였으나 위기에 봉착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외곽(periphery)에 위치한 국가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될 때 가장 큰 타격
- GIIPS 국가들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외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원 확보
  - 경제사업 R&D 등 지출구조조정 추진

	정부부채/GDP (%)		1인당 GDP (USD, PPP)	인구 (천명)
	2007	2013		
아일랜드	25	118	40,458	4,471
스페인	36	84	31,888	46,073
한 국	31	31	29,101	50,516

주: 1인당 GDP와 인구는 2010년 기준.
자료: IMF,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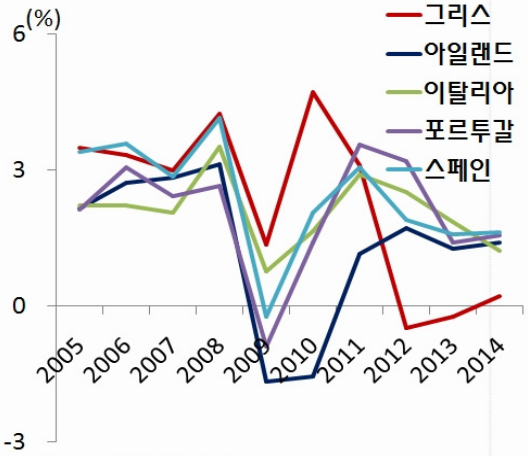
-35-

(2)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필요성

KDI

- 경제가 유연할수록 빠른 회복 가능
  - 경쟁적 상품시장: 독과점 근절,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
  - 유연한 노동시장: 신축적 임금조정, 기업 간/산업 간/지역 간 신축적 노동력 이동
-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물가의 하락이 더디게 진행, 경쟁력 회복 지연
  - 성장률: 2011년 -6.9%, 2012년 -4.7% (최근 5년간 총 -17%)
  - 경상수지 적자/GDP: 2011년 10%

GIIPS 국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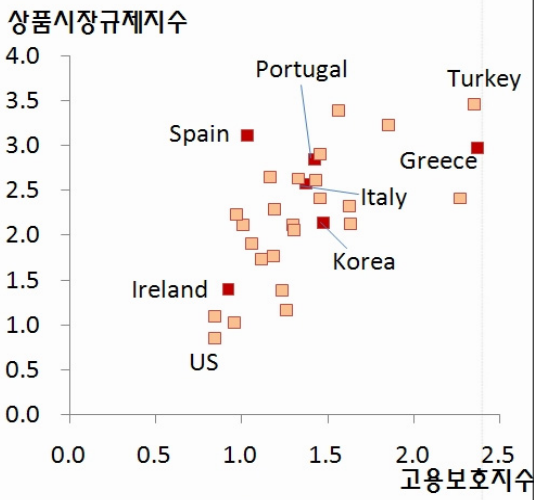
주: 2012년 이후는 전망.
자료: IMF.

(2)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종합적 노력

KDI

- 우리나라의 유연성은 중간 정도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및 고용보호지수는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
- 종합적 유연성 제고노력 필요
  -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제개혁
  - 보호 위주의 기업/산업정책 폐기, 한계기업 퇴출 및 M&A 원활화
  -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임금체계 개편(연공급→성과급), 정규직 고용보호 축소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및 고용보호지수(2008)



주: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와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는 규제가 가장 적을 때 0, 가장 많을 때 6의 값을 가짐.
자료: OECD.

-37-

상품시장의 경쟁 활성화: 시장조사 및 시장구조 개선조치(영국의 사례)

KDI

-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 시장조사
    - 산업별 규제당국이 관할 산업에서 경쟁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에 대한 조사를 경쟁위원회에 의뢰
    - 경쟁위원회는 시장조사 후 필요한 교정책(remedy)을 산업별 규제당국에 권고하거나 직접 시행
  - 기업법(Enterprise Act)에 의한 시장구조 개선조치
    - 구체적인 경쟁법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경쟁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쟁위원회는 기업분할을 포함한 시장구조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 개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
    - 경쟁이 아닌 경쟁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산업별 규제당국의 유산도 교정할 필요

-38-

상품시장의 경쟁 활성화: 사적구제 활성화 및 제재수단 강화

KDI

- **사적구제**(private remedy) **활성화**
  - 경쟁당국의 한계
    -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경쟁제한적 행위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광범위화
    - 경쟁당국의 규제, 적발 , 처벌 등 공적 집행 중심의 규율체계에 한계가 발생
  - 사적구제 관련 이슈: 경쟁당국의 전속고발권 존치 여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조치 등
-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수단 강화**
  - 관련 이슈: 경쟁당국의 강제조사권 부여 여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및 방식의 개선 등

-39-

(3)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KDI

- **초중등 교육**
  -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학교 단위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우수교사 육성 및 책임감 함양
  -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완화
- **고등교육**
  -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학내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 축소, 높은 학과 확대
  -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지원 역량 확충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산
  -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 평가 및 유인 체계 구축
    - 대학 재정지원 산정공식 (formula)에 대학의 특성화 및 학과별 졸업생 취업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40-

(4)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KDI

-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 목표: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자금지원은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창업초기기업에 국한할 필요
    - 현실에 있어서는 업력이 길고 규모도 큰 기업에 많은 금융지원이 제공되어,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를 조장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zombie")의 퇴출 방해
  - 인력조달, 국내외 판로개척,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의 기업서비스를 강화
    - 접근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복잡다기한 사업체계 단순화, 창구 단일화
- 서비스업: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조합 선택
  - 전통서비스업: 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
    - 경쟁제한적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음.
  - 여타 서비스업: 소비자 우선의 규제개혁 추진
    - 경쟁제한적 규제의 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강화

-41-

Korea's Leading Think Tank

감사합니다.

KDI

07

산업구조 및 산업 연관관계 개선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산업연구원

오영석 선임연구위원 외

산업구조 및 산업 연관관계 개선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오영석 외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근원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확충 혹은 고도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구조 측면에서도 성장잠재력의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제조업부터 느리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는 탈공업 현상이 1990년 이후 진행되어 오고 있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산업은 자본, 숙련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으로 제조업 수출잠재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관 측면에서도 투자, 수출 등 외생적 수요 확대가 전 경제 부문으로 고르게 파급되고 있지 않아 부문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구조, 연관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양태를 분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제약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연관구조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산업 구조·연관과 성장잠재력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일국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으로 이행한다'는 3부문 가설(three sector hypothesis)로 집약된다[1]. 이 가설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1인당 GDP가 상승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제조업의 생산 및 수요비중은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상승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하락하게 되고, 서비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특히, 제조업의 발전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경우 탈공업화의 여부는 성장, 고용의 양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비중 변화는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의 성숙화와 관련된 산업구조 변화의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험한 바 있는 고용측면 탈공업화의 양태는 성장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는가에 따라 성장잠재력에 갖는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이 서비스업에서 원활히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의 형태를 통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umol(1967)은 자원이 고생산성 부문인 제조업으로부터 저생산성부문인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경제성장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2] 반면,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자원이 재배분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다는 구조적 이득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Salter(1960)와 Kuznets(1979)는 기술진보 혹은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 산업부문간 자원배분이나 구조변화를 통한 경제

1) Clark(1940) 참조.

2) Baumol(1967)은 기술이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의 불균형성장(unbalanced economic growth)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는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즉, 혁신, 자본의 심화(capital deepening)[1], 규모의 경제가 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촉진하여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해 나가는 부문과 생산성 향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기술진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문이 그것이다. 임금의 증가가 부문별 기술진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의 상대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이 부문으로 재배분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비용-질병 효과(cost-disease effect)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성장의 메커니즘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 Grossman and Helpman(1991) 등으로 이어진다.

한편, 개방경제에서 한 국가의 국제분업구조는 산업 간 국제생산전문화 혹은 특화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양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2. 산업연관구조와 성장잠재력

산업연관구조의 양태도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간 연관도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여타 조건이 일정한 경우 소득이나 고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간 연관의 강화는 전산업에서 생산되는 중간 산출물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총산출량이 증가하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득과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 국가의 산업성과는 산업구조가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산업연관구조의 양태에 따라서 주어진 외생변수의 변화량이 그 국가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창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국의 산업간 연관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한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3]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산업간 연관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는 중간투입 절약적 기술진보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개방경제에서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산업연관도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작아질수록 산업간 연관도는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수출확대 등 외생수요의 증가 시 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분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대체 등을 통한 국내 연관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Francois and Reinert(1996)의 26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업간 중간거래의 밀도(density)는 일인당 소득이 약 12,000 달러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후 감소로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잠재력에의 함의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변화

(1) 부가가치 기준 구조변화

선진국들의 경우 전산업 명목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탈공업화가 장기 추세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 부가가치 기준의 탈공업화 현상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4] 즉, 전산업 명목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정점에 달한 후 횡보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구 분		명목부가가치 비중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2000	2011	2001-05	2006-11	2001-11
4대부문	1차산업	4.9	2.9	0.9	1.3	1.1
	제조업	28.3	31.2	5.9	6.8	6.5
	SOC	9.5	7.8	4.4	0.2	2.3
	서비스업	57.3	58.1	3.8	3.1	3.5
	전산업	100.0	100.0	4.3	3.9	4.2
기술수준산업	첨단기술제조업	0.8	0.8	5.6	4.0	5.3
	ICT제조업	5.5	5.0	15.1	13.2	14.7
	중고위기술제조업	8.0	10.2	6.4	7.9	7.4
	중저위기술제조업	7.8	11.1	5.5	3.3	4.2
	저위기술제조업	6.1	3.9	-1.1	0.9	0.0
	지식서비스업	17.1	19.4	6.3	3.3	4.7

자료 : 한국은행 기초데이타 이용.
주 : 1) 제조업내 구분은 OECD 분류 기술수준별 산업군. [첨단기술] 의약, 항공기; [ICT] 컴퓨터, 사무용기기,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중고위기술산업] 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수송기계; [중저위기술산업] 고무 ·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철강, 금속제품, 석유 · 석탄제품, 기타제조업; [저위기술산업] 음식료품, 담배, 섬유의복, 가죽, 목재 · 종이제품, 인쇄 · 복제
2) 지식서비스는, 금융·보험, 통신, 사업서비스, 교육의 합계이고, 나머지 서비스업은 일반서비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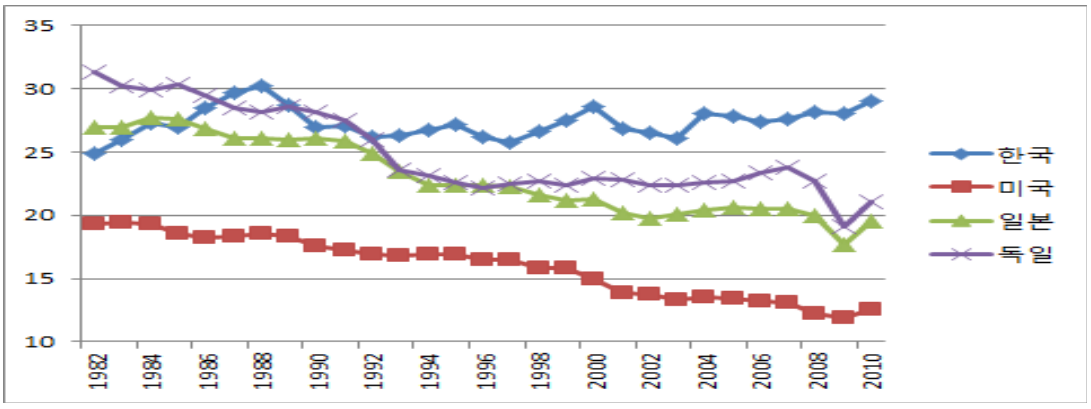
4) 실질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최근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즉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최근의 동일 시점에서 비교하면, 전산업 명목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다. 즉, 2010년에 제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9.1%로, 일본 19.5%, 독일 21.1%, 미국 12.5%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0년에 우리나라가 60.0%로, 일본 70.0%, 독일 71.0%, 미국 79.8%에 비해 월등히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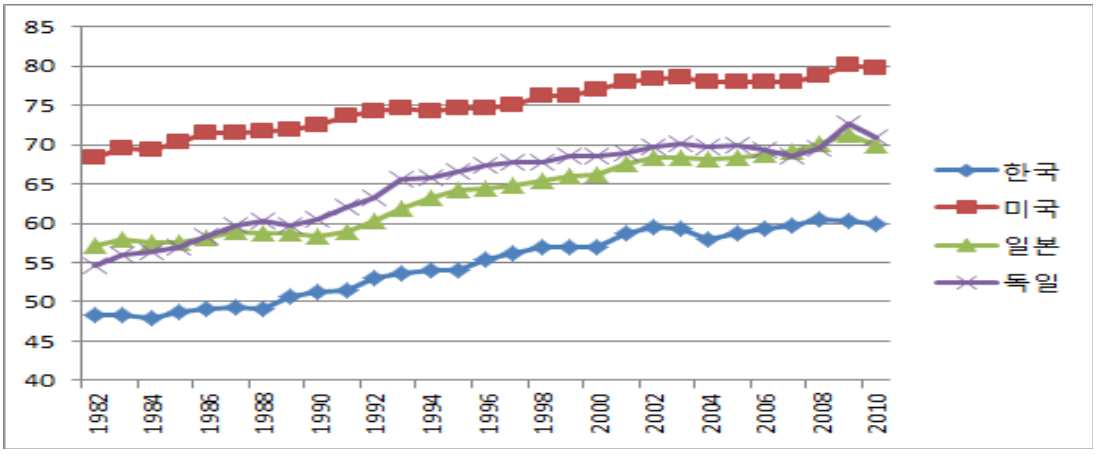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산업발전이 고도로 발전되어 온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수준을 배경으로 명목부가가치 기준의 탈공업화가 이미 상당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2000년대 들어 '제조업 비중 하락·서비스 비중 상승'의 탈공업화 현상이 사라지거나 둔화되어 오고 있다.

[그림 1]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의 국별 비교(명목 부가가치 기준, %)

〈 제조업 비중 〉



〈 서비스업 비중 〉



자료 : global insight.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연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경제발전단계 혹은 산업발전단계의 격차를 감안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은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시점에서 제조업 비중 및 서비스업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PPP기준)와 유사했던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강국인 일본 및 독일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2008년[5] 1인당 실질 GDP(PPP기준)와 유사했던 시기는 일본, 독일이 1990년, 미국이 1980년이었다. 이러한 1인당 실질GDP (PPP기준)가 유사했던 시점에서 전산업 명목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2008년에 27.9%, 일본과 독일은 1990년에 각각 26.1%, 28.1%였고, 미국은 1980년에 21.0%였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08년에 60.8%, 일본과 독일은 1990년에 각각 58.2%, 60.4%였고, 미국은 1980년에 66.7%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 우리나라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은 경제발전단계의 격차를 감안할 때 제조업 강국인 일본 및 독일과 유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PPP기준)와 유사했던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비교하면,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2010년[6] 1인당 실질 GDP(PPP기준)와 유사했던 시기는 일본이 1994년, 독일이 1995년, 미국이 1984년이었다. 이러한 1인당 실질GDP(PPP기준)가 유사했던 시점에서 전산업 명목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2010년에 29.1%, 일본은 1994년에 22.4%, 독일은 1995년에 22.6%, 미국은 1984년에 19.3%였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0년에 60.0%, 일본은 1994년에 63.2%, 독일은 1995년에 66.6%, 미국은 1984년에 69.3%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비중은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도의 기준과는 달리,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PPP기준)와 유사했던 시점에서 산업구조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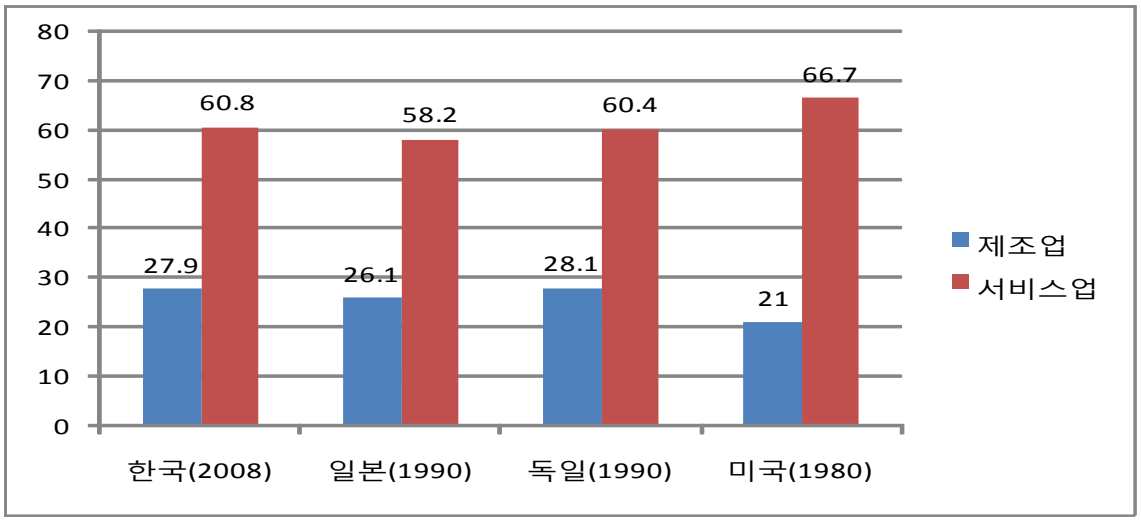
5) 산업구조의 비교가 가능한 최근 연도를 2009년이 아닌, 2008년으로 한 이유는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데이터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6) 산업구조의 비교가 가능한 최근 연도를 2009년이 아닌, 2008년으로 한 이유는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데이터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보다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과거 경험과는 달리 제조업 수출의 호조로 인해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을 유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1인당 GDP가 유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산업구조 비교
(우리나라의 2008년(금융위기 직전) 산업구조와 선진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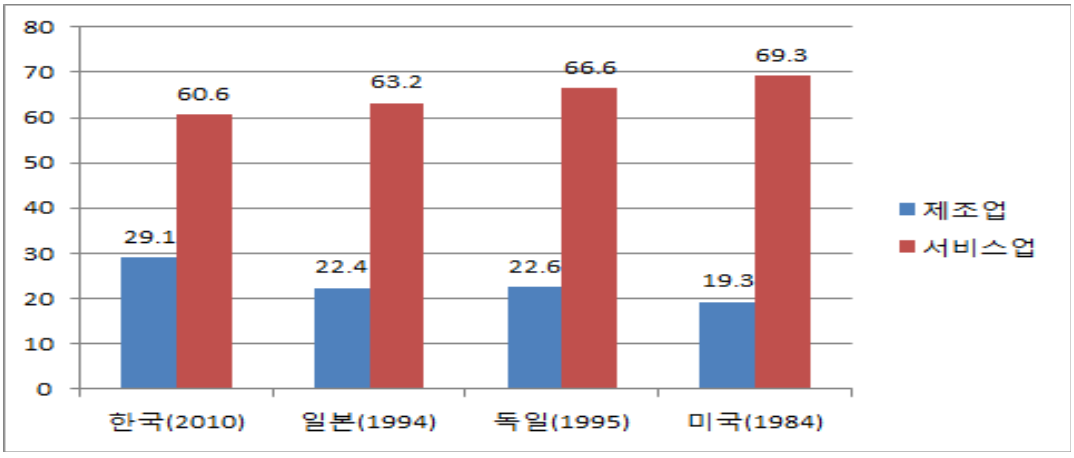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1인당 실질 GDP(PPP기준)의 국별비교는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0) 참조, 한국의 명목부가가치는 한국은행, 미국, 일본, 독일의 명목부가가치는 Global Insight 참조.
주: 전산업 명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3] 1인당 GDP가 유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산업구조 비교
(우리나라의 2010년(금융위기 직후) 산업구조와 선진국 비교)

(단위 : %)



자료: 1인당 실질 GDP(PPP기준)의 국별비교는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참조, 명목부가가치는 Global Insight 참조.
주: 전산업 명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고용측면 탈공업화

제조업의 고용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탈공업화는 1990년대에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크게 둔화되거나 사라졌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의 고용은 1990-2000년 기간에 62만명이 줄어들었으나 2000-2010년 기간에는 27만명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은 2000-2010년 기간에 37만명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자 수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이후에는 양 통계 기준 모두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났다. 서비스의 고용은 2000-2010년 기간에 경제활동기준으로는 약 340만명, 산업연관표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360만명이 늘어났다.

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고용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0-2010년 기간중 제조업의 고용은 연평균 1.1%, 서비스 고용은 3.1%, SOC는 2.4% 늘어나고, 1차산업은 3.3% 줄어들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중고위기술산업의 고용이 연평균 2.8%, 중저위기술산업 3.2%, ICT산업이 1.1% 늘어난 반면, 저위기술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은 각각 2.9%, 1.3% 줄어들었다. 서비스업내에서는 지식서비스의 고용이 연평균 5.0%씩 늘어나 일반서비스 2.5%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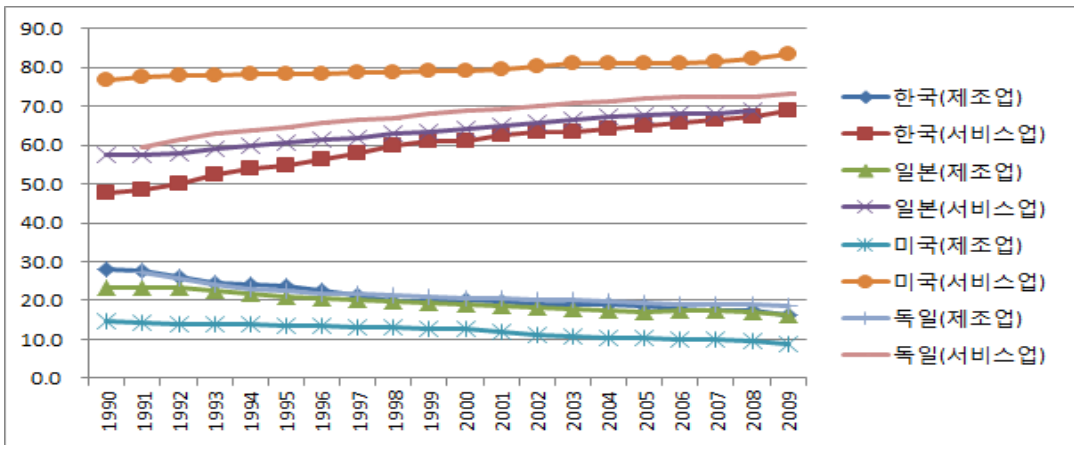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2000-'10	2000-'05	2005-'10
1차산업		2,248	1,847	1,600	-3.3	-3.8	-2.8
제조업	제조업계	3,195	3,236	3,567	1.1	0.3	2.0
	첨단기술	48	45	42	-1.3	-1.1	-1.4
	ICT	393	429	438	1.1	1.8	0.4
	중고위기술	885	1,018	1,168	2.8	2.8	2.8
	중저위기술	839	943	1,151	3.2	2.4	4.1
	저위기술	1,031	801	769	-2.9	-4.9	-0.8
SOC		1,321	1,645	1,671	2.4	4.5	0.3
서비스	서비스계	9,913	10,873	13,516	3.1	1.9	4.4
	지식서비스	2,462	3,026	4,000	5.0	4.2	5.7
	일반서비스	7,451	7,847	9,516	2.5	1.0	3.9
전산업		16,677	17,602	20,355	2.0	1.1	2.9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측면 탈공업화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즉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상승하는 현상을 경험해 오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은 우리 경제전체의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중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림 4] 전산업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서비스업 비중(%)



자료 : OECD Stan DB

(3)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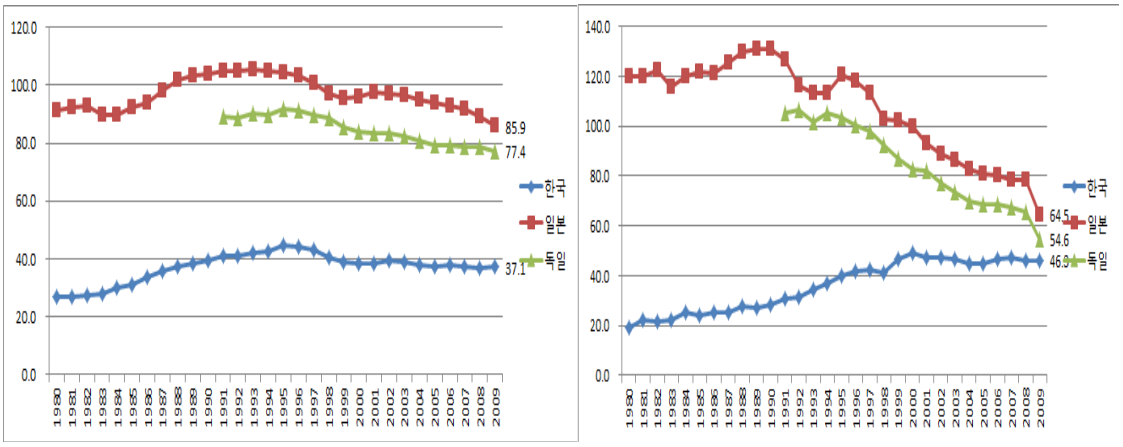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그동안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왔으나,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그동안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 왔고, 특히 일본, 독일과의 격차를 크게 좁혀 온 경향을 보였다(〈그림 5〉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한 상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면, 2009년에 일본과 독일이 각각 64.5(2008년 78.2), 54.6(2008년 65.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6.3(2008년 46.2)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에 일본, 독일과의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한 상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면, 2009년에 일본과 독일이 각각 85.9(2008년 89.5), 77.4(2008년 7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7.1(2008년 37.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더 크다.

[그림 5]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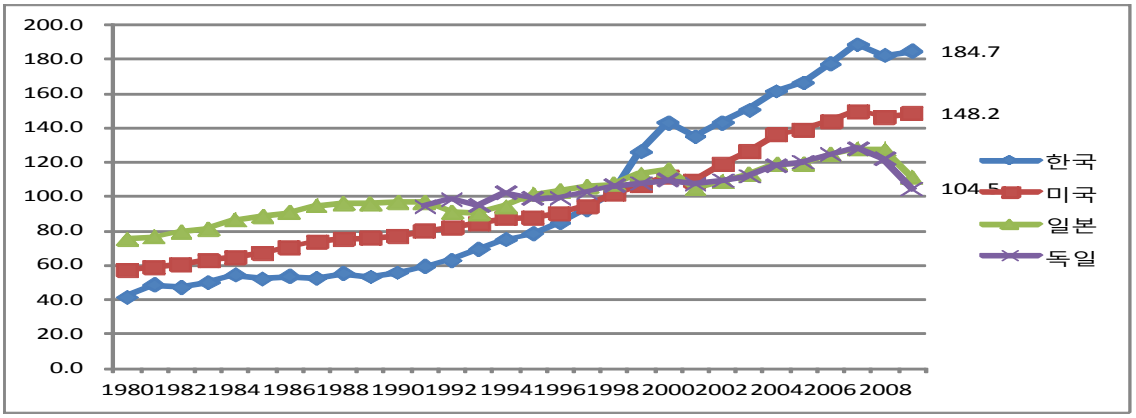
제조업(미국 노동생산성=100) 서비스업(미국 노동생산성=100)



자료 : 실질부가가치(2005년 달러 불변가격)는 Global Insight, 고용은 OECD Stan DB

[그림 6]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대 노동생산성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100일 때 제조업 노동생산성 수준)



자료 : 실질부가가치(2005년 달러 불변가격)는 Global Insight, 고용은 OECD Stan DB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하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추월한 이후 양자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미

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그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그 격차가 확대되어 온 공통적인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속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더 컸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우리나라에서 더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우리나라가 2009년에 184.7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148.2, 일본과 독일은 각각 111.2, 1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간 격차가 확대되어 온 이유는 제조업이 기술혁신이 빠르고 투자 친화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과 고용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흡수형 성장패턴을 갖는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낮은 상황에서 양자 간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선진국보다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향후에도 고용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전체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고용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생산성

(1) 구조적 부담가설

오완근(2009, 2011)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보몰효과가 성립하지 않으나 1980년대 이후 보몰효과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전기간(1970-2008)에 걸쳐 보몰효과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과 선진국에서 나타난 보몰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의 효과가 선진국의 효과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대 추세와 최근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동 산업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구조적 이득가설

부문간 자원배분이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Timmer, et al(2000)의 방식에 의거하여 전산업 노동생산성 총변동을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LPT-LP0=\sum(LPiT-LPi0)Si0 + \sum(SiT-Si0)LPi0 + \sum(SiT-Si0)(LPiT-LPi0)$$

여기서 LPT는 말기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LP0는 초기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LPiT는 산업i의 말기 노동생산성, LPi0는 산업i의 초기 노동생산성, SiT는 산업i의 말기 고용비중, Si0는 산업i의 초기 고용비중을 나타낸다. 보고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에서 전산업의 36개 중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위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우변의 첫 항은 산업내 생산성 효과를, 번째 항은 구조효과 중 정태적 효과를, 세 번째 항은 구조효과 중 동태적 효과를 의미한다.

〈표 3〉 전산업 노동생산성 총변동에 대한 기여도 분석
(구조적 이득가설 검증)

(단위 : %)

국가	기간	전체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전체산업 노동생산성 총변동에 대한 기여도			
			산업내 효과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총효과
한국	1992-2008	2.9	89.5	50.5	-40.0	100.0
	1992-2000	3.2	95.5	38.2	-33.7	100.0
	2000-2008	2.5	69.0	53.4	-22.4	100.0
미국	1992-2008	1.6	111.9	4.8	-16.7	100.0
	1992-2000	1.8	107.5	5.8	-13.4	100.0
	2000-2008	1.4	121.7	-3.0	-18.7	100.0
일본	1992-2008	0.8	79.7	37.8	-17.5	100.0
	1992-2000	0.9	82.1	31.0	-13.2	100.0
	2000-2008	0.7	65.7	49.1	-14.8	100.0
독일	1992-2008	0.9	75.0	74.6	-49.6	100.0
	1992-2000	1.0	69.4	90.4	-59.7	100.0
	2000-2008	0.8	67.4	38.4	-5.7	100.0

자료 : OECD Stan DB(고용), Global Insight(실질부가가치) 기초데이타 이용하여 산출.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공히 산업내 생산성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효과 중 정태적 효과는 우리나라와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이 정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구조적 이득가설이 성립했음을 나타낸다. 구조효과 중 동태적

효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모두 전기간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전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는 산업, 즉 제조업으로부터 느리게 상승하는 산업, 즉 서비스업으로 고용의 이동이 이루졌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보몰의 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국제분업을 통해 본 산업구조 고도화 위상

(1) 수출재의 질적 구조

수출단가는 수출재의 질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단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고, 개도국인 중국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을 가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의 수출단가를 제조업내 HS 6단위에서 산출하여 그 대소관계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는 수출단가는 수출재의 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인 독일, 개도국인 중국의 수출재의 질적 구조를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독일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품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HS 6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독일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의 수출단가보다 높은 품목의 비중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에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도국인 중국에 비해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HS 6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의 수출단가보다 높은 품목의 비중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에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단가가 중국에 비해 높은 품목의 비중이 수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66.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한편 수출단가의 대소관계를 산업별로 집계하여 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제조업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독일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품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개도국인 중국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품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독일, 중국의 수출단가 비교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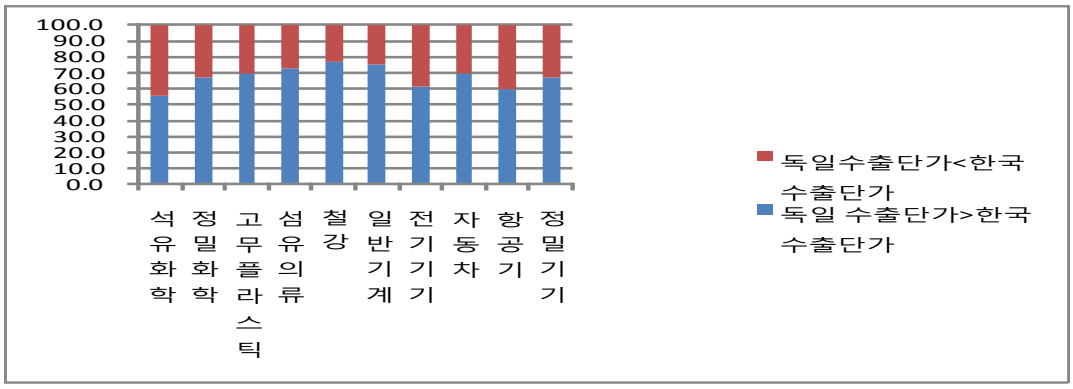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독일 수출단가> 한국 수출단가’ 비중	샘플 품목수	3,984	3,951	3,994	3,953	3,950	3,547	3,607	3,594
	품목 비중	60.8	64.7	65.4	70.8	61.6	63.8	64.7	64.6
	수출액 비중	46.9	57.4	65.5	75.8	68.4	75.9	72.7	67.5
‘중국 수출단가> 한국 수출단가’ 비중	대상품목수	4,019	4,026	4,047	4,355	4,076	3,622	3,660	3,602
	품목 비중	26.0	25.7	25.1	26.3	23.5	25.6	28.1	30.8
	수출액 비중	29.6	28.9	16.9	32.8	31.1	23.1	25.9	33.2

자료: UN Comtrade 기초데이타 이용하여 산출.
주: 1) 수출단가 = 수출액/중량
2) HS 6단위에서의 수출단가 비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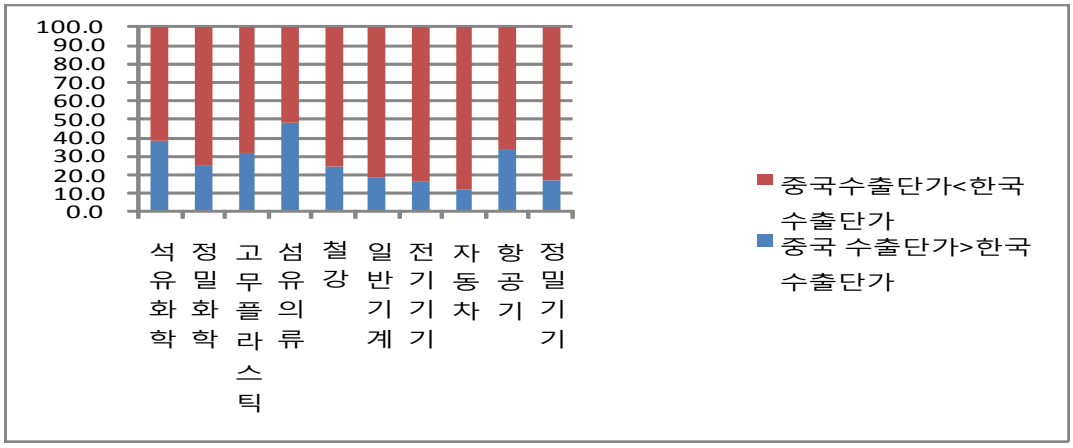
[그림 7] 세계시장에서 산업별 수출단가 비교

(한국 대 독일)

(단위 : %)



(한국 대 중국)



자료: UN Comtrade 기초데이타 이용하여 산출.
주: 1) 수출단가 = 수출액/중량
2) HS 6단위에서의 수출단가 비교임.

(2) 비교우위의 유형 : 가격경쟁력 v.s 기술경쟁력

1) 접근방법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교우위구조는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것인가 혹은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7]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든 상품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 유형1(기술면 비교우위 산업군): 수출단가 〉 수입단가 ⇒ 수출량 〉 수입량.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 유형2(생산비면 비교열위 산업군): 수출단가 〉 수입단가 ⇒ 수출량 〈 수입량.
- ▶ 유형3(생산비면 비교우위 산업군): 수출단가 〈 수입단가 ⇒ 수출량 〉 수입량.
- ▶ 유형4(기술면 비교열위 산업군): 수출단가 〈 수입단가 ⇒ 수출량 〈 수입량.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서 개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형 2와 유형 3은 가격경쟁력이 지배적인 가격탄력적 시장으로 수출입단가가 비용 혹은 가격요인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 표준화되어 제품이 동질적이고 완전경쟁구조를 지니는 산업군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유형1과 유형 4는 기술경쟁력이 지배적인 시장으로 가격비탄력적이고, 수출입 단가의 차이가 기술적 혹은 품질상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형1(기술면 비교우위 산업군)과 유형3(생산비면 비교우위 산업군)을 비교하면, 유형1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또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유리해져 무역의 이득 및 실질소득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고에서 4개의 유형은 SITC3단위에서 식별했고, 그 측정은 해당 유형의 무역수지 비중[8], 즉 해당 유형의 무역수지 합계

---

7) 이 접근방법의 구체적인 비교우위론적 관점의 이론적 논거와 적용사례는 심영섭·오영석(2001),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오영석,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패턴과 시사점", e-KIET산업경제정보, 2006.

8) 구체적으로 각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유형별 "무역수지 비중"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대세계 무역에서 유형별 무역수지비중 : [한국의 대세계 해당유형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한국의 대세계 제조업 평균무역]*100
- 일본의 대세계 무역에서 유형별 무역수지비중 : [일본의 대세계 해당유형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일본의 대세계

가 평균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하였다.

2) 분석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 교역에서 2000년대에 기술경쟁력보다는 주로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하여 무역흑자를 시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조립·가공산업이 주를 이루는 자동차, 화학 등 중고위기술산업과 ICT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9년에, 기술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제조업의 대(對)세계 평균무역(수출과 수입의 합을 2로 나눈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인 반면,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38.5%에 달했다. 그러나, 2010에는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수지 흑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즉 2010년에 기술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제조업의 대(對)세계 평균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0%인 반면,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42.5%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 화학, 정밀기기, ICT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서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지배적이었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은 얘기가 다르다.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은 세계 교역에서 가격경쟁력 보다는 주로 기술경쟁력에 기반하여 무역흑자를 시현해 오고 있다. 일본은 2011년에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제조업의 대세계 평균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0%인 반면,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36.4%에 달했다. 독일도 2009년에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5.9%,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34.1%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 독일과는 달리 기술경쟁력 보다는 가격경쟁력에 기반하여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비교우위창출과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실질소득(GDI)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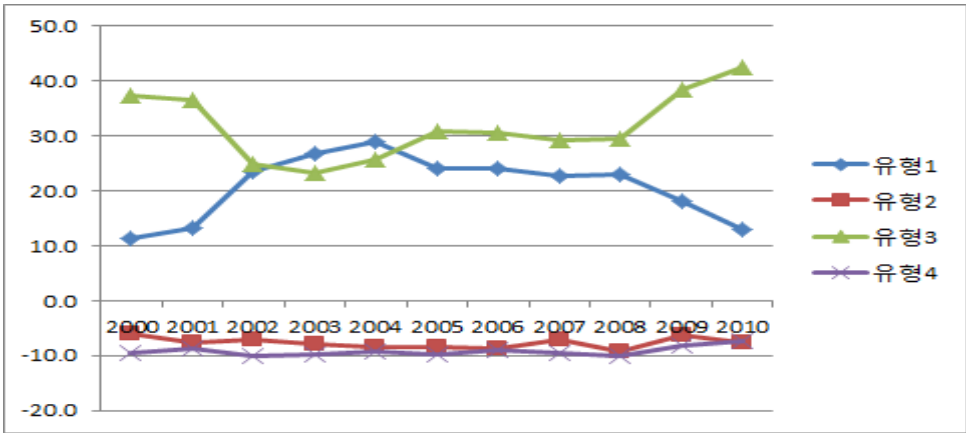
제조업 평균무역]*100

- 독일의 대세계 무역에서 유형별 무역수지비중 : [독일의 대세계 해당유형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독일의 대세계 제조업 평균무역]*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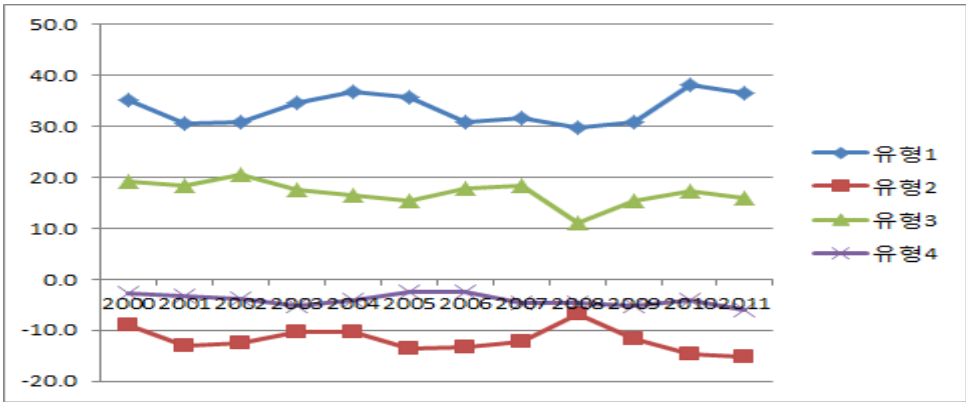
[그림 8] 한국과 일본, 독일의 제조업 비교우위 유형(무역수지 비중)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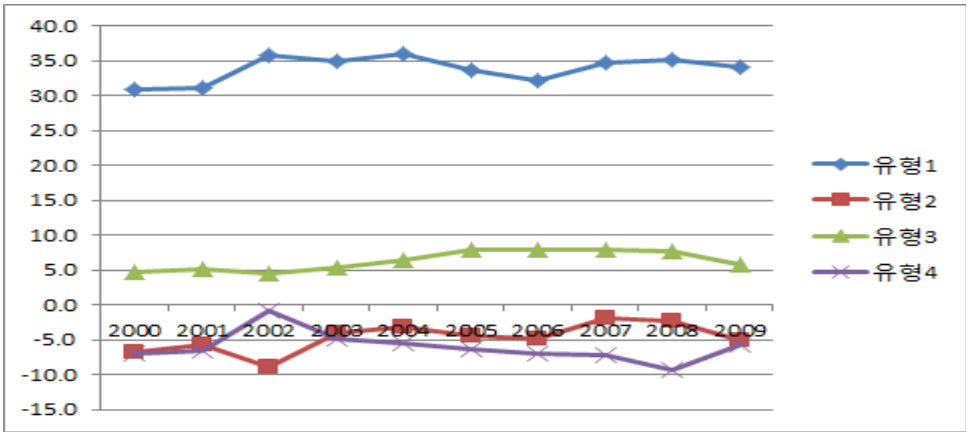
(단위 : %)



(일본)



(독일)



자료: UN Comtrade 기초데이타 이용하여 산출.

Ⅳ 산업 간 연관구조의 변화와 성장잠재력에의 함의

1. 중간재 투입구조

먼저 산업연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산업을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기타산업의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부문별 중간투입률과 서비스 투입계수, 그리고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간투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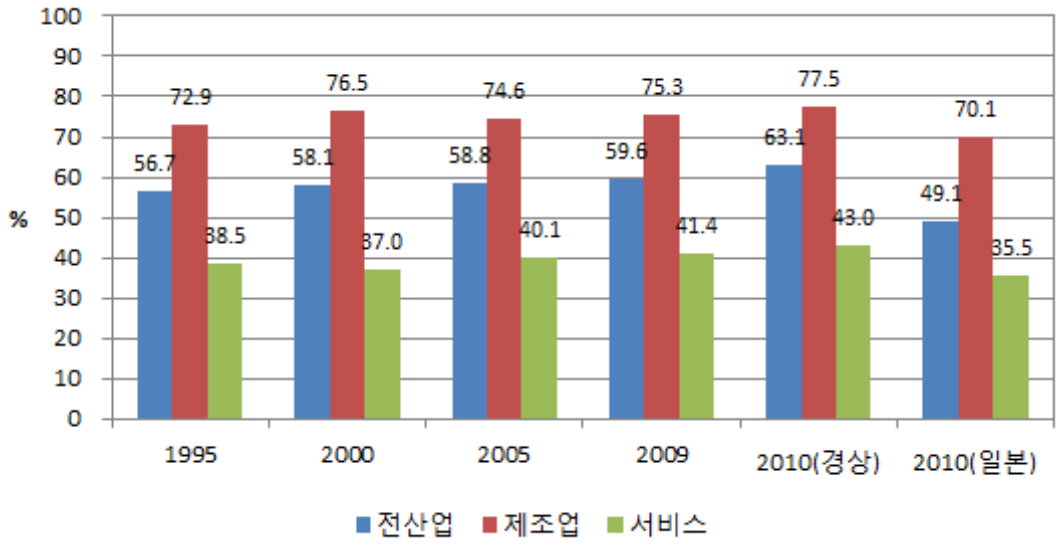
중간투입률은 각 산업에서의 생산 한 단위를 위해 여타산업의 생산물이 중간재로서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넓은 의미로서의 기술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먼저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산업 전체 평균으로 본 중간투입률은 63.1%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77.5%)이 서비스업(43.0%)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중간투입률의 변화를 보면, 먼저 산업 전체의 평균 중간투입률은 1995년 56.7%에서 2009년에는 59.6%로 상승함으로써 중간투입 증가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평균 중간투입률은 1995년 72.9%에서 2000년에는 76.5%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여 2009년에는 75.3%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조업 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중간투입 절약적인 방향으로 투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중간투입률을 보면, 1995년의 38.5%에서 2000년에 37.0%로 약간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41.4%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산업 평균적으로는 중간투입 증가적인 기술변화, 다시 말해 생산과정의 연장 또는 우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0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간투입률을 비교해보면, 전산업 평균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모두 일본이 한국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중간투입 절약적인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일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9] 부문별 중간투입률 변화



주: 1)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 기준
2)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2) 서비스 투입계수

다음으로 생산과정에 있어서 서비스화의 정도를 보기 위해 각 부문별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투입의 비율, 즉 서비스 투입계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경우 2010년 현재 전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0.168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0.106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0.239)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불변가격으로 보면, 전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1995년 0.143에서 거의 일관되게 상승하여 2009년에는 1995년 대비 22.4% 증가한 0.175를 기록하였다. 또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같은 기간 0.107에서 0.112로 4.7% 증가에 그쳤으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의 크기는 0.173에서 0.238로 0.173로 37.6%의 큰 폭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업 전체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의 서비스화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때 전산업 및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일본의 84.8%와 71.1%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일본보다 6.7%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부문간 중간재 투입계수 변화

To	From	2005년 불변가격							경상가격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일본)
전산업	제조업	0.324	0.320	0.331	0.335	0.341	0.337	0.336	0.365	0.219
	서비스	0.143	0.156	0.166	0.168	0.172	0.176	0.175	0.168	0.198
	기 타	0.100	0.106	0.091	0.089	0.085	0.085	0.084	0.098	0.074
	중간투입계	0.567	0.581	0.588	0.592	0.597	0.598	0.596	0.631	0.491
제조업	제조업	0.489	0.514	0.528	0.530	0.540	0.540	0.542	0.556	0.450
	서비스	0.107	0.103	0.108	0.107	0.106	0.109	0.112	0.106	0.149
	기 타	0.133	0.148	0.110	0.104	0.098	0.098	0.100	0.112	0.103
	중간투입계	0.729	0.765	0.746	0.741	0.745	0.747	0.753	0.775	0.701
서비스	제조업	0.133	0.109	0.110	0.112	0.113	0.110	0.114	0.123	0.083
	서비스	0.173	0.199	0.225	0.231	0.240	0.243	0.238	0.239	0.224
	기 타	0.078	0.062	0.066	0.066	0.065	0.065	0.063	0.068	0.048
	중간투입계	0.385	0.370	0.401	0.409	0.418	0.418	0.414	0.430	0.355
기타	제조업	0.296	0.295	0.309	0.311	0.314	0.310	0.305	0.320	0.224
	서비스	0.166	0.199	0.190	0.198	0.199	0.207	0.203	0.203	0.212
	기 타	0.068	0.099	0.100	0.101	0.098	0.101	0.099	0.136	0.118
	중간투입계	0.530	0.593	0.599	0.610	0.611	0.618	0.607	0.659	0.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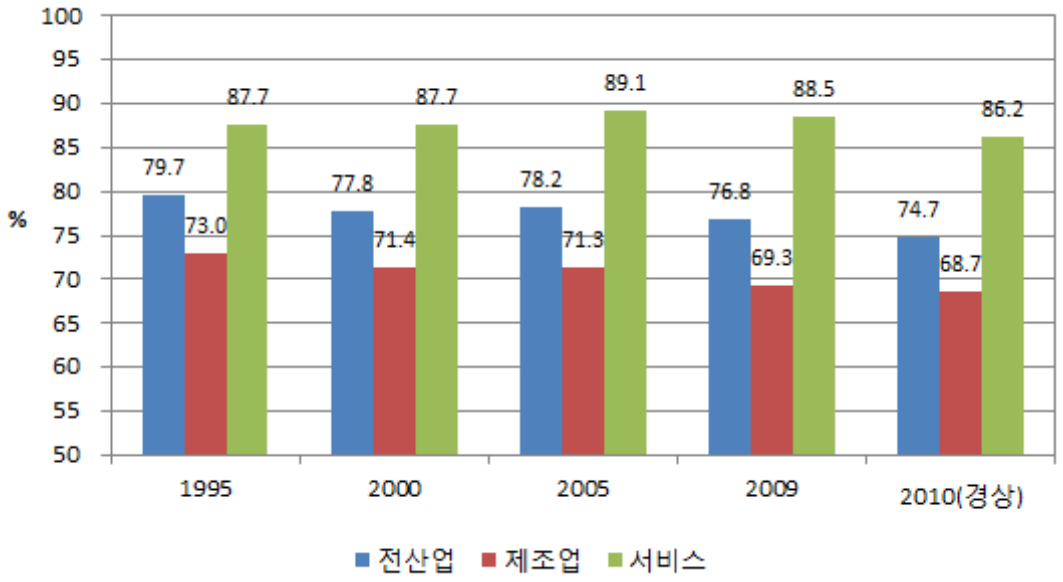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
日本經濟産業省, 「平成22年簡易延長産業連關表」.
주: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

(3)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

앞에서 살펴본 중간투입률은 국산중간재와 수입중간재를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중간재투입 중 국산중간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림 10〉은 부문별 중간투입재의 국산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산업 평균으로 본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은 2010년 기준 74.7%(제조업 68.7%, 서비스업 86.2%)로 나타나고 있다.

또 불변가격 기준으로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의 변화를 보면, 전산업,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의 중간재 국산화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뒤의 전산업연관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산업의 연관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10] 부문별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 변화



주: 1)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 기준.
2)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2.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1) 생산유발계수

중간재 투입계수가 산업간 직접적인 생산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생산유발계수는 산업간 연관을 통한 여타 산업과의 간접적인 생산의존관계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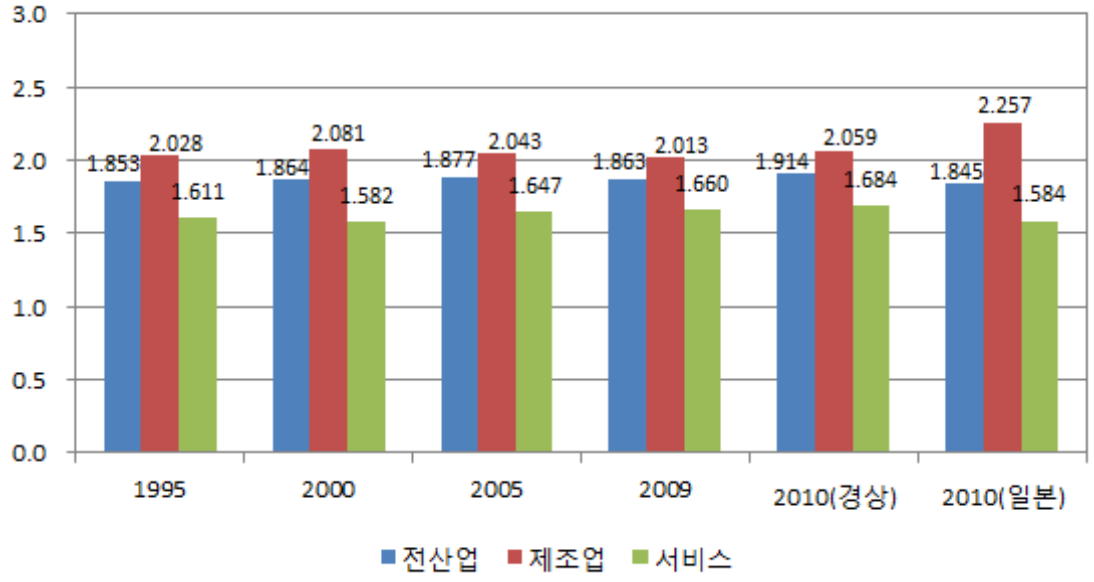
〈그림 11〉은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10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본 생산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 1.914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2.059)는 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1.684)보다 약 22.3%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생산유발효과의 절대크기 면에서 제조업이 서비스산업보다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생산유발계수의 변화를 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2000년 2.081을 기록한 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전체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까지는 상승하였으나 그 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한편, 일본과 비교하면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한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한국 제조업의 중간투입률이 일본 제조업의 중간투입률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유발계수의 절대 크기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한국 제조업에서의 중간재 국산화 비율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9)]

[그림 11]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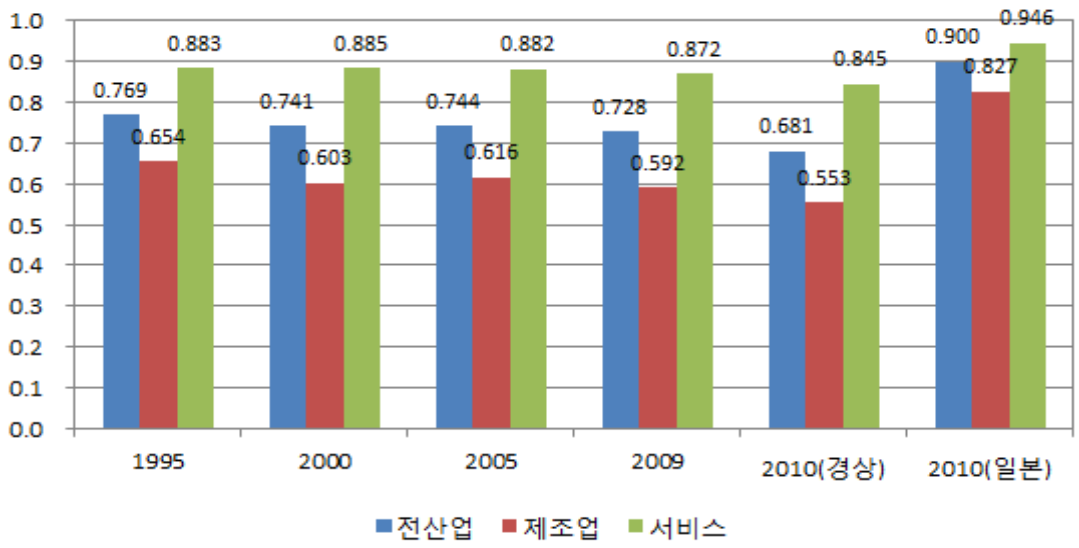
주: 1)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 기준.
2)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2)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전산업 평균 0.681(제조업 0.553, 서비스업 0.845)로 나타나고 있다. 불변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추이를 보면,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기간 전체로 볼 때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2010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비교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한국이 일본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OECD의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중간투입재 국산화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85.0%인 데 비해 한국은 71.3%에 머물고 있다.

[그림 12] 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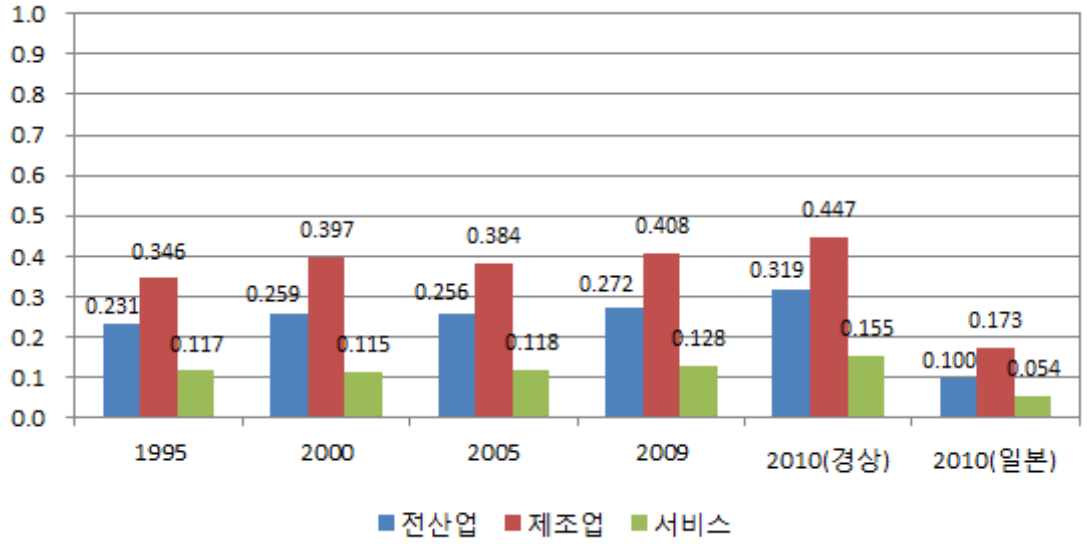
주: 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한편, 부문별 수입유발계수는 그 정의 상 '1-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이므로 부가가치유발계수와는 상반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 전체의 평균 수입유발계수는 2010년 기준 0.3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0.447)이 서비스업(0.155)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또 불변가격 기준으로 본 수입유발계수의 변화를 보면, 부가가치유발계수와는 반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취업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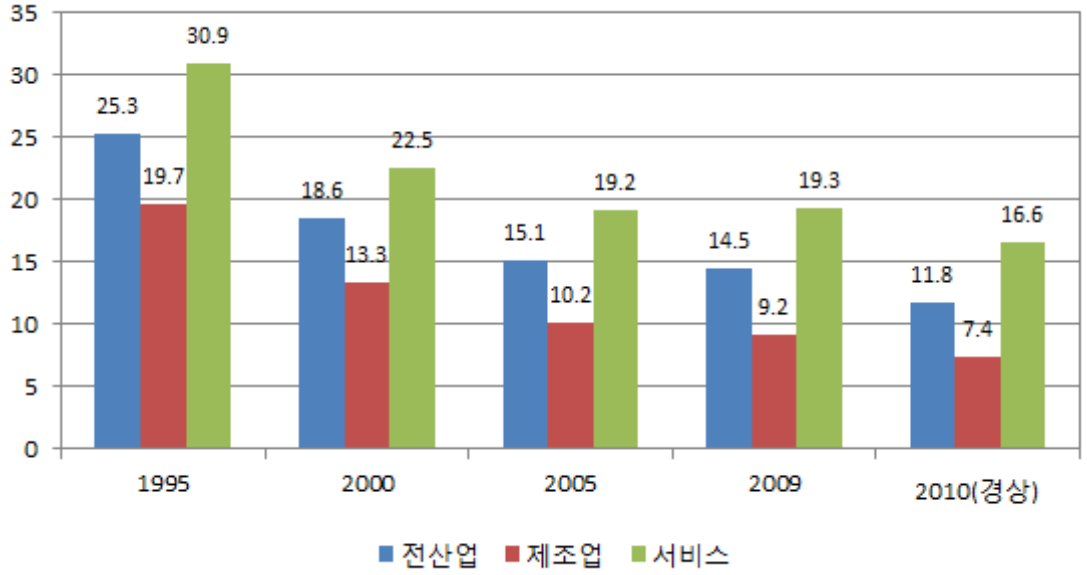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취업자 수 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는 2010년 기준으로 전산업 평균 11.8(제조업 7.4, 서비스업 11.6)로 나타나고 있다. 불변가격 기준으로 본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빠른 속도로 하락함으로써 산업전체적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락 폭은 특히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 약간의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그림 13] 부문별 수입유발계수 변화



주: 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 14]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주: 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명/10억 원).

3. 전산업연관도

(1) 전산업연관도의 개념

중간재 투입비율이나 생산유발계수 등의 지표들은 대부분 개별산업이나 부문 수준에서 여타산업들과의 연관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산업 전체로 본 총

체적인 산업간 연관도의 변화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산업 전체의 동시적인 상호연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지표로서 Kubo et al.(1986)이 영향력계수를 원용하여 고안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이용하기로 한다.

$$L = \sum_i \sum_j r_{ij} f_j - 1$$

여기서 L은 전산업연관도(Aggregate Linkage Measure)를 나타내며, r_{ij}는 투입역행렬의 제i행 제j열의 요소, f_j는 최종수요에 차지하는 j산업의 비중을 의미한다.

상기 식에서 우변의 제1항은 투입역행렬의 각 열의 합을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합계한 가중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투입역행렬의 각 열의 합계는 각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 산업의 산출량을 의미하므로, 우변의 제1항은 경제전체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산업전체에서의 산출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서 1을 차감한 전산업연관도 L은, 주어진 산업별 구성 하에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중간재 산출량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최종수요 구성이 일정한 경우에는 L의 크기는 투입산출 행렬의 밀도에 비례하며, L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간재 거래관계를 통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보다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다.

L을 전산업연관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전산업의 투입역행렬에 의존하며 또한 전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산업연관도는 특정시점에 있어서 모든 산업간 총체적인 의존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0)]

(2) 전산업연관도의 추이

〈표 6〉과 〈그림 15〉는 한국산업의 전산업연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산재와 수입재를 포함하는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전산업연관도(2005년 불변가격)는 1995년 1.411에서 일관되게 상승하여 2008년에는 1.596을 기록한 뒤 2009년에는 1.594로 다소 하락하였다. 따라서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기술적 연관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은 총체적인 연관의 정도가 거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 민경휘(1998), p.100 참조.

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일본의 전산업연관도를 보면, 2010년 기준 1.013으로 한국(1.80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전산업연관도가 일본의 그것보다 큰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투입률 외에도,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나아가서는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제조업에 비해 산업간 연관도가 낮은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늘어나고 또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에서도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산업 전체의 연관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1)]

한편,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전산업연관도가 국산재와 수입재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업간 기술적 연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산업연관도는 국내산업들만의 총체적인 생산파급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전산업연관도는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산업 간 총체적인 생산유발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향후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되면 산업 전체로 본 연관관계 또는 생산파급의 강도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표 6〉에서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전산업연관도(L1)과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전산업연관도(L2) 간의 차이는 생산 및 최종수요에 있어서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L1)-(L2)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산업간 총체적인 기술적 연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수입재(중간재+최종재)가 담당하는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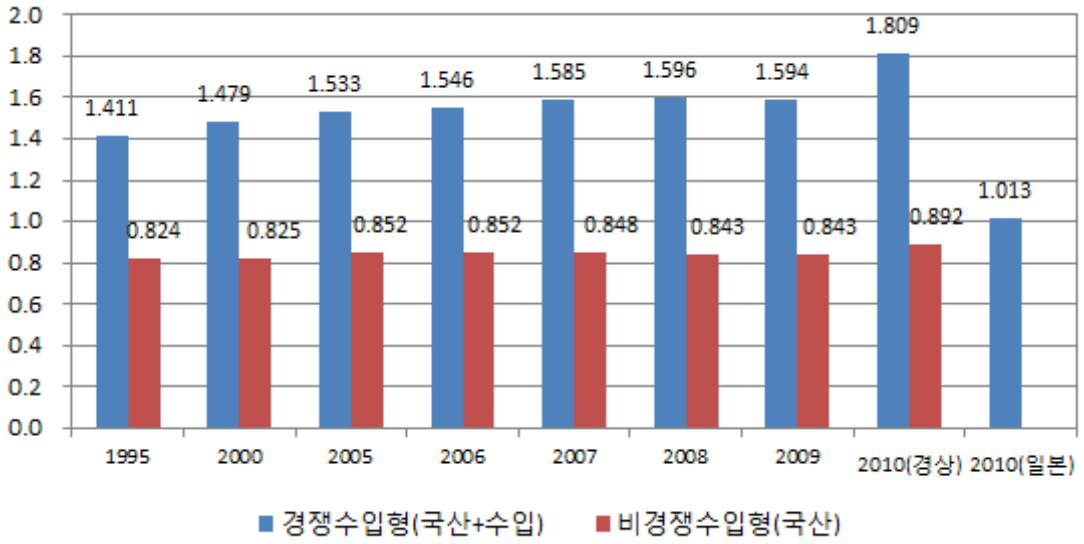
11)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2010년)을 계산해 보면 한국의 경우 41.8%로 제조품 비중(45.9%)와 비슷한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63.1%로 제조품 비중(26.4%)의 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전산업연관도의 변화

	2005년 불변가격							경상가격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일본)
경쟁수입형(국산+수입)(L1)	1.411	1.479	1.533	1.546	1.585	1.596	1.594	1.809	1.013
비경쟁수입형(국산)(L2)	0.824	0.825	0.852	0.852	0.848	0.843	0.843	0.892	
(L1)-(L2)	0.587	0.654	0.681	0.694	0.737	0.753	0.751	0.917	

자료: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
日本經濟産業省, 「平成22年簡易延長産業連關表」.

[그림 15] 전산업연관도의 변화



주: 1995~2009년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3) 전산업연관도의 국제비교[12)]

다음으로는 OECD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과 주요국의 전산업연관도의 크기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앞에서 정의한 전산업연관도는 투입역행렬과 함께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전산업연관도 외에도, 최종수요의 영향을 배제하고 생산기술의 연관도만을 보기 위해 상기의 전산업연관도 식을 조금 변형한 다음과 같은 지표도 생각해볼 수 있다.[13)]

12) 이건우(2011)에서 부분 발췌.

13) 민경휘(1993), p.70 참조.

$$LT = \frac{1}{n}\sum_{i}\sum_{j} r_{ij} - 1$$

이 지표는 모든 산업이 최종수요에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최종수요 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생산기술의 연관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표 7〉은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와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최종수요를 고려했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 주요국들의 전산업연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에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주요국의 전산업연관도 비교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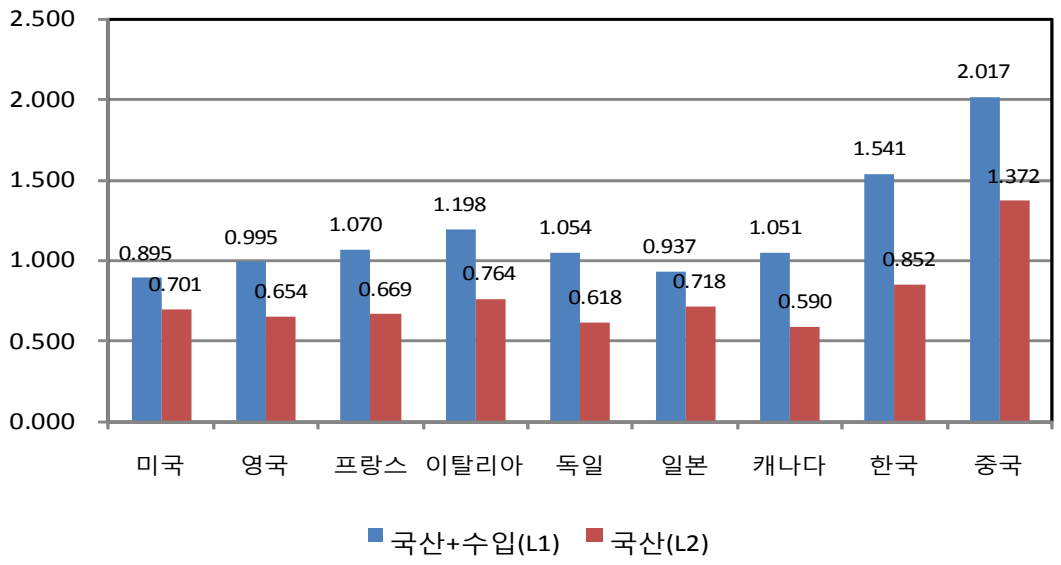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최종수요 고려(L1)	0.895	0.995	1.070	1.198	1.054	0.937	1.051	1.541	2.017
최종수요 비고려(LT1)	1.030	1.123	1.202	1.289	1.092	1.090	1.105	1.535	1.931
비경쟁수입형(국산)									
최종수요 고려(L2)	0.701	0.654	0.669	0.764	0.618	0.718	0.590	0.852	1.372
최종수요 비고려(LT2)	0.779	0.734	0.754	0.814	0.668	0.832	0.621	0.864	1.341
L1-LT1	-0.135	-0.128	-0.132	-0.091	-0.038	-0.153	-0.054	0.006	0.086
L2-LT2	-0.078	-0.080	-0.085	-0.050	-0.050	-0.114	-0.031	-0.012	0.031
LT1-LT2	0.251	0.389	0.448	0.475	0.424	0.258	0.484	0.671	0.590

자료: 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 : 2010 Edition, 2010. 6에 의거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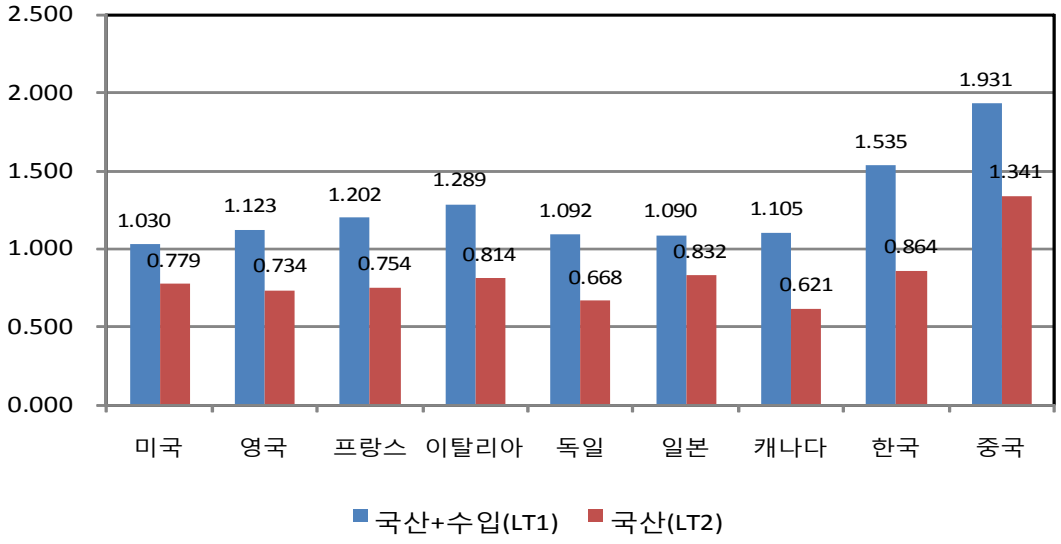
먼저,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산업연관도를 보면, 최종수요를 고려한 전산업연관도(L1)는 중국(2.017)이 가장 높고 한국(1.54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미국(0.895)은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여타 선진국들도 1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총체적인 생산파급의 강도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한국·중국보다 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산업연관도(LT1)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산업연관도를 보면, 최종수요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과 한국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앞의 경우와 같으나 가장 낮은 국가는 캐나다와 독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주요국의 전산업연관도 비교 (2005년, 최종수요 고려 시)



[그림 17] 주요국의 전산업연관도의 비교 (2005년, 최종수요 비고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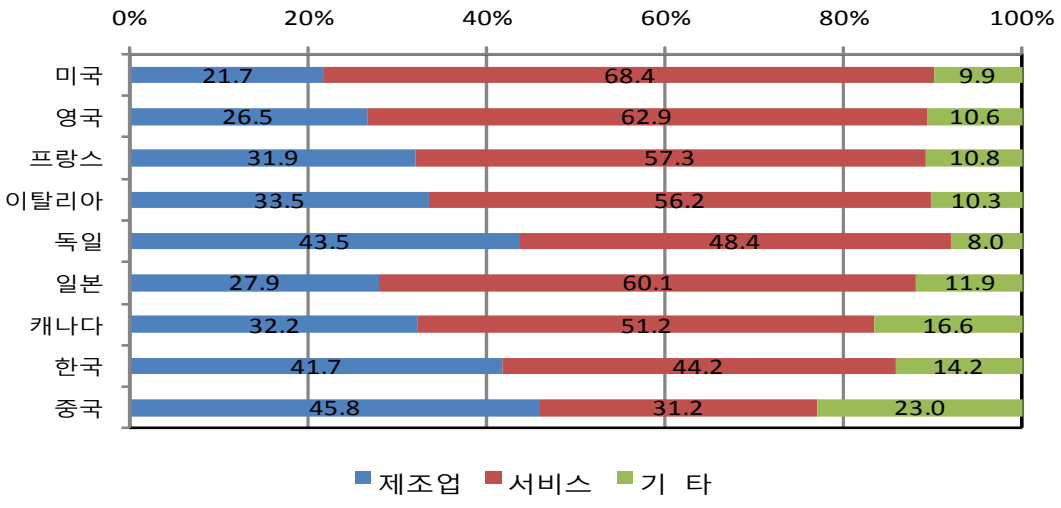
한편, L1와 LT1, 그리고 L2와 LT2 간의 차이는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이 전산업연관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L1-LT1의 경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비교대상 선진국들이, 그리고 L2-LT2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비교대상국들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최종수요 구성이 전산업연관도의 크기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화 진전으로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에 있어서도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전산업연관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최종수요(국산+수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을 보면, 미국(68.4%), 영

국(62.9%), 일본(60.1%) 등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중국(31.2%)과 한국(44.2%)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18〉 참조).

결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산업연관도가 중국이나 한국보다 낮은 것은,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서비스화 정도가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화 진전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작은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늘어나고 또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전체의 연관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 7〉에서 최종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LT1과 LT2의 차이는 생산기술의 연관도 제고를 위한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나타낸다. 수입중간재의 이러한 역할은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국내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입중간재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경우 국내산업간 연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8] 주요국별 최종수요(국산+수입)의 부문별 구성 (2005년)



Ⅴ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1.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정책과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내 부문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문 간 최적 자원배분을 유도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등 여타 부문에 생산성을 전파하는 지렛대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개방경제에서 교역재인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임금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고임금 창출은 일국내에서 노동집약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에 고임금·고생산성 형태로 전파될 수 있다. 생산성 전파의 지렛대로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구조 고도화와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향후 신규 노동인력과 고용측면 탈공업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은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의 관건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온 이유는 생산성의 원천인 기술과 인적자본을 비롯한 다수 요소들이 장기간 제조업 위주로 투자(배분)된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투자나 자원배분 측면에서 소외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서비스업은 이질성이 매우 크며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어 일률적인 제도, 정책, 이론 등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성장이 정체된 원인을 각 부문별로 분석·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변화의 내용이나 중요성은 비교적 잘 알려진 반면 서비스업에 필요한 기술변화(soft innovation)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제도, 조직화, 무형자산투자 등을 통해 서비스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요소 확보가 필요하다.[14]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은 대부분 기업 규모가 작고 시장 규모가 작은 내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규

14) Jorgenson and Timmer(2011) 참조.

모를 키우고 시장개방 또는 대외진출을 통해 과거 제조업 초기에 그러했듯 해외시장을 민간, 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 또한 한국 서비스업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처럼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창의성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크다.

둘째, 고용측면의 탈공업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경쟁에 거의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전략이 중요하다. 개방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의 경우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공급능력증대가 중요하다. 국제경쟁에의 노출이 작은 서비스 부문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그 자체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수반하는 고용의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과 복지의 연계의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의 고용창출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보다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적 차원의 교역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새로이 태동하는 신기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현재 주력 수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지식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기술산업, 핵심 부품소재 등 선진국과 비교열위에 있는 분야의 기술격차 축소를 통한 수입대체와 산업내 무역의 확대도 교역조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교역조건 개선의 촉진자로서 제조업 무역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무역의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의 양적 성장은 그 자체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을 의미하나, 무역의존도의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의 심화를 가져오는 한편 내수기반확대의 가치와 양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무역의 질적 성장은 기본적으로 산업적 차원에서 교역조건의 개선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수출재 가격/수입재 가격)의 개선은 무역을 개시하는 본질적 이유이자, 국가간 무역이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무역의 질적 성장 혹은 교역조건의 개선은 산업구조 고도화 대외적 지표인 반면, 양적 성장의 추구는 '기존 생산구조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하는 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단은 결국 비교우위 원천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기술집약적 분야 혹은 인적자본 집약재에서 점차 비교우위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및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과제는 앞의 생산성 범주에서 논의된 바 있다.

넷째,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의 강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의 질적 성장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산업군 보다는 기술경쟁력에 의존하는 산업군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은 장치산업과 같이 기술이 표준화된 동질재를 생산하는 분야와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적 제품차별화를 생산하는 분야가 존재한다. 기술적 제품차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교역조건의 개선이 중요하고, 동질재를 생산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유지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이 중요하다.

이는 세계 무역전략에서 하이텍에 대한 특화와 미드텍에 대한 특화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대선진국 수출확대 전략과 대개도국 수출시장 개척 전략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산업연관구조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산업간 연관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간투입 절약적 기술진보나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으로 인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경제가 성숙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는 지금보다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산업 전체로 본 연관관계 또는 생산파급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와 성장률 저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 전체 경제의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에는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포함될 수 있으나 기술기반의 확대 및 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성장동력의 상당부분은 당분간 계속하여 제조업에 기반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서비스산업에 비해 훨씬 클 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연관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또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중간재가 전체 산업(국산+수입)의 연관도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제조업의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절대크기 면에서 일본 제조업보다 작은 것은 우리 제조업의 높은 중간재 수입의존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입중간재의 국산대체가 진전될 경우 국내산업 간 연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 간 연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산업의 국산대체 및 경쟁력 제고에 우선적으로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창출되더라도 국내생산의 유발보다는 과도한 수입유발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의 해외 누수, 부가가치율 하락, 무역수지에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5)]

또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 노력과 병행하여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통한 제조업 간 연관의 제고에도 계속하여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연관의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물류, 금융, 통신, 각종 사업서비스 등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표준화, 품질인증, 제조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촉진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IT 융합의 촉진,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 등 제품·서비스 융합의 확산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보완관계의 증가는 제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지닌 저조한 생산성을 그대로 둔다면 제조업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15) 오영석 외(2009), pp. 174-175.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산업 자체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여타 산업부문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방송, 금융·보험, 각종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인허가, 자격제도 등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기능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R&D 지원, I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제조업 중심 R&D 지원방식을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산업 R&D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서비스분야에서의 IT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원규(2009), “우리나라의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의 추이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41호, 산업연구원.

민경휘(1993), 「한국산업의 연관구조 변화와 대일 비교: 중화학공업 육성기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93-08호, 산업연구원.

_____(1998),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구조 변화의 분석」, 연구보고서 제415호, 산업연구원.

신창식·조한상(2003),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구조 및 경쟁력 분석」, 한국은행.

이건우(2008), “서비스산업 연관구조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17호, 산업연구원.

_____(2009),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009년 1월호, 산업연구원.

_____(2009), “서비스화가 산업간 연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51호, 산업연구원.

_____(2011), 「한국산업의 연관구조 변화 분석: 서비스화가 산업간 연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Issue Paper, 산업연구원.

심영섭·오영석(2001),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오영석(2006),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패턴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오영석(2009),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분해 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43호, 산업연구원.

오영석·조윤애·이건우·김인철·성열용(2011),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오영석·김원규·김인철·민혁기(2009),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오영석·김인철·최희선·김진웅·김종호·노영진(2010),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확대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오영석·이진면·후지카와키요시(2006), 「개방경제하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오완근(2009),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Baumol 효과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제369호,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오완근(2011),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국가별 보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제454호,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한국은행(2011), 「1995-2000-2005-2006-2007-2008-2009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12),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Baumol, W.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 415-26.

Clark (1940),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Francois J. and K. Reinert(1996), “The Role of Services in the Structure of Production and Trade : Stylized Facts from a Cross-Country Analysis”, Asia-Pacific Economic Review, Vol.2(1).

Grossman, G. M. and E. Helpman (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MIT Press.

Jorgenson, D. and M. Timmer (2011), “Structural Change in Advanced NAtions: A New Set of Stylised Fact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3(1), 1-29.

Kubo, Y.(1985),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Interindustry Linkages and the Role of Imported Intermediate Inputs,” World Development, Vol.13, No.12.

Kubo, Y., et al.(1986),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Structure”, Chenery, H, S. Robinson, and M. Syrquin (eds.),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A Comparative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uznets, S. S. (1979), “Growth and Structural Shifts,” in W. Galenson ed.,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aiwan: The Postwar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15-131.

Salter, W. E. G. (1960), Productivity and Techn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mmer et al (2000), “Productivity growth in Asian manufacturing: the structural bonus hypothesis examined”,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日本經濟産業省(2012), 「平成22年簡易延長産業連關表」.

08

경제활동인구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 부연구위원

경제활동인구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김세움

□ 경제활동인구와 성장잠재력에 관한 선행연구

○ 맬서스 모형(The Malthusian Model)

- 기원 후 첫 1,800여 년간 전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09%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장기 인구 정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맬서스(Thomas Malthus)의 1798년 작 인구론(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제시됨

- 맬서스는 여건이 허락하면 폭발적인 번식이 가능한 인류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로서 가용자원, 특히 토지 공급의 제약을 들고 있음

- 예를 들어 가용 토지의 양에 비해 인구가 적을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나, 늘어난 인구로 인해 1인당 가용 토지가 줄어들어 원래의 생활수준 및 인구증가율로 돌아가게 됨

- 즉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는 일정한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의 1인당 소득을 나타내게 됨

- 따라서 맬서스 모형은 한 경제의 장기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도덕적 자제(“moral restraint”)에 의해 출산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측함

- 즉 국민들에게 도덕적 자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편 국가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인구는 줄어들고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지게 됨

- 물론 맬서스 모형의 예측이 지금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한된 토지의 양이 1인당 소득수준을 제약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임

- 더불어 모형의 중요 가정 중 하나인 1인당 소득수준 증가가 인구증가율을 높이는 관계가 주요 선진국에서 무너진 것도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된 원인이 됨

○ 솔로우 모형(The Solow Model)

- 1인당 가용 토지에 초점을 맞춘 맬서스의 설명과는 달리, 솔로우(1956)의 성장모형에서 인구증가율과 장기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자본희석(capital dilution), 즉 1인당 가용 자본의 감소에 초점을 맞춤

- 솔로우 모형의 기본 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dot{k} = s \cdot f(k) - (n+\delta) \cdot k$$

(k: 1인당 자본스톡 s: 저축률, f(k): 1인당 총생산함수, n: 인구증가율, δ : 감가상각률)

- 따라서 정상상태에서는 다음의 식이 성립해야 하고, 인구증가율 상승 시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스톡 및 소득수준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도출됨

$$s \cdot f(k^*) = (n+\delta) \cdot k^*$$

(k*: 정상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스톡)

- 실제로 1960년부터 2000년 사이 세계 각 국가의 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솔로우 모형은 이러한 사실을 자본희석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음

- 다만 솔로우 모형은 저축률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율 역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떤 요인 때문에 국가별로 인구증가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출산율 감소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 인구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사망률(mortality rate)과 출산율(fertility rate) 변천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

- 경제성장에 따라 사망률이 줄어드는 추세의 원인은 의식주 여건 개선,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나, 한국과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의 원인은 쉽게 찾아내기 힘듦

- 국가별 실제 출산율은 각 국가 여성의 희망출산율(desired fertility)과 거의 유사하며, 따라서 국가 간 출산율 차이는 여성의 희망출산율 달성 능력이 아닌 희망출산율 자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Pritchett, 1994)

- 이처럼 성장 단계에 따라 희망출산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사망률 감소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 한 가족이 초점을 맞추는 자녀의 수는 태어나는 숫자가 아닌 성년기까지 살아남는 자녀의 숫자이므로, 사망률 감소 시 동일한 숫자의 자녀가 성년기까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출산율을 낮출 수 있음

· 대체효과의 소득효과 압도: 자녀가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정상재이기는 하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시 부모의 양육 소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대체효과 역시 존재하여 소득효과를 압도할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게 됨. 더불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도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여성의 기회비용을 평균보다 더 크게 높임으로써 대체효과의 크기를 증대시킴(Galor and Weil, 1996)

· 자녀의 경제적 가치 감소: 경제성장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편익은 줄어드는 반면 양육비용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린 자녀가 농장 일 등을 도우면서 생산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진국에서는 교육연한 증가로 인해 거의 불가능함(Cain, 1997; Fuchs, 1984).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녀가 노년기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녀 출산 인센티브가 강하나,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발달로 자녀 출산 인센티브가 줄어듦

· 자녀의 질과 숫자 간 선택(quality-quantity trade-offs): 최소생존 필요수준을 넘어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비용 지출은 자녀의 질에 대한 부모의 투자로 간주할 수 있음. 즉 부모 자신의 행복도가 자녀의 행복도에 일정 부분 좌우되는 한, 자녀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 자녀의 행복을 추구할 유인이 있음. 경제성장에 따라 자녀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육투자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숫자를 늘리는 대신 적은 숫자의 자녀에 대한 1인당 투자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음(Galor and Weil, 2000)

○ 경제활동인구 증대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맬서스 모형과 솔로우 모형 모두 인구 수 혹은 증가율의 상승이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가짐

-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인구연령구조의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구학적 변천이 이미 완료되어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선진국의 경우, 비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재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인구학적 변천을 거치면서 낮아짐에 따라 피부양 유년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학적 선물(demographic gift)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임(Bloom and Williamson, 1998)

- 한국과 여러 선진국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년기 인구는 줄어들었으나 고령인구 증가가 더 급속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는 한 사회의 후생수준과 직결되는 1인당 GDP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 1인당 GDP"와 "인구 1인당 GDP"를 구분한 아래 식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음

$$\text{근로자1인당}\ GDP = \frac{GDP}{\text{총근로자수}}$$

$$\text{인구1인당}\ GDP = \frac{GDP}{\text{총인구수}}$$

$$\therefore \text{인구1인당}\ GDP = \text{근로자1인당}\ GDP \times \frac{\text{총근로자수}}{\text{총인구수}}$$

-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 구성이 전체 인구 중 근로자 비중이 낮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인구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지게 됨

- 더불어 위 식을 성장률 간의 관계로 변환하면 아래의 식이 도출됨

$$\begin{aligned}\text{인구1인당}\ GDP\text{성장률} &= \text{근로자1인당}\ GDP\text{성장률} \\ &\quad + \text{근로연령대인구비중증가율}\end{aligned}$$

-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근로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이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해소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해나갈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인적자본과 성장잠재력에 관한 선행연구

○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의의

- 동일한 양의 노동투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산출되는 생산량은 투입된 노동의 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의 질을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 칭함

- 인적자본은 근로자의 평균 건강수준과도 연관되나, 한국과 같이 선진국에 근접한 발전단계에서는 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훨씬 밀접하게 연관됨

○ 생산투입요소로서의 인적자본

-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한 국가의 장기 1인당 GDP 수준은 그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과 정비례하게 됨

$$Y = AK^{\alpha}(hL)^{1-\alpha}$$

(Y: GDP, A: 총요소생산성, K: 물적자본의 양, L: 근로자 수, h: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의 양)

$$\Rightarrow y^{ss} = h \times \left[A^{1/(1-\alpha)} \left(\frac{s}{n+\delta} \right)^{\alpha/(1-\alpha)} \right]$$

(yss: 정상상태에서의 1인당 GDP, s: 저축률, n: 인구증가율, δ : 감가상각률)

- 더불어 위의 인적자본을 반영한 총생산함수에 기반하여 인적자본의 국가별 차이가 1인당 GDP 수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국가별 생활수준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을 교육에 따른 인적자본 차이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Weil, 2005)

○ 기술진보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적자본

- 위의 총생산함수에서 인적자본 h는 직접적인 생산투입요소로서의 역할 외에도,

기술혁신 과정에 투입되어 총요소생산성 A를 높이는 역할도 더불어 수행함. 따라서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인적자본 수준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생산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술진보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 기술혁신생산함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인적자본의 양이 한 국가의 장기성장률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음(Romer, 1990)

$$\dot{A} = \delta H_A A \quad \text{(HA: R\&D에 투입된 인적자본, } \delta > 0\text{)}$$

$$\Rightarrow g = \frac{\dot{A}}{A} = \delta H_A \quad \text{(g: 장기 경제성장률)}$$

$$\Rightarrow g = \frac{\delta H - \rho \Lambda}{1 + \sigma \Lambda}$$

(H=HA+HY: 총 인적자본, HY: 생산과정에 투입된 인적자본, ρ , σ , Λ: Romer 모형 내의 파라미터)

○ 실증연구에서 드러난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 반면 국제비교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평균 교육연한 증가를 통한 인적자본 수준 증대가 해당 국가의 GDP 상승 혹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유의하게 야기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Benhabib and Spiegel, 1994; Bils and Klenow, 2000; Prichett, 2001)

- 그러나 최근 측정오차를 최소화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한 국제비교 실증연구 결과는, 평균 교육연한 증가를 통한 인적자본 수준 증대가 그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Cohen and Soto, 2007)

○ 과잉교육(overeducation)의 문제

- 다만 한 국가의 평균 교육연한 증가와 장기 성장잠재력 사이의 양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 즉 숙련편향기술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 등의 요인으로 고학력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평균 교육연한이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개별 근로자 수준에서 교육연한 증가에 따라 교육투자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 즉 한 경제 내에 과잉교육이 존재하여, 실제 노동시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비용(교육연한 증가에 따라 잃게 된 임금 형태의 기회비용 포함)에 비해 교육에 따른 편익(개인적 편익과 사회적 양의 외부효과 포함)이 더 작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Cohn and Ng, 2000; Dolton and Vignoles, 2000; Duncan and Hoffman, 1981; Freeman, 1976; Groot and Van den Brink, 2000; Hartog, 2000)

-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 우리보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구미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80%에 육박하는 대학진학률로 대변되는 대학 진학 최우선시 풍조가 만연해 있고, 실제로 과잉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김세움 외, 2010)

- 더불어 이러한 한국의 고학력화 현상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제고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안국 외, 2011)

□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 출산율 제고

- 주류경제학의 기본 성장모형인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인구증가율 상승이 근로자 1인당 자본희석을 야기하여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현재 한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연령구조 상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확연히 줄어듦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OECD 권고 수준인 GDP 대비 1%에 훨씬 미달하는 영유아 보육예산의 적극적인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인력관리 및 처우 대폭 개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강화 지원,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유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김용하 외, 2011; 류연규 외, 2011; 백선희, 2011; 서문희 외, 2011; 양인숙 · 문미경, 2011;이삼식 · 이지혜, 2011)

- 다만 지방재정자립도가 평균 50% 남짓으로 낮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보육예산 증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애로를 겪는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재원구조 개

선을 통해 지방재정자립도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박종서 외, 2011). 더불어 단기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예를 들어 백선희(2011)가 제안한 국고-지방비 분담률의 조정)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음

-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중요한 정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후 보육예산 증액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증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임(예를 들어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집행을 통해 장기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설령 재원조달을 위해 세율이 높아지더라도 국민들의 미래 세후 가처분소득이 더 높아질 것임을 제시)

○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 제고

- 출산율 제고가 장기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경제활동인구 증대 대책이긴 하나, 단기적으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여성 및 고령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활동인구 증대 대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 및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기대수명 등을 고려할 때,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임(금재호·윤자영, 2010; 손유미 · 김찬훈, 2010)

- 여성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직 중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상의 애로 및 재취업 시 겪는 커다란 임금손실인 것으로 보이는데(김주영·우석진, 2009; 김종숙 · 이택면, 2011),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유도, 근로시간 및 형태 유연화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일 것임(김종숙 · 이택면, 2011; 김정호, 2010; 류연규 외, 2011; 백선희, 2011; 서문희 외, 2011; 양인숙 · 문미경, 2011; 이삼식 · 이지혜, 2011)

- 설령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숙련 수준에 맞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 확충 및 개선, 재취업 알선기능 강화 등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김종숙 · 이택면, 2011; 박성정 외, 2011)

- 한편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의 경우, 늘어난 평균수명과 발맞춰 중장기적으로 주된 직장에서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함

-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소위 좋은 일자리의 숫자가 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경우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좀 더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즉 청년 구직자들이 공공부문 및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 소위 세대 간 일자리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후에야 전면적인 법정 정년연장 추진이 가능한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따라서 전면적인 정년연장이 얼마나 빨리 추진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유도 노력 등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전면적인 정년연장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퇴직 근로자가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하지 않고 되도록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수적임(손유미 · 김찬훈, 2010)

○ 외국인력 활용 효율화

- 물론 “경제활동인구”의 정의 상 외국 인력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국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내국인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및 3D업종 기피현상 심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외국인력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이규용 외(2011)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미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기업 재무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더불어 이삼식 외(2011)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입된 외국 인력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사회문화적 충돌 가능성 등 때문에 외국인력 유입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 적어도 향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및 내국인 근로자의 3D업종 기피현상 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임

- 물론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난 후에는 외국인력 도입 시 저숙련 근로자의 유입은 최소화하고 대신 국내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숙련 인력의 선별적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가야할 것임(이삼식 외, 2011; 최경수, 2010)

□ 실질적인 인적자본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 등 지표상으로는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 최고 수준의 모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활용은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즉 4년제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대졸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으며, 이 경우 대졸학력 획득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비해 교육투자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김세움 외, 2010)

-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공공부문 및 일부 대기업·금융회사 등에서 특성화고 출신 고졸자 채용이 크게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대학진학률 하락 및 특성화고 진학률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추세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른 감이 있음

- Romer(1990)의 모형에서처럼 인적자본을 일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적자본과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과정에 투입되는 인적자본으로 구분할 경우, 특별히 대졸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생산과정의 경우 소위 좋은 일자리에도

고졸자가 취업하여 일하고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받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각 개별요인 개선방안의 복합적인 기대효과

○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의 복합적인 기대효과

- 적극적인 영유아 보육예산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인력관리 및 처우 대폭 개선, 출산·육아휴직제도 실효성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은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증대를 통해서도 경제활동인구 제고 효과를 기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은 조기 인적자본투자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경제정책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Cunha et al., 2010)

○ 고졸자 채용 확대 정책의 복합적인 기대효과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고졸자 채용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려를 통해,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인적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더불어 조기 사회진출 장려를 통해 결혼연령 하향화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김용하 외, 2011)

- 한편 명문대학 진학 성패 여부가 개인의 성공 여부를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는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파생적 문제라 볼 수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 생애 근로기간 중 장시간 근로 선호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음

참 고 문 헌

금재호 · 윤자영, 2010,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김진영·조영준, 2010,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신행, 1995, 『경제성장론』, 경문사.

김안국 · 임언 · 최지희 · 유한구 · 김기헌, 2011,『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용하 · 이삼식 · 배다영 · 최효진 · 이지혜 · 김태홍 · 서문희 · 이규용 · 이미화 · 이석 · 이진면 · 장지연 · 정기선 · 황수경, 2011,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호, 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적자본 형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종숙 · 이택면, 2011, 『경력단절의 임금손실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주영·우석진, 2009,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류연규·김영미·정익중, 2011,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 · 아동 · 가족복지정책」, 허재준 외,『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 99-152.

박성정 · 최윤정 · 전혜숙, 201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종서 · 김유경 · 이지혜 · 김한나 · 박희숙, 2011,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유미 · 김찬훈, 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문희 · 이윤진 · 유해미 · 송신영 · 김세현, 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인숙 · 문미경, 2011,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규용·이승렬·박성재·노용진, 20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삼식 · 이지혜, 2011,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 전영준 · 신화연 · 최효진, 2011, 『저출산 · 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경수, 2010, 『이민 및 외국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Benhabib, J., and M. M. Spiegel, 1994,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2), pp. 143-173.

Bils, M., and P. Klenow, 2000, "Does Schooling Caus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pp. 1160-1183.

Bloom, David, and Jeffrey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 pp. 419-455.

Cain, Mead, 1977, "The Economic Activities of Children in a Village in Banglades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 pp. 201-227.

Cohen, Daniel, and Marcelo Soto, 2007, "Growth and Human Capital: Good Data, Good Result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pp. 51-76.

Cohn, Elchanan, and Ying Chu Ng, 2000, "Incidence and Wage Effects of Overschooling and Underschooling in Hong Ko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 pp. 159-168.

Cunha, Flavio, James J. Heckman, and Susanne M. Schennach, 2010,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Econometrica, 78(3), pp. 883-931.

Dolton, Peter, and Anna Vignoles, 2000, "The Incidence and Effects of Overeducation in the U.K. Graduate Labour Marke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 pp. 179-198.

Duncan, G. J., and S. D. Hoffman, 1981, "The Incidence and Wage Effects of Over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1), pp. 75-86.

Freeman, R. B., 1976, The Overeducated American, New York: Academic Press.

Fuchs, Rachel, 1984, Abandoned Children, Foundlings, and Child Welfar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Galor, Oded, and David N. Weil, 1996, "The Gender Gap, Fer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6, pp. 374-387.

_____, 2000, "Population, Technology, and Growth: From Malthusian Stagnation to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Beyond," American Economic Review 90, pp. 806-828.

Groot, Wim, and Henriette Maassen van den Brink, 2000, "Over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A Meta-Analysi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 pp. 149-158.

Hartog, Joop, 2000, "Over-education and Earnings: Where are We, Where should We Go?"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 pp. 131-147.

Malthus, Thomas R.,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Printed for J. Johnson in St. Paul's Church-Yard.

Pritchett, Lant, 1994, "Desired Fertility and the Impact of Population Polic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 pp. 1-55.

_____, 2001, "Where Has All the Education Gon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5(3), pp. 367-391.

Romer, P.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 S71-S102.

Solow, Robert.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1, pp. 592-609.

Weil, David N., 2005, Economic Growth, Addison-Wesley.

09

과학기술부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 연구위원

과학기술부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이우성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배경

- 성장잠재력 저하와 산업구조변화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사회 현안에 대비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재정비와 혁신정책의 수립이 필요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는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시기를 넘어서 기술혁신과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나 기술혁신의 관점에서의 성장전략과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의 수립이 미흡함

- 우리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 동안 이루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적 환경과 기업조직체계, 사회적 문화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요소투입형 경제에 적합하게 진화

-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이에 따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술혁신의 특성과 잠재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성장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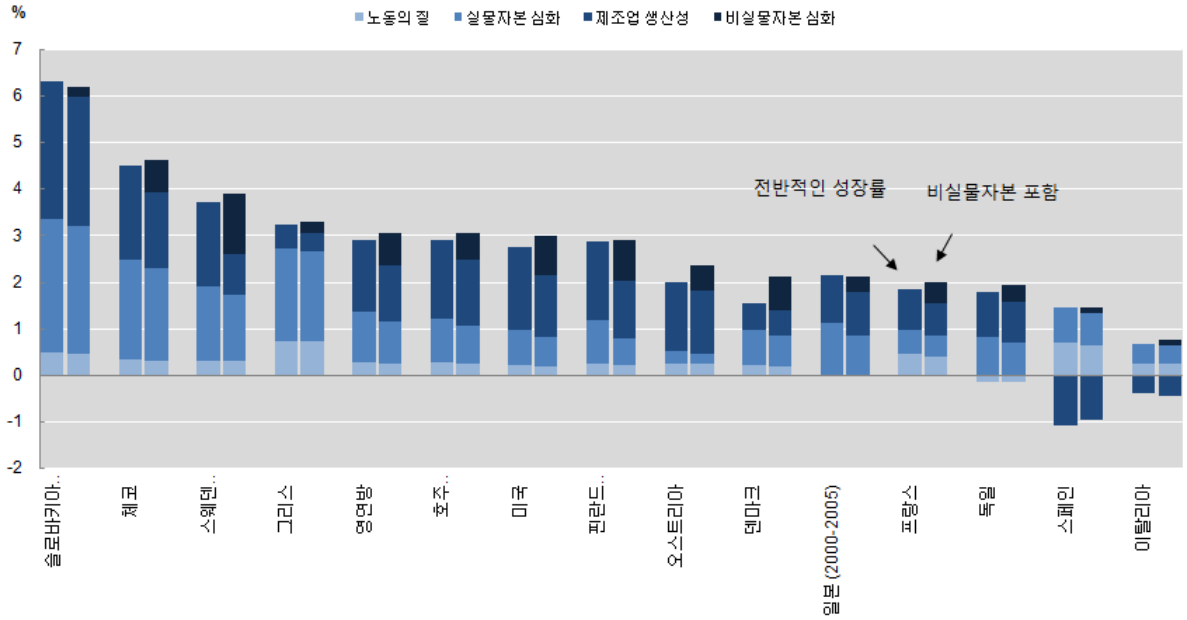
- 본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고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비롯한 과학기술 시스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성장전략과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의 트렌드

1. 글로벌 혁신 트렌드

ㅇ OECD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성장은 최근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대와 지식자산의 심화에 의한 성장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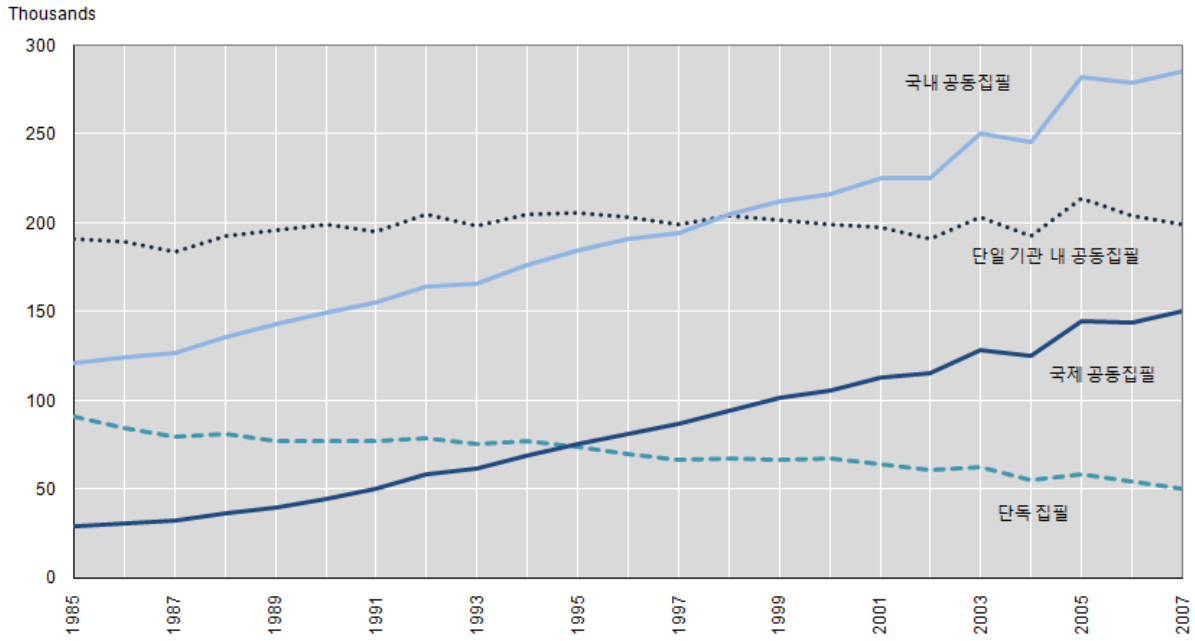
〈표 1〉 노동생산성 성장 1995-2006



출처: OECD, based on research paper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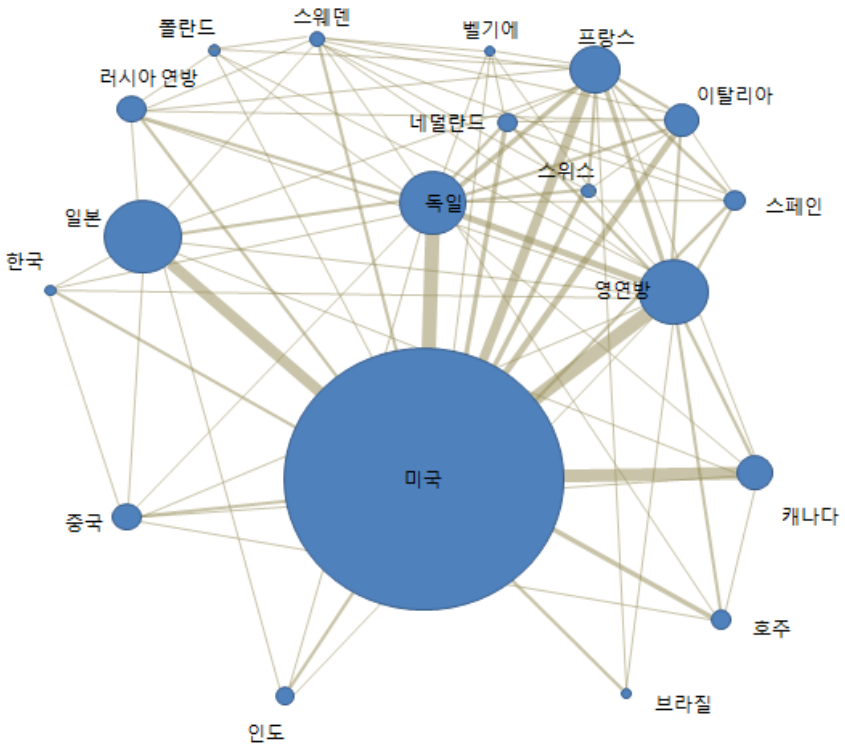
ㅇ 이러한 지식자본의 성장기여도 확산은 과학기술과 혁신의 글로벌 협력확대에 기반하며 최근 10년간 선진국가를 비롯한 주요 개발도상국가들의 과학적 역량확대와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활동이 산학연 모두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과학 논문의 협력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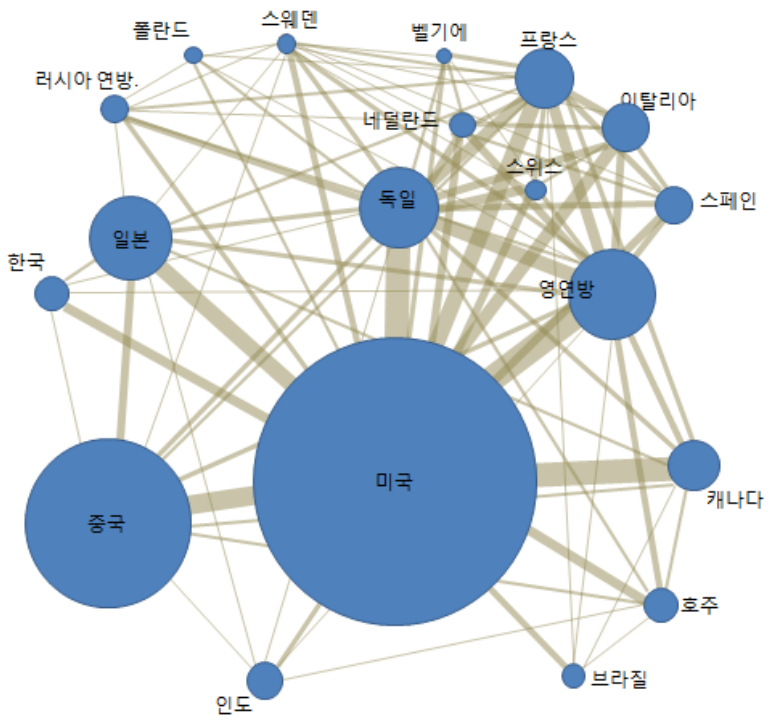
출처: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9 – OECD © 2009 – ISBN 9789264063716

[그림 2] 과학 분야 논문 공동집필 출판(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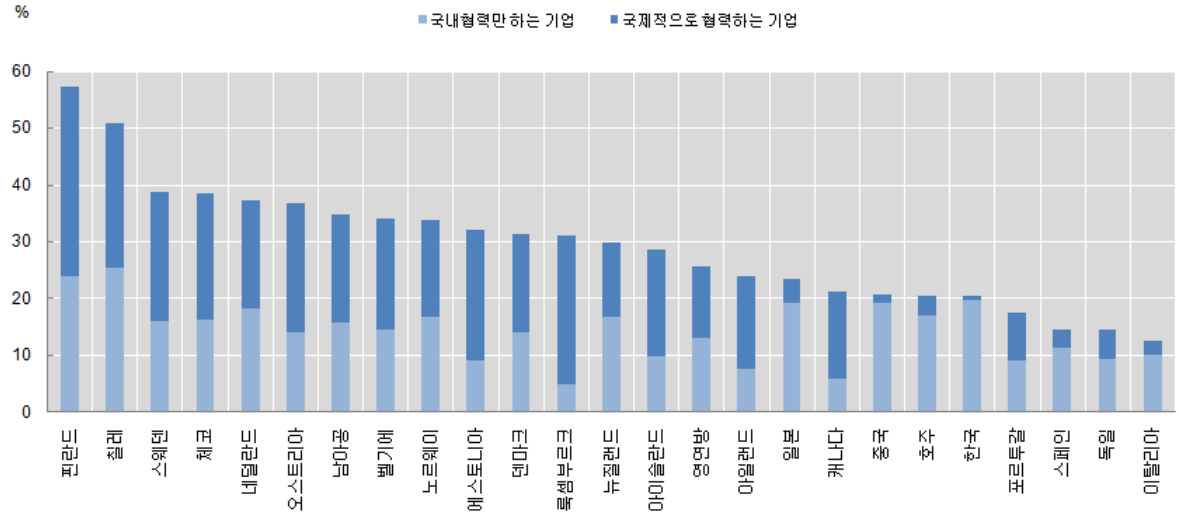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December 2009.

[그림 3] 과학 분야 논문 공동집필 출판(2008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Decemb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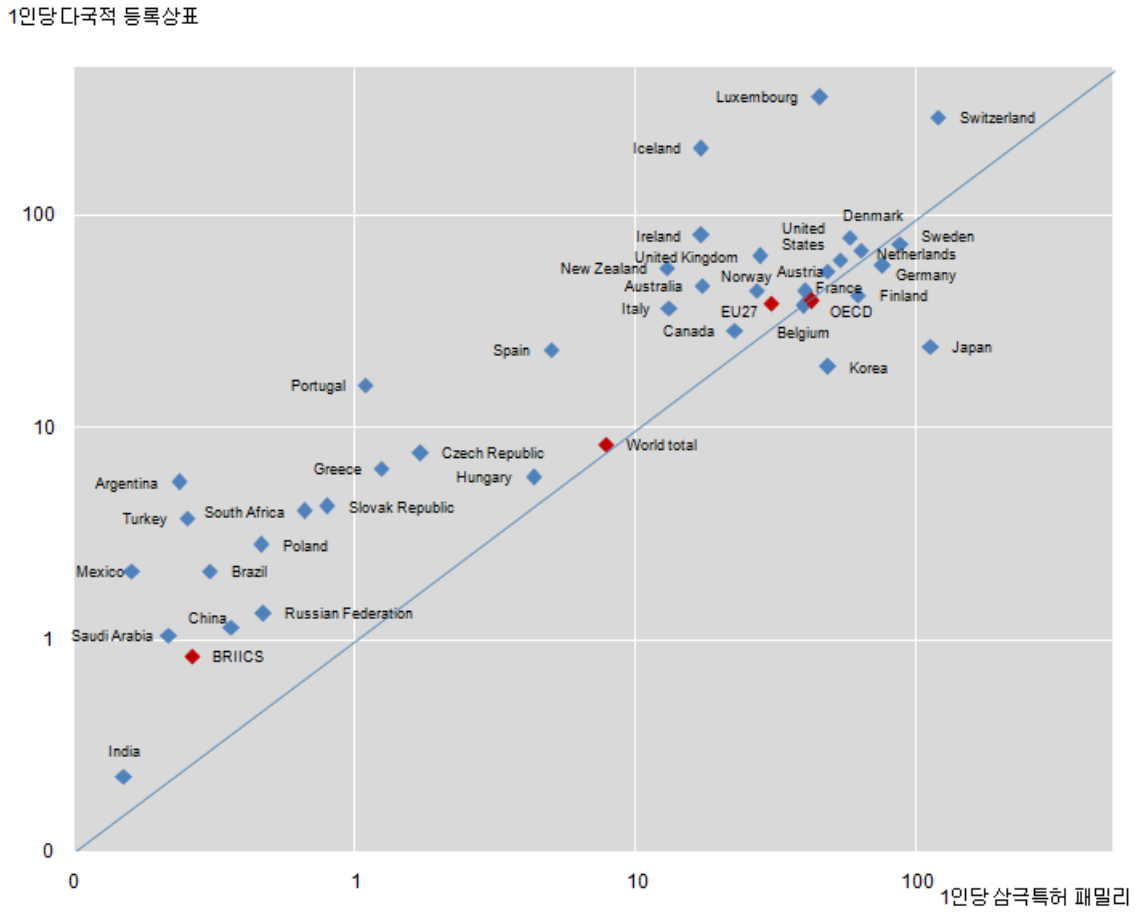
[그림 4] 혁신을 위한 국내/국제 협력 기업



출처: OECD, Innovation microdata project based on CIS-2006, June 2009 and national data sources.

o 지식자본의 성장기여도 확산은 지식시장(Knowledge Market)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R&D와 더불어 비기술적혁신,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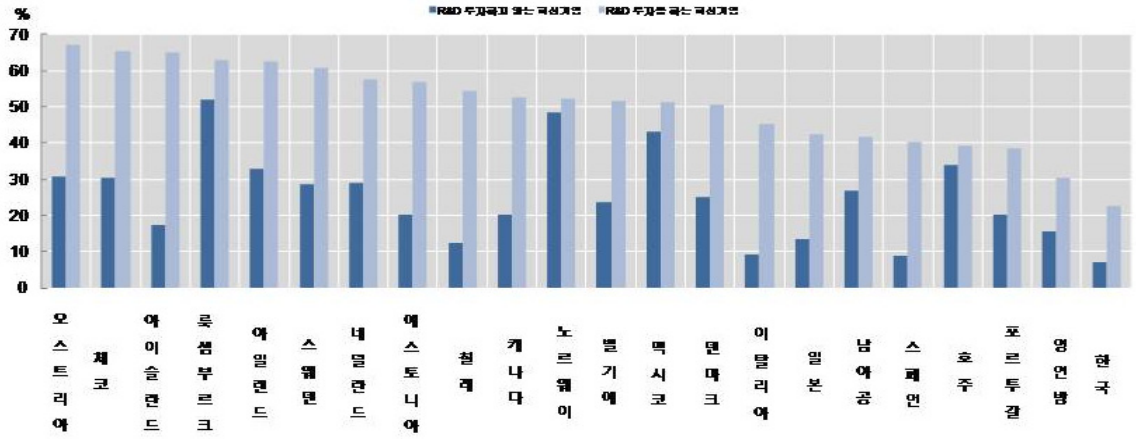
[그림 5] 국민 1인당 특허 및 등록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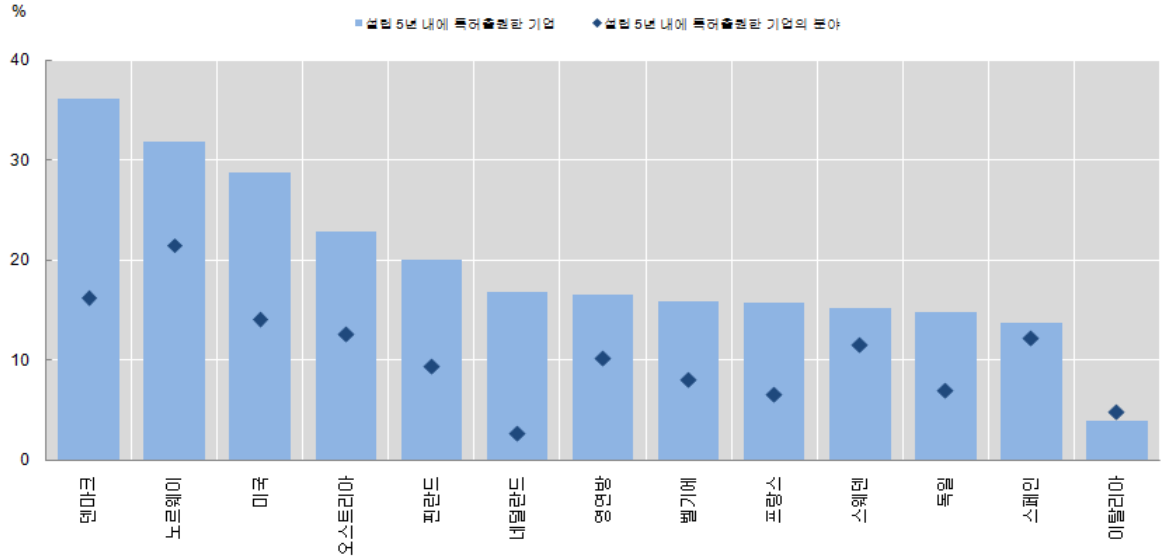
출처: OECD, Patent Database, January 2010 ; USPTO Trademark BIB ACE Database (Cassis), June 2008 ; OHIM and JPO annual reports 1997-2008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Trademark Statistics, January 2010.

- 기업에 있어서도 R&D를 통한 혁신과 더불어 R&D가 아닌 방식의 혁신활동들이 크게 증대되어 왔음.
-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의 기술혁신활동에서 점차적으로 신생기업에 의한 기술혁신활동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시스템으로서 벤처자금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혁신적 신상품 출시 기업의 R&D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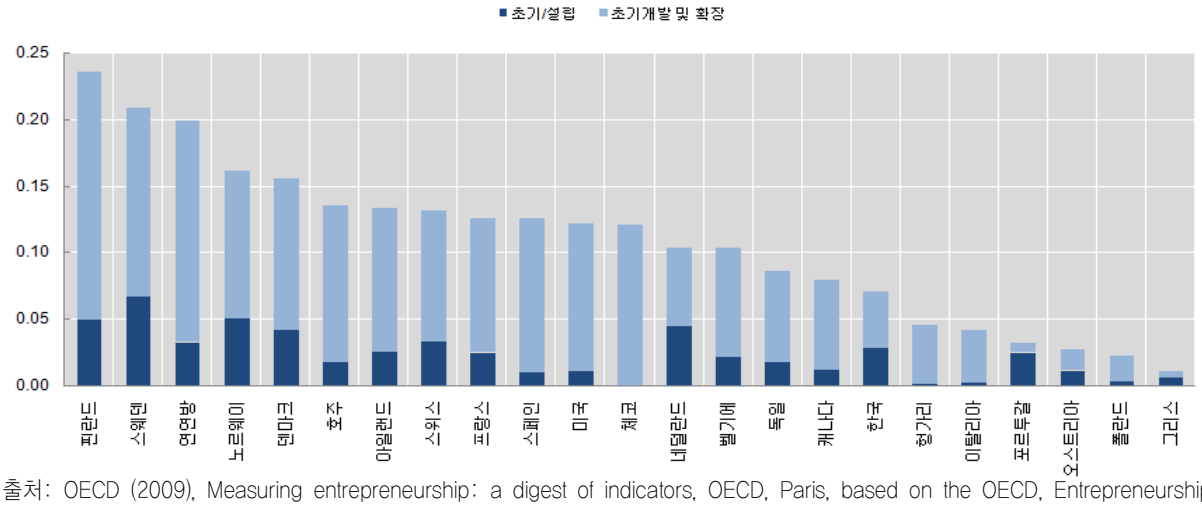


[그림 7] 신생기업의 특허출원 활동 2005-2007



출처: OECD, HAN Database, October 2009 and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August 2008.

[그림 8] 벤처자금 투자(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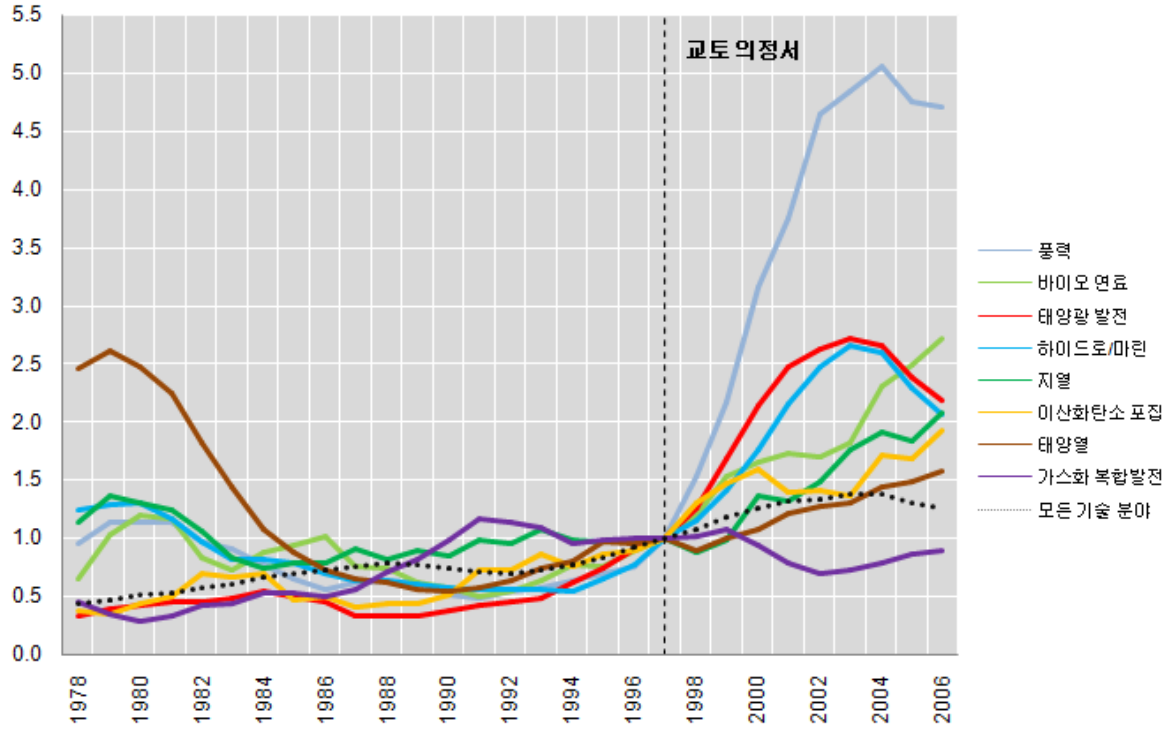


출처: OECD (2009), Measuring entrepreneurship: a digest of indicators, OECD, Paris, based on the OECD, Entrepreneurship Financing Database.

ㅇ 과학기술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이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장, 녹색성장 등 글로벌 환경과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9]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혁신기술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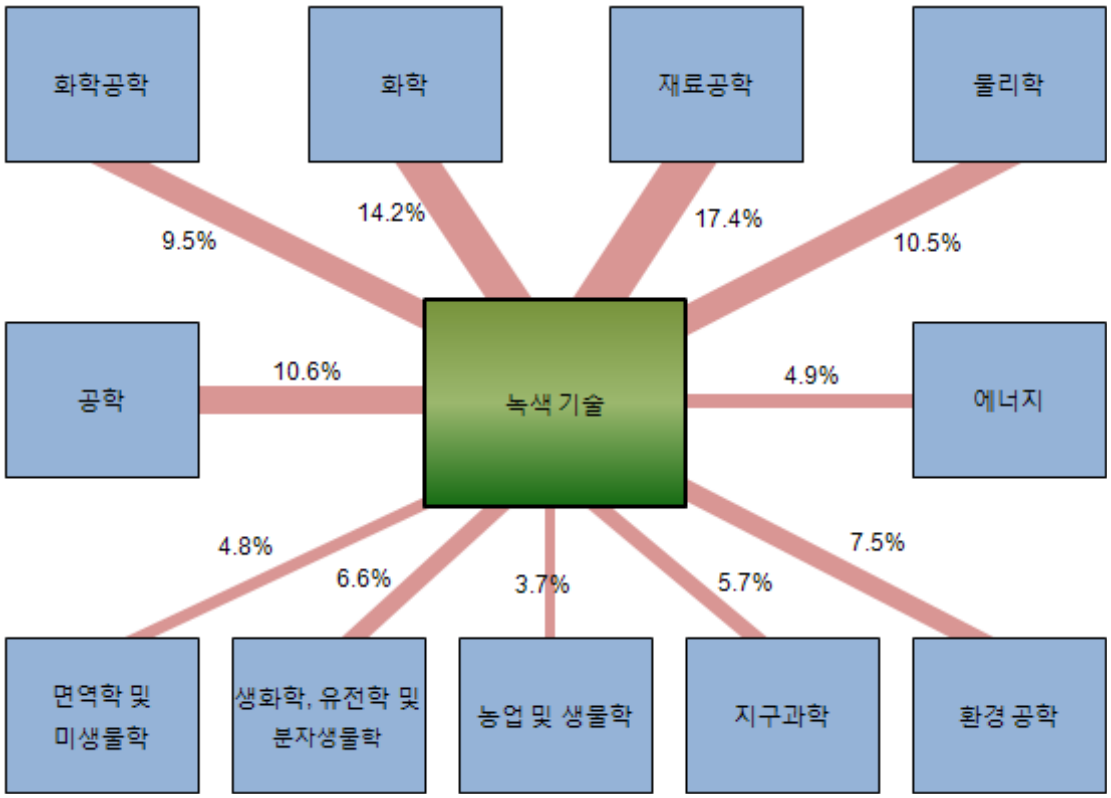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EPO, 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September 2009.

ㅇ 과학기술 혁신의 논의는 과거의 성장일변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에 기반한 사회적 현황 해결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혁신과 발전이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음.

ㅇ 이러한 과학기술혁신은 선형적인 기술발전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으며 과학적 연구역량과 산업기술의 연계에 의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슈 해결은 성장에의 기여도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음.

[그림 10] '녹색' 기술과 혁신과학의 연계, 2000-07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July 2009; OECD, Patent Database, January 2010; and EPO, 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September 2009.

2. OECD 혁신 전략 제언[1)]

가. 혁신은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문제 해소에 일조

ㅇ 지난 2년간 부진한 경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이 시급한데, 많은 국가들의 인구 정체와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역할이 감소하고 실물자본에 투자에 대한 보상도 감소함으로 전통적인 성장동력은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진보된 경제에서 더욱 두드러짐

ㅇ 경쟁력 강화 및 경제 다변화,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혁신이 요구됨
- 혁신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임
- 몇몇 OECD 국가들은 연구와 개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비물질적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1) OECD Executive Summary pp. 9-15.

ㅇ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기후 변화, 보건, 식량 안정성, 깨끗한 식수 접근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조정 노력과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개입이 필요한 이러한 문제 해결에서 혁신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게 됨.

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혁신을 우선 순위화

ㅇ 위기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혁신의 필요를 강조하고, 단기적인 재정상태 완화를 위해 재정 감축이 필요하지만 장기적 성장기반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교육이나 인프라, 연구 등의 성장의 미래 자원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특히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나, 기후 변화 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천기술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함

ㅇ 이와 동시에,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혁신해야할 영역이 많은데, 교육이나 훈련 시스템, 공공연구기관의 개정은 혁신에 있어서 공공투자로부터 보상을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혁신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의 혁신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조건의 구조적 정책 개정은 혁신과 성장을 훨씬 강화할 수 있음

ㅇ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적, 국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촉발시키기 위해 시장이 강화될 것인데, 적정가격설정, 경쟁을 위한 시장 개방, 혁신을 유도하는 기준과 규제 고안 등이 정부가 보건이나 환경 등의 영역에서 혁신을 촉발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임.

- 잘 설계된 수요 측 정책은 특정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효율성의 대한 보상으로 주어짐으로 직접지원방법보다 비용이 절감함.

다. 정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반영할 필요 있음.

ㅇ 정책들이 혁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혁신이 발생하는 방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혁신이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매우 역동적이고 다분야를 아우르는 과정을 가지며 점차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이 증가함.

ㅇ 이러한 혁신과정의 변화는 현존하는 국가정책의 프레임워크에 도전하며, 정책은 R&D와 특정기술에 중점을 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넘어 혁신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와 행위자들을 염두에 둔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 OECD의 혁신전략의 목표는 "한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책 개발의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혁신 주도적 회복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혁신의 역할을 강화하여 혁신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있고 총체적인 접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 행위의 5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임.

라.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강화

ㅇ 인적지원은 혁신의 핵심이며, 인적 역량강화는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넓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연관성 있는 교육을 혁신하는 것임

- 교육과 기술개발체계는 효율성을 보장하고 오늘날 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개정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교사의 질 향상이 중요함.
- 대학과 전문대학, 직업훈련센터는 보다 개방된 혁신 체계 안에서 비즈니스, 정부, 국가 등의 행위자들 간의 중요한 다리역할을 함.
- 정책 결정자들은 혁신에 있어서 대학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대학의 독립성과 경쟁, 탁월성, 기업가 정신, 융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더 중점을 기울여야 함.

ㅇ 교육과 훈련 정책은 창의적인 기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불어넣음으로써 사업적 문화가 촉진되도록 도와야 함.

ㅇ 폭넓은 이주 정책과 일관성 있는 이민 정책 수립으로 고급인력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민정책을 통해 국외 연구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재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지식순환을 위해 정부는 외국학생들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모바일 전문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는 등의 흡수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함

ㅇ 사람들은 직장에서 기술을 창조, 유포, 순응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소비함으로써 혁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교육은 소비자들이 혁신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고 정보에 기반 한 선택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킴

마. 기업의 혁신 지원

ㅇ 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직업과 부로 전환하는 데에 중요한데, 특히 신생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들로부터 간과된 기술적, 상업적 기회들을 획득할 수 있고, 신기술 개발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좋은 장이 되므로 정부는 창업규정을 단순화하여 신생기업들의 시장 입장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신생기업들 중 20-40%는 창업 후 2년 내에 파산하는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혁신과 경제 성장 있어서 중요함.

ㅇ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비용을 고려한 행정적, 사회적, 세금 기준 조정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함

ㅇ 비즈니스 주도형의 혁신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주요한 제약 중 하나인데,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점 과제임.

- 잘 기능하는 벤처자금시장과 혁신관련 자산(지적 재산권 등)의 보장은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을 위한 금융의 주요 출처가 됨.
- 위험을 감수하는 장기적 투자의 지속과 함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보장도 이루어져야 함.

1) 지식의 창출, 유포, 적용 촉진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의 개발로 인해 혁신이 촉진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특별히 초고속 인터넷망을 육성하여 혁신에 활용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는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정부에 의해 조성되고 지원받는 정보도 포함한다. 무료나 저가로 제공되는 정보는 혁신을 자극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지적재산권은 기업들의 투자금 회수를 가능케 함으로써 혁신에 투자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잘 보호되고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특허 시스템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보유포로 인한 공공 이익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 네트워킹 기반의 개발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지식과 데이터 공유를 위해 OECD의 '공공 지원 연구 자료 접근에 대한 지침'(Guideline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등과 같은 방법을 이행하며, 협력 메커니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2) 국제적, 사회적 문제에 적용 가능한 혁신

국제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다자간 협렵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제도적 조정, 지식접근성 보장 절차,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의 우선순위 설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시장 실패 등의 문제는 혁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연구에 대한 투자와 민간 부문의 경쟁적 연구를 위한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크고 불확실한 영역을 주도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들은 열악한 구조적 조건이나 부족한 인적, 사회적 재원 등 경제개발동력에 대한 혁신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과 구조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농업 생산성이나 빈곤퇴치 등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농업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3) 혁신 정책의 거버넌스와 측정 방식 개선

혁신의 핵심 역할이 점차 경제적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를 아우르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상위 정책결정자들이 중장기 전망으로 활동들을 조정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일관성을 띄어야 한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평가는 필수적인데, 혁신의 결과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4) 혁신정책의 강조점 변화

- 더 강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에 전략적으로 집중
- 과학기술을 넘어 비물질적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관련된 혁신 촉진 정책 수립
-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오늘날 사회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 정책 수립
- 신생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정책적 관심 확대
- 미래 혁신의 기반 제공을 위한 과학 연구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관심 확대
- 네트워크와 시장을 통한 지식 유포 및 응용 메커니즘 개선
- 혁신의 발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부문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수립
- 혁신과 그 효과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컨셉을 측정하고 정책수립에 응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

Ⅲ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현황: 강점 및 약점[2)]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강점

ㅇ (국가적 합의) 기술기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산업을 위한 기반이 존재
-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 및 많은 고학력인구와 혁신프레임워크 개발에 유리한 조건 보유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 집약적 기업 및 강력한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표 2〉 국가 혁신 역량

	과학 기반			비즈니스 R&D 혁신				기업	
(GDP 대비)	R&D 공공 지출	상위 500개 대학	유수저널 논문개제	비즈니스 R&D 지출	상위 500개 기업 R&D 투자	삼극 특허	등록 상표	벤처 자금	5년 미만의 신생 특허 기업
한국	0.88	0.01	0.02	2.80	0.008	1.49	1.71	0.03	n.a.
기준년도	2010	2010	2009	2010	2010	2008 -10	2007 -09	2009	n.a.
OECD 평균	0.72	0.01	0.02	1.12	0.005	0.42	2.45	0.03	0.87
OECD 최저	0.16	0.00	0.00	0.16	0.000	0.01	0.31	0.00	0.00
OECD 하위 5개국	0.45	0.00	0.01	0.27	0.000	0.03	0.63	0.00	0.49
OECD 상위 5개국	0.96	0.02	0.04	2.34	0.024	1.78	4.91	0.07	1.44
OECD 최고	1.15	0.04	0.05	3.51	0.046	3.25	14.94	0.18	3.19

출처: OECD(2012),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p. 337.

2) OECD(2012),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 **(과학기술 인프라)**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보이며 높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보급률 보유

- 100명 중 36명이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고 100명 중 99명이 무선인터넷 사용

2.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약점

○ **(국제적 협력 미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맞물려 과학연구 및 특허 개발 분야에 국제적 협력 비율이 저조

- 과학 분야 저널의 26%만이 국제 공동 집필을 통한 공동 작업
- 국제협력을 통한 특허는 전체 신청한 특허 수의 4%

○ **(미흡한 과학연구 성과)** R&D 분야의 높은 공공 부문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국제 기준의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대학과 연구소의 대규모 공공연구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연구 체계도 응용이 심화된 주제로 치우치는 경향

○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R&D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수행되며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미비

○ **(지역 불균형)** 서울특별시는 과학기술과 혁신활동에 중점을 기울였고 이는 불균형한 지역 성장과 직결

〈표 3〉 혁신을 위한 교류 및 인적 자원

	인터넷			지식 흐름 및 상업화				인적 자원	
	초고속 인터넷 사용(%)	무선 인터넷 사용(%)	전자정부 준비지수	민간의 공공 R&D 지원 (GDP대비)	대학 및 공공 연구소 특허 신청 (GDP대비)	국제 공저 (%)	국제협력 특허 (%)	고등교육 이수 비율 (인구 당)	과학 및 공학 분야 박사 졸업생
한국	36	99	0.9	0.06	1.90	26.3	3.7	38.8	0.4
기준 년도	Jun-11	Jun-11	2012	2010	2005-09	2008-10	2007-09	2009	2009
OECD 평균	25	44	0.8	0.05	0.69	47.7	23.2	33.4	0.6
OECD 최저	10	0	0.5	0.00	0.02	17.8	2.7	11.9	0.1
OECD 하위 5개국	14	11	0.6	0.01	0.04	32.7	13.5	16.8	0.3
OECD 상위 5개국	35	76	0.9	0.08	1.76	56.8	42.2	40.1	0.9
OECD 최고	38	99	0.9	0.14	4.52	75.5	56.3	49.5	1.4

출처: OECD(2012),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p. 337.

Ⅳ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1. 우리나라 역대 과학기술정책

〈표 5〉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비교

	문민정부 (`93-`97)	국민의 정부 (`98-`02)	참여정부 (`03-`07)	이명박 정부 (`08-`12)
정책기조	신경제 건설과 글로벌화에 대응한 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중장기적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기술의 실용화 촉진 병행
추진전략	민간주도 기술개발정책 추진과 부문별 기술혁신체제 조성	국가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인력, 사업, 지역 등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	기초원천연구의 강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주요법령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성과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행정조직 체계	집행: 과학기술처 (장관급) 조정: 종합과학기술 심의회 과학기술장관회의	집행: 과학기술부 (장관) 조정: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집행: 과학기술부 (부총리) 조정: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집행: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정: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2011년 상설화
출연(연) 관리	각 부처	국무조정실 3개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개 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2개 연구회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7),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에서 수정 · 보 완

〈표 6〉 MB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전략 및 계획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비전과 목표	삶의 가치를 높이고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	GDP 대비 5% R&D 투자, R&D 및 시스템 7대 중점분야 육성을 통한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 달성'	2020년 국민 소득 4만 불 시대, 세계 5대 기술 강국 달성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 건설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발전기반 조성
역점분야	25개 미래 핵심 기술 분야 및 각 분야별 235개의 세부기술을 예시로 제시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제시	17개 신 성장동력 분야별 세부기술 제시	15대 핵심 분야 제시	27대 중점육성기술 제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 중이온 가속기 설치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과학기술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에서 수정 · 보완

[그림 11] 과학의 날 대통령(국무총리) 치사 중 강조된 정책방향

2008 3세대 원전 건설, 교육과 과학의 융합, 국가 R&D 투자 확대, 자주기술 확보, 신 성장 동력 창출,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2009 R&D 투자 확대, 녹색 원천기술의 확보, 과학기술 융·복합분야 육성, '풀뿌리 개인연구' 지원 확대, 이공계 장학제도 마련, 전국적인 과학관 설립, 평화적인 우주개발

2010 원전기술 수출·개발, 나로 호 발사, 국가 R&D 투자 확대, 과학영재교육 강화, '풀뿌리 개인연구' 지원 확대, 과학기술자 연구 환경 조성, '모험연구' 지원 확대, 과학기술인 우대 환경 조성, 과학을 통한 사회적 소통

20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국가 R&D 투자 지속적 제고,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초·원천연구 지원 강화, 미래성장 동력 육성

2012 원전 수출, 연구 인프라 등 연구개발 환경 조성, R&D 예산 증대, 과학기술인재 양성, 민간 R&D 투자 촉진 세제 개선

〈표 7〉 '577전략' 중 7대 시스템 선진화 · 효율화의 역점 시책

1.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		1.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2. 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3.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4.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성 및 진로 다양화 강화/ 5.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6.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2. 기초원천연구 진흥		1. 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2.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3.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4.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5. 기초원천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3. 중소·벤처기업 기술 혁신 지원		1.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확대/ 2.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3. 기술금융 활성화 및 역할 강화/ 4.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1. 글로벌 공동연구의 전략적 확대/ 2. 권역별 과학기술협력 특화 추진/ 3. 국제기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촉진/ 4.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5. 과학기술 국제화 투자 확충과 효율성 제고
5.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1. 지역 과학기술인력 유입·활용 촉진/ 2. 지역 연구주체의 역량 강화/ 3. 지역혁신거점과 클러스터 구축 강화/ 4.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제고/ 5. 지역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 환경 조성
6.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1.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 2.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3. 과학기술정보 공유 및 활용체제 고도화4.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계 구축/ 5.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7.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의 생활화	1.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2.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3. 타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4.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문화 산업기반 육성/ 5. 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6.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1.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강화 2.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3.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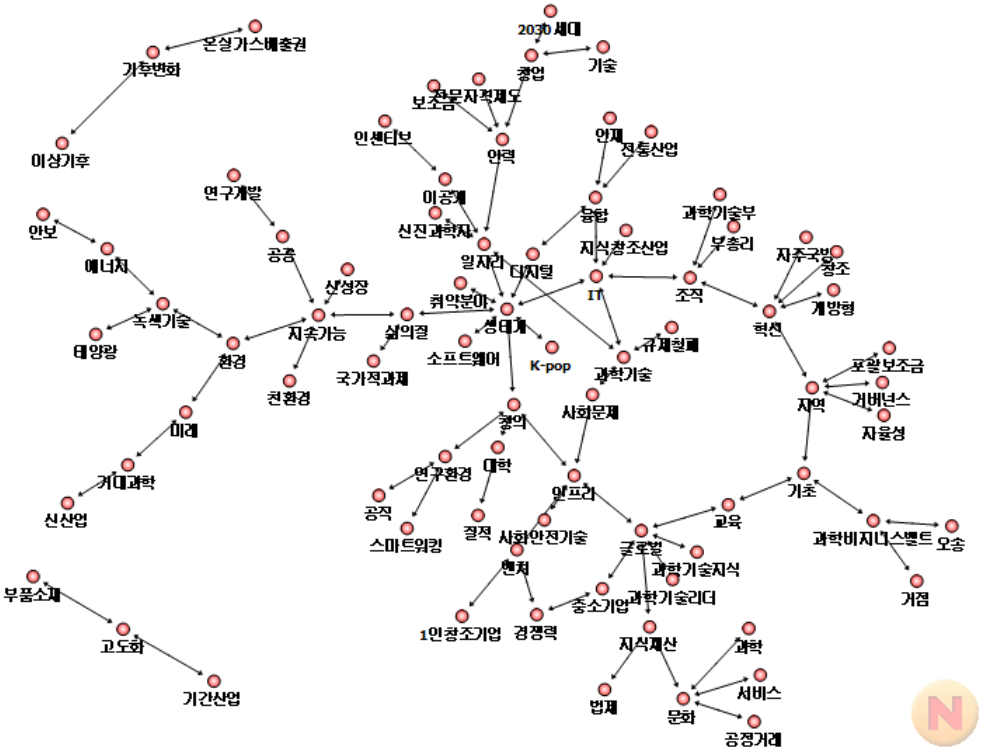
2. 최근 과학기술계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제안 동향

<table>
<tr><th>기관</th><th>주요 정책</th><th>세부내용</th></tr>
<tr><td rowspan="2">새누리당</td><td>과학과 문화산업투자</td><td>①R&BD(기술사업화) 시스템 도입 등 과학기술투자 확대
②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문호 확대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③소프트웨어 분야 생태계 구축</td></tr>
<tr><td>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건설</td><td>①기후변화 대응 및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
②생활주변의 소음공해 대폭 저감
③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td></tr>
<tr><td rowspan="3">민주당</td><td>과학기술·IT강국실현</td><td>①'과학기술부'를 부활
②기초 R&D와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
③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건강 사회 구축
④과학기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 및 젊은 연구인력 일자리 확대
⑤ICT 통합기구 설립과 IT · SW 생태계 구축
⑥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
⑦모바일·인터넷 콘텐츠 개발 지원 등 모바일·인터넷 기반 신성장산업 적극 육성
⑧스마트워킹(smart working)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⑨문화 · 관광 · 금융 ·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td></tr>
<tr><td>권역별 상생 발전</td><td><table>
<tr><td>대전광역시</td><td>-성공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기초과학의 메카로 육성
-대덕R&D특구 정부출연연의 무분별한 통폐합을 지양하고 독립성 보장</td></tr>
<tr><td>충청북도</td><td>-국제과학비wm니스벨트, 혁신도시, 오송첨복단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지원</td></tr>
<tr><td>부산광역시</td><td>-해양수산부 부활,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도시로 육성</td></tr>
<tr><td>울산광역시</td><td>-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기간산업의 첨단화 및 고도화</td></tr>
<tr><td>대구광역시</td><td>-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과학산업단지 등 거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td></tr>
<tr><td>경상북도</td><td>-그린에너지와 녹색산업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지원</td></tr>
<tr><td>광주광역시</td><td>-광융합 산업클러스터, 차세대다목적 가속기 건립 등 지원 확대</td></tr>
<tr><td>전라남도</td><td>-항공우주 · 에너지 · 친환경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지원</td></tr>
</table></td></tr>
<tr><td>원전안전 에너지정책</td><td>①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의 안전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
②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20%로 확대
③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추진</td></tr>
<tr><td rowspan="16">과실연 7대국정과제</td><td rowspan="2">1.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td><td>기술창업활성화</td></tr>
<tr><td>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td></tr>
<tr><td rowspan="2">2.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td><td>사회문제해결-과학기술 연계체계 강화</td></tr>
<tr><td>환경·안전·복지 등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td></tr>
<tr><td rowspan="2">3. 지역활성화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td><td>국가혁신체제-지역혁신체제 연계 강화</td></tr>
<tr><td>지방혁신의 자율성 강화</td></tr>
<tr><td rowspan="2">4.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td><td>(신)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td></tr>
<tr><td>디지털 융합 확산 기반 구축</td></tr>
<tr><td rowspan="2">5. 효과적 지식재산 체계 구축</td><td>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사업을 개선</td></tr>
<tr><td>지식재산 활용촉진 기반 및 시장 조성</td></tr>
<tr><td rowspan="2">6.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td><td>창의기반 연구시스템 정비</td></tr>
<tr><td>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 강화</td></tr>
<tr><td rowspan="2">7. 창의적 인재 양성 체제 확립</td><td>대학교육 질적 수준제고</td></tr>
<tr><td>초·중등 기초/창의 교육실현</td></tr>
<tr><td>8. 조직개편</td><td>국정 중심의 철학을 과학으로 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과위의 부총리급 강화와 함께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부 신설과 지경부 및 중소기업청을 통합한 기업혁신부의 신설 제안</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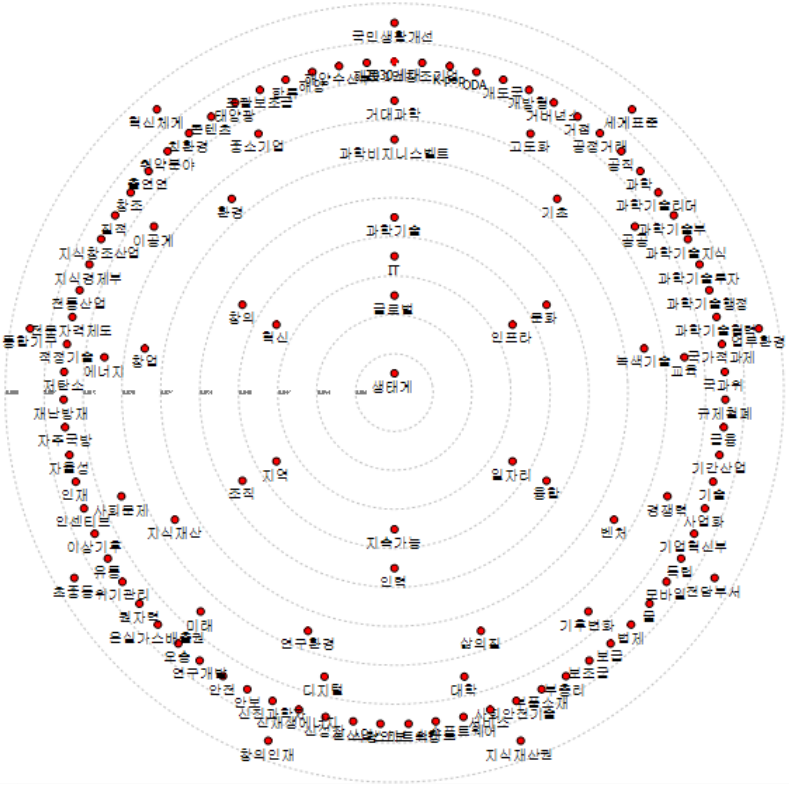
기관	주요 정책	세부내용
과학기술혁신 향후 5년 5대 중점 추진 과제	1. 과학기술기반의 질 좋은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	2030 기술창업 활성화
		과학산업 육성과 과학기술기반 전문자격제도 활성화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력저수조 기능 확충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간 균형•특화발전 지원
		농수산, 전통산업 등 소외산업의 첨단기술융합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2. 신성장동력과 미래 도전 과제에서 글로벌리더십 확보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선도:10 Opportunities ①지속가능 신생산시스템 플랫폼 ②사이버융합 보안 및 빅데이타 분석플랫폼 ③맞춤형 보건의료시스템 ④맞춤형 기능성소재 ⑤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고효율관리 ⑥수출전략형 원자력에너지 생산기술 ⑦차세대 수송시스템 ⑧생태도시 및 그린건설기술 ⑨해양생물자원개발 기술) ⑩차세대 컨텐츠제작 시스템과 관리체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에 기여할 국가적 과제에 도전:10 Challenges ①3D-GIS기반 지구시뮬레이션과 지능형 재난대응시스템 ②뇌-전자-기계-인지과학 융합연구와 생각하는 기계 ③한국형 자력발사체 개발과 무인 달탐사 ④자연친화적 청정 탄소자원확보 및 활용 ⑤에너지믹스와 통합 활용 ⑥세종-다산-장보고 기지로 이어지는 남북극 탐사 연구 확장 ⑦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와 해중도시건설 기초연구 등 해양신세계 ⑧녹색 스마트형 인공지능 미생물 연구 및 제어 ⑨인간-인공물-가상사회 인터페이스기술 연구 및 인공지능 반려로봇 개발 ⑩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기초과학역량 신장과 국민자긍심 고취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권, 표준, 안전규제시스템의 세계 최고수준화
	3. 창의인재가 과학기술로 진출하여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토록 지원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서는 이공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
		이공계 종사인력의 사기진작 및 Role Model화를 통한 이공계 호감도 향상
		글로벌 과학기술리더 양성
		어려서부터 우수 창의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 구축
	4. 자율·경쟁·협력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와의 소통 강화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 철폐
		취약분야에 대한 생태계 차원의 배려 추진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과학기술 신뢰회복 추진
		과학기술 ODA 확대 추진
	5.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체제 구현과 정책	혁신 3부의 설치와 정책조정 강화
		국정 수행 기능에서의 과학기술전문가 활용 확대

기관	주요 정책	세부내용
공학한림원 차기정부12대정책과제	1.10대'대한민국 과학기술 도전 R&D 프로그램'추진	①보건·의료 분야: 차기정부의 340조 복지예산의 대안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를 자극해 신산업으로 육성 ②부품·소재 : 제조업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창출 추진 ③IT:향후 20년 융합의 시대를 대비하는 IT의 고도화 추진 ④사회안전·인프라 :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이끌 과학기술로 변모 추진 ⑤에너지·자원 :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전략 강구 ⑥지속성장과 환경 : 친환경적 성장을 위한 국제적 룰 대응 대책 마련 ⑦자주국방 : 자주국방확립과 국방산업육성을 동시 추구 기술혁신전략 요구 ⑧거대과학 : 국가적 위상뿐 아니라 신산업으로서의 거대과학에 돌파구 마련 ⑨물·식량 안보: 안보적 관점과 함께 인류에의 공헌차원으로 접근 필요 ⑩생활 향상 : 사용자니즈 바탕의 생활 향상을 이끌어 낼 국가적 과제 추진
	2. 기술창업가 10만명 육성	①10년간 10기술창업자 육성-100만 일자리창출 ②국가 기술창업활성화 위원회 구성 ③창업촉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④창업,창조경제를 위한 생태계조성 ⑤고경력 은퇴 인력의 기술창업 컨설턴트 활용
	3.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	①IT와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진화 ②부품·소재의 혁신을 통한 주력제품에서의 극한적 비용혁신 달성 ③패키지화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융합모델 개발 ④벤처기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⑤세계 4대 산업강국을 위한 주력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4. 글로벌 창의인재의 양성 및 확보	①대학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교육모델의 차별화, 창의 교육 비중을 높인 대학평가 ②과학기술교육의 세계표준 정합성 실현 ③융합형 인재의 대대적 육성 ④두뇌 순환(brain circulation)논리에 기반한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와 활용
	5.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	①재난방재 및 위기관리 기술 개발 ②질병관리 고도화 및 환경안전성 제고 ③사회안전 기술의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④100세 시대 핵복을 위한 기술개발 ⑤재난, 안전, 보건에 대한 범부처 종합조정강화
	6.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저탄소사회 구현	①에너지 안보에 최우선하는 에너지정책 ②국제사회와공조하는 스마트한 저탄소정책 추진 ③국민과 소통하는 원전확대와 안전성 향상 ④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⑤에너지·자원 R&D 확대와 에너지효율 선진국 달성
	7.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상화	①과학기술정책 조정 체계의 확립: 국과위가 부처의 정책을 과학기술 관점에서 선도하는 기획 기능 담당 ②미래혁신을 주도할 과학기술행정시스템 형성 ③과학기술 정책연구집단의 육성 ④정부 역할의 변화에 걸맞도록 국가연구개발 사업 프레임을 재편 ⑤참여와 소통의 과학기술정책형성 메커니즘 구축
	8. 과학기술이 존중되는 '이공계 르네상스'실현	①'이공계 르네상스 5개년 계획'을 추진 : 국과위가 계획 수립 ②이공계 공직자 문화 확대 ③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④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매력적인 과학기술 두뇌집단으로 발전 ⑤기업에서의 창의적 기업문화 구축 ⑥글로벌 연구센터로서의 신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9.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①지식재산(IP)의 창출확대 ②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제도 강화 ③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 ④선진국 수준이 과학기술지식 생태계 구축
	10. 지역 과학기술역량의 균형 발전	①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일 불균형 완화 : 지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자 확대 ②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 특성에 적합하 전략산업 선정 ③지역 기술혁신 체계의 개선: 지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및 총괄시스템 구축 ④선진국 수준의 지역과학기술 거점 형성 ⑤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지역 과학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계
	11. 미래 개척을 위한 거대과학의 고도화	①2025년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 ②미래원천을 창조하는 거대 기초과학 기술추진 ③거대과학을 활용한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④거대과학을 활용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생활정보 제공 고도화
	12.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및 공조체제 정립	①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저 사업 대폭확충 ②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추진 ③개도국 현지에서의 교육훈련 확충 ④개도국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확대 ⑤개도국 화가기술협력에 대한 종합적 전략 및 체계적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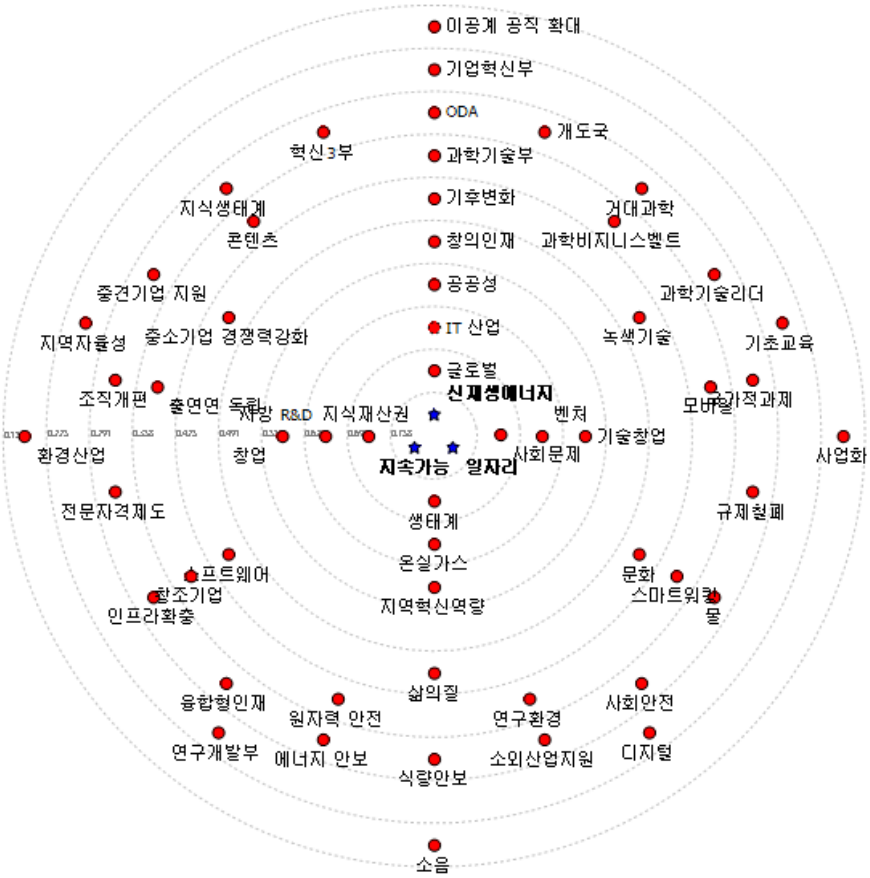
[그림 12] 과학기술부문 정책제안 키워드 맵



[그림 13] 정책 키워드간 네트워크 분석



[그림 14] 기관간 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부문 전략과 과제

Vision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 복지국가 실현

STRATEGY

글로벌 개방형 혁신촉구

산학연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

- 미국, EU, 중국, BRICs 등 주요 과학기술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 산학연 주체들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와 고급두뇌의 순환적 활용강화

-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 Brain Circulation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외교 강화와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ODA 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외교강화
- 개발도상국가와의 지역별 국별 과학기술 ODA 강화

창조적 혁신 시스템 구축

창조형 기초과학 시스템 구축

- 세계선도적 과학기술 역량 구축을 위한 창의적 연구강화
- 세계적 수준의 탁월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 대형과학기술(우주, 원자력, 가속기 등) 인프라의 정착과 활용성 극대화

SIL(Science-Industry Linkage) 시스템 선진화

- 산학연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연계성 강화
- 과학-산업의 중개 시스템 선진화
- 융합신산업 원천기반기술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보

창의형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

- 창의형 중소기업 지원시스템구축
- 창조적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기업가정신 촉진
-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연계 혁신 시스템 구축

공유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녹색기술의 산업화 확산 촉진

- 녹색기술전략의 지속성 확보와 녹색성장 촉진

사회적 이슈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확산

- 원자력 안전, 질병 대응, 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지역주도형 혁신시스템 구축

정책조정 메커니즘 고도화

- Horizontal Policy 정책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고도화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쉽 선진화

10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원종욱

Ⅰ 사회적 자본의 정의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1980년 후반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과 경제학은 물론 정치·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관심 주제가 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등과 더불어 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유사한 조건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개념의 첫 등장은 1916년 하니판(Hanifan)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니판은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족들 사이의 친교, 유대감, 동정과 사회적 교류와 같은 무형의 자산은 사람들의 일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개인은 혼자 내버려두면 상호협력이 불가능하지만, 이웃과 접촉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 각 구성원의 협력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주며, 개인 역시 이웃과의 교류와 상호협력, 사회적 연대감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이동원 외, 2009). 이후 이 개념은 제이콥스(Jacobs, 1961)가 도시에서 사람들의 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로리(Loury, 1977, 1981)가 소수집단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의 경제적 기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한 체계화는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Coleman, 1988)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퍼트남(Putnam, 1993)과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 정치·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했다.

먼저,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을 바탕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부르디외, 1986). 그의 또 다른 자본인 문화자본이 부모의 자원이 자식 세대에게 전승되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김상준, 2004).

다음으로 콜만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좀 더 강조하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구조내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관계 밖의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경우라도 내부 행위자들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며, 그 기능에 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물적 자본이 생산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요소이고, 인적자본이 지식이나 숙련의 형태로 인간의 두뇌와 근육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요소라면,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된 생산활동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인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신뢰성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비해 가시적 실체는 아니지만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강력한 신뢰성과 믿음이 있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Coleman, 1990; 김준환, 2004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퍼트남과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퍼트남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된다(Putnam, 1995).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귀속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자본과 달리 사유재(private goods)가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후쿠야마 역시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인 규칙 또는 공유의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미국과 일본의 높은 경제성장의 요인을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찾았다(Fukuyama, 1995). 단, 공유된 가치와 규범에는 진실과 책임의식이 따르며, 호혜성이 있어야만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공유하는 모든 규범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위 연구자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결망을 통해 형성된다'는 인식은 공유 하지만,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여의 측면으로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로서 지역이나 국가차원에서도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부르디외와 콜만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지역이나 국가차원에서도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Winter, 2000). 즉 사회적 자본은 단순히 긍정적 기여만 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 분석 단위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외에도 Woolcock(1998), Portes(1998) 등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World Health Organisation(1998), OECD(2001)와 World Bank(2002)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1〉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

연구자	사회적 자본 정의
부르디외 (Bourdieu, 1985)	상호 면식이나 인정을 바탕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콜만 (Coleman, 1998)	사회적 구조내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관계 밖의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경우라도 내부 행위자들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며, 그 기능에 의하여 정의
퍼트남 (Putnam, 1995)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후쿠야마 (Fukuyama, 1995)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인 규칙 또는 공유의 규범

울콕 (Woolcock, 1998)	특정인의 사회적 연결망 안에 귀속되어 있는 정보와 신뢰 , 그리고 호혜
포르테스 (Portes, 1995)	연결망 또는 사회적 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희소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성의 정도를 뜻하며, 이는 구성원 간 네트워크, 규범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
OECD(2001)	집단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 및 이해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세계은행 (World Bank, 2002)	시민참여, 상호믿음, 공공기관에서의 자신감

2. 사회적 자본의 핵심 개념: 규범, 네트워크, 신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은 규범과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라는 핵심 개념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위 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roductivity Commission, 2003).

첫째, 규범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지시, 금지 또는 조절하는 공유된 이해, 비공식적 규칙과 관습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은 정직, 준법, 노동윤리, 연장자에 대한 존경,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인정, 그리고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마다 다르며, 어떤 규범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작동하고 어떤 규범은 보다 작은 그룹 내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법이나 관련 법 집행과정을 보완한다.

둘째, 네트워크란 보통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들 간의 상호 연결된 그룹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결을 뜻하며 더 미시적 수준에서는 가족과 친구 그룹이 네트워크의 특징을 갖는다. 한 개인은 한 개 이상의 네트워크 속할 수 있고, 연관된 별개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그룹들은 다른 규범과 상호책임과 기대수준을 공유하며, 그룹 내·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수준의 일반화된 신뢰를 발생한다.

네트워크는 그 밀도에 따라 강한(dense) 네트워크와 약한(sparse) 네트워크로 구별된다. 강한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에 중복되거나 다중적인 연결을 보이고, 약한 네트워크는 이러한 연결이 약하다.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사회적 지지나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기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다른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사회적 규범은 네트워크가 잘 된 사회에서 더 쉽게 확산되고 준수되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 더 쉽게 나타난다.

셋째, 신뢰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거나, 기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들이 말한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갖게 되는 확신의 수준을 나타낸다.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의 인지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신뢰는 개인을 넘어, 그룹, 정부 등에 확장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를 다루고 있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자본의 주요 원천이나 결과로 보고 신뢰를 사회적 자본 자체로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울콕(Woolcock, 2001)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야마(Fukuyama, 1995)도 공유된 규범에 기초한 규칙적이고, 협동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기대, 즉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서 정의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의 자원과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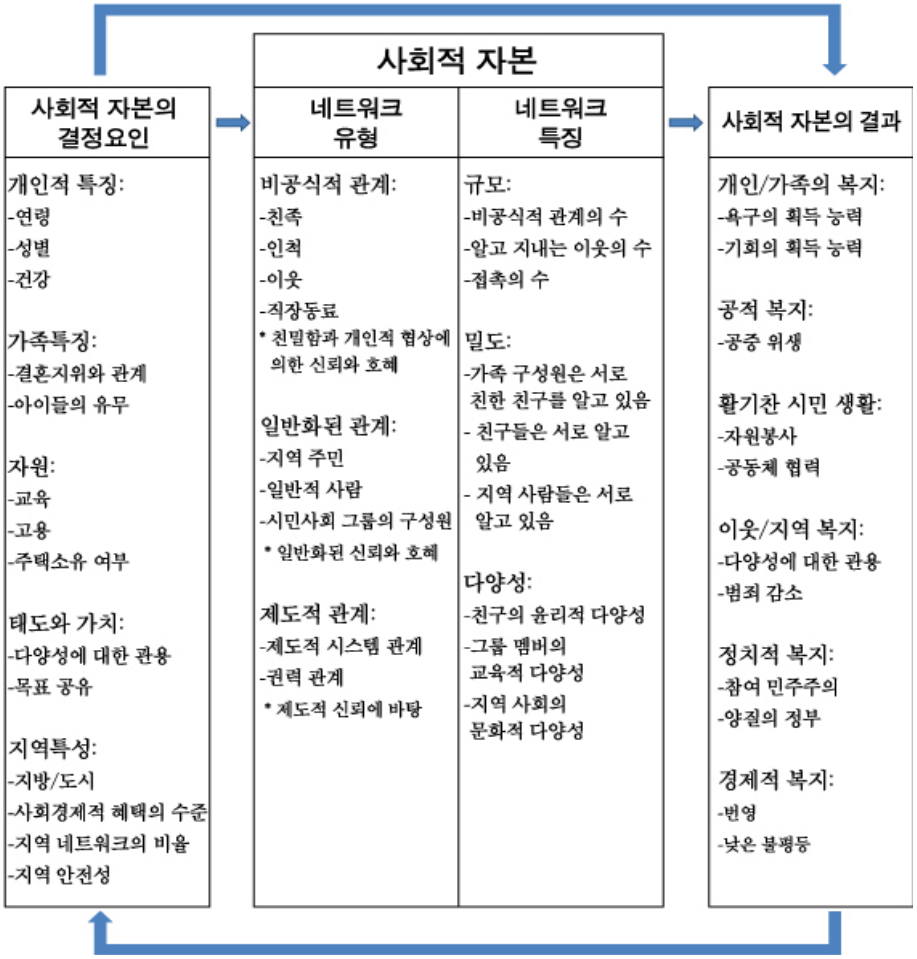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는 사회적 자본의 발전을 위해 8가지의 자원(sources) 혹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 학교, 지역 공동체, 회사, 시민사회, 공적 영역, 성, 민족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AIFS(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는 개인의 나이, 성, 건강, 가족 환경, 교육, 고용지위, 주택소유 여부, 태도와 가치, 거주 지역의 특성 등의 집합체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자원과 그것이 작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그것의 자원과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실증적 작업들은 불완전한 사회적 자본 지표와 지표들과 관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과 정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자본의 한 가지 특징은 사회적 자본 창출의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오는 자원과 효과의 복잡한 피드백이다. 예컨대, 개인수준에서 교육은 사회적 자본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사용이 그것의 수준을 격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신뢰에 있어서의 순위 매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본다(Cox and Caldwell, 2000).

[그림 1] AIFS의 사회적 자본 개념틀



출처: Stone and Hughes(2002).

4. 사회적 자본과 여타 자본의 특성 비교

경제학의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개념은 물적 자원을 넘어 인적 자본 및 문화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으로서 신뢰와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이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서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축적된 인간의 노동"으로 정의되는 물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유석춘 외, 2003). 그러나 전통적인 물적 자본과 새로운 형태의 자본들은 여러 차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자본의 소유 주체(분석 단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자본인 물적 자본의 주체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뉜다. 자본은 소유권을 가진 자본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물적 자본의 축적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반면 1960년대 등장한 인적자본 개념은 개인에게 체화된 능력(학력, 숙련수준)을 의미하고, 개인의 소득이나 직업 기회의 성과를 좌우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한다. 또한 1980년대 들어 사회적 자본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문화 자본은 일반적으로 가족 및 소단위 집단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다. 문화 자본은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생되며, 이를 통한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를 통해 계급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위 세 가지 자본(물적, 인적, 문화적 자본)이 개인적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접근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관계자본의 특성을 지니다. 다른 자본들과 비교해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석춘 외, 2003).

〈표 2〉 사회적 자본과 여타 자본의 특성 비교

구분	경제(물적) 자본	인적 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의 개념에 대한 수정	경제(물적)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의 소유자	개인 (자본가)	개인 (노동자)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 (사회집단)
자본 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 형태	물질적 대상 (토지 및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 관계
연구의 핵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인 착취관계	교육과정과 임금 사이의 연관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 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
분석 수준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집단

출처: 유석춘 외(2003).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한 자본이라는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리라는 호혜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자본은 특정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자본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도 특정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은 사회적 자본에 의한 이익을 공유하게 되며, 심지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에게까지 돌아가기도 한다. Putnam(1993b)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공공재'로 보고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Bourdieu, 1986).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여타 자본들이 한번의 획득으로 일정수준의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넷째,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사회적 교환은 다른 경제적 교환과 같이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의 주고받은 신뢰는 영합(zero-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교환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증가되는 정합(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Adler & Kwon, 2000).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Putnam, 1993a).

다섯째, 경제(물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사회적 교환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뢰는 반복적인 교환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이러한 신뢰는 언제든지 배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기반을 둔 자원인 동시에, 그 호혜성은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Ⅱ 사회적 자본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준법정신, 양질의 네트워크, 신뢰의 수준)이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지표들과 낮은 범죄율, 교육 성취, 정부 효율성, 개인 소득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결과(outcomes) 사이의 긍정적 영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비용의 감소, 지식의 보급과 혁신 가능성 신장, 협력적이고 사회적 관심 행동의 촉진,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파생 효과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가. 거래비용의 감소

거래비용의 감소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은 경험법칙과 일반적 이해, 그리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양질의 네트워크도 두 가지 방법으로 거래비용을 감소하는데, 먼저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은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 검색(search)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네트워크가 준법정신과 신뢰수준을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신뢰는 많은 거래의 성사를 위해 중요하다. 비공식적인 매일의 거래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며, 직장 내 높은 신뢰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낮추고 근로자에게 융통성 있는 과업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상업적 거래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면 과잉서비스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계약의 필요성도 낮출 수 있다.

콜만(1988)의 연구에 의하면, 뉴욕시의 보석상들은 많은 양의 고가의 보석을 거래하지만, 문서로 보석의 양과 질을 명시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각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이들이 계약서나 각서, 보증 등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비용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속도, 양,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콜만은 이러한 신용거래가 가능한 것은 보석상들의 사회적 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뉴욕의 보석상 사회는 유태인들

이 몇 세대에 걸쳐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첩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보석상 사회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문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복잡한 대규모 사회의 상업계약에서 강한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공식적인 계약 및 거래의 감시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분명히 거래비용을 낮추고 방어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낳을 것이다.

나. 지식의 보급과 혁신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지식 및 정보의 보급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반적 수준에서 보다 더 잘 연결된 공동체는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집단 내 구성원들의 강한 연대는 관계에 매몰된 행동을 야기하고, 이는 새로운 생각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편협과 관성의 결과를 가져온다(Adler and Kwon, 2000).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속성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Svendsen (2009)은 사회적 자본의 연계의 유형에 따라 결속(Bonding), 연결(Briding), 연계(Linking)로 구분한다. 결속은 폐쇄적인 내부 결속적 연계로 설명되며 배타적이며 집단 고유의 신뢰만을 형성한다. 집단 내 결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사회적 자본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결은 배경이 다른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연계하는 열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력 있는 관계는 자발적 연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의 보급과 혁신의 측면에서 연결 사회적 자본은 결속 사회자본 보다 긍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그리고 연계는 일반시민들이 정부의 역량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공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다. 협력적이고 사회적 관심 행동의 촉진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스미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공동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Adam Smith, 1776). 그러나 또 다른 경제학 이론들은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적으로 불완전하고 심지어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많은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삼가야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으나, 개인들은 때때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쓰레기를 버리곤 한다. 이때 사회규범은 이러한 이기주의를 중단시키고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재에 기여한다.

또한 조직 단위에서는 솔직함과 신뢰의 직장문화가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기업목표의 달성을 향상시키고, 자본시장이 취약한 공동체 단위에서는 강한 사회적 자본이 재정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나 마을기업, 관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군 감축, 질병의 발생, 환경 파괴 등에 대하여 정부 및 국가 간 공동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라.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파생 효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많은 현상들은 고유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지닌다. 친구나 동료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들은 더 큰 삶의 즐거움과 소속감을 경험하고 자부심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업 경력과 소득 측면에서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과 장수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결과는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파생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개인은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덜 재정적 부담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즉, 질병 경험 및 우울, 그리고 실업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은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의미하여 재정에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개인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개인 네트워크의 사회적 파생효과는 세대 간의 파생효과로도 나타난다. OECD(2001)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비율은 사회통합이 낮은 공동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는 아동의 이후 삶에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2. 부정적 효과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네트워크, 신뢰 등의 증가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복지 강화와 복지 감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몇몇 경우에 비용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사회적 자본도 물적 자본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사회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부정적인 측면은 외부자에 대한 역효과, 내부자에 대한 역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외부자에 대한 역효과

특정 집단 내의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그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 더 확장된 공동체로의 이전은 그 집단의 목표에 달려있다. 경우에 따라 집단 목표의 달성은 공동체의 복지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마피아 조직과 판매자의 담합이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의도한 집단 차원의 행동은 외부자에 대한 기회의 배제를 가져 올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집단 안에서의 높은 사회적 자본은 더 확장된 단위의 사회적 자본을 악화시킬 수 있다(Alder and Kwon, 2000)거나 국가 자원의 불균형적 공유로 거시 경제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Woolcock, 1998)고 지적된다.

나. 내부자에 대한 역효과

공동체와 집단 참여는 종종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응을 요구한다. 포르테스(Portes, 1998)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사회적 통제의 수준이 강하고 개인적 자유가 제약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정 집단 내 사회적 규범과 책임은 여러 측면에서 번영을 위한 개인적 동기를 억압할 수 있다.

울콕(Woolcick, 1998)은 외부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더불어 내부자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 강하고 장기적으로 연결된 시민 사회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무거운 책임으로 개인의 경제적 성과를 억제하고 더 확장된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를 방해한다.

Ⅲ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1. 기존 연구 : Knack & Keefer(1997)[1)]

Knack & Keefer(1997)는 사회적자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힌 대표적인 논문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자본은 신뢰(Trust)와 규범(Civic Norm)으로 그 수준을 측정하여 경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인종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한 국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뢰 및 규범수준과 경제적 성과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Putnam(1993)[2)]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인간관계 즉,

각종 사회활동의 정도와 경제적 성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계약에 의한 권리가 잘 보호되는 국가일수록 그리고 사회계층간 또는 인종간 양극화가 심하지 않을수록 신뢰수준과 규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가. 신뢰와 규범의 경제적 성과로의 직접적 경로

이 논문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신뢰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형태의 거래에서 대금결재가 미래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는 직원의 노력을 감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뢰에 기초한 고용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정책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으로부터 개인과 기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쉽게 침해되는 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경제활동은 장기적인 투자 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1)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97

2)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나. 신뢰와 규범의 경제적 성과로의 간접적 경로

Knack & Keefer(1997)은 신뢰와 규범은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 관료와 정치집단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정부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Putnam(1993)에 의하면 이태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남부에 비해 사회의 신뢰와 규범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북부와 중부의 경우 공공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와 규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일반 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접촉은 개인의 영리보다는 사회전반의 후생증진에 관한 요구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자본에 대한 많은 이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사회적자본이 과연 측정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Knack & Keefer (1997)은 사회적자본의 계량화를 위해 World Value Survey에 포함된 설문내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1981년(21개 국가) Survey와 1990-1991년(28개 국가) Survey 두 차례에 걸친 설문자료를 이용하였고 일반적인 신뢰수준(Trust)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을 신뢰지수로 사용하였다.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후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35.8%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규범(Civic norm)은 설문내용중 다음 5개 항목에 대한 10점 scale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a) 수급자격이 없는 정부지원을 당신이 수급하는 것
b) 공공 교통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
c) 탈세할 기회가 있다면 탈세를 하는 것
d) 길에서 발견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e) 주차장에서 사고로 다른 차에 흠집을 내고도 알리지 않는 것

원자료에서는 1(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부터 10(항상 정당화 된다) 로 되어 있으나 Knack & Keefer(1997)은 이 수치를 반대로 1을 10으로 10을 1로 재해석하여 합산한 후 사회규범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표본 전체에 대한 평균은 39.4, 표준편차는 2로 계산되었다.

〈표 3〉 신뢰 및 사회규범지수

국가	신뢰 (Trust)	사회규범 (Norm)	정부신뢰
노르웨이	61.2	40.75	0.72
핀란드	57.2	40.64	0.66
스웨덴	57.1	41.57	0.65
덴마크	56.0	40.34	0.76
캐나다	49.6	39.74	0.70
호주	47.8	38.27	0.64
네덜란드	46.2	38.36	0.63
미국	45.4	40.55	0.61
영국	44.4	40.07	0.54
스위스	43.2	40.89	-
아이스랜드	41.6	41.07	0.73
일본	40.8	41.79	0.46
아일랜드	40.2	37.51	0.73
한국	38.0	39.64	0.61
스페인	34.5	38.75	0.55
인도	34.3	42.65	0.67
오스트리아	31.8	41.45	0.60
남아공	30.5	36.99	0.70
벨기에	30.2	38.08	0.60
독일	29.8	39.83	0.54
아르헨티나	27.0	39.50	0.28
이태리	26.3	41.23	0.44
프랑스	24.8	36.26	0.62
나이제리아	22.9	39.19	0.73
칠레	22.7	36.80	0.64
포르투갈	21.4	36.89	0.45
멕시코	17.7	34.55	0.53
터키	10.0	42.43	0.61
브라질	6.7	37.58	0.55

자료: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97

Knack & Keefer(1997)은 1인당 소득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앞에서 정의한 신뢰(Trust), 사회규범(Civic Norm), 1960년 초/중/고/진학율(SEC60), 1980년도 1인당소득수준(PI80), 투자재의 미국대비 상대적 물가수준(PRIM60), 1980년 GDP(GDP80)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신뢰, 사회규범과 경제적 성과간의 계량분석 결과

추정식	1	2	3	4	5	6
모델	OLS	OLS	OLS	OLS	2SLS	OLS
종속 변수	1인당소득 증가율 (1980-1992)					Investment/ GDP (1980-1992)
상수	-0.935 (1.280)	-10.476 (4.730)	-9.593 (4.520)	-2.829 (1.895)	-1.037 (1.898)	9.617 (3.820)
GDP80	-0.361 (0.131)	-0.273 (0.126)	-0.375 (0.127)	0.152 (0.274)	-0.366 (0.127)	0.162 (0.4030)
PRIM 60	6.192 (1.051)	5.930 (1.164)	7.061 (1.224)	4.818 (1.709)	6.270 (1.759)	11.655 (3.558)
SEC60	2.194 (1.632)	3.457 (1.543)	1.648 (1.485)	1.256 (1.930)	2.085 (2.133)	-0.431 (8.286)
PI80	-3.693 (0.867)	-3.117 (1.100)	-3.535 (0.935)	-3.930 (0.755)	-3.713 (0.809)	-4.435 (1.993)
TRUST	0.082 (0.030)		0.076 (0.030)	0.192 (0.060)	0.086 (0.039)	0.146 (0.078)
CIVIC		0.272 (0.098)	0.207 (0.092)			
TRUST*GDP80				-0.013 (0.006)		
Adj R^2	0.55	0.44	0.56	0.60	0.52	0.37
SEE	1.37	1.52	1.35	1.29	1.37	4.43
Mean, D.V.	1.45	1.45	1.45	1.45	1.45	22.4

주1)추정식 7은 공간제약상 생략되었는데 Civic의 추정계수는 0.872(0.301)임

계량분석결과 사회적자본의 대리변수와 경제적 성과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변수(Trust)의 10%신장에 대해 1인당소득수준은 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추정식 1). 50점 만점인 사회규범(Civic Norm)이 4점 증가하는데 대해 소득은 1%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추정식 2).

추정식 6은 사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7% 증가하는데 대해 소득은 1%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설명변수 추가에 따른 신뢰 및 규범변수 추정계수변화

종속 변수	1인당 소득증가율		Investment/GDP	
추정식	1	2	6	7
설명 변수	TRUST	CIVIC	TRUST	CIVIC
최초 추정식	0.082 (0.030)	0.272 (0.098)	0.146 (0.078)	0.872 (0.301)
한국 제외	0.054 (0.020)	0.223 (0.081)	0.081 (0.061)	0.657 (0.270)
한국과 스위스 제외	0.038 (0.016)	0.202 (0.082)	0.051 (0.060)	0.575 (0.233)
Labor force growth	0.082 (0.027)	0.312 (0.105)	0.146 (0.075)	0.928 (0.311)
대외개방도 (수출입/GDP)	0.071 (0.025)	0.334 (0.116)	0.141 (0.072)	0.930 (0.310)
지적재산권지수 (ICRG)	0.083 (0.039)	0.300 (0.084)	0.155 (0.096)	0.917 (0.311)
Currency depreciation	0.047 (0.023)	0.221 (0.103)	0.108 (0.078)	0.808 (0.303)
지니지수 (소득)	0.059 (0.028)	0.099 (0.101)	0.143 (0.073)	0.814 (0.418)

한국은 표본대상 국가중에서 신뢰수준과 소득수준증가율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국가로 outlier로 분류되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것은 “한국제외”로 구분하였다. 또한 스위스는 신뢰수준과 투자의 GDP대비비중에 있어 상관계수가 커서 outlier로 구분되었다. 이들 두 국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 “한국과 스위스제외”로 표기되어있다.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되는 경우 1인당 소득증가율을 종속변수사용한 모델에서 신뢰(TRUST)변수의 추정계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의 GDP대비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는 사회규범(CIVIC)의 추정계수가 0.872에서 0.575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타 설명변수의 추가에 따른 TRUST와 CIVIC변수의 추정계수 변화는 Currency depreciation(환율평가절하)과 Gini계수를 추가하는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환율평가절하의 경우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1인당 소득상승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 TRUST의 추정계수가 0.082에서 0.047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자수준의 GDP대비 비중인 Investment/GDP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델에서는 CIVIC과 TRUST의 추정계수에 큰 변화를 찾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Gini계수를 추가하는 경우 1인당소득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TRUST의 추정계수가 0.082에서 0.059로 크게 감소하였고 CIVIC의 추정계수도 0.272에서 0.099로 감소

하였다. 그러나 투자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에서는 TRUST와 CIVIC의 추정계수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기타 관련 연구

Knack & Keefer(1997) 이후 이와 유사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고 신뢰에 대한 추정계수도 다양한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우선 Zak & Knack(2001)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신뢰수준의 추정계수를 0.063으로 추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Berggren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0.062로 추계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추정결과에서는 이병기(2009)가 Pooled OLS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추정계수가 0.3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3. World Value Survey Data를 이용한 신뢰와 사회 네트워크 가입과의 상관관계 분석

World Value Survey는 전세계 87개국 국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각종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본 연구에서는, 5차례에 걸쳐 1981~2008년간 조사된 자료 중에서 신뢰(trust) 및 사회 네트워크 가입에 대해 응답한 케이스들을 활용하여 두 범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신뢰수준과 사회적 연결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사회연결망이 어떠한 상관과계를 가지는지를 WVS의 신뢰수준과 사회 네트워크별 가입여부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뢰수준은 WVS 설문문항 중 “모든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의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 연결망과 관련된 척도는 응답자의 사회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참여 비중을 통해 측정하였다.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해 신뢰와 사회연결망의 가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단순하게 각 응답(개인수준)에서 ‘신뢰한다’와 ‘가입’하거나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 및 연도별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중의 평균과 분야별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중의 평균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 신뢰와 사회 네트워크 가입여부와 상관관계

구분		개인간	국가간
단체가입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0.027**	0.055
	종교단체	-0.011*	-0.150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0.028**	0.019
	노동조합	0.062**	0.330*
	정당	0.052**	0.272
	지역 정당 활동	-0.011*	-0.101
	인권단체	0.014**	-0.029
	환경 및 생태, 동물 권리 보호	0.012*	0.030
	전문가 협회(단체)	0.052**	0.257
	청소년사업	0.002	-0.121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0.013**	0.054
	여성단체	0.004	-0.079
	평화운동	-0.022**	-0.192
	보건관련 단체	-0.005	-0.095
	기타 다른 단체	0.043**	0.264
자원봉사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0.036**	0.287
	교회나 종교단체	-0.035**	-0.383*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0.017**	0.051
	노동조합	0.015**	0.067
	정치관련 정당 및 그룹활동	0.041**	0.211
	인권단체	0.001	-0.153
	환경, 동물 권리 보호	0.017**	0.177
	전문가 협회	0.032**	0.141
	청소년사업	0.005	0.009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0.010*	-0.052
	여성단체	0.003	0.005
	평화운동	-0.003	0.022
	보건관련 단체	0.002	0.056
	기타	0.035**	0.294

Ⅳ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공적제도(formal institution)를 통해서도 형성된다(이동원 외, 2009).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자발적 단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로 의존적으로 느리게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적제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자발적 단체 활동을 통해 자본의 축적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최근 사회적 자본을 정책을 통해 육성이 가능한 공공재로 보는 제도적 접근에 더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제도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공급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즉,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해 정부가 투자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자본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발전과 공적 제도의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잠재성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제도적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정부 및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측면에서만 OECD 평균에 머물고, 신뢰, 사회규범 및 사회구조 측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동원, 2009). 신뢰 영역이 취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 금융시장 신뢰, 정부의 소유권 보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사회규범의 영역에서는 법질서 준수, 부패,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호혜의 규범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구조 영역에서는 정부 효과성과 민주주의,

소득 양극화 등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비공식적 연고를 중시하는 특징은 위와 같은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배타적 집단주의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낮은 신뢰, 후진적 법질서 의식, 폐쇄적 네트워크 및 배타적 집단주의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자체 및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일반 신뢰의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규범 및 제도의 질서가 확립되면 개인·네트워크 간의 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일반화된 신뢰를 제고하게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법·규정 및 공공부문 관행의 명료화·투명화, 법의 엄정한 집행 및 부패추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조권중, 2010).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재산권이 엄격히 보호되고 시장경제원칙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때 지나친 규제나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법집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과의 소통이 전제된 것이라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서도 정부 및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다. 공공부문의 혁신은 공공서비스 향상에서 시작되는데,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정책의 책임성,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이 공공재로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다가갈 때 정부의 혁신은 공적 신뢰의 형성을 촉진한다(조권중, 2008). 이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수혜자와의 의사소통이다.

셋째, 정부 주도의 신뢰문화 함양이 필요하다. 신뢰는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과 출판물 및 미디어를 이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문화 창출의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근거한 내실 있는 토론문화를 증진할 수 있으며, 국민으로부터의 제안 방식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조권중, 2010). 또한 이러한 신뢰 문화가 바탕이 될 때 정부의 다른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들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균형적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확대

한국사회는 사회구조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높고, 이를 해결하는 정부의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 저해되는 것은 자명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박준, 2009)에 따르면, 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으로 완화될 때 1인당 GDP가 27% 증가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최근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집단행동, 불법파업 등 사회갈등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2009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구조조정 기업의 근로자들이 CEO를 감금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이동원, 2009).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기타 이념이나 문화와 같은 추상적 갈등보다는 정부의 갈등 관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및 기타 교육, 보건, 주거 등의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갈등 완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신뢰를 증진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며,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다[3].

특히 최근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접근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며,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지출의 사회투자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사회투자국가'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사회투자는 "미래에 발생할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을 높이기 위해 사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현재의 지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 투자는 사회통합, 사회협력,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정형선, 2007). 즉, 소득재분배를 넘어 기회의 재분배에 비중을 두며,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호를 넘어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회의 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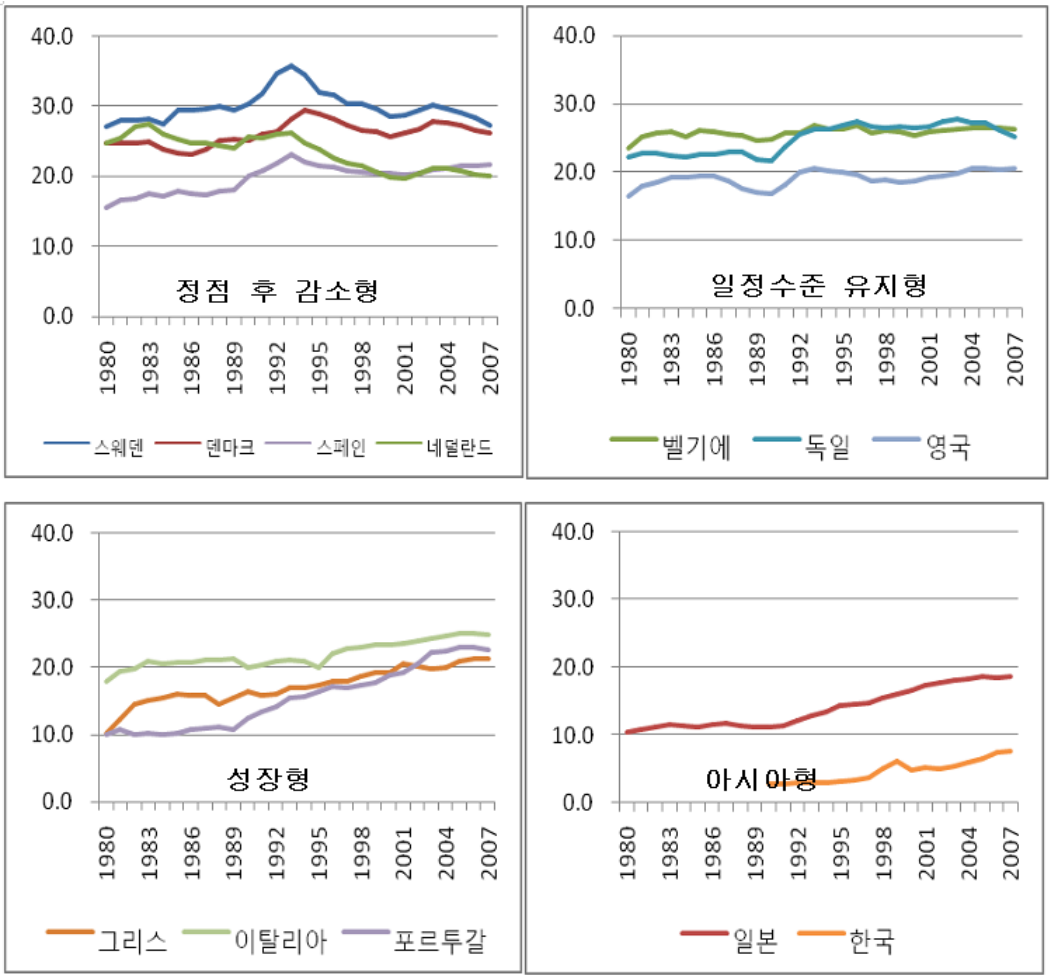
이렇듯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3) 일부 연구는 소득분배와 신뢰와의 양방향성에 대해 지적한다. 즉,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사회일 수 있지만, 애당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와 관대한 복지제도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동원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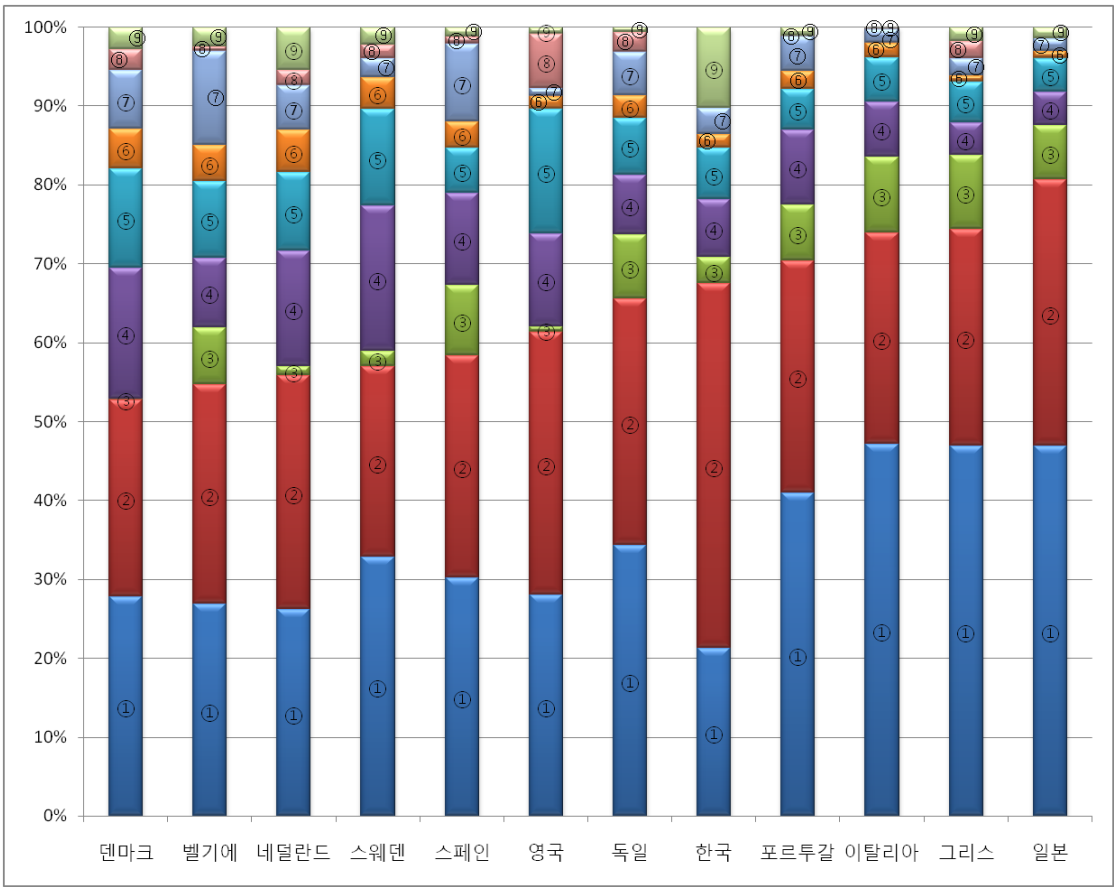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능사인가. 그렇지가 않다.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즉, 국가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엔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980~2007년의 OECD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와 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양상 유형별 지출 수준(1980~2007)

(단위 : GDP 대비 %)



[그림 3]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에 따른 분류



특히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 보건 분야의 지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과 노령, 보건 분야의 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특징은 노령·보건 분야의 지출비중이 큰 반면에 개혁을 통해 지출수준이 정점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는 노령·보건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와 노령·보건 분야 비중에 따른 국가 유형분류

구분		변화추이에 따른 지출유형			
		정점후감소형	일정수준형	성장형	아시아형
노령·보건 분야 비중	상 (70% 이상)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중 (60%이상- 70%미만)		독일 영국		한국
	하 (60%미만)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와 비교해 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있고, 노령 및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총수지는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복지지출보다 기타지출이 재정불균형 상태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유사한 모습으로, 특히 지출규모의 증가, 노령 및 보건 분야의 비중 확대의 변화가 반영될 경우 그 유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지출수준이 높다고 해서 재정상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균형재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약 25%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불균형에 속한 국가들이 20%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구조,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지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적절한 복지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참여활동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공공재적인 사회속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신뢰와 협력의 기제를 형성하는 선순환 효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고양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에 접근한다. 대표적 연구자로서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정치참여 활동에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시민사회가 정치활동 다양성과 민주적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자본의 존재 형태와 동학(dynamism)에 따라 다양한 민주주의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은 토크빌로부터 시작되었다. 토크빌(Tocqueville, 2005)은 "결사체는 협조의 습관, 단결심과 공적 정신을 구성원들의 마음에 고취시킨다"고 하였다. 이후 토크빌의 접근을 계승한 퍼트남은 자발적 결사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시민참여의 핵심이라고 보고,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간 신뢰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결망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자발적 결사체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 수가 많을수록 한 개인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결사체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신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퍼트남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는 오래된 길드 조직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상호부조모임에 기인한다고 보았는데, 협동조합 또한 이러한 상호부조모임의 경험에 기초하여 만들어 진 것이라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와 같은 협동조합의 신뢰 증진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UN은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신뢰도가 높은 선진국의 경우 협동조합법 등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활발히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그 사례로 영국, 미국, 캐나다의 협동조합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은 19세기 이전에도 협동조합과 유사한 경제조직들이 존재하였고, 1970년대에는 사회운동의 영향과 노동당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발달하였다. 협동조합 수 증가와 더불어 조합원 및 협동조합에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영국 협동조합 일반현황

(단위: 천명, 백만파운드)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2006	4,370	10,991	195
2007	4,735	10,809	237
2008	4,820	11,300	206
2009	4,992	12,951	238
2010	5,450	12,755	236

자료: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의 초기 협동조합은 주로 농산물판매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전화, 전기 및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및 관련분야 들은 물론 모든 산업에서 걸쳐 빠른 발전을 보이게 된다. 2차 대전 직후에는 70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농민협동조합이 가장 강력했지만, 전체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축소되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가장 큰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미국 전역에 약 27,000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표 9〉 미국의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백만불, 천명)

협동조합 유형	회사수	직원수 (Employees)	회원수 (Membership)
직원(Worker)	223	2.38	55.1
생산자(Producer)	1,494	72.93	714.65
구매(Purchasing)	724	130.35	6,133
소비자(Consumer)	26,844	650.65	343,969
총(Total)	29,285	856.31	350,872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2009)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가는 캐나다이다. 2007년 현황조사[4]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5679개의 비금융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6,638,0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0년부터 2007년까지 캐나다 인구는 3.2배 증가한 반면 협동조합원수는 8.8배 증가하여 협동조합의 규모가 급속히 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Co-operatives in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0

〈표 10〉 캐나다협동조합의 유형별 규모(2007년)

협동조합유형	협동조합수(개소)	조합원수(천명)	직원수(명)
소비자	502	5,212	29,657
농업 원자재	218	423	6,866
판매	161	39	25,005
수산업	50	7	1,823
생산	565	39	7,116
서비스	4,183	918	16,754
총계	5,679	6,638	87,221

지난 10월 우리나라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의결권·선거권이 1인 1표 행사가 원칙이며, 각종 위원회를 두어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이바지한다, 즉, 결사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켜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규범과 가치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의 촉진 기제가 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 활용방안 등을 적극 홍보하여 설립 활성화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주식회사, 농·수협 등)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우수사례 및 관련 정책을 우리나라 제도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인 '자주', '자립', '자치' 등을 구현하고 정책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운영비 등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교육·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존 법·제도상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개선 적극 추진해야한다.

참고문헌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제38집 제6호. 한국사회학회.

김준환(2004).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 제5집, pp.89-120.

유석춘 외(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이동원 외(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조권중(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 증대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Adler, Paul S & Seok-Woo Kwon(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th-Heinemann.

Bourdieu, Pierre(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Coleman, Jame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Cox, E., & Caldwell, P(2000). Making Policy Social. In *I*. Winter,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in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F. Fukuyama(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Putnam, Robert D(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D(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pp.25-42

Putnam, Robert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65-78.

Stone, W., Gray, M., & Hughes, J.(2002). Social Capital at Work: How Family, Friends and Civic Ties Relate to Labour Market Outcomes. Research Paper no. 31.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Portes, Alexandro(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1-24.

Woolcock, Michael(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pp.151-208.

World Bank & Knack, S(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r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Th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pp.772-785.

Gert T. Svendsen & Gunnar L.H. Svendsen(2009). Handbook Of Social Capital.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1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한국국제경제학회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하준경

Ⅰ 머리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보다 둔화 추세가 빠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OECD는 한국이 성장세 둔화가 OECD 내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 제시

□ 각국의 성장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렴성, 중진국 함정 등의 실체를 살펴보고 성장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

○ 이를 토대로 한국식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특히 다른 나라의 성장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구조와 경제제도적 여건의 적합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

Ⅱ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패턴 분석

1. OECD 국가들의 수렴성

□ 거시적으로 볼 때 중진국의 선진국 진입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의 변화 패턴은 수렴성(convergence)과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 또는 중진국 함정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

○ 수렴성은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고 기술도입이 수월하여 성장률이 높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 사이의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말함.

* 이 수렴성은 모든 나라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클럽에 속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음(Galor 등의 Club convergence 이론)

○ 비수렴함정은 저소득국가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뒤 더 이상 선진국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 원인은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장전략을 답습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음(Acemoglu, Aghion, and Zilibotti)

□ 본 연구에서는 클럽수렴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렴성을 판단해보고 국가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나라들을 교훈으로 삼을지 알아보기로 함.

○ 현재 OECD 국가들 중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타이완과 싱가포르는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참고로 포함

□ 먼저 수렴성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가장 단순한 분석방법은 2000년의 소득이 낮을수록 이후 10년간의 성장률이 높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임.

○ 즉,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테스트해볼 수 있음.

$$growth_{0-n,i} = \alpha + \beta y_{0,i} + \epsilon$$

□ 위의 식을 테스트해본 결과 2000-10년 간의 성장률에 대해서, 그리고 2005-10년 간의 성장률에 대해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수렴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즉,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수렴해가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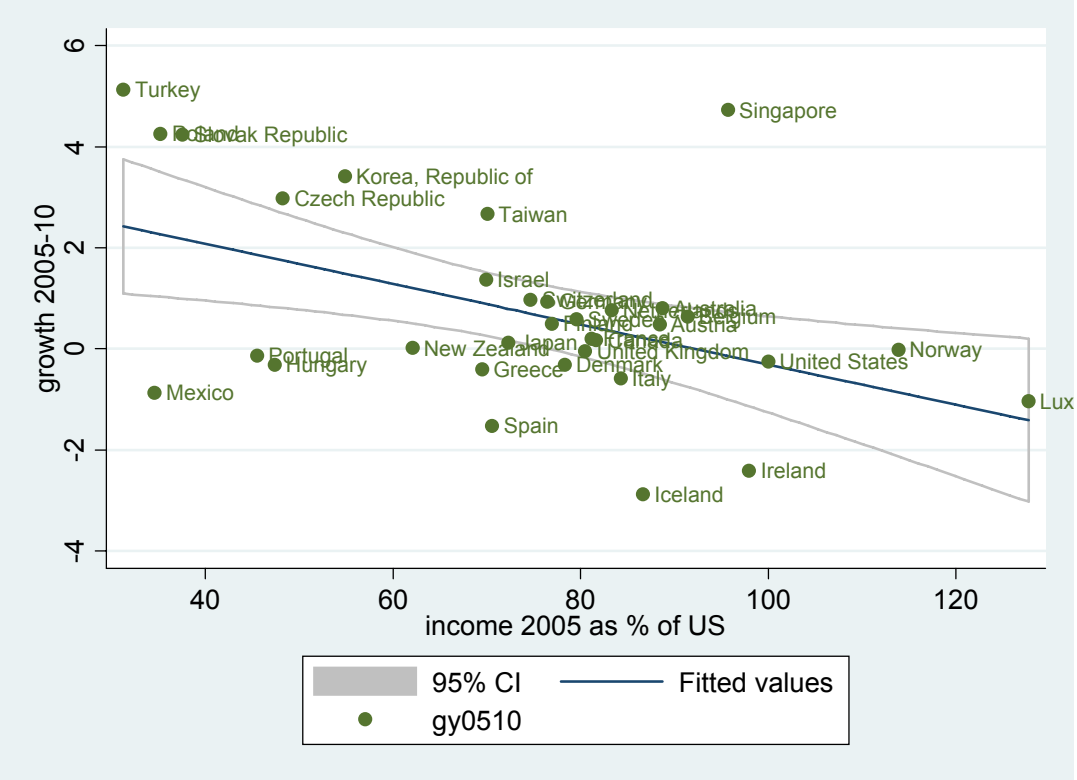
□ 그림에서 2000-10년 간에 비해 2005-10년의 수렴성이 더 약함을 알 수 있고, 또 상당수 국가들이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나라들 사이의 편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임.

○ 아울러 싱가포르와 같이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나라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OECD 국가라 할지라도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수렴 과정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그림 1〉 2000-10년 간의 수렴성

〈그림 2〉 2005-10년 간의 수렴성



□ 다른 한 편으로 비수렴함정의 예를 찾아본다면 아직 고소득국가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림에서 수렴영역의 아래에 놓은 국가들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나라들로는 포르투갈, 멕시코, 그리고 헝가리 등이 있음.

○ 그리스, 스페인 등도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70%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저조한 국가들임.

○ 미국 대비 소득이 70%-100% 사이에 있는 국가 중에서 2000년대 평균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들은 아일랜드, 이태리, 아이슬란드 등임.

□ 이들 저성장 국가들은 남유럽국가(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대외의존적 성장을 누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경제(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헝가리), 그리고 경제규모는 큰 편이나 지역간 격차, 빈부격차 등으로 활력을 잃은 국가(멕시코)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 OECD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성장률과 수준

country	성장률 90-2000	성장률 2000-10	성장률 2000-05	성장률 2005-10	1인당 소득 (미국 대비 비율)		
					2000	2005	2010
Luxembourg	1.58	-0.44	0.15	-1.03	135.81	127.73	122.85
Singapore	4.48	3.33	1.94	4.73	93.07	95.71	122.75
Norway	2.95	0.90	1.83	-0.02	111.34	113.88	115.18
United States	2.36	0.57	1.38	-0.25	100.00	100.00	100.00
Belgium	1.61	0.73	0.83	0.64	93.98	91.40	95.56
Australia	2.57	1.29	1.78	0.80	86.96	88.72	93.51
Austria	1.45	0.82	1.16	0.48	89.42	88.42	91.72
Ireland	4.03	-0.15	2.10	-2.41	94.49	97.97	87.96
Netherlands	1.52	0.45	0.13	0.76	88.69	83.31	87.64
Canada	1.95	0.58	1.00	0.17	83.26	81.67	83.41
France	1.09	0.57	0.94	0.20	83.01	81.20	83.03
Sweden	2.01	1.26	1.93	0.58	77.38	79.55	82.92
Italy	1.86	-0.13	0.33	-0.59	88.83	84.27	82.85
United Kingdom	2.98	0.81	1.66	-0.04	79.38	80.51	81.38
Germany	1.23	0.37	-0.20	0.93	82.77	76.48	81.14
Taiwan	4.65	2.44	2.22	2.67	67.19	70.06	81.08
Finland	1.98	1.36	2.22	0.50	73.77	76.91	79.86
Switzerland	0.13	0.71	0.44	0.97	78.24	74.66	79.37
Denmark	2.95	0.37	1.04	-0.31	79.65	78.30	78.07
Iceland	-0.68	-0.58	1.71	-2.88	85.23	86.66	76.00
Israel	1.80	0.46	-0.45	1.37	76.63	69.93	75.83
Japan	0.40	0.82	1.52	0.12	71.80	72.29	73.63
Greece	1.29	1.32	3.05	-0.41	63.92	69.49	68.95
Spain	1.45	-0.61	0.30	-1.52	74.50	70.57	66.22
Korea	3.90	3.12	2.81	3.42	51.10	54.89	65.95
New Zealand	1.89	0.79	1.57	0.02	61.51	62.08	62.93
Czech Republic	0.14	3.51	4.05	2.98	42.23	48.25	56.70
Hungary	1.35	1.69	3.69	-0.32	42.23	47.39	47.23
Slovak Republic	0.33	4.19	4.15	4.24	32.69	37.54	46.99
Portugal	2.35	-0.29	-0.44	-0.13	49.85	45.51	45.78
Poland	3.96	3.82	3.38	4.26	31.87	35.21	44.13
Turkey	2.24	4.15	3.17	5.13	28.60	31.26	40.92
Mexico	-1.21	-0.50	-0.13	-0.87	37.32	34.60	33.54

자료: Penn World Table 7.1

□ 반면 소득수준이 미국 대비 70% 이상으로 높으면서도 성장실적이 좋거나 현저히 개선된 나라들은 다음과 같음.

(1) 2005-10년 1인당 소득의 평균 성장률이 0.5% 이상인 나라(2005년의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70% 이상): 싱가포르,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대만,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2) 2000-10년 1인당 소득의 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인 나라(2000년의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70% 이상): 싱가포르, 호주, 스웨덴, 핀란드

(3) 2000-05년 기간에 비해 2005-10년의 성장률이 0.5%p 이상 상승한 나라(2000년의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70% 이상):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 이상의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등임.

□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경제성장 모범 국가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경제성장 부진 국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헝가리, 멕시코

2. OECD 국가들의 성장요인 분석-성장회계 및 개발회계

□ 성장회계 및 개발회계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성장요인을 분해해보면 〈표 2〉와 같음.

○ 성장회계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Y = AK^{\alpha}(hL)^{1-\alpha}$를 활용($\alpha = 0.3$)

○ 자본스톡 K는 Penn World Table 7.1의 데이터에서 영구재고법을 통해 산출

○ 1인당 인적자본 스톡 h는 Barro-Lee 교육 데이터에서 Mincerian 접근법을 통해 산출($h = e^{\theta s}$, $\theta = 0.07$, s=평균 취학년수)

□ 이 표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1) 성장 모범국가와 성장 부진국가 간에 물적자본으로 인한 성장률과 인적자본으로 인한 성장률의 격차는 크지 않음.

(2) 성장 모범국가와 성장 부진국가 사이에 총요소생산성(TFP)으로 인한 성장률 격차가 현저함.

□ 성장 모범국가들은 대부분 TFP 증가율이 양호한 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나라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싱가포르: TFP 중심

○ 호주: 물적자본 중심

○ 네덜란드: 물적자본 중심

○ 스웨덴: 균형적 성장(최근 년도는 물적자본 중심)

○ 독일: 인적자본 중심(최근 년도는 TFP 중심)

○ 핀란드: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중심

○ 스위스: TFP 중심

○ 이스라엘: TFP 중심

□ 우리나라의 경우 물적자본은 미국의 88% 수준이나 TFP는 73%에 불과하므로 TFP를 통한 성장사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인적자본의 경우 미국의 92% 수준이나 이는 양적 지표에 따른 것이므로 교육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표 2〉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요인 분해

분류	국가	성장률(2000-10) 요인 분해			성장률(2005-10) 요인 분해			미국 대비 수준 (2010)		
		물적 자본	인적 자본	TFP	물적 자본	인적 자본	TFP	물적 자본	인적 자본	TFP
성장모범국가	Singapore	0.51	0.52	2.30	0.91	0.65	3.16	124.85	75.80	139.43
	Australia	0.99	0.17	0.13	1.07	0.24	-0.52	109.79	93.38	95.39
	Netherlands	0.44	0.14	-0.14	0.49	0.21	0.06	85.35	86.49	101.73
	Sweden	0.50	0.25	0.51	0.59	0.06	-0.07	70.56	89.84	99.24
	Germany	0.17	0.92	-0.72	0.25	-0.02	0.70	89.18	91.47	89.39
	Finland	0.73	0.87	-0.24	0.70	0.19	-0.40	96.95	80.36	93.93
	Switzerland	0.10	0.16	0.45	0.03	0.22	0.72	99.33	79.81	93.13
	Israel	0.19	0.07	0.20	0.23	0.05	1.09	68.76	88.33	92.54
	평균	0.45	0.39	0.31	0.54	0.20	0.59	93.10	85.69	100.60
성장부진국가	Italy	0.47	0.35	-0.96	0.40	0.36	-1.35	108.73	77.80	96.32
	Spain	0.48	0.51	-1.60	0.45	0.65	-2.62	83.89	82.69	79.74
	Portugal	0.61	0.32	-1.21	0.43	0.39	-0.95	61.19	69.96	68.13
	Greece	0.72	0.88	-0.27	0.60	0.77	-1.78	83.18	84.42	82.05
	Ireland	0.78	0.38	-1.31	0.58	0.38	-3.37	98.87	90.30	94.80

	Iceland	0.86	0.58	-2.01	0.69	0.61	-4.18	106.97	84.75	83.62
	Hungary	0.57	0.22	0.89	0.40	0.16	-0.87	47.05	90.37	63.57
	Mexico	0.24	0.73	-1.47	0.03	0.71	-1.60	33.44	75.66	56.64
	평균	0.59	0.50	-0.99	0.45	0.50	-2.09	77.91	81.99	78.11
기타	Luxembourg	0.49	0.25	-1.17	0.47	0.24	-1.74	125.34	81.07	132.97
	Norway	0.70	0.49	-0.29	0.81	-0.04	-0.79	136.34	94.55	109.15
	UK	0.69	0.40	-0.28	0.64	0.40	-1.08	65.77	79.14	108.71
	Austria	0.40	0.29	0.13	0.27	0.21	0.00	105.68	77.93	107.41
	Belgium	0.55	0.19	0.00	0.63	0.07	-0.06	117.21	83.64	103.25
	United States	0.75	0.19	-0.38	0.52	0.18	-0.95	100.00	100.00	100.00
	France	0.60	0.48	-0.51	0.60	0.64	-1.04	87.00	83.57	98.17
	Taiwan	0.57	0.62	1.25	0.37	0.40	1.90	72.42	88.45	97.34
	Denmark	0.83	0.17	-0.63	0.75	0.18	-1.24	92.39	80.83	92.79
	Canada	0.88	0.52	-0.82	0.99	-0.05	-0.78	84.56	93.15	92.18
	Turkey	1.44	0.46	2.25	2.17	0.53	2.44	28.33	65.33	80.49
	Japan	0.34	0.32	0.15	0.21	0.31	-0.41	108.78	89.94	77.33
	New Zealand	0.62	0.26	-0.08	0.59	0.25	-0.82	56.97	97.19	76.00
	Korea	1.16	0.39	1.57	1.14	0.37	1.90	87.71	91.63	72.92
	Poland	1.13	0.21	2.48	1.37	0.18	2.71	33.69	79.79	71.63
	Czech	0.72	0.17	2.62	0.88	-0.61	2.70	63.40	93.46	68.16
	Slovak	0.28	0.12	3.79	0.45	0.06	3.73	46.88	87.28	64.87
	평균	0.71	0.33	0.59	0.76	0.20	0.38	83.09	86.29	91.37

자료: 저자의 계산

□ TFP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인적자본과 관련해서는 핀란드, 독일을 참고할 필요

○ 이 중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사례분석에서는 제외함.

○ 독일의 인적자본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2000년대 초반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사례분석에서 제외

→ TFP는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인적자본은 핀란드의 사례 참고

○ 미국은 기술혁신의 프론티어이며, 벤치마크 국가이므로 이 역시 참고할 필요

Ⅲ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본 주요국의 경제성장

□ 한편 모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각 국가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이식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요

□ 국가혁신체제(NIS)의 관점에서 모범국가와 부진국가들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효율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표 3〉 참조).

□ 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2000년대 초반에는 모범적이었다가 이후 부진국가로 전락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나친 대외의존적 성장이라는 특징이 나타남.

○ 이들은 창업활동이 활발하고 1인당 산업부가가치가 높았으며, 기술수출액도 월등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위기에 극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임.

□ 이밖에 거시경제 여건, 소득분배 상황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유로존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의 차이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컸을 수 있음.

○ 소득분배 상황도 사회적 불안정성, 투자여건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향후 변수 추가, 개별 국가별 분석 추가 예정

→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성장전략을 모색: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정착 및 안정화

〈표 3〉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본 주요국의 비교

지표	기준년도	한국	미국	OECD평균	모범국가 평균	부진국가1 평균	부진국가2 평균
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명, FTE)	2004	32.52	47.17	33.04	44.89	14.75	46.67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2002	0.37	0.45	0.44	0.81	0.19	0.25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율(%)	2004	2.68	2.54	1.77	2.68	0.79	2.03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PPP 달러)	2004	178,459	216,891	157,028	204,357	123,548	148,558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율(%)	2004	2.99	2.77	1.73	2.85	0.54	1.83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2004	0.74	1.07	0.63	0.77	0.45	0.66
창업활동지수(TEA)(%)	2005	13.40	12.40	7.10	5.80	5.18	10.20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 비율(%)	00~03	0.27	0.37	0.14	0.15	0.07	0.31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건)	2004	0.000358	0.000557	0.000248	0.000209	0.000057	0.000045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2003	19.03	5.26	12.85	12.30	10.02	10.67
기업간 기술협력(점)	04~06	5.95	7.59	6.25	7.31	4.69	7.04
연구원1인당국제공동특허수(건)	2004	0.000122	0.000477	0.000449	0.000581	0.000093	0.000624
GDP대비(해외투자+외국인투자) 비율(%)	2004	2.06	3.91	6.27	5.70	4.34	14.55
1-B 지수(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점)	2004	0.17	0.07	0.12	0.02	0.25	0.02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점)	04~06	5.42	8.08	6.70	8.02	5.39	7.38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명)	2005	25.35	16.80	14.13	19.65	7.50	16.67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명)	2005	26.32	1.03	4.78	2.98	5.19	0.18
전체 사회기반시설의 품질(점)	04~06	5.10	6.33	5.29	6.20	4.27	5.12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점)	04~06	5.80	6.78	6.91	7.16	6.70	8.59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점)	04~06	4.94	4.75	4.86	5.46	4.16	5.05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PPP달러)	2005	15,540.26	27,102.57	19,557.94	21,547.08	13,903.53	23,561.10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2004	32.76	30.33	16.51	20.19	14.18	20.13
기술 수출액(백만달러)	2004	1,416	66,278	9,310	11,608	1,636	19,851
연간 R&D 투자 대비 미국 특허수(건/백만달러)	2004	0.16	0.28	0.10	0.14	0.03	0.08
연간 R&D 투자 대비 삼극 특허수(건/백만달러)	2004	0.07	0.05	0.05	0.08	0.02	0.03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건/백만달러)	2004	0.11	0.17	0.07	0.11	0.02	0.05
연구원 1인당 SCI논문수(편)	2004	0.15	0.20	0.29	0.36	0.32	0.27
5년 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수(편)	00~04	2.62	6.00	4.27	5.44	3.46	4.88

주: 모범국가는 호주,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부진국가 1은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부진국가 2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임.

Ⅳ 주요국의 사례 분석

주요국의 사례는 각국의 성장전략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접목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분석

1. 미국 - 벤처캐피탈

□ 벤처캐피탈 성공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에 초점

□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이고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기보다는 꼬리가 긴 분포임.

○ 이는 소수의 이른바 “대박”이 수많은 실패를 커버하는 구조

□ 따라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하게 투자되어야 하며, 성공가능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고, 성공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충분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펀드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성공가능 기업을 판별하는 노우하우가 취약하며, 성공기업에 대한 수익을 M&A 등으로 회수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이 성공하려면 펀드의 규모를 늘리되, 성공가능 기업을 판별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성공가능 기업의 판별은 정보공유의 활성화에 기반한 “입소문”이나 명성(reputation)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특히 창업기업 및 벤처 분야의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M&A 시장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이 유망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보다 기술자를 빼오는 것이 더 쉬운 현실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력관리 및 법률 노하우를 지원해주면서 M&A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2. 핀란드 - 교육

□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탐구

□ 한국과 핀란드 교육의 차이는 다방면에서 발견되나 무엇보다 공교육의 질적 차이가 크며, 이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의 학급 사이즈 등 공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

○ 한국의 경우 30명 이상인 반면 핀란드는 20명 수준

○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한국은 20명 수준인데 비해 핀란드는 14명 수준

○ 이밖에도 핀란드 교사의 질적 수준(석사 이상), 책임감(고향에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reputation을 활용, 학부모와 잦은 의사소통), 팀티칭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공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의 차이는 공교육의 수익성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경우 한국의 공적 교육투자의 내부수익률(남성의 경우)은 11.6%인데 비해 핀란드는 7.8%로서 한국의 경우 공적 교육투자를 더 늘려도 좋을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수익률은 투자 대비 수익의 개념인데 한국은 투자와 수익 모두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공적 교육투자로 인한 공적 수익은 소득세 수입 증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경우 현재가치로 남자 1인당 42,363달러인데 비해 핀란드는 130,540달러로 세배 정도임.

○ 즉, 현재 공적 교육투자를 늘릴 여지는 많으나 궁극적으로 공적 교육투자는 소득세를 통한 공적 수입에 대응하게 됨.

3. 이스라엘 - 요즈마 펀드

□ 요즈마 펀드의 도입 가능성 및 성공의 전제조건을 탐구

※ 요즈마 펀드 프로그램(이스라엘 산업통상부; 중소기업 정책연구 DB)

○ 개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 이스라엘 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주요 국제투자처의 이스라엘 기술 부문 개입을 장려하며, 이스라엘 민간 벤처캐피탈 산업을 발전ㆍ완성시키고, 이스라엘 하이테크 부문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국제적인 업체에게 신축적인 파트너로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펀드
- 1991년 정부의 지원 도구로 시장에 도입되어 1996년 말 정부업체당국(Government Companies Authority)에 의해 민영화됨

○ 진행과정

- 1990년대 초 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이 상당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주입되지 않는 한 이륙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짐
- 벤처캐피탈은 1990년에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고 최초의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1991년에 등장함
- 구소련 연방에서 이민 온 고도로 기술지향적인 이민자들이 기술 잠재력을 실현하기에 이르러 현지 산업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능력과 통합되기에 이름
- 정부는 산업 연구개발 진흥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R&D in Industry)을 통해 기존의 산업체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에 거액을 투자했고 기술 인큐베이터들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지만 여러 단계들의 후속 조치들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함.
- 요즈마는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1억 달러로 1993년 설립됨

○ 사업기간: 1995년 이전부터 시작해 계속 중

○ 지원 대상 및 요건

- 건당 800만 달러가 1개의 연구개발 업체에게 전용 배정되고, 요즈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활동에 계속 참여하며, 파트너들에게는 일정한 기한이 종료된

후 펀드에 있는 요즈마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받고, 요즈마는 이스라엘인이 설립하거나 이스라엘인을 핵심 지위에 채용하는 외국인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함

- 요즈마는 최고 200만 달러까지 투자될 수 있고, 신생업체에서는 투자하지 않으며, 추가 투자자로의 역할은 마케팅이나 경영 등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임
- 계약은 5년간 유효하고 주식 발행이 있을 때 요즈마는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약속함

○ 자금성격: 파트너십 형태

○ 예산: 총액예산제로 1억 미국 달러(1993년 12월 31일 기준)

○ 평가

- 외국 업체와 공동 협력하여 펀드를 설립한다는 개념은 매우 성공적
- 동 시책은 정부에 의해 민영화될 때까지 10개의 벤처 캐피탈 펀드를 설립했고 2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음.
- 동 시책은 경험 있는 벤처캐피탈 펀드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투자하도록 했고 아울러 벤처캐피탈 펀드의 효율성과 경험을 늘리는 데 기여함.
- 2000년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펀드가 조달한 순 벤처캐피탈은 3억6,800만 달러에 달함.

□ 국내에의 도입 가능성: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동구권 유태인 과학자의 유입 같은 것이 없고, 유태인 네트워크와 같은 것도 부재하다는 약점이 존재

○ 따라서 이를 도입하려면 우수인력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조건들(미국 사례 참조)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임.

4. 독일 - 중소기업

□ 독일과 같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음.

□ 그러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요위축,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했으며, 본격적인 성장은 2000년대 후반에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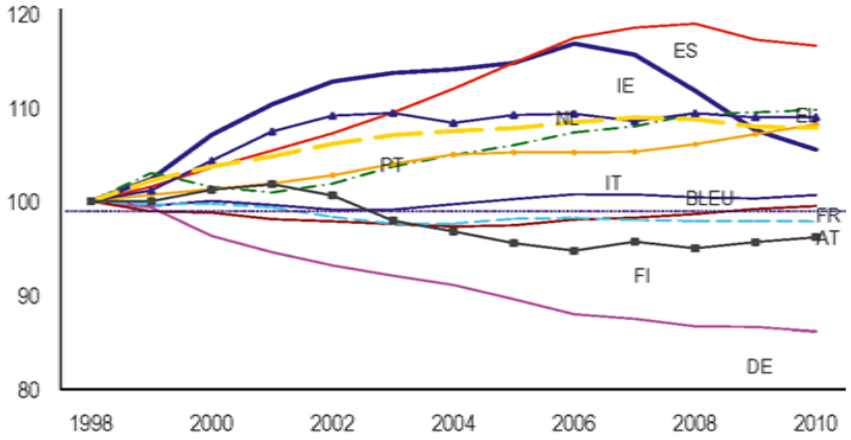
□ 독일 중소기업의 성장은, 정책금융기관인 독일부흥은행(KFW)이 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자본과 부채의 중간 개념인 메자닌(mezzanine) 자금을 통해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등 지원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탄탄한 직업교육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임.

○ 아울러 독일의 2003년 노동개혁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회복지 개편도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이 절하되어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음.

○ 경상수지 흐름으로 볼 때 독일의 통화가치가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절상되었어야 하나 유로화 도입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

〈그림 3〉 유럽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1998=100)



Source: European Commission

□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율제도의 이점을 항상 누릴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제3부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12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1

한국경제학회

신인석 중앙대학교 교수 외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1

신인석 외

Ⅰ 서 론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가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이다. 연구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난 2011년 4월 총선국면 정치권에서 시작되었고,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세 대선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정책화두로 내세우면서 핵심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그 대로 수입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종의 실증적인 접근(positive approach)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규범적인 정의(normative approach)를 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보고서는 후자를 택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방법을 택할 경우 일의적인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둘러싸고 정당 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정당 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역사적인 의미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화두로 등장한 배경을 분석하여 '경제민주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 방법에 의한 경제민주화 정의는 경제민주화의 적절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임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위하여 이 보고서는 먼저 과거 구미국가에서 이 용어의 사용 용례를 살펴본다. 이 조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주로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전통아래 사용되어 왔음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구미 사회민주주의 전통의 경제민주화로 정의되어서는 부적절함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질서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헌법 해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일관된 해석은 경제민주화를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질서의 언명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사회정의' 또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개입을 용인하는 시장경제질서로 해석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개입이라는 헌법학계의 경제민주화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 제고, 공정성 제고가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범정치권의 대선 슬로건으로 등장하게 된 경제적 배경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별한다. 정치권의 논의를 종합할 때 최근 경제민주화 요구의 배경에는 세 가지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분배구조의 악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대기업집단 또는 재벌의 경제력 증가 등이다. 정파 간의 차이는 이 세 요인 중 어느 요인을 보다 중시하는지 그리고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보고서는 경제민주화를 이들 세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개입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는 어떠한가? 경제민주화가 분배구조의 개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재벌의 경제력 감축을 통하여 '공정성'이라는 편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편익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논의를 전개 한다. 경험적인 방법의 논의와 연역적인 방법의 논의이다. 전자는 과거 여러 나라의 경험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어떠한 패턴이 있었는지를 찾는 방법에 의한 논의이다.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장회귀분석 연구가 이 방법을 통한 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이 방법에 의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연역적인 방법의 논의는 분배구조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근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는 방식의 논의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경제에서 분배구조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재벌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경제와는 외생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경제민주화는 이 외생적 요인의 제거인데, 경제성장에 대한 그 효과는 중립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낳은 세 가지 경제적 요인의 근저 원인을 분석하여 그 제거가 경제성장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추론'한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의 논의를 '연역적' 방법의 논의로 지칭하고자 한다.

*** 두 방법에 의한 논의의 결과 요약 ****

이하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정의한다. III장에서는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를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연역적 방법에 의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를 논의한다. V장에서는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 결과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Ⅱ 경제민주화의 정의

1. 서구의 '경제민주주의'

서구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슬로건으로 진화하여온 용어이자 개념이다. 그 기원으로는 영국 페이비안 사회주의(Fabian Socialism)의 선구자인 웹 부부(S. Webb and B.Webb)가 1897년 그들의 저서에서 제창한 '산업민주주의'가 흔히 거론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사회개량주의를 지향하였던 웹 부부는 '산업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노사간 단체교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크게 보아 경제적 의사결정이 정치적 과정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사용된 첫 예가 되었다.

영국 사회개량주의를 배경으로 탄생한 '산업민주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이 팽배하였던 1920년대 독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술의 하나로서 '경제민주주의'로 전환된다.

이후 유럽에서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순화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슬로건으로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논자와 시대에 따라 '작업장 민주주의', '근로자소유기업'의 확산, 전국적 산별노조로 대변되는 노동자 그룹과 자본가 그룹에 의한 '조합주의' 국가경영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결국은 노동자에 의한 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에의 참여확대, 나아가 조직화된 노동자 지위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배에의 참여확대 등으로서 '경제민주화'가 사용되어 왔다. 사회민주주의 용어를 사

용한다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되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 및 주요 경제문제의 의사결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거론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정책적 노력으로는 스웨덴 사민당이 시도하였던 'Wage-earner fund' 운동이 있었다.

2. 한국 헌법의 '경제민주화'

우리나라의 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119조는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조항이고, 그 기본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이라고 말한다[1].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경제재의 생산과 분배가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행하여지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사회정의실현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는 체제"(김철수 2009, p.244; 성낙인 2010, p.259)라고 해석한다. 119조 2항은 자유시장경제 의사결정의 기본 속성인 '효율성(efficiency) 원리'를 '사회정의 원리', 즉 '공정성(fairness) 원리'로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사회정의 관점의 국가개입을 용인하는 경제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체제인가?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현실의 모든 시장경제질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헌법학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자본주의 경제질서도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도 아닌 제3의 질서"(권영성 2009, p.163)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완전자유방임(laissez-faire) 시장경제가 아닌 모든 수정자본주의체제를 포괄하는 것이 되고 현존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일반적 경제질서"(성낙인 2010, p.257)이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이 사용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라는 용어는 2차대전 후 독일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당시 경제학자이자 독일 기민당의 정책이론가였던 뮐러-아르마크(Muller-Armack), 에르하르트(Erhard)가 전후 독일경제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질서를 개념화한 용어이다[2]. 이들이 사용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는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해석하듯이 수정자본주의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면도

1) 예컨대, 김철수(2009) 헌법학 원론, 권영성(2009) 헌법학 신론, 성낙인(2010) 헌법학 등 참조.

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울수 있는 원전의 번역서로는 한국경제정책연구회(1996)가 있다.

있다. 그러나 수정자본주의로 통칭하기에는 좀 더 강한 국가의 시장경제개입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자들의 사상적 기원은 19세기 역사학파에 있다. 독일 역사학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sozialpolitik)'을 마련하는 것을 경제학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3]. 여기서 사회문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야기하는 사회질서의 파괴, 즉 사회양극화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자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시장경제질서는 사회정의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뮐러-아르마크는 통제경제를 비판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묻는다. 경제통제가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약속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하였는가? ... 이 과제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는 원칙적으로 더 훌륭하게 수행되지 않겠는가?[4]" 사회문제의 해결수단 또는 사회정의라는 목적의 달성수단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위치지우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이 견해는 분명히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자유주의 사회의 근본으로 설정하는 M. Friedman, F. Hayek 등 영미 자유주의 전통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개념은 이제 독일을 넘어서 최근 EU의 이념이 되고 있다. 2007년 12월 EU회원국들이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9년 효력이 발휘된 리스본 협약(Lisbon treaty)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시장경제질서를 전제하되 사회정의를 위하여 국가는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영미식 자유주의와는 구별되지만 EU헌법에 도입될 만큼 보편성을 획득한 개념이다.

3. 최근 정책쟁점으로서 '경제민주화'의 배경과 근저요인

가. 분배구조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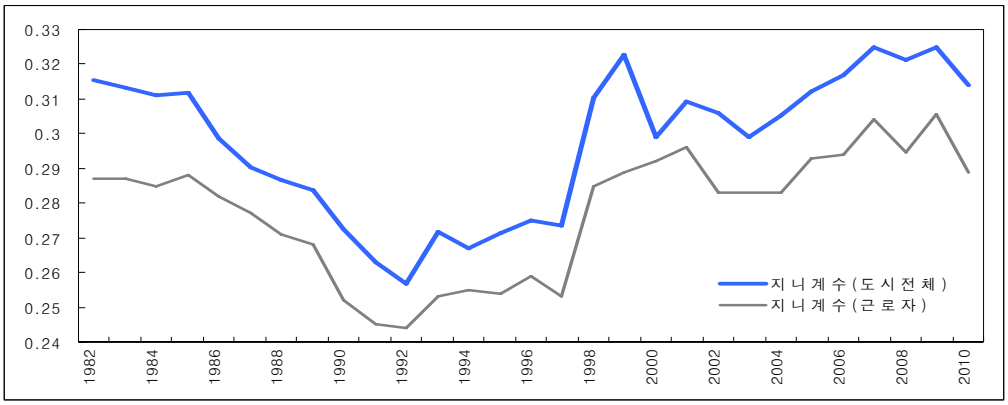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되었으며,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한 후 최근에는 약간의 감소 후

3) 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역사학파의 관계는 Ebner(2006) 참조.

4) Muller-Armack(1947), "Genealogie der Sozialen Markwirtschft. Fruhschriften und weiterfuhrende Konzepte": 한국경제정책연구회(1996)의 p.17.

정체상황이다.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1980년대 초반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유사하다. 다만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에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를 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비율)이 외국과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림 1] 도시가구(2.인 이상)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82~2002; 『가계조사』 원자료, 2003~2010에서 계산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 극상류층의 소득점유률이 아주 높지 않은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1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경 1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상류층의 소득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1990년대 이전에 7%대의 소득 점유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 되었는데 그 주된 거시경제적 원인은 기술진보와 개방화, 그와 관련하여 선택한 제도와 정책으로 지목된다. 기술진보와 개방화는 주로 숙련층에 유리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소득불평등도에는 위의 거시경제적 원인이 개인과 가구내의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는 달라 질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소득분

배가 약간 개선되었는데 이 개선의 주된 요인은 기혼 여성의 고용의 증가로 밝혀지고 있다. 즉 저소득층 및 중산층 기혼 여성의 고용 증가가 최근의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노동력 공급의 증가로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될 수도 있다.

또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조세와 현금이전지출과 더불어 교육, 보건, 돌봄, 주거 등에 대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의 변화이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의 확대는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 현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OECD 국가는 소득불평등도의 약 1/4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약 7%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지출도 OECD 평균은 국민총생산(GDP)의 13%이지만 우리나라는 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조세 이전지출의 의 증가와 더불어 재분배 정책수단은 향후의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친 복지지출은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종합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심화될 수 있는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선택, 그리고 적정한 재분배 정책에 의해 개선된 여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은 경제 및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요인들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 한 가지의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변화를 동시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처방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있어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에는 성장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구조였으나, 1990년대 들어 기술진보와 개방화 등으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급속한 경제서비스화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파기되었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1990년대 이후 수출이 고용을 견인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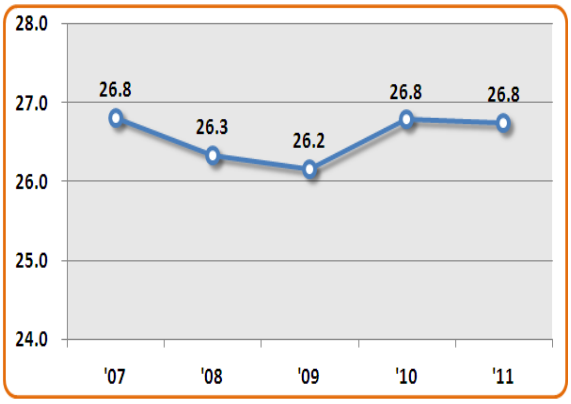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정,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방화나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제도와 규제)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중요하다. 특히 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소멸은 경제민주화 요구의 요체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소득분배 확대의 기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악화 추이에 정부의 정책과제도가 이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다, 그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소득 분배률은 감소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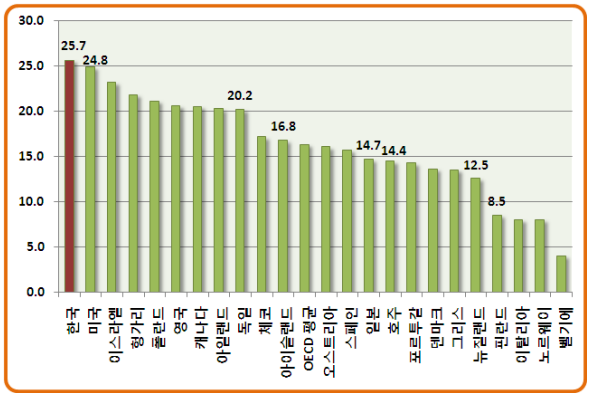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라니라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중위임금의 50% 미만 근로자 비율)은 26.8%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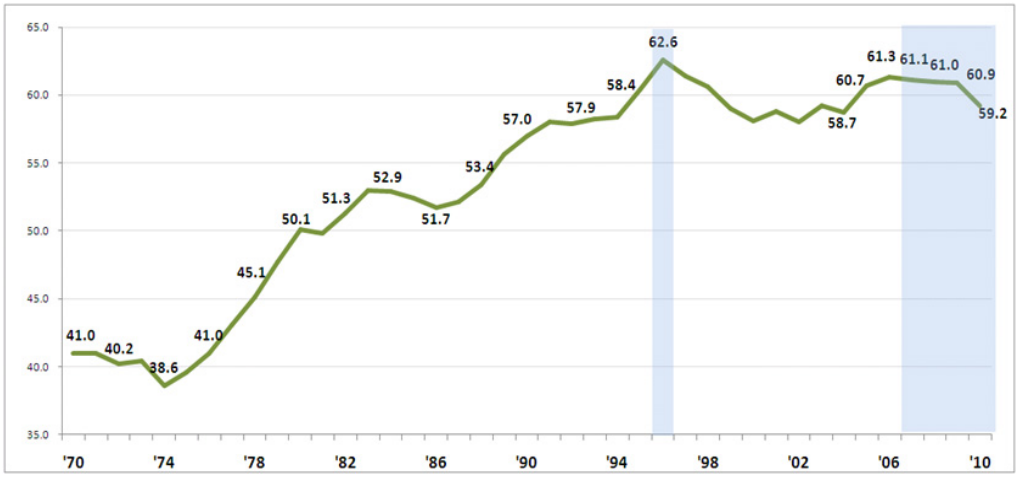
자료 :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이상)

〈표 2〉 OECD의 저임금근로자 비중(09년,%)



자료 : OECD STAT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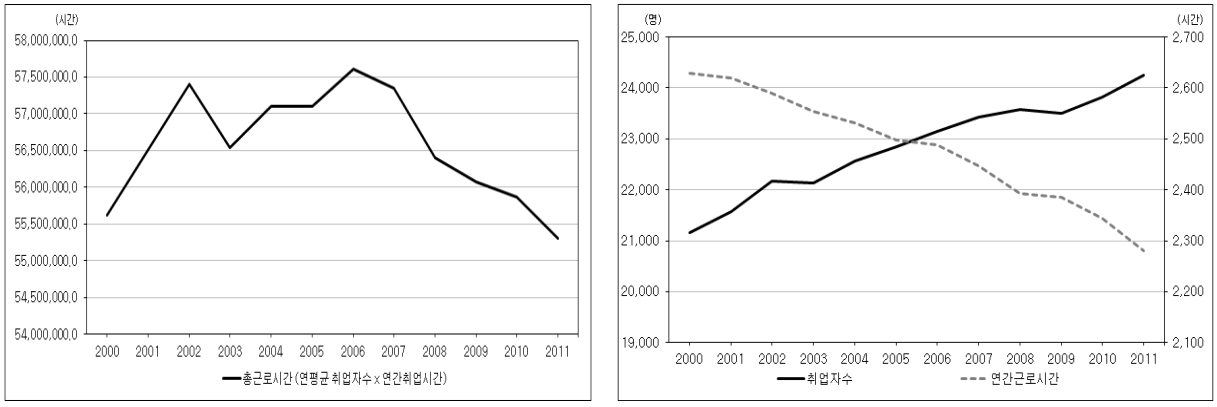
주: 노동소득분배률 = (피용자보수 + 대외순수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 * 10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및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노동소득 분배률 역시 외환위기이후인 1999년 60%를 하회하여 2010년 현재 59.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용의 증가는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시간제 근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 즉 취업자수 증가와 연평균근로시간의 감소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근로시간(취업자수 × 연간근로시간)은 2007년 이래 감소 추이이다. 또한 최근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2/4분기~2012년 1/4분기)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는 63만 2천명 증가하여 위기 전(2007년 1/4분기~2008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3.6배 확대되었다.

따라서 고용의 증가가 수요측의 원인이 아닌 노동공급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특히 4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 취업자수, 연간근로시간, 총근로시간(취업자수 × 연간근로시간) 추이



주 : 취업자수는 월별 취업자수의 연평균을 구함. 연간근로시간은 월별 주당평균취업시간의 연평균을 구한 후 52를 곱하여 도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노동시장 양극화

1)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필요인력

5) 경기의 부진에도 고용의 증가하는 것은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이다.

만을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서비스업 경쟁심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하락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 비중은 약 6.5%에 불과하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사회안전망의 이중 삼중의 보호를 박고 있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없는 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저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금수준은 반대편의 약 1/3에 불과하고 사회보험의 가입률도 역시 1/3수준에 있어 기업규모별과 고용형태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부문별 차이(2011.8)

(단위: 만원, %, 명)

	유노조·대기업·정규직(A)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B)	A와 B 이외의 기업(C)	전체 평균
월평균임금(명목)	358.7(100.0)	126.1(35.2)	221.24(61.7)	203.2(56.6)
이동성지표				
근속기간	(10.4/11.6/12.4) 12.5	(1.4/1.7/1.7) 2.0	(5.1/5.1/5.5) 5.8	(4.4/4.5/4.9) 5.1
신규채용률	(8.7/8.3/5.4) 7.2	(69.9/63.5/64.1) 59.3	(32.1/32.2/30.2) 28.6	(41.0/39.9/37.8) 35.9
사회보험적용				
국민연금	98.9	32.4	76.0	65.1
건강보험	99.5	38.4	74.6	68.3
고용보험	73.6	36.8	68.1	59.6
근로자수(%)	1,141,483(6.5)	4,959,286(28.3)	11,408,992(65.2)	17,509,761(100.0)

주: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 )는 2003년 8월과 2006년 8월, 2009년 8월을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한 것임.
3) 고용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이후 적용대상자에 대한 가입률임(교사 공무원 등은 적용제외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8, 2006.8, 2009.8 및 2011.8에서 계산

한편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는 고임금 수준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구조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소득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역전되었으며, 퇴출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미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업종에 대한 근로자파견제도와 불법파견 및 유사 자영업자(특수고용)의 확대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복지제도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의 확대는 유사 자영업자(특수고용근로자)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사회안전망의 양극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이중구조를 고용보험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3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임금근로자의 84.0%(14,637천명) 수준이며, 이중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의 72.3%(10,578천명)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자의 27.7%(4,059천명)로 이들을 실제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18시간 이상무급가족종사자 등)는 법적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제도적(또는 법적) 사각지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2012년 3월 현재 각각 2,784천명, 6,844천명 등 총 9,628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8.2%에 달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제 사각지대를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4]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 2012년 3월

<table>
<tr><td colspan="6">15세 이상 총인구 4,141만명(100%)</td></tr>
<tr><td rowspan="5">비경제
활동인구
1,621만명
(39.1%)</td><td colspan="5">경제활동인구 2,521만명(60.9%)</td></tr>
<tr><td rowspan="4">실업자
95만명[1)]
(2.3%)</td><td colspan="4">취업자 2,427만명(58.6%)</td></tr>
<tr><td rowspan="3">비임금근로자
684만명
(16.5%)</td><td colspan="3">임금근로자 1,742만명(42.1%)</td></tr>
<tr><td rowspan="2">적용제외
278만명
[16.0%]</td><td rowspan="2">적용대상
1,464만 명
[84.0%]</td><td>실제 가입자
1,058만명
[72.3%]</td><td>미가입자
406만명
[27.7%]</td></tr>
<tr><td colspan="2">공식적으로 제외</td><td colspan="2">적용의 사각지대
(제도적 사각지대)</td><td>고용보험
수혜대상</td><td>고용보험
수혜자</td><td>실제
사각지대</td></tr>
</table>

주: 1)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 중 180일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임금근로자 중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대상은 10% 내외로 추정됨.
2)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다.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Ⅲ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1): 경험적 방법

경제민주화를 분배구조의 개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재벌의 경제력 감축을 통하여 '공정성'이라는 편익을 얻으려는 정치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때, 이 편익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나 재벌의 경제력 감축 등도 궁극적으로는 지난 10여년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목표이므로 본 장에서는 분배와 성장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를 종합·정리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어떻게 지지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적 논의

최근 들어 분배와 성장에 대한 논의가 다수 있었지만 1960년대까지는 분배와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모형이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대리인을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우 경제주체간의 소득분배로 나타나는 이질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환율정책이나 금리정책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성장정책은 이로 인한 분배적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장이 분배로 이어진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고전적 성장이론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이 자본축적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경우,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가 투자율에 영향을 어떠한 미치고 이것이 자본축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Kaldor(1957)는 균형경로의 도출을 위하여 소득계층간 저축(투자)성향의 차이를 도입하였는데, 이 모형에서 고소득층의 저축(투자)성향이 저소득층보다 높으므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분배구조의 악화는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2차세계 대전 이후 유행한 경제개발론(Rosenstein-Rodan(1948), Lewis(1954))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았고, 투자의 불가분성이나 높은 산업투자의 고정비용 등에 주목했다. 이렇게 볼 때 경제개발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가 반드시 성장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olow(1957)의 외생적 성장이론에 있어서도 생산성의 증가를 외생적인 요인으로 봄으로서 성장이론에 있어서 소득분배 문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과 분배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효율과 형평의 상충관계의 측면에서 평등지향은 성장을 저해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왔다.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논의

1980년대에 들어와 내생적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성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분배와 성장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축적과 외생적인 생산성의 증가에 기초한 고전적 성장이론과는 달리 인적자본, 연구개발, 제품계단, 무역특화, 외부효과 등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 및 생산성의 향상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생산요소나 생산성 등 경제성장의 직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지리, 문화, 제도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었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의 동향은 분배가 성장에 무관하다거나 분배의 개선이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과거 고전적 성장이론과는 달리 대체로 분배의 개선이 성장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인적자본 축적 문제의 논의, 정치경제학적 문제의 논의, 분배와 사회갈등 논의, 분배와 수요측면의 논의, 그리고 최근의 분배구조의 역사적 제도적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반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설득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인적자본 축적

자본시장은 대부자와 대출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 자본이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 계약의 집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Schumpeter(1934)는 자본가와 자본을 혁신으로 실현하는 기업가를 연결시키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자본을 소유하는 자와 자본을 사용하는 자가 다르고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면 소득분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고전적 논의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지만 이질성이 고려되면 자본의 소유분포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의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물자본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금융이 문제가 되지만, 주식과 대출시장의 확대 등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자산의 소유자와 기업가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축소되어왔다. 하지만 인적자본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체화되므로,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시장의 불완전성은 자산이나 소득의 불평등은 다수의 빈곤한 가정의 재능있는 인재의 교육이나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경제전체의 인적자본축적을 저해하게 된다.

몇가지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Loury(1981)은 재분배정책이 계층간 이동성을 높임으로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녀의 교육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자녀의 재능이 부모의 재능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될 경우, 재분배정책은 계층고착화를 막고 가난한 가정의 재능이 있는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줌으로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Galor and Zeira(1993)은 신용대출시장이 불완전하고 인적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불평등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즉 대출이 힘들고 이자가 높을 경우, 부자들의 자녀가 더 많은 교육기회를 갖게 되는데 (Becker(1975)), 이와 함께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서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고정비용이 높다면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과소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득이나 자산분배의 개선은 인적자본축적율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된다. 나아가 세대간 소득이전과 이를 통한 불평등의 고착화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Banerjee and Newman(1999)은 소득분배가 직업선택이나 숙련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하에서 각 소득계층간의 직업선택의 차이가 나는데, 가난한 가정

의 자녀의 경우에는 실업 상태에 처하거나, 저숙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기 쉬우며, 부유한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하여 고숙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나 기업가가 되기 쉽고, 이러한 경우 불평등은 다수의 가난한 가정의 재능있는 자녀의 창업이나 숙련형성을 저해하므로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Aghion and Bolton(1997)은 나아가 소득분배의 개선은 경제활동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고, 이는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의 낙수효과를 더욱 강화시킴을 보였다. Fershtman, Murphy and Weiss(1996)은 소득분배가 불균등할 경우 능력보다는 자산에 따라 직업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Hassler and Mora(2000)는 인적자원의 계층간 배분과 세대간 계층 이동성, 그리고 성장이 상호작용을 하며 결정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고성장은 가족배경보다는 재능에 따른 인적자원의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고성장과 균등한 소득분포가 달성되는 경우와 저성장과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경우로 수렴할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지역적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교육과 소득의 격차가 고정되며 사회계층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Durlauf(1996)), 다른 집단간의 격리현상(Fernandez and Rogerson(1996))도 발생한다.

또한 Checchi, Ichino and Rustichini(1999)는 사회계층화가 고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층의 고착화로 인하여 빈곤 가정에서는 교육기화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유인을 없앰으로서 재분배정책이 성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이탈리아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직의 성공이 가족배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중앙집권형 평등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분배개선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는 인적자본의 형성에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분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는 인적자본의 경우에는 실물자본과는 달리 축적에 있어서 교육이나 훈련에 의존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체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는 생산요소의 축적과 활용에 소득분배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가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나. 정치경제적 측면의 논의

정치경제적 접근에서는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한다. 즉,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재분배정책을 채택하게 함으로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게 된다. 투자를 하는 행위가 투자에 대한 보수를 개인이 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과도한 재분배정책을 채택하게 함으로서 투자유인을 억제하게 된다.

Bertola(1993), Alesina and Rodrik(2004), Persson and Tabellini(1994) 등은 중위투표이론(median vote theorem)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일수록 평균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어 불평등도가 심할수록 재분배정책의 정도(예를 들면 세율)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높은 세율은 경제적 동기를 왜곡함으로서 성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Perotti(1993)는 재분배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축적이 높아지는 성장에의 순기능과 재분배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 정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분배의 성장에 대한 효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분배와 소득수준간에는 역U자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사회적 갈등

불평등은 정치 및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서 투자를 위축하고(Alesina and Perotti(1996)), 경제위기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처능력을 떨어지게 하며(Rodrik(1997)), 불평등에 따라 범죄나 폭력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Bourguignon(1998))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측면의 논의는 이론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와 사회지표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들로서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가는 경우는 불평등이 아주 극심한 경우이거나 불평등과 함께 다른 정치사회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반드시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명확하지는 않다.

라. 수요 측면의 논의

시장의 규모(수요)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 소득분배가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는 교역비용이 높을 경우 국내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산업화가 용이하며, 이것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의 소득분배구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u and Talmain(1996)은 여가의 소득탄력성이 양일 경우, 재분배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모형으로 보였다. Matsuyama(1999)는 성장과 분배의 상호의존성을 고찰하며, 소득분배가 학습과 기술진보가 가능한 부문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생산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에 의하여 성장이 낙수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수입성향이 높을 경우, 재분배는 국내수요를 높이고 교역조건을 개선함으로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Foellmi and Zweimuller(2006)은 혁신의 유인에서 볼 때 시장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규모를 확장함으로서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요 측면의 논의는 실증적으로 검정이 되지 않고 이론적 논의에 거치고 있으나 분배구조에 따르는 소비와 투자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역사와 제도에 관련된 논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발전은 누적적이며 경로의존적이다. 각 국이나 경제에 주어진 지리, 정치, 문화적 배경이 경제의 초기조건을 결정하고, 이러한 초기조건에 따라 보완적인 제도가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제도는 인구동태의 변화, 기술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제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이해집단간의 연합을 통한 제도형성이 소득분배와 경제발전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 불평등이 고착화하고 자산가가 정치집단화하게 되면 인적자본형성이나 성장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제도적 변화나 정책을 막게 되고 이는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Engerman and Sokoloff (2000)는 초기 조건(농업구조 등)이 각국의 분배구조를 결정하

고,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통치구조와 교육제도)의 형성과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하여 저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남미의 장기 경제발전과정이 이를 알려준다고 하였다. Acemoglue, Johnson and Robinson(2005)은 식민지시기의 지리적 여건 등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가 이후의 경제발전을 규정함을 보이고, 식민지시기의 제도형성이 이후 분배와 성장을 통괄하는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제도형성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의 경제적 동기와 이에 따른 분배와 성장에 대한 지향의 차이가 장기적인 분배구조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Galor, Moav and Vollrath(2009)는 경제발전 과정에 따라 지배계층간(지주와 산업자본가)의 경제적 유인구조가 변화하고, 상충하는 지배계층간의 상대적인 세력이 대중과의 연합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산업혁명이후 산업자본가의 세력화에 교육의 영향이 컸으며, 이러한 영향은 각국의 토지소유의 집중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3.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

가. 실증연구의 주요 결과

우선 정치경제적 요인 및 사회갈등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esina and Rodrik(1994)은 1960-85년 67개국에 대한 성장회귀분석을 통하여 성장률과 소득분배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이것이 불평등으로 인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왜곡에 따른 성장률의 저하의 증거로 지적하였다. Alesina and Perotti(1994)는 1960-85년 7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정적 암살, 쿠데타 등의 자료로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지표를 구성하고 이것이 투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지표가 중간층(소득 5분위의 3-4분위)의 소득비중으로 나타낸 분배수준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소득불평등이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하고 이것이 투자위축으로 나타는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Persson and Tabellini(1994)는 먼저 장기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8개국의 1830-1985 자료를 20년 단위로 나누어 성장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상위(20%) 소득집단의 소득비중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집단의 소득비중이 7% 증가하면 평균성장률이 0.5%p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개도국을 포함한 5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2차 대전 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도 중위(40-60%)소득집단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는데, 정치구조에 따라 표본집단을 구분할 경우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분배와 성장의 양의 관계는 민주주의 국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데, 그 이유는 불평등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낳고 이것이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였다.

하지만 Perotti(1996)는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체계가 역진적이고, 불평등도와 조세율의 관계가 국가간 횡단면분석에 따르면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임으로서 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의 높은 세율 등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 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국가는 서구와 남미의 국가이며, 남미의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이상의 실증결과는 인기영합적 재분배정책과 저성장이 혼재하는 남미의 현상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분배와 사회갈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Bourguignon(199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1970-94년 사이 20개국의 자료를 이용 패널분석을 하였는데 분배(지니계수)가 자살이나 강도사건의 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유의한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인 논거는 찾을 수 있으나 경제학적 논거는 찾기 힘들며 자살이나 범죄 등의 원인은 불평등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실증결과가 반드시 분배구조의 개선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불완전성과 인적자본축적의 논의를 지지하는 실증결과로는 Perotti(1996)와 Deininger and Squire(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Perotti(1996)는 1960-85년 67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배, 성장, 정치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검정하였는데, 소득분배지표를 소득 5분위의 3-4분위 소득집단의 소득비중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성장, 투자, 교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높으며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 투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 하

에서 평등할수록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낮아져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검정되었다. 분배가 나쁜 국가일수록 조세체계도 역진적인데,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영향으로 이 실증결과는 결론짓고 있다. Deininger and Squire(1998)는 1960-92년 44개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집중도로 추정한 초기 자산의 불평등이 교육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서 자산분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인적자본축적과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의 수요적 측면의 논의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분배와 성장의 구조적 특성을 역사와 제도측면에서 논의한 연구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Easterly(200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소득 불평등 수준(1960-98 평균 지니계수)이 소득수준(2002 일인당 GDP)과 교육수준과 음의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각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각국의 지리적 배경에 기인한 농업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곡물(밀)농사와 사탕수수농사 비율을 경제의 초기조건의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이것이 분배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인 것인데 이를 Engerman and Sokoloff(2000)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논의가 분배구조와 성장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실증연구도 있다. Forbes(2000)는 1966-95년 45개국 패널자료를 통하여 분배(지니계수)와 성장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장기와 단기 모두 소득불평등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Barro(2000)는 1965-95년 80여개국의 자료에 대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는데, 개도국의 경우에는 분배(지니계수)와 성장 간에 양의 관계가 있으며, 고소득국의 경우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이것이 Kuznets의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나. 실증연구의 문제점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국가간 횡단면 자료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회귀분석은 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정방법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나,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자유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Barro(2000)등 다수의 실증연구가 60년대 이후를 5년 단위의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와 제도적 측면에서 이 주제를 논의하는 데서 보다시피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매우 장기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 분석에 의존하여 분배와 성장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패널분석보다는 Easterly(2007)와 같이 장기 횡단면 분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실증모형의 인식오류의 문제이다. 즉 각 실증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성장과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보는데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정하기 힘들다. 즉, 추정결과가 모형의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정된 변수간의 관계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결정변수의 도입방식에 따라 추정치와 검정결과가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성장회귀분석에서 민감도 검정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모형설정이 가능한 가운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증모형의 인식오류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패널분석의 경우에는 특히, 추정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외생적 결정요인은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며,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Durlauf, Kourtellos and Tan(2007))

나아가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선형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지만 Banerjee and Duflo(2003)가 지적한 바대로 성장과 분배간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Banerjee and Duflo(2003)는 모형을 설정하기 보다는 1965-95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분석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분배구조의 변화는 방향에 관계없이 다음기에 낮은 성장률로 나타나며, 전기의 불평등수준이 높으면 다음 기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전기의 불평등과 금기의 성장률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들은 분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결과로서 단기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가 정치경제학적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실증분석에 있어서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분석을 통한 평균적인 관계의 추정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이론적 논의에 맞추어 이를 기각하는 결과보다는 지지하는 실증결과가 다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될 것이다. 나아가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과정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분배구조 자체도 내생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분배구조 개선이 성장에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이상의 논의의 기본적인 논거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논의의 정리

지금까지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종합하면 평등한 분배는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자본과 지식이 경제성장에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기회와 숙련형성의 기회를 재능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재분배정책은 빈곤층의 재능있는 자녀에게 기회를 줌으로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늘이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성장을 저해한다.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재분배정책이 과도하거나 급하게 변화할할 경우에는 경제적 왜곡과 함께 투자의욕을 꺾음으로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극단적인 재분배정책은 극소수의 부유층에게 소득이 집중된 매우 불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사회계층화하게 되면, 재분배정책의 성장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즉, 재분배 정책에 따라 인적자본 형성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계층화된 구조하에서 저소득층은 교육습득의 유인이 없어지고 재분배정책의 성장효과도 낮아지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저성장과 불평등이 온존하는 경제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러한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게 되면 이에 맞추어 정치와 제도가 고착화하게 되고 이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한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분배구조의 개선이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사후적 재분배정책보다는 평등한 분배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성장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이전보다는 빈곤층의 재능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인 신용대출시장의 불완전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성장에

더욱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창업환경이나 공교육의 개선 등 분배와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요인에 대한 처방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배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장구조, 세제 등에서 공정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형성을 위한 정치적 지지의 확보도 중요하다.

Ⅳ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2): 연역적 방법

본 절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경제 양극화 등 두 가지 현상의 공통적 원인으로서 세계화라는 요인의 역할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증거들을 토대로 논의한다. 즉, 본 절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가설은 “세계화라는 경제환경의 변화가 제조업의 성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생산성, 생산규모 등 성과변수의 기업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숙련노동 대비 비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성과 격차의 확대로 대표되는 양극화라는 현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전반기 소위 “반도체 호황” 전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 정책당국자, 정치권의 관심은 최근까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진단 및 처방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최근 국제무역이론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체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흔치 않다.

세계화는 통상적으로 상품, 자본, 노동의 국제이동이 보다 자유로와지는 과정을 일컫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무역·투자 자유화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진전되지만, 수송·통신비용의 절감 등 기술적 측면에 의해서도 진전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수출 혹은 수출시장 참가, 그리고 때로는 관세율 인하라는 제한된 측면에서만 세계화의 영향을 분석·논의한다. 기본적으로 수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 및 지면 뿐 아니라 수출이 무역자유화의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는 주요 채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관세율 인하, 무역비용(trade cost)의 감소 등 무역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수출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변화로서, 사업체의 수출과 관련된 제반 성과변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무역자유화의 효과의 중요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의로서 세계 수출시장 참가의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하 본 절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다음 소절에서는 생산성, 기업규모, 제품혁신 등 성과변수와 수출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절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논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연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성과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논의한다. 나. 소절에서는 수출 혹은 무역자유화가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이상의 각 소절에서는 먼저 관련 기초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학계의 관련 논의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 소절에서는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가. 수출과 성장 및 양극화: 사업체 생산성

1) 기초적 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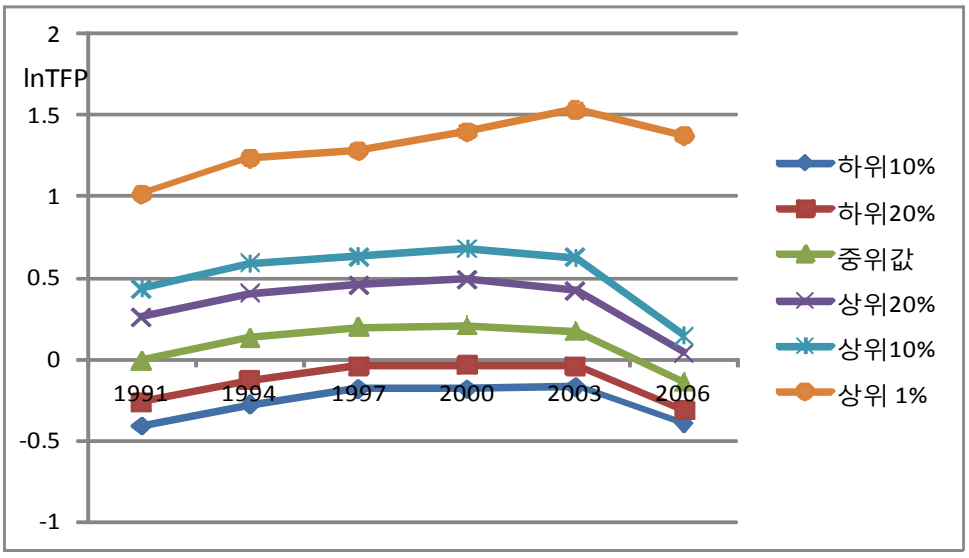
양극화(bipolarization)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극화는 어떤 성과변수의 기업별 분포가 장기적으로 쌍봉분포(bi-modal distribution)의 형태로 수렴한다는 것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양극화에 대한 어떤 엄밀한 학문적 정의도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앞서 언급한 대로 생산성, 생산규모, 고용 및 임금 등 성과변수의 기업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비숙련 노동 대비 숙련노동의 상대 고용 및 임금의 증가 등 현상을 양극화로 통칭되는 현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고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과변수 분포의 꼬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터워진다든가 혹은 예를 들어 상위 10%값과 중간값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성과변수의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91~2006년 기간 중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5인이상 제조업 사업체 전부를 포괄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및 생산규모의 사업체

분포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일단 과연 사업체간 성과변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간 성과변수의 차이가 사업체의 세계 수출시장 참여여부와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6] 이후 논의하겠지만, 사실 최근 많은 외국의 실증 문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형화된 사실은 수출 사업체가 비수출사업체에 비하여 생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실이 관찰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림 5]은 제조업 전체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1991-2006년 기간 중 사업체 총요소생산성 (로그값) 분포의 추이를 나타낸다.[7] 그림에는 편의상 중간값, 상하위 10% 및 20% 값, 그리고 상위 1%값을 표시하였다. 먼저 사업체 총요소생산성 수준은 사업체간 커다란 차이를 보임이 확인된다.[8]

[그림 5] 사업체 총요소생산성(log) 분포의 추이



그러면 사업체간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는가?

6) 사업체 성과변수의 변화 대신 성과변수의 수준과 수출 지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업체 성과변수의 변화의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시점에서 관찰된 사업체간 성과변수의 차이의 요인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7) 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은 chained multilaterl index number approach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Hahn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8)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사업체간 생산성 격차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Hahn (2000)에 제시된 바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사업체간 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산성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상위 1% 사업체와 여타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위 1% 사업체와 여타 사업체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위 1%를 제외할 경우 사업체간 생산성 격차 확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사업체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상위 1% 사업체의 빠른 생산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사업체간 생산사업체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생산성에 지속성(persistency)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는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표 5〉은 Hahn (2000)의 〈Table 16〉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1990-1995년 기간 중 사업체 총요소생산성 분포의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ity) 행렬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사업체 생산성에 지속성이 있을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따른 사업체의 상대순위는 시간에 따라 큰 변동이 없게 되고, 이 때 이행확률 행렬의 대각원소(diagonal elements)들이 큰 값을 보이게 된다. 이 표는 199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생산성이, 특히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 상당히 지속적(persistent)인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총요소생산성 상대순위의 이행확률: 1990-1995

(단위: %)

1990 ~ 1995	Top 20	20-40	40-60	60-80	80-100	업종변경 퇴출	퇴출
상위 20%	28.53	13.42	5.98	1.96	1.06	26.45	22.61
20-40%	16.74	16.59	10.23	5.23	1.68	23.20	26.33
40-60%	12.09	16.65	7.66	6.16	3.91	20.26	33.26
60-80%	4.49	5.95	5.91	6.57	4.74	30.04	42.31
80-100%	3.06	4.09	12.68	5.40	6.02	25.27	43.48
업종변경 진입	28.28	24.52	19.81	16.64	1074	0.00	0.00
신규 진입	25.63	22.09	18.90	16.91	16.47	0.00	0.00

출처: Hahn (2000)

그러면 사업체간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는 사업체의 세계 수출시장 참여여부와 체계적 연관성이 있는가? 〈표 6〉는 수출사업체가 비수출사업체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우월

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9] 즉, 수출사업체는 비수출사업체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규모도 크고 임금수준도 높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표 6〉 수출사업체와 비수출사업체의 성과: 1990, 1994, 1998

	1990		1994		1998	
	수출사업체	비수출사업체	수출사업체	비수출사업체	수출사업체	비수출사업체
고용 (인)	153.6	24.5	119.4	20.0	95.1	17.8
출하액 (백만원)	11,505.5	957.0	17,637.1	1,260.3	25,896.8	1,773.8
일인당 생산액 (백만원)	50.5	26.8	92.4	47.0	155.0	74.2
일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16.5	11.3	31.0	20.4	51.3	29.6
총요소생산성 (log)	0.005	-0.046	0.183	0.138	0.329	0.209
일인당 자본 (백만원)	16.8	11.9	36.0	21.9	64.6	36.7
사무직 고용비율 (%)	24.9	17.1	27.5	17.5	29.6	19.2
평균임금 (백만원)	5.7	5.1	10.3	9.2	13.7	11.5
생산직 평균임금 (백만원)	5.5	5.1	10.0	9.2	13.1	11.4
사무직 평균임금 (백만원)	6.8	5.3	11.6	9.4	15.6	12.4
R&D/출하액 (%)	-	-	1.2	0.6	1.4	0.6

2) 이론적 메카니즘에 관한 논의

과연 수출 사업체의 생산성 프레미엄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수출 혹은 무역자유화가 사업체간 생산성 격차 혹은 이질성(heterogeneity)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이러한 메카니즘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는 어디에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가?[10]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성장효과 극대화, 양극화의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9) 이러한 수출사업체의 비수출사업체 대비 우월한 성과는 산업, 지역, 사업체규모 등을 통제하더라도 유지되는 결과이다. Hahn (2005)의 〈표 3〉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시장의 실패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논의한 이후 논하기로 한다.

지난 십수년간 발전해 온 소위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heterogeneous firm trade theories)들 및 관련 실증연구들은 위 질문들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수출(exporting)과 생산성(productivity)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후 일부 연구들은 혁신(innovation) 혹은 R&D라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혁신, 생산성 등 3자간 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다. 한편 또 다른 부류의 연구들은 수출이 대부분 다품목생산기업(multi-product firms)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수출시장 참가에 따른 기업의 품목구성변화가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초래하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출과 생산성의 관계: 혁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11]의 생산성 프레미엄이 관찰되는 이유에 대해서 초기의 연구들은 대략 다음 두 가지,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은 소위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수출시장 참가에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이 수출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이 수출의 학습효과(learning-by-exporting)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수출을 함으로써 외국 구매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신제품, 신기술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선택이라는 견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혹은 이질성(heterogeneity)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간 생산성 격차 존재의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것이 없다. 여기서 수출시장은 주어진 생산성 수준에 따라 기업을 정렬(sorting)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나누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반면 수출의 학습효과라는 견해가 옳을 경우 수출은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이 견해가 옳을 경우 수출 프레미엄은 수출시장 참여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12]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과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수출의 학습효과의 존재여부

11)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사업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12) 수출시장 참가의 의사결정이 실제 수출시장 참가 시점 이전에 내려지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 수출시장 참가 이전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이 생산성 향상을 유발한다고 해도 생산성 향상은 수출시장 참가에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수출시장 참가의 시간적 선후관계만을 통해 인과관계에 대하여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가 무역 혹은 무역자유화의 성장 및 양극화에 대한 영향에 있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수출시장 참가에 있어서 자기선택은 존재하지만 학습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수출의 학습효과도 존재할 경우에 대해 논의한다.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이 자기선택만을 반영할 경우 무역 혹은 무역자유화가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은 Melitz (2003)이다. 그는 Jovanovich (1982) 등 산업동학(industry dynamics) 이론들이 가정한 바와 같이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생산성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이론에서 국제무역이 존재할 때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이 수출시장에 참가하는 자기선택이 일어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이론에서 기업의 생산성은 수출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이 자기선택의 결과라는 점은 이 이론의 함의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Melitz는 무역자유화는,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기업으로 기업간 자원재배분(resource reallocation)을 촉진시킴으로서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aggregate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모형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기업간 자원재배분은 기업간 노동 재배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에서 무역자유화는 생산성이 낮은 내수기업을 위축시키거나 퇴출시키고,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수기업과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존 수출기업은 각각 수출시장 참가 및 수출 증대를 통하여 성장하도록 함으로서 경제전체의 자원재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13] 여기에서 만일 수출시장 참가에 자기 선택 뿐 아니라 수출의 학습효과도 존재하게 될 경우, 무역자유화가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면 Melitz의 이론이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Melitz의 이론은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지는 않지만 기업 규모의 기업간 차이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기업의 생산성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므로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생산성

13) 그의 이론은 학습효과, 경쟁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무역이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통적 경로들이 기업수준에서 작동하지 않더라도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 연구는 이후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heterogeneous firm trade theories)과 관련 실증연구들이 폭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무역자유화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자원재배분을 촉진시킴으로서 기업의 초기 생산성 수준에 따라 생산, 고용 등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극화가 생산, 고용 등 기업규모의 기업간 차이의 확대를 의미할 경우 Melitz의 이론은 무역자유화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제 수출의 학습효과가 존재할 경우 국제무역 혹은 무역자유화는 기업간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경우 무역자유화는 생산, 고용 등 기업규모의 기업간 격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성의 기업간 격차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메카니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장 참가에 있어서 자기선택이 존재할 때, 초기 생산성이 어떤 임계치(threshold)보다 높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참가하고, 그 임계치보다 낮은 기업들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조업을 할 것이다. 수출의 학습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수출시장에 참가한 기업들의 생산성 수준은 수출시장 참가로 인하여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초기의 생산성 수준이 어떤 임계치보다 높으냐 혹은 낮으냐에 따라 세계수출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에 따라 기업간 규모 격차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더욱 커질 것이다.

이상에서는 수출의 학습효과의 존재여부가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생산성 이질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중요한 문제임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역자유화의 영향 및 그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기업간 생산성 이질성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수출의 학습효과라기보다는 "수출로 인한 혹은 수출 이후 생산성 증가효과"의 존재여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elitz (2003) 이후의 몇 몇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은 수출의 학습효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수출로 인한 생산성 증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6)은 기본적으로 다품목 생산 기업(multi-product firm)의 경우에 대해 Melitz(2003)의 이론을 확장하여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 이론이다. 이들 이론은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자원재배분 뿐 아니라 기업내 품목간 자원재배분을 일으킴으로서 경제전체 및 기업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에서 무역자유화가 기업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경로는 기업내 품목간 자원재배분, 즉, 생산성[14]이 낮은 품목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품목으로의 자원재배분이다. 이들은 특히 무역자유화가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이 낮은 품목을 생산 중단하고 소위 "핵심역량(core competences)" 품목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서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을 보여주고 있다.[15] 이러한 메카니즘은 핵심역량에의 집중효과 혹은 품목합리화(product rationalization) 효과라고도 부르며, 이는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에 미치는 추가적 경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Bernard, Redding and Schott의 다품목 기업의 이론이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및 기업규모의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면, 비록 이들 이론이 무역자유화가 품목간 자원재배분을 통하여 모든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임을 의미하지만, 이들 이론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수출시장에 새로이 참가하는 기업과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확대시킬 것임을 예측한다. 그 이유는 신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이 가지지 못한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의 원천(source)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수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생산성이 낮은 품목의 생산중단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지만, 신규 수출기업은 이 뿐 아니라 신규 수출 품목의 생산 증가에 따른 고생산성 품목의 생산비중 증가를 통해서도 생산성 증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결국 이들의 이론은 무역자유화 이후 수출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초기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 참가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킨다. 한편 이들 이론에서도 Melitz 류의 무역자유화의 기업간 자원재배분효과가 작동하므로, 무역자유화는 생산, 고용 등 기업규모의 기업간 차이를 확대시킬 것임이 시사된다.[17]

---

14) 이들 이론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품목에 대한 생산성은 기업의 능력(ability)와 그 기업의 품목에 대한 전문성(expertise)의 곱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문에서 "생산성이 낮은 품목"이라 할 때의 생산성은 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의도적인 오용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15) 이들 이론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라 핵심역량에의 집중이 나타나는 경로는 임금 상승을 통한 것이다. 즉, 무역자유화에 따른 전문성이 높은,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수출품목의 생산 증가는 경제 전체의 노동수요 증가를 통하여 임금 상승을 초래하며, 이러한 임금 상승은 전문성이 낮아서 내수시장에만 출하되던 품목의 수익성 하락 및 전문성이 가장 낮은 품목의 생산 중단을 초래한다. 한편 Eckel and Neary (2010)는 과점적 시장의 가정 하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라 핵심역량에의 집중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16) 무역자유화 전후 모두 수출을 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내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지 여부는 이론적으로 불분명하다.

17) 그러나 이들 이론에서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초기 규모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는 Melitz의 이론에서보다 강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품목범위(product scope)가 내생적으로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무역자유화는 생산, 고용 등 기업규모의 초기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의 학습효과가 존재할 경우 무역자유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수출의 학습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품목 기업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내수기업과 수출참가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수출과 생산성의 관계: 혁신을 고려한 경우

Costantini and Melitz (2008)는 수출시장 참가에 있어서 생산성에 기반한 자기선택이라는 이질적 기업이론의 틀 하에서 혁신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예견된 무역자유화가 수출시장 참가 이전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이론에서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은 자기선택 뿐 아니라 수출시장 참가로 인한 생산성 증가효과도 반영하는데, 여기서 수출시장 참가로 인한 생산성 증가효과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에 의해 유발된 혁신활동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Aw, Roberts and Xu (2009)도 기업의 R&D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출 참가 의사결정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들 이론이 Costantini and Melitz의 이론과 다른 점은 수출의 학습효과를 전제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이론에서는 수출시장 참가 및 R&D 투자 결정에 있어서 생산성에 기반한 자기선택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수출 및 R&D는 각각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이들 이론에서 수출, R&D, 생산성 등 3자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즉, 수출 및 R&D는 각각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수출 (R&D)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고생산성 기업에 의한 R&D (수출) 참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기선택 효과를 강화시킨다.[18] 결국 Costantini and Melitz (2003) 및 Aw, Roberts and Xu (2009)는 모두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이 무역자유화 혹은 수출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요 메카니즘은 수출의 R&D에 대한 영향, 수출의 학습효과 등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하여야 할 점은 위 두 이론에서 수출과 R&D 사이에는 양방향 인과관계(bi-directional causality)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양방향 인과관계의 존재는 무역자유화 혹은

18) 이들은 대만 전자산업의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과 R&D의 생산성 향상 효과 및 수출과 R&D에 있어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선택 효과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출시장 참가가 기업간 초기 생산성 및 규모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 방향 인과관계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생산성 프레미엄을 설명함에 있어서 수출과 R&D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내기는 어렵게 된다.

3) 한국 제조업에 대한 실증적 증거

여기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또는 수출시장 참가가 기업간 생산성 및 기업규모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메카니즘에 대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증거들을 살펴본다.[19] 이하에서는 첫째, 수출의 학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되, 이 과정에서 수출시장 참가의 자기선택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수출의 품목합리화 효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업체-품목 연계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적 증거들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과연 수출과 R&D간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에 있어서 고생산성 기업의 자기선택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실증적 증거들을 토대로 과연 무역자유화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하여 성장 및 (생산성 및 규모)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한 금융시장의 역할 및 기타 시장의 실패 개연성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한다.

수출의 학습효과와 자기 선택

수출 프레미엄에 대한 초기의 대다수 실증연구들은 자기선택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효과에 대한 학계의 뚜렷한 합의는 최근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20]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은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수출의 학습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21]

---

19)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상당 부분 저자의 선행연구들, 즉, Hahn (2012), 한진희(2012), Hahn and Park (2011) 등에 기초한 것이지만, 일부 실증적 증거들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이다. 외국에 대한 관련 실증적 증거에 관한 체계적 논의는 지면 관계상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자의 위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여기에서 사업체 규모 변수로서는 출하액과 고용 규모를 고려한다.

20) 관련 문헌 서베이는 Greenaway and Kneeler (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이러한 연구로는 영국에 대하여 Girma, Greenaway and Kneller (20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들에 대하여 Van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학습효과를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대표적 연구로는 Hahn (2012)을 들 수 있다. Hahn (2012)은 Heckman, Ichimura and Todd (1997)의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통상 수출시장 참가의 내생성에 따른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론으로는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or를 들 수 있는데, 만일 관측되지 않는 요인에 근거한 선택편의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수출참가 사업체와 비참가 사업체간 성과변수에 있어서 시간불변적인 수준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estimator가 적절한 방법론이 된다.

Hahn (2012)은 이 방법론에 따라 수출의 학습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다.

$$P(X_i) \equiv \Pr(d_i = 1 | X_i) = E(d_i | X_i),$$

여기에서 P(Xi)는 사업체 i의 수출 이전 특성 벡터 Xi를 조건부로 한 수출시장 참가 확률을 나타내며, di는 수출시장 참가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그는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모형 (1)은 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의 로그값, 사업체 규모의 대리변수로서 종업원수의 로그값, 사업체 연령, 사업체의 자본/노동 비율의 로그값, 사업체의 R&D 수행 여부 더미변수, 다품목 사업체 더미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모형 (2)는 모형 (1)에 t-1연도에서 t연도 사이에 사업체의 생산품목 추가 여부 더미(품목추가), 기존 생산품목 퇴출 여부 더미(품목퇴출), 제조업 전체 관점에서 신제품 도입 여부 더미(신제품도입), 제조업 전체 관점에서 생산품목 퇴출 여부 더미(품목파괴) 등 네 가지 더미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t-1연도와 t연도 사이의 사업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22)]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는 이론적으로 예상된 바와 같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높은 사업체가 수출시장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외국의 대다수 실증문헌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프레미엄 중 일부는 생산성에 기초한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Biesebroeck (2005), 슬로베니아에 대하여 De Loecker (2007), 아르헨티나에 대하여 Albornoz and Ercolani (2007), 대만에 대하여 Aw, Roberts and Xu (2009), 중국에 대하여 Ma, Tang, and Zhang (2011), 한국에 대하여 Hahn (2012)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출의 학습효과 관련 실증적 증거들은 상당 부분 Hahn (2012)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22) 프로빗 모형에 사용된 사업체 특성변수는 실제 수출이 시작된 연도의 2년전 값들이다.

〈표 7〉 수출시장 참가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모형	(1)	(2)	(3)
총요소생산성 (log)	0.138*** (0.041)	0.121*** (0.043)	0.085* (0.048)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106** (0.048)
사업체 규모	0.397*** (0.016)	0.391*** (0.016)	0.400*** (0.016)
연령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자본/노동 비율	0.141*** (0.012)	0.136*** (0.012)	0.133*** (0.013)
다품목 사업체 더미	-0.065*** (0.031)	-0.089*** (0.033)	-0.093*** (0.034)
R&D 수행여부 더미	0.227*** (0.044)	0.227*** (0.045)	0.224*** (0.045)
품목추가 더미		0.073 (0.046)	0.072 (0.046)
품목퇴출 더미		0.021 (0.044)	0.019 (0.044)
품목창출 더미		0.175** (0.086)	0.183** (0.086)
품목파괴 더미		-0.190** (0.087)	-0.189** (0.087)
관측치수	43,135	40,835	40,531
Log likelihood	-5918.40	-5617.15	-5543.76

또한 추정결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 R&D 수행 사업체가 수출시장 참가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을 통제한 후에도 사업체 규모가 수출시장 참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수출시장 진입에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높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기존 이론 문헌의 검토에서 수출이 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혁신이 수출시장 참가를 촉진시킬 수도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R&D 더미변수의 양(+)의 추정계수는 후자의 인과관계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위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된 수출시장참가확률, 즉, propensity score를 바탕으로 각 수출 참가 사업체가 비수출사업체들과 매칭된다. 이제 T와 C를 각각 수출참가 사업체 및 비수출 사업체의 집합이라고 하자. yT 및 yC는 수출참가 사업체 및 비수출 사업체의 성과변수를 지칭한다. 그리고 i 및 j는 각각 수출참가 사업체 및 비수출 사업체를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t0는 수출참가 이전 어떤 특정 연도를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수출 참가 2년전이라고 하자. 하첨자 s는 수출 시작연도 이후의 경과기간을

나타낸다. 즉, 1990년도에 어떤 사업체가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다면, 예를 들어 1992년도에는 s=2가 된다. 수출참가 사업체 i와 매치되는 비수출 사업체의 집합을 C(i)라고 하고, i 사업체와 매치된 비수출 사업체의 개수를 NiC라고 하고, 수출참가 사업체 집합 T 에 속한 사업체 개수를 NT라고 하자. 그러면 수출 참가 이후 s 년도 이후 propensity score DID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widehat{\alpha}_s = \frac{1}{N^T} \sum_{i \in T} \left[(y^T_{i,s} - y^T_{i,t_0}) - \sum_{j \in C(i)} w_{ij} (y^C_{j,s} - y^C_{j,t_0}) \right],$$

여기에서 j ∈C(i) 인 경우 wij = 1/NiC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wij = 0이다. 매칭 방법은 radius matching이 이용되었다.

〈표 8〉는 "수출의 학습효과"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수출시장 참가 사업체는 비수출 사업체에 비하여 수출시장 참가 1년전부터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시작하여 수출시장 참가 이후 3년 후까지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는 프로빗 모형에 따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 결과 수출시장 참가 3년 후 시점에서 수출 참가사업체와 비수출 사업체는 약 6-10% 정도의 생산성 격차가 발생한다.

〈표 8〉 수출의 학습효과에 대한 PSM-DID 추정결과: 1990-1998

성과 변수	Probit	s=-2	s=-1	s=0	s=1	s=2	s=3
사업체 총요소생산성	(1)	0.000	0.015**	0.035***	0.038***	0.035**	0.058*
	(2)	0.000	0.021**	0.031***	0.041***	0.071**	0.103*
	(3)	0.000	0.027***	0.041***	0.042**	0.041**	0.095*

이상의 결과는 Melitz (2003) 등 수출의 학습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들은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무역자유화는 기업간 자원재배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수출시장 참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무역자유화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가 생산성의 기업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즉, 수출시장 참가의 자기선택과 수출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초기 생산성 수준이 일정 임계

치보다 높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참가하게 되고, 또한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생산성을 높여가는 반면, 초기 생산성 수준이 일정 임계치보다 낮은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23)]

수출, 품목합리화, 신제품 도입

우리는 위에서 무역자유화가 기업내 품목간 자원재배분을 통하여 개별기업 및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론적 메카니즘에 대하여 Bernard, Redding and Schott (2006)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기업내 품목간 자원재배분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중요한 것은 소위 핵심역량에의 집중(concentration on core competences) 혹은 품목 합리화(product rationalization)이라는 점도 논의하였다. 즉, 기존 이론들은 무역자유화가 기업내 품목간 자원재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로 "기존 생산품목의 퇴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생산품목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품목합리화라는 측면에만 국한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다소 협소한 접근법일 수 있다. 일찍이 슘페터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강조한 바 있듯, 신제품의 도입(introduction of new products)은 품목의 퇴출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과정이자 결과이며, 또한 기업 생산품목 포트폴리오 변화의 중요한 측면이다.[24)] 따라서 여기에서는 과연 수출이 신제품의 도입과 기존제품의 퇴출을 촉진시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논의한다.[25)]

〈표 9〉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수출사업체가 비수출사업체에 비해 신제품 도입도 활발할 뿐 아니라 기존 생산품목의 퇴출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사업체의 품목추가 및 퇴출 행위가 슘페터 류의 창조적 파괴과정을 어느 정도 포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표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창조적 파괴과정이 수출, 더 나아가 무역자유화 혹은 세계화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

23) 또한 비수출 기업은 세계화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외국 기업과의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야 하는 것이다.

24) Stokey (1987), Grossman and Helpman (1991), Romer (1991) 등 몇몇 내생적 성장이론들은 경제성장의 핵심적 과정으로서 신제품의 도입을 이론화한 연구들이다.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이 신제품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품목 합리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한 것은 다분히 기술적인 이유에서라고 판단된다.

25) 이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Hahn (2012)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표 9〉 수출 사업체의 비수출사업체 대비 품목추가 및 품목퇴출

	수출 사업체 프레미엄		
	통제변수 없음	산업 및 지역더미 통제	산업더미, 지역더미, 사업체 규모 통제
1995			
품목추가	0.95***	0.95***	0.14***
품목퇴출	0.97***	0.96***	0.14***
1997			
품목추가	1.24***	1.18***	0.15***
품목퇴출	1.24***	1.15***	0.13***

품목추가 및 품목퇴출은 각 사업체의 1990-98년 기간 중 추가품목 및 퇴출품목 갯수의 누적 합을 지칭. 표의 숫자는 수출사업체와 비수출사업체간 각 종속변수의 차이를 나타냄. *** 표시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그러면 〈표 5〉의 결과는 수출의 결과로서 나타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Hahn (2012)는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26] 〈표 10〉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수출이 수출 참가 1년 전부터 2년 후까지 품목추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수출이 신제품의 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간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혁신(innovation) 촉진 효과가 무역의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는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거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그리 흔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27] 이러한 점에서 수출이 신제품 도입을 촉진한다는 결과는 무역과 성장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적어도 1990년대 한국 제조업에서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수출의 신제품 도입 촉진효과가 수출 참여 1년 전부터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예견된 무역자유화에 대한 혁신의 반응이 무역자유화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Costantini and Melitz (2007)의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다.

26) 구체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출의 학습효과를 추정할 때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27) Damijan, Kostevc and Polanec (2010) 및 인용된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0〉 수출이 사업체 품목추가 및 품목퇴출에 미치는 영향

성과 변수	프로빗 모형	s=-2	s=-1	s=0	s=1	s=2	s=3
품목추가	(1)	0.000	0.070***	0.206***	0.296***	0.669***	0.706*
	(2)	0.000	0.078***	0.216***	0.343***	0.580***	0.492
	(3)	0.000	0.084***	0.244***	0.246**	0.603**	0.566
품목퇴출	(1)	0.000	0.069***	0.185***	0.230**	0.530**	0.370
	(2)	0.000	0.071***	0.201***	0.167	0.394**	0.262
	(3)	0.000	0.060**	0.205***	0.139	0.330**	0.407

주: 품목추가 및 품목퇴출은 각 사업체의 1990-98년 기간 중 추가품목 및 퇴출품목 갯수의 누적 합을 지칭. *, ** 및 ***는 추정계수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신뢰구간은 1,000회 반복 bootstrapping을 통하여 계산하였음.

또한 위 결과는 수출이 품목추가 뿐 아니라 품목퇴출에도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출시장 참가가 품목합리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Bernard, Redding and Schott (2006), Eckel and Neary (2010) 등의 이론적 함의와 크게 보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이러한 사실은 무역자유화가 사업체내 품목간 자원재배분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만 이들 이론들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결과는 수출이 품목추가와 품목합리화 모두를 촉진한다는 점이다. 품목추가라는 현상이 기업의 R&D와 같은 혁신활동 투입(input)측면과 무관치 않음을 고려할 때, 위 결과는 수출이 사업체내 품목간 자원재배분을 촉진시키는 구체적 메카니즘이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혁신유인 제고"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출과 R&D: 양방향 인과관계?

수출 혹은 수출시장 참가는 R&D를 촉진시키는가? R&D는 수출 혹은 수출시장 참가를 촉진시키는가? 아니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가? 위에서 우리는 수출과 R&D간 이론적으로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실증적 규명은 수출 혹은 무역자유화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체적 메카니즘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무역자유화가 기업간 성과격차, 즉,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미 언급하였듯, 만일 양자간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무역자유화 혹은 수출시장 참가가 기업간 초기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은 더욱 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광공업 사업체자료에

나타난 사업체의 수출 및 R&D 활동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수출과 R&D간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199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수출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약 12-16%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이 비율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소수의 사업체만이 수출시장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외국 문헌의 결과와 동일하다. R&D를 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이보다 더 작은데, 연도별로 6-9%의 사업체만이 R&D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과 R&D를 모두 하고 있는 사업체는 연도별로 2-4% 정도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수출, R&D 모두 소수의 사업체만이 하고 있는 현상이며, 수출과 R&D를 모두 하는 사업체는 더욱 소수이다.

〈표 11〉 수출 사업체와 R&D 사업체의 분포

Year	사업체 유형			
	R&D: No 수출: No	R&D only	수출 only	R&D: Yes 수출: Yes
1991	53518 (81.0)	2161 (3.3)	8656 (13.1)	1735 (2.6)
1995	74213 (84.2)	3516 (4.0)	8323 (9.5)	2057 (2.3)
1998	58866 (80.1)	3590 (4.9)	8370 (11.4)	2710 (3.7)

주: 사업체 유형은 수출 금액 및 R&D 지출이 양수인가 여부에 따라 구분

〈표 12〉 수출 사업체와 R&D 사업체의 특징

		비수출사업체		수출사업체	
		R&D: No	R&D: Yes	R&D: No	R&D: Yes
1995	출하액 (백만원)	1255	5797	10077	71902
	종업원수 (명)	18	52	71	328
	일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23	33	34	44
	총요소생산성	2.7	2.9	3.0	3.3
	자본/노동 비율 (백만원/인)	23	34	37	55
	사무직 근로자 비율	17	30	26	33
	R&D/Production	0.0	11.1	0.0	4.8

주: 사업체 유형은 수출 금액 및 R&D 지출이 양수인가 여부에 따라 구분

〈표 12〉은 수출사업체 및 R&D 수행 사업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사업체의 수출 지위(status) 뿐 아니라 R&D 수행여부 지위가 사업체의 규모, 생산성, 자본집약도, 사무직근로자 비율(숙련집약도의 대리변수) 등과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수출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R&D를 수행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생산성도 높고, 반대로 R&D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사업체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모도 크다. R&D와 수출을 모두 수행한 사업체는 여타 사업체에 비해 기업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생산성도 현저히 높다.

그러면 1990년대의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수출과 R&D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적(bi-directional)인가? Hahn and Park (2011b)은 수출과 R&D간에 실제로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9). 보다 구체적으로 수출시장 참가는 이후 R&D 참가확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시장 참가의 R&D 집약도(intensity)에 대한 영향은 수출시장 참가 1년후에만 유의하게 관찰된다. R&D 참가의 수출에 대한 효과도 이와 유사하다. 즉, R&D 참가는 수출 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 집약도에는 R&D 시작 3년 후를 제외하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8)]

수출 뿐 아니라 R&D가 사업체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고, 이와 동시에 〈표 13〉에서 보여주었듯 수출 뿐 아니라 R&D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세계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소수의 사업체(기업)만이 생산성 향상 및 성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수출과 R&D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수출 및 R&D 참가에서 생산성 기반 자기 선택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초기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후의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소위 양극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표 13〉 수출(R&D) 참가의 R&D(수출)에 대한 효과

처치 내용	결과변수	처치 그룹 사업체수	추정효과				
			s=-1	s=0	s=1	s=2	s=3
수출 참가	R&D 참가 확률	4,231	-0.001 (0.003)	0.003 (0.003)	0.021*** (0.004)	0.038*** (0.005)	0.034*** (0.008)
	R&D 집약도	460	0.918 (4.123)	0.499 (0.674)	0.747*** (0.333)	0.277 (0.779)	0.409 (0.614)
R&D 참가	수출 참가확률	3,442	0.023*** (0.005)	0.036*** (0.005)	0.098*** (0.008)	0.148*** (0.011)	0.094*** (0.023)
	수출 집약도	746	-1.570 (3.752)	-3.995 (4.097)	-3.910 (7.415)	16.071 (11.600)	47.332*** (16.122)

주: Becker and Ichino (2002)의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에 따른 추정결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 ** 및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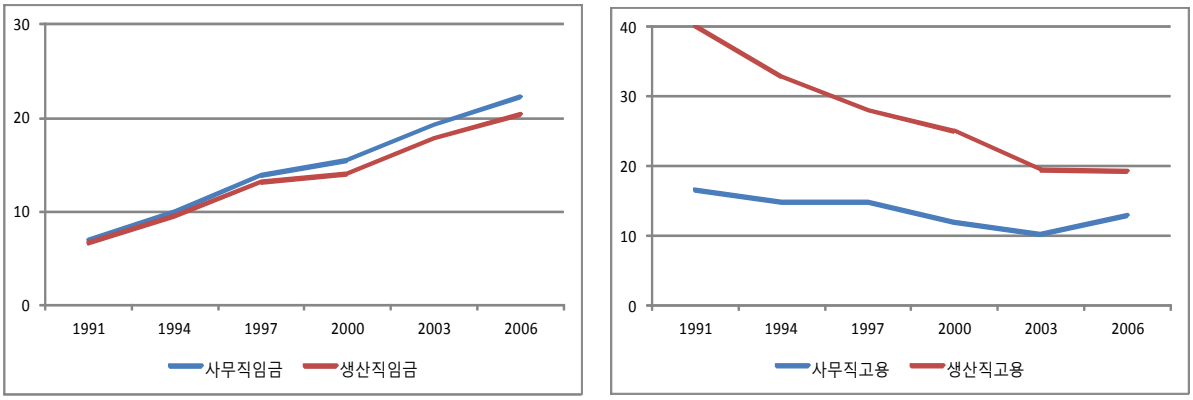
28)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수출 참가는 R&D 참가에는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R&D 집약도에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고, R&D 참가 역시 수출 참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 집약도에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무역자유화와 숙련-비숙련 노동 임금격차

1) 기초적 사실들

[그림 6]는 1991-2006년 기간 중 광공업통계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산직 대비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하자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고용 측면을 보면, 사무직 및 생산직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고용의 감소가 더욱 빨랐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고용이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숙련노동과 비숙련 노동간 임금격차와 무역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대다수 문헌에서 사무직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각각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대리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림 2는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임금이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 공급보다는 상대수요 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이러한 숙련노동의 상대수요 증가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림 6] 사무직 및 생산직 임금 및 고용 추이



2) 무역자유화와 숙련 비숙련 임금격차: 이론적 논의

무역자유화가 과연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무역이론의 전통적 주제였다.[29]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이론의 한 축을 이루는 Stolpher-Samuelson

29) 이에 관한 상세한 문헌 서베이는 Goldberg and Pavcnik (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의 설명의 상

정리에 의하면 숙련노동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무역자유화에 의한 비숙련노동 집약적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은 비숙련 임금을 하락시키고 숙련 임금을 상승시켜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동 정리에 따르면 비숙련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헥셔올린 이론을 토대로 무역자유화가 숙련-비숙련 임금격차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 주된 이유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헥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는 선진국에서는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키지만 비숙련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에서는 이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숙련-비숙련 임금격차의 확대는 선진국 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헥셔올린 이론은 각 산업에서 산업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숙련노동집약도가 낮은 산업으로부터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재배분에 의해서 경제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대다수 실증연구들은 산업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의 증가가 경제전체 숙련노동 고용비중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헥셔올린 이론은 산업간 자유로운 노동이동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많은 실증연구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산업간 노동이동이 그리 활발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80년대 이후 숙련-비숙련 임금격차 확대 현상에 대하여 무역자유화 보다는 소위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가 더욱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적 연구들은 표준적 헥셔올린 이론이 상정하는 메카니즘과는 다른 메카니즘을 통하여 무역자유화가 숙련-비숙련 임금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 채널들로 중간재 교역과 국제 아웃소싱,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와 무역자유화간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Feenstra and Hanson (1996, 1997, 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진전되어 온 국제생산분업(global production sharing)의 확대가 전 세계적 숙련-비숙련 임금격차의 확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국제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하여 기업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 존재하는 중간재 생산을 국제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때 선진국 기업은 비숙련노동 집약적 중간재를

당 부분은 이 문헌을 참조한 것이다.

개도국으로 아웃소싱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들 이론은 개도국으로 아웃소싱되는 중간재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비숙련노동 집약적 재화이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숙련노동 집약적 재화가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제 아웃소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서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최근에도 새로운 이론들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특정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점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무역자유화에 따른 내생적 반응의 결과라는 것이며, 이때 무역자유화는 경제 전체의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한편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 틀 하에서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에 기업의 생산성 혹은 수출 지위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론적 연구로는 Verhoogen (2006), Bustos (2009) 등이 있다. Verhoogen은 무역자유화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질적 향상(product quality upgrading)을 하도록 만들며, 이는 다시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Bustos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숙련집약적 생산기술은 고정투자를 요구하지만 가변비용은 낮춘다는 가정 하에서 무역자유화는 생산성이 중간정도인 수출 참가 기업 혹은 기존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숙련집약적 생산기술을 채택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무역자유화가 경제전체의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한 메카니즘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3) 한국 제조업에 대한 실증적 증거

과연 무역 혹은 세계화가 위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임금격차 확대에 기인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하다면 무역과 기술진보간 상호작용이 그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관련 몇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

30) 그러나, 예를 들어, 숙련 및 비숙련 노동 각각의 노동시장에 대한 마찰을 전제하지 않는 Bustos (2009)의 이론에서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출 참가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기술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기업의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은 증가시키지만 그 기업 수준에서의 상대임금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하에서 논의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참가기업에서는 내수기업에 비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 모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측정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먼저 〈표 14〉는 Bernard and Jensen (1997)의 방법론을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을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내 효과(within effect)와 사업체간 효과로 요인분해 한 것이다.[31] 먼저 1991-1997년 기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 상대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76% 정도로 매우 높다. 이 가운데 약 1.01% 정도가 소위 사업체내 효과에 의해 설명된다. 참고로 사업체내 효과는 기본적으로 사업체의 숙련집약도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초기 고용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숙련집약도 증가가 빨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존재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면 사업체간 효과는 기본적으로 사업체간 고용재배분 효과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 효과는 초기 숙련집약도가 높은 사업체의 고용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존재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표 14〉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증가의 요인분해

	숙련 상대고용: 1991-1997			숙련 상대고용: 1999-2003		
	사업체간	사업체내	계	사업체간	사업체내	계
전 사업체	0.754	1.007	1.761	-0.262	1.289	1.028
비수출사업체	0.779	0.197	0.976	1.119	0.015	1.134
수출사업체	-0.025	0.810	0.785	-1.381	1.274	-0.107
전 사업체	0.754	1.007	1.761	n.a.	n.a.	n.a.
R&D 비수행	-0.174	0.368	0.194	n.a.	n.a.	n.a.
R&D 수행	0.928	0.639	1.567	n.a.	n.a.	n.a.

주: 단위는 퍼센트. Bernard and Jensen (1997)의 방법론에 따른 요인분해 결과임.

사업체내 효과가 크다는 것은 기존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무역보다는 기술진보의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무역과 기술진보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 틀에서 보면, 사업체내 효과의 원인을 반드시 기술진보에 국한시켜 해석하기 어렵다. 〈표 14〉은 전 사업체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를 사업체 지위에 따라 수출 및 비수출사업체, 그리고 R&D 수행 및 비수행 사업체로 각각 나누어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R&D 수행 사업체가 사업체내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사업체가 사업체내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31) [그림 2]에 나타나 있듯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숙련노동의 상대수요 증가에 따라 상대임금 증가보다는 상대고용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에, 상대고용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를 제시한다. 상대임금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도 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Hahn and Park (2011b)를 참조하기 바란다. 방법론에 관한 제세한 설명도 위 연구 및 Bernard and Jensen (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 있다.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지만 사업체를 고용규모에 따라 대규모 사업체와 소규모 사업체로 나눌 경우 대규모 사업체가 사업체내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증가(혹은 상대수요 증가)는 수출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일종의 단일변량(univariate) 분석에 의한 결과로서 이를 토대로 수출이 사업체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Hahn and Park (2011b)는 R&D 등 여타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수출, 특히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내 숙련집약도의 상승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5). 한편 이미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출과 R&D간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수출은 직접적으로 사업체 숙련집약도를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R&D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업체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32]

〈표 15〉 사업체내 숙련집약도 증가의 결정요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상수항	-13.0927*** (2.8277)	-13.7887*** (2.9520)	-13.8176*** (2.9267)
수출시장참가 더미	1.6061*** (0.4081)	1.2664*** (0.4182)	1.2147*** (0.4181)
수출시장퇴출 더미	-0.4571 (0.4334)	-0.9577** (0.4449)	-0.9875** (0.4448)
지속적수출 더미	1.4648*** (0.3230)	0.4912 (0.3836)	0.4514 (0.3839)
사업체규모91		0.6819*** (0.1248)	0.6621*** (0.1253)
사업체연령91		0.0096 (0.0165)	0.0108 (0.0165)
총요소생산성91		0.7273** (0.3650)	0.7611** (0.3656)
자본집약도91		-0.3980*** (0.1086)	-0.4070*** (0.1086)
R&D 수행 더미			0.1279** (0.0600)
산업더미	Yes	Yes	Yes
R2	0.0055	0.0079	0.0082
관측치 수	24,166	23,809	23,80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1991-1997년 기간 중 사업체 숙련

32) 한편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할 경우에도 수출시장 참가는 숙련노동의 상대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진희·박창균 (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집약도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체의 수출 지위, R&D 수행 여부를 설명변수로 하는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임.

그러면 수출 혹은 무역자유화가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을 증가시켰는가? 한진희 · 박창균(2012)은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준다 (표 16). 수출시장 참가가 숙련 및 비숙련 임금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숙련임금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은 상승하는 것이다.

〈표 16〉 수출시장 참가가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성과변수	s = -2	s = -1	s = 0	s = 1	s = 2	s = 3
사업체 평균임금 (log)	0.000	0.023***	0.065***	0.124***	0.189***	0.140***
숙련 임금 (log)	0.000	0.011	0.061***	0.090***	0.150***	0.144***
비숙련 임금 (log)	0.000	0.008	0.022**	0.063**	0.130***	0.094**
숙련노동 상대임금 (log)	0.000	0.016	0.048*	0.034**	0.033	0.067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Radius matching에 의한 결과이며, radius의 값은 0.001로 하였음. 신뢰구간은 1,000회 반복실험에 의거한 bootstrapping을 통해 계산되었음.
출처: 한진희, 박창균 (2012)의 표 6.

〈표 17〉 관세율인하가 숙련-비숙련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모형

	Model I	Model II	Model III
상수항	-0.015*** (0.006)	-0.007 (0.009)	-0.394*** (0.128)
관세율	0.138 (0.044)	0.035 (0.048)	0.011 (0.047)
관세율*R&D 더미	-0.119** (0.058)	-0.148** (0.066)	-0.172*** (0.066)
R&D 더미	0.024*** (0.005)	0.016 (0.011)	0.004 (0.011)
투입 관세율		-0.179 (0.154)	-0.102 (0.152)
투입관세율*R&D 더미		0.242 (0.266)	0.279 (0.265)
사업체 규모			0.139*** (0.003)
숙련집약도			-0.032*** (0.004)

산업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R2	0.0048	0.0055	0.0678
관측치 수	352,904	352,904	352,904

주: 1992-2003년 기간에 대한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는 사무직-생산직 임금 비율의 로그값. 괄호안의 숫자는 사업체별 clustering 감안한 표준오차임.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출처: Choi and Hahn (2012).

이상에서는 수출시장 참가가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즉,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역자유화의 숙련-비숙련 임금격차에 대한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 수출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따른 영향만을 토대로 무역자유화의 전반적 영향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최용석 · 한진희 (2012)는 관세율 인하가 숙련-비숙련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관세율 인하는 R&D를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내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무역자유화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제전체의 숙련-비숙련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7).

Ⅴ 결 론

13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2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외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2

이병기 외

Ⅰ 서 론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규제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좁게는 재벌개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넓게는 소득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국민일반의 정치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는 비교적 분명한 내용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그 뜻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흔히 사용하는 말도 아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는 결국 다수 국민을 위한 시장의 규제인데 다만 정파별로 주장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재벌체제는 우리 정부의 따라 잡기 개발전략이 빚어낸 시대적 산물이지만,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 중에서 우선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다.[1)]

최근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내용 중에는 투자, 고용, 생산성 등 측면에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추진이 성장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추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경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경제민주화 추진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요인별로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추세 및 방향의 방향이 무엇

1) 이승훈(2012) 참조.

인지를 주요요인별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성장회계식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경제민주화 추진 이후 양적인 투입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의 축적에 어떤 변화를 자져올 것인지 또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잠재성장률 전망은 집계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각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 추세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 전망을 위해서는 노동투입, 노동의 질적수준, 물적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각각의 예측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중에는 현단계에서 정량화 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한 내용인 출자총액제한 제도,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제도 변화가 자본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노동투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실증 검토하며, 경제민주화 조치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및 각종 보호 및 지원의 강화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성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이러한 분석·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율을 정성적으로 전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내용과 잠재성장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민주 정책이 잠재성장율 변화요인인 자본스톡, 고용변화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세 가지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한다. 특히 자본투자의 변화와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순환출자의 금지문제를 검토하였다. 노동투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호 및 지원이 총요소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정책적인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1. 경제민주화의 개념

(1) 경제민주화의 개념

최근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2]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그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학술적인 엄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에 의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김형기(2012)는 경제민주주의는 소수의 수중에 있는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다수가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고 주장하였다. 이승훈(2012)은 경제민주화란 결국 균형 있는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시장제도와 시장규칙을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는 것, 즉 '시장의 민주적 통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장의 상벌기능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핵심인데 경제민주화 정책이 이 상벌기능을 훼손하면 성장동력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상벌기능이 불완전하여 소득분배가 왜곡될 때 직접적 재분배로 왜곡된 소득분배를 시정하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불완전한 상벌기능을 보정하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다. 상벌기능의 보정없이 소득재분배에만 치중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소득재분배는 항구적 과업이 되어버리고 상벌기능은 퇴화하면 서 정부실패가 뒤따른다고 보았다.[4] 김정호(2012)는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하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헌법 제119조의 1항과 2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냐 하는 논의

2)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 칼럼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김형기(2012) 참조.

4) 이승훈(2012) 참조.

로부터 촉발되었다. '헌법 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2항을 통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는 결국 다수 국민의 관점에서 본 시장의 규제인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정파별로 주장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우선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는 일반화된 개념규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정부가 경제의 자원배분에 적극 개입하거나 시장규제를 통해서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하는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5]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 중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개입조치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등이 입법화되고 있다.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입법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는 입법들도 나타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 도입, 재벌기업의 대응적 존재로 인식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포괄범위

지금 경제 민주화로 포장된 정책들의 핵심은 재벌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개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비록 인기가 높지만, 그것은 폐기된 경제 이론의 틀로 경제 현상을 살핀 데서 나왔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대기업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정책으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

5) 민경국(2012) 참조.

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고용보호제도의 강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도 개선,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등 재벌기업 규제강화 등 추진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욕과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표 1〉 경제민주화 정책과 잠재성장률 논의의 주요내용

	주요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내용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예상
자본스톡 변화	- 순환출자 금지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
노동고용 변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생산성 변화	-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2.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경제민주화의 영향경로

(1)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시계열 계량모형을 이용한 방법과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계열 계량모형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을 추정하거나 또는 총생산 수준을 영구적 부분과 일시적 부분으로 분리시켜 영구적 부분을 잠재총생산 수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6]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은 일변수 또는 다변수 시계열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잠재성장률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어 더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성장요인의 미래추세를 적용하여 향후 전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잠재산출(potential output)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산출수준(maximum sustainable output)이다. 최대한이란 가용

6) 박원암 · 허찬국(2004) 참조.

한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한이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잠재산출이 기술적으로 도달가능한 최대 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율은 잠재산출수준의 증가속도이며 일반적으로 한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의미한다.[7)]

European Commission(2009)은 경제위기 이후 성장경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첫째, 완전회복 : 경제위기로 잠재산출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완전히 회복

둘째, 성장추세의 일시적 하락: 위기기간 동안 성장률이 일시 하락한 후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지만, 잠재산출 수준은 하락하여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함.

셋째 성장추세의 항구적 하락: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추세 자체가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서, 잠재산출 수준은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에서 이탈하여 점차 격차가 증가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향후 우리경제가 어떤 성장경로를 밟아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더구나 최근 성장잠재력 추정결과에 의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성장잠재력이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성장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잠재산출물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회계를 통해 산출물을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총량생산함수를 가정함으로써 성장회계를 시도할 수 있다. 즉,

$$Y_t = A_t K_t^{\alpha} (h_t L_t)^{1-\alpha} \qquad (1)$$

여기서 Y_t는 생산량, K_t는 자본스톡, L_t는 노동투입, h_t는 노동투입의 질적 지수, A_t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α는 산출물의 자본탄력성을 각각 의미한다. 생산함수

7) 이재준 · 이준상(2011) 참조.

는 두 투입요소에 대해 규모의 보수불변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특히 자본과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frac{\triangle Y_t}{Y_t} = \frac{\triangle A_t}{A_t} + \alpha\frac{\triangle K_t}{K_t} + (1-\alpha)\frac{\triangle h_t}{h_t} + (1-\alpha)\frac{\triangle L_t}{L_t} \qquad (2)$$

즉 국민소득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율은 자본투입 증가율의 기여분, 노동투입 증가율의 기여분 및 나머지 솔로우의 찬차(Solow residuals)로 불리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잠재성장률 전망은 앞의 식(1)의 집계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각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 추세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 전망을 위해서는 노동투입, 노동의 질적수준, 물적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각각의 예측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GDP 대비 실질투자비율에 대한 전망치를 구할 수 있다면 노동투입, 노동투입질적 지수 및 총요소생산성의 추세치에 대한 전망치를 이용하여 잠재 GDP를 자본스톡과 함께 축차적으로 추정해 낼 수 있게 된다.[8] 현재의 문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한 내용인 출자총액제한 제도,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제도 변화가 자본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노동투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경제민주화 조치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및 각종 보호 및 지원의 강화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성적으로 분석·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율을 정성적으로 전망해 보는 것이다.

(2) 국내 잠재성장률 추정 전망치

최근 국내 잠재 GDP 성장률을 추정·전망한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잠재 GDP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에는 4%초반,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후반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의 추정결과일수록 낮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8) 한진희 외(2002) 참조.

잠재성장률의 장기 추세분석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경제연구소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 과거 고도성장 추세보다 크게 하락하게 된 주요요인으로는 노동투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둔화로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추세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려는 정책 등 경제의 체질 개선노력이 잠재성장률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자본투자, 고용 및 생산성에 영향을 중 가능성이 큰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잠재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표 2〉 기존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연구자	추정방법	1981-90	1991-2000	2001-2010	2011-2015
박형수·류덕현(2005)	생산함수접근법	8.6	6.3	4.4[1]	
곽노선(2007)	생산함수접근법	8.1	5.6(6.6)[2]		4.7[3]
황종률(2009)	생산함수접근법	8.1	6.1	4.3[4]	3.7[5]
	은익인자모형				3.7[5]
국회예산정책처(2011)	생산함수접근법			4.3/4.0[6]	3.7
현대경제연구원(2010)	생산함수접근법	9.1	6.7	4.3	3.5
김창배(2011)	생산함수접근법	10.76	6.39	4.25	3.33[7]

주 : 1) 2001-2005기간, 2) ( )안은 1991-97년기간, 3) 2005-2015년기간, 4) 2001-2008년기간, 5) 2009-2013년기간, 6) 2004-2007년기간/2006-2010년기간, 7) 2011-2020년기간

Ⅱ 경제민주화와 요인별 잠재성장률 변화 분석

1. 경제민주화와 자본스톡의 변화

(1) 자본스톡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규제 중 자본스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적합업종제도 등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며 순환출자 금지와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에 대한 신고 및 공시제도를 신설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진입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 1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더 강력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 혹은 30%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을 금지하고 조정심의회 심의 결과가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안하고 있는 제도들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쳐 자본스톡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투자와 자본축적의 주체는 기업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적 유인 구조에 따라 개별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본의 공급이 진행된다. 즉 가격기구와 이윤과 손실의 기준이 부여하는 유인에 따라 기업은 투자를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유인 구조 하에서 기업들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가격기구와 이윤-손실 기준이 부여하는 유인으로 인해 경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유인 구조 하에서 경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결과로 자본축적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야 잠재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기업의 투자 및 자본스톡, 그리고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주요 경제민주화 정책과 자본스톡의 변화

1) 출자총액제한 제도

가. 출총제 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총제는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6년에 도입되었었다. 그러다가 1998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허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 간 출자가 급증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1999년 12월 재도입(2001년 4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그 후 대기업이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계열사만 늘려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민주통합당이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출총제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표3〉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이후 35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3〉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출총제 폐지 직후 인 2009년 4월 1,034개에서 2011년 4월 현재 1,205개로 171개가 늘어난 것으로 출총제 폐지 이후 2년간 연평균 8.3%였다. 한편 출총제 폐지 이전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는 222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7%에 이르렀다. 출총제 폐지 이후 2년간 계열사 증가율이 폐지 이전보다 낮다. 이것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기업집단 유형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유형	구분		'07.4	'08.4	'09.4	'10.4	'11.4	계
총수 있는 집단 (29개)	계열사수(a)		751	825	941	963	1,075	-
		증감 (비율)	-	74 (9.9%)	116 (14.1%)	22 (2.3%)	112 (11.6%)	324 (10.8%)
		편입	-	116	161	109	172	558
		제외	-	42	45	87	60	234
총수 없는 집단 (6개)	계열사수(b)		61	85	93	110	130	-
		증감 (비율)	-	24 (39.3%)	8(9.4%)	17 (18.3%)	20 (18.2%)	69 (28.3%)
		편입	-	24	12	29	29	94
		제외	-	-	4	12	9	25
계(a+b)			812	910	1,034	1,073	1,20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2. 2. 28).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출총제 폐지 당시 적용대상 기업 31개사를 대상으로 폐지 이전과 이후의 투자 및 고용실적을 비교해보면, 출총제 폐지 이후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9]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는 제도폐지 이전인 2008년 27.2조원에서 2010년 45.9조원으로 68.8%나 증가하였던 반면, 같은 기간 출총제에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5.1%였다.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가 14배 정도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고용은 출총제 폐지 이전인 2008년 33.5만명에서 2010년 35.5만명으로 6.0%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기간 취업자 증가율(1.1%)의 5.5배, 임금근로자 증가율(4.7%)의 1.3배 수준이다.

9) 자유광장(http://www.freedomsquare.co.kr/618.) 참조.

한편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출총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전후한 경제력집중도 변화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변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출총제 폐지 후 자산 및 매출 집중도는 제한·비제한집단 모두 2009년은 하락하고 2010년은 상승했다.[10)]

〈표 4〉 출총제 폐지 전후 제한·비제한집단가 비금융업 자산 매출집중도 추이 비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본집중도	출총제 제한집단	29.61	30.46	31.55	29.22	29.2	30.51
	출총제 비제한집단	10.25	10.49	10.76	10.03	9.58	9.76
매출집중도	출총제 제한집단	27.49	28.18	28.14	26.3	25.92	27.89
	출총제 비제한집단	8.03	8.15	8.53	8.03	7.38	8.24

자료: 최원락·황인학(2012)

나. 출총제의 투자에 대한 효과

출총제가 투자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출총제는 출자를 제한하는 그 자체로서 투자를 제한하여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11)] 출자는 투자의 선행단계이므로 출자규제는 곧 투자규제로 작용한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은 출자총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 출자 및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축적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둘째, 출총제는 일종의 제품에 대한 규제로서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시대에 소비자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한다. 특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출총제는 자본 여력이 있는 기업의 출자와 투자

10) 최원락·황인학(2012).

11) 이건범(2003)은 외환위지 이후(1997-2003)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출자가 투자에 상호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김선구 외(2003)는 이건범의 분석기간은 외환위기 이후의 특수상황으로서 기업집단 계열사는 부채비율 200% 규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분석을 통해서 출자와 투자가 관련이 없다는 증거로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한편 이인권 김현종(2005)은 KDI 연구는 출총제라는 제약조건을 전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총제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지 못한다고 반박함. 고동수(2006)는 출자가 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임.

계획을 제한하여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출총제는 제품에 대한 규제다. Blanchard and Giavazzi(2003)은 제품에 대한 규제가 생산설비나 공장 등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을 확장할 때 그 비용에 영향을 미쳐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관료적 형식주의와 규제 부담들이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능력을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출총제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출총제는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규제로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다. 기업 간의 경쟁 감소는 투자를 억제한다. Blanchard and Giavazzi(2003)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진입장벽과 기업의 수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가격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한편 Haefke and Ebell(2004)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완화는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진입장벽의 감소로 경쟁이 증가하면 생산 활동의 증가로 노동수요와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대해 하방압력을 가하고 실질 임금은 올리면서 노동공급을 자극한다. 따라서 출총제는 진입규제로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고용은 인적자본 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출총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쟁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혁신하려는 기업의 인센티브와 관계가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경쟁의 증가는 혁신의 결과로 얻는 이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나 기존 기업이 혁신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나 경쟁기업이 혁신할 가능성에 직면할 때 혁신이전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존 기업을 혁신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통해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출총제는 이러한 혁신활동을 방해한다. 경제성장은 기업가의 혁신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가의 혁신활동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것이 퇴보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기업규제는 기업가의 혁신활동을 방해하므로 결국 R&D와 같은 투자의 감소를 야기한다.[12)]

12) Vives(2004), Acs(2006), Carree and Thurik(2005) 그리고 Holcombe(1998) 참조.

넷째, 출총제는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요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작용하여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출자는 재산의 운용이고, 재산의 운용에 관한 결정은 자본가의 권한이다. 출총제는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자본 수익률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와 같다. Averch and Johnson(1962)는 자본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제는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총제는 자본수익률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축적을 방해한다.

출총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출총제의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박경진 · 신현한 · 채창엽(2010)과 최원락 황인학(2012)가 있다.[13] 박경진 외(2010)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1998-2004년 기간 동안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제한해왔음을 발견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된 기간(2001년~2004년)과 적용되지 않은 기간(1998년~2000년)에 대한 t-test 결과,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였을 때, 기업의 실물투자, 현금흐름, 토빈의 q, 성장률 변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최원락 · 황인학(2012) 역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투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Tobin의 q 투자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투자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제한집단 소속기업들의 투자를 제약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출총제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소속 비금융기업의 비유동 유형자산 증감률을 비교하여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을 발견하였다. 출총제 제한 기간 중 제한집단의 비유동유형자산 증감률은 비제한집단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 반면, 출총제 폐지 후 두 집단 간 증감률 차이는 큰 폭 축소하였으며, 특히 출총 제한 기간 중 두 집단 간 증감률 격차는 기업의 생산적 시설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공구 · 기구와 기계장치 등의 자산유형에서 두드러졌음을 보였다.

13) 대부분의 연구가 지배주주와 관련된 것임(임영재 2003, 조성욱 · 김명애 2009). Joh(2003)는 기업집단의 출자행태 및 지분구조가 복잡할수록 각각 기업가치와 이윤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순환출자 금지

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논의점

순환출자는 A→B→C→A 등의 형태로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연쇄적으로 출자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말한다. 순환출자를 문제 삼는 이유는 가공(架空)자본이 형성되고,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한다는 점이다.[14] 그래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는 것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계열기업 간 순환출자에 의해 가공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입 이득은 별로 없다. 한 기업에 의해 원래 출자된 자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자본이 계열기업들의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각 계열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에서 가공자본까지 포함한 부채비율을 고려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대출 대상 기업의 자본의 과다보다는 수익구조, 대출금 상환능력, 담보와 보증, 그리고 현금흐름 등이다. 더구나 계열기업 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자본은 상쇄되어 버리고, 가공자본 형성에 따른 부채비율 축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입 이득은 별로 없다.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공자본은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 때문에 발생하며,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증대한다(김현종 2012). 이것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일반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체제의 기업집단보다 더 낮은 사실에서 증명된다. 〈표3〉을 보면 2011년 3월 말 현재 순환출자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는 37.7%로서 지주회사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인 41.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인 37.6%와 거의 유사했다. 2010년 3월 말의 경우에는 순환출자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37.0%)보다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38.3%)가 오히려 더 높았다.

---

14) 김진방(2005)은 가공자본이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한 기업집단 내 가공자본은 계열사 자본총계의 총합과 결합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 간의 차이라고 본다. 임영재(2006)는 계열사 간 출자구조에서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 정도가 다른 계열사들이 존재하게 되면 추가로 지배주주에게는 사익추구의 유인(소위 tunneling 문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승(2012)은 한국의 재벌을 순환출자와 교차피라미드식 출자의 결과 지배주주가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초고하는 이결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상호공동지주회사(de facto mutual joint holding companies)"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5〉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1년 3월말 현재)

기업 집단명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여부	지주회사그룹	41.9	42.9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35.4	29.1
순환출자여부	순환출자 그룹	37.7	36.7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37.6	32.7
전체 평균		37.6	33.8

자료: 김현종 (2012).

순환출자로 인해 소유지배 괴리도(소유지분 대비 의결권)가 높아질 수 있다. 〈표4〉를 보면 순환출자구조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구조가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소유지배괴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순환출자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가 소유지배 괴리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15] 게다가 소유지배 괴리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운영원리와 상관이 없다. 주식회사 제도는 의사결정 권한이 통제주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경영진에 집중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의사결정에 따른 손해를 회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주식회사들로 이뤄진 기업집단의 운영 원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소유·지배 괴리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지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폐해가 없다.

실제로 소유지배 괴리와 기업 가치 간의 실증연구 결과도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인권·김현종(2005)은 1987-2003년 기간 동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추구 즉 터널 효과(Tunneling effect)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소유지배 괴리도와 경제적 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Joh(2003)는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하면 기업집단 계열사의 성과가 악화됨을 보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집단 계열사를 분석한 강원·신현한·장진호(2005)과 김현종(2006)은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15) 김현종(2010)은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순환출자구조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지표를 감소시킴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일반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16] 우리나라에서 전자, 자동차, 조선과 같은 대형 투자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순환출자 때문이다. 순환출자 구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가운데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도이치은행도 대표적인 순환출자 기업이다. 미국은 순환출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이중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한다.[17]

〈표 6〉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1년 3월말 현재)

기업집단명		D1 (소유지배괴리도)	D2 (의결권 승수)	D3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여부	지주회사 그룹	20.6	2.27	0.363	42.9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21.8	3.37	0.409	29.1
순환출자 여부	순환출자 그룹	25.2	3.92	0.528	36.7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19.9	2.63	0.340	32.7
순환출자 여부 (10대 그룹)	순환출자 그룹	30.4	5.26	0.631	50.5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8.7	4.61	0.543	56.2
순환출자 여부 (20대 그룹)	순환출자 그룹	24.7	4.30	0.535	39.0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3.1	3.35	0.411	40.1
전체 평균		21.4	2.99	0.393	33.8

자료: 김현종(2012)

나. 순환출자 금지의 투자에 대한 효과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은 새로운 벤처캐피털 자본가로서 대규모 자본출자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출자는 피출자기업에게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한편, 출자기업에게는 신규투자를 위한 사전단계로 활용된다. 즉, 출자는 1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때 계열사의 지분참여형태로 발생하며, 출자가 이루

16) 1970년대 정부의 기업공개 방침과 1990년대 초의 소유분산 정책에 따라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뤄진 측면도 있다.

17) 전삼현 (2006).

어진 후에 피출자회사(혹은 신설회사)는 금융회사 대출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순환출자가 규제되면 신규투자가 저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신규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앞의 출총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며, 기업가의 혁신활동을 방해한다.

그리고 순환출자는 적대적 M&A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게 한다.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 투자자 확보 등에 귀중한 경영 자원과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 순환출자 금지 후에 닥쳐올 경영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SK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2010년부터 지난 8일까지 총 5조7836억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였다. 2009년 1조396억원이던 이들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금액은 2010년 1조9581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4642억원까지 불어났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는 1조361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 2009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하다. 삼성생명(2869억원) 삼성화재(3143억원) 삼성카드(2495억원) 제일기획(753억원) 등 4개 계열사가 올 들어 매입했거나 연말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힌 자사주 규모는 총 9261억원에 이른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C&C도 2009년, 2010년에 자사주를 사들인데 이어 올해도 2103억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 STX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주)STX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자사주(70억원)를 매입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유한양행(208억원) 동아제약(390억원) 등도 자사주를 대거 사들였다."[18]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대로 기존 순환투자까지 금지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자, 자동차, 조선 산업을 이끌어온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룹 등이다. 〈표7〉를 보면 6대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14조6,440억원이 들어간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7조6,410억원으로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삼성은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 롯데 2조4,570억원, 현대중공업 1조5,550억원, 한진 2,130억원, 한화 4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삼성이 7조8,570억원, 현대차 10조7,820억원, 롯

18) 한국경제신문(2012. 10. 23.) "기업, 투자 미루고 자사주 산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2257431&sid=010201&nid=000&ltype=1

데 3조1,080억원, 현대중공업 1조8,180억원, 한진 3,540억원, 한화 3조7,220억원이 필요하다. 진취적인 투자 활동에 쓰일 자원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순환투자 금지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 순환출자 금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력을 잠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표 7〉 6대그룹 순환출자 해소 비용(단위 억원)

그룹명	핵심회사	순환출자		해소비용(추정)	
		순환 고리 수	해소 대상 수	단순해소	지주회사로의 전환
삼성	삼성 에버랜드	15	8	4조3,290	7조8,570
현대차	현대차	2	1	6조860조	10조7,820
롯데	롯데쇼핑	19	6	2조4,570	3조1,080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1	1	1조5,550	1조8,180
한진	대한항공	8	1	2,130	3,540
한화	한화	24	1	40	3조7,220
합계		67	18	14조6,440	27조6,410

자료: 재벌닷컴. http://www.chaebul.com/

3)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논의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234개 품목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으로 나누어 3차에 걸쳐 총 82개의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서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을 획득하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정 상생법 수준에서의 적합업종제도 시행의 실효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제도의 강제력과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양방식을 조정과 권고에서 강제명령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서비스 · 유통업으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9]

19) 이선화(2012)는 중기적합업종제도가 한미 FTA 또는 한-EU FTA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역을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논거의 배경에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은 낙후되고 성장이 지체된 반면, 대기업은 사업 확장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이 규모 면에서나 수익성 면에서 중소기업의 성과를 앞지르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대기업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의 출하액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부문보다 중소기업부문이 점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다. 외환위기 이후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어 매출이나 부가가치 모두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

〈표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평균 출하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0 -2009	10.3%	10.0%	10.8%	9.2%	8.7%	9.8%
1990-97 1999 -2009	13.3% 9.4%	12.6% 9.3%	14.3% 9.4%	13.9% 7.0%	13.5% 6.7%	14.3% 7.3%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김주훈(2012)에서 재인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시장을 과정이 아닌 상태로 보는 지식체계에서 나온 것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느 한 순간의 정지된 화면으로 보는 일종의 '스냅샷'오류이다. 시장은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다. 시장이 정태적이라면 기업의 규모별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변화로 그동안 중소기업이 해오던 업종을 대기업이 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해오던 일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할 수 없다.[20] 스타벅스(Starbucks), 이케아(IKEA) 등이 좋은 예다.[21] 이들은 자영업 수준의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1971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점으

20) 김필헌(2011)은 최소효율규모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정방법론과 생산함수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정태적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21) 이선화 (2012).

로 개점하였다. 지금은 60개국에서 총 19,972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으로 성장하였다. 이케아(IKEA) 역시 1943년 스웨덴에서 조그만 가구상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 35개국에 253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다국적 가구 기업이 되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약자여서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호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으면 외국 기업들이 대신 들어온다. 사업영역보호제도로 인해 외국기업 3M에 의해 잠식되었던 국내 문방구 사업이 좋은 실례다. 실제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자 외국기업이 진입한 예가 속출하고 있다. 〈표9〉은 최근 대기업 규제에 따른 외국기업 진입사례들을 보여준다. 조달청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을 배제한 채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지역별 입찰 결과 오피스디포가 낙찰됐다. 지난해까지 물품을 조달해왔던 삼성 계열의 아이마켓코리아, LG 계열 서브원 등 국내기업에서 외국기업으로 바뀐 것이다. 급식시장에서는 세계 3위 급식업체인 아라마크가 진입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는 일본계 '트라박스'가 해운대에 이어 경남 함안, 전남 광양 등 10곳에 점포를 열었고 다른 일본계인 '바로'도 올 5월 부산과 경남 김해에 점포를 개설했다.

〈표 9〉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이후 외국계업체 진입 현황

분야	대기업 규제	외국기업 진입
공항면세점(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입찰시대기업배제방침 (2012. 10)	DFS 등 외국계 면세점 진입 가능성
공공기관 급식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배제(2012.3)	프랑스계 '아라코'가 다산콜센터 신용기금 등 4곳 운영권 확보
소모성행정용품(MRO)	조달청 입찰에 대기업 참여배제(2011.10)	미국계 '오피스디포'가 전국 6개 권역에 78억 원 남품 계약
기업형 수퍼마켓	대기업영업시간과 신규점포설치제한(2012.1)	일본계 SSM업체 '트라박스'가 경남 권에 10개 점포 설치

자료: 조선일보(2012. 10. 26). "규제의 역설 ... 대기업 내쫓은 시장, 외국계 어부지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5/2012102502755.html

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투자에 대한 효과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진입규제로서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한다.[22]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모두 39개 조항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1998~2008년 기간 중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김필헌 2010).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30개 법령에 걸쳐 50개에 가까운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성장 동기가 매우 낮다. 〈표10〉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58,134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5년 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529개로 0.9%, 대기업으로는 성장한 기업은 4개로 0.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중견기업이었던 984개 업체 중 40.9%인 402개 기업이 2008년에 중소기업으로 오히려 후퇴하였다.

〈표 10〉 2003-2008년간 기업의 성장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8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계
2003년	중소기업	57,601	529	4	58,134
	중견기업	402	568	14	984
	대기업	2	7	17	26
	합계	58,005	1,140	35	59,114

자료: IBK경제연구소(2010)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보호 위주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기업의 성장의욕 저하는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은 안주하게 되어 성장하려는 유인을 갖지 못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생산과 판매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서 경험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표11〉를 보면 고유업종제도가 시행 중이던 1991~2001년 기간에 사업영역보호가 해당 업종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침체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수, 월평균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면에서 모두 연평균 음(-)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신상품, 신시장 개척에 대한 유인을 제거한다. 신상품, 신

22) 양재성(1998)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대량생산이나 생산비용 절감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시장 개발에는 대규모의 초기자본이 들기 때문에 신상품, 신시장 개발에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을 이양해야 하므로 대기업이 신상품과 신시장을 개발할 동기가 사라져 자연히 투자가 감소한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일종의 진입규제로서 기업 간 경쟁을 막는다. 경쟁제한은 앞의 출총제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혁신하려는 인센티브를 없애 기업가의 혁신활동을 방해함에 따라 R&D에 대한 투자의 감소를 야기한다.

〈표 11〉 제조업 대비 고유업종의 경제적 비중 변화

	사업체수	월평균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1991	12.8	12.4	12.6	11.6
1992	12.7	12.2	12.3	10.9
1993	12.1	12.0	12.0	10.3
1994	11.9	12.2	12.1	10.7
1995	11.5	11.6	11.8	10.4
1996	11.7	11.2	10.0	9.2
1997	11.8	10.4	8.7	8.1
1998	12.1	10.6	8.6	7.8
1999	11.8	10.3	8.6	7.8
2000	11.7	10.4	8.3	7.8
2001	11.5	10.4	8.3	7.7
연평균 증감율	-1.04	-1.70	-3.94	-3.89

자료: 이윤보 · 이동주(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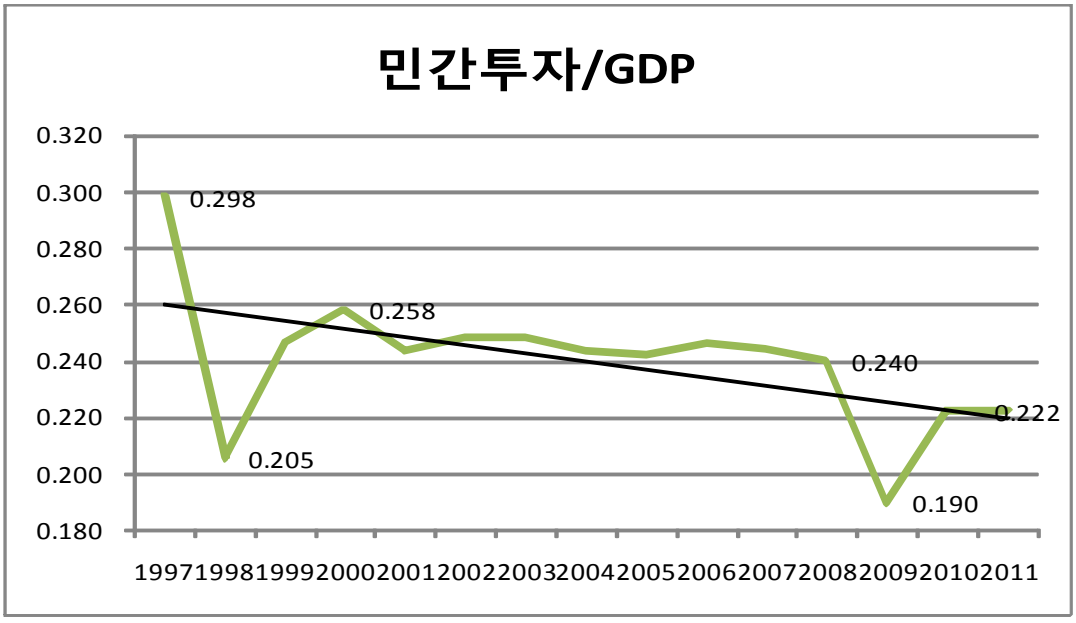
(3) 규제와 투자와의 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제도들은 경쟁을 제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들이다. 반시장적인 규제들은 자원을 가장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투자에 영향을 미쳐 자본축적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Mahoney(2001)는 보통법(common law), 즉 작은 정부에 기초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보였고,

Djankov 외(2006)은 135개국의 기업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좋은 규제를 갖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좋음을 보였다. Alesina et al. (2005) 역시 규제와 투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1975-1998년 기간 동안의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규제완화가 투자를 증가시킴을 보였다.

〈그림1〉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1997년 이후 민간투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12〉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된 1998년 이후의 우리나라 규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부터 정부규제가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7년에 잠시 규제가 완화되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23] 민간투자율과 정부의 규제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민간투자율(민간투자/GDP) 추이



23) 한국경제연구원(2009)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 5. 1~2008. 8. 31(4개월)간 조사한 결과 경제관련 9개 부처의 등록된 규제건수는 4,180건이었던 반면 비등록 규제 건수는 이보다 3배 많은 12,455건이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완화되기 보다는 규제가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연도별 규제등록 건수[24)]

연도	건수	연도	건수
1998	10,468	2006	8,084
1999	72,000	2007	5,114
2000	7,169	2008	5,228
2001	7,461	2009	6,740(11,050)
2002	7,773	2010	7,055(12,120)
2003	7,893	2011	6,952(13,147)
2004	7,910	2012.07	7,055(13,664)
2005	8,024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민간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간단한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민간투자는 이자율과 기업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규제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위해 아래 (1)식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y_t = \alpha + \beta_1 x_{1t} + \beta_2 x_{2t} + \epsilon_t \qquad (1)$$

여기서 y_t는 민간투자, x_{1t}는 정부규제, x_{2t}는 이자율이다.

회귀분석을 위해 1997-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민간투자와 이자율은 1991-2011년 한국은행의 경제통계를 이용하였다. 이자율은 1년 산금채 금리를 사용하였다. 한편 규제건수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정부규제가 많아지면 기업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계수인 β_1은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자율이 높으면 민간투자가 줄고, 이자율이 낮으면 민간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계수인 β_2 역시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귀분석은 각 변수에 로그를 취해서 이뤄졌다.

〈표13〉은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각 변수의 추정치는 예상한 부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규제가 민간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보

24) ( )는 주된규제+부수규제임. 2009년부터 주된규제와 부수규제를 합해서 공시하고 있음.

임을 알 수 있다.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규제가 10% 증가하면 민간투자가 2.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 합업종 등과 같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가 가해지면 향후 더욱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회귀분석 결과

$$(\log y_t = \alpha + \beta_1 \log x_{1t} + \beta_2 \log x_{2t} + \epsilon_t)$$

	추정치	standard error	t	P>|t|
β_1	-0.264	0.117	-2.26	0.045
β_2	-0.410	0.826	-4.97	0.000
α	15.2	1.094	13.93	0.000

* R^2= 0.8641, Prob 〉F = 0.0000.
* Durbin-Watson statistic: 1.843(original), 1.951(transformed)

(4) 정책적 시사점

정치권에서 출총제를 부활하려는 이유는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이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도만 심화되었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총제제한 집단과 비제한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변화는 출총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 이후 신규투자가 늘지 않고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만약 출총제를 부활한다면 투자가 크게 줄 것이다. 출총제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제품에 대한 규제다. 제품개발을 제한하므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또한 출총제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로서 경쟁을 제한한다. 경쟁제한은 기업을 확장하려는 동기와 혁신하려는 동기를 줄여 인적자본과 R&D에 대한 투자가 줄게 된다. 출총제는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다. 따라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자본축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출총제가 투자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도 많다.

순환출자 역시 출총제와 유사하다. 기업집단의 내부자금은 일종의 벤처캐피탈의 자

본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순환출자는 적대적 M&A에 노출되게 하여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주장의 근거는 취약하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출하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경쟁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진입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 이후 많은 부문에서 외국 기업들이 진입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업종제도는 진입규제다. 보호받는 중소기업은 성장 동기가 약화되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기업은 신상품 신시장 개척의 유인이 사라진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기업 간 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R&D에 대한 투자 등이 감소할 것이다.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공통적으로 시장이 동태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조치들이다. 기술, 소비자의 수요 등 시장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변화에 이 제도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업가 정신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규제는 시장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인 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들은 이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다.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훼손하는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행위를 막아 기업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줄여 자본축척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자본축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 안 된다.

2. 경제민주화와 노동투입의 변화

(1) 문제 제기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화두이다. 여기에는 주로 재벌소유구조 개편,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하도급 관련 규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투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요 주제로 삼고자 한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잠재성장률은 기본적으로 노동투입, 자본축적, 그리고 생산요소를 결합하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노동투입은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나라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입법화 될 경우 일부 정책들은 노동투입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잠재성장률에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경제민주화 달성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정책 중 일부는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양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업인 범죄, 재벌소유구조,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관련 규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지만 양당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중에는 명시적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상당 부분이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크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입법과정을 통해 현실화될 경우 우선 직접적인 노동비용 변화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투자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노동력 투입에 대한 규제로 구체화될 전망이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고용 규모 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 논의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등이 고용비용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 결정과정과 잠재성정률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예상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현재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논의 중인 노동정책 및 비정규직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노동투입 및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관련 정책들이 노동비용의 변화를 통해 고용결정과정 및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비정규직 정책이 경제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상되는 고용변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경제민주화와 노동투입

현재 양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중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표 1〉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까지 공식적인 공약발표는 없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려고 하며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한다. 또한 대기업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경우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회피노력과 구제대책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도

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논의는 너무나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노동 투입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ii)정량화가 가능한 논의 중 고용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양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 중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논의가 노동투입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중 정량화가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 중 비정규직 대책은 크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 중 명시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는 아직 공표하지 않았지만 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신청시정제도(근로자 개인이 차별 인정받았을 시 동일조건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차별 개선)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계약 2년 후 업무에 대한 지속성과 기대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갱신기대권' 도입을 논의 중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경제민주화와 연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에 있어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고용형태, 즉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는 달리 현행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사업

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종합하여 보면,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정책들은 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 차별시정제도를 보다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줄이기와 관련해서는 급작스런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방향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용 중 원청회사와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도 없고, 법적으로도 사용관계도 아닌데 직접적인 차별시정 신청절차의 당사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 노동비용의 강제적 인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통합당은의 비정규직 정책들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신설, 파견 사용업무와 사용사유 제한 신설, 파견과 도급의 구별 조항 신설 등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사용사유 제한으로 당장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어 들 수 있으나 신규구직자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이 위축되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는 달리 기존의 '의무'규정을'간주·의제'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인(誘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통한 차별시정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인상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한다.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간주·의제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논의 모두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된 노동비용의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며, 이는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해 고용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관점서 논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및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비용의 변화를 통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경제 전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비정규직뿐만 아니

라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고용보호 수준을 상승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정규직의 상대적인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보호 수준에 따라 고용조정비용이 변하게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Mortensen and Pissarides(1994) 모형을 확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상이한 두 가지 형태의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4〉 양당 경제민주화 노동 정책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경제민주화 中 노동 관련 정책은 현재까지 논의 중**	▷ **경제민주화의 5대 목표 중 하나가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따른 제·개정 대상 법률의 내용** -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 노동자의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 , 단체교섭의 대상 및 단체협액의 효력확대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 **경제민주화 정책 중 비정규직을 제외한 노동 관련 정책은 최근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논의된 다음의 두 의견임**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100%로 확대(현 50%) - 갱신 기대권 법제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예비후보자 공약 중 공약 6 (차별없는 고용시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듬**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해고회피노력과 구제대책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 남발 제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 강화 - 해고 회피 노력과 협의결과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개정 - 공익위원은 노사단체 추천을 거쳐 임명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실직자 구직촉진법」 제정 또는「고용보험법」에 구직촉진수당 신설 -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게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실업부조금 지급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고용보험법」 개정)** - 현재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8.8%)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확대(지원금과 지원대상 사회보험 확대(산재보험, 건강보험 포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보도자료 및 민주통합당 보도자료를 정리한 한국경제연구원 원내 자료

〈표 15〉 비정규직 보호정책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있어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 관련규제 강화 - 대표신청시정제도(근로자 개인이 차별 인정받았을 시 동일조건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차별 개선)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 확대,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	▷ **비정규직 차별 개선**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 같은 맥락에서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 추가 - 파견법,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의 확대 - 근로조건, 취약계층 고용현황, 공정거래현황 등 고용지표를 매년 공시하는 고용공시제 도입 (우수기업 가점부여)
▷ **비정규직 규모 축소** - 현행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해당근로자 직접고용의무' 규정 유지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 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율적 개선을 유도) 도입 -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 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대기업의 경우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유도)	▷ **비정규직 규모 축소** - 일시적 ·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계약 허용하는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조항 신설 -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 현행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 '간주'하도록 강화 -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개정 - 공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 모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관행을 개선함으로써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30% 이하로 축소 -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2년간 한시적 도입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 15년 시행) - 동법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 즉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사업 내'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원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파견법에 도급과의 구별조항 신설 - 근로자파견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무규정을 '즉시 고용의제' 로 개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보도자료 및 민주통합당 보도자료를 정리한 한국경제연구원 원내 자료 (김선우(2012)) 참조

(3) 모형 및 모의실험

1) 모형

3절에서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 중 노동투입에 대한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통상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권고사직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이 79.4%인 반면 비정규직은 40.6%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노동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총노동비용의 약 10.8%(2010년 『기업체노동비조사보고서』 참조)를 차지하는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될 경우 복지비용과 같은 준고정적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해 노동투입량을 조정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매력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노동비용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조세격차는 주로 사회보험료 분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에 의해 발생

하게 되는데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각각 78.3% 및 45.0%로 일정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강제될 경우 사회보험료 분담금이 증가하여 조세격차가 확대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순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노동수요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해 보다 많은 고용조정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어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조정비용이 증대하여 노동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고용조정비용이 상이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상정한 모형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의무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예측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 매칭모형(matching model)을 생산성 수준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제로 확장한 모형을 상정하기로 한다(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모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생산성의 격차가 존재하며 두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비용(퇴직금, 퇴직위로금 등)도 상이하다. 현실을 반영하여, 정규직을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고용조정비용은 비정규직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본 모형이 상정한 경제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변동으로 인해 특정 근로자의 생산성이 하락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생산성과 해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가 심각할 경우에는 해고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비용이 발생하는 고용조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반대로 경기변동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소폭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추가 채용을 할 경우에는 추후 생산성이 낮아져 해고를 해야 할 경우 고용조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고용조정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추가적인 채용을 하게 된다.

한편 고용은 기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역시 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거절할 경우에는 실업 시 제공받는 실업수당과 여가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여가, 실업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된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업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은 경기변동에 따라 내생적으로 일자리의 창출(job creation)과 소멸(job destruction) 및 고용 등이 결정되는 모형이다.

〈부록〉에 자세히 설명된 모형은 7개의 식으로부터 7개의 변수를 구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해는 모의실험을 통해 구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한 모의실험을 진행하기로 하며 일부 모수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차용하기로 한다. 모의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였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은 0과 1 사이에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라 분포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은 $\varepsilon_H^{\min}$ $(0<\varepsilon_H^{\min}<1)$과 1 사이에서 균일분포를 따라 분포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1/2이며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1+\varepsilon_H^{\min})/2$가 되고 두 그룹 간 평균생산성의 차이는 $\varepsilon_H^{\min}/2$이 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상정한 모의실험에서는 $\varepsilon_H^{\min}=1/3$을 가정하였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생산성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75% 수준이다. 참고로 안주엽 외(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56.7% 수준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시간당 임금 차이 중 약 27.8%가 생산성과 무관한 차별에 의한 차이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한시적 근로자의 생산성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68.7%에 달한다. 그러므로 본 모형에서 가정한 $\varepsilon_H^{\min}=1/3$ 는 현실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매칭함수는 Pissarides(1986) 및 Blanchard and Diamond(1989)에서 실증적 타당성이 증명되었고 Cahuc and Postel-Vinay(2001)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 외 수많은 많은 실증 연구에서 사용된 컵-더글러스 형태의 함수 $m(v,u)=hv^{\eta}u^{1-\eta}$, $\eta=0.5$, $h=1$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기본 모형의 모의실험에서 도출된 평균실업기간은 약 2.4개월이며

이는 2003년 1분기부터 2012년 1분기 사이 평균실업기간인 2.6개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매칭함수의 형태는 비교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Poisson 분포를 따르는 생산성 충격의 발생률은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를 따라 $\lambda_L = \lambda_H = 0.081$을 가정하였다[25].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자리를 비어둘 경우의 비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20% 수준인 $c = 1/10$로 가정하였으며 또한 실업 상태에서 실업수당이나 여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생산성의 50%인 $z_L = z_H = 1/4$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 및 Ljungqvist (2002)를 참고로 분기 이자율로 1%$(r = 0.01)$를 선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모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정비용이다. 고용조정비용은 기업이 고용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주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같은 일회성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 2년간 정규직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이므로 6.6개월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모형에서 정규직의 분기별 평균 임금이 2/3이므로 임금으로 표시된 퇴직금은 1.47이다. 여기에 4개월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금으로 표시한 퇴직위로금은 0.89가 되므로 본 모의실험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정비용은 $K_H = 2.36$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은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이 동일해지는 수준인 0.21로 가정하였다. 참고로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과 퇴직금 수혜율을 감안하여 추정한 임금 대비 고용조정비용은 0.18이므로 본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참조하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비중을 나타내는 α를 0.35로 정하였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이 균일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L(x) = x \tag{1}$$

25) Mortensen and Pissarides(1994)는 기본모형의 모의실험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rate)의 평균과 분산이 Davis and Haltiwanger(1992)에 보고된 미국 실제 자료와 일치되도록 λ를 정하였다. 한편 Davis and Haltiwanger(1992)는 1972년 시작된 미국 사업체 패널자료 LRD(Longitudinal Research Database)로부터 평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계산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발표하는 사업체 패널자료(Workplace Panel Survey)가 있으나 2006년부터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산성 충격의 평균 도착율을 도출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avis and Haltiwanger(1992) 및 Mortensen and Pissarides(1994)의 연구로부터 $\lambda_L = \lambda_H = 0.081$을 차용했다.

$$F^H(x) = \frac{x - \varepsilon_H^{\min}}{1 - \varepsilon_H^{\min}}, \quad 0 < \varepsilon_H^{\min} < 1 \tag{2}$$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형의 균형을 계산하는 7개의 식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varepsilon_L^h = \varepsilon_L^d + 2(r + \lambda_L)K_L \tag{3}$$

$$\varepsilon_H^h = \varepsilon_H^d + 2(r + \lambda_H)K_H \tag{4}$$

$$\varepsilon_L^d = z_L - \frac{1}{2}\frac{\lambda_L(1-\varepsilon_L^d)^2}{r+\lambda_L} + \frac{1}{4}\frac{\theta q(\theta)(1-\varepsilon_L^h)^2}{r+\lambda_L} + [\theta q(\theta)(1-\varepsilon_L^h) - r]K_L \tag{5}$$

$$\varepsilon_H^d = z_H - \frac{1}{2}\frac{\lambda_H(1-\varepsilon_H^d)^2}{(r+\lambda_H)(1-\varepsilon_H^{\min})} + \frac{1}{4}\frac{\theta q(\theta)(1-\varepsilon_H^h)^2}{(r+\lambda_H)(1-\varepsilon_H^{\min})} + \left[\frac{\theta q(\theta)(1-\varepsilon_H^h)}{1-\varepsilon_H^{\min}} - r\right]K_H \tag{6}$$

$$ur_L = \frac{\lambda_L \varepsilon_L^d}{(1-\varepsilon_L^h)\theta q(\theta) + \lambda_L \varepsilon_L^d} \tag{7}$$

$$ur_H = \frac{\lambda_H(\varepsilon_H^d - \varepsilon_H^{\min})}{(1-\varepsilon_H^h)\theta q(\theta) + \lambda_H(\varepsilon_H^d - \varepsilon_H^{\min})} \tag{8}$$

$$\frac{c}{q(\theta)} = \frac{\delta(1-\varepsilon_L^h)^2}{4(r+\lambda_L)} + \frac{(1-\delta)(1-\varepsilon_H^h)^2}{4(r+\lambda_H)(1-\varepsilon_H^{\min})} \tag{9}$$

2) 모의실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과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변화가 경제 전체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모의실험 상 고용보호의 수준은 고용조정비용으로 측정되며 따라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변화는 고용조정비용(K_L, K_H)의 변화로 대표된다. 본 연구는 우선 기본 시나리오의 모의실험을 통해 실업률을 구하고 이로부터 기본모형의 취업자 수를 구한다. 다음으로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나리오 1에서는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은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75% 수준까지 높이는 변화를 고려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는 변화를 고려하기로 한다.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기 이전에 본 모형에서 주목해야할 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모형에서 비경제활동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에 처한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지속하며 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약한 청년층, 고령층,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26]. 따라서 통계상의 실업자만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결정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실질적인 실업자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실질적인 실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에 추가하여 실질적 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실업률'(u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통산적인 실업률 대신 사용하기로 한다.

$$ur = \frac{\text{실질적 실업자}}{\text{실질적 경제활동인구}} \tag{10}$$

$$= \frac{(\text{실업자} + \text{취업준비자} + \text{쉬었음})}{(\text{통계상 경제활동인구} + \text{취업준비자} + \text{쉬었음})}$$

따라서 본 모의실험에서 정의된 실질적 실업률은 일종의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27]'

26) 우리나라는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약한 근로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경기가 침체할 경우 상당수의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중단하며 따라서 통계상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의 변화가 경기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가용한 OECD 21개국의 1980~2006년 실업률의 변화를 실질경제성장률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한 경기순환부분에 선형회귀분석을 하면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실업률은 0.29%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20개국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17개국의 경우 실업률은 평균 0.42%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반면, 실업률 대신 경제활동참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0.10%포인트 감소하지만 나머지 OECD 국가 20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즉,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변동 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취약한 것이라 하겠다. (변양규·정연호(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참조)

의 의미를 가진다. 참고로 2003년 1분기부터 2012년 1분기 사이 10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약 2412만1천 명이며 이 중 실업자는 84만8천 명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51만7천 명이며 쉬었음은 130만7천 명이다. 따라서 새롭게 정의된 경제활동인구는 약 2594만4천 명이며 실질적 실업자는 약 267만2천 명에 달하고 '실질적 실업률'은 10.27%가 된다.

모의실험의 결과는 〈표 15〉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 모형의 경우 전체 '실질적 경제활동인구' 2594만4천 명 중에서 취업자는 약 2327만9천 명이며 실질적인 실업자는 266만5천 명에 달해 실질적 실업률은 10.27%이다. 빈 일자리와 실업자의 비율로부터 평균 실업기간을 계산하면 약 2.4개월이 나오며 이 역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만 정규직의의 75%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시나리오 1)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경우 장차 생산성 변동에 의해 비정규직을 해고해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 고용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은 약 75만4천 명(9.37%) 감소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보호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보호가 약화된 정규직의 고용유인은 증가하게 되어 정규직 고용은 29만3천 명(1.92%) 정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업자는 46만1천 명(1.9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보호만 강화되면서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과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격차가 컸을 때에 비해 정규직을 사용할 유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실업률 및 평균실업기간은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10.27%이던 실질적 실업률은 12.05%로 1.78%p 증가하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하면서 평균 실업기간 역시 2.4개월에서 3.6개월로 약 1.2개월 증가하여 실업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시나

27)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하는 노동력 6가지 저활용 대체지표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U1~U6이다. 이들 지표는 실업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이들이 통상적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률을 계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민근(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들 지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업률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새롭게 정의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실업률을 계산한다.

리오 2)에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다. 정규직 고용은 45만3천 명(2.98%)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무려 93만2천 명(11.57%) 감소하여 경제 전체 취업자는 47만9천 명(2.06%) 감소한다. 이처럼 정규직의 고용은 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규직의 상대적인 고용보호 수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체할 유인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실질적 실업률은 12.12%로 증가하고 평균실업기간도 4.2개월로 증가한다.

모형의 작동이라는 측면서 보다 살펴보면 시나리오 1 및 2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의 최저기준이 되는 ε_L^h 가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고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정규직 사용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의 기준이 되는 한계생산성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고용보호가 낮아져 고용조정의 부담이 축소된 정규직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생산성(ε_H^h)을 기준으로 채용이 시작된다.

종합하여 보면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처럼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현 수준을 유지한 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만 강화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용보호가 낮아진 정규직의 고용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했던 비정규직은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고용은 감소한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 증대로 인해 경제 전체의 평균적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은 가급적 낮은 수준에서 고용을 유지할 유인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고용은 감소한다.

〈표 15〉 모의실험 결과

(단위: 만 명, %, 개월)

		2003Q1 ~ 2012Q1 평균	기본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해고비용	정규직		$K_H = 2.36$	$K_H = 2.36$	$K_H = 2.36$
	비정규직		$K_L = 0.21$	$K_L = 1.77$	$K_L = 2.36$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질적 실업자)		2594.4	2594.4	2594.4	2594.4
취업자		2327.3	2327.9	2281.8	2280.1
- 취업자증감			-	-46.1	-47.9
- 취업자 증감률(%)			-	-1.98	-2.04
실질적 실업자 (실업+취업준비+쉬었음)		267.2	266.5	312.6	314.4
- 신규실업자	정규직		-	-29.3	-45.3
	비정규직		-	75.4	93.2
실질적 실업률(%)		10.27	10.27	12.05	12.12
평균 실업기간(개월)		2.6	2.4	3.6	4.2

주 1: 실질적 실업률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및 '쉬었음'을 실질적 실업자로 간주하고 계산한 실업률
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한편 본 모형에서 고려한 고용조정비용 변화 외에 여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면 모의실험 결과보다 더 크게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에서 주로 논의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시장의 기능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정규직전환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될 경우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이후 법정복리비용, 법정외복리비용, 사회보험료 분담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노동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수요는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강제 적용될 경우 단순히 퇴직금 등 고용조정비용만 증가한 모의실험의 결과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고용위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고용위축의 폐해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1의 경

우 생산성이 높은 정규직 실업자 중 일부인 29만3천 명(1.92%)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만, 기존 비정규직근로자 중 75만4천 명(9.36%)이 해고되어 실업의 고통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나리오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비정규직근로자 중 93만2천 명(11.57%)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의 고통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공약에서 일자리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양당 대선주자 모두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이 위축되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와 상호 모순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연 일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 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이 과연 경제민주화의 의미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4) 잠재성장률의 변화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가 적용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의 노동투입은 축소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노동투입 축소가 우리나라의 잠재 GDP 및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기로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잠재GDP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생산함수접근법은 성장회계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변동에 어떤 요소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요인별 미래예측을 전제로 향후의 잠재GDP 전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투입요소로써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까지 고려한 확장된 형태의 솔로우-스완(Solow-Swan)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Y_t = A_t(N_t h_t)^{\alpha} K_t^{1-\alpha}$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Y_t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N은 노동량, h는 인적자본, K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총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으로부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2005년 기준 실질GDP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2001~2010년중 잠재성장률은 4.23%로 1990년대 6.43%에 대비해 약 2.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을 구성하는 각 요인별

로 살펴보면 물적자본의 기여도는 1.36%p 하락했고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0.63%p와 0.2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스톡증가 둔화, 즉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에 있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9.1%에서 2000년대에는 3.9%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자본스톡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한편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2011~2012년 약 3.45%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차기정부 기간인 2013~2017년에는 3.08%로 낮아지고 2020년대에는 2.06%로 낮아진다.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되어 2030년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77%, 40년대에는 1.6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50년 사이 약 4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약 2.13%로 전망되는데 이는 1981~2010년 사이 30년 평균인 7.09%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16〉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 (1981~2050)

(단위: %, %p)

	잠재성장률	노동투입	인적자본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10.62	1.43	0.30	4.27	4.35
1991~2000	6.43	0.74	0.34	3.30	2.01
2001~2010	4.23	0.11	0.38	1.94	1.78
2011~2020	3.08	-0.21	0.40	1.69	1.19
2013~2017	3.01	-0.28	0.40	1.66	1.22
2021~2030	2.06	-0.99	0.43	1.49	1.14
2031~2040	1.77	-1.14	0.47	1.36	1.11
2041~2050	1.69	-1.14	0.50	1.28	1.08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고, 그 결과 노동수요가 감소할 경우 잠재 GDP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에서는 제 3절의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잠재 GDP 및 잠재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추정하기로 한다. 우선 모의실험 시나리오2의 결과처럼 취업자가 2.04%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용이 위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5년 이후에는 기본 전망에 비해 고용이 2.04%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처럼 고용이 2.04% 위축될 경우 잠재 GDP와 잠재성장률은 〈표 17〉에 정리되어 있다.

〈표 17〉 고용위축과 잠재GDP 및 잠재성장률 (2011~2050)

(단위: 2005년 기준, 조 원, %, %p)

기간	잠재GDP				잠재성장률		
	기본전망(A)	고용위축(B)	(B)-(A)	누적 GDP 손실	기본전망(A)	고용위축(B)	(B)-(A)
2011~2020	1,245	1,236	-9.5	94.7	3.01	2.90	-0.10
2013~2017	1,228	1,218	-10.0	50.0	3.08	2.84	-0.24
2021~2030	1,580	1,572	-8.7	87.5	2.06	2.11	0.05
2031~2040	1,902	1,893	-8.8	88.3	1.77	1.77	0.00
2041~2050	2,258	2,248	-10.1	101.0	1.69	1.69	0.00
2013~2050	1,780	1,771	-9.8	371.5	2.06	2.05	-0.01

우선 고용이 위축될 경우 차기정부 5년 간 잠재 GDP는 2005년 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1,218조 원에 머물러 기본전망에 비해 연간 10조 원, 5년 누적 50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에도 매년 약 8.7조 원에서 10.1조 원 정도 잠재GDP 위축이 예상되며 2013~2050년 사이 누적으로 약 372조 원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잠재성장률은 고용위축이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2013~2017년 사이에 크게 하락한다. 기본전망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 잠재성장률은 평균 3.08%이다. 그러나 고용조정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면 잠재성장률은 2.84%로 약 0.24%p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용조정이 끝난 2017년 이후에 잠재성장률은 기본 전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는 2017년 이후에는 고용 '규모'만 기본전망에 비해 약 2% 정도 위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고용 '성장률'에는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화두이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해 잠재성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민주화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 경제를 모사한 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총 고용은 약 2%(48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은 모두가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입법화하는 것이 과연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처럼 총고용이 감소할 경우 초기 고용조

정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잠재성장률이 약 0.24%p 정도 감소하고 고용조정이 모두 끝난 이후 잠재성장률은 기본 전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록 잠재성장률이 기본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초기에 발생한 잠재 GDP 손실을 만회할 수 없으며, 연간 약 8~10조 원의 GDP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제민주화와 생산성 변화

(1) 경제민주화와 기업 생산성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성과지표의 격차 역시 심각한 경제적 이슈로 대두하였다.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포함한 경영지표 역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실적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조덕희 2012).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여 중소기업의 업역 보호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공인 정책은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을 대기업 등이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발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상 기업의 규모에 근거해 생산요소가 특정 시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제약하는 진입규제이자 보호주의 정책이다.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은 좀비기업의 퇴출비용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피터팬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을 통한 기업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업생태계에서는 생산성과 혁신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이 퇴출됨으로써 한계기업에서 활용되던 생산요소와 자원이 새로운 분야와 기업으로 투자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파괴하여 저생산성 기업의 생존비율을 높이게 되며 이는 결국 경제의 총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중기정책의 결과는 과거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이선화, 2012).

이 연구는 이처럼 산출물 또는 생산요소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비용 개념으로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서 국가간

소득격차의 발생은 총생산함수에 대한 가정 하에 생산요소의 총 투입량 및 총 기술수준 등으로 설명된다. 전통적 모델에 따르면, 생산요소 사용에 대한 기업의 결정은 최적화 행위의 결과물이며 이는 경제의 성숙도와는 무관하게 전제된 가정이다. 경제의 발전정도는 최적으로 선택되고 배합된 생산요소가 만들어낸 산출물의 크기, 즉 생산성에 달려 있다.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별 생산성 격차는, 결국 생산현장에서 자원이 낭비없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제공된 노동이나 자본스톡의 질은 어떠한지, 경영자가 그들을 관리하고 배합하는 기법은 효과적인지 등 '공정'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까지를 포함한 경제의 성장과정이 실은 시장 및 제도의 발달과 궤를 함께 해 왔음을 되돌아본다면, 시장에 의한 배분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전제한 후에 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격이나 기타의 제도적 장벽은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생산요소가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생산성 격차가 큰 기업들이 한 경제권역 내에 공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매개로 생산성 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시 사업체데이터가 광범위하게 구축되면서 가능해졌다. Baily et al.(1992)는 1980년대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전체 생산성 증가의 절반 가량이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서 높은 업체로 생산요소가 재배분됨으로써 실현되었음을 보였다.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증대가 물리적 기술수준과 더불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효율화함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stuccia and Rogerson (2008) 역시 자원배분(배분 효율성)과 생산성의 연관관계에 기초하여 국가간 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을 생산성이 서로 다른 사업체들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설명한다. 특히 미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총자본스톡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한 가격에 인위적 왜곡을 가하는 정책은 산출물과 총요소 생산성을 30~50% 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생산자원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거나 (Banerjee and Duflo, 2005; Banerjee and Munshi, 2004; Greenwood et al., 2007),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체별 법인세에 차등을 두는 제도가 사업체의 규모와 생산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인 Guner et al.(2008)의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Hsieh and Klenow(2009)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미국, 인

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배분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가정하면 이들 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59%(1994년 기준)와 30%(2005년)씩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총요소생산성 결정모형

Hsieh and Klenow(2009)의 모델은 최근 국제무역과 성장이론에서 진행된 성과를 취합한 것이다(Melitz, 2003; Foster et al., 2008; Restuccia and Rogerson, 2008). 우선 최종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대표기업에 의해 생산되며 투입물 Ys(s=1,..., S)를 결합하여 컵-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의해 생산되는 복합재이다.

$$Y = \prod_{s=1}^{S} Y_s^{\theta_s},\ where \sum_{s=1}^{S} \theta_s = 1 \qquad (1)$$

중간 투입물 Ys는 Ms개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구성된 CES 생산함수로 주어지며 중간재시장은 기업들간 독점적 경쟁 공간의 단위가 된다. 중간재산업 S에 속하는 기업 i는 규모수익 불변의 컵-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갖는다. 요소소득 또는 요소탄력성(α_s)은 산업별로 결정되며 동종 산업내 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업 Si의 이윤식은 다음과 같다.

$$\pi_{si} = (1-\tau_{Ysi})P_{si}Y_{si} - wL_{si} - (1+\tau_{Ksi})RK_{si} \qquad (2)$$

즉, 기업 si는 산출물시장에서 τ_{Ysi}의, 투입물시장에서 τ_{Ksi}의 시장교란에 직면해 있다. 투입물시장의 교란요인 τ_{Ksi}는 반드시 자본시장에서의 왜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에 대한 교란을 의미한다. 생산물시장의 왜곡은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τ_{Ysi}이 서로 다르다는 것, 즉 $\tau_{Ysi} \neq \tau_{Ysj}$ for $s_i \neq s_j$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 각 기업의 요소 선택은 다음 식을 만족하야 한다.

$$MRPL_{si} \equiv (1-\alpha_s)\frac{\sigma-1}{\sigma}\frac{P_{si}Y_{si}}{L_{si}} = w\frac{1}{1-\tau_{Ysi}}$$

$$MRPK_{si} \equiv \alpha_s \frac{\sigma-1}{\sigma} \frac{P_{si}Y_{si}}{K_{si}} = R\frac{1+\tau_{Ksi}}{1-\tau_{Ysi}} \qquad (3)$$

그러나 각 기업이 직면한 '세후' 요소비용이 달라짐에 따라 기업간 요소의 한계수익 생산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규제나 시장개입이 생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식을 통해 명확해진다.

$$1+\tau_{Ksi} = \frac{\alpha_s}{1-\alpha_s}\frac{wL_{si}}{RK_{si}} \quad 1-\tau_{Ysi} = \frac{\sigma}{\sigma-1}\frac{wL_{si}}{(1-\alpha_s)P_{si}Y_{si}} \qquad (4)$$

첫 번째 식은 요소의 사용비율에, 두 번째 식은 생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한편 수익기준 총요소생산성($TFPR_{si}$)은 식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노동 투입은 인적 자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종사자수에 임금을 곱한 총 임금지불액을 사용하였다.

$$TFPR_{si} \equiv P_{si}A_{si} = \frac{P_{si}Y_{si}}{K_{si}^{\alpha_s}(wL_{si})^{1-\alpha_s}} \qquad (5)$$

$$= \frac{\sigma}{\sigma-1}\left(\frac{MRPK_{si}}{\alpha_s}\right)^{\alpha_s}\left(\frac{MRPL_{si}}{w(1-\alpha_s)}\right)^{1-\alpha_s} = \frac{\sigma}{\sigma-1}\left(\frac{R}{\alpha_s}\right)^{\alpha_s}\left(\frac{1}{1-\alpha_s}\right)^{1-\alpha_s}\frac{(1+\tau_{Ksi})^{\alpha_s}}{1-\tau_{Ysi}}$$

위의 식에서 노동 및 자본한계수익의 기하평균으로 표현된 $TFPR_{si}$는 식 (4)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식에서 개별 업체가 직면한 시장 교란요인은 요소의 한계수익을 매개로 수익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TFPR_{si}$의 마지막 표현은 $\tau_{Ysi}=\tau_{Ksi}=0$, 즉 시장의 배분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기업간 수익생산성이 일치하게 됨을 보여준다. 역으로 시장에 교란과 가격왜곡의 요인이 많을수록 S에 속한 사업체들의 $TFPR_{si}$의 분산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frac{(1+\tau_{Ksi})^{\alpha_s}}{1-\tau_{Ysi}}$ 값이 1보다 큰 사업체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비해 규모가 작음을, 반대의 경우는 규모가 이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퇴출되었어야 하는 기업임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수익생산성

의 분포도를 그렸을 때 오른쪽 꼬리에 속하는 기업이 전자에, 왼쪽 꼬리에 속하는 기업이 후자에 해당한다. 총요소생산성의 업종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overline{TFPR_S} = \frac{\sigma}{\sigma-1}\left[\frac{R}{\alpha_s}\sum_{i=1}^{M_s}\left(\frac{1+\tau_{Ksi}}{1-\tau_{Ysi}}\right)\cdot\left(\frac{P_{si}Y_{si}}{P_sY_s}\right)\right]^{\alpha_s}\left[\frac{1}{1-\alpha_s}\sum_{i=1}^{M_s}\left(\frac{1}{1-\tau_{Ysi}}\right)\left(\frac{P_{si}Y_{si}}{P_sY_s}\right)\right]^{1-\alpha_s} \quad (6)$$

수익생산성에서 가격요인을 제거한 개념인 총요소실물생산성 $TFPQ_{si}$은 다음과 같이 회계적 수익가치를 이용한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Y_{si}를 $P_{si}Y_{si}$로 변환한 것은 $-\sigma$가 Y_{si}의 가격탄력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 실물생산성은 동질적 재화에 대한 양적 지표와는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 업종별 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며 서로 다른 가격에 직면한다. 따라서 실물생산성 역시 제품의 질적 차이를 내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TFPQ_{si} \equiv A_{si} = \frac{Y_{si}}{K_{si}^{\alpha_s}(wL_{si})^{1-\alpha_s}} \quad \Rightarrow \quad A_{si} = \frac{(P_{si}Y_{si})^{\frac{\sigma}{\sigma-1}}}{K_{si}^{\alpha_s}(wL_{si})^{1-\alpha_s}} \quad (8)$$

실질생산성의 업종별 지수는 산업디플레이터로 표현된 생산함수 ($Y=\prod_{s=1}^{S}(TFP_s \cdot K_s^{\alpha_s} \cdot L_s^{1-\alpha_s})^{\theta_s}$)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28]

$$TFP_s = \left(\sum_{i=1}^{M_s}\left\{A_{si} \cdot \frac{\overline{TFPR_s}}{TFPR_{si}}\right\}^{\sigma-1}\right)^{\frac{1}{\sigma-1}} \quad (9)$$

식 (9)는 CES 생산함수를 사용한 경우 가격지수 Ps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시장교란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가정하의 산업 s의 부문 평균생산성, $\overline{A_s}=(\sum_{i=1}^{M_s}A_{si}^{\sigma-1})^{\frac{1}{\sigma-1}}$ 과 비교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이 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시장교란이 제거되었을 때 업종별 실물생산의 증가는 업종별 총요소실물

28) 업종별 총요소실물생산성은 생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지수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총요소수익생산성은 업종별로 지수화되지 않는다. 총요소수익생산성의 계산에는 Ps가 필요한데 업종별 총부가가치는 $PsYs$로 주어지지만 이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증가와 같다. 시장교란요인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업종 총생산을 Y_s^*라 하면,

$$\frac{Y_s^* - Y_s}{Y_s} = \frac{\overline{A_s}}{TFP_s} - 1 \qquad (10)$$

나아가 H&K는 식 (1)을 이용해 경제 전체의 TFP 증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TFP\ gains = \frac{Y^* - Y}{Y} \qquad (11)$$

$\frac{Y}{Y^*} = \prod_{s=1}^{S}\left[\sum_{i=1}^{M_s}\left\{\frac{A_{si}}{\overline{A_s}}\frac{\overline{TFPR_s}}{TFPR_{si}}\right\}^{\sigma-1}\right]^{\theta_s/(\sigma-1)}$ 이며 Y^*는 시장교란요인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총생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식은 계수값 등 모델의 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대안적으로 업종별 TFP 증가분을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산술평균한 값, 즉, $\sum_{s=1}^{S}\theta_s\frac{\overline{A_s}}{TFP_s}$을 경제 전체의 총 TFP 증가값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데이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구, 광공업통계)의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별 매출, 부가가치, 노동과 자본 사용내역, 중간투입액 등을 제공한다. 광업제조업조사 통계는 1982년 이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여 현재 2007년도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다. 조사기법이나 분류단위에 최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1992~2007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연도는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6년, 2007년 등이다. 자료 추출기준은 지역단위는 전국을, 산업단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KSIC 5자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업종 기준은 KSIC 4자리 코드인 세분류 단위이다. 그러나 KSIC 7차 개정(1991~1998년)에 따른 분류를 8차 개정(1999~2006년) 기준으로 엄밀하게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KSIC 세세분류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보다 세분화된 분류 사용에 따른 결측치 발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KSIC 9차 개정에 해당) 자료는 KSIC 코드의 시계열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횡단면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으며 KSIC을 이용한 패널 추정모델에서는 제외하였다.[29] 모델의 가정에 따르

면 세분류 단위의 데이터 사용은 그 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들끼리 독점적 경쟁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산출물의 가치(PY)는 매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제외한 부가가치를 사용하였다.[30] 노동투입은 유급과 무급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무급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유급종사자에 지불된 평균 임금률을 적용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유급종사자 평균임금에는 월평균 임금과 함께 기타 인건비(복리후생비, 퇴직금 등)가 포함되었다. 자본스톡은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연초가치와 연말가치의 평균을 이용한다. 이들 자산에 대한 사용비용(R)은 이자율 5%와 감가상각률 5%를 가정하여 총 10%를 적용하였다. R은 모든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며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직면하는 가격은 $(1+\tau_{Ksi})R$이다. 따라서 R의 설정방식은 모형의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1-\alpha_s)$은 연도별로 KSIC 세분류 단위의 업종 평균 인건비와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였다.[31]

부가가치가 음수이거나 투입자원이 영인 경우 등 모델에 부합되지 않는 관측치를 제거한 후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8a〉에 주어져 있다. 〈표 18b〉는 앞의 데이터를 이용해 업종 평균 대비 개별 수익생산성 및 실물생산성 값(즉, $TFPR_{si}/\overline{TFPR_s}$, A_{si}/TFP_s)을 계산한 후 각각의 변수에 대해 상위 및 하위 1%에 해당하는 샘플을 제거하고 다시 계산했을 때의 데이터 기초통계량이다.

〈표 18b〉의 모든 통계량은 극값을 제거하기 전인 〈표 18a〉에 비해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물 또는 수익 생산성 상위 1%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평균보다 크기 때문이다. 상위 100대 사업체만을 보면, 수익생산성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기간 동안 단 3건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실물생산성의 경우 매년 70~90개 사업체의 생산성이 상위 1%안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100대 제조업 사업체의 시장

29) 2007년부터는 9차 개정 KSIC 코드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조사기준이 바뀌었으므로 2006년까지의 자료와 2007년 이후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차이를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07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 사업체로 데이터 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30)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한 김동석(2005a; 2005b), 안상훈(2006) 등의 연구는 매출액에서 중간투입액(국민소득통계)을 빼는 방식으로 사업체별 부가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투자 디플레이터나 자본스톡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자본스톡 가치를 시간에 따라 재조정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값이 아닌 평균값으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지수화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므로 자본가치를 별도로 보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1) 미국의 경우 NBER Productivity Database에서 ISIC 4자리 단위의 노동소득을 제공한다.

점유율은 1992년 30%에서 2007년 39.4%로 9.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10대 사업체의 점유율은 12.4%에서 17.2%로 증가하였다. 그만큼 이들 사업체가 표본에서 제외된 데 따른 규모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표 18a〉 주요 변수 기초통계 (tails 제거 이전)

		PY	L	w	WL	K1	K2
1992	평균	1293.0	37.6	8.58	430.9	1090.0	744.3
N=74214	표준편차	16664.9	229.8	3.44	4501.0	21107.2	15076.2
1996	평균	1802.5	29.8	13.27	538.1	1444.8	950.3
N=96395	표준편차	33607.7	221.3	5.42	6677.3	23997.6	16239.9
2000	평균	2246.4	27.0	15.4	594.7	2031.4	1336.4
N=97527	표준편차	43871.4	187.8	7.12	7275.2	48346.4	37088.8
2004	평균	2679.4	24.7	20.8	735.0	1726.5	1060.0
N=112648	표준편차	65858.2	193.2	9.94	11303.8	41352.2	31365.2
2006	평균	2772.7	24.4	22.6	793.6	1913.0	1172.8
N=118006	표준편차	58274.4	199.9	10.7	12001.4	52109.0	40201.1
2007	평균	3738.5	29.2	24.0	1027.6	2595.5	1584.1
N=90698	표준편차	72876.3	205.6	12.1	14816.5	65475.1	49861.3

〈표 18b〉 주요 변수 기초통계 (1%, 99% tails 제거 이후)

		PY	L	w	WL	K1	K2
1992	평균	1064.0	34.4	8.58	377.0	961.2	662.3
N=72269	표준편차	13570.8	191.5	3.38	3601.9	19809.6	14333.0
1996	평균	1446.0	27.6	13.3	479.5	1299.8	861.1
N=93840	표준편차	20007.1	178.1	5.33	5224.7	20388.6	14132.5
2000	평균	1864.9	25.7	15.4	547.2	1823.2	1182.7
N=94984	표준편차	31907.6	170.1	6.87	6496.2	40253.3	28611.9
2004	평균	2146.4	23.3	20.8	664.3	1545.4	938.0
N=109747	표준편차	39487.1	151.1	9.84	8657.7	29317.1	20273.6
2006	평균	2302.1	23.0	22.6	731.8	1709.4	1038.6
N=114972	표준편차	46208.2	163.8	10.5	10279.3	47307.9	36427.7
2007	평균	3619.0	31.3	24.4	1098.2	2717.0	1633.7
N=77883	표준편차	60964.5	209.7	12.2	15321.2	57305.9	41556.0

주) PY=부가가치, L=종사자(유급 + 무급), w=평균임금(유급종사자에 대한 평균 인건비),
WL=총인건비(평균임금률 X 종사자수), K1(자본스톡)=유형고정자산-(토지 + 건설중 자산), K2(자본스톡2)=K1 - 건축구축물

〈표 19a〉 모델변수 기초통계 (tails 제거 이전)

			TFPRsi	TFPRs	Asi	TFPs	As	WLs/PYs
1992	N=74214	평균	2.42	3.76	59.4	2485.3	3439.5	0.37
	S=160	표준편차	2.90	4.15	428.1	3411.8	8677.3	0.11
1996	N=96395	평균	2.88	3.93	77.5	3307.0	4305.6	0.36
	S=161	표준편차	3.12	2.08	232.5	3179.8	4186.0	0.11
2000	N=97527	평균	3.24	5.26	99.4	4503.4	6389.2	0.31
	S=164	표준편차	5.09	4.38	379.1	4086.3	7128.9	0.10
2004	N=112648	평균	3.89	5.62	128.0	6331.0	9783.8	0.34
	S=161	표준편차	9.75	3.08	694.1	6662.6	15950.9	0.11
2006	N=118006	평균	4.26	6.21	139.6	7041.9	10744.0	0.35
	S=162	표준편차	8.42	4.56	646.2	7036.0	14290.7	0.12
2007	N=90698	평균	4.37	6.14	166.7	6756.8	9920.3	0.35
	S=180	표준편차	10.6	4.12	701.6	7277.9	12827.4	0.12

〈표 19b〉 모델변수 기초통계 (1%, 99% tails 제거 이후)

			TFPRsi	TFPRs	Asi	TFPs	As	WLs/Pys
1992	N=72269	평균	2.24	3.15	49.5	1835.0	2017.6	0.40
	S=160	표준편차	1.52	3.54	160.6	2443.4	2957.4	0.12
1996	N=93840	평균	2.59	3.16	63.7	2377.0	2616.6	0.38
	S=161	표준편차	1.98	1.66	144.5	2515.0	2781.4	0.11
2000	N=94984	평균	2.89	4.05	79.9	3087.4	3603.0	0.33
	S=164	표준편차	2.89	3.46	197.3	2589.2	3654.0	0.11
2004	N=109747	평균	3.26	4.02	95.9	3871.8	4393.3	0.36
	S=161	표준편차	3.63	1.54	191.1	2841.6	3452.4	0.11
2006	N=114972	평균	3.57	4.25	106.2	4243.5	5005.7	0.37
	S=162	표준편차	3.96	1.91	302.6	3559.8	6943.9	0.11
2007	N=77883	평균	3.71	4.55	139.1	4290.5	4867.5	0.36
	S=179	표준편차	4.69	3.06	290.9	4146.0	4654.8	0.12

주1) TFPRsi=총요소수익생산성, TFPRs=업종평균 총요소수익생산성, Asi=총요소실물생산성,
TFPs=총요소실물생산성 지수, As=교란이 제거된 상태의 총요소실물생산성 지수
WLs/PYs(=1-alpha_s)=업종별 노동소득
주2) S는 KSIC 세분류 기준으로 관찰된 업종수임.

〈표 20〉 지니계수의 추이와 분해 (1%, 99% tails 제거 이후)

		PY	WL	K1	TFPRs i	As i
1992	전체	0.79	0.72	0.87	0.32	0.52
	그룹간	0.41	0.34	0.56	0.11	0.17
	중복	0.37	0.37	0.30	0.20	0.34
	그룹내	0.01	0.01	0.01	0.01	0.01
1996	전체	0.79	0.72	0.89	0.35	0.52
	그룹간	0.45	0.37	0.61	0.13	0.17
	중복	0.34	0.35	0.27	0.21	0.35
	그룹내	0.01	0.01	0.01	0.01	0.01
2000	전체	0.81	0.73	0.90	0.40	0.57
	그룹간	0.49	0.41	0.68	0.14	0.19
	중복	0.31	0.32	0.22	0.25	0.37
	그룹내	0.01	0.01	0.01	0.01	0.01
2004	전체	0.80	0.72	0.88	0.42	0.57
	그룹간	0.49	0.41	0.62	0.16	0.22
	중복	0.30	0.31	0.25	0.26	0.34
	그룹내	0.01	0.01	0.01	0.01	0.01
2006	전체	0.79	0.72	0.88	0.44	0.57
	그룹간	0.46	0.40	0.59	0.17	0.21
	중복	0.32	0.31	0.28	0.27	0.34
	그룹내	0.01	0.01	0.01	0.01	0.01
2007	전체	0.79	0.72	0.87	0.47	0.59
	그룹간	0.47	0.40	0.61	0.18	0.24
	중복	0.31	0.31	0.26	0.28	0.34
	그룹내	0.01	0.01	0.01	0.01	0.01

주) 그룹간 지니계수는 KSIC 세분류 업종간의 불평등도임.

기초통계 외에 지니계수는 주요 변수의 분포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격차는 업종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비율이 높으며 업종간 격차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극값을 제거하기 이전 데이터에서 이 비율은 0.85~0.86으로 훨씬 더 높았으나 연도별로 특별한 변화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총인건비의 불평등도는 미미하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극값을 제거하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이 비율은 약 0.75로 15여년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수익생산성과 실물생산성의 불평등도는 기간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TFPRsi의 업종간(즉 그룹간) 불평등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업종별 평균을 감안한 다른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성장세와 함께 시장 기능도 향상되었으리라는 직관적 가정과는 상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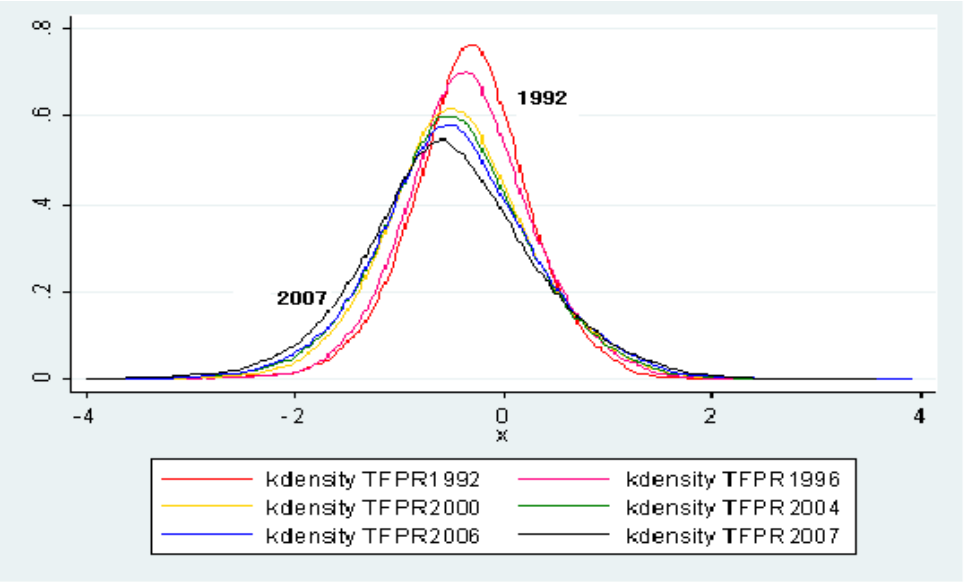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실물생산성은 수익생산성보다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과 각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물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며, 가격 하락은 수익생산성을 부분적으로 떨어뜨린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 실질생산성이 수익생산성보다 더 넓은 분포를 가지게 된다. 시장의 경쟁정도는 실물생산성에서의 변화가 수익생산성으로 전달

되는 과정에서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본 모형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패러미터가 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σ가 커질수록 시장 효율화에 따른 TFP 증가분도 커지게 된다. 여기에서 σ는 업종에 상관없이 3으로 설정되었다. σ가 동일한다는 가정은 시장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도출하는 수치들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지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 절대값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4) 분석 결과

〈그림 1〉은 연도별로 수익생산성의 분포이며 그 크기는 시장 기능의 비효율성 또는 왜곡정도에 대한 척도이다. 수익생산성 분표에 대한 지표로는 업체별 수익생산성의 업종평균으로부터의 거리, 즉 log(TFPRsi/TFPRs)를 사용하였다. 시장이 효율적일수록 이 그래프는 0을 중심으로 응집된 형태를 띨 것이다. 〈그림 1〉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갖는 것은 1992년의 그래프이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그래프는 0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분산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프에서 왼쪽 꼬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이 낮은 업체가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수익생산성의 분산: 업종평균으로부터의 거리, log(TFPRsi/TFPRs)



이러한 결과는 〈표 21〉에서도 확인된다. 수익생산성의 분포 정도를 보여주는 세 지표 모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는 수익생산

성 분포에 대해 Hsieh and Klenow(2009)가 미국, 인도, 중국에 대해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중국, 인도와 달리 미국은 최근에 들어 수익생산성 분산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결과를 한국 제조업의 상황과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의 선정과 극값에 대한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 변수값에 상당한 변화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선정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국가별 결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료 처리방식을 달리 했을 때도 변수 값의 시계열 추이 즉 방향성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방법론은 동일 경제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경제 단위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수익 및 실물 생산성의 분포 추이: 한국 제조업

		1992	1996	2000	2004	2006	2007
log(TFPRsi/TFPRs)	Std. Dev.	0.58	0.62	0.71	0.73	0.76	0.82
	75-25	0.72	0.78	0.88	0.91	0.96	1.02
	90-10	1.43	1.55	1.76	1.82	1.91	2.05
log(TFPQsi/TFPs)	Std. Dev.	1.03	1.02	1.12	1.13	1.12	1.17
	75-25	1.39	1.37	1.52	1.50	1.50	1.50
	90-10	2.64	2.61	2.87	2.87	2.86	2.93
$\log(A_{si}M_s^{\frac{1}{\sigma-1}}/\overline{A_s})$	Std. Dev.	0.75	0.75	0.78	0.78	0.78	0.79
	75-25	0.56	0.53	0.54	0.55	0.55	0.54
	90-10	1.31	1.28	1.28	1.28	1.30	1.28
	N	72269	93840	94984	109747	114972	77883

주) 통계치 75-25는 변수의 분포에서 상위 75%값과 25%값의 차이를, 90-10은 상위 90%와 25%의 차이를 의미함.

〈표 22〉 수익생산성, log(TFPRsi/TFPRs)의 분포 추이: 국제비교

China	1998	2001	2005
S.D.	0.74	0.68	0.63
75 − 25	0.97	0.88	0.82
90 − 10	1.87	1.71	1.59
India	1987	1991	1994
S.D.	0.69	0.67	0.67
75 − 25	0.79	0.81	0.81
90 − 10	1.73	1.64	1.60
United States	1977	1987	1997
S.D.	0.45	0.41	0.49
75 − 25	0.46	0.41	0.53
90 − 10	1.04	1.01	1.19

자료: Hsieh and Klenow(2009)
주) 통계치 75-25는 변수의 분포에서 상위 75%값과 25%값의 차이를, 90-10은 상위 90%와 25%의 차이를 의미함.

끝으로 〈표 23〉은 교란요인이 제거되고 시장기능이 최대한 효율화된 상태에서 제조업 전체의 TFP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전체 TFP 증가는 업종별 TFP 증가분을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산술평균한 값, 즉, $\sum_{s=1}^{S}\theta_s \frac{\overline{A_s}}{TFP_s}$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배분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제조업 기업생태계에서 정부의 보호주의 규제 등 교란요인 제거시 제조업의 전체 TFP는 최대 1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배분 비효율성으로 인한 왜곡효과는 2007년 추정치가 1996년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교란요인 제거시 제조업의 전체 TFP 증가

1992	1996	2000	2004	2006	2007
6.9%	9.3%	13.5%	14.7%	13.0%	18.5%

이러한 결과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좀비) 업체들이 시장내 잔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장기능의 비효율성 증대는 요소시장 및 제품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실패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는 경제의 순환 메커니즘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5)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이 연구에서는 시장의 요소배분 기능의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왜곡된 규제정책으로 인한 기업생태계의 교란과 그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에의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물리적 생산성의 증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배분 효율성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총요소생산성으로 환산하면 교란이 없는 상태에 비해서는 18%,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9%의 감소요인으로 평가된다. 즉 요소 및 생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시장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퇴출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좀비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수혈정책은 건전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지마저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 퇴출정책으로 기업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잠재성장률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단순한 채권회수 조치를 넘어서 실질적 사업구조조정을 실현하는 효과적 워크아웃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출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업체나 업종에 대한 보호주의적 기업정책은 경제 전체의 혁신 역량을 잠식한다.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제도로는 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끝으로 중기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공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보호와 기업의 규모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혁신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기업 및 산업정책의 축이 이동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32]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그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학술적인 엄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민주화는 일반화된 개념규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정부가 경제의 자원배분에 적극 개입하거나 시장규제를 통해서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하는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33]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 중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개입조치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등이 입법화되고 있다.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입법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는 입법들도 나타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 도입, 재벌기업의 대응적 존재로 인식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실제 추진되는 경우에 발생할 잠재성장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32)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 칼럼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3) 민경국(2012) 참조.

우선, 정치권에서 출총제를 부활하려는 이유는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이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도만 심화되었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총제제한 집단과 비제한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변화는 출총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 이후 신규투자가 늘지 않고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만약 출총제를 부활한다면 투자가 크게 줄 것이다. 출총제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제품에 대한 규제다. 제품 개발을 제한하므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또한 출총제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로서 경쟁을 제한한다. 경쟁제한은 기업을 확장하려는 동기와 혁신하려는 동기를 줄여 인적자본과 R&D에 대한 투자가 줄게 된다. 출총제는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다. 따라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자본축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출총제가 투자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도 많다.

순환출자 역시 출총제와 유사하다. 기업집단의 내부자금은 일종의 벤처캐피탈의 자본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순환출자는 적대적 M&A에 노출되게 하여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주장의 근거는 취약하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출하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경쟁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진입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 이후 많은 부문에서 외국 기업들이 진입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업종제도는 진입규제다. 보호받는 중소기업은 성장 동기가 약화되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기업은 신상품 신시장 개척의 유인이 사라진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기업 간 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R&D에 대한 투자 등이 감소할 것이다.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공통적으로 시장이 동태적인 사실

을 무시하는 조치들이다. 기술, 소비자의 수요 등 시장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변화에 이 제도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업가 정신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규제는 시장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인 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들은 이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다.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훼손하는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행위를 막아 기업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줄여 자본축척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자본축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중 일부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투입 및 잠재성장률에 변화를 초래할 전망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 중 '정규직 전환' 및 '차별시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노동투입 의사결정 및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당 및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상당 부분이 노동력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수의 공약은 크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러한 논의가 입법과정을 통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노동비용 변화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노동비용이 변할 경우 고용 및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론모형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총 취업자는 약 46~48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에서 예상된 고용위축이 2013~2017년 사이 점진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약 0.2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사이 평균 잠재GDP는 2005년 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1,218조 원에 머물러 기본전망에 비해 연간 10조 원, 5년 누적 50조 원, 2013~2050년 사이 누적 손실은 약 372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잠재성장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의 요소배분 기능의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왜곡된 규제정책으로 인한 기업생태계의 교란과 그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에의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물리적 생산성의 증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배분 효율성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총요소생산성으로 환산하면 교란이 없는 상태에 비해서는 18%,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9%의 감소요인으로 평가된다. 즉 요소 및 생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시장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퇴출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좀비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수혈정책은 건전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지마저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 퇴출정책으로 기업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잠재성장률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단순한 채권회수 조치를 넘어서 실질적 사업구조조정을 실현하는 효과적 워크아웃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출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업체나 업종에 대한 보호주의적 기업정책은 경제 전체의 혁신 역량을 잠식한다.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제도로는 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끝으로 중기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공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보호와 기업의 규모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혁신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기업 및 산업정책의 축이 이동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제1장과 제2장

김형기(2012), “경제민주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 제65차 월례 토론회 토론문, 2012년 5월 25일.

이승훈(2012), “경제민주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선진화포럼 제65차 월례 토론회 발제문, 2012년 5월 25일.

박양수 · 문소상(2005),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보고서.

박원암 · 허찬국(2004),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박형수 · 류덕현(2006),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12월, pp.1-201.

곽노선(2007), “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성장률 전망,” 『한국경제연구』, 제55집 제4호,pp.550-588.

한진희 · 최경수 · 김동석 · 임경묵(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KDI정책연구 시리즈 2002-07, pp.1-98.

황종률(2009),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경제현안분석』, 제47호, 국회예산정책처, pp.1-82.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 경제전망”, pp.134-136.

이재준 · 이준상(2011), “KDI 경제전망 2011 상반기,” 『현안분석』,pp.37-48.

민경국(2012), “경제민주화 개념의 유럽적 기원과 변동과정,” 한국제도 · 경제학회,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2.10.5.

European Commission(2009), “Impact of the Current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on Potential Output,” Occasional Papers No.49.

제3-1장

강 원 · 신현한 · 장진호(2005),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재무연구』 18권 2호.

김선구 · 류근관 · 빈기범 · 이상승(200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보고서.

김주훈(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김필헌(2010),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한국경제연구원.
-----(2011), 『中小企業 적합업종 · 품목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방안』,동반성장이슈시리즈-4,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8.

김현종(2006),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 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6-09, 한국경제연구원.
-----(2010)“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IBK경제연구소(2010), “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양재성(1998),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행정적 고찰”, 『중소기업연구』 17, 한국중소기업학회,pp.277-300.

이건범(2003),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한국개발연구원.

이건범(2001), “최근 재벌의 출자행태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 동향』, 제10권, 43호.

이상승(2012), “순환출자 금지의 논리, 문제점 및 대안,”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2012. 10. 25.).

이선화(201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고 정책 대안”, 이병기 외, 『대기업비판의 실상과 본질』, 정책연구 2012-06, 한국경제연구원.

이윤보 · 이동주(2004),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연구”, 『중소기업연구』

Vol. 26 No.1, pp.75-98.

이인권 · 김현종(2005), “출자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pp.81- 137.

임영재(2003), “경제력집중 규제 및 기업분할 청구제”,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삼현(2006),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pp.63-86.

조성욱 · 김명애(2009),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재무금융적 평가", 한국경제분석패널 발표문.

최원락 · 황인학(2012),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이병기외,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정책연구 2012-06,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1999),『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Acs, Zoltan(2006), "How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Economic Growth?" Innovations, vol. 1, no. 1, pp. 97-107, Winter.

Alesina, Alberto, Giuseppe Nicoletti, Silvia Ardagna, Fabio Schiantarelli(2005), “Regulation and Invest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June, 3(4), pp. 791-825.

Averch, Harvey and Leland L. Johnson(1962), “Behavior of the Firm Under Regulatory Constraint.”American Economic Review, 52, pp. 1053–1069.

Blanchard, Olivier J. and Francesco Giavazzi(2003), “Macroeconomic Effects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Goods and Labor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pp. 879–908.

Carree, Martin A. and Thurik, A. Roy(2005),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Economic Growth,”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ternational Handbook Series on Entrepreneurship, Volume 1, Part 7, pp. 437-471.

Djankov, Simeon, Caralee McLiesh, Rita Maria Ramalho(2006),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s Letters, vol. 92, Issue 3, pp.395-401, September.

Holcombe, Randall G(1998),"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1, No. 2,pp. 45-62.

Joh, S.W.(2003),"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ability: Evidence from Korea before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 pp.287-322.

Mahoney, Paul(2001), "The Common Law and Economic Growth: Hayek Might be Right,"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0, pp. 503-525, June.

Vives, Xavier(2004), “Innovation and Competitive Pressure.” Working Paper, INSEAD.

제3-2장

남재량 (2009),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 연구”,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3-19.

남재량·박기성(2008),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연구”, 미발표 원고.

노동부 (2006),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

문외솔 (2008),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working paper 제 34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배민근 (2007), “체감 실업률 지표로 본 최근 고용사정,” LG주간경제, 947호, pp.34-38, 2007.8.1., LG경제연구원.

변양규 (2008),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2009),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연구보고서 2009-10,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2011),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정책연구 2011-07,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2012), “정규직 전환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2012-01,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정연호(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제 3장,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편.

안주엽 · 남재량 · 이인재 · 성지미 · 최강식(2007), “노동과 차별(II): 인식과 실제”, 정책연구 2007-05,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2000), “노동시장유연성과 일자리의 창출”, 유경준 편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중 III-2, 비봉출판사.

유경준(2004),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5,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중 9장.

최경수(2001),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분석 -고용보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전병유 외(2005),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05-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각 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Alvarez, F. and M. Veracierto (1999), "Labor Market Policies in an Equilibrium Search Model", NBER Macroeconomics Annu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p.265-304.

Alvarez, F. and M. Veracierto (2001), "Severance Payments in an Economy with Fric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7(3), pp.477-498.

Blanchard, O. and A. Landier (2002), "The Perverse Effect of Partial Labour Market Reform: Fixed-Term Contracts in France", Economic Journal, Vol. 112, No. 480, pp. F214-244.

Cahuc, P. & F. Postel-Vinay (2002), "Temporary Jobs, Empoyment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Labour Economics, vol 9, pp.63-91.

Cahuc, P., and A. Zylberberg (2004), Labour Economics, MIT Press

Dolado, J., M. Jansen and J. Jimeno (2005), "Dua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 Framework for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1564,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Garibaldi, P. (1998), "Job Flow Dynamics and Firing Restric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42(2), pp.245-275.

Kugler, A., J. Jimeno and V. Hernanz (2003), "Employment Consequences of Restrictive Permanent Contracts: Evidence from Spanish Labor Market Reforms", Working Paper 2003-14, Fundación de Estudios Economía Aplicada.

Lazear, E. (1990) "Job Security Provisions and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3), pp. 699-726.

Lucas, R. and E. Prescott (1974), "Equilibrium Search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7, pp. 188-209.

Mortensen, D. and C. Pissarides (1994)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 397-415.

_____ (1999), "New Developments in Models of Search in the Labor Market" in O.C. Ashenfelter and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Amsterdam: North-Holland, 2567-2628.

Nickell, S. (1997),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3, pp. 55-74.

Pissarides, C. (1986), "Unemployment and Vacancies in Britain," Economic Policy, vol. 3, no. 3, pp. 499-559.

Pissarides, C. (2000),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2nd ed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Veracierto, M. (2007), "On the Short-Run Effects of Labor Market Reform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54, pp. 1213-1229.

제3-3장

김동석 (2005a), 「제조업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 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김주훈(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3장, 연구보고서 2005-05, 한국개발연구원.

_____ (2005b),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김주훈(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4장, 연구보고서 2005-05, 한국개발연구원.

안상훈 (2006),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성 추이」,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 -미시데이터의 분석과 국제비교』, 제4장, 연구보고서 2006-05, 한국개발연구원.

한광호 (2008), 「한미 제조업의 생산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 비교분석」, 『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29~58쪽, 한국경제통상학회 2008. 6.

한진희 (2003),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Alfaro, Laura, Andrew, Charlton, and Fabio Kanczuk (2008), "Plant-Size Distribution and Cross-Country Income Differences," NBER Working Paper 14060 (june).

Aw, Bee Yan , Chen, Xiaomin , and Roberts, Mark J.(2001), "Firm-level evidence on productivity differentials and turnover in Taiwanese manufacturin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66: 51-86.

Baily M., Hulten C., and Campbell D.(1992), "Productivity dynamics in manufacturing plants,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87-267.

Bartelsman, Eric, John Haltiwanger, and Stefano Scarpetta(2008),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roductivity: The Role of Allocative Efficiency," unpublished paper(July).

Bartelsman Eric J. and Doms Mark (2000), "Understanding Productivity: Lessons from Longitudinal Microdat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XXXVIII (September) pp: 569-594.

Foster, Lucia, Haltiwanger, John, and Syverson, Chad(2008), "Reallocation, Firm Turnover, and Efficiency: Selection on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98 (March): 394-425.

Guner, Nezih, Gustavo Ventura, and Yi Xu (2008),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Size-Dependent Polici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1 (Octobor): 721-744.

Hsieh, Chang-Tai and Klenow, Peter (2009), "Misallocation and Manufacturing TFP in China and Ind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Melitz, Marc J.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 1695-1725.

Restuccia, Diego, and Richard Rogerson (2008), "Policy Distortions and Aggregate Productivity with Heterogeneous Plant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1 (Octobor): 707-720.

Rodrik, D. (1999) The New Global Economy and Developing Countries: Making Openness Work,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Policy Essay Number 24,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부록: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

(1) 매칭과정과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본 연구는 Mortensen and Pissarides(1994)의 모형을 이용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양자에 대한 고용보호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Mortensen and Pissarides의 모형에 생산성의 수준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자를 도입한 모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본 모형에는 생산성(ϵ)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종류의 근로자가 존재한다($i = L, H$). 생산성이 높은(high)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i = H$)라고 하고 생산성이 낮은(low)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i = L$)로 지칭한다[34].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비용은 K_H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K_L만큼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들 근로자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고용조정비용 K_H와 K_L을 감안하여 채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는 규제가 있으며 따라서 고용조정비용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수준(α)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일자리의 창출(job creation)과 소멸(job destruction)은 생산성 충격(productivity shock)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우선 기업과 근로자가 만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생산성이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성에 따라 고용 여부와 임금이 결정되고 생산이 시작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만나 결정된 생산성은 새로운 생산성 충격이 올 때까지 유지되므로 생산 역시 새로운 충격이 올 때까지 지속된다. 생산성 충격이 올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생산성과 고용조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일자리의 생산성[35]이 일정 수준(threshold productivity) 이상이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자리를 소멸시키게 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모형에서 총 규모가 1인 근로자는 [0,1] 사이에 연속적으

34) 근로자들은 고용보호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로 지칭했다. 생산성의 분포에 의해 두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구분이 되므로 고기능 근로자 (high-skilled worker) 및 저기능 근로자(low-skilled worker)로 지칭되어도 무방하다.

35) 특정 일자리의 생산성이라 함은 특정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로 존재하며 근로자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i=H,L)$.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분포 $F^H(\bullet)$, $F^L(\bullet)$를 알고 있으며 또한 생산성 충격이 어떤 확률분포를 따라 발생하는지도 알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만나 일정한 매치를 이룰 경우 그러한 매치의 가치는 확률분포 $F^H(\bullet)$, $F^L(\bullet)$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생산성 수준에 대해 $F^H(\epsilon) < F^L(\epsilon)$이 성립한다. 도착율(arrival rate)이 $\lambda_i\ (i=H,L)$인 Poisson 분포를 따라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며 이런 생산성 충격에 의한 매치의 가치 변화와 고용조정비용 K_L, K_H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비어있는 일자리(v)와 실업자(u) 사이의 매치는 매치함수 $m(v,u)$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업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의 상황(tightness of labor market)은 빈 일자리와 실업자의 비율인 $\theta=v/u$ 에 의해 표현된다. 기업의 매치율은 $m(v,u)/v \equiv q(\theta)$로 정의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매치율은 $m(v,u)/u \equiv \theta q(\theta)$가 된다. 또한 전체 실업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δ로 표시되며 따라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만날 확률은 $\delta m(v,u)/v = \delta q(\theta)$이며 정규직 근로자를 만날 확률은 $(1-\delta)q(\theta)$이다. 매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업은 매치의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이런 고용계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생산성을 경계생산성(threshold productivity for hiring)이라 정의하고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경우 각각 ϵ_H^h 및 ϵ_L^h로 표기하자.

한편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조정비용을 부담하고 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생산성 충격 이후의 새로운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데 이런 경계생산성(threshold productivity for dismissal) 수준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각각의 경우에 대해 ϵ_H^d 및 ϵ_L^d로 표시하자. 따라서 확률분포 $F^H(\epsilon_H^h)$ 및 $F^L(\epsilon_L^h)$에 따라 새롭게 고용되는 근로자의 규모, 즉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근로자의 규모가 결정되며 확률분포 $F^H(\epsilon_H^d)$ 및 $F^L(\epsilon_L^d)$을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실업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그리고 실업에서 벗어나는 근로자의 규모와 새롭게 실업에 처해지는 근로자의 규모가 같을 경우 균형실업률이 결정된다.

실업으로의 유입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F^H(\epsilon_H^h)$, $F^L(\epsilon_L^h)$ 및 실업자의 규모와 매치율에 의해서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근로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또한 $F^H(\epsilon_H^d)$, $F^L(\epsilon_L^d)$ 및 취업자의 규모와 매치율에 의해 새롭게 실업으로 진입하는 근로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따라서 각 근로자 유형별로 실업으로의 유입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은 균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eft[1-F^L\left(\varepsilon_L^h\right)\right]\theta q(\theta)\delta u=\lambda_L F^L\left(\varepsilon_L^d\right)\alpha(1-u) \tag{A1}$$

$$\left[1-F^H(\varepsilon_H^h)\right]\theta q(\theta)(1-\delta)u=\lambda_H F^H(\varepsilon_H^d)(1-\alpha)(1-u) \tag{A2}$$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이 결정되면 각 유형별 근로자의 균형실업률 ur_H, ur_L 및 경제 전체의 균형실업률 ur^*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ur_H=\frac{(1-\delta)u}{1-\alpha}=\frac{\lambda_H F^H(\varepsilon_H^d)}{\left[1-F^H(\varepsilon_H^h)\right]\theta q(\theta)+\lambda_H F^H(\varepsilon_H^d)} \tag{A3}$$

$$ur_L=\frac{\delta u}{\alpha}=\frac{\lambda_L F^L(\varepsilon_L^d)}{\left[1-F^L(\varepsilon_L^h)\right]\theta q(\theta)+\lambda_L F^L(\varepsilon_L^d)} \tag{A4}$$

$$ur^*=\alpha ur_L+(1-\alpha)ur_H \tag{A5}$$

(2) 임금 및 균형상태의 결정

본 모형에서 근로자는 실업 및 취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공된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업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 역시 비어있는 일자리의 가치와 그 일자리에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고용을 결정된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며 균형임금이 결정된다. 우선 두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예상하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U_i, $i=H, L$ 라고 나타내고 이런 근로자가 ϵ의 생산성을 가지고 취업할 경우 얻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W_i(\epsilon)$이라고 하자. 우선 i 유형의 실업자 경우 다음의 벨만균형식(Bellman equation)이 성립한다.

$$rU_i = z_i + \theta q(\theta) \int_{\varepsilon_i^h}^{1} [W_i(x) - U_i] dF^i(x) \tag{A6}$$

U_i는 실업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가치는 자본비용(capital cost)과 자본의 수익률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실업자가 가지는 인적자본의 자본비용은 rU_i로 표시된다. 한편 실업자의 인적자본이 가지는 가치 혹은 수익은 실업수당이나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 z_i와 고용상태의 변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상 자본이득(expected capital gain), 즉 실업에서 취업으로 상태가 바뀔 경우 예상되는 소득의 변화 $\theta q(\theta) \int_{\varepsilon_i^h}^{1} [W_i(x) - U_i] dF^i(x)$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변은 실업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예상 이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좌변 rU_i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행위를 그만두게 만드는 최소한의 보상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실업자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동일하다. 한편 현재 취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rW_i(\varepsilon) = w_i(\varepsilon) + \lambda_i F^i(\varepsilon_i^d)[U_i - W_i(\varepsilon)] + \int_{\varepsilon_i^d}^{1} [W_i(x) - W_i(\varepsilon)] dF^i(x) \tag{A7}$$

현재 ϵ의 생산성을 가지고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가지는 현재가치를 $W_i(\epsilon)$로 나타내면 자본비용은 $rW_i(\varepsilon)$가 된다. 한편 취업자의 인적자본이 가지는 이득은 현 상태에 받는 임금 $w_i(\varepsilon)$과 두 가지의 예상자본이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예상자본이득은 실업상태로 바뀔 경우 발생하는 효용의 변화분 $\lambda_i F^i(\varepsilon_i^d)[U_i - W_i(\varepsilon)]$이며 두 번째 예상자본이득은 취업상태에서 생산성의 변화로 인한 효용의 변화분 $\int_{\varepsilon_i^d}^{1} [W_i(x) - W_i(\varepsilon)] dF^i(x)$이다. 근로자는 $W_i(\varepsilon) > U_i$일 경우 제공된 일자리를 택하게 되며 반대일 경우에는 실업상태를 유지한 채로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

한편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하나의 자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우선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얻을 수 있

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V로 나타내면 이러한 자본의 자본비용은 rV가 된다. 한편 빈 일자리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일자리를 비워둘 경우의 비용 c와 일자리를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울 경우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의 균형식이 성립한다.

$$rV = -c + \delta q(\theta)\int_{\varepsilon_L^h}^{1}[J_L(x) - V]dF^L(x) + (1-\delta)q(\theta)\int_{\varepsilon_H^h}^{1}[J_H(x) - V]dF^H(x) \quad \text{(A8)}$$

여기서 $J_i(\epsilon)$, $i = H,L$은 생산성이 ϵ인 근로자를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고용할 경우의 가치이다.

한편 생산성이 ϵ인 근로자로 채운 일자리 역시 기업이 가진 일종의 자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자본의 현재가치를 $J_i(\varepsilon)$라고 할 경우 $rJ_i(\varepsilon)$는 자본비용이 된다. 한편 이러한 자본의 자본수익률은 임금을 초과하는 생산성 $\varepsilon - w_i(\varepsilon)$ 및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의 비용 $\lambda_i F^i(\varepsilon_i^d)[V - J_i(\varepsilon) - K_i]$와 생산성이 변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의 변화 $\lambda_i\int_{\varepsilon_i^d}^{1}[J_i(x) - J_i(\varepsilon)]dF^i(x)$의 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하게 되며 기업은 $J_i(\varepsilon) > V$일 경우 고용을 하게 된다.

$$rJ_i(\varepsilon) = \varepsilon - w_i(\varepsilon) + \lambda_i F^i(\varepsilon_i^d)[V - J_i(\varepsilon) - K_i] + \lambda_i\int_{\varepsilon_i^d}^{1}[J_i(x) - J_i(\varepsilon)]dF^i(x) \quad \text{(A9)}$$

i 유형의 근로자는 매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잉여 $W_i(\varepsilon) - U$를 극대화하고 기업 역시 이러한 매칭의 잉여 $J_i(\varepsilon) - V + K_i$, $i = H,L$를 극대화한다. 이런 과정에서 임금은 기업과 근로자의 협상력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대칭적인 내쉬형태의 협상(Nash bargaining)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동일한 영향력 하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매칭으로부터 얻는 잉여의 가중평균인 다음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W_i(\varepsilon) - U)^{\beta}(J_i(\epsilon) - V + K)^{1-\beta}, \ \ \beta = 1/2, \ \ i = H,L \quad \text{(A10)}$$

따라서 임금협상의 결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W_i(\varepsilon) - U = J_i(\epsilon) - V + K_i, \quad i = H, L \tag{A11}$$

이와 같은 모형에서 기업은 (i)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의 가치 $J_i(\epsilon)$가 일자리를 비워두었을 때의 가치 V보다 낮아지면 고용을 멈추고, (ii) 또한 만약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의 가치 $J_i(\epsilon)$가 일자리를 비워두었을 때의 가치에서 고용조정비용을 제외한 가치 $V - K_i$보다 낮아지면 일자리를 소멸시킨다. 여기에 진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빈 일자리의 가치는 0이 된다는 조건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균형조건이 도출된다.

$$J_i(\varepsilon_i^h) = V, \quad i = H, L \tag{A12}$$

$$J_i(\varepsilon_i^d) + K_i = V, \quad i = H, L \tag{A13}$$

$$V = 0 \tag{A14}$$

위의 식들에 의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멸시키는 조건과 관련된 네 가지 경계생산성 $(\varepsilon_H^h, \varepsilon_L^h, \varepsilon_H^d, \varepsilon_L^d)$이 결정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선 생산성이 ε인 근로자 i가 고용된 경우 총 잉여를 $S_i(\varepsilon) \equiv J_i(\varepsilon) - V + K_i + W_i(\varepsilon) - U_i$로 정의하자. 이 경우 근로자의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begin{aligned}(r+\lambda_i)[W_i(\varepsilon) - U_i] &= w_i(\varepsilon) + \lambda_i F^i(\varepsilon_i^d)[U_i - W_i(\varepsilon)] + \int_{\varepsilon_i^d}^1 [W_i(x) - W_i(\varepsilon)]dF^i(x) \\ &\quad - z_i - \theta q(\theta)\int_{\varepsilon_i^h}^1 [W_i(x) - U_i]dF^i(x) + \lambda_i W_i(\varepsilon) - \lambda_i U_i \\ &= w_i(\varepsilon) - z_i + \lambda_i \int_{\varepsilon_i^d}^1 [W_i(x) - U_i]dF^i(x) \\ &\quad - \theta q(\theta)\int_{\varepsilon_i^h}^1 [W_i(x) - U_i]dF^i(x)\end{aligned} \tag{A15}$$

또한 기업의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게 된다.

$$(r+\lambda_i)[J_i(\varepsilon)-V+K_i]=\varepsilon-w_i(\varepsilon)+\lambda_i\int_{\varepsilon_i^d}^{1}[J_i(\varepsilon)-V+K_i]\,dF^i(x)-r(V-K_i) \quad \text{(A16)}$$

두 관계식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begin{aligned}(r+\lambda_i)S_i(\varepsilon)&=\varepsilon-z_i+\lambda_i\int_{\varepsilon_i^d}^{1}S_i(x)dF^i(x)-\frac{1}{2}\theta q(\theta)\int_{\varepsilon_i^h}^{1}S_i(x)dF^i(x)-r(V-K_i) \quad \text{(A17)}\\ &=\varepsilon-z_i+\frac{\lambda_i}{\lambda_i+r}\int_{\varepsilon_i^d}^{1}[1-F^i(x)]dx-\frac{1}{2}\frac{\theta q(\theta)}{(r+\lambda_i)}\int_{\varepsilon_i^h}^{1}[1-F^i(x)]dx\\ &\quad-\frac{1}{2}\theta q(\theta)[1-F^i(\varepsilon)]S_i(\varepsilon)-r(V-K_i)\end{aligned}$$

마지막으로 균형에서 $S_i(\varepsilon_i^h)=2K_i$ 및 $S_i(\varepsilon_i^d)=0$을 이용하면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경계생산성 $(\varepsilon_H^h, \varepsilon_L^h, \varepsilon_H^d, \varepsilon_L^d)$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begin{aligned}\varepsilon_i^d&=z_i-\frac{\lambda_i}{r+\lambda_i}\int_{\varepsilon_i^d}^{1}[1-F^i(x)]\,dx \quad \text{(A18)}\\ &\quad+\frac{\theta q(\theta)}{2(r+\lambda_i)}\int_{\varepsilon_i^h}^{1}[1-F^i(x)]\,dx+\left[\theta q(\theta)\left[1-F^i(\varepsilon_i^h)\right]-r\right]K_i\end{aligned}$$

$$\begin{aligned}\varepsilon_i^h&=z_i-\frac{\lambda_i}{r+\lambda_i}\int_{\varepsilon_i^d}^{1}[1-F^i(x)]\,dx \quad \text{(A19)}\\ &\quad+\frac{\theta q(\theta)}{2(r+\lambda_i)}\int_{\varepsilon_i^h}^{1}[1-F^i(x)]\,dx+\left[\theta q(\theta)\left[1-F^i(\varepsilon_i^h)\right]+r+2\lambda_i\right]K_i\end{aligned}$$

$i=H, L$

또한 균형상태에서 $V=0$이 될 때까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상태를 실업자와 빈 일자리의 비율로 나타내는 θ, 실업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δ, 그리고 고용을 결정짓는 경계생산성 $(\varepsilon_H^h, \varepsilon_L^h)$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begin{aligned}\frac{c}{q(\theta)}&=\delta\int_{\varepsilon_L^h}^{1}\left[\frac{1}{2}S_L(x)-K_L\right]dF^L(x)+(1-\delta)\int_{\varepsilon_H^h}^{1}\left[\frac{1}{2}S_H(x)-K_H\right]dF^H(x) \quad \text{(A20)}\\ &=\frac{1}{2}\frac{\delta}{(r+\lambda_L)}\int_{\varepsilon_L^h}^{1}[1-F^L(x)]\,dx+\frac{1}{2}\frac{1-\delta}{(r+\lambda_H)}\int_{\varepsilon_H^h}^{1}[1-F^H(x)]\,dx\end{aligned}$$

정리하여 보면, 본 모형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생산성 충격에 따라 실업률이 결정되는 식 (3), (4)와 고용 및 해고의 기준이 되는 경계생산성을 결정짓는 식 (18), (19), 그리고 균형상태에서 빈 일자리의 공급을 결정짓는 식 (20)을 이용하여 경계생산성 $(\varepsilon_H^h, \varepsilon_L^h, \varepsilon_H^d, \varepsilon_L^d)$, 전체 노동력 중 실업자의 비율$(u)$, 실업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delta)$, 그리고 실업자와 빈 일자리의 비율 (θ)을 결정지어야 한다.

14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3

한국경제연구학회

신영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외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3

신영수 외

Ⅰ 서 론

한국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8~9%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OECD는 21세기 중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경제민주화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 추세에 있는 잠재성장률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인지를 검토한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단기적 경기부양의 한계를 직시하고 잠재성장률과 잠재상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하향추세의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신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발전과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경제주체간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경제 및 사회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과 제도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상당한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 선행연구를 (1) 전반적인 경제시스템과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그 동안 생산요소로 구분하지 않았던 (2)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그리

고 (3) 제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시스템과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김광두(2008)은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 수준과 인당국민소득 간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한 이동원·정갑영(2009)은 두 변수 간 내생성 문제(즉 소득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음)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추정을 통해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셋째, 제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차문중(2007)이 대표적이지만 차문중(2007)의 경우 법·질서 준수라는 매우 작은 범위의 제도적 측면만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떤 경로로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질서를 포괄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토대로 각 세부항목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경로를 모색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Ⅱ 경제민주화의 개념

1. 이익조정 수단으로서의 경제민주화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가능하게 해 주는 법적인 수단을 '계약'(contract)이라고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 없이 경제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계약의 자유는 자기의사결정의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곧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국가에 의한 계약의 자유가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자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현되면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유방임시장 하에서는 경쟁원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계약당사자간에 경제적 힘의 격차가 발생하기 쉽다. 문제는 이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자기의사 결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결국 당자자간의 정당한 이익조정 실현에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다.

비록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정의되고는 있으나, 우리 헌법에서의 '경제민주화' 개념도 바로 정당한 이익조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대한민국헌법」제119조를 보면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119조에 따라 국가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대·중소기업공생발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성장과 공공복리상 목적을 위해 계약의 자유에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1)]

아울러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토와 자원의 균형 개발과 이용,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달성 노력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제122조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 부과, 제123조의 농어업 보호·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 농·어민의 이익 보호,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등도 국가가 경제주체들의 이익조정을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재산권과 경제민주화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property right)이라고 한다. 재산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자유는 가능하지도 않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도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재산권은 '배타적 사용'과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의 확립에 의해 자원배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경제주체들의 재산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권 확립이 미흡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은 저축과 투자 행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도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공익적 목적과 투자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3조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하여 재산권은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무기류나 마약 등에 까지 재산권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틀에서만 얘기

1) 서광민·왕상한(2009)에 의하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계약체결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로 의사 및 약사와 같은 공익적 직무 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이 각종 행위법규들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약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계약체결시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다면 재산권이란 가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경쟁의 결과 발생한 부의 분배상태가 경제주체들간에 공평할 수도 있으나, 특정 경제주체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자유방임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의 결과 나타난 상태는 효율적이다(후생경제학 제1정리). 그러나 경쟁의 결과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부의 분배를 정당화시키는 재산권 제도에 대해 경제주체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가는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로서의 재산권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주어야 하는가? 법에 대한 경제학적인 기본 개념을 연구한 코즈(Ronald Coase)는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개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재산권이 확립될 수 있고, 소유권이 다른 상대방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잘 알려진 '코즈 정리'(Coase theorem)는 재산권이 명확히 정의되고, 안전하게 보장되며, 양도가능한 동시에,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이 충분히 작을 경우, 재산권의 초기배분은 그 재산의 효율적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경제주체들 간의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재산권만을 보장함으로써 분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고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비용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재산권 거래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코즈가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교환의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음 세 가지 비용을 말한다. 첫째, 교환상대방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탐색비용'(search cost)이다. 둘째, 거래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에 필요한 '협상비용'(bargaining cost)이다. 셋째, 당사자들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데 발생하는 '합의이행비용'(enforcement cost)이다. 이러한 거래 비용의 크기는 거래 환경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거래의 특성별로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래비용을 낮추는 요인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표준화된 상품 및 서비스	표준화되지 않은 특수 상품 및 서비스
명확한 권리	불확실하고 복잡한 권리
소수의 관련 당사자	다수의 관련 당사자
우호적 당사자	적대적 당사자
서로 잘 아는 당사자 관계	서로 모르는 당사자 관계
합리적 행동	비합리적 행동
저렴한 감시비용	비싼 감시비용
저렴한 처벌비용	비싼 처벌비용

자료: Cooter and Ulen(2008), p. 94.

따라서 '코즈의 정리'는 경제주체간 이익조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주체간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재산권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처방의 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표 1〉에 의하면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물리적 비용'(physical capital)의 투입보다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후술하는 무형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구축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처방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사회자본과 소득수준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제고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성원간 경쟁의 부산물로 생겨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등 사회적 형평과 분배의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장잠재력은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간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물리적 자본'에 대비되는 '사회자본'이라는 용어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데, 사회자본은 가족·공동체·기업 등 사회집단 내에서 가용한 실질적·잠재적인 자원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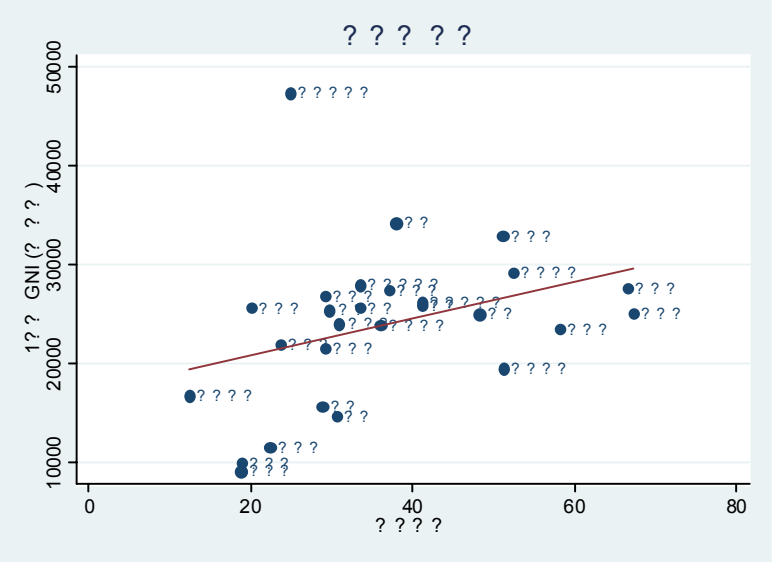
사회자본에 관한 대표적 연구 중에서 Putnam(2001)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social trust),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OECD도 집단 내 혹은 집단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와 규범, 가치관, 이해관계의 공유 및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회자본을 사용하고 있다(Frank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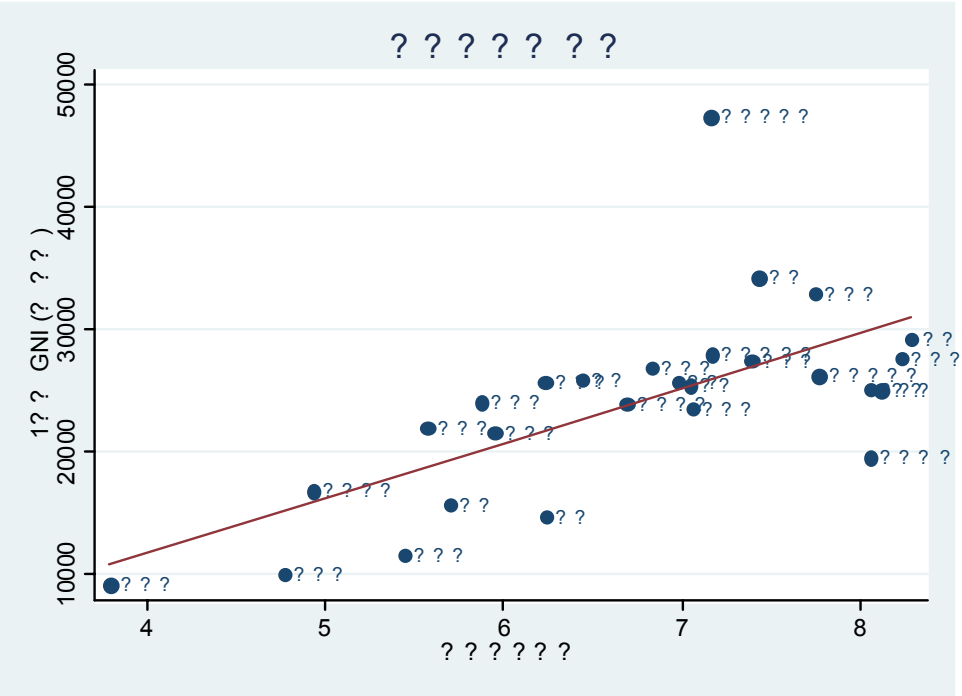
한편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가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희봉·김명환(2001)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자본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창기·박종관(2005)도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지역사회의 혁신을 도모하는데 있어 사회자본의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경제주체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사회자본의 활용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수준도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권(2004)은 사회자본은 그 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제주체도 그것의 순기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한 경제 내에서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공재로 보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Sabatini(2005)는 외국의 경우도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질과 관계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실제 〈그림 1~4〉에서와 같이 OCED 국가의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소득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trust)가 두텁고 정부의 제도적 수준이 높으며, 반면에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험적으로 유추해 보건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소득수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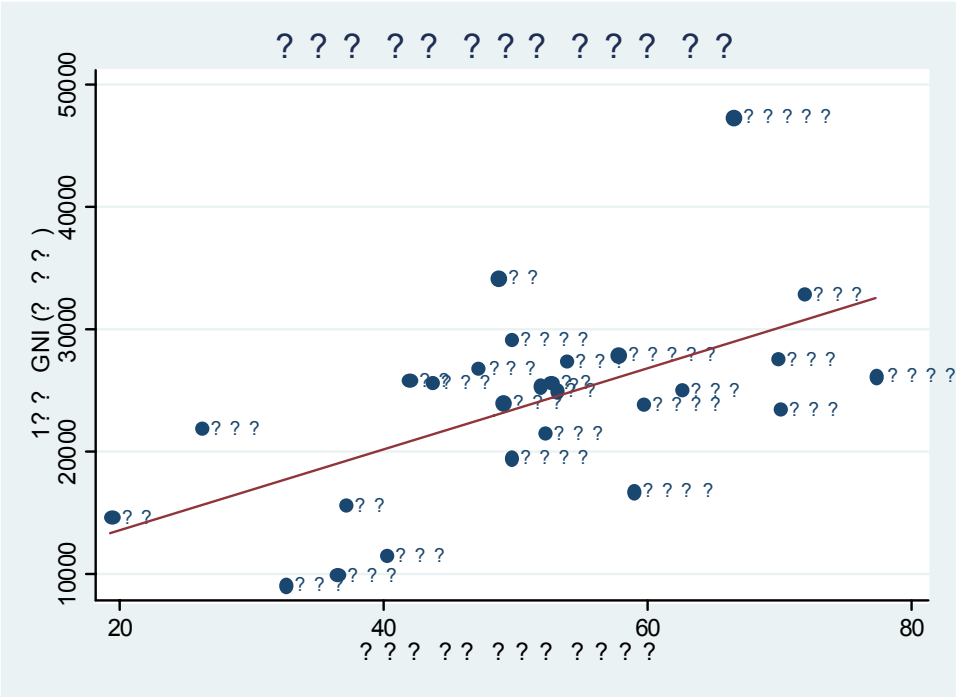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자본과 소득간의 관계 (OECD 최근 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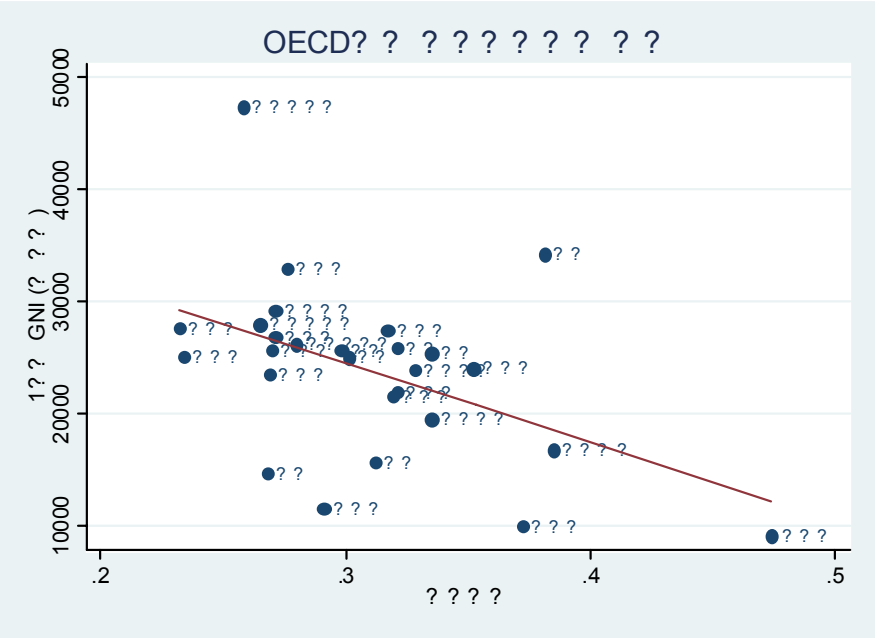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자본과 소득간의 관계 (OECD 최근 년도 기준)



[그림 3] 사회자본과 소득간의 관계 (OECD 최근 년도 기준)



[그림 4] 사회자본과 소득간의 관계 (OECD 최근 년도 기준)



주: 실선은 개별적인 사회자본 지수와 소득수준 사이의 관계를 단순 선형회귀식으로 linear fitting한 결과를 나타냄
자료: ‘신뢰지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수’(public confidence in legal institutions)는 World Values Survey, Wave 4 and Wave 5를, ‘사회자본지수’ (social capital index)는 Lee et al. (2011), Measuring Social Capital in East Asia and Other World Regions를, ‘소득불평등지수’와 ‘소득’은 각각 OECD 자료를 이용함

결론적으로 사회자본은 사회 규범과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협력, 유대감 및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되며, 그 효과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 유대감과 협력관계의 확산으로 나타나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사회자본의 중요 요소인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이 유발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등 협력을 통한 경제주체간 잠재력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용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사회자본의 증대에 의한 재산권 협상 등에 소요되는 각종 거래비용의 감소는 경제주체간의 이익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달성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헌법 제119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이익조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이익조정을 통해 경쟁에서 소외된 집단의 경제적 권리를 찾아 주고, 이들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의 관점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의 강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육성정책의 제시,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농·어민의 이익 보호,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노출된 소비자의 보호 등 경제주체들의 이익조정을 위한 행위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의무만으로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경제민주화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도 고품질 제도수립과 사회자본의 확충으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싸게 먹히는 경제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거래비용의 저하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해서 국가의 생산력 증대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Ⅲ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 식별

국가별, 시기별 잠재성장률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 도입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물적, 인적 자본 등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하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품질(quality of institutions)을 높여야 한다. 좋은 제도는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양질의 경제정책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물적, 인적 자본 및 지식재산의 축적은 조세나 규제 등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용이한 사회일수록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비교적 쉽게 채택된다. 반면, 극도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분배갈등이 심화되어 필수적인 경제정책의 조정을 어렵게 한다(Rodrik 1998). 또한 높은 정책품질은 부패를 줄이고 지하경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능케 한다.

정치경제학 문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오래 동안 알려져 왔다. 이 연구들이 발견한 사실은 서로 다른 소득계층 및 그룹 간 분배갈등이 정책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Rabushak and Shepsle 1974; Tabellini and Alesina 1990; Persson and Tabellini 1994; Alesina and Rodrik 1994; Alesina and Perotti 1995; Alesina et al. 2006; Battaglini and Coate 2008). 예를 들면, 다른 소득계층 간 분배갈등이 재정안정 정책을 지연시켜 소모전을 발생시키며, 여러 계층 및 지역들의 이해를 만족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정부는 필요보다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사회, 즉 경제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를 경제정책에 대한 컨센서스 빌딩(concensus building)이 용이한 결과 양질의 제도를 가진 사회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분배 등 정책의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가 쉽고, 이는 다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돕는 정부정책으로 이어진다.

제도의 품질은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소득불균형이나 민족, 언어 및 종교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양극화된 국가의 정부는 통합된 국가에 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득계층과 이익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이 저조했던 국가 대부분은 분열된 사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Rodrik 1998). 또한, 소득불균형이 심한 국가일수록 외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 디폴트(default)할 위험이 높아지며, 분배를 위해 생산적 자본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진다 (Berg and Sachs 1998; Alesian and Rodrik 1994). 중위투표자 이론을 적용하면, 소득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중위소득자들의 상대적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곧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정책을 초래한다. 즉, 소득이나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분배갈등이 심화 된다 (Alesina and Rodrik 1994). Easterly (2001)가 제시한 중산층 컨센서스 이론에 의하면 소득양극화가 해소되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일수록 경제 수준은 물론 교육, 건강, 정책품질이 높다. 양극화가 해소된 사회일수록 경제정책의 방향은 물론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합의도출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양극화는 여러 소득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정당의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제관련 입법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어렵게 하며, 주요 정책의 시행을 지연하거나 내용이 수정 혹은 백지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초래 한다 (김용기 외 2010).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조세, 교육 등 수많은 정책에서 계층 간 대립이 커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였다.

소득불균형과 함께, 민족이나 언어 심지어는 종교 갈등도 제도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민족 간 갈등은 정치 불안 및 부적절하게 설계된 경제정책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 한다 (Alesina et al. 2003). 아프리카의 성장비극이 민족갈등에 기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50년대 독립한 가나는 민족 간 갈등과 견제로 인해 과도한 세금정책을 남발한 결과 경제기반이던 카카오 산업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Easterly and Levine 1997). 또한 민족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공공재의 공급이 비효율적이다 (Alesina et al. 1999). 다수의 민족그룹으로부터 걷은 세수가 소수 민족그룹으로 이전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낮은 수준의 공공지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과 다른 민족에 대한 불신 역시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민족갈등이 발생할 유인이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

들을 유치한 유럽 각국들은 현재 다양한 민족과 종교 갈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소득불균형이나 민족 갈등 등 제도의 품질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역량으로 사회적 자본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통의 규범으로 정의 된다 (Coleman 1998; Fukuyama 1999; Ostrom 1999).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개념인 사회신뢰는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로 정의된다. 신뢰는 정직과 의무감 등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미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Fukuyama 1999). 일반적 신뢰는 국가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북구유럽의 사회신뢰는 60~7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알려지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편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부가 높은 사회복지 지출과 그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가 높은 국가에서는 현재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집단들이 미래 혹은 다른 정책으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기 때문에 합의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심지어 유능한 정치인들도 무능한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사회분열로 인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Easterly et al. 2006). 즉, 분열된 사회구조가 제도의 품질을 저하하고 이는 곧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방해하게 된다.

사회신뢰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rrow (1972)에 따르면 모든 상업거래가 신뢰를 기초로 하며, 상호신뢰가 낮을 경우 예외 없이 낙후된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 즉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모르는 타인과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Algan and Cahuc 2010).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일반적 신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신뢰하기 쉽다 (이동원, 정갑영 외. 2009). 또한 국민들이 경제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장기적 성장의 결과가 단기적 손실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믿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신뢰 이외에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규범, 자발적인 단체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규범은 구성원 간의 책임의식을 배양해 사회협력 수준을 높인다. 예를 들면, 시민의식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탈세나 뇌물수수 등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내재적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즉 막스 베버식의 모럴비용(moral cost)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모럴비용은 타인이 사회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클수록 높아지며, 반

면 혼자서만 사회계약을 이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Bjørnskov 2010). 사회규범은 그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법의 지배(rule of law) 및 부패지수를 이용해 사회규범을 대리한다. 법의 지배 및 부패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규범이 존중되고 또한 지켜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법질서가 무시되고 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소유권 보호가 취약해 경제주체가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결국 성장률의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North (1990)는 계약을 집행하는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견인으로 주장했다.

물론 사회적 자본은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여러 성분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개념이다 (Bjørnskov 2006). 예를 들어, 신뢰는 단체 활동 등 다른 사회적 자본 개념과는 상관관계가 적은 개별적 변수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의미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포괄적인 추정치로 Lee et al. (2011)이 72개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사회적 자본 종합지수를 이용했다. 이 지수는 사회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종합지수는 44개 변수에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중복을 제거한 유의미한 성분으로 구축되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민족 간 대립을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동원 외 2009).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사회분열로 인한 갈등이 감소된다. 즉 사회분열이 심한 사회에서도 의회, 선거, 정당 등 민주주의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다. 이동원 외 (2009)에 따르면 소득계층, 종교, 언어의 측면에서 사회균열이 심했던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합의를 강조하는 권력분점식 민주주의(Power-Sharing Democracy)를 운영하는 등 선진화된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민주적 절차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사회집단들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계층이나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Easterly et al. 2006).

본 절에서 설명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관련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표 2〉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변수들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 고품질 제도 → 양질의 경제정책 → 경제성장	
개념요소	변수
사회구조	소득불평등 개선, 민족/언어/종교 갈등 봉합
사회역량	사회신뢰 증진, 민주주의 발전

Ⅳ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관련 이론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민주화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민주화에서 제도의 품질로 이어지는 메커니즘과, 둘째는 제도의 품질 향상이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3.1절에서는 경제민주화 개념이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논하고, 3.2~3.4절에 걸쳐 부패, 소득불균형 및 신뢰 등 경제민주화의 주요 변수가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 한다.

1. 경제민주화와 제도의 품질

Rodrik (1998), Easterly et al. (2006) 등은 좋은 의도를 가진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경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은 국가적으로 위기나 기회가 왔을 때 사회구성원 들이 협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또한 소득격차나 민족갈등, 언어차이, 정치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와 구속력을 제공한다.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의 품질이 개선되어 친성장정책의 도입이 용이해진다. 사회통합은 개혁에 필요한 신뢰 및 인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들은 정부의 경제개혁이 초래할 단기적 희생을 장기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사회경제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각종 이익집단의 합의도출이 어려워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기 어렵

게 된다. 신뢰나 계층갈등 이외에 부패, 법의 지배, 민주주의 등이 사회통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통합된 사회의 정부는 특정 이익집단을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균등한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과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하며 따라서 부패도가 적다.

사회신뢰 등 경제민주화가 부패 등 제도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힌 대표적인 연구로 Bjørnskov (2010)를 들 수 있다. Bjørnskov의 관료주의 메커니즘 모형은 주인-대리인-고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고위관료(주인)는 정부서비스를 공무원(대리인)에 위임하고, 부패를 적발할 확률(즉 법적 제도의 효과성)에 근거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기업(고객)은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적발될 경우 뇌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오는 이윤을 빼앗기게 된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적발될 경우 실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뇌물수수 여부는 단순히 실직 등 외부적인 요인 뿐 아니라, 불법적 뇌물수수가 수반하는 내부적인 모럴 비용(moral cost)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모럴 비용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모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증가한다. 따라서, 모럴 비용은 그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적 신뢰 수준에 반영된다. Bjørnskov (2010)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모든 시민들이 서로 지키기를 기대하는 사회계약을 깨트리는 데 따른 모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즉, 모델 내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모럴 비용은 다른 시민들도 사회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클수록 높아지는 반면, 혼자서만 사회계약을 지키게 될 위험성이 높을수록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할 확률이 사회부패의 수준을 나타내며, 사회신뢰로 측정되는 모럴비용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부패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사회신뢰가 부패를 줄이는 또 다른 경로는 고신뢰 사회에서의 투표자들은 시민정신이 강해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제재하기 쉽고, 이는 곧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을 양산한다. 사람들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깔린 신뢰수준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엄격한 잣대로 자신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을 처벌하게 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을 정치제도에 대한 까다로운 소비자로 만든다.

Heinmann and Tanz (2008) 등에 따르면 고신뢰 국가들이 경제적 자유를 담보하는 개혁을 이루기 쉽다. 투표자들이 신뢰하는 정부일수록 개혁의지 및 당위성을 소통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투표자들은 개혁을 시도하는 정부의 동기 자체를 의심하기 쉽다. 또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이 양분된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합의가 어렵지만, 고신뢰 국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 쉽다. 사회신뢰는 잠재적으로 다면적인 정치적 협상의 과정에서 집합행위 (collective ac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부패와 경기순행적 재정정책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은 호황(boom)과 불황(recession)으로 인한 경기변동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경기역행적 재정정책 하에서는 경기호황 시 GDP대비 재량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으로 정부총지출이 감소하며, 세율을 고정시킬 경우 정부수입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경기가열을 막고, 늘어난 재정수입으로 정부부채를 갚아 외부충격으로 인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증가를 평활화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불황 시 정부지출은 늘고, 세수입이 감소하면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을 권고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비효율적인 경기순행적 정책이 사용된다 (Gavin and Perotti 1997; Talvi and Vegh 2005).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부적절한 재정정책을 특히 부패가 심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에서 발견했다 (Alesina et al. 2008; Talvi and Vegh 2005; Lane 2003).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치적 지대추구와 함께 정부부패,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을 낳는다.[2] Alesina et al. (2008)등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부패한) 정부가 세수입의 일부를 공공재가 아닌 자신들 혹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훔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려 정치적 지대 (political rents)를 충

2) 이 부분은 주로 Alesina et al. (2008)의 이론적 모형을 설명한다.

족시키고, 국가채무는 증가는 주로 재무제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투표자들이 정부의 지대추구 정도를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음 시기에 국가부채가 늘어난 후에야 이전 정부의 행태를 알게 된다. 따라서 경기호황이 도래했을 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투표자들은 경기역행적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부지출과 감세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재정을 부패한 목적으로 도용할 여지를 줄이는, 즉 '레비아탄(Leviathan)을 굶기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세수입이 부패한 정부나 이와 결탁한 특정 이익집단의 소득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다시 부패한 정부가 불투명한 방법으로 국가채무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부패가 심하고 신뢰가 없는 국가에서는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이 채택되어 경기불안을 초래한다.

반대로 부패가 적고, 투표자들이 공공부문을 신뢰하는 국가의 정부는 경기역행적 정책을 선호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 선의의 정부는 경기호황시 재정흑자를 통해 채무를 줄이고, 불황시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자를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총소비를 평활화시킨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또한 세원(tax base)의 변동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Talvi and Vegh 2005). 경기변동성이 높은 경우 경기호황 시 높은 수준의 흑자예산(budget surplus)을 축적해 불황에 대비하는 것이 최적의 정책이다. 하지만, 흑자예산이 커질 경우 이를 분배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산흑자는 국가채무를 청산하는데 쓰이는 대신 공기업, 지방정부 및 각종 이익단체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게 위해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낮추어 흑자예산을 감소시키고 민간경제에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결국, 호황시기에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이는 경기변동성을 더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Talvi and Vegh (2005)는 G7 국가만이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경기변동이 심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을 가지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정적이지 못한, 즉 변동성이 심한 경제일수록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왜곡의 결과로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더 큰 경기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정치적

왜곡이 적은 국가일수록 사회비용과 편익에 기반하고 경기변동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기업, 노조, 정부기관, 지방정부 등 각종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이 경제정책을 최적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제민주적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3.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련의 연구들은 소득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분배갈등이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Galor and Zeira (1993); Persson and Tabellini (1994); Alesina and Rodrik (1994); Alesina and Perotti (1996); Galor and Moav (2004); Galor et al. (2009) 등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가 주목한 점은 경제이론은 파이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정치는 파이를 분배하는 방법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분배가 균등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가 경제의 사이즈를 늘리는 친성장정책을 저해하게 된다. 즉, 분배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분배를 선호하는 정치적 유인이 투자나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정책을 도입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이전 문헌들은 주로 경제정책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 특정 경제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정치적 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정치적 절차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준다.

경제성장은 인적, 물적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을 통해 나타난다. 개인들은 생산적 자본 축적의 결실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경제정책 하에서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분배갈등의 해소가 더 중요한 사회는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높은 세율이나 강한 규제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득불균형이 높아질수록 균형 상태에서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

다양한 이론적 모형에서 분배갈등은 주로 소득수준이나 소득원이 다른 투표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소득불균형이 중위투표자의 소득수준으로 나타날 경우,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불균형이 높아질수록) 분배를 선호하는 정책이 채택된다. 또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중위투표자는 더 낮은 수준의 생산적 자본(물적, 인적 자본 및 혁신적 기술)을 소유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 자본에 대한 높은 세율을

선호하게 된다. 종합하면,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비숙련 노동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중위투표자 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소득재분배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경우 정부는 다수가 선호하는 경제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성장을 저해하는 분배갈등은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국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Alesina and Rodrik (1994)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생산요소를 부여받는데, 축적이 가능한 자본과 축적인 불가능한 단순노동으로 구분된다. 경제성장은 생산적 자본스톡의 축적에 영향을 받으며, 자본축적은 다시 개인의 저축으로 이루어진다. 장기적인 성장은 생산적 자본과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공급되는 정부서비스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정부서비스는 생산적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작은 수준의 세율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문제는 생산요소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이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소득만을 보유한 개인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선호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추구한다. 즉, 전체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개인일수록 더 높은 세율, 즉 성장률을 낮추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분배갈등이 분배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심화되어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내생적 성장모형에 세율 등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다수결투표 (majority voting) 등 내생적 정책모형을 접목한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Persson and Tabellini (1994)는 경제활동과 투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중첩세대(OLG)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배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이 성장으로 연결되는 모형이다. 총 두 시기를 사는 개인들은 현재의 총소득과 분배정책(자본세)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와 저축 및 미래 소비를 결정한다. 자본세수입은 일시불 이전(lump-sum transfer)의 형태로 노인세대에 지급된다. 모델의 타이밍은 다음과 같다. 전기에 투표자들은 자본세율로 대표되는 분배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저축을 결정한다. 후기에 개인들은 세후자본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지출을 소비한다. 분배정책은 중위소득자가 결정하는데,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즉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될수록) 낮은 수준의 자본세율을 선택한다. 결론은 균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Strulik (2007)은 중위소득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 소득불

균형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출의 생산적 기능보다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정책의 기회비용이 작아지면서 사회복지 등 소득재분배 지출이 정부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소득양극화는 정치 및 사회불안을 초래하여 투자 등 생산적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의 정치적 힘이 커져, 로비, 정치기부, 뇌물 등을 통한 지대추구 행위가 증가한다. 생산적 활동에 쓰일 자원의 상당부분이 비생산적인 지대추구에 사용되면서 경제성장을 위축 시킨다 (Todaro and Smith 2009).

물론 소득계층간 갈등 이외에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Easterly and Levine (1997)은 민족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낮은 것을 발견했다.

정치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배갈등 이외에 저축, 자본시장 불완전성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 간 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인 Galor and Moav (2004)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는 물적 자본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이었고, 따라서 소득불균형이 클수록 저축성향이 큰 소득계층에게 자원을 몰아주어 경제개발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적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균등한 사회일수록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이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어 성장을 촉진시킨다. 물적 자본과는 달리 인적 자본은 개인수준의 축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 구성원들에게 고루 축적되었을 때 총량이 커진다. 따라서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소득불균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상대적 기여도에 달려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적 자본에 비해 인적자본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득불균형이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인과관계는 다르지만, 이 같은 결과는 역U형의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과 일치한다. 즉 소득불균형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발전의 초기에 해당되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공교육을 들 수 있다. Galor et al.

(2009)에 따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가 집중된 사회일수록 공공교육 등 인적자본을 축적시키는 제도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위축되었다. 산업화는 토지를 소유한 엘리트 계층과 새로이 부상하는 자본가 간의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가들은 공교육 정책을 요구한 반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지주들은 공교육에 반대하였다. 산업화가 전진되면서 물적 자본이나 신기술을 보완하는 성격의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적자본의 축적인 모든 분야에 이득을 주지는 못했는데, 특히 인적자본과의 보완성이 적은 농업이 대표적이다. 교육수준의 증가는 농업에 비해 공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고, 노동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평균임금이 늘어나면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윤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지주들은 성장의 견인차가 된 교육정책에 반대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공교육정책이 지주들의 소득에 미치는 악영향은 토지소유가 집중된 사회일수록 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지주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저지하게 되었다.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된 국가는 공교육제도를 일찍 도입하면서 기술집약적인 산업부문이 발달했고 결과적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반면, 토지 소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국가에서는 발전초기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토지가 후기에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산업화 및 이에 따른 성장을 느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불균형이 심한 사회일수록 분배갈등이 인적, 물적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을 촉진하는 정책의 도입이나 개혁을 방해함으로써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4. 신뢰와 경제성장

경제발전이 후기단계에 이르면서 인적자본과 함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형의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방대한 관련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신뢰가 근대이후 경제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Banfield 1958; Gambetta 1988; Coleman 1990; Putnam 1993, 2000; La Porta et al. 1997; Kanck and Keefer 1997; Tabellini 2010). 일정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대부분의 경제적 거래에서 신

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Arrow 1972).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조직내 구성권 간의 편협한 상호관계에서 탈피해 잘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Algan and Cahun 2010).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비용이 낮아져 투자 및 생산적 활동이 증진 된다 (Knack and Keefer 1997). 신뢰에 민감한 거래의 예로서 미래 보상에 기초한 상거래, 관리자가 근로자의 노력이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의 임금계약, 정부나 은행이 미래수익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수적인 투자, 저축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남부 이탈리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 산업의 발전이 저조하다. 금융은 미래 이익과 현재 소비를 거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Guiso et al. (2000)에 따르면 타 지역에 비해 신뢰 수준이 낮은 남부 이탈리아 지역 주민들은 주식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며, 자본이 필요할 때 은행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고신뢰 사회의 투자자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모든 상황을 가정한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 없고 소송도 줄어든다. 신뢰가 높으면 혁신도 증가하는데, 사업자들이 개발한 신제품을 타인이 도용하고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적 신뢰가 결핍된 사회에서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위반이나 회피의 가능성이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이 억제된다. 또한 경제 주체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이익집단의 지대추구가 활발해지면서 교육, 인프라 등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공공재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쉽다. 최근 들어 급박하게 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경제조정이 필수적인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 경제조정이 지연 된다 (이동원 외 2009). Putnam (1993)은 역사적으로 신뢰가 높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서비스 공급이 잘 되며, 시민과 정부 관료와의 소통이 공공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정책을 예고했을 때 신빙성이 높게 여겨지므로 정책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Knack and Keefer 1997).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발표나 정부가 조세정책을 현상대로 유지한다는 약속이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안정된 정책 하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La Porta et al. (1997)은 신뢰가 높은 국가의 정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사법제도 효율성, 부패, 관료제도의 품질, 납세이행,

사회간접자본의 품질, 영아사망률, 교육수준,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지표로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사회신뢰가 사회 제도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La Porta et al. 1997). 신뢰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반면, 죄수의 딜레마에서 나타나는 비협력적인 결과를 막는 역할을 한다. Tabellini (2010)는 신뢰 등 문화적인 요인이 역사적인 배경 등에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Tabellini가 주목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 변수는 교육과 정치제도이다. 유럽에서는 19세기 말 지역별 문맹률과 17세기~19세기 중반의 정치제도(행정부 권력제한)가 지역별 신뢰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낮은 교육수준과 낙후된 정치제도는 이후 낮은 신뢰도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후진된 지역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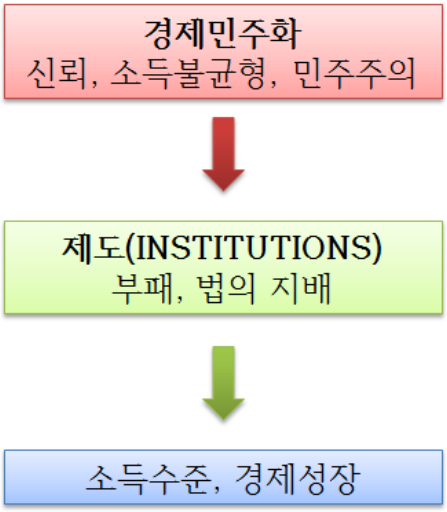
교육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된다 (Heyneman 2000; Easterly et al. 2006). 먼저, 공교육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국가 간 사회계약에 대한 지식을 사회 전반에 확대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며,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계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습관을 키운다. 결국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처벌 등을 통해 사회계약을 어기는 데 따르는 결과를 인식하게 한다. 즉, 교육은 시민들이 사회계약이라는 발상 자체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제도는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효율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가진 정치제도는 사회신뢰를 증진시킨다. 행정부 권력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시민들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며, 정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법칙 및 법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한된다. 효율적인 정치제도는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법과 규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Ⅴ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실증분석

1. 추정 모형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Tabellini(2010)과 유사하다. 우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변수들은 신뢰,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등이며 이러한 경제민주화 변수들은 부패 혹은 법의 지배 등의 제도변수들을 통해서 소득이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한 국가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추정식에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변수들(부패 혹은 법의 지배)이 필요하지만 이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제도변수들(부패 혹은 법의 지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의 경제민주화 지표들을 규명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과거 제도변수들의 도구변수들(instruments)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경제민주화 수준, 즉 과거의 신뢰수준 및 기타 통제 변수 등을 도구변수들로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과거 경제민주화에 대한 첫 번째 도구변수는 과거의 신뢰수준이다. 과거의 신뢰수준은 WVS의 1차부터 3차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내생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상정한다.

$$Y_i = \beta_0 + \beta_1 IQ_i + \beta_2 Y_i^* + \beta_3' X_i + \epsilon_i$$

여기서 Y_i는 국가 i의 소득수준, IQ_i는 국가 i의 제도를 측정하는 변수(Institutional Quality)라고 할 수 있다. Y_i^*는 국가 i의 과거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X_i는 국가 i의 현 경제민주화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 및 여타 통제변수들(controls)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변수 IQ_i는 경제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의 품질 IQ_i도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추정식의 오차항 ϵ_i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text{내생성 문제: } Cov(IQ_i, \epsilon_i) > 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고려한다.

$$IQ_i = \gamma_0 + \gamma_1 IQ_i^* + \gamma_2 Y_i^* + \gamma_3' X_i + \nu_i$$

여기서 IQ_i^*는 과거의 제도수준을 가리킨다. 그런데 IQ_i^*는 관찰 혹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조추정식을 고려해본다. 만일 과거의 제도의 품질은 그 시대의 경제민주화 수준, 정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볼 수 있다.

$$IQ_i^* = \delta_0 + \delta_1' X_i^* + \delta_2 Y_i^* + \xi_i$$

IQ_i^*에 대한 식을 IQ_i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IQ_i = \eta_0 + \eta_1' X_i^* + \eta_2 Y_i^* + \eta_3' X_i + \omega_i$$

위 추정식이 바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1단계 추정식이다. 1단계에서 X_i^*, Y_i^*, X_i를 사용하여 IQ_i를 추정한 후 IQ_i에 대한 적합값 $\widehat{IQ_i}$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경제

3) X_i와 X_i^*는 같은 차원(dimension)의 벡터라고 가정한다.

민주화와 소득 또는 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 다음이 2단계 추정식이다.

$$Y_i = \beta_0 + \beta_1 \widehat{IQ_i} + \beta_2 Y_i^* + \beta_3' X_i + \epsilon_i$$

1단계에서는 제도변수 IQ_i를 과거의 제도변수와 과거의 소득수준, 그리고 현재의 경제민주화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text{1단계 추정식: } IQ_i = \eta_0 + \eta_1' X_i^* + \eta_2 Y_i^* + \eta_3' X_i + \omega_i$$

여기서 IQ_i는 국가 i의 제도의 품질(부패 혹은 법의 지배), X_i^*는 국가 i의 과거 경제민주화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과거의 신뢰), Y_i^*는 국가 i의 과거 소득수준, X_i는 국가 i의 현재 경제민주화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과 여타 통제변수들이다.

우선 제도변수로 사용된 세계은행의 '법의 지배'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치이다. 과거의 신뢰는 WVS의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신뢰지수의 평균치(Wave1부터 3까지의 평균)이며 현재의 신뢰는 WVS Wave4와 Wave5의 평균이다. 한편, 과거의 소득수준은 1991~1995년 간 1인당 GDP의 평균 또는 1996~2000년 간 1인당 GDP의 평균, 현재의 소득수준은 2001~2010년 간 1인당 GDP의 평균 또는 2006~2010년 간 1인당 GDP의 평균을 선정했다.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값을 이용했다.

1단계 추정식으로부터 추정된 제도변수의 적합값을 2단계 추정에 사용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2단계에서는 과거의 소득수준, 그리고 현재의 경제민주화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text{2단계 추정식: } Y_i = \beta_0 + \beta_1 \widehat{IQ_i} + \beta_2 Y_i^* + \beta_3' X_i + \epsilon_i$$

여기서 $\widehat{IQ_i}$은 IQ_i에 대한 1단계 적합값을 가리킨다. 소득불균형이나 민주주의 등과 같은 변수들은 시간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 추정에서는 이들의 과거변수들은 고려하지 않는다.[4)]

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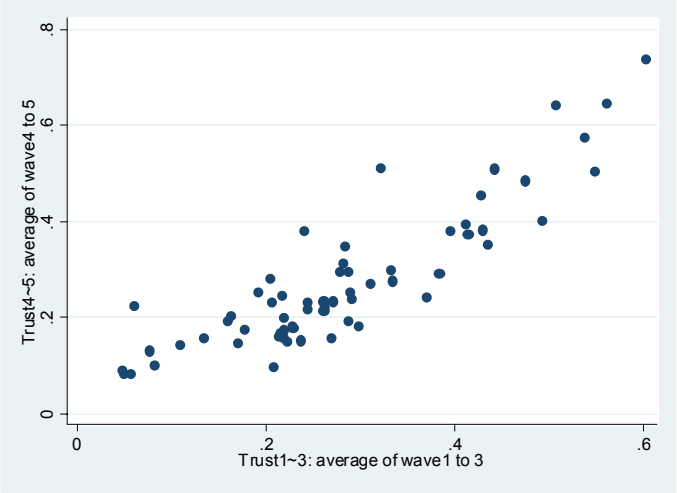
2. 분석 자료에 대한 소개

일반적 신뢰와 관련해서는 World Value Survey (WVS)의 "A165 Most people can be trusted"라는 항목을 이용한다. 문항의 질문은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전체 응답자 중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비중을 이용한다. 독일의 경우 1981년 1차 웨이브에서는 서독으로 대체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Wave 1 (1981-84), Wave 2 (1989-1993), Wave 3 (1994-1999)의 평균과 Wave 4 (1999-2004), Wave 5 (2005-2007)의 평균이다. 두 평균 신뢰수준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6개 공화국 가운데 세르비아아 몬테네그로 2개 공화국이 합쳐 1992년 4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FRY)을 설립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두 국가로 분리 독립하게 된다. WVS에 나타나는 신뢰지수의 경우 Wave 4까지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Wave 5는 세르비아로 구분되며, 몬테네그로의 신뢰지수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르비아의 과거 신뢰지수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신뢰지수라고 가정한다.

[그림 5] 과거의 신뢰와 현재의 신뢰 사이의 관계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에서 Governance Score를 사용한다. Governance Score는 -2.5에서 2.5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좋은 통치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값을 계산하여 신뢰지수와 비교하면 법의 지배와 신뢰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신뢰 수준과 법의 지배 사이의 관계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변수는 Polity IV Project의 민주주의 지수를 이용한다. -66, -77, -88을 갖는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몇 개국에 대해서는 시계열을 병합하였다. 세르비아(Serbia)의 경우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및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Seriba and Montenegro)의 과거자료를 병합하였고, 러시아(Russian Federation)의 경우 소련(USSR) 자료와 병합했다. 독일(Germany)의 통일 이전 자료는 서독(West Germany) 자료를 이용했고, 체코(Czech Republic)와 슬로바키아(Slovakia)의 과거 자료는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과거 자료를 이용했다. 관측 시점이 두 번 나타나는 경우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값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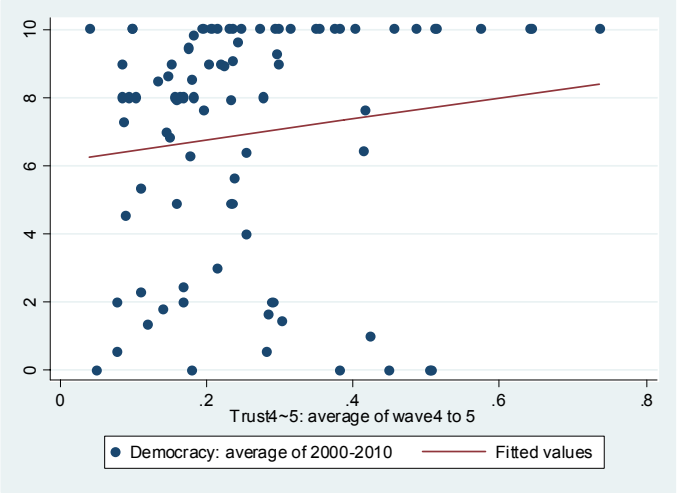
한편, WVS에는 나타나지만 Policy IV Project에는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이다. 안도라, 홍콩, 헝가리, 룩셈부르크, 몰타, 북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이 그러한 예다. WVS에 맞춰 Policy IV Project로부터 추출된 국가들은 모두 89개 국가들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값을 계산하여 신뢰지수와 비교하면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신뢰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타 지수와 달리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국가 내에서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평균값이 10인 국가들은 전체 87개 국가 가운데 26개 국가

5)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

로 3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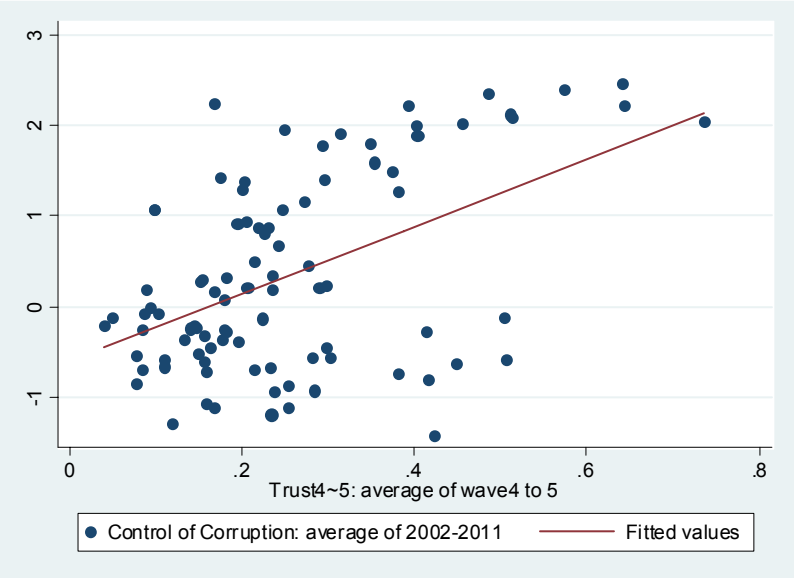
[그림 7] 신뢰 수준과 민주주의 발전 정도 사이의 관계



첫 번째 부패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에서 Control of Corruption을 사용한다. 동 지수는 공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2.5에서 2.5 사이의 값을 갖는다.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마찬가지로 높은 값을 가질수록 좋은 통치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값을 계산하여 신뢰지수와 비교하면 부패정도와 신뢰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신뢰 수준과 부패지수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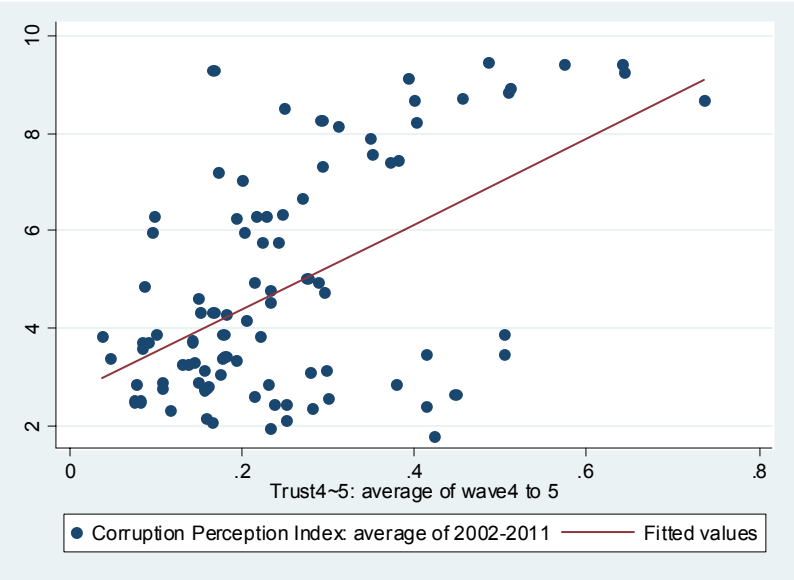


두 번째 부패지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1995년 이후 매년 구축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사용한다.

1995년에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하나의 나라로 간주하여 CPI지수가 6.85라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동지수는 각각 벨기에의 1995년 CPI지수이며 동시에 룩셈부르크의 1995년 CPI지수라고 보았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2003~2005년까지 관찰되고 사라지며 세르비아(Serbia)와 몬테네그로(Montenegro)로 분리되는데 세르비아는 2006년부터, 몬테네그로는 2007년부터 각각 나타난다. 두 나라의 과거 관측치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003~2005년 자료를 사용한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값을 계산하여 신뢰지수와 비교하면 부패인식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PI와 신뢰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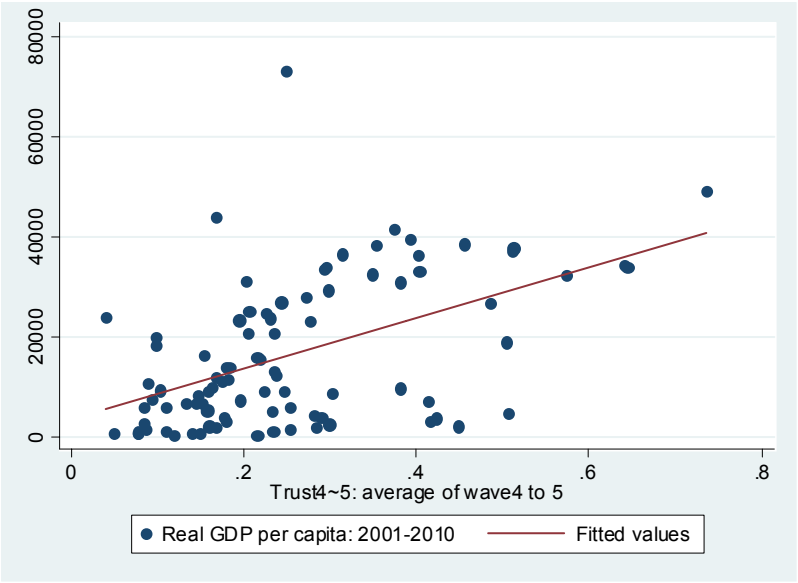
[그림 9] 신뢰 수준과 부패인식지수 사이의 관계



1인당 GDP는 Penn World Table Version 7.1의 변수 rgdpch(PPP converted GDP per Capita, at 2005 constant prices)를 사용하였다.[6] 2001년~2010년 1인당 GDP의 평균과 신뢰지수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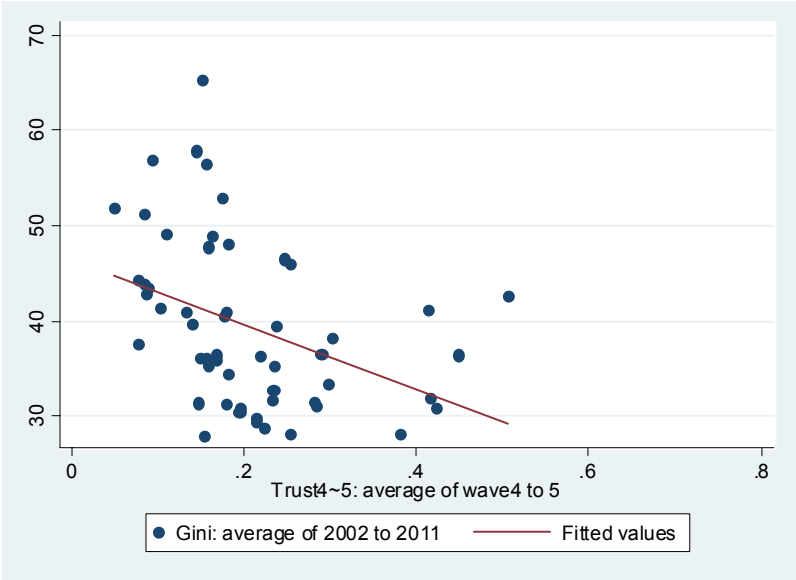
6) Alan Heston, Robert Summers and Bettina Aten, Penn World Table Version 7.1, 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on, Income and Price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uly 2012.

[그림 10] 신뢰 수준과 1인당 GDP 사이의 관계



지니계수(GINI)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중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지니계수와 신뢰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신뢰 수준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다음 표에 요약하였다. 우선 제도변수들로 이용된 법의 지배와 부패지수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의 지배 및 부패지수1은 -2.5

에서 2.5 사이의 값을 갖는 변수들로 높은 값을 갖는 나라일수록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고 부패가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부패지수2는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로 1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매우 청렴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신뢰와 관련한 변수들은 그 값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신뢰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표 3〉 분석에 사용된 자료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법의 지배	95	0.28	1.02	-1.74	1.95
부패지수1	95	0.30	1.07	-1.42	2.45
부패지수2	94	4.79	2.32	1.78	9.47
신뢰 1~3	66	0.28	0.13	0.05	0.60
신뢰 4~5	92	0.26	0.14	0.04	0.74

주: 부패지수1은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Control of Corruption, 부패지수2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통제변수들로 사용된 여타 경제민주화 변수들로는 지니계수, 민주주의 지수이고 인당 GDP도 초기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0과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10의 값을 가질수록 민주주의 정도가 심화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인당 GDP는 모두 실질변수들이다.

〈표 4〉 분석에 사용된 자료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니계수	58	39.65	8.76	27.93	65.27
민주주의 지수	87	6.83	3.50	0.00	10.00
인당GDP 1986~1990	85	11,593	10,028	407	39,241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는 2001~2010년 사이의 인당GDP의 평균, 2006~2010년 사이의 인당GDP의 평균, 그리고 2001~2010년 사이의 인당GDP의 연평균 증가율, 1991~2010년 사이의 인당GDP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국가간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의 인당GDP의 평균을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짐바브웨)의 인당GDP가 $330, 가장 부유한 나라(룩셈부르크)의 인당GDP가 $73,047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준편차는 $14,416나 된다. 인당GDP로 측정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들도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표준편차도 2.48%에 이른다.

〈표 5〉 분석에 사용된 자료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당GDP 2001~2010	94	15,891	14,416	330	73,047
인당GDP 2006~2010	94	16,930	15,010	310	77,119
인당GDP증가율(연평균) 2001~2010	94	0.0311	0.0248	-0.0175	0.1465
인당GDP증가율(연평균) 1991~2010	85	0.0252	0.0180	-0.0228	0.0969

3. 추정결과

1단계 추정식의 추정결과는 〈표 6〉과 같다. 과거의 경제민주화 수준, 즉 신뢰수준(신뢰1~3)이 제도의 품질(법지배 및 부패)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추정식에 설명변수로 포함된 신뢰1~3과 신뢰4~5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뢰수준(신뢰4~5)을 과거의 신뢰수준(신뢰1~3)으로 통제한 후 잔차항을 이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표 6〉 1단계 추정식 추정결과

	(1) 법의 지배	(2) 부패1	(3) 부패2
과거 신뢰	-2.506	-3.645*	-8.926*
	(2.287)	(1.995)	(4.377)
현재 신뢰	8.378**	9.714***	23.31***
	(3.503)	(3.055)	(6.704)
지니계수	0.007	0.023**	0.050**
	(0.010)	(0.009)	(0.020)
1인당GDP(86-90)	0.144	0.301**	0.664**
	(0.154)	(0.135)	(0.296)
민주주의	0.280***	0.262***	0.518***
	(0.0559)	(0.0488)	(0.107)
상수항	-4.932***	-6.793***	-10.62***
	(1.650)	(1.439)	(3.157)
Observations	27	27	27
R-squared	0.628	0.703	0.656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 p값<0.1, ** p값<0.05, *** p값<0.01

신뢰4~5를 신뢰1~3으로 통제한 후 잔차항을 이용하여 1단계 추정식을 재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잔차항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과거의 경제민주화 수준(과거의 신뢰수준)은 제도의 품질(법지배 및 부패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과거의 신뢰수준으로 통제된 현재의 신뢰소득의 잔차항을 사용한다.

〈표 7〉 1단계 추정식 추정결과

	(1) 법의 지배	(2) 부패1	(3) 부패2
과거 신뢰	5.618***	5.775***	13.68***
	(1.670)	(1.456)	(3.196)
현재 신뢰	8.378**	9.714***	23.31***
	(3.503)	(3.055)	(6.704)
지니계수	0.007	0.023**	0.050**
	(0.010)	(0.009)	(0.020)
1인당GDP(86-90)	0.144	0.301**	0.664**
	(0.154)	(0.135)	(0.296)
민주주의	0.280***	0.262***	0.518***
	(0.0559)	(0.0488)	(0.107)
상수항	-4.894***	-6.749***	-10.520***
	(1.638)	(1.429)	(3.136)
Observations	27	27	27
R-squared	0.628	0.703	0.656

주: 1) 신뢰4~5는 신뢰1~3으로 통제한 후 얻은 잔차항을 이용.
2) * p값〈0.1, ** p값〈0.05, *** p값〈0.01

(2)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2단계에서는 2001~2010년 1인당 GDP의 평균 및 2006~2010년 1인당 GDP의 평균을 모두 이용해서 추정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통제변수로 1986~1990년 1인당 GDP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8〉 2단계 추정식 추정결과(소득수준)

	(1)	(2)	(3)
	2001~2010년 1인당 GDP 평균의 로그값		
법의 지배	0.252**		
	(0.092)		
부패1		0.286***	
		(0.099)	
부패2			0.158***
			(0.046)
지니계수	0.0033	-0.0008	-0.0009
	(0.0044)	(0.0045)	(0.0043)
1인당GDP(86-90)	0.698***	0.655***	0.656***
	(0.062)	(0.070)	(0.065)
현재 신뢰	-1.078	-1.348	-1.401
	(0.987)	(1.003)	(0.969)
상수항	2.806***	3.342***	2.699***
	(0.556)	(0.655)	(0.526)
Observations	27	27	27
R-squared	0.923	0.919	0.924

주 1) 법지배, 부패1, 부패2는 모두 적합값(fitted values)이며 도구변수 신뢰1~3, 신뢰4~5, 지니계수, 1인당 평균GDP의 로그, 민주주의 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 신뢰4~5는 신뢰1~3으로 통제한 후 얻은 잔차항을 이용.
2) * p값〈0.1, ** p값〈0.05, *** p값〈0.01

추정 결과 보다 높은 품질의 제도를 보유한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수준(2001~2010년 사이 평균 1인당 GDP)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및 신뢰지수를 통해서 본 현재의 경제민주화 수준은 소득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니계수나 신뢰수준은 현재의 제도 품질(법의 지배 및 부패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민주화 수준은 향상된 제도의 품질을 통해서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정도가 직접적으로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되지는 않는다. 종속변수를 2006~2010년 1인당 GDP의 평균(로그값)을 사용했을 때에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2단계 추정식 추정결과(소득수준)

	(1)	(2)	(3)
	2006~2010년 1인당 GDP 평균의 로그값		
법의 지배	0.265**		
	(0.102)		
부패1		0.303**	
		(0.109)	
부패2			0.169***
			(0.051)
지니계수	0.0024	-0.0020	-0.0021
	(0.0048)	(0.0049)	(0.0048)
1인당GDP(86-90)	0.675***	0.629***	0.629***
	(0.069)	(0.077)	(0.071)
현재 신뢰	-1.233	-1.516	-1.572
	(1.088)	(1.097)	(1.063)
상수항	3.148***	3.720***	3.044***
	(0.613)	(0.717)	(0.577)
Observations	27	27	27
R-squared	0.923	0.919	0.924

주 1) 법지배, 부패1, 부패2는 모두 적합값(fitted values)이며 도구변수 신뢰1~3, 신뢰4~5, 지니계수, 1인당 평균GDP의 로그, 민주주의 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 신뢰4~5는 신뢰1~3으로 통제한 후 얻은 잔차항을 이용.
2) * p값〈0.1, ** p값〈0.05, *** p값〈0.01

(2)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g_i = \theta_0 + \theta_1 \widehat{IQ}_i + \theta_2 Y_i^* + \theta_3 X_i + \epsilon_i$$

여기서 g_i는 국가 i의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을 가리키며 대상기간은 2001~2010년 및 1991~2010년까지로 한다. 위 추정식은 2단계 추정식이며 1단계 추정식은 위와 유사한 통제변수들을 이용하여 IQ_i에 대한 1단계 적합값 $\widehat{IQ}_{it}$을 찾는 것이다. 다른 모든 변수들은 전과 동일하다.

〈표 10〉 2단계 추정식 추정결과(성장률)

	(1)	(2)	(3)
	2001~2010년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법의 지배	0.0163**		
	(0.0066)		
부패1		0.0183**	
		(0.0070)	
부패2			0.0098***
			(0.0034)
지니계수	-0.00007	-0.00034	-0.00034
	(0.00031)	(0.00032)	(0.00032)
1인당GDP(86-90)	-0.0172***	-0.0199***	-0.0197***
	(0.0045)	(0.0049)	(0.0048)
현재 신뢰	-0.0698	-0.0873	-0.0908
	(0.0709)	(0.0707)	(0.0714)
상수항	0.1791***	0.2129***	0.1711***
	(0.0400)	(0.0462)	(0.0388)
Observations	27	27	27
R-squared	0.423	0.416	0.405

주: 〈표 9〉 참조

추정결과 보다 높은 품질의 제도를 보유한 나라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법지배, 부패지수 등 제도변수들이 바뀔 때에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표 9)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와 신뢰수준으로 측정한 현재의 경제민주화 수준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제도의 품질이 제고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제도의 품질이 선결될 때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1인당 소득수준이 향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분석 대상국가들 사이에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분석을 2001~2010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수행하였으나 동기간에 대해서는 주요 제도변수들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2단계 추정식 추정결과(성장률)

	(1)	(2)	(3)
	2001~2010년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법의 지배	0.00788		
	(0.00747)		
부패1		0.00934	
		(0.00784)	
부패2			0.00551
			(0.00380)
지니계수	-0.000468	-0.000602	-0.000611
	(0.000353)	(0.000354)	(0.000356)
1인당GDP(86-90)	-0.0148***	-0.0163***	-0.0166***
	(0.00502)	(0.00553)	(0.00534)
현재 신뢰	-0.106	-0.114	-0.116
	(0.0798)	(0.0790)	(0.0795)
상수항	0.185***	0.204***	0.184***
	(0.0450)	(0.0516)	(0.0432)
Observations	27	27	27
R-squared	0.923	0.919	0.924

주: 〈표 9〉 참조

2001~2010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제도변수들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2000년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대침체(Great Recession)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대침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변수들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10년의 기간을 장기(long-run)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다. Blanchard(1997)의 구분에 따르면 10년의 기간은 중기(medium run)에 해당할 수 있다. 중기에도 단기와 유사하게 경기변동을 야기하는 다양한 거시경제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성권(2004),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중첩세대 R&D모델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한국경상학회, 제22권 제3호, pp. 183-210.

김용기 외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박희봉 · 김명환(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제34집 제4호, pp. 219-237.

서광민 · 왕상한(2009), 『현대사회와 법』, 신론사

이동원, 정갑영 외. (2009).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이창기 · 박종관(2005), 「도시지역 사회자본의 실태와 증진에 관한 연구: 대전 ·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집 제2호, pp. 191-210.

Alesina A. & Rodrik, D.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2), 465-490.

Alesina, A., Perotti, R. (1995).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 1203-1228.

Alesina, A., Baqir, R. & Easterly, W. (1999). Public Goods and Ethnic Divis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4), 1243-1284.

Alesina, A. et al. (2003).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8: 155-194.

Alesina, A., Silvia, A., Francesco, T. (2006). Who Adjusts and When? On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s. IMF Staff Papers Special Issue 53: 1-29

Alesina, A., Tabellini, G., Campante F.R.. (2008). Why Is Fiscal Policy Often Procyclical?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6(5): 1006-1036.

Algan, Y. and Cahuc, P. (2010). Inherited Trust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Arrow, K. (1972). Gift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343-362.

Banfield, E.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Battaglini, M., Coate, S. (2008). A Dynamic Theory of Public Spending, Taxaton, and Debt. American Economic Review 98(1): 201-236.

Berg, A., Sachs, J. (1998). The Debt Crisis: Structural Explanations of Country Performa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9: 271-306.

Bjørnskov, C. (2006). Determinants of Generalized Trust: A Cross-country Comparison. Public Choice, 130, 1-21.

Bjørnskov, C. (2010). How Does Social Trust Lead to Better Governance? Public Choice 144, 323-346.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ooter, R. and Ulen, T. Law and Economics, 5e, 2008, Pearson Addison-Wesley, U.S.A.

Easterly, W. (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 317-335.

Easterly, W. & Levine, R. (1997). Africa's Growth Tragedy: Politics and Ethnic Divis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03-1250.

Easterly et al. (2006).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 Politics 18(2), 103-120.

Franke, S. (2005).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Reference Document for Public Policy Research, Development, and Evaluation. Policy Research Initiative, Canada.

Fukuyama, F. (1999).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IMF Conference on Second Generation Reforms.

Galor, O., Moav. O. (2004). From Physical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 1001-1026.

Galor, O., Moav, O., Vollrath, D. (2009). Inequality in Landownership, the Emergence of

Human-Capital Promoting Institutions, and the Great Diverg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6: 143-179.

Galor, O., Zeira, J.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 35-52.

Gambetta, D. (2000). Mafia: The Price of Distrust. In Gambetta, D.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University of Oxford Press.

Gavin, M., Perotti, R. (1997). Fiscal Policy in Latin America. NBER Macroeconomics Annual. MIT Press.

Guiso, L., Sapienza, P., Zingales, L. (2004).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inancial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526-556.

Heinmann, F., Tanz, B. (2008). The Impact of Trust on Reforms. Journal of Economic Policy Reform 11(3): 173-185.

Heyneman, S.P. (2000). From the Party/State to Multi-ethnic Democracy: Education and Social Cohes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2(2): 173-191.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La Porta, R. et al.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Hundred and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ay 1997), 333-338.

Lee et al. (2011) Measuing Social Capital in East Asia and Other World Regions: Index of Social Capital for 72 Countries. Global Economic Review 40(4), 385-407.

North, D.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strom, E. (1999) Social capital: A fad of a fundamental concept, in: I. Serageldin and P. Dasgupta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p. 172214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ersson, T., Tabellini, G. (1994).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600-621.

Putnam, R., Leonardi, R. &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Vol. 2, No. 1, pp.41-51.

Rabushka, A., Shepsle, K. (1974). Politics in Plural Societies: A Theory of Democratic Instabi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Rodrik, D. (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4), 385-412.

Sabatini, F. (2005).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Investigating the Causal Nexus through Structural quations Models. Working Paper, mimeo.

Strulik, H. (2007). A Distributional Theory of Government Growth. Public Choice 132: 305-318.

Talvi, E., Vegh, C.A. (2005). Tax Base Variability and Procyclical Fiscal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8: 156-190.

Tabellini G. (2010). Culture and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s of Europ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8(4): 677-716

Tabellini and Alesina 1990

Tabellini, G., Alesina, A, (1990). Voting on the Budget Deficit. American Economic Review 80: 37-49.

Todaro M.P, Smith, S.C. (2009). Economic Development. Mass.: Addison-Wesley

Lane, P.R. (2003). The Cyclical Behavior of Fiscal Policy: Evidence from the OEC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2661-2675.

15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4

한국계량경제학회

김재영 · 표학길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4

김재영 · 표학길

Ⅰ 서 론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공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경제 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 없이 공허한 이념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에 내버려두고 한국 경제를 실험의 장(場)으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에 의문을 제기하면 시대정신에 반(反)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한 일이 없는 신조어(新造語)이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최근 주류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가령 복지 문제와 관련된 '재정 민주주의', 저개발 부문 및 소득 하위 계층과 '동반 성장', 중산층까지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 등의 개념이 경제 민주화 개념과 관련 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고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민주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바구니에 무엇을 담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와 소득 분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분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는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소득 분배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재벌들에 대한 출자 규제 제도가 왜 실패했으며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부르

짖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밑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왜 더욱 심해졌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통상의 조세 정책, 재정 정책 및 금융 정책으로 충분하다. 가령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순환출자를 확산시키는 재벌은 조세·금융·재정 면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된다. 핵심은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된 금융 산업이 재벌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확장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정부 규제 일변도로 추진될 때 예상되는 암울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 자본은 가능하면 한국을 떠나려 할 것이다. 국내 자본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공장이나 시설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려 할 것이다. 그나마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도 규제 왕국에서 탈출하기를 꿈꾸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은 추락하고 실업은 확산되며 세계경제의 불황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초래하고 경제 정체를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간행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개혁 프로그램의 플러스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나는 반면 마이너스 효과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경제가 경기 변동적 확장기에 있을 때 추진해야 하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 추진할 때는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 세계경제의 불황이 국내 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엇박자를 밟고 있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경제 이론의 무책임한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제2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관련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효율성과 경제력 집중도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대기업의 시장지배의 효율성 검증을 시도한다. 이어 제 4장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추진이 결국 정부에 의해서 주도 되며 경제행위에 참가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대기업 등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하는 분석을 확률적 일반균형모형(DSGE)을 통하여 분석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간의 관계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도출한다.

Ⅱ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정책제안

1. 이론적 고찰

(1)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헌에세이 결과

최근 OECD나 World Bank를 중심으로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정의는 다양하나 대체로 Broad-based Growth, Shared Growth, Propoor Growth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핵심은 하위계층과 중간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며 경제성장을 이루는데에 있다. 즉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보다는 생산적인 고용의 산출, 투자 여건을 균등하게 하여 사회 전체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등 빈곤의 퇴치와 고도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려는 논의이다. 이와 유사하게 선진국과 BRICS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성장(Socially Inclusive Growth), 규제개혁정책(Regulatory Reform Policies), 동반성장(Shared Growth)과 같은 주제들도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ida(2006)의 연구는 하위계층을 생산적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고용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계층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Viewing the poor as contributors to growth through productive and Income Generating employment)

가) 포용적 제도

아스모글루와 로빈슨(2012)은 각국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그 국가들의 상이한 제도, 즉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라고 보았다. 그들은 경제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미국이나 남한이 가지고 있는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일반대중이 자기들의 재능과 숙련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촉진시키며 그들이 바라는 선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하나는 위에 정의한 포용적 경제제도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 가령 사회구성원 중 특정 그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소득과 부를 약탈하도록 설계된 '약탈적 경제제도'를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약탈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사례로 식민지하의 라틴 아메리카 경제들과 현재의 북한경제를 예로 들었다.

아스모글루와 로빈슨은 특히 북한경제가 대량 기아를 만들어내고 있는 약탈적경제의 대표적인 경제라고 보고 어떠한 면에서 착취적인 경제제도가 인민에게 강요되고 운용되는지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9년 11월, 북한정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흔히 이러한 개혁은 극심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구권을 100:1의 비율로 신권과 교환하였다는 점에서 1960년에 단행된 프랑스의 화폐개혁과 비슷하였다. 다른 점은 프랑스에서는 구권과 신권교환이 4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북한에서는 1주일의 시간만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100,000원 이상은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이 상한선은 나중에 500,000 원으로 조정되었지만 100,000원은 암시장가격으로 미화 약 40달러에 불과하였다. 결국 북한정부는 단 한 번의 조치로 상당한 규모의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제거하였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2002년 알젠틴 정부가 취한 조치보다 큰 규모의 화폐개혁조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화폐개혁조치는 중국 인민폐나 달러와 교환하는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정부는 그들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부를 소유하거나 권력을 향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암시장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은행에 우선적으로 저축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화폐개혁을 이용하여 인민들의 저축을 탈취해간 셈이다. 2006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을 때의 대상품목은 60여개의 사치품들이었으며 이 품목들은 김정일과 그 주위의 공산당 고위관료들만이 사용하는 제품들이었다. 한 학자의 추계에 의하면 김정일이 수입한 에네씨코냑만도 연간 80만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20세기말에도 존재하는 지구상의 절대주의(absolutism) 즉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르크스가 꿈꾼 보다 인간적인 환경하에서의 그리고 불평등이 없는 번영은 레닌과 공산당에 의해 달성되지 못하였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은 레닌과 그의 추종자들이 새로운 상층계급을 형성하는 계급사회를 출현시켰으며 스탈린의 계속된 숙청으로 4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1970년대 크메르루즈 밑에서의 캄보디아,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공산주의는 악순환적인 독재체제로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발생시켰다. 이들 체제가 가진 공통점은 공산주의가 여러 형태의 약탈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제도들은 시장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자산을 약탈(extract)하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정(abhoring)함으로써 번영이 아니라 빈곤을 창출하였다. 소비에트 경제는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곧 흔들리게 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을 맞이하였다. 모택동하의 중국이나 크메르루즈하의 캄보디아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결국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이하였고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공산당의 경제제도들은 "착취적(extractive)인 정치제도"에 의해 유지되어왔다. 이들 정치제도하에서는 권력의 행사에 무한한 재량권을 갖는 공산당의 손에 전부 집중되었던 것이다. 짐바브웨와 시에라레온이 유지해온 착취적 제도와는 형식면에서 공산주의하의 착취적 제도가 다를지라도 국민의 삶에는 유사한 효과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는 경제행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주체 모두에게 경제적 번영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적재산권이 보장되는 사람들만이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의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아스모글루, 로빈슨(2012) p.77)

나) 포용적 성장

최근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자료 "What is Inclusive Growth?"에 의하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기초한 성장(broad-based growth)', '공유하는 성장(shared growth)', 및 '빈곤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 등의 용어와 같이 혼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에 가장 가까운 키워드는 '공유하는 성장(shared growth)'이 아닌가 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제도화할 때 이러한 용어를 통하여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세운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경제학에서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개념자체가 신개념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빈곤(poverty)과 성장(growth)에 대한 분석이 서로 분리되어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의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한 학자들은 OECD개발지원위원회가 제시한 명제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빈곤을 낮추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그 성장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를 자주 인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빈곤을 위한 성장'이 주로 빈곤계층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는데 반해 '포용적 성장'은 노동력의 대부분을 이루는 빈곤계층과 중간계층을 전부 포함하는 계층의 기회를 목표로 한다. OECD 보고서의 각주에서 지적하듯이 "광범위하게 기초한 성장"과 포용적성장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장에 대한 제약요인들을 제거하고 투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속도와 양태를 다같이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보다는 생산적인 고용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한 계층이 절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 즉 소득불균등이 해소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포용적 성장이란 투자여건을 보다 균등하게 설정하고 생산적인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성장의 속도와 경제규모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빈곤의 감소는 성장의 요인들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노동력이 성장과정에 효율적으로 포함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합의점에 이르고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교육과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정책 등이 성장과 빈곤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의 불평등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각국의 자료를 횡단면적으로 분석한 결과만으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단기간의 소득재분배 정책보다는 성장을 제약하는 중점적인 시장왜곡들(market distortions)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큰 승수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장기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경제민주화의 정책제안

가) 경제민주화

1960년대 이후 놀라운 압축 성장을 한 한국경제는 IMF 위기를 기점으로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경제성장을 국가관료제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양극화, 혹은 재벌집중화라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특히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경제대통령을 주장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삶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요구와, 지나친 재벌 집중화가 불러온 경제적 왜곡이 대선과 맞물려 경제민주화 논의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지난 4월11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정당은 각종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가올 12월 대선에서도 최대쟁점으로 부상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18대, 19대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시작하였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라는 점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를 'economic democracy'로 해석한다면 이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economy)이며 경제주체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의 정립과 운용상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과 재계는 제2항은 제1항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조항으로 재벌개혁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나 재벌개혁과는 무관한 용어이며 궁극적으로는 소유의 평등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전체주의로 귀결된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장하준·정승일·이종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말했듯이 국가의 형태에는 민주공화정과 군주제, 전체주의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도 자유시장자본주의와 통제된 자본주의, 복지 자

본주의 등 여러 형태가 잇다. 이 중 박정희 체제는 국가형태는 전체주의면서 경제형태는 통제된 자본주의였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는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이면서 경제형태는 통제된 자본주의 내지는 복지자본주의이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국가형태는 민주주의이면서 경제형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시장 또는 합리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론의 근저에 깔린 진보적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변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인1표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1원1표인 경제적 자본주의의 관계는 늘 팽팽한 긴장과 대립 속에 있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통제된 시장, 통제된 자본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시장을 특히 금융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 한다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으며, 심각한 빈부격차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러한 과제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로 전락해 형식만 남게 되고, 국민의 삶은 실질적으로 시장과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는 '진보적 자유주의'였음을 자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치하에서 절실하게 체험했던 바이다."

문제는 1인-1표의 원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주체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료에 의한 통제'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민주적 통제'는 경제개혁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직접 기업들과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고, 시민단체도 관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는 주체가 있는 통제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작년 시민운동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오던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시민단체는 국민들이, 곧 또다른 형태의, 정치세력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의해 '민주적 통제'는 정당성도 없거니와 실현가능성도 없는 상태이다.

여야정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을 보면 '공평과세와 책임담세', '소상공인 지원', '재벌개혁 또는 해체', '조세정의실현' 등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재벌개혁의 문제이다. 여당은 재벌(기업)과 재벌의 소유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재벌의 해체보다는 '대기업 개혁'이 경제민

주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재벌의 개혁 특히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소유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과 재벌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10년의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보선에 화두가 되었던 무상급식제도의 찬반을 포함한 복지논쟁이 2012년 총선을 전후하여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복지논쟁의 담론이 더욱 넓은 영역인 경제민주화 담론으로 확대되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2012년 12월의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책이슈선점전략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직접적인 배경은 복지논쟁의 종말이 여야 모두에게 복지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현실적 정책과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바스켓의 내용에 따라 재정소요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이제 일반 국민은 무조건적인 분홍빛 복지약속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결국 누가 어떻게 복지부담을 떠앉을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의 담론은 경제민주화로 이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제된 시장, 통제된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필수요소라면 과연 시장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나) 경제민주화와 기회의 평등

이우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여권과 야권이 최근 대선과 맞물려, 경제민주화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기회균등, 과정의 공평,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인 이명박 대통령도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였다. 그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로 공정한 사회를 정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며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 역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여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기회의 평등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엄밀히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시 이우진(2012)의 연구에서는 기회의 평등에 대해 철학적인 의미에서부터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회의 평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 혹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있어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잠재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형성기에 미래의 직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자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서 모든 개인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사회에서 기회는 불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우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들 세대의 학력 불평등 중 16~59%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단 하나의 환경요소의 불평등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관찰되는 소득불평등의 약 2~12%정도가 역시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단 하나의 환경요소의 불평등에 의한 부분이다. 즉 한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호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출세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난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85.4%에 달했다. 그리고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이우진(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모든 복지 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확대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그 외의 다른 불평등이나 비곤(교육, 실업, 건강, 연금)등에는 이보다 약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열망하고 있지만 맹목적인 결과의 평등이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시기하는 방식으로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 부모의 막대한 재력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기존에 갖고 있는 영향력과 기득권을 통하여 수익이 되는 부분은 계열사에게 밀어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하청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 각 정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분석

경제민주화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정확히 논의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 세부내용에도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강하게는 재벌해체로부터 약하게는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한 재벌규제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하지만 크게 재벌집중화 문제, 증세 문제, 일자리 창출과 노동 문제, 물가와 민생관련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출총제나 순환출자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공정위 정비를 통하여 대기업 견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집중을 완화하려 한다. 세금의 경우에도 기존의 지출을 조정하는 것을 일순위로 두고 증세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동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비정규직 노조 강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한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금지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의 경우는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증가시키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종부세를 정비하여 증세를 주장한다. 적극적으로 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최저임금 증가, 기업에 청년 고용의무를 부가함으로써 노동문제에 접근한다.

통진당은 대기업 견제를 민주당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규제법 제정과 30 대기업 분리를 통해 이루려한다. 세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증가시키자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같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증가나 노동자 권리·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법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정당별 경제민주화 및 민생 공약

정당별 경제민주화 및 민생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완화 등에 주력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에 적극적. 산업자본 주식취득한도 현행 9%→4%로 강화	민주통합당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규제법 제정, 비리 기업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분리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제한. 친족·특수관계인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 담합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소비자 집중소송제 도입 등 강력 대응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에 손배소 제기 가능토록 하고, 담합 행위는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강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및 대기업의 중기·골목상권 진입 차단. 재벌 계열사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및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제화. 초과이윤제 도입하고 이윤의 일부는 납품업체 노동자 인건비 및 교육비로 사용. 카드수수료 1%로 동결
기업 경영 투명화	대기업 임원 및 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윤리 헌장 제정 및 시행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독려 등 주주권 확대. 대기업 임원 및 총수 일가 사면 등은 제한	통신·정유업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기업 과세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2%→30%로	법인세 1000억원 이상 현행 22%→30%로
일자리 창출·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정년 60세, 임금피크제 등을 법제화하고, 연장근로한도를 주 10시간 내로 축소.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엔젤펀드 확대	기업에 대해 3% 청년 고용의무 부과 등을 통해 일자리 330만개 창출. 고용형태 따른 차별금지 입법화.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및 간접고용 규제	파견법 폐지, 기간제 남용 규제,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특수고용·돌봄노동자 노동3권 보장, 실질적 지배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등 노동자 권리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 보장하고, 실업급여 수혜기간도 1년으로 연장
주택·물가·민생	특정 지역을 정해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가구 건설. 휴대전화 음성 통화료 20% 인하	연 5%로 상한폭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매년 12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동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는 폐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건설 의무화. 공정임대료제도 및 계약갱신권 도입,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에 임대료 지원 등 저소득 서민계층 주거권 보장 확대

(경향신문, 2012.3.18.)

2. 선행연구

(1) 국내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표학길, 제4의 길을 가야 하는 한국경제, 思想界, 2012)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논쟁과 경제민주화의 역사적배경과 Acemoglu and Robinson의 책 「Why Nations Fail」에서 논의하고 있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의 재해석

(2) 포용적 성장의 정치경제(Khan in OECD(2012))

성장이 높은 수준의 고용과 임금상승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심각한 시장실패들의 사례를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볼 때 성공과 실패가 다같이 존재한다. 포용적 성장정책이 겪는 부분적인 어려움은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정치적인 정서(Political Sentiment)" 또는 "사회적 질서(Social Order)"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인 정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률적으로 강력한 재산권의 보상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양질의 지배

구조전략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이들 개발도상국에서의 개혁전략들은 특정의 시장실패를 특정의 정치적 해결수단에 맡기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개발적 지배구조역량(Developmental Governance Capabilities)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금융정책과 규제정책이 포용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Levine in OECD(2012))

민간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을 고취시키고, 금융제도 전체의 투명성을 진작시키며, 민간 기관들에 대한 유인제도들을 왜곡시키는 정책들을 규제하려는 금융규제기관들은 모두 포용적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의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빈곤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단에게만 여신을 제공하는 정책들은 전부 포용적 성장을 단절 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힘이 강력한 부분에서는 포용적 성장보다는 격리된 성장(Exclusive Growth)을 도모하기 때문에 금융규제정책을 디자인하고 집행하는데 정치경제적인 원인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 개별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과 새로운 복지국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북유럽 경험의 교훈(Sabel in OECD(2012))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보험제도를 줄여나가면서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보다 특정화된 사회보장서비스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사회보장정책의 전환이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공공기관 행정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건부적 현금보상제도(Conditional Cash Transfers)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선진국의 사회보장서비스 가운데 실패한 사례로부터 개발도상국들은 배워나가야한다.

(5) 녹색성장요인과 포용적 성장 (Smulders in OECD(2012))

녹색성장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자원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주요 생산부문과 특정의 소비 부문으로서는 잠재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다. 기술변화는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으나 비용감소의 정도는 지식의 전파와 기술정책에 달려있다. 적절한 비용분담의 규칙과 보편적 정책들이 병행된다면 녹색성장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저소득국

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성장정책은 포용적 성장이기도 하다. 포용적 녹색성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측면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수록되어 있다.

(6) 재정적 민주주의 또는 건전한 재정정책, 예산통제 및 포용적 성장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줄여야만 하는 이유(Steuerle in OECD(2012))

재정적 민주주의(Fiscal Democracy)는 ①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예산적자 ②미래에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정책기능의 약화 ③소비지출에 집중된 예산으로 인한 재정기능의 마비 ④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된 정책들

그 결과 재정민주주의는 쇄락하게 되고 각 세대가 자기 세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정치적 우파나 좌파 다같이 지출삭감이나 증세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7) 경쟁과 혁신주도형 포용적 성장(Dutz, Kessides, O'Connell and Willig in OECD(2012))

71개국의 26000개 제조업체로 구성된 표본으로부터 분석한 결과 제품이나 공정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한 기업이 보다 높은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과 고용증대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주도형 고용증대(Innovation-driven Employment Growth)는 비숙련노동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어 종래의 가설과는 달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금융 및 수출기회 등이 새로 진입하는 기업과 설립연도가 최근인 젊은 기업들에게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어질 때 이러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성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8) 노동시장과 제품시장에서의 구조개혁에 대한 단기효과 분석 (동학적 확률일반균형모형(DSGE))에 의한 분석-Cacciatore M., R. Duval and G. Fiori (2012),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ECO/WKP(2012) 25

이 분석은 기업의 진입과 노동시장 및 제품시장의 동학적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내고 있다. ① 보통 구조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 년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구조개혁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서는 기업의 진입과 고용창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해고효과는 단기에 이루어지므로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감은 증폭된다. ② 대개 모든 개혁조치들이 단기에는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보호조치들이 수반되는 구조개혁조치는 실업을 양산시킬 수 있다. ③ 구재개혁조치들은 디플레이션 효과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정책이 상당한 규모의 이자율하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구조개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9) 구조개혁조치들의 단기효과들에 대한 자기회귀모형(VAR)에 의한 실증분석 - R. Bouis, O. Causa, L. Demmou, R. Duval and A. Zdzienicka (2012),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ECO/WKP(2012) 26 또는 Bouis R. et. al (2012)

이 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OECD 각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을 다루고 있다. 구조개혁의 효과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러한 효과들이 당해국이 가지고 있는 제반 경제여건과 경제제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 구조개혁은 대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업수당제도나 고용보장제도 등의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은 경기불황기보다는 경기호황기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산업별 생산 효율성 분석

1. 확률변경 생산함수에 의한 산업별 효율성 분석

확률변경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는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 기술적 비효율성을 고려한 생산함수를 최우추정량의 개념으로 도출하고 각 개별 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다음은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식이다.

$$Y_{i,t} = \exp(x_{i,t}\beta + V_{i,t} - U_{i,t})$$

* $Y_{i,t}$: i번째 기업의 t기의 생산량
$x_{i,t}$: i번째 기업의 t기의 투입량
β : 미정계수(unknown coefficient)
$V_{i,t}$: i.i.d random error ($U_{i,t}$와는 독립)
$U_{i,t}$: 비음(non-negative) 확률변수 (기술적 비효율성) (truncated at zero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0, and variance, σ^2

이 장에서는 확률변경생산함수에 KIP(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를 이용해 산업별 효율성을 추정하려 한다. KIP database는 KLEMS 형식의 데이터로 실질총산출(Q), 실질자본스톡(K), 실질노동투입(L), 실질에너지투입(E), 실질원재료투입(M), 실질서비스투입(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확률변경생산함수 식을 KLEMS database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ln Q_{i,t} = \beta_0 + \beta_1 \ln K_{i,t} + \beta_2 \ln L_{i,t} + \beta_3 \ln E_{i,t} + \beta_4 \ln M_{i,t} + \beta_5 \ln S_{i,t} + V_{i,t} - U_{i,t}$$

* $i = 1,2,3,\cdots,16$, $t = 1995, 1996, \cdots, 2009$
Q : 실질총산출
K : 실질자본스톡
L : 실질노동투입
E : 실질에너지투입
M : 실질원재료투입
S : 실질서비스투입
β : 미정계수(unknown coefficient)
$V_{i,t}$: i.i.d random error ($U_{i,t}$와는 독립)
$U_{i,t}$: 비음(non-negative) 확률변수 (기술적 비효율성) (truncated at zero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0, and variance, σ^2

KIP database는 1970년부터 이용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FRONTIER 4.1 프로그램의 기능에 맞추어 각 5년간의 효율성은 같다고 가정한다. 즉, 1995~1999, 2000~2004, 2005~2009의 효율성은 같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로 나오는 효율성은 각 산업의 연도별 효율성이라기보다 5년을 대표하는 효율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KIP database는 72개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부표x), 아주 세분화된 산업분류보다 중분류 수준의 산업분류가 본 연구에 목적에 부합하므로 72개의 산업분류를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16개의 산업분류로 재가공하여 사용한다.

다음 표는 72개 산업분류와 16개의 산업분류의 매칭표이다.

〈표 1〉 16개 산업분류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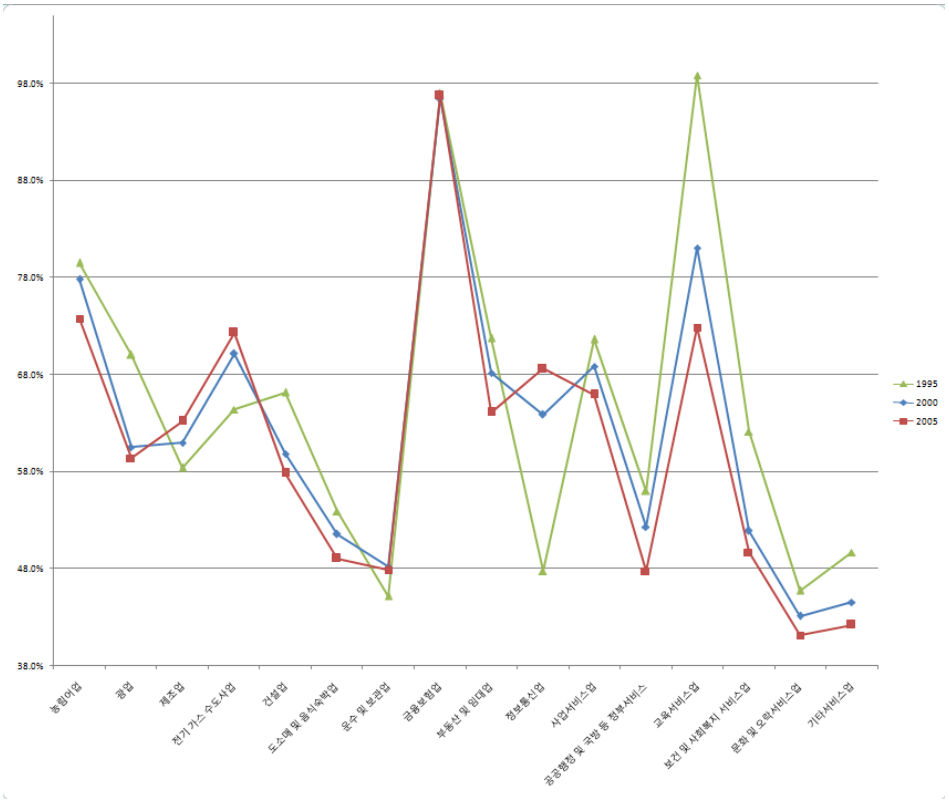
1	농림어업	농업, 임업, 어업
2	광업	석탄광업, 원유 및 가스채굴업, 우라늄 및 토륨광업, 금속광업, 기타광업 및 채석업
3	제조업	음식료품, 담배, 섬유,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가죽 및 신발, 목재, 펄프 및 종이, 출판, 인쇄, 석유정제 및 핵연료, 제약,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절연선, 전기기계, 전자관, 통신장비, 라디오 및 TV, 과학기기, 기타 정밀기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기타제조업
4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전기, 가스, 수도
5	건설업	건설업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자동차 판매 및 수리,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7	운수 및 보관업	내륙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8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9	부동산 및 임대업	자가주택귀속임대, 기타 부동산업, 기계장치임대업
10	정보통신업	통신업
11	사업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법률, 기술 및 광고업, 기타 사업서비스
12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13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
1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15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회원단체, 방송미디어업, 기타오락업
16	기타서비스업	기타서비스, 가사서비스, 국제 및 외국기관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경생산함수와 효율성 추정을 위해 FRONTIER 4.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RONTIER 4.1는 확률변경생산함수에서 최우추정량을 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Coelli, T. J.[1)]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 Center fo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University of New England, Armidale, NSW, 2351 Australia. http://www.une.edu.au/economtrics/cepa.htm

다음은 16개 산업별 효율성을 나타낸 결과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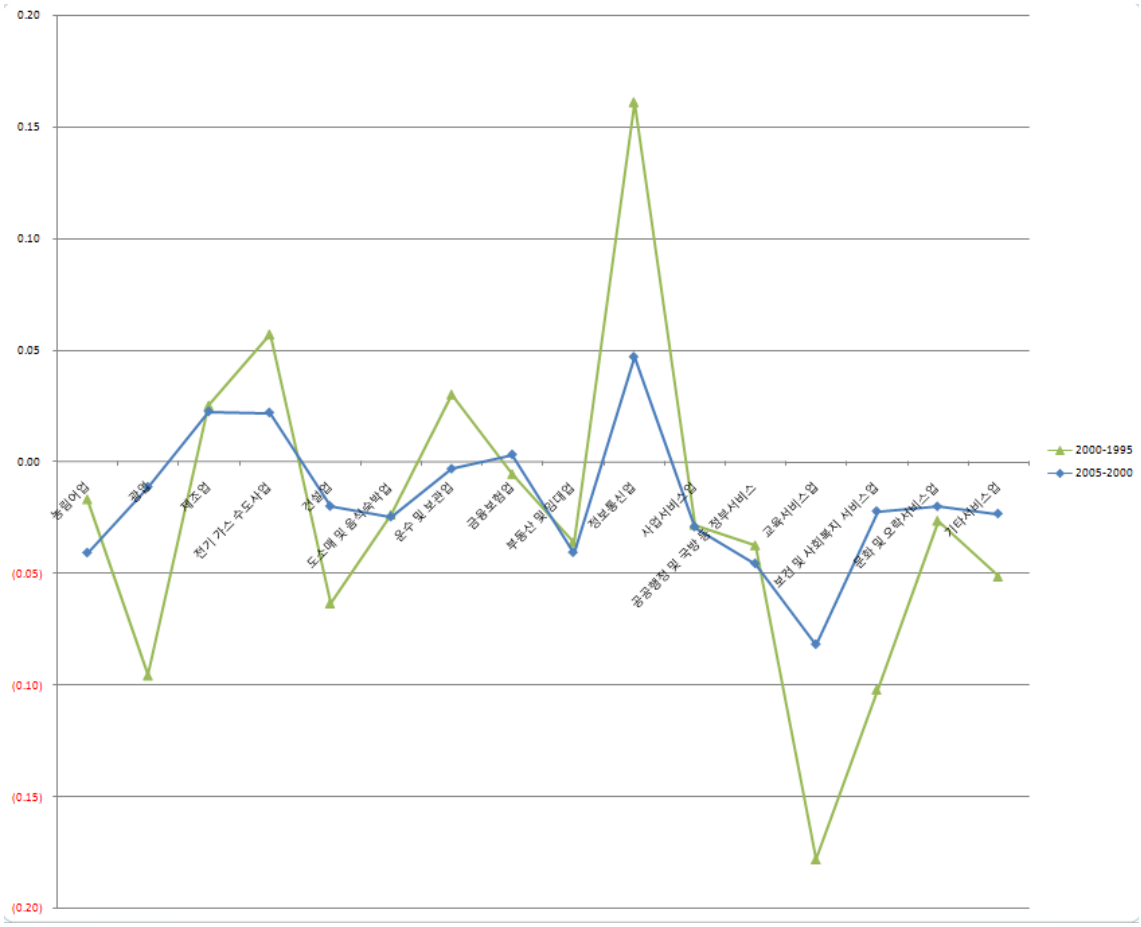
[그림 2] 16개 산업별 효율성



각 산업별로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효율성의 절대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산업별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는 상대비교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한다.

다음 그래프는 위의 〈그림 2〉를 변화량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16개 산업별 효율성 변화량



위 그래프에서 보면 1995이후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효율성이 낮아졌으며 특히, 1995년과 2000년 사이로 넘어오면서 광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

효율성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 가스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이 있는데 그 중 정보통신업에서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정보통신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에 발전이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서비스업, 특히 보건, 교육, 문화 부분의 발전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으며, 농림어업, 광업 분야는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KIP database 72개 산업분류

1	농업	25	기계	49	수상운송업
2	임업	26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50	항공운송업
3	어업	27	절연선	51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4	석탄광업	28	전기기계	52	통신업
5	원유 및 가스채굴업	29	전자관	53	금융업
6	우라늄 및 토륨광업	30	통신장비	54	보험업
7	금속광업	31	라디오 및 TV	55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8	기타광업 및 채석업	32	과학기기	56	자가주택귀속임대
9	음식료품	33	기타 정밀기기	57	기타 부동산업
10	담배	34	자동차	58	기계장치임대업
11	섬유	35	선박	59	컴퓨터 및 관련임대업
1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36	항공기	60	연구개발업
13	가죽 및 신발	37	철도	61	법률, 기술 및 광고업
14	목재	38	기타 제조업	62	기타 사업서비스
15	펄프 및 종이	39	재생용 가공원료	63	공공행정 및 국방
16	출판	40	전기	64	교육서비스
17	인쇄	41	가스	65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8	석유정제 및 핵연료	42	수도	66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19	제약	43	건설업	67	회원단체
20	화학	44	자동차 판매 및 수리	68	방송미디어업
21	고무 및 플라스틱	45	도매업	69	기타오락업
22	비금속광물	46	소매업	70	기타 서비스
23	1차금속	47	숙박업	71	가사서비스
24	조립금속	48	내륙운송업	72	국제 및 외국기관

Ⅳ 경제민주화의 진전과 예상되는 경제효과 분석

- 확률적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경제민주화의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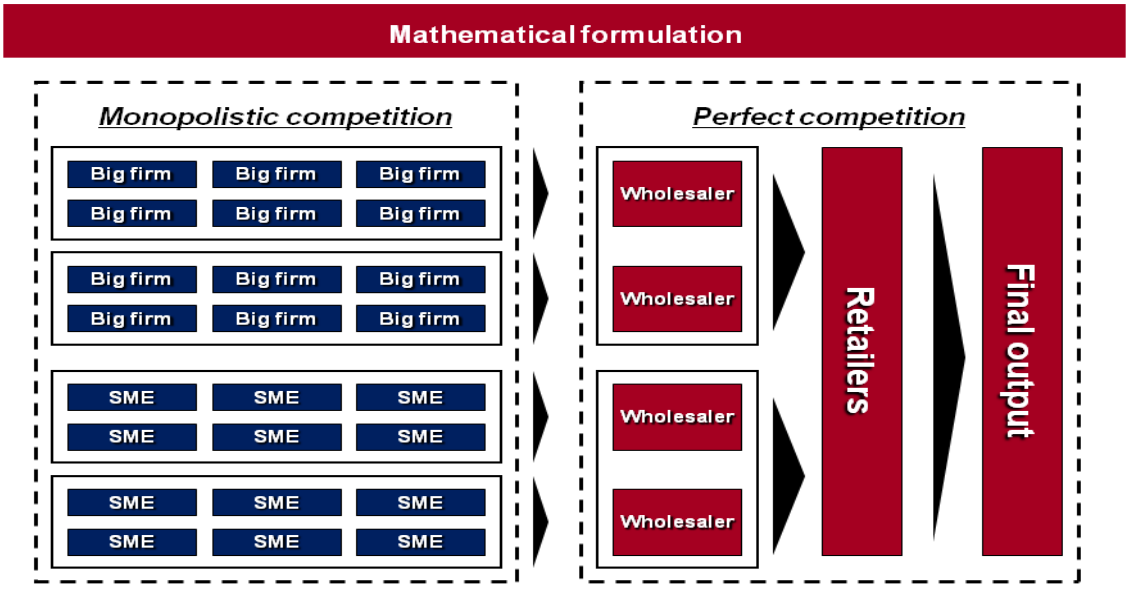
경제민주화관련 정책이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확률적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경제주체로 참여하는 모형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정부를 고려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정책집행을 통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책의 결과로 모형의 계수

를 조정한다고 상정하였다. 여기서 정부가 목적함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가계, 기업의 행동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놓자. 우선 경제주체들의 목적함수와 직면하는 제약을 검토해 보자.

1.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문제

(1) 공급자 측면

거시경제의 공급자로써 기업을 고려한다. 기업은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독점적 경쟁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그 경쟁의 정도는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이 다르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대기업 산출과 중소기업 산출이 종합되어 최종 산출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다루기 위한 수리적 장치로 CES 집계함수를 이용한다.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그 대강을 도식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점적 경쟁 상황에 있는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두고 그 각각의 분야의 생산을 종합하는 CES aggregator로써의 wholesaler를 설정한다. 그리고 각 sector의 wholesaler의 산출을 다시 최종재의 산출로 종합하는 Retailor를 놓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독점적 경쟁 기업이 당면하는 수요함수가 결정되며,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가계에 지급된다고 상정한다.

가) 대기업

대기업의 목적함수와 제약식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은 생산함수와 수요함수가 각각 (2), (3)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가격, 노동고용, 연구개발투자를 선택한다. 여기서 (3)으로 수요함수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 CES aggregation의 결과인데 이 문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에서 보듯이 기업의 목적함수인 기업 가치는 배당금의 기대효용의 현재가치로 정한다. ((4)는 당기 생산성이 전기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양의 함수이도록 설정되어있으나 아직 시뮬레이션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다)

$$\max_{p^B, n^B, rnd^B} E \sum_t \beta^t \frac{a_t}{c_t} d_t^B \tag{1}$$

s.t

$$\begin{aligned} y_t^B &= z_t z_t^B n_t^B && (2) \\ y_t^B &= Y_t \left(\frac{P_t^B}{P_t}\right)^{-\theta} \left(\frac{p_t^B}{P_t^B}\right)^{-\theta_B} && (3) \\ \ln z_t^B &= \rho_B \ln z_{t-1} + \psi_B \ln(1 + rnd_{t-1}^B) + \varepsilon_t^B && (4) \end{aligned}$$

단 ,

$$\begin{aligned} \hat{d}_t^B &= p_t^B y_t^B - w_t b_t^B - \frac{\phi}{2}(n_t^B - n_{t-1}^B)^2 && (5) \\ d_t^B &= \xi \hat{d}_t^B - rnd_t^B && (6) \\ \varepsilon^B &\sim (0, \sigma_B^2) && (7) \end{aligned}$$

(1)에서 β는 할인율이고 a_t, c_t, d_t는 각각 소비의 한계효용에 오는 충격, 소비, 이익잉여금을 나타낸다. 배당금 앞에 곱해지는 $\beta^t \frac{a_t}{c_t}$는 사실 가계의 최적화 문제에서 예산제약식에 들어가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다시 말해 이는 임의의 t 기에 소득1단위의 기대효용과 같다. 생산함수 (2)에서 y_t^B, z_t, z_t^B, n_t^B은 각각 대기업의 생산량, 경제전체의 생산성, 대기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생산성,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 투입으로 놓는다. 대기업이 직면하는 수요함수인 (3)을 보자. 여기서 Y_t, P_t, P_t^B, p_t^B는 각각 경제전체의

최종생산물 산출량, 최종생산물가격, 대기업 생산물의 가격, 개별 대기업 생산물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여기서 θ,θ_B는 각각 대기업, 중소기업간에 경쟁을 나타내는 계수, 그리고 대기업내의 경쟁을 나타내는 계수로 1보다 크게 주어진다. 이 계수가 커질수록 경쟁도가 심화되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 외에 (4)는 생산성에 오는 충격을 AR(1)으로 모형화 한 것이고, (5),(6)은 배당금이 정해지는 식이다. 여기서 ϕ는 노동조정비용을 나타내는 계수이고 w_t는 임금을 나타낸다.

나) 중소기업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최적화 문제도 대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치열한 경쟁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중소기업 경쟁도의 지표인 θ_S을 대기업의 경쟁도 지표인 θ_B 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모형에 반영되었다. 여기에서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부문은 아직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지 않았다.

$$\max_{p^S,n^S} E\sum_t \beta^t \frac{a_t}{c_t} d_t^S \tag{8}$$

s.t

$$y_t^S = z_t z_t^S n_t^S \tag{9}$$

$$y_t^S = Y_t \left(\frac{P_t^S}{P_t}\right)^{-\theta} \left(\frac{p_t^S}{P_t^S}\right)^{-\theta_S} \tag{10}$$

$$\ln z_t^S = \rho_S \ln z_{t-1} + \psi_S \ln(1 + rnd_{t-1}^S) + \varepsilon_t^S \tag{11}$$

단,

$$d_t^S = p_t^S y_t^S - w_t b_t^S - \frac{\phi}{2}(n_t^S - n_{t-1}^S)^2 \tag{12}$$

$$rnd_t^S = \frac{\alpha}{1-\alpha}(1-\xi)\hat{d}_t^B \tag{13}$$

$$\varepsilon^S \sim (0, \sigma_S^2) \tag{14}$$

여기서도 (8)에서 β는 할인율이고 a_t,c_t,d_t는 각각 소비의 한계효용에 오는 충격, 소비, 이익잉여금을 나타낸다. 생산함수 (9)에서 y_t^S,z_t,z_t^S,n_t^S은 각각 중소기업의 생산량, 경제전체의 생산성,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생산성,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

투입으로 놓는다. 개별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수요함수인 (10)을 보자. 여기서 Y_t, P_t, P_t^S, p_t^S는 각각 경제전체의 최종생산물 산출량, 최종생산물가격, 중소기업 생산물의 가격, 개별 중소기업 생산물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여기서 θ_B는 중소기업 내의 경쟁을 나타내는 계수로 1보다 크게 주어진다. 이 계수가 커질수록 경쟁도가 심화되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 외에 (11)은 생산성에 오는 충격을 AR(1)으로 모형화 한 것이고, (12)는 배당금이 정해지는 식이고 (13)은 연구개발 투자를 고려하는 식인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 배당금이 정해지는 식이다. 여기서 ϕ는 노동조정비용을 나타내는 계수이고 w_t는 임금을 나타낸다.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집계

독점적 경쟁상황에 있는 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산출을 종합하여 대기업군의 산출과 중소기업군의 산출을 도출하고 도출된 대기업군의 산출과 중소기업군의 산출을 다시 종합하여 최종재의 산출을 도출하기 위한 수리적 장치로 CES 집계함수가 도입되었다. 우선 대기업군의 산출과 중소기업군의 산출을 종합하여 최종재 산출을 도출하는 집계함수의 최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max_{Y^B, Y^S} P_t Y_t - \left[\alpha P_t^B Y_t^B + (1-\alpha) P_t^S Y_t^S\right] \tag{15}$$

s.t

$$Y_t = (\alpha {Y_t^B}^{\frac{\theta-1}{\theta}} + (1-\alpha){Y_t^S}^{\frac{\theta-1}{\theta}})^{\frac{\theta}{\theta-1}} \tag{16}$$

여기서 α는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아니고 회사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θ는 대기업 산출과 중소기업 산출간 대체가능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쟁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독점적 경쟁이 있는 개별기업들의 산출을 종합하는 집계함수의 최적화 문제를 살펴보자.

$$\max_{\{y_i^k\}_{i\in[0,1]}} P_t^k Y_t^k - \int_0^1 y_{it}^k p_{it}^k di \tag{17}$$

s.t

$$Y_t^k = \left(\int_0^1 y_{it}^{k(\theta_k-1)/\theta_k} di\right)^{\frac{\theta_k}{\theta_k-1}} \tag{18}$$

단, $k \in \{B, S\}$

여기서 변수들의 정의는 전술한 바와 같고 여기서 θ_B, θ_S의 값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의 경쟁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theta_B < \theta_S$ 으로 놓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들보다 더 경쟁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2) 수요자측면(가계)

$$\max_{c,H} E \sum_t \beta^t \left[A_t \ln c_t - \frac{1}{\eta} H_t^\eta\right] \tag{19}$$

s.t

$$w_t H_t + B_{t-1} + D_t = c_t + \frac{B_t}{R_t} \tag{20}$$

where

$$H_t = \alpha n_t^B + (1-\alpha) n_t^S \tag{21}$$

$$D_t = \alpha d_t^B + (1-\alpha) d_t^S \tag{22}$$

가계는 기대효용의 현재가치를 극대화 하는 경제주체이고 가계의 예산제약에 직면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의 기대효용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노동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가계 수입의 원천은 채권, 배당수익, 그리고 노동에 따른 임금수입으로 정의하고 그 합이 가계의 예산제약으로 볼 수 있다. 가계의 노동공급은 대기업에 대한 노동공급과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의 합으로 볼 수 있고 배당수익도 마찬가지로 계산된다. 위 식에서 H_t, B_t, D_t, R_t는 각각 노동, 채권, 배당수익, 그리고 이자수준을 나타낸다.

2. 정부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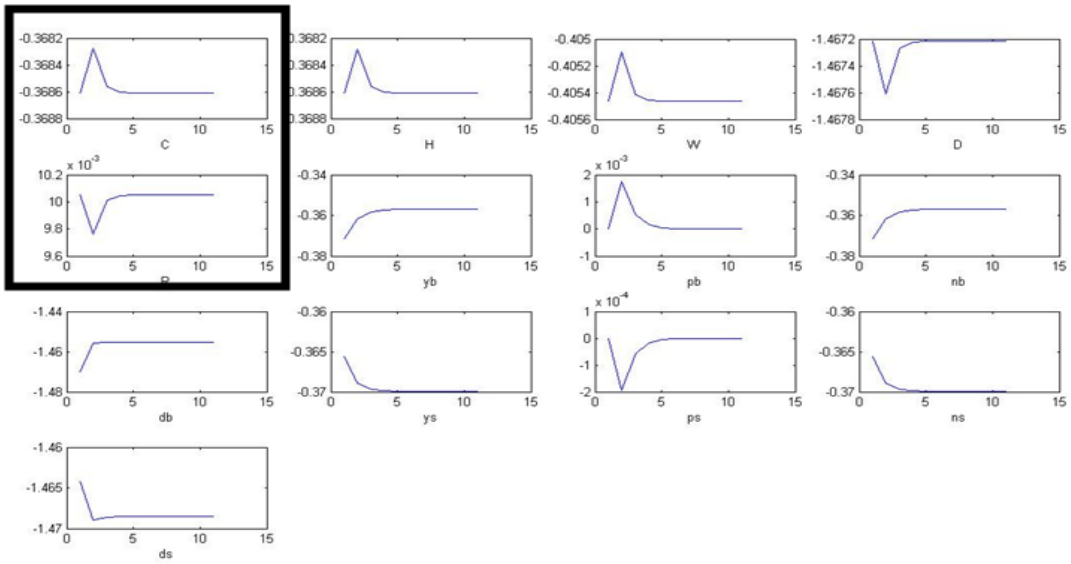
향후 분석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정책이 어떤 계수(parameter)를 변화시킬 때 잠재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 작용 경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예컨대 (6)에서 계수인 ξ를 1보다 작게 할 때, 다시 말해 대기업 이윤의 일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로 배분 시킬 때의 생산량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경제민주화정책의 개별정책을 살펴보고 각 정책이 구체적으로 모형의 계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 i)가능한 경제 정책들을 분석하여 각 정책이 모형의 계수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움직이게 될지를 분석한 후 ii) 정책 실행 이전과 이후에 경제의 균제상태가 어떤 경로로 변화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iii)정책실행 이후와 이전과 이후에 경제의 충격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해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계수들의 변화가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는지 논의해 보자. 이를 위해 i)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정책들이 보다 명료해지면 각 정책안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계수들과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3. 정책효과분석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대강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3개의 간단한 scenario를 상정하고 균제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뮬레이션했다. 세가지 시나리오는 i) 대기업의 외연확장을 규제할 때, ii)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경우 iii)노동조정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1) 대기업 외연확장을 규제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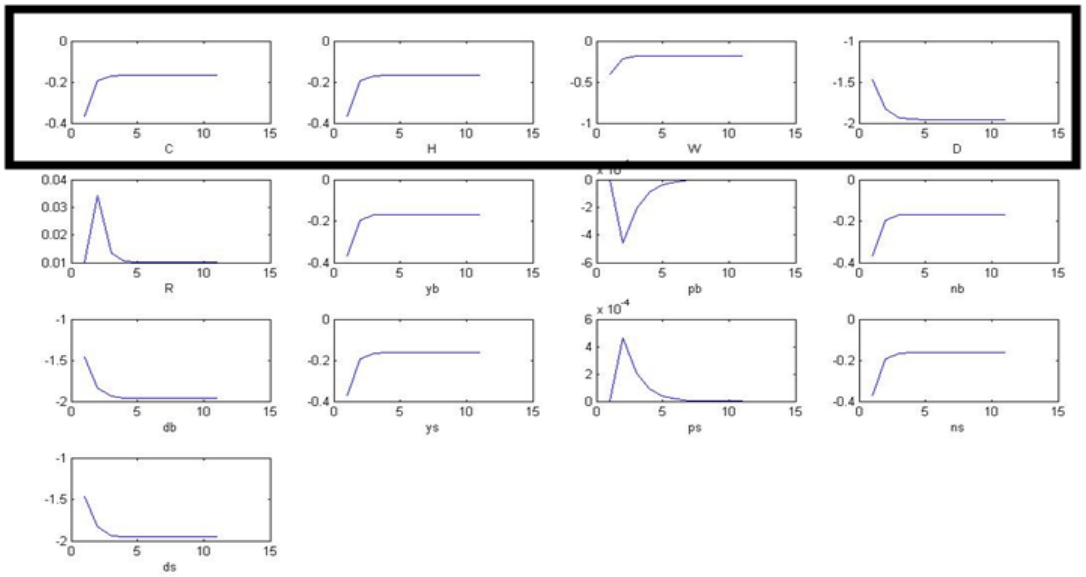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α)이 작아지는 경우에 경제전체의 균제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simulation해보자면 그림과 같다. 여기서 C는 가계의 소비, 다시 말해 경제의 총생산과 같은 값이고, H는 노동투입, W는 임금, D는 배당금 총액, R은 이자율, yb, ys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생산, pb, ps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출물 가격, nb, ns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db와 ds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배당금이다. 우선 대기업의 수를 줄이는 경우와 동치인 scenario인 본 분석에서 이러한 방식의 정책이 총생산에 장기적인 효과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보면 그 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주목할 사실은 하이라이트한 배당부분이다. 배당이 높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높다는 것인데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면 대기업의 배당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정책집행 이후 남아있는 대기업은 보다 독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5개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에서 임의로 정부가 기업의 수를 3개 기업으로 줄이도록 강제하면 남아있는 기업은 보다 독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직관과 일치한다.

(2)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쟁이 증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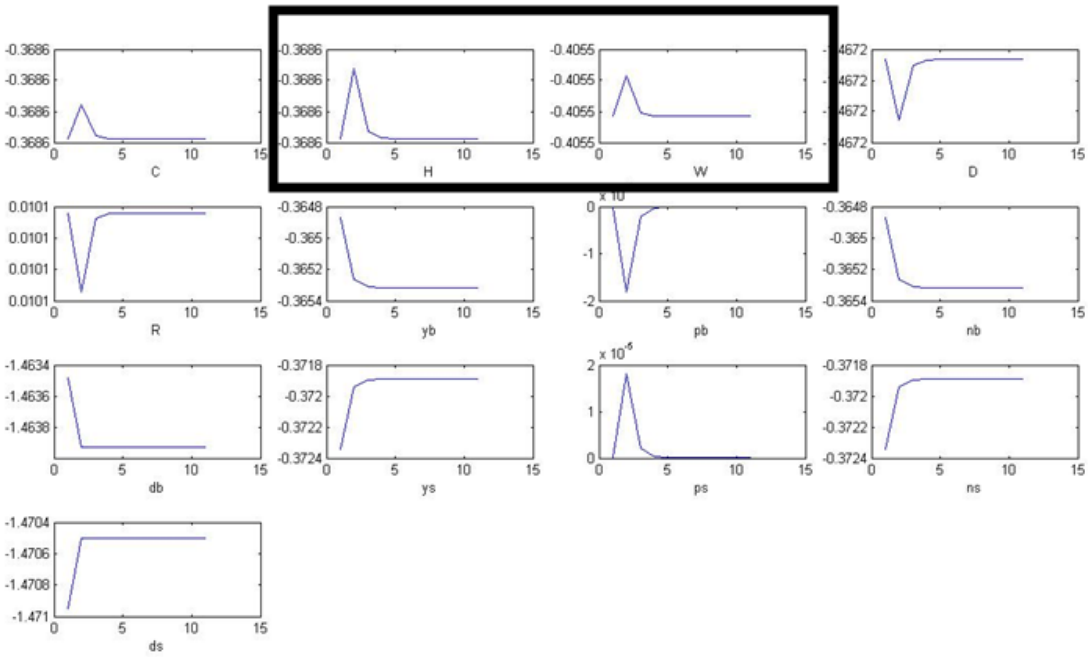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집단 간 경쟁(θ)이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하이라이트한 부분에서 보면 생산, 고용, 임금 모두 더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계의 배당소득이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경쟁의 증가로 기업의 이윤수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가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임금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약하자면 경쟁의 증가는 생산과 고용 모두를 높은 수준에 고정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해석은 향후 충격반응 분석과 더불어 하도록 한다.

(3) 노동조정비용이 작아지는 경우

이 연구에서 노동조정비용(ψ)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값이 커지면 노동량을 변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자. 우선 단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정비용이 감소한 것이 기업의 고용의사결정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석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 변화량의 폭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 또한 단기적인데 그치고 있어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어떻게 변화양상이 달라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할 부분이다.



Ⅴ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에 대한 전망

참 고 문 헌

김기석, 강일국, “1950년대 한국 교육”,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 연구소 Working Paper 2012-03, 2012

박현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의 제단계와 그 구조적 특징”, 변형윤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한울

안병직,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 사상문예운동 겨울호, 풀빛

이대근,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붙여”, 창작과 비평 57호

이우진, “경제민주화와 기회의 평등”, 2012

장하준, “정승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2012

표학길, “제4의 길을 가야 하는 한국경제”, 思想界, 2012

표학길, 정선영, 조정삼, “한국의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한국경제의 분석, 2007

표학길, 〈세계자본주의체제와 한국경제〉, 경제논집 제 30권 제 3호, 1991년 6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표학길,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종속-CMEA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1988

표학길, 국제무역론, 제3판, 무역경영사, 2009

표학길, “IMF 독립평가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국제세미나 ‘외환위기 당시 IMF 정책평가 : 한국을 중심으로’의 발표문”, 한국경제연구원-IMF 독립평가국 공동주최, 2003

표학길, 김동구, 박재환, “녹색성장회계와 구조분해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6권 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및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9년 12월 11일),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Crown Business, New York, 2012

Aghion, P., N. Bloom, R. Blundell, R. Griffith, and P. Howitt (2005)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 inverted-u relationship”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2).

Aghion, P., and P. Howitt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Econometric Society 60(2) (March):323-51.

Alesina, A. and R. Perotti (1996)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

Alesina, A. and D. Rodrik (1994) "Distributive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109.

Amin, S. "Unequal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1998, Andrew Nurnberg Associates, London, England

Barro, R. 2000.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Birdsall N. and J. Londono (1997) "Asset Inequality Matters: An Assessment of the World Bank'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 87(2), pp 32-37.

Bourguignon, F. (2003) "The Growth Elasticity of Poverty Reduction; Explaining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and Time Periods." In Inequality and Growth: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ed. T. Eicher and S. Turnovsky. Cambridge, MA: MIT Press.

David C. Kang, "Crony Capitalism: Corruption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2-13

Deininger, K., and L. Squire (1996)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 pp. 565–91.

DFID (2004) "What is Pro-Poor Growth and Why Do We Need to Know?", Pro-Poor Growth Briefing Note 1,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Deininger, K., and L. Squire (1996)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 pp. 565–91.

Deininger, K., and L. Squire (1998)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pp. 259-287.

Dollar, D. and A. Kraay (2002)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7, pp. 195–225.

Easterly, W. (1999) "Life during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Forbes, K. (2000)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

Hausmann, R., Rodrik D., and A. Velasco (2005) Growth Diagnostics. Mimeo, Harvard Kennedy School. Cambridge.

Hausmann, R., J. Hwang, and D. Rodrik (2007) "What you export matter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1).

Imbs, J. and R. Wacziarg (2003) "Stages of Diversifi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pp. 63-86.

Kraay, A. (2004) "When Is Growth Pro-Poor? Cross-Country Evidence." IMF Working Paper 4-4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Kwack S.Y. and Y.S. Lee,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 Economic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Facing Globalization in a High-Tech Skill World, Korea Development Istitute, 2007

Li H. and H. Zhou (1998) "Income Inequality is not Harmful for Growth: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3).

Lopez, H. (2004a). "Pro Growth, Pro Poor: Is There a Trade Off?" Working Paper WPS3378, World Bank. Washington, DC.

Lopez, H. (2004b). "Pro-Poor Growth: A Review of What We Know (and of What We Don't)" Mimeo. World Bank.

Lopez, H. and L. Servén (2004). "The Mechanics of Growth-Poverty-Inequality Relationship." Mimeo, World Bank.

McCulloch N. and B. Baulch (1999) "Tracking pro-poor growth." ID21 insights No. 31.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Minami, R. : The Turning Point i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Experience, Economic Research series No. 14,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Tokyo, Kinokuniya co., 1973

OECD, Economic Surveys, Paris, 2010

OECD(2012), Promoting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kuno-Fujiwara, M., A. Postlewaite and J. Roberts, "Oligopoly and Competition in Large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70, 22-31, 1980

Okuno-Fujiwara, M., "Interdependence of Industries, Coordination Failure and Strategic Promotion of an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5, 25-43, 1998

Pyo, Hak K., "Estimates of Returns to Schooling and Retirement Motives of Private Savings

in Korea: Discussion Paper, Center for Economic Institutions, Hitotsubashi University, Tokyo, 2012

Pyo, Hak K. and Kwang-Hee Nam, "Estimation of Cross-national Rates of Return and the Test of Convergence Hypothesis", Research Report,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98

Pyo, Hak K., "Korea's Economic Achievements and Prospects", Korea's Economy 2008, Korea Economic Institute, Washington D.C., 2008

Pyo, Hak K.,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 Issues and Perspectives, Korea's Economy 2009, Korea Economic Institute, Washington D.C., 2009

Pyo, Hak K.,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 under the New International Order", Korea's Economy 2012, Korea Economic Institute, Washington D.C., 2012

Pyo, Hak K., "Economic Growth in Korea(1911-1999) : A Long-Term Trend and Perspective",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ume 14, Number 1, 2001

Pyo, Hak K., "A Dynamic Long-term Profile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1910-2010)", Discussion Paper, Center for Economic Institutions, Hitotsubashi University, (2012 forthcoming)

Pyo, Hak K., "The Transitio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n Development",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Transaction Periodical Consortium, 1993

Pyo, Hak K., "Excess Competition, Moral Hazard, and Industrial Trauma in Korea(1997-1998)", Private Capital Flow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Aftermath of the Asian Crisis, edited by U. Dadush, D.Dasgupta, and M. Uzan, Edward Elgar Publishing, 2000

Pyo Hak K., 'Excess Competition, Moral Hazard, and Industrial Trauma in Korea (1997-1998)', Private Capital Flow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Aftermath of the Asian Crisis, edited by U. Dadush, D.Dasgupta, and M. Uzan in association with the World Bank, Edward Elgar Publishing, 2000

Pyo Hak K.,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and the 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 in Korea', 2004,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17, No.1

Ravallion, M.,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Looking Beyond Averages", World Development 29(11), pp 1803-1815., 2001

Ravallion, M. and S. Chen, "Measuring pro-poor growth." Economics Letters 78, pp. 93-99., 2003

Ravallion, M. and S. Chen, "What Can New Survey Data Tell Us about Recent Changes in Distribution and Poverty?"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2)., 1997

Romer, P.,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990

Saez, Emmanuel and Michael R. Veall, "The Evolution of High Incomes in Northern America: Lessons from Canadian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5(3), 831-49

Sida, Integrated Economic Analysis for Pro-poor Growth: A Methodological Approach. Method Document. Stockholm: Sida., 2006

White H. and E. Anderson, "Growth vs. Redistribution: Does the Pattern of Growth Matter?" Development Policy Review 19(3), pp 167-289., 200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Washington DC: World Bank., 1990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World Bank,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World Bank, Mongolia: Sources of Growth Report No. 39009-MN,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World Bank, What Are the Constraints to Inclusive Growth in Zambia? Report No. 44286-ZM, Washington DC: World Bank., 2008

World Bank,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2008

16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5

한국응용경제학회

유항근 중앙대학교 교수 외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5

유항근 외

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함.

- 특히 정치권이 선도하여 향후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음.

- 따라서 향후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는 데 있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함.

-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변수를 하나의 '경제민주화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모색.

- 잠재성장률 관련 모형에 '경제민주화 지수'를 설명변수로 명시적으로 도입한 후 경제민주화 지수의 값의 변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수행.
- 경제민주화가 실질성장률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 효과에 관한 계량분석

-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사이의 관계 분석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

- Kurzman et al.(2002): 106개국의 1951-1980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장기효과와 단기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민주화가 결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화는 약간이나마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Przeworski and Limongi(1993) 및 Barro(1994)는 민주주의가 비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 Minier(1998)는 민주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민주화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됨. 평균적으로 통제변수들을 통제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성장률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구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혼재되어 있음.

- Rodrik(1999)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노동의 분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Acemoglu and Robinson(2006)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소득재분배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Sala-i-Martin(2005)은 횡단면 국가자료를 이용하여 총정부지출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민주주의 국가나 비민주주의국가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 분석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여 산업화 시대인 19세기까지 보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우월하였다는 보여주고 있음. 예로서 미국은 중남미국가보다 경제적 성과가 우월하였으며, 영국이나 프랑스가 러시아나 헝가리보다 경제적 성과가 우월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음.

본 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특히 사전적 경제민주화와 사후적 경제민주화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립하였음.
- 경제민주화 개념을 기초로 경제민주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민주화 정도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지표를 개별지표와 종합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현실에서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민주화 종합지표를 '경제민주화 지수'로 측정하여 1983년 이후 현재까지 기간 동안 제시하고 있음.
-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분석함.

Ⅱ 경제민주화지수의 정의

1. 경제민주화의 개념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tization)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하여 경제정의(economic justice)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됨.

○ 경제정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전적으로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완화시켜야 될 것임.

경제의 시장창달 능력 확충을 통한 경제민주화

○ 이는 시장가격기구가 작동하기 전에 적용되는 사전적 경제민주화(ex-ante economic democratization)로서 경제적 기회의 공평성(equal opportunity)과 시장제도의 확립을 기초로 함.

- 재산권이 확립되고, 계약제도가 확립되며 법·질서가 준수되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확립되고 노동시장의 차별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사전적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임.

경제력집중 완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 이는 시장가격기구가 작동한 후에 적용되는 사후적 경제민주화(ex-post economic democratization)로서 시장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 발생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간 경제력집중이 완화되고,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집중이 완화되는 것이 사후적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임.

2. 분야별 경제민주화 지표

사전적 경제민주화 지표

○ 기업 분야 경제민주화 지표

- 기업 분야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지배-소유구조 관계에 기초하여 지배와 소유의 괴리가 작을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측정 가능함.

- 기업 분야 경제민주화를 나타내는 지표(*EDI*-firm)는 두 가지 유형으로 측정 가능함.

① 첫째는 기업집단(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피라미드 지배승수로 측정 가능함.

- 특정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승수는 재벌총수(또는 재벌총수 일가)의 보유 주식가치 대비 해당 기업집단의 주식 가치의 배수로 측정됨.

$$\text{피라미드 지배승수} = \frac{\text{총자산}}{\text{대주주지분} \times \text{자본금}}$$

- 피라미드 지배승수는 1보다 큰 실수 값을 갖게 되고 큰 값을 가질수록 대주주가 소수의 보유주식으로 전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역수를 경제민주화 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역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함.

$$EDI\text{-firm} = \frac{1}{\text{피라미드 지배승수}}$$

- 현재 황인학(2001)이 1989-1999년 기간 동안 30대 재벌과 9대 재벌의 평균 피라미드 승수를 추정한 것이 있고, 최근 자료는 없음.

[표 2-1] 우리나라 재벌의 피라미드 지배승수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30대 재벌 평균	46.3	50.9	81.6	89.1	136.4	183.3
9대 재벌 평균	49.3	55.0	84.0	113.0	150.5	191.5

자료: 황인학(2001),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② 둘째는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나타내는 지배-소유간 괴리도(control-ownership disparity)를 기업의 경제적 민주화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음.

- 특정기업에 대한 소유권은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지배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의미함.

- 특정기업에 대한 지배권(control rights)은 의결권 또는 통제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지배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의미함.

- 특정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소유간 괴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측정됨.

지배-소유간 괴리도 = 소유권 - 지배권

- 특정기업에 대한 지배-소유간 괴리도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0에 가까울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1에서 지배-소유간 괴리도를 차감한 것을 경제민주화 지표(*EDI*-firm)로 설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EDI*-firm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함.

$$EDI\text{-firm} = 1 - (\text{지배-소유간 괴리도})$$

○ 노동 분야 경제민주화 지표

- 노동 분야 경제민주화를 나타내는 지표(*EDI*-labor)는 노동시장의 차별에 근거하여 측정할 수 있음.

-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의 차이와 노동생산성 차이의 격차가 작을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예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보다 실질임금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노동시장의 차별이 커지고 경제민주화가 저해되는 것을 의미함.

- 단지 노동생산성의 측정단위와 실질임금의 측정단위가 상이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비율)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비율)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노동 분야 경제민주화 지표(*EDI*-labor)는 다음과 같이 측정됨.

$$EDI\text{-labor} = 1 - \left[\frac{\text{정규직실질임금}}{\text{비정규직실질임금}} - \frac{\text{정규직노동생산성}}{\text{비정규직노동생산성}}\right]$$

-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모두 정확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면 노동시장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EDI*-labor는 1의 값을 갖게 될 것임.

- 따라서 *EDI*-labor는 0과 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노동시장의 차별이 줄어들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나타냄.

사후적 경제민주화 지표

○ 소득분배 분야 경제민주화 지표

-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소득분배는 경제전체의 총체적인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니계수(G)가 있음.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내고, 1이 완전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냄.
- 따라서 소득분배 지표(EDI-income)는 (1-G)로 정의됨.

$$EDI\text{-income} = 1-G$$

○ 지역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지표

- 지역경제력 격차지표(EDI-grdp)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GRDP의 집중도지수를 이용하여 측정됨.

$$EDI\text{-grdp} = 1 - \text{GRDP의 집중도지수}$$

- EDI-grdp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GRDP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경제의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함.

○ 산업분야 경제민주화 지표

- 산업분야 경제민주화를 나타내는 지표(EDI-industry)는 산업 평균집중도지수(CR: Concentration Ratio)를 이용하여 정의됨.
- 산업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경제력집중이 심한 것을 나타내므로, 산업분야 경제민주화 지표(EDI-industry)는 다음과 같이 측정됨.

$$EDI\text{-industry} = 1 - CR$$

- *EDI*-industry는 0과 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산업집중도가 떨어지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나타냄.

○ 조세분야 경제민주화 지표

- 조세분야 경제민주화를 나타내는 지표(*EDI*-tax)는 소득세 집중도 지수(*KPS*지수)를 이용하여 정의됨.
- *KPS*지수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갖고, 소득세가 역진적인 경우 1보다 큰 값을 갖고, 소득세가 누진적인 경우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됨.
- 통상 소득세는 누진적이므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0에 가까울수록 누진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비례적(덜 누진적)인 것을 나타냄.
- 따라서 조세분야 경제민주화 지표(*EDI*-tax)는 다음과 같이 측정됨.

$$EDI\text{-tax} = 1 - KSP$$

- *EDI*-tax는 0과 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세가 누진적이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나타냄.

3. 경제민주화 종합지표

- 분야별 경제민주화 지수는 각 분야의 경제민주화 정도를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경제민주화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 한편 우리 사회전체의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를 종합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종합지표이다.
- 무슨 이유에서든지 경제구조가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면, 즉,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 앞에서 살펴 본 사전적 경제민주화 관련지표는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원인들에 관한 것이며 사후적 경제민주화 관련지표들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의 원인과 관련된 지표보다는 경제민주화의 결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 GRDP 지니계수, KPS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경제민주화 종합지표 - EDI1, EDI2, EDI3 - 를 정의한다.
(※ 사전적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기업 분야 경제민주화 지표(*EDI*-firm)와 노동 분야 경제민주화지표(*EDI*-labor)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시계열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DI1

우선 지니계수, GRDP 지니계수, KPS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EDI1을 경제민주화 지수로 정의할 수 있다.

EDI1= 1-(소득지니계수 + GRDP지니계수 +KPS)/3

경제민주화 (종합)지표는 일종의 indicator function이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되, 1에 가까울수록(즉 더 큰 값을 가질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정의하였다. 같은 weight를 가정하고, 1에서 세 개의 집중도 지수를 평균값을 차감한 것이다.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경제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민주화지수는 집중도지수가 갖추어야 할 성질을 만족한다.
Scale irrelevance
Symmetry
Rank preserving equalization을 만족한다.

EDI2

두 번째 경제민주화지수를 정의하기 위하여 (1분위소득/ 5분위소득)의 비율이 1에 가까우면 민주화가 잘된 것으로 보고 (1분위 GRDP/ 5분위 GRDP)의 비율이 1에 가까우면 민주화가 잘된 것으로 보고 (1분위세금/ 5분위세금)의 비율이 0에 가까우면 민주화가 잘된 것으로 보자.

다음과 같은 경제민주화지수를 정의할 수 있다.

$$EDI2 = \left(\frac{1}{3}\right)\left[\frac{Lower\ \ 20\%\ \ \text{Income}}{Upper\ \ 20\%\ \ \text{Income}} + \frac{Lower\ \ 20\%\ \ of\ \ \text{GRDP}}{Upper\ \ 20\%\ \ of\ \ \text{GRDP}} + \left(1 - \frac{Lower\ \ 20\%\ \ \text{Tax}}{Upper\ \ 20\%\ \ \text{Tax}}\right)\right]$$

EDI3

세 번째 경제민주화지수를 정의하기 위하여 (하위50%소득/상위50%소득)의 비율이 1에 가까우면 민주화가 잘된 것으로 보고 (하위 50% GRDP/상위50% GRDP)이 1에 가까우면 민주화가 잘된 것으로 보고 (하위 50%세금/ 상위50%세금) 비율이 0에 가까우면 민주화가 잘된 것으로 보자.

다음과 같은 민주화지수를 정의할 수 있다.

$$EDI3 = \left(\frac{1}{3}\right)\left[\frac{Lower\ \ 50\%\ \ \text{Income}}{Upper\ \ 50\%\ \ \text{Income}} + \frac{Lower\ \ 50\%\ \ of\ \ \text{GRDP}}{Upper\ \ 50\%\ \ of\ \ \text{GRDP}} + \left(1 - \frac{Lower\ \ 50\%\ \ \text{Tax}}{Upper\ \ 50\%\ \ \text{Tax}}\right)\right]$$

-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original 분포함수 (Lorenz Curve)를 근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유항근 (2011)과 부록 B을 보기 바란다.

Ⅲ 장기추세 관계분석

- 본 연구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형평성의 증진으로 생각함.
- 이를 위해 소득집중도, 지역간 소득집중도, 조세집중도, 산업집중도 등을 고려함.
- 이러한 집중도들과 잠재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 사이의 장기적 관계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각 연도별 경제 성장률에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잠재성장률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장기적 추세와 연관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는 경우 적절하게 설정된 구간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여 구간을 결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인

Pettitt 검정을 수행하기로 함. 원래의 Pettitt 검정은 하나의 구조변환 시점을 잡는 것이지만 이를 축차적으로 적용하여 여러 개의 구조변환 시점을 결정함.

- Pettitt 검정은 X1 ~ XT가 r 에서 전환되는가, 즉 X1 ~ Xr은 F1(X)의 확률밀도를 갖고 Xr+1 ~ XT는 F2(X)의 확률 밀도를 갖는지의 여부를 검정함 ($1 \leq r \leq (T-1)$).

검정통계량: $KT = \max \mid \sum_{i=1} \sum_{j=r+1} Dij \mid$

여기에서 $Dij = sgn(Xi-Xj)$

$Xi > Xj \Rightarrow sgn(Xi-Xj) = 1$

$Xi = Xj \Rightarrow sgn(Xi-Xj) = 0$

$Xi < Xj \Rightarrow sgn(Xi-Xj) = -1$

- $T \rightarrow \infty$인 경우의 limiting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얻은 검정통계량은 $Pr = 2\exp\{-(6KT2)/(T3+T2)\}$ 이며 1-Pr 이 r이 변환점일 확률을 나타냄.

이 개념을 이용한 다구간 Pettitt 검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다구간 Pettitt 검정)

(1) 1~T 기간의 변환점을 Pettitt 검정에 의해 찾는다.

(2) 위 검정의 결과 r1이 변환점으로 얻어진 경우 (r1+1)~T 기간을 대상으로 변환점이 있는지 Pettitt 검정을 한다. (i) 변환점이 없는 경우는 (r1+1)~T 기간을 하나의 소구간으로 고려한다. (ii) r2에서 변환점이 있는 경우 (r2+1)~T 기간을 대상으로 또 다른 변환점이 있는지 검정한다. 변환점이 없다면 (r2+1)~T가 가장 최근 시점을 포함하는 소구간이 된다. 만일 또 다른 변환점이 있다면 변환점이 없을 때까지 검정을 계속하여 더 이상 변환점이 없는 경우가 r*에서 얻어졌다면 (r*+1)~T가 가장 최근 시점을 포함하는 소구간이 된다.

(3) (i)의 경우 1~r1, (ii)의 경우 1~r*를 대상으로 위 (2)의 검정을 계속하여 가장 최근 시점부터의 소구간을 결정한다.

전체 표본기간을 n 개의 소구간으로 나눈 경우 i번째 소구간에서 Xt들의 평균을 μ i 라 하자 (i = 1,2, …, n), 이 경우 구조적 전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정의: 구조적 전환)

(1) μ i가 모두 다르다.

(2) 전체 표본기간을 통하여 Xt-μ i가 안정적이다 즉, (Xt-μ i)~ I(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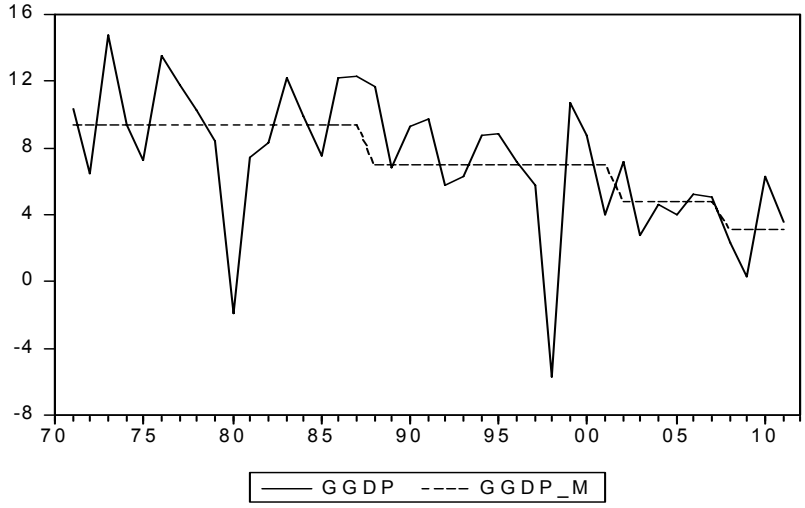
- 1971-2011 실질GDP성장률을 대상으로 한 Pettitt 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간	검정 기간	전환점	전환확률	결정구간	평균 성장률
IV III	2002 - 2011	2008	0.58	2008 - 2011 2002 - 2007	3.12% 4.81%
(III')	1971 - 2011 1992 - 2011	1991 2002	1.00 0.92	2002 - 2011	4.14%
II	1971 - 2001	1988	0.90	1988 - 2001	7.00%
I	1971 - 1987	없음	-	1971 - 1987	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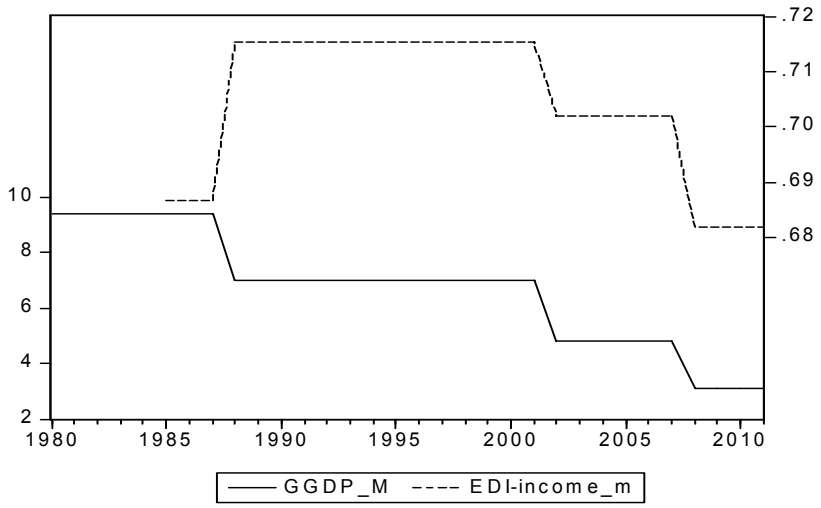
* 구간 III'은 연간자료를 이용한 검정으로 결정된 것이며 구간 III'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검정한 결과 구간 III 및 IV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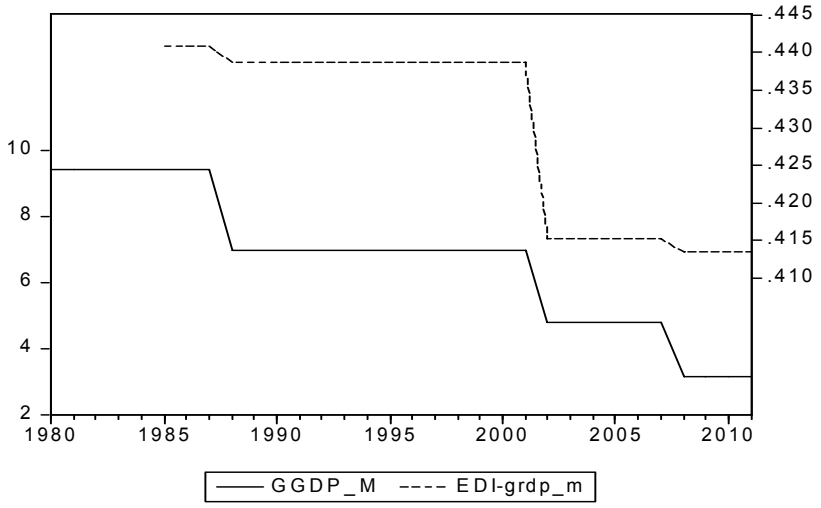
- dev = ggdp-m으로 정의함. dev에 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ADF 검정의 결과 t = -6.28 (1% = -3.60), PP 검정의 결과 t = -6.28 (1% = -3.60) NP 검정의 결과 MPT = 1.22 (1% =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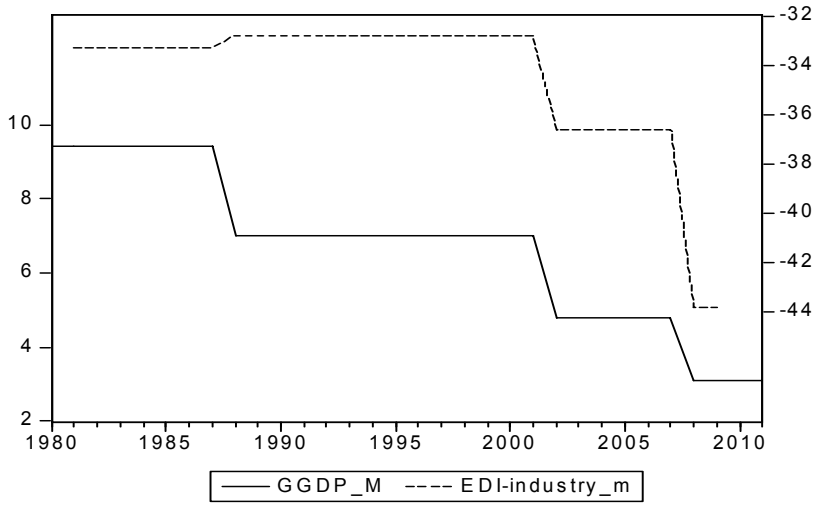
검정결과는 구간설정이 적정하다는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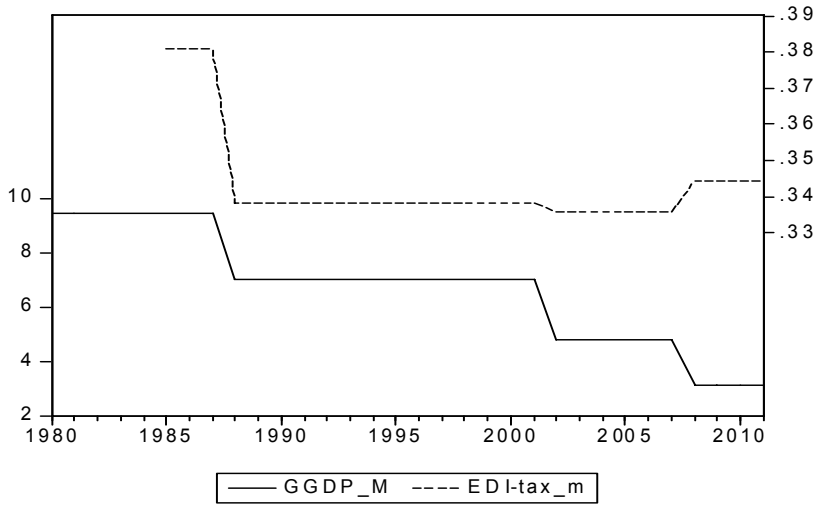


경제민주화 관련 다른 변수들의 구간평균과 실질 GDP 성장률의 구간평균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72
.71
.70
.69
.68
10
8
6
4
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GGDP_M
EDI-income_m


.445
.440
.435
.430
.425
.420
.415
.410
10
8
6
4
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GGDP_M
EDI-grdp_m


-32
-34
-36
-38
-40
-42
-44
10
8
6
4
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GGDP_M
EDI-industry_m



- 잠재성장률과 경제민주화 관련 지표들 사이의 장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97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실질 GDP 성장률에 관한 다구간 Pettitt 검정을 수행하여 결정된 구간평균, GGDP_m을 비교하였음.

경제민주화관련 지표로 소득 Gini 계수, 16개 시도별 일인당 실질 GRDP의 1계 모멘트를 이용하여 구한 지역소득 Gini 계수, 소득세 집중도를 나타내는 KSP 지수, 광공업 상위 50개 기업의 단순집중도를 이용하였음. 경제민주화 지표는 1에서 이들 각각의 값을 차감한 숫자인 EDI-income_m, EDI-grdp_m, EDI-tax_m, EDI-industry_m으로 정의하여 각 지표별로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음.

GGDP_m과 EDI-grdp_m 사이에는 모든 구간에 대해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며 GGDP_m과 EDI-income_m 및 GGDP_m과 EDI-industry_m 사이에는 1988~2001 구간만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며 GGDP_m과 EDI-tax_m 사이에는 2008~2011 기간만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는 경제민주화의 후퇴와 같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냄.

Ⅳ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의 상관관계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는 1985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세 지표 중 어느 지표를 사용하여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50대재벌집중도를 1에서 뺀 값을 나타내는 EDI_Industry 역시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는 Polity IV 지표로[1] 측정되는 정치민주화와는 매우 유의적인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임.

- 단, EDI_Industry는 Polity IV 지표로 측정되는 정치민주화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EDI1~EDI3의 구간별 평균과 Polity IV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정치민주화는 발전한 반면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퇴보하였음을 명확히 볼 수 있음.

[표 4-1] 경제민주화지표와 정치민주화지표의 쌍별 상관관계 (1985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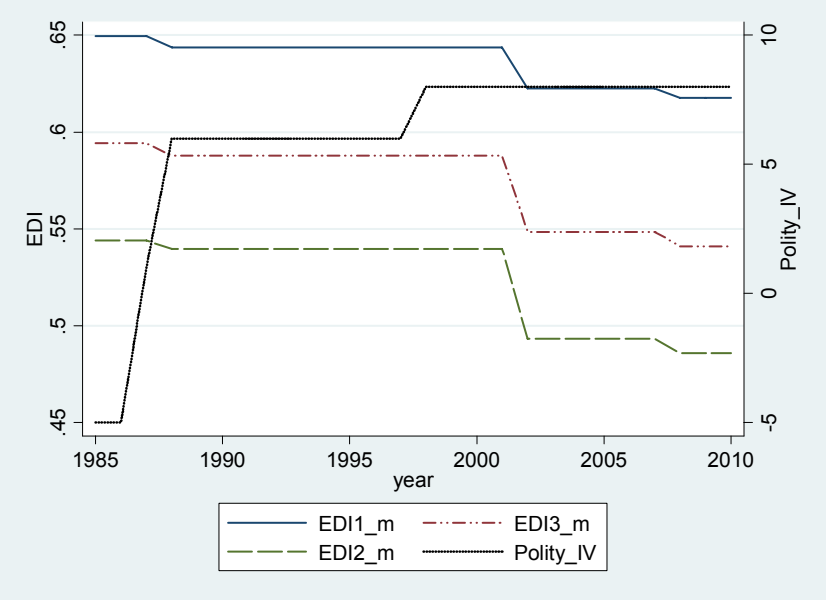
	EDI1	EDI2	EDI3	1-CR50	Polity IV
EDI1	1.0000				
EDI2	0.9889***	1.0000			
EDI3	0.9960***	0.9982***	1.0000		
EDI-Industry ǂ	0.8161***	0.8053***	0.8117***	1.0000	
Polity IV	-0.5121***	-0.4660**	-0.4847**	-0.2333	1.0000

*significant at 10%,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ǂ EDI-Industry는 50대 재벌 집중도를 1에서 뺀 값을 나타냄

EDI-Industry의 구간별 평균인 EDI-Industry_m은 1987년을 전후한 기간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정치민주화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음. 즉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발전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재벌집중도는 심화되어 왔음

1) Polity IV는 정치학에서 정치민주화의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임

[그림 4-1] 구간평균으로 본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의 추이비교



[그림 4-2] 구간평균으로 본 EDI-Industry_m와 정치민주화 추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음.

- 한국은 Huntington교수의 Two Turnover Test에 의하여 같은 헌법하에서 두 번의 정권교체 (김대중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가 이루어져 Freedom House에 보고 된 정치민주주의 지수는 대단히 높게 나옴.

-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으로 소득, 기업, 조세의 집중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민주화는 후퇴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외생적 충격의 결과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이지, 정치민주화의 발전이 경제민주화 후퇴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국사회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같은 기간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퇴보하였음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Robert Dahl (1985)의 우려가 한국사회에서 명백한 패턴으로 관찰됨

이 결과는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할 뿐 이 결과를 놓고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간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함

V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률 및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1.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률 및 관련변수와의 쌍별 상관관계(Pairwise Correlation)

[표 5-1] 실질GDP, 총요소생산성, 고용 및 자본의 성장률과 경제민주화지표의 상관관계 (1985년~2010년)

	Growth Rate of				
	Real GDP	TFP(1) †	TFP(2) ‡	Employed	Capital Stock
EDI1	0.4899**	-0.0594	-0.1507	0.4573**	0.8222***
EDI2	0.4962***	-0.0652	-0.1287	0.4514**	0.8470***
EDI3	0.4947**	-0.0619	-0.1365	0.4542**	0.8375***
EDI-Industry⁑	0.5829***	0.1422	0.0978	0.4990***	0.7313***

*significant at 10%,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 EDI-Industry는 50대 재벌 집중도를 1에서 뺀 값을 나타냄
† TFP(1)은 제VII장 식(4)에서 경제민주화 정도의 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추정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임
‡ TFP(2)는 제VII장 식(4)에서 경제민주화 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임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와 EDI-Industry는 실질GDP 성장률과 유의성이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와 EDI-Industry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과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할 때 경제민주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때나 반영항 때나 이 결과는 차이가 없음

EDI-Industry_m은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할 때 경제민주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때나 반영항 때나 이 결과는 차이가 없음.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와 EDI-Industry는 고용 성장률과 유의성이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

세 가지 경제민주화지표 EDI1~EDI3와 EDI-Industry는 자본 성장률과 유의성이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상관계수의 크기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경제민주화가 성숙하고 재벌집중도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이 결과는 상관관계이지 인관관계가 아니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단순회귀분석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성장효과 추정

실질GDP성장률과 경제민주화 사이의 관계

[표 5-2] 실질GDP 성장률과 경제민주화지표의 관계 (1985년~2010년)

	Dependent Variable: Growth Rate of Real GDP			
	(1)	(2)	(3)	(4)
EDI1	0.8558**			
EDI2		0.4384**		
EDI3			0.4962**	
EDI_Industry				0.4694***
D1998 ‡	-0.1160***	-0.1158***	-0.1158***	-0.1167***
D2008 ‡	-0.0264	-0.0283	-0.0274	-0.0067
constant	-0.4746**	-0.1593*	-0.2148*	-0.2299**
$\widehat{R}^2$	0.5095	0.5181	0.5153	0.5940
N	26	26	26	26

*significant at 10%,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 D1998과 D2008은 각각 1998년과 2008년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실질GDP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에서도 경제민주화 지표들이 (EDI1~EDI3, EDI_Industry) 모두 실질GDP성장률과 강력한 정의 상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회귀방정식에는 다른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 값의 크기 자체는 의미가 없음

고용증가율과 경제민주화 사이의 관계

[표 5-3] 고용성장률과 경제민주화지표의 관계 (1985년~2010년)

	Dependent Variable: Growth Rate of Real GDP			
	(1)	(2)	(3)	(4)
EDI1	0.4166**			
EDI2		0.2037**		
EDI3			0.2345**	
EDI_Industry				0.2123***
D1998 ǂ	-0.0777***	-0.0779***	-0.0778***	-0.0756***
D2008 ǂ	-0.0067	-0.0081	-0.0075	-0.0043
constant	-0.2422**	-0.0836*	-0.1117**	-0.1155***
$\widehat{R}^2$	0.6693	0.6663	0.6677	0.6733
N	26	26	26	29

*significant at 10%,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ǂ D1998과 D2008은 각각 1998년과 2008년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고용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에서도 경제민주화 지표들이 (EDI1~EDI3, EDI_Industry) 모두 고용성장률과 강력한 정의 상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회귀방정식 역시 다른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 값의 크기 자체는 의미가 없음

자본축적률과 경제민주화 사이의 관계

[표 5-4] 자본축적률과 경제민주화지표의 관계 (1985년~2010년)

	Dependent Variable: Growth Rate of Real GDP			
	(1)	(2)	(3)	(4)
EDI1	2.3016***			
EDI2		1.1760***		
EDI3			1.3300**	
EDI-Industry				0.7765***
D1998 ǂ	-0.0072	-0.0066	-0.0068	-0.0180
D2008 ǂ	-0.0189	-0.0135	0.0161	0.0309
constant	-1.3851***	-0.5353***	-0.6836***	-0.4182***
$\widehat{R}^2$	0.6404	0.6838	0.6673	0.4767
N	26	26	26	29

*significant at 10%, **significant at 5%, ***significant at 1%
ǂ D1998과 D2008은 각각 1998년과 2008년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자본축적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에서도 경제민주화 지표들이 (EDI1~EDI3, EDI_Industry) 모두 실질GDP성장률과 강력한 정의 상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회귀방정식에도 다른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 값의 크기 자체는 의미가 없음

Ⅵ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 단기 분석 (VAR)

경제 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에 관련한 주요 변수와 함께 경제민주화 지수를 포함하여 VAR 분석을 하였음.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변수로는 기업 집중도(CR), 지역간 격차(CV), 지니 계수(Gini), 소득세 누진성(KPS)을 고려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산출한 경제민주화 지수 EDI1, EDI2, EDI3를 VAR 분석에서 사용함. 경제성장에 관련한 주요 변수로는 자본스톡 증가율, 고용 증가율, 경상 수지, 한-미 이자율 스프레드, 자본금융 수지를 고려함.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VAR 모형이 사용됨.

$$X_t = \mu + B_1 X_{t-1} + B_2 X_{t-2} + ... + B_k X_{t-k} + u_t$$

모형에서 μ는 절편 계수, $(B_1, B_2, ..., B_k)$는 VAR 계수 행렬이며, u_t는 오차임.

기본 VAR 모형 (모형 1)에서 X_t는 경제성장률(GRGDP), 고용 증가율(GEMP), 자본스톡 증가율(DKSTOCK) 세 개의 변수로 구성됨. 모형 2는 경제성장률, 고용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과 함께 경상 수지(BOP), 한-미 이자율 스프레드(SPREAD), 자본금융 수지(CFA)를 포함한 여섯 개의 변수로 구성됨. 경제 민주화 분석 모형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 고려한 여섯 개의 경제 변수와 함께 경제 민주화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기업 집중도(CR), 지역간 격차(CV), 지니 계수(Gini), 소득세 누진성(KPS), 그리고 이들로부터 산출한 경제민주화 지수 EDI1, EDI2, EDI3를 순차적으로 모형에 포함.

VAR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간은 1970년~2011년에서 변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간의 연간 주기 자료를 사용함.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로 구하였으며, 이자율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 1년 만기 이자율에서 미국 재무성 증권 1년 만기 수익률의 차이로 정의함. 이들 자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시스템에서 얻음. 경제 민주화 변수로 사용된 기업 집중도(CR)는 1981년~2009년, 지역간 격차(CV)는 1985년~2010년, 소득세 누진성(KPS)은 1982년~2011년, 지니 계수(Gini)는 1970년~2010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음. 따라서 경제민주화 지수의 분석 기간은 1985년~2010년임.

1. 추정 결과

[표 6-1]은 VAR 모형 1, 모형 2, 그리고 경제민주화 모형(모형 3)을 추정한 결과를 보임. VAR 모형의 적정 시차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에 의해 1로 선택되었음.

경제민주화 변수를 포함한 모형 3을 추정한 결과, 경제성장률을 설명하는데 경제민주화 변수로 전기의 기업 집중도와 지역간 격차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 [표 6-1]에서 보인 VAR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전기의 기업 집중도는 경제성장률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전기의 지역간 격차와 경제성장률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됨. 분석 기간 경제성장률은 하향 추이를 보이며 이는 기업 집중도의 증가와 지역간 격차의 심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임. 전기의 지니 계수와 경제 성장률은 부(-)의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전기의 소득세 누진성은 경제 성장률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유의하지 않음. 이들 경제민주화 변수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지수 EDI1, EDI2, EDI3는 경제성장률과 정(+)의 관계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6-1]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VAR 추정

	모형 1	모형 2	모형 3	결정계수
경제성장률(-1)	0.127246 (0.25248) [0.50398]	0.728529 (0.47086) [1.54722]	0.594951 (0.4404) [1.35094]	
고용 증가율(-1)	0.234697 (0.49198) [0.47705]	-1.31353 (1.01571) [-1.29321]	-2.0058 (0.92614) [-2.16576]	
자본스톡 증가율(-1)	0.067947 (0.08332) [0.81548]	0.565217 (0.27409) [2.06213]	-0.41879 (0.64186) [-0.65247]	
BOP(-1)		-1.81E-06 (3.80E-06) [-0.48172]	-8.26E-06 (4.20E-06) [-1.95956]	
CFA(-1)		-3.16E-06 (3.60E-06) [-0.86790]	-7.04E-06 (3.80E-06) [-1.84020]	
SPREAD(-1)		-0.00049 (0.00384) [-0.12631]	-0.01101 (0.00474) [-2.32562]	
경제 집중도(-1)			-0.00553 (0.00307) [-1.80527]	0.554765

지역간 격차(-1)			-0.04198 (0.02063) [-2.03504]	0.569756
지니 계수(-1)			-0.42147 (0.51914) [-0.81186]	0.474078
KPS(-1)			0.148633 (0.58074) [0.25594]	0.453356
EDI1(-1)			1.092634 (1.05781) [1.03292]	0.487427
EDI2(-1)			0.772817 (0.60922) [1.26854]	0.504162
EDI3(-1)			0.771365 (0.6557) [1.17639]	0.497344
C	0.051227 (0.01486) [3.44705]	-0.01624 (0.02392) [-0.67882]	-19.845 (43.8103) [-0.45298]	
R-squared	0.089882	0.450968	0.814921	
Adj. R-squared	0.011872	0.245082	0.514168	
Akaike AIC	-3.44546	-3.75728	-4.13668	
Schwarz SC	-3.27484	-3.41169	-3.44238	

2. 충격반응분석

경제민주화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분석으로 측정함. [그림 6-1]에서는 모형 2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의 충격에 대한 경제성장률의 반응을 보여줌. 자본스톡 증가율의 충격에 대하여 경제성장률은 정(+)의 반응을 나타냄. 그리고 경상 수지의 충격에 경제성장률은 정(+)의 반응을 나타냄. 하지만 고용 증가율, 이자율 스프레드, 자본금융 수지에 대한 경제성장률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음.

[그림 6-2]는 경제민주화 변수와 경제성장률의 충격반응분석을 보임. 경제민주화 변수로 고려한 기업 집중도의 충격에 대하여 경제성장률은 부(-)의 반응을 나타냄. 또한 지역간 격차의 충격에 대하여 경제성장률은 부(-)의 반응을 나타냄. 따라서 기업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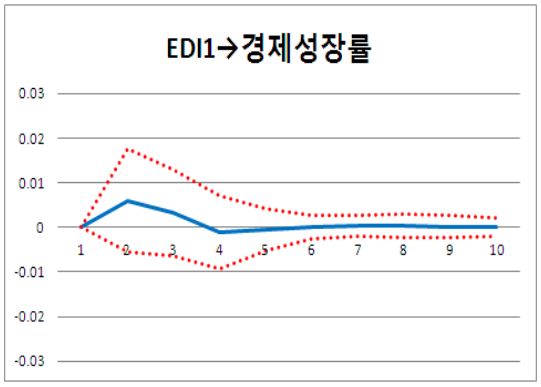
도와 지역간 격차는 경제 성장에 대하여 부의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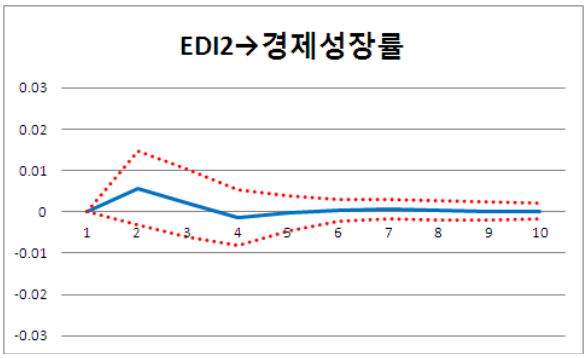
지니 계수의 충격에 대하여 경제성장률은 부(-)의 반응을 보이다가 정(+)의 반응을 보이지만 이들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소득세 누진성(KPS)의 충격에 대하여 경제성장률은 정(+)의 반응을 보이다가 부(-)의 반응으로 전환하는데 유의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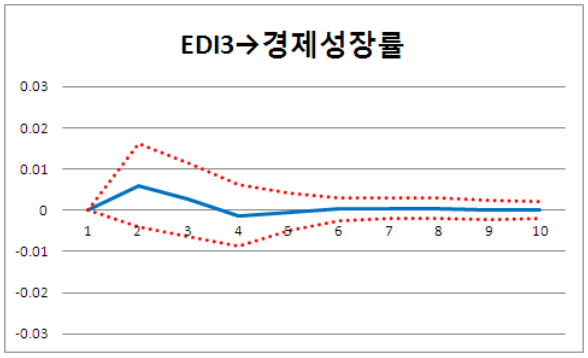
경제 민주화 지수 (EDI1, EDI2, EDI3)의 충격에는 경제성장률은 세 지수에 공통적으로 정(+)의 반응을 나타냄. 하지만 이들 지수의 충격반응분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따라서 경제 민주화는 기업 집중도와 지역 격차의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결과를 보이며 지니 계수, 소득세 누진성의 측면에서는 경제성장과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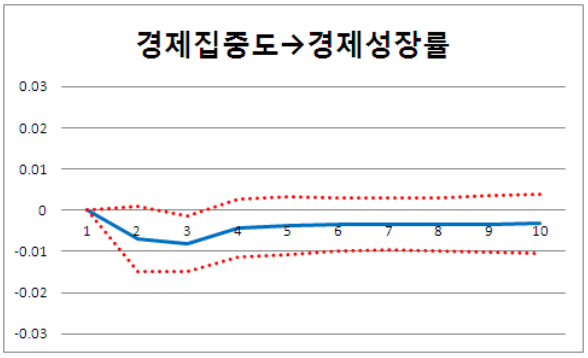
[그림 6-1] 충격반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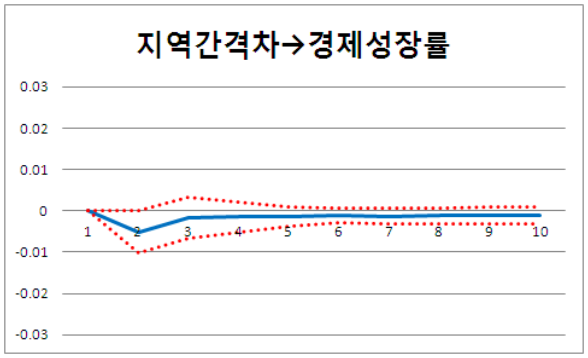
[그림 6-2]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충격반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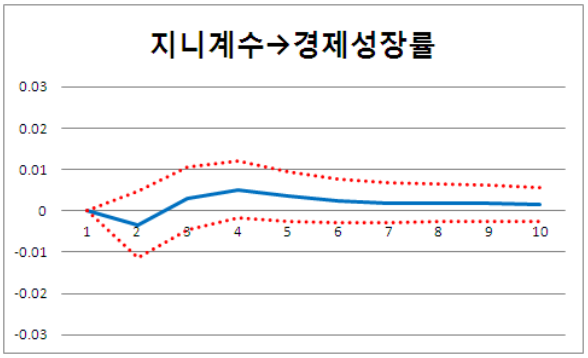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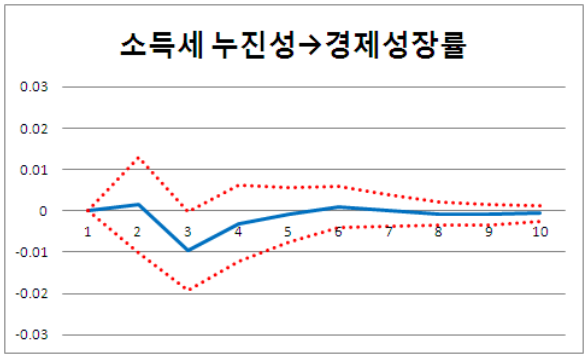












3. 인과관계 검정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변수와 경제성장률의 선-후행 관계를 분석함.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변수 x_t가 변수 y_t를 선행하는지를 검정하고자 다음 모형을 사용함.

$$y_t = \mu + \sum_{i=1}^{k} \beta_i y_{t-i} + \sum_{i=1}^{k} \gamma_i x_{t-i} + u_t$$

검정에서 귀무가설 $H_0 : \gamma_1 = \gamma_2 = ... = \gamma_k = 0$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함. 여기서는 F 검정 통계량으로 분석함.

[표 6-2]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경제 집중도 → 경제성장률): 경제 집중도는 경제성장률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간 격차 → 경제성장률): 지역간 격차는 경제성장률을 선도함. (KPS → 경제성장률): 소득세 누진성(KPS)은 경제성장률을 선도함. 따라서 경제민주화 변수로 고려한 기업 집중도, 지역간 격차는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니 계수는 인과관계 검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경제민주화 지수 EDI1, EDI2, EDI3 역시 경제성장을 선행함에 충분한 유의성을 보이지 않음.

이상에서 경제 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에 관련한 주요 변수와 함께 경제민주화 지수를 포함하여 VAR 분석을 하였음. 경제민주화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분석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으로 측정하였음.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변수로는 경제 집중도(CR), 지역간 격차(CV), 지니 계수(Gini), 소득세 누진성(KPS)을 고려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산출한 경제민주화 지수 EDI1, EDI2, EDI3를 VAR 분석에서 사용한 결과, 단기적으로 경제 집중도의 증가와 기업 집중도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지니 계수와 소득세 누진성의 경우 경제 성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경제민주화 지수 역시 이들 여러 변수들로 구성된 점에 비추어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도출하지 않았음.

[표 6-2]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인과관계검정

(x_t, y_t)	F-statistic	P-Value
고용증가율, 경제성장률	0.30189	0.5860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0.82202	0.3705
자본스톡증가율, 경제성장률	0.69655	0.4094
경제성장률, 자본스톡증가율**	7.00686	0.0120
BOP, 경제성장률	0.13673	0.7143
경제성장률, BOP	1.57826	0.2194
CFA, 경제성장률	0.11112	0.7414
경제성장률, CFA	1.07903	0.3078
스프레드, 경제성장률	1.27277	0.2720
경제성장률, 스프레드***	10.707	0.0036
기업집중도, 경제성장률*	3.98859	0.0568
경제성장률, 기업집중도	0.33230	0.5695
지역격차, 경제성장률**	4.45179	0.0465
경제성장률, 지역격차*	3.50924	0.0744
지니계수, 경제성장률	1.28376	0.2647
경제성장률, 지니계수	0.53972	0.4673
KPS, 경제성장률***	7.86654	0.0094
경제성장률, KPS	0.17246	0.6813
EDI1, 경제성장률	2.34086	0.1403
경제성장률, EDI1	2.17348	0.1546
EDI2, 경제성장률	1.84841	0.1877
경제성장률, EDI2	2.26843	0.1463
EDI3, 경제성장률	2.02567	0.1687
경제성장률, EDI3	2.21131	0.1512

주: 1% 유의함(***), 5% 유의함(**), 10% 유의함(*)

[표 6-3]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인과관계검정

	경제 성장률	TFP	gTFP	고용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BOP	CFA	이자율 스프레드	기업 집중도	지역격차	지니계수	KPS	EDI1	EDI2	EDI3
경제 성장률		10.3814 (0.0027)	0.00581 (0.9396)	0.30189 (0.5860)	0.69655 (0.4094)	0.13673 (0.7143)	0.11112 (0.7414)	1.27277 (0.272)	3.98859 (0.0568)	4.45179 (0.0465)	1.28376 (0.2647)	7.86654 (0.0094)	2.34086 (0.1403)	1.84841 (0.1877)	2.02567 (0.1687)
TFP	2.15887 (0.1504)		0.20298 (0.6550)	5.57246 (0.0238)	14.6708 (0.0005)	5.07241 (0.0326)	6.05214 (0.0206)	2.07027 (0.1657)	7.07006 (0.0135)	1.92739 (0.1789)	0.00488 (0.9447)	0.09164 (0.7646)	2.72669 (0.1129)	1.71081 (0.2044)	2.02860 (0.1684)
gTFP	0.17209 (0.6807)	0.63391 (0.4311)		1.33746 (0.2551)	1.89632 (0.1770)	0.00377 (0.9515)	0.01210 (0.9132)	0.82461 (0.3746)	0.22296 (0.6409)	0.74550 (0.3972)	0.08080 (0.7778)	0.84996 (0.3654)	0.85686 (0.3647)	0.87683 (0.3592)	0.87072 (0.3609)
고용 증가율	0.82202 (0.3705)	3.68988 (0.0627)	0.85011 (0.3627)		10.1360 (0.0030)	0.56647 (0.4579)	0.40025 (0.5321)	14.4351 (0.0010)	0.56647 (0.4579)	0.40025 (0.5321)	0.00231 (0.9619)	0.01553 (0.9018)	0.48396 (0.4939)	0.60873 (0.4436)	0.53793 (0.4710)
자본스톡 증가율	7.00686 (0.012)	0.40706 (0.5275)	0.83518 (0.3669)	4.19803 (0.0478)		8.24325 (0.0079)	9.01846 (0.0057)	14.5607 (0.0011)	0.00023 (0.9879)	2.24353 (0.1484)	0.24861 (0.6211)	0.41847 (0.5236)	2.04305 (0.1670)	2.11559 (0.1599)	2.05073 (0.1662)
BOP	1.57826 (0.2194)	8.26012 (0.0078)	0.79061 (0.3818)	1.29043 (0.2656)	1.54732 (0.2242)		1.80143 (0.1903)	7.30150 (0.0133)	0.04989 (0.8251)	0.23498 (0.6326)	0.14943 (0.7021)	0.16273 (0.6900)	0.01749 (0.8960)	0.64893 (0.4291)	0.14274 (0.7092)
CFA	1.07903 (0.3078)	8.39419 (0.0074)	0.60253 (0.4444)	1.44875 (0.2388)	1.31777 (0.2611)	1.15749 (0.2912)		5.95951 (0.0236)	0.02566 (0.8740)	0.53739 (0.4713)	0.09466 (0.7607)	0.19078 (0.6659)	0.00109 (0.9739)	1.04613 (0.3175)	0.28835 (0.5967)
이자율 스프레드	10.707 (0.0036)	1.88505 (0.1850)	0.85465 (0.3663)	0.04650 (0.8313)	0.38824 (0.5403)	1.06649 (0.3135)	1.53930 (0.2284)		0.09762 (0.7581)	2.87468 (0.1055)	2.87468 (0.1055)	0.35668 (0.5567)	2.53017 (0.1274)	0.89554 (0.3553)	1.47239 (0.23910)
기업집중도	0.3323 (0.5695)	0.81185 (0.3762)	0.00345 (0.9536)	1.29043 (0.2656)	4.90151 (0.0362)	3.68628 (0.0663)	3.65971 (0.0673)	3.77934 (0.0668)		3.26046 (0.0853)	5.55964 (0.0265)	1.7E-05 (0.9967)	9.62981 (0.0054)	7.54215 (0.0121)	8.24816 (0.0091)
지역격차	3.50924 (0.0744)	9.53285 (0.0054)	0.00637 (0.9371)	1.44875 (0.2388)	2.46081 (0.1310)	4.17287 (0.0532)	5.74568 (0.0255)	0.23860 (0.6305)	2.94245 (0.1010)		2.72354 (0.1131)	0.06969 (0.7942)	4.69547 (0.0413)	1.78121 (0.1956)	2.84086 (0.1060)
지니계수	0.53972 (0.4673)	1.25738 (0.2694)	0.28436 (0.5971)	0.48155 (0.4922)	0.00712 (0.9332)	0.00477 (0.9454)	8.4E-05 (0.9928)	0.23860 (0.6305)	2.73059 (0.1109)	1.99774 (0.1715)		1.71451 (0.2023)	1.30059 (0.2664)	3.30724 (0.0826)	2.35019 (0.1395)
KPS	0.17246 (0.6813)	0.56415 (0.4596)	4.32497 (0.0480)	0.83224 (0.3700)	0.41285 (0.5264)	0.54952 (0.4652)	0.50453 (0.4838)	0.62951 (0.4364)	2.16123 (0.1545)	0.98791 (0.3311)	0.10695 (0.7464)		0.00232 (0.9620)	0.25627 (0.6177)	0.05303 (0.8200)
EDI1	2.17348 (0.1546)	3.22957 (0.0861)	0.02518 (0.8754)	0.40243 (0.5324)	0.33132 (0.5707)	3.52292 (0.0739)	4.64438 (0.0424)	4.62701 (0.0439)	0.10634 (0.7476)	0.05414 (0.8182)	2.72819 (0.1128)	0.24749 (0.6238)		1.61263 (0.2174)	2.44066 (0.1325)
EDI2	2.26843 (0.1463)	5.28474 (0.0314)	0.14861 (0.7036)	0.30372 (0.5871)	0.51520 (0.4804)	5.47524 (0.0288)	7.48017 (0.0121)	8.20910 (0.0096)	0.04274 (0.8382)	0.06184 (0.8059)	3.35308 (0.0807)	0.06873 (0.7956)	4.29145 (0.0502)		3.26844 (0.0843)
EDI3	2.21131 (0.1512)	4.47610 (0.0459)	0.08801 (0.7695)	0.33451 (0.5689)	0.43340 (0.5172)	4.60825 (0.0431)	6.20577 (0.0208)	6.55781 (0.0186)	0.06079 (0.8076)	0.07564 (0.7859)	3.09537 (0.0924)	0.12707 (0.7249)	3.92029 (0.0604)	2.02269 (0.1690)	

Ⅶ 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 장기분석(생산함수접근법)

1.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한 경제민주화의 장기성장효과 추계 방법

장기성장률전망을 위한 생산함수 접근법

○ 일반적으로 장기성장률전망을 위한 생산함수 접근법에서는 생산함수의 형태를 가정하고 생산함수에 포함된 투입요소,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소득분배율과 같은 모수 값의 추이에 대한 장기추세 예측치를 대입하여 장기경제성장추이를 전망함.

○ 생산함수는 다음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가정함.

(CRS, Cobb-Douglas, Hicks neutral technology)

$$Y_t = A_t \cdot L_t^{\lambda_t} \cdot K_t^{1-\lambda_t} \quad \text{----------} \quad (1)$$

○ 제V장의 경제민주화지표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식(1)의 생산함수를 식(2)와 같이 조정함.

$$Y_t = A_t \cdot (EDI_t^{\alpha} \cdot L_t)^{\lambda_t} \cdot (EDI_t^{\beta} \cdot K_t)^{1-\lambda_t} \quad \text{----------} \quad (2)$$

위의 식(2)에서 α와 β는 경제민주화가 노동의 질과 자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의미함.

○ 식(2)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성장률 간의 관계가 도출됨.

$$\frac{\Delta Y_t}{Y_{t-1}} = \frac{\Delta A_t}{A_{t-1}} + (\alpha\lambda_t + \beta(1-\lambda_t))\frac{\Delta EDI_t}{EDI_{t-1}} + \lambda_t \frac{\Delta L_t}{L_{t-1}} + (1-\lambda_t)\frac{\Delta K_t}{K_{t-1}} - \Delta\lambda_t \ln(\frac{K_t}{L_t}) \text{-----} \quad (3)$$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장기 예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변수들의 장기추세에 대한 추계가 필요함.

○ 고용, 노동소득 분배율, 투자율, 자본장비율, 자본산출계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경제성장률 노동력 증가율 등.

○ 예측기간: 2011년~2080년.

○ 기준년도: 화폐단위로 측정된 모든 변수는 2005년도 불변가격을 사용.

○ 장기추세는 선진국의 사례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각 변수의 장기 수렴 수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exponential smoothing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함. (E. S. Gardner (1985) 참고)

고용의 장기추세

○ 고용 = 경제활동인구 × (1-장기평균실업률)로 추계.

○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 경제활동인구 참여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로 계산한 값을 이용하여 추세치를 추계.

- 앞으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참가율이 2007년 60.8%에서 2080년 63.4%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지수함수: y = 0.47680 x0.05950

○ 15세 이상 인구의 장기추세는 통계청의 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

- 20501~2080년까지의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성장률을 전망함에 있어 2080년 예측치가 -0.08%인 2080년까지의 추계치에 대한 지수함수 추세를 사용. (2050년까지는 통계청의 추계치 사용)
- 지수함수: y = -0.01+0.07376 e(-0.03396)x, R2=79%

○ 장기평균실업률

- 자연실업률을 축정하는 방법으로 NAIRU등의 개념적으로 더 정치한 정의가 있으나 실체 측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거시지표의 장기추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정의(장기평균실업률)를 이용하여 자연실업률을 계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1966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업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간별 장기평균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됨.

[표 7-1] 기간별 장기평균실업률

기간	장기평균실업률
1966~2007 (42년)	3.8%
1970~2007 (38년)	3.6%
1980~2007 (28년)	3.5%
1990~2007 (18년)	3.36%

- 기간별로 장기평균실업률은 3.36%~3.8% 사이에 있음.

- 2011년~2080년: 실업률은 3.5%라고 가정.

노동소득분배율과 투자율의 장기추세

○ 지수함수 유형의 추세선을 가정할 경우 2080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3.2% 수준.

- 2002년 미국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71.6%와 73%임을 감안할 때, 2080년 추세전망치는 선진국의 최근 수준과 비슷한 수준.

- 지수함수: y = 33.87828 x0.16403

○ 투자율의 장기 추세

- 1988~2007 기간의 지수함수 추세선은 2080년 23.2%로 수렴.

- 2005년 현재 일본의 투자율은 23.1%, 미국의 투자율은 19.2%를 기록함.

- 지수함수: y=0.031535e0.00328x

1970~2011년 기간 동안의 자본스톡 시계열 추계

○ 1970~1997년 가간동의 자본스톡의 과거치에 대한 시계열은 국부조사 통계와 국민소득계정의 고정자본형성 데이터를 아용하여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 $K_{t+1} = K_t + I_t - \delta \cdot K_t$

- 국부통계는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 4개 년도의 데이터를 이용.

- 각 해당년도의 국부통계에서 유형고정자산 해당시점의 자본스톡으로 간주.

-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유형고정자본형성을 해당연도의 고정자본형성(투자)으로 간주.

- 감가상각률은 1997년 국부통계에 기초해 작성된 통계청의 1997년~2006년의 유형고정자산시계열과 국민소득계정의 유형고정자본형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구재고법에 의한 등식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감가상각률을 역으로 추계: $\delta = (K_t + I_t - K_{t+1})/K_t$

- 10년간의 연평균 감가상각률을 근거로 감가상각률의 크기를 판단: 감가상각률의 1997년~2006년 평균은 6.55%임. 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한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의 감가상각률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1970년~2006년의 전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률은 6.55%인 것으로 가정.

- 영구재고법을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 국부통계 데이터에 각각 적용하여 4개의 자본스톡 시리즈를 만든 후, 기간별로 각 시리즈를 가중 평균하여 1970년~2006년까지의 자본스톡 시리즈를 구축하되 지표연도가 되는 1977년, 1987년, 1997년의 자본스톡은 국부통계의 유형자산과 일치하도록 조정함.

[표 7-2] 1970년~1997년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단위 10억원)

연도	가중치	자본스톡68 (6.55%)	자본스톡77 (6.55%)	자본스톡87 (6.55%)	자본스톡97 (6.55%)	자본스톡 (6.55%)
1970	1.0	73,079	174,401	397,049	429,258	73,079
1971	0.9	79,301	175,051	385,453	415,891	92,980
1972	0.7	85,655	176,138	374,969	403,732	111,508
1973	0.6	91,852	177,359	365,254	392,435	128,498
1974	0.4	100,559	181,363	358,923	384,610	146,733
1975	0.3	110,737	187,097	354,892	379,165	165,280
1976	0.1	121,760	193,920	352,486	375,424	183,611
1977	1.0	135,691	203,882	353,726	375,403	203,882
1978	0.9	155,109	219,550	361,153	381,638	233,710
1979	0.8	182,791	243,688	377,503	396,861	270,451
1980	0.7	212,548	270,095	396,550	414,844	308,032
1981	0.6	236,343	290,725	410,225	427,512	338,525
1982	0.5	257,703	309,094	422,022	438,358	365,558

1983	0.4	281,743	330,308	437,024	452,462	394,338
1984	0.3	311,174	357,068	457,915	472,504	427,661
1985	0.2	343,779	387,148	482,449	496,235	463,389
1986	0.1	376,930	417,914	507,973	521,002	498,968
1987	0.0	414,125	452,855	537,961	550,273	537,961
1988	1.0	459,652	496,252	576,677	588,312	576,677
1989	0.9	512,012	546,599	622,600	633,595	623,822
1990	0.8	573,787	606,472	678,293	688,683	680,602
1991	0.7	655,300	686,187	754,058	763,877	757,331
1992	0.6	748,412	777,600	841,739	851,017	845,863
1993	0.4	836,680	864,263	924,874	933,642	929,745
1994	0.3	929,896	955,961	1,013,239	1,021,525	1,018,763
1995	0.2	1,034,925	1,059,557	1,113,684	1,121,514	1,119,774
1996	0.1	1,154,296	1,177,573	1,228,723	1,236,122	1,235,300
1997	0.0	1,281,487	1,303,484	1,351,820	1,358,813	1,358,813

○ 1997~2011년까지의 자본스톡은 국부통계에 게재된 통계청 추계유형고장자산을 사용함

자본장비율, 자본산출계수의 장기추세

○ 자본장비율은 추계된 자본스톡과 고용시리즈의 비율로 계산.

- 1970년~2010년 기간 동안의 자본장비율을 이용하여 2080년까지의 장기추세를 추계.
- 1970년~2010년의 데이터를 이용한 장기추세는 로그함수: $y = 0.02119\ln(x) + 0.01815$

○ 자본산출계수는 추계된 자본스톡과 실질GDP의 비율로 계산.

- 1970년~2011년 기간 동안의 자본산출계수를 이용하여 2080년까지의 장기추세를 추계.
- 로그함수 형태의 추세를 가정하면 2010년 2.63수준에서 2080년에는 3.18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02년 미국의 자본산출계수가 2.78, 일본의 자본산출계수가 2.83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80년 추세치 3.18은 선진국들의 최근 수준에 비추어 약간 높은 편임.
- 그러나 한국의 경제제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보다는 가파른 자본 축적에 의존하는 면이 큰 점을 고려하면 자본산출계수가 현재의 2.63에서

2080년에는 3.18로 수렴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로그함수: y = 0.51377ln(x) + 0.76455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 1970~2010년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을 추계.

- 식(3)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frac{\Delta A_t}{A_{t-1}} = \frac{\Delta Y_t}{Y_{t-1}} - (\alpha\lambda_t + \beta(1-\lambda_t))\frac{\Delta EDI_t}{EDI_{t-1}} - \lambda_t\frac{\Delta L_t}{L_{t-1}} + (1-\lambda_t)\frac{\Delta K_t}{K_{t-1}} + \Delta\lambda_t \ln\left(\frac{K_t}{L_t}\right) \quad \text{-----} \quad (4)$$

○ 2011년~2080년 기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에 대한 가정

[표 7-3] 기존연구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단위: %p)

	본 연구[1] (신석하 외(2011))	한진희 외 (2002)	김동석 (2004)[2]	박형수, 류덕현[3] (2006)	한진희, 신석하 (2008)		EU KLEMS (2009)	신석하 (2010)
					수량	가격		
1981~85	3.6	2.1	2.4	2.4*	2.5	2.4	5.2	2.6
1986~90	3.3	2.1	2.3		2.3	1.5	4.0	1.3
1991~95	1.7	0.6	1.4	1.5	0.8	0.3	2.4	0.5
1996~00	2.0	1.1	1.2		1.0	0.2	2.2	0.3
2001~05	1.4	-	0.5**	1.9	2.0	1.3	1.3	1.1
2006~10	1.5	-	-	-	-	-	-	-

주: 1)과 3)은 노동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투입을 측정, 2)의 시기 구분은 1980~85, 1985~90, 1990~95, 1995~2000, 2000~03; * 1982~90, ** 2000~03
출처: 신석하 외 (2012)

-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여 2011년~2050년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기간	TFP성장률
2011~2020	1.7
2021~2030	1.5
2031~2040	1.5
2041~2050	1.4

20011년~2050년 기간 동안의 자본스톡 시리즈 추계

○ 계산방법

- 영구재고관리법을 나타내는 자본의 동태적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Delta K_t / K_{t-1} = [I_t / Y_t][\Delta Y_t / Y_{t-1} + 1] / [K_{t-1} / Y_{t-1}] - \delta \quad \text{----- (5)}$$

- 자본스톡의 성장률은 식(3)과 (5)로부터

$$\Delta K_t / K_{t-1} = \frac{[I_t / Y_t][\Delta A_t / A_{t-1} + \lambda_t (\Delta L_t / L_{t-1}) - \Delta \lambda_t \ln(K_t / L_t) + 1] / [K_{t-1} / Y_{t-1}] - \delta}{1 - [I_t / Y_t](1 - \lambda_t) / [K_{t-1} / Y_{t-1}]} \text{--- (6)}$$

- 식(6)에 투자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고용증가율,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장비율, 자본산출계수 등에 대한 장기 추세치를 대입하여 자본스톡의 성장률을 추계.

- 2011년 자본스톡에 2012년 자본스톡성장률 전망치를 곱하여 2012년 자본스톡을 계산.

- 이 방식을 되풀이 하여 2050년까지의 자본스톡 시계열을 구축.

2.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한 경제민주화의 장기성장효과 추계 결과

장기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 장기저망에 사용할 경제민주화의 지표의 선택.

본 장기전망에서는 경제민주화지표 중 EDI1을 사용. (제 V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EDI1, EDI2, EDI3는 상관관계가 99% 이상이어서, 이 들 세 변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분석하여도 부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EDI1과 함께 50대 재벌에 대한 집중도를 1에서 뺀 값을 사용하여 재벌의존도 완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추계함.

○ 경제민주화가 노동의 질과 자본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함: 식(3)에서

(1) 고용과 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대칭적인 경우: $\alpha = \beta = 0.5$

(2) 고용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alpha = 0.5, \beta = 0$

(3) 자본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alpha = 0, \beta = 0.5$

○ 경제민주화 진행과정에 대한 시나리오

EDI1과 EDI_Industry가 각각 2010년 0.621931과 0.552에서 2080년까지 총 10%씩 향상되어 각각 0.6841241과 0.6072로 개선된다고 가정.

2011년에서 2080년까지 매년 동일한 율로 경제민주화가 발전한다면 이 기간 동안 EDI1 및 EDI_Industry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0.134%임.

시나리오별 장기경제성장 효과

○ 위의 시나리오와 같이 경제민주화가 진행된다면 식(3)을 통해 실질GDP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제V장의 단순회귀 분석에서와 같이 고용성장률 및 자본축적률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실질GDP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종합하여 경제민주화가 실질GDP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할 수 있음.

(1) EDI1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EDI1이 2010년 기준 2080년까지 10% 향상될 때 실질 GDP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표 7-4] 경제민주화가 답보상태인 경우와 경제민주화가 발전하는 경우실질GDP성장률 장기전망

기간	경제민주화답보	경제민주화 발전		
		$\alpha = \beta = 0.5$	$\alpha = 0.5, \beta = 0$	$\alpha = 0, \beta = 0.5$
2011~2020	3.966%	4.125%	4.101%	4.083%
2021~2030	3.044%	3.202%	3.178%	3.158%
2031~2040	2.362%	2.518%	2.496%	2.473%
2041~2050	1.866%	2.021%	2.000%	1.975%

- 경제민주화가 고용과 자본의 질을 모두를 향상시킬 경우 경제민주화가 답보 상태인 경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년 기간마다 연평균 0.155%~0.160%씩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경제민주화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만 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답보 상태인 경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년 기간마다 연평균 0.134%~0.135%씩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경제민주화가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만 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답보 상태인 경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년 기간마다 연평균 0.108%~0.117%씩 높이는 효과가 있음.

(2) EDI_Industry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EDI_Industry가 2010년 기준 2080년까지 10% 향상될 때 실질GDP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표 7-5] 경제민주화가 답보상태인 경우와 경제민주화가 발전하는 경우 실질GDP성장률 장기전망

기간	경제민주화답보	경제민주화발전		
		$\alpha=\beta=0.5$	$\alpha=0.5, \beta=0$	$\alpha=0, \beta=0.5$
2011~2020	3.966%	4.115%	4.090%	4.073%
2021~2030	3.044%	3.191%	3.168%	3.148%
2031~2040	2.362%	2.508%	2.486%	2.463%
2041~2050	1.866%	2.011%	1.990%	1.965%

- 경제민주화가 고용과 자본의 질을 모두를 향상시킬 경우 경제민주화가 답보 상태인 경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년 기간마다 연평균 0.145%~0.149%씩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경제민주화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만 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답보 상태인 경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년 기간마다 연평균 0.124%~0.125%씩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경제민주화가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만 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답보 상태인 경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을 10년 기간마다 연평균 0.099%~0.107%씩 높이는 효과가 있음.

경제민주화를 통해 2011년의 실질GDP성장률 4.43%를 2050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어떤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 EDI1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함

- 경제민주화의 발전을 통해 2011년도의 실질GDP성장률 4.4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수준이 다음과 같이 높아져야 함.

기간	$\alpha=\beta=0.5$	$\alpha=0.5, \beta=0$	$\alpha=0, \beta=0.5$
2011~2020	0.624672	0.625164	0.625675
2021~2030	0.629629	0.630948	0.632609
2031~2040	0.633569	0.635457	0.638337
2041~2050	0.636563	0.63884	0.642803

○ $\alpha=\beta=0.5$인 경우를 보면

- 2011~2020년 기간 동안에는 경제민주화지수가 2008~2010년 기간의 평균인 0.617771에 비해 평균 0.44% 증가해야 2011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음.

- 2021~2030년 기간 동안에는 경제민주화지수가 2008~2010년 기간의 평균인 0.617771에 비해 평균 1.24% 증가해야 2011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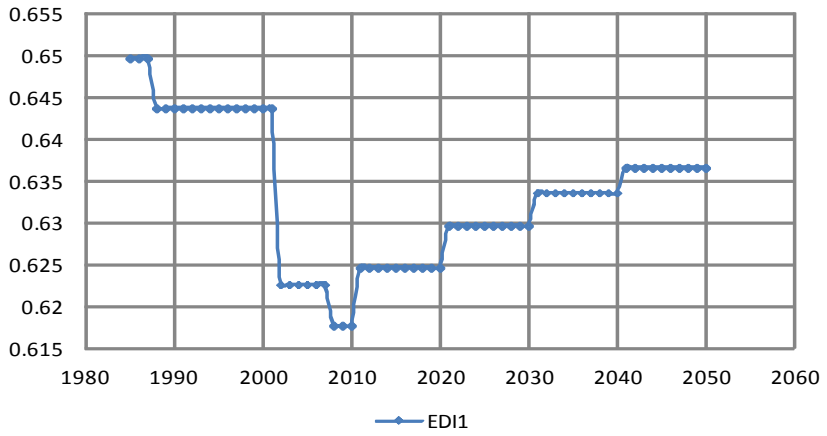
- 2031~2040년 기간 동안에는 경제민주화지수가 2008~2010년 기간의 평균인 0.617771에 비해 평균 1.88% 증가해야 2011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음.

- 2011~2020년 기간 동안에는 경제민주화지수가 2008~2010년 기간의 평균인 0.617771에 비해 평균 2.37% 증가해야 2011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음.

-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함.

○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 관찰됨.

$\alpha=\beta=0.5$일 경우 2011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민주화 수준



○ 위의 챠트에서 2010년까지는 실측치이고 2010년 이후에 대해서는 2011년 성장률 유지에 필요한 경제민주화 정도를 나타냄.

Ⅷ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음. 경제민주화 지수는 경제민주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사후적 지표인 소득 및 지역간 소득의 지니계수, 소득세 누진정도를 나타내는 KSP 지수, 광공업 50대 기업의 단순집중도를 이용하여 구축되었음.

- 실증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1) 경제민주화의 진전이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2)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료는 경제민주화의 후퇴와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나타냄. 이러한 사실을 경제민주화의 진전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진전과 잠재성장률 사이에는 항상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 U자 형의 관계가 성립하여 일정 수준까지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는 경우 잠재성장률은 증가하나 적정한 수준을 넘어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는 경우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3) 1970년대 이후 정치민주화는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음. 이러한 관찰이 경제민주화의 개선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나타낼 수 있지만 정치민주화의 진전이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나타낸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해 파악된 사실로는 '1985년 이후 정치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경제민주화도 같이 진전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최소화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경제민주화의 사후적지표만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회의 공평성 및 시장제도의 확립 등 경제민주화의 사전적 요인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데 있음. 따라서 사전적 경제민주화 요인들의 변화가 경제민주화의 사후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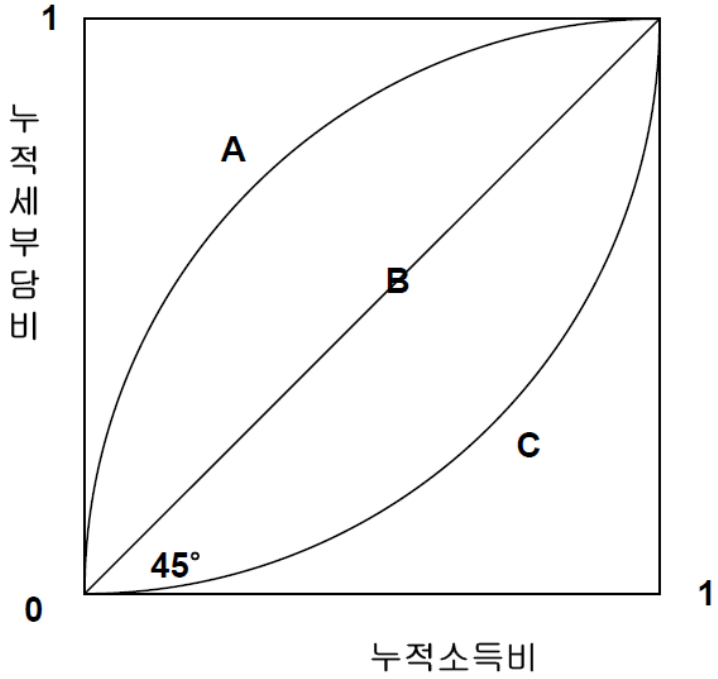
(2) 경제민주화의 진전과 잠재성장률 혹은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관계에 단순한 선형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만일 역 U자 형태가 존재한다면 잠재성장률을 최대치로 올일 수 있는 적절한 경제민주화 지수는 얼마인지, 이 지수는 시간 연동적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Panel data를 이용한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부록 A: KPS 지수

KPS 지수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에서 2사이의 값을 가진다. KPS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누진적이며, 2에 가까울수록 역진적이며, 1이면 비례적 세부담을 의미한다.

$$KPS = \frac{\text{조세집중곡선 아래 도형의 면적}}{45^{\circ}\text{선 아래 도형의 면적}}$$

[그림 A-1] KPS지수



주 : A – 세부담 역진적(KPS 〉 1)
B – 세부담 비례(중립)적(KPS = 1)
C – 세부담 누진적(KPS 〈 1)

부록 B. 지니 계수를 이용한 소득분포함수의 유도

로렌츠곡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L \equiv \int_0^z s(z')dz' \qquad \text{(A1)}$$

여기서 $s(z)$는 소득 점유율 함수이고 z 좌표는 소득 백분위 표시 축이다. 만약 z=0.005 라면 최빈 1% 구간의 중간점을 나타내고, z=0.995 라면, 가장 부유한 1% 구간의 중간점을 나타낸다. 부분적분을 이용하여

$$\int_0^1 zdL = zL(z)_0^1 - \int_0^1 L(z)dz = 1 - g$$

$$g \equiv \int_0^1 L(z)dz.$$

그런데,

$$dL(z) = s(z)dz$$

소득점유함수의 평균은

$$\mu_1 = \int_0^1 zs(z)dz = 1 - g = \frac{1 + GINI}{2} \qquad \text{(A2)}$$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소득점유함수의 1계 모멘트를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1계 모멘트에서 지니계수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유도는 Lerman and Yitzhaki (1984)에도 보고되어 있다. 만일 지니계수값이 영이라면 소득 점유율 1계 모멘트는 0.5가 되고, 만일 지니계수값이 일이라면 소득 점유율 1계 모멘트는 1이 된다.

소득 점유율 1계 모멘트를 이용한 점유율 분포함수 유도

Ryu (1993)에 보고된 엔트로피 극대화 방법을 이용한다.

$$Max_s W \equiv -\int s(z)\log s(z)dz \qquad \text{(A3)}$$

주어진 조건이 1계 모멘트라면

$$\int zs(z)dz = \mu_1 \qquad \text{(A4)}$$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하여

$$s(z) = \exp[a+bz] = \left[\frac{b}{e^b-1}\right]\exp[bz] \qquad \text{(A5)}$$

소득점유율의 합은 1이므로, a를 b의 함수로 표기할 수 있다. 식(4)의 1계 모멘트는

$$\mu_1 = \left[\frac{b}{e^b-1}\right]\int_0^1 zexp[bz]dz = \frac{1+GINI}{2} \qquad \text{(A6)}$$

변수 b에 대한 적분 후에 좌측의 μ_1을 $h(b)$로 표기하자.

$$h(b) \equiv -\frac{1}{b} + \frac{e^b}{e^b-1} = \frac{1+GINI}{2} \qquad \text{(A7)}$$

만일 지니계수값이 영이라면 b는 0의 값을 가지고, 만일 지니계수값이 일이라면 b 값은 무한대에 접근하다. 좌변은 단순증가함수이므로, 지니계수가 주어지면, b 값과 소득점유율 함수 $s(z)$를 결정하게 된다. 엔트로피 극대화 (ME)방법을 이용한 식 (5)로 유도한 결과를 그림 9에 보인다. 이런 방식은 Ryu (1993)에 기술되어 있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지방분산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3.

건설교통부 · 국토연구원,「수도권공공투자분석연구」,1999.12.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전략」, 2007.12.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전환」, 1999.2.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1992.6.

김치호 · 문소상 (1999), “잠재 GDP 및 인플레이션 압력 측정 결과”, 「금융경제연구」 제 96호, 한국은행.

민경휘 · 감영수 (2003),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 분석," 산업연구원.

박무환 · 이태정 · 양준모 (2008),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위한 거시경제계량모형 개발," 국민연금연구원.

박무환 · 한성신 · 서승환 · 양준모 (2004), "국민연금 재정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국민연금연구센터.

박양호 등 (2003),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 연구(I)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 국토연구원.

서승환 (1997), "수도권 집중의 비용-편익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서승환 (1999), “수도권 정책과 제조업 집중문제," 「수도권정책의 전환」, 경기개발연구원.

서승환 (2001),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및 그 결정요인,” 「응용경제」 제3권 제1호, 133-159.

서재환 (2000),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추계 기법에 관한 고찰," 「통계분석연구」, 통계청.

신석하 · 조동철 (2003),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방법 비교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신석하 · 황수경 · 이준삼 · 김성태(2012),"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한거시경제변수전망," 한국개발원

유항근 (2011),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13」, 2호, 5-30.

윤형호 · 김성준 (2006),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지역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태정(2008),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한국기업의 효율성 분석,”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경제발전학회 발표논문.

이태정(2012),“인구추이와노동시장참여율이한국의장기경제성장잠재력에미치는효과와대응책,”mimeo,연세대학교

최경수 (2003),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최경수 · 문형표 · 신인석 · 한진희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의 제6장,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통계청,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각 센서스 연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국부통계조사보고서」, 1968, 1977, 1987, 1997.

통계청,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60, 1966, 1970, 1975, 1980, 1990, 1995, 2000.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

표학길 (2004),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장기성장분석,” 경상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07),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은행 (2005),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4.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작성 연도.

한국은행, 「신국민계정」, 2009.

한진희 외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한진희 외 (2007),"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한거시경제변수전망,"한국개발연구원

황인학 (2001),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06,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cemoglu, Daron, James A. Robinson, Thierry Verdier, 2012, "Can't We Be More Like Scandinavians? Asymmetric Growth and Institutions in an Interdependent World,"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Ball, L., and G. Mankiw, 2002, "The NAIRU in Theory and Practice," NBER Working Papers 8940.

Barro, Robert, 1994, "Democracy and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4909.

Blanchard, O., and N. Kiyotaki, 1987,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Effects of Aggregate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77, 647-66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4, "A Summary of Alternative Methods for Estimating Potential GDP," CBO Background Paper.

Dahl, Robert, 1985,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owling, M. and P. M. Summers, 1998,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 Issues for Asia," Economic Record, 170-185.

Felipe, J., 1999,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East Asia: A Critical Surve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41.

Gardner, E. S., 1985, "Exponential smoothing: The state of the art," Journal of Forecasting, 4, 1-28.

Hansen, E. R., 1990, "Agglomeration Economies and Industrial Decentralization: The Wage-Poductivity Trade-Offs,"Journal of Urban Economics, 140-159.

Harberger, A. C., "Reflections on Economic Growth in Asia and the Pacific", Journal of Asian Economics, 1996, pp.365-392.

Kevin, J. Stiroh, 1998, "Long Run Growth Projections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 A Survey of Models Used By The U.S. Government,"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XVI, 467-479

Kim, J and L. Lau, 1994,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of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35-71.

Kim, J. and L. Lau, 1995,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sia Pacific Economic Review, 3-22.

Kim, J. and L. Lau, 1994,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fo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onomies, 235-271.

Klenow, P. and A. Rodroguez-Clare, 1997, "The N대-Classical Revival in Growth Economics: Has it gone too far," in B.S, Bernanke and J. Rotemberg eds., NBER Economic Annual.

Kurzman, C., R. Werum, and R. E. Burkhart, 2002, "Democracy's Effect on Economic Growth: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1951-1980,"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7, No. 1, 3-33.

Marshall, Monty G, Keith Jaggers, Ted R. Gurr, 2011, Polity IV Project: Dataset User's Manual, Center of Systemic Peace.

Marti, C., 1996, "Is there an East Asian Miracle," Union Bank of Switzerland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

Minier, Jenny A., 1998, "Democracy and Growth: Alternative Approach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3, 241-266.

Mullen, J. K. and M. Williams, 1990, "Explain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Differentials in Urban Manufacturing," Journal of Urban Economics, 103-123.

Mullen, J. K. and M. Williams, 1987, "Technical Progress in Urban Manufacturing: North-South Compariso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4-204.

Nehru, V. and A. Dhareshwar, 1993, "A New Database on Physical Capital Stock: Sources and Methodology and Results," Rivista de Analisis Economico, pp.37-59.

Pettitt, .N., 1979, "A Non-Parametric Approach to the Change Point Problem," Applied Statistics, 126-135.

Przeworski, Adam and F. Limongi, 1993,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 51, 69.

Rodrik, Dani, 1999, "Democracies Pay Higher Wag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1999, 707-738.

Ryu, H., 1993, Maximum entropy estimation of density and regression func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56, 397-440.

Sala-i-Martin, Xavier, 2005, "World Distribution of Income: Falling Poverty and … Convergence, Perio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 351-398.

Shimer, R., 2001, "The Impact of Young Workers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969-1008.

Solow, R.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59-694.

Staiger, D., J. Stock, and M. Nelson, 2001, "Prices, Wages and the U.S. NAIRU in the

1990s," NBER Working Papers 8320.

Suh, S.H., 1991, "The Optimal Size Distribution of C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Suh, S.H., 1993, "Welfare Costs of the Sub-Optimal Size Distribution of C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Young, Alwyn, 1995,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East Asian Growth Experiences," The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641-680.

17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6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종은 세종대학교 교수 외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6

이종은[1] 외

Ⅰ 서 론

한국의 잠재성장력은 198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3 %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생산성저하, 기업투자 부진 등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잠재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으로의 선순환 채널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면서 급격히 잠재성장력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민주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경제민주화의 철학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 각계 의견을 종합하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경제변수로 연결시켜 잠재성장률과의 관계를 다양한 계량화를 시도했으며,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그리고 외부성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가 성장에 미치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해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성장 지속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 이종은 교수: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Email)LJONGEUN@sejong.ac.kr, (Fax) 02-3408-4306, (Phone) 02-3408-3137
1장 서론은 김정식 교수, 백승관 교수께서 수고하셨고,
2장부터 9장까지 본론과 결론은 이종은 교수가 담당했다.
이종은 교수의 새로운 시도에 소신을 가지고 지지하신 김정식 교수님과, World Bank가 발표한 국가별 rule of law data를 제공하신 백승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김정식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Email) kimjs@yonsei.ac.kr
백승관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Email) sbaek@hongik.ac.kr

Ⅱ 경제민주화의 의미

1. 경제민주화의 철학적 배경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철학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경제운용에서 시장 중시 및 작은 정부 지향과 공동체 중시 및 큰 정부 지향 사이의 긴장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보장에 무게를 두며, 국가든 국제사회든 위기 때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 이념으로 세계 1, 2차 대전 당시에는 사회를 이끌만한 주요 사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그만큼 국제 사회가 비교적 평온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고 우리나라에도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보다 민주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도 위기 상황임을 말해주며, 우리 경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사한다.

또 다른 해석은, 두 가치의 중요성은 시대상황과 달리 항상 존재하나,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트렌드가 되는 정도와 상관없이 일정 가치를 계속 부여해야 다음 시대에 부작용 가득한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경고하고 있다.

자유주의에 비해 민주주의는 공동체에 무게를 둔 가치이다. 동시에 이 두 가치는 Efficiency 와 Stability 간의 균형 문제이기도 하며, Stability와 Dynamic Efficiency가 맥을 같이한다면, 또는 Efficiency와 Dynamic Stability(사회 구성원의 안정감을 겸비한 성장하는 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면 상호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2. 경제민주화의 법적 의미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 119조에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경제 민주화 개념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주요 인사인 김 종인 전 수석이 1987년 개헌 때 헌법에 처음 넣었다.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서술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다차원의 의미를 갖는 경제민주화 개념이 경제 안에서 보일 복잡한 내생성과 정도 문제(matter of degree)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스스로가 객관적 근거를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리를 종합해 찾아야 한다.

수많은 TV 토론은 서로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결국 “잘 해보자”는 사회자나 좌장의 종합으로 끝난다. 이것은 미사여구와 말꼬리 잡는 식의 탁상공론이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시간 낭비 없이,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솔직한 결론을 내려면,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계량화 되고 시사점이 종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3.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배경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대선 키워드로, 잘 살아보자(박정희 전 대통령), 무질서 심리의 타파와 정의 사회 구현(전두환 전 대통령), 문민정부(김영삼 전 대통령), 수평적 정권교체(김대중 전 대통령), 구시대 3김 정치와의 단절(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 살리기(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2012년 대선을 특징짓는 키워드로 여기고 있다.

경제 민주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에 대해 92.1%가 들어봤다고 했고, 76.3%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며, 대선에 중요하다는 의견 83.7% 로 나타났다(여의도 연구소 2012).

4. 경제민주화의 경제적 의미와 유념할 점

경제민주화는 성장이라는 총량의 움직임과는 달리 경제 내부의 구성원들을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는 사람의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 규모 간 경제민주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 경제민주화, 산업 간 경제민주화, 지역 간 경제민주화, 노동시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간 경제민주화 등 경제 주체 간 양극화 이슈를 몰고 오는 이분법에 기초해 그의 역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의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지배구조 민주화 등 이슈별 용어들도 경제주체간의 평등관계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사업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학력별 경제력 등 민주화 개념은 한 경제에 대해 구성원을 향해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광범위한 주제이다.

우선 경제민주화는 현상과 의도가 구분되어야 한다. 소득분배 상태, 빈곤층의 비중 등은 이미 나타난 현상이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또는 의도된 정책 변수는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오는 가와는 관계없이 경제 민주화의 의도 변수로 볼 수 있다. 현상변수를 사용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또는 줄이도록 하는 정책변수는 별도로 숙고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의도를 가진 모든 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기에는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내부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것이 또한 미시적인 시장의 불완전, 불공정한 부분을 거시정책이나 분위기로 일거에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는 거의 모든 경제이슈들이 그렇듯이 강한 내생성을 가진 개념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가 대기업 내의 노동 귀족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재벌개혁의 문제는 정치개혁 문제와 얽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 간 편 가르기는 문제 해결에 앞서 내생적 관계를 통찰해내는 단계에서 방해가 된다. 일반 대중이든 전문가든 이제 우리 사회가 여론몰이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관계를 이해할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민주화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절대빈곤층을 줄이고 글로벌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노동시장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Lee 2006, Lee 2010), 경제민주화 개념 안에는 경제 하부구조의 여러 측면이 내생적으로 얽혀 있어 최종결과는 분배, 성장측면에서만 보아도 개선, 악화, 영향 없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것이다.

Ⅲ 선행 사례 및 각계 의견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보면 시장지배적 기업과 신참기업,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간의 경제민주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매우 원칙적인 명제들이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실패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최적 조직 선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효율적인 출자와 사익추구를 위한 비효율적인 출자를 구분해야 한다(이상승 2012) 등이다.

이전의 비슷한 조치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있었는데 조성봉(2006)에 의하면 대주주의 지분분산, 업종전문화,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정책목적이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인권 김현종(2004)에 의하면 30대 재벌로 규제가 한정되었던 1980~1989년 동안 자산집중, 매출집중, 고용 집중 등에서 오히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각계 의견이며 2011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들은 것들이다. 존함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 모두 밝히지 않고 인용하며 화살표 뒷부분은 여기서 취할 점이다.

(1) “소득분배 악화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탈산업화이다.”
→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인식, 영세 자영업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 인식.

(2) “고층 건물을 짓는데 안전한 특수한 유리가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에서 개발했다. 기존 유리를 납품해 오던 관련 중소기업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부담이 큰 상품 개발에는 30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위험 감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다. 그런 큰 돈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20층 이상 건물 지으면서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기존의 유리를 쓰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이 보여 마음이 답답하다.”
→ 수많은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독과점 이윤이 R&D 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카니즘은 인식해야 한다는 것.

(3)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한다면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을까”
→ 최종재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인식, 소비자 인식 전환 필요성 대형 마트 규제, 전통시장 쿠폰 발급 등이 이에 해당.

(4) “순환출자에 대한 것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가 판단한다. 경제 민주화 문제는 시장이 무엇을 선택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신규투자의 유력한 수단인 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이상하다.”
→ 자본시장에서 Market selection mechanism 에 대한 언급

(5) “규모가 커지면 다각화된다. 참여연대도 그렇고 경실련도 그렇다.”
→ 기업, NGO 등 ‘조직’이 가진 경향성을 언급. 당신은 다를 것 같습니까? 의 질문.

(6) “있는 법만 잘 지켜도 된다. 그건 안 하면서 왜 이런 저런 거 새로운 것 하는 척 하는가.”“공정 경쟁을 한 가운데 어떤 기업만 살아남는다면 그건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 새로운 정책 실험보다도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메꾸는 노력이 필요.

(7) “우리 그룹에서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느냐. 기술에 인력에 경영 테크닉에.. 그래 놓고도 여론이 반 대기업 정서가 되면 포퓰리즘 뒤에 숨어 이용하려 한다. 그 때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회의감이 든다.”
→ 진실, 사실, 거짓은 인간 사회에 섞여 있음. 특수한 경우인 지, 보편적인지 등 사안의 경중을 통찰해 낼 만큼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어야 함.

(8) “재벌 그룹 계열사에서 점심 먹자고 하고, 밥 먹으면서 발주하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어찌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다. 하물며 재벌 그룹이다.”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은 경쟁이 안 된다.”

→ 시장에의 진입장벽, 진입비용, 고정비용, 한계 비용이 모두 큰 중소기업의 현실. 경쟁이 과연 가능한가, 실질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할 장치는 없는가의 문제.

(9) “삼성, 현대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가? 억울하게는 하지 말자.”

→ 자유주의를 지지, 개방 경제의 압력 인식, 공동체 주의에 대한 경계

(10) “기존의 세금은 알뜰하게 쓰이고 있는가? 여기에 자신이 없다면 조세로 경제민주화 하려고 하지마라. 큰 규모의 탈세부터 잡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검토부터 해라. 눈먼 돈이 많은 가운데, 증세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명세서 가져와라.”

→ 조세의 의무에 상응하는 혈세를 쓰는 주체에 대한 의무 문제가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음. 생산의 주체가 아닌 경우, “사회, 공동체, 집단, 민주” 라는 미명으로 큰 정부를 만들고 지대추구를 할 위험에 대한 경계.

Ⅳ 경제변수로의 연결

많은 의미와 차원을 담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여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개념들과 경제변수로 연결시켜 정리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저자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되도록 많은 경제주체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를 누리며 소외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의 최종 목적대로 이러한 경제 활동 참여 상태가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이 갖고 있는 개념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벌에 대한 개혁의 의미가 강하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흔히 거론되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수의 기업이 산업을 점유하는 형태가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업체수, 산업 집중도, 기업 내 종사자 수는 잠재성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적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야 양극화가 완화되고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 1에 제시된 경제변수들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변수들을 잠재성장력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다양한 시장은 창조적 파괴를 제대로 해 왔는가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체의 수를 결정짓는 것에는 산업 차원에서 진입장벽의 문제, 규모의 경제나 매몰 비용 등의 비용구조상의 문제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 창조적 폐업과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지, 진입이 자유로운 지, 규모의 경제를 한국경제가 누리고 있는 지 등이 기업체의 수 및 종사자 수, 산업집중도 등으로 현상화 되는 것이다.

경쟁이 제한되면 기업 수도 제한되고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독과점 이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체 수가 잠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미시적인 요인들이 성장이라는 거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보는 것이다.

표 1. 경제 민주화와 경제변수

주요 개념	흔히 거론되는 내용들	경제변수로의 연결
재벌규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보호, 골목상권 진입 금지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금지 ❋재벌 불법행위 제재	기업체수 산업집중도 법치
일자리 창출		고용관련 변수들 (예) 고용률, 실업율, 취업자수, 종사자수 등등
양극화 해소		분배관련 변수들 (예) 지니계수, 소득5분위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사회복지지출 관련 변수들

또한 최종재 시장의 경쟁은 노동시장 내부의 협상력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노동시장이 경쟁적이지 않다면 인적자원에 대한 보수 부분은 고정화될 것이며 기업체 수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외생적인 요소 비용 이론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기업의 비용구조와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Dixit(1980), Eaton and Ware(1987) 의 경우 시장에 빨리 진입한 초기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선점해서 생산용량을 늘려가는 지 보여주었고 이 때 매몰비용이 중요 역할을 한다. 전략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후발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Dixit(1989)와 Bresnahan and Reiss(1993) 은 불확실성을 추가해 연구한 것이다.

경쟁 시장이 경쟁력을 가져오고, 다수의 기업이 탄생하면서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이 증가해 왔는가 (Denicolo and Zanchettin 2010), 규모의 경제, 매몰비용 등이 소수의 기업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대내외적 요인이 강했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메카니즘이 있을 수 밖에 없는가, 이와는 다른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시장 진입 비용이 있어 독과점의 폐해가 컸고 분배 구조를 악화 시켰는가, 아니면 모두 해당되는가 등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Ⅴ 이론적 접근

1. 경제 민주화가 시장 구조적 의미일 때 경제 성장과의 이론적 관계

시장의 경쟁 압력이 혁신을 가져오고 이러한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직관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체 수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경쟁압력, 산업 및 시장구조 등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성장 모델에서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경쟁 압력이라는 것이 경제 전체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기업체 수와 잠재 성장력 간의 문제는 실증적 문제이다. Denicolo and Zanchettin(2009) 에서도 이를 말하고 있으며 모델의 주요 측면

본고에서 다루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내 시점간 선호 체계는 시간선호율이 r로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다.

$$u(c) = \int_0^\infty c(t)e^{-rt}dt$$

중간재의 질적 수준은 $\theta > 1$이며, k 기간에 최종재는 y_k 로 규모수익 불변의 다음 생산 함수를 갖는다.

$$y_k = \left(\sum_{i=0}^{k} \theta^{k-i} x_{i,k}\right)^{\alpha} L^{1-\alpha} \qquad 0 < \alpha < 1$$

L은 인적자원 투입, $1-\alpha$ 는 총 소득에서 인적자원 서비스가 소유하는 부분, $\left(\sum_{i=0}^{k} \theta^{k-i} x_{i,k}\right)$은 혁신 부분이 감안된 복합재 지수라고 볼 수 있다.

각 k 기간에, 혁신 경쟁이 있으며 혁신의 크기는 θ 이고 연구 개발 노력으로 혁신의 속도가 결정된다.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되며(산업에 따라서 이 부분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 연구는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이노베이터 들은 상당 기간 생산물 시장에서 활동하다가 점차 후발주자들에 의해 대체된다.

k 기간에 혁신 경쟁의 외부에 있는 l 기업이 연구 개발 노력, $n_{l,k}$ 를 결정한고 이에 따라 k+1 번째 혁신이 나온다. 연구 개발 노력에 대한 위험은 $\lambda_k n_{lk,}$ 으로 $\lambda_k > 0$ 이며 혁신은 뿌아송 과정에 따라 일어난다. 경제 내 혁신 성공확률은 $n_k \equiv \sum_l n_{l,k}$ 이다.

연구개발 투자 n_k 는 경제성장율 g 율로 성장하며 혁신에 대한 위험, $z_k = \lambda_k n_k$ 에서 λ_k 는 경제성장율 g 율로 하락해 $\lambda_k = \lambda g^{-k}$, 효용함수가 경제적 의미를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r > z(g-1)$이 성립한다.

생산물 시장에서 혁신 기업 m 개가 있고 추가로 현재의 기술 리더 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단위 비용 1로 m+1 개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며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고 다음 기가 되면 기술리더 였던 기업은 두 번째로 효율적인 기업이 된다.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p = \frac{1+\theta+\theta^2+\cdots+\theta^m}{m+\alpha}$$ 가 된다.

이 모델에서 경쟁정도가 강해질수록, 혁신의 크기가 클수록,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기업체 수는 줄어든다. 그리고 성장은 혁신이 클수록 비례한다.

기업체 수는 수요 탄력성 및 단계별 혁신 크기와 다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alpha = \frac{1+\theta+\theta^2+\cdots+\theta^m - m\theta^{m+1}}{\theta^{m+1}}$$ 이다.

시장 내의 기업 수가 경쟁 구도를 말해주며, 경쟁이 혁신을 가져오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모델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진입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모델과 현실 사이의 주요 괴리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잠재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innovation을 이루어지는 경쟁 시장이 관건이라는 의미 인데 경제 민주화가 지향해야 할 원칙적인 방향성을 말해준다. 이 모델의 우울한 측면은 경쟁이 격화 되면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재벌이 빵집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파리 바게뜨와 파리 크루아상 등이 시장 점유율 과반을 넘은 현실은 어떤 산업에 그것이 누구든 소수가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현실도 보여준다. 그렇게 되는 경향성, 장기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모델이고 이론인데, 이론이 현실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우선은 위안으로 삼을 수는 있겠다.

모델은 모델이고 현실로 돌아와서 현 상태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향인 지 심화시키는 방향인 지가 중요하다. 불공정 부당 거래를 없애고 진입 장벽을 제거 하고 배경 없이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

기업체 수나 종사자 수를 경제 민주화의 산업 구조적인 특징 변수로 본다면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는 여타 통제변수를 통한 실증분석의 문제 이다.

독과점 이윤을 누릴 수 있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성공한 기업이 차별화된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어야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산업집중도 등을 높여 경쟁 구도가 사라지면 혁신에의 유인도 사라진다. 실제 어떤 기업은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상대로 창조성 경쟁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적인 경제력 집중 및 성장 간의 빛과 그림자이다.

현실의 문제는 해당 독과점 이윤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을 것이다.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정치적 법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취하고 싶은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으로 경제 주체를 제어할 수 있는가. 옳지 않다면 제도적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취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인간 존재에게(요가에서 주장됨), 돌과 보석의 비중은 양극단에서 작고 상황에 따라 돌도 되고 보석도 되는 인간 존재가 대부분인 사회에서(시오노 나나미 2006), 자연계 여러 현상들처럼 정규분포에 가깝다면 지속적인 교육으로 대다수를 보석으로, 왼쪽 꼬리가 긴 형태의 분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사회의 선진화 문제이기도 하다.

재벌부터 중소기업까지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 경쟁을 위해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미시적 구체성이 필드 스터디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한다.

Gentle giant가 되는 것과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존과는 상충되지 않는 것인지,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론 및 국민정서와 이것이 투사되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은 공정하며 현명한 지, 등이 케이스별로 연구되어 경제 주체 간 역학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각자의 노하우나 인지 잉여 형태로 있을 뿐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지는 않다.

2. 경제민주화가 공정성 도입의 의미일 때 경제 성장과의 이론적 관계

지금까지 기존의 문헌도 그래왔지만 Berg et al.(2012) 은 성장의 지속기간이 길려면, 소득분배가 균등한 정도가 크고, 민주화되어 있으며, 수출지향적이고 거시 경제가 안

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Mourmouras and Lee (1999) 의 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한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생산 함수에 외부성이 큰 공정성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성장 메카니즘이 있다.

개인 i의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다.

$$U^i(s,t) = \int_t^{\infty} \ln c^i(s,v) e^{(\rho+\lambda)(t-v)} dv$$

ρ는 시간 선호율, i는 s에 태어난 개인, λ는 사망률이다

이 개인의 동태적 예산제약은

$$\frac{da^i(s,t)}{dt} = (r(t)+\lambda)a^i(s,t) + w(t) - c^i(s,t) \text{ 이며}$$

a^i는 자산, $w(t)$는 순 소득, $r(t)$는 실질 이자율이다.

최적화 조건은

$\frac{dc^i(v)}{dv} = [r(v)-\rho]c^i(v)$이며 예산 제약과 일계 조건을 조합하면 소비는 다음과 같다.

$c^i(t) = (\rho+\lambda)\left[a^i(t)+h^i(t)\right]$, h(t) 는 노동 소득이다.

세대 간 총합을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면 한 경제의 전체 소비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다음과 같다.

$$\frac{dC(t)}{dt} = [r(t)-\rho]\,C(t) - \lambda(\rho+\lambda)A(t)$$

다음으로 생산함수는

$Y = K^{1-\alpha}G^{\alpha}$ 로 놓고 G를 외부성 변수 즉, 경제 민주화(공정성)으로 놓게 되면 대표적 기업의 납세 후 수익의 현재 가치 극대화는 다음과 같다.

$$Max \int_0^{\infty} [(1-\tau)Y - \dot{K} - \delta K] e^{-\int_0^t r(\mu)d\mu} dt$$

δ 는 자본 스톡에 대한 감가 상각율이며 τ 는 세율이다.

정상 상태에서

$$\dot{c} = 0 \Leftrightarrow c = \frac{\lambda(\lambda+\rho)k}{r-\rho-n},\ n = \frac{\dot{Y}}{Y}$$

$$n = -\delta + \frac{1-g-c}{k}$$

$$r = (1-\tau)(1-\alpha)\left(\frac{g}{k}\right)^{\alpha} - \delta$$

$$k = g^{\frac{\alpha}{\alpha-1}}$$

이 모델은 또는 이런 종류의 내생적 성장 모델은 외부성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을 담고 있는데 생산함수의 자본 스톡과 외부성 변수 사이의 보완적 관계는 외부성 변수의 증가가 자본스톡의 감소를 암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특별히 조세로 조달되는 것이 아닌 비용이 없는 공정성과 같은 외부성 변수라면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보여준다.

문제는 이 외부성이 조세로 가능하다면 소비와 투자의 구축효과를 감수해야 하며 Barro(1990)에서 보여진 것처럼 성장을 위한 최적 수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정성이라는 외부성 변수가 경제 내의 자본 한계 생산성을 올리는 힘과,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구축하는 힘 사이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조세 등의 비용을 들이지 않는 외부성 변수일수록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이 모델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 한국경제의 자본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올리는 것에 대해 물론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Ⅵ 한국 경제의 현 위치 및 자료 설명

경제민주화 개념은 한 경제를 대표적 경제주체가 있다고 보는 총량 및 평균 개념에서 더 구체적으로 경제 내 구성원으로의 관점을 이동하는 개념이다.

우선 총량 개념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2011년 기준 1237조원 이상의 국민 총생산과 3.6%의 경제성장률, 265억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2012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미국의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에서 조사하는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관점을 이동해 이러한 한국 경제의 내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약 2424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2011년 12월 기준으로 약 662만 9000명이 자영업에 속하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29만명 정도 과잉이며 662만 9000명 중 170만명이 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빈 2012a). 2011년 10월부터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2012년 5월 719만 8000명이 되어 양극화 문제, 정치 사회적 불안과 복지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김선빈 2012b).

2011년 기준으로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15세이상인구}} = \frac{24{,}244{,}000}{41{,}052{,}000} = 59.1\%,$$

$$\text{실업율}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 \frac{855{,}000}{25{,}099{,}000} = 3.4\% \text{ 이다.}$$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 빈곤율인데, 2010년 기준으로 12%에 달한다.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율이며, 이 경우 2010년 기준으로 7.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2.1% 였고 2007년과 2008년 12.6%로 높아졌다가 2010년 12%를 기록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율의 최근 현황도 2006년 7.7% 2009년 8.1% 이다가, 2010년 7.1%를 보이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 경제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실상과 다르다. 또한 빈곤율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빈곤층이 있다는 것을 구성원으로 관점을 이동했다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리고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0년 기준 10.17%)

단일 방정식, 연립방정식, 패널 방정식으로 경제 관계의 내생성을 다루었으며 데이터는 활용 가능한 한 확장했다. 자료가 일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광공업부문, 즉 한국경제의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기업체수와 종사자 수, 급여 수준, 산업집중도 등 표에 제시된 경제변수들과 잠재성장률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자료는 통계청, 산업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세계은행에서 공개한 것을 이용했다.

1. 한국의 잠재성장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Hodrick-Prescott 필터법으로 추정했다. 경제이론의 토대가 약한 순수통계기법이라는 것이 단점이지만 오형석(2007)에 따르면 차이는 거의 없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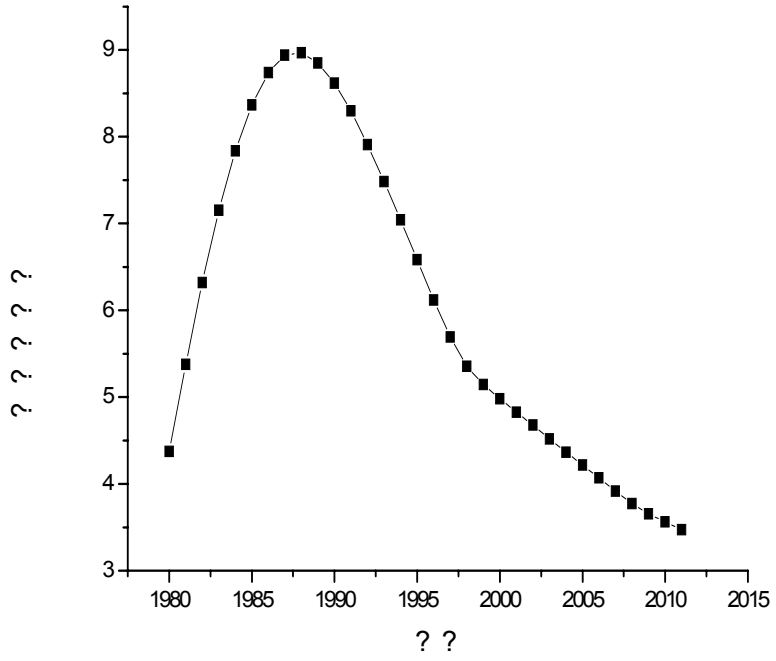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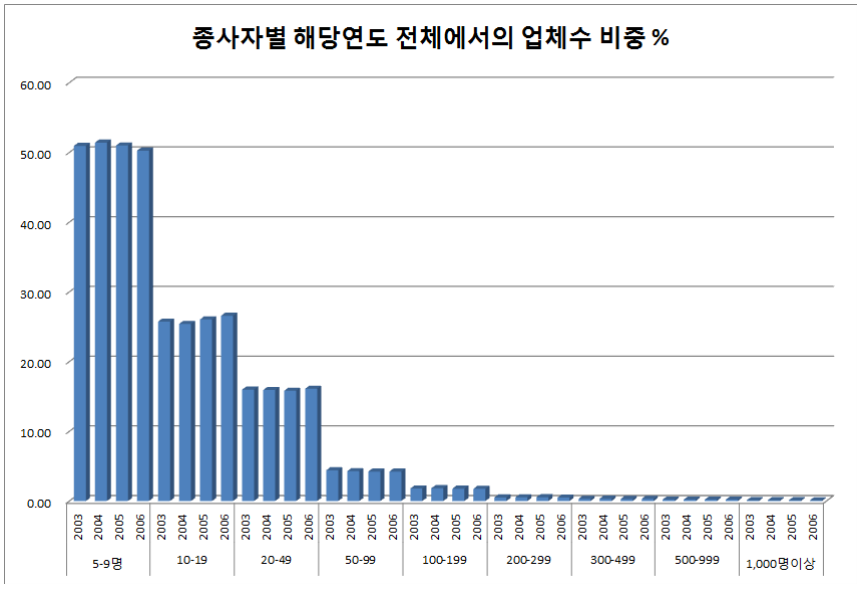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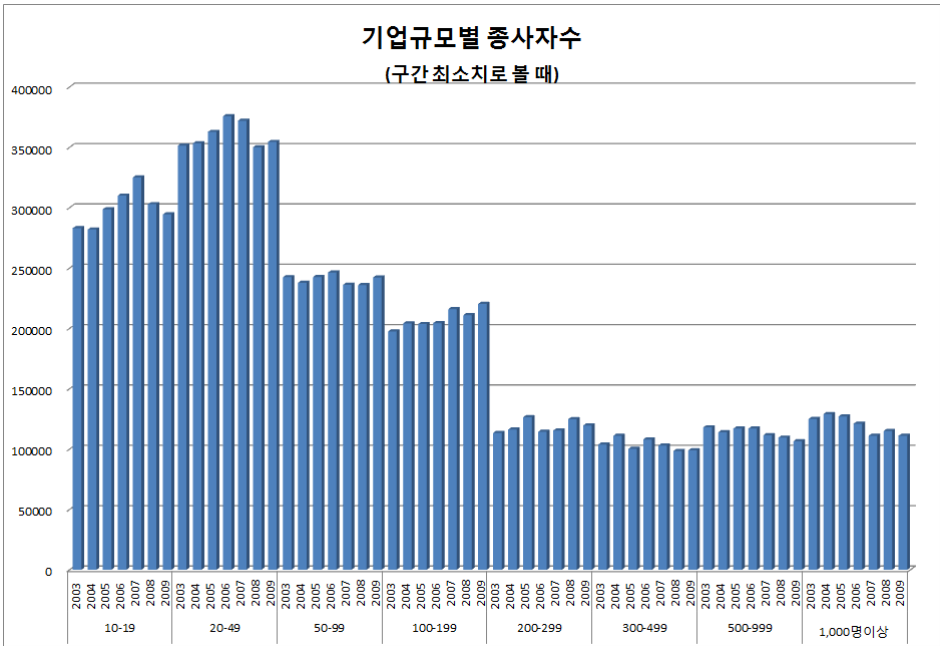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2. 규모별 기업체수와 고용 흡수력

종사자수로 업체규모를 구분한 업체수가 시간 흐름에 따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종사자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한 특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는 고용 흡수력과 관련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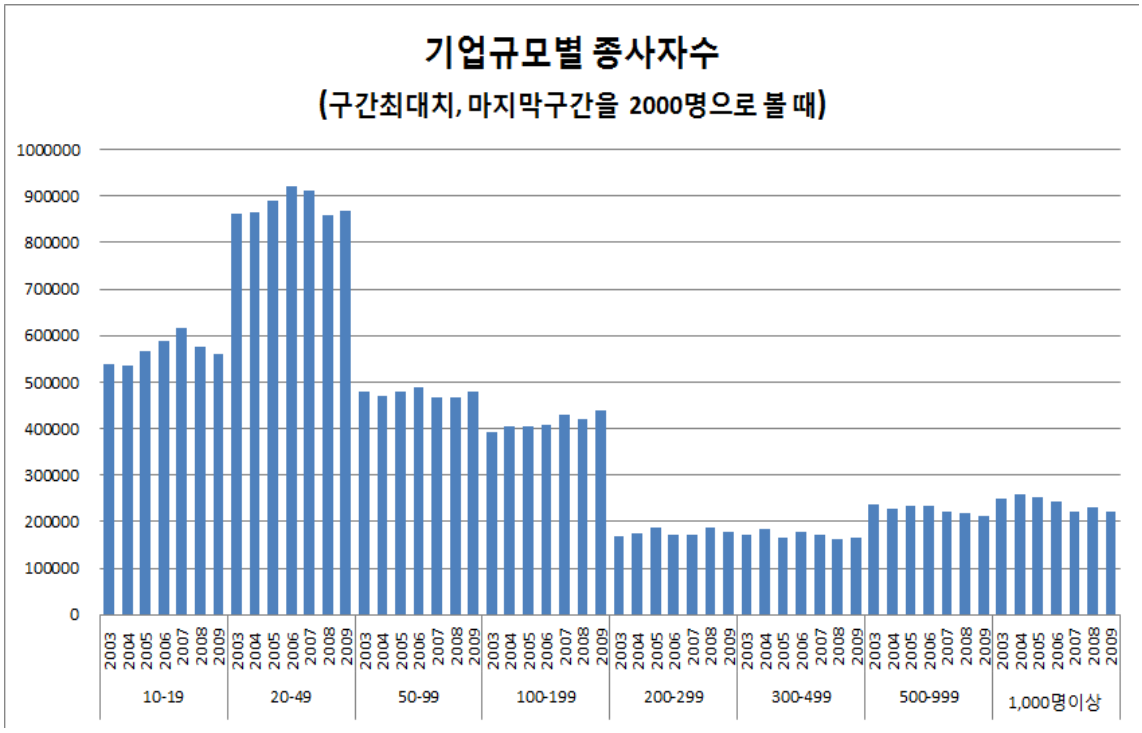
다음으로 광공업부문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을 보고자 한다. 종사자가 20~49명인 기업체 구간에서 고용 흡수력이 크다. 각 구간의 최소치로 고용 인원을 보면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높아 보인다.



각 구간별 최대종사자 수로 보았을 때 고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역시 종사자수 20-49 구간의 업체들이 고용 흡수력이 큰데, 대기업 업체당 고용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비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인 샘플을 참고하면 2012년 종사자수 1위 기업이 삼성전자로 국내 종사자 10만 1973명(해외 종사자 11만 9753명), 2위 현대자동차 약 5만 7105명, 3위 LG 전자 3만 5286명, 4위 LG 디스플레이 3만 4803명, 5위 기아자동차 3만 2411 명 등이다.

평균 2,000명으로 마지막 구간을 계산할 때와 10,00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다음과 같다. 현실과 다르지만 마지막 구간의 대기업들 종사자수가 평균 10,000명 일 때를 함께 본 이유는 우리 경제에 대기업들의 평균 고용흡수력이 클 때는 어떤 지 궁금해서이다. 생산성 문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크기 등이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초기점을 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만간 현실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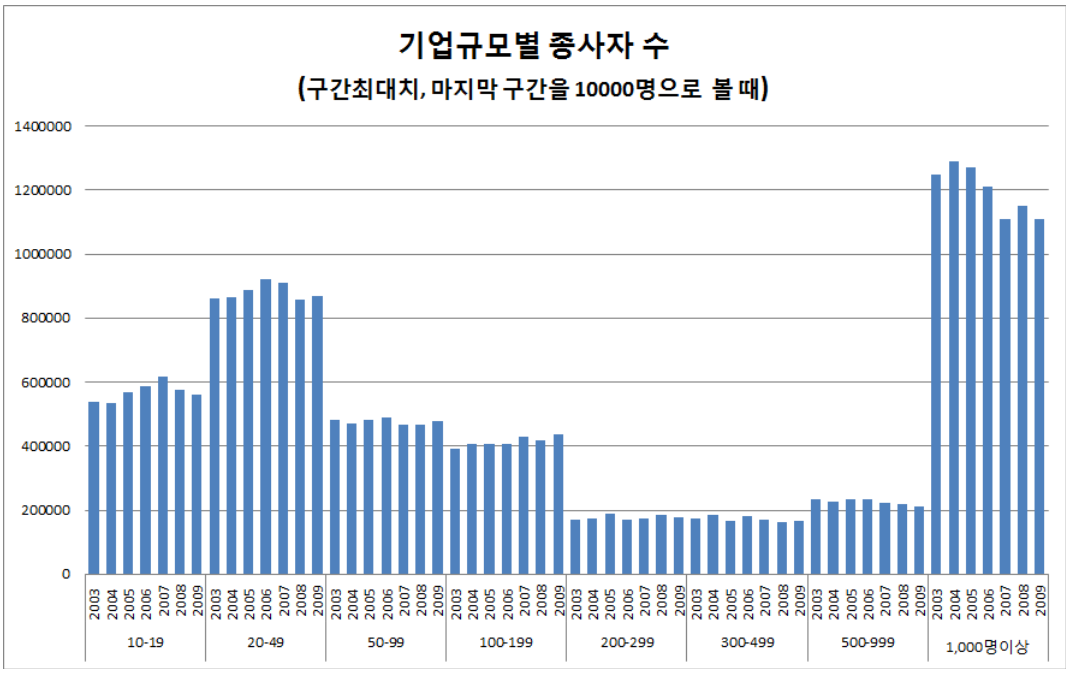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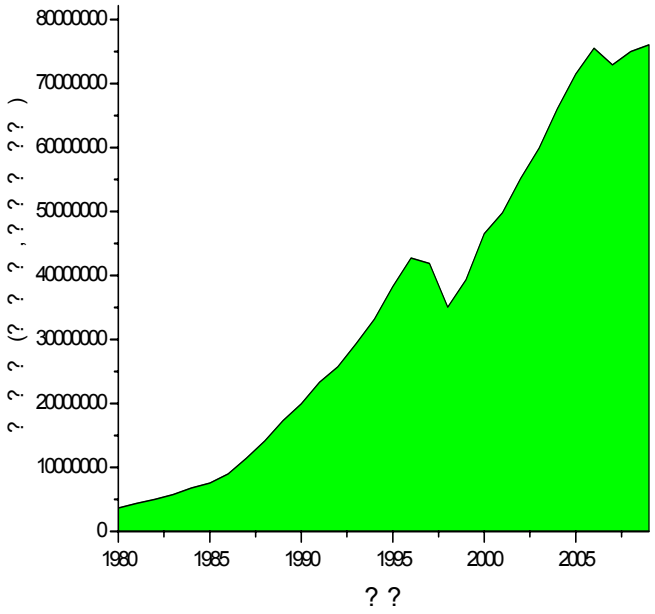


그림 6. 한국 제조업 광업 부문 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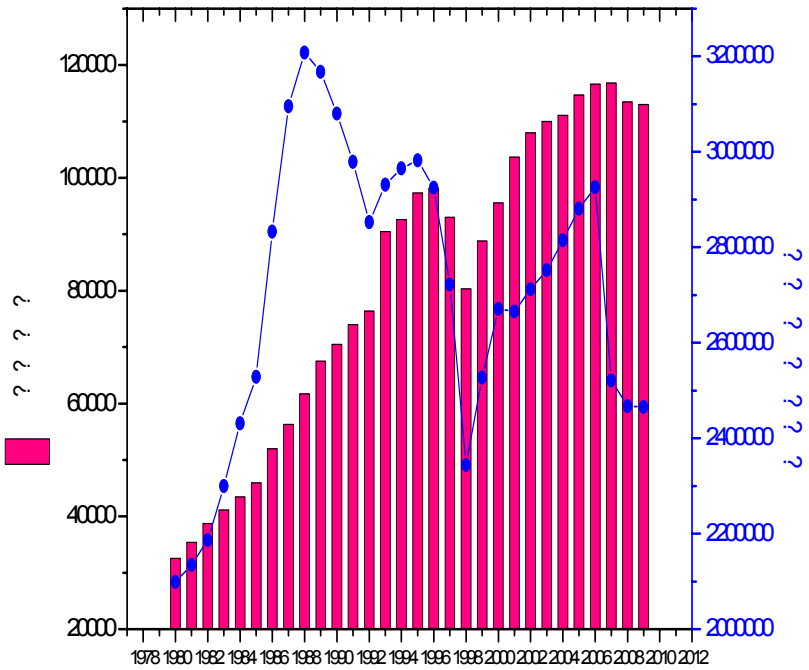


참고로 부가가치 증가속도와 기업체 수, 월평균종사자수가 비례하고 있지는 않다. 이 통계들 안에 고용된 사람들의 월급여, 근로 시간 등 근로실태를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예상대로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급여가 크고, 총 근로시간은 3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가장 길다. 사업체 규모별 근로실

태의 표준편차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별 월급여액과 정액급여액은 2006년에 비해 2010년 편차가 커졌다. 경제민주화와는 다른 방향일 수 있다.

그림 7. 한국 제조업 광업 부문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1997년 말 외환위기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효과도 보인다. 1980년대부터 본 제조업과 광업 부문 기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다.

Ⅶ 실증 결과

세상에 인과 관계로부터 고립된 변수는 찾기 드물지만, 엄격한 계량 테스트를 통과한 관계도 흔치 않다. 다른 통제변수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복잡한 인과관계의 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정도로 강하다면, 그 결과가 심증과 다르다 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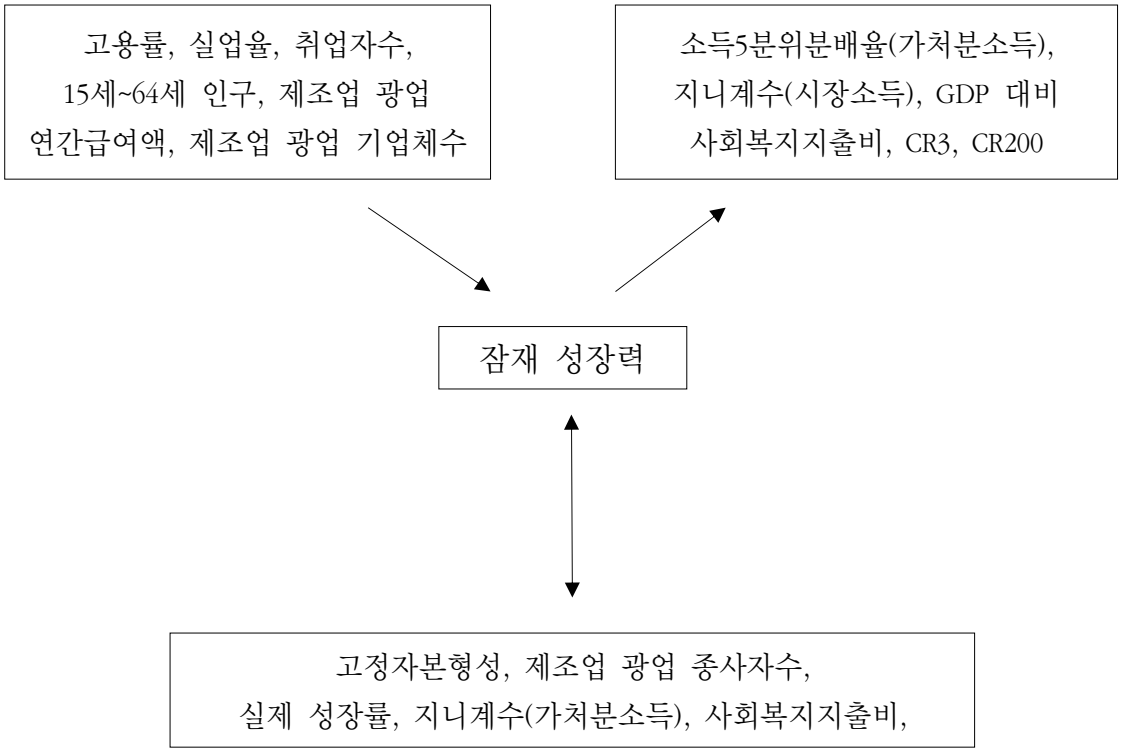
인과관계는 경제 이론에서 말해주는 것이며, 계량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계량화된 결과물보다 직관을 이용해 자신의 심증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숫자를 낯설어 하고 몇 단계의 논리가 깔릴 때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향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성실하게 계량 분석을 해 놓고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주눅 들린 태도, 시비 걸릴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소극성, 전공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쉬우면서도 핵심이 들어간 경제 이론 및 계량 테크닉 설명 부족, 현학적 태도 등의 합작품이다. 지양해야 한다.

아래 제시하는 실증 결과들은 많은 시도를 한 끝에 가장 종합적이며 일관적며 보고할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했다.

1. 그랜저 인과관계 결과

자료의 상관관계는 변수 간 관계의 선형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보여주며 그랜저 인과 관계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 어떤 시계열 자료의 과거치가 다른 시계열 자료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로 판단하는 그랜저 인과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잠재 성장력을 중심으로 유의성 10% 이하만 정리했다.



잠재성장력에 그랜저 인과관계에서 잠재성장력에 대한 원인부분은 주로 고용변수, 인구변수, 기업체수 등이라는 점, 그리고 잠재성장력의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 소득분배의 현상변수, 복지지출-GDP 비율, 산업집중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민주화가 잠재성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방향 시각(unidirectional perspective) 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잠재 성장률과 한국 경제 변수 사이의 단순한 선형관계는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의외인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 했는데, 이변수가 선형관계일 뿐이니 큰 의미는 없다.

2. 단일방정식

다중 회귀는 과거 자료에 대한 일종의 통제된 실험과 같은 것이며 잔차에 대한 기본 검증 테스트를 통과 했다면 무게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파라미터가 변경되는 한계는 고려해야 하지만 짧은 미래를 내다본다면, 루카스 비판에서 말하는 경제의 구조적인 심각한 변화는 드물다.

$$\text{잠재성장률}_t = \beta_1 + \beta_2 \text{잠재성장률}_{t-1} + \beta_3 \text{경제민주화현상} + \beta_4 \text{통제변수들} + \epsilon_t$$

$$\epsilon_t \sim N(0, \sigma^2)$$

많은 시도를 해본 결과, 위의 세팅에서 가장 parsimonious 하며, 각 설명 변수가 유의하고, 자기상관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단일 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복지지출비의 증가는 잠재성장력에 미소한 영향을 미치지만 1% 유의수준으로 유의하다. 2012년 하반기 뉴스거리가 된 고소득층 노인들의 국민기초연금 수령 사례처럼 눈먼 돈이 되지 않고 혈세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게 닿도록 정교한 사회 안정망이 된다면 조세 부담의 측면이나 조세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한국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계수의 크기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분야가 포퓰리즘 영역이 아닌 그 자체로 공정함을 겸비해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 최대 3사의 산업집중도(concentration ratio 3, CR3)가 높을수록 잠재성장력에 유의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R10, CR100, CR200 등의 변수

들이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톱 3개사에의 산업집중도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에 중요하며 산업 집중도라는 의미 를 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과점 이윤이 인센티브가 되어 창조와 연구 개발 혁신으로 이어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업 집중도가 높아져 국내 경제가 소수 플레이어만의 무대가 되는 것은 성장에 한계를 그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도적인 플레이어도 국내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키워질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결과는 잠재 성장율의 움직임이 비선형임도 보여 준다. 이 변수가 없는 경우 Ramsey RESET test를 통과하지 못한다. 본 본고서가 관심 있게 본 기업체 수는 많을수록 잠재성장력에 도움이 되는데 이 때는 자기상관 문제가 심각해져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하지 않았다.

혹자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에서 인과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추정기간에 따라 다르고, 또한 다중회귀에서 이 문제는 벡터의 방향성이 다른 변수들이 들어와 순효과를 측정하면서 완화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는 구성원으로의 관점과 잠재 성장이라는 총량으로의 관점 사이에 있는 변수들이 보인 유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종속변수: 잠재성장율(t)

추정기간: 2000 ~ 2009년

Variable	추정치	Significance	p-value
C	-1.90	**	0.02
잠재성장율(t-1)	1.63	***	0.00
잠재성장율(t-1)^2	-0.057	**	0.03
사회복지지출액	0.0000000028	***	0.00
TOP3 CR	-0.002	**	0.02
R-squared	0.99998	Durbin-Watson	2.07
Adjusted R-squared	0.99996	S.E. of regression	0.00278

Breusch-Godfrey Serial Correlation LM Test			
F-statistic	1.506		
p-value	0.35		
Heteroskedasticity Test: Breusch-Pagan-Godfrey			
F-statistic	2.714		
p-value	0.1514		
Residual Normality Test			
Jarque-Bera	0.103		
p-value	0.949		
Ramsey RESET Test			
F-statistic	1.342		
p-value	0.311		

3.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성장은 일종의 교란이며 정적, 동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제이고, 경제민주화는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둘은 조응하며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장과 분배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외형상 무관해 보이는 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추정했으며 자기상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집중도는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나 유의하지는 않고, 광공업 부문 기업체 수의 증가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잠재 성장율을 미소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수의 증가가 반드시 잠재성장력의 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조사되는 서비스업체수를 일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이 결과로 우리나라 광업과 제조업부문 기업체 수가 잠재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기업은 경제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생산 조직이다.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공정성 정도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내생적으로 결정될 기업체 수가 적정한 정도로 있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결과이어야 한다. 전술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경쟁이 격화

되면서 기업체 수가 줄고 경쟁의 결과 나타난 혁신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스토리로 전개되게 된다.

이노베이션을 하고 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특정 기업이라면 이러한 경쟁에서 타 기업들은 도태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부당한 경쟁을 모두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는 실증적인 문제이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파레토 개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 분위 배율을 종속변수로 한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추정결과는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가 예상대로 유의하게 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광공업부문 종사자수의 증가가 분배를 개선시키고 있어, 앞서 언급한 한국 경제의 광공업 부문 고용 흡수력이 소득 분배 구조 개선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력의 증가가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잠재 성장과 소득 분배 사이에 긴장관계가 감지된다.

이 결과와 방향성이 다르지만 Shin(2012) 에 따르면 경제 성장 초기에는 높은 소득 불평등이 성장에 방해가 되고 정상상태(steady-state)에 가까이 오면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과 소득 분배 사이의 긴장관계는 한국 경제의 성장 국면이 어디쯤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Lee(2010)에 의하면 개방 변수를 생각할 경우 전환점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과 개방 사이의 선순환 국면에 들어가기 전이며 유럽은 들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기간 1990~2009년

$$\text{잠재성장}_t = 0.22 + 0.96\,\text{잠재성장}_{t-1} - 1.12e-06\,firms - 0.002\,CR3$$
$$prob. \quad (0.13)\ (0.00)^{***} \quad (0.06)^{*} \quad (0.13)$$
$$\text{분배} = 1.13 - 3.56e-07\,\text{종사자} + 0.34\,\text{상대적빈곤율} + 0.14\,\text{잠재성장}$$
$$prob. \quad (0.09)^{*} \quad (0.03)^{**} \quad (0.00)^{***} \quad (0.002)^{***}$$

Equation 1.

Adjusted R-squared 0.99 Durbin-Watson 2.09

Equation 2.

Adjusted R-squared 0.97 Durbin-Watson 1.74

System Residual Portmanteau Tests for Autocorrelations

Lags	Q-Stat	Prob.	df
1	1.167	0.862	4
2	3.091	0.883	8
3	4.425	0.9345	12
4	5.173	0.976	16
5	6.882	0.963	20
6	10.557	0.727	24
7	12.212	0.629	28
8	13.466	0.505	32
9	13.651	0.607	36

System Residual Normality Tests

Null Hypothesis: residuals are multivariate normal

Component	Jarque-Bera	df	Prob.
1	3.431599	2	0.1798
2	0.022157	2	0.989
Joint	3.453757	4	0.4849

4. 패널 자료 추정

고정효과를 넣은 패널 자료 추정으로 34 개국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했다. 고정자본형성, 실업율, 비정규직 고용변수를 통제변수로 넣었을 때 하위 소득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잠재성장력에 유의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위 소득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잠재성장력 확충에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보아, 전체 성장을 흩뜨리지 않으며, 구성원이 흔쾌히 용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세계적으로도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상관성문제가 있어 추정량의 표준오차 및 추정치에 대한 검정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성장률로 결과를 내게 되면 자기상관성 문제가 사라진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위 소득 20%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력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국의 잠재성장률을 사용할 때와 달리 실제성장률을 넣었을 때 동일한 과거의 충격 이월효과가 잘 제거 제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량 설계를 다르게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패널자료 추정의 경우, 저자는 실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선호한다.

종속변수: 잠재성장률

추정기간 1981~2010년

34개국 Unbalanced panel data, 고정효과

설명변수	추정치	유의성	p-value	설명변수2	추정치2	유의성2	p-value2
constant	1.360		0.374	constant	4.529	***	0.004
Gross capital formation	0.044		0.130	Gross capital formation	0.043		0.151
실업률	-0.229	***	0.000	실업률	-0.251	***	0.000
Vulnerable employment	0.059	**	0.019	Vulnerable employment	0.045	*	0.069
Low income 20%	0.340	**	0.023	High income 20%	-0.020		0.392

(참고)
(1) Low income 20%: Income share held by lowest 20%
(2) High income 20%: Income share held by highest 20%
(3) Vulnerable employment: total (% of total employment)
Vulnerable employment is unpaid family workers and own-account workers as a percentage of total employment.
(4) 포함된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부아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그, 멕시코, 네덜란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칼,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quation 1 with Low income 20%
Adjusted R-squared 0.35 Durbin-Watson 0.18

Equation 2. with High income 20%
Adjusted R-squared 0.33 Durbin-Watson 0.15

종속 변수: 실제 성장률
추정 기간: 1981~2010 년
36 개국 Unbalanced panel data, 고정효과

설명변수	추정치	유의성	p-value	설명변수2	추정치3	유의성4	p-value5
constant	-1.455		0.6081	constant	4.376		0.198
GROWTH(-1)	0.119	*	0.0807	GROWTH(-1)	0.138	**	0.0411
GROWTH(-1)^2	0.022	***	0.0041	GROWTH(-1)^2	0.020	***	0.0093
Gross capital formation	0.176	**	0.0186	Gross capital formation	0.159	**	0.0351
실업률	-0.320	***	0.0082	실업률	-0.372	***	0.0018
Low income 20%	0.710	**	0.0472	High income 20%	-0.040		0.4868

(참고)
(1) Low income 20%: Income share held by lowest 20%
(2) High income 20%: Income share held by highest 20%
(3) Vulnerable employment: total (% of total employment)
Vulnerable employment is unpaid family workers and own-account workers as a percentage of total employment.
(4) 포함된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부아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그, 멕시코, 네덜란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칼,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미국, 한국

Equation 1 with Low income 20%
Adjusted R-squared 0.2 Durbin-Watson 1.89

Equation 2. with High income 20%
Adjusted R-squared 0.19 Durbin-Watson 1.92

Ⅰ 결 론

한국 경제가 경제 민주화, 즉 구성원으로 관점을 이동할 만큼 성장해 잠재성장력 간의 관계를 논할 단계에 와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집중도를 경제민주화를 특징짓는 변수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잠재성장력에 영향을 준다. 상위 3개사의 산업집중도, CR3 가 클수록 한국 경제 잠재성장력에 부정적이다.

CR100, CR200 등 더 많은 기업의 산업집중도 보다도 상위 3개사의 산업 집중도가 유의하다는 것은 산업집중도가 갖는 의미와도 부합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점유도가 높다는 것은 경쟁 압력이 없어 독과점 폐해와 잠재성장력 악화로 이어진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룰을 잘 지키며 현재의 산업집중도를 보일만큼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정했음에도 대세가 그러한지, 공정성에 관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지, 아니면 공정성 이상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 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2) 잠재성장률, 실제성장률 등의 총량 변수에 긍정적이라고 해서, 즉, 미시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부당함이 거시 경제 결과에 닿을 만큼 크지 않다 해도 과정상의 부당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생텍쥐베리 1943). 경제 민주화의 관점은 이를 통찰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 사회적 신뢰, 공정성 등 외부성이 큰 자산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외부성이 강한 공정성을 한국 경제에 도입하는 것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의지를 크게 해 잠재 성장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며, 내생적 성장이론에 spillover 효과가 있는 공정성을 변수로 넣으면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3) 잠재성장력이 커지면 분배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성장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 분배를 의식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과거 자료에 근거한 이 결과는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동반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제조업과 광업부문 종사자수를 늘릴수록 분배가 개선된다. 경제민주화의 산업 구조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서비스 업이나 IT 산업이 강조되어 왔으나, 고용흡수력이 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육성이 우리 경제의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경제 민주화의 방법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노동귀족과 대기업 간, 기업과 정치권 간의 관계에서 이미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워서, 또는 감독해야 할

관계 부처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체념하고 있어서 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찾아, 정도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도층이 할 일이다.

미시적으로 불완전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할 일을 거시 정책이나 거대한 정책 실험으로 덮는 것은 포퓰리즘을 부르는 일이다.

(6) 향후 연구 방향은 거시적인 잠재성장력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보다도 경쟁원리, 성장, 경제적 자유, 창의성, 노력한 자의 과실을 해치지 않으면서 불공정, 부당 경쟁을 막을 정교하며 공감대를 이끌어낼 제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적인 연구는 방법론에 따라 이미 결론이 예상된다는 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유용하다.

(6-1) 일반균형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모델과 파라미터가 결론을 암시한다. 그러나 모델 내의 내생변수와 파라미터 사이의 역학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정교한 정책을 디자인하는데 유용하다.

(6-2)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 순효과를 측정하는 계량 분석은 경제 이론과 연구자가 설정한 인과 관계를 정교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라는 제약, 구조적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가진 그 동안의 경향성, 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 민주화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주제는 개선에 방향을 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해야할 제도가 무엇인지 필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로 과거 데이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7)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매우 구체적인 육하원칙을 갖춘 소소한 에피소드에서 사실과 진실, 과장과 왜곡 등이 보일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선진화 채널이 잡힐 수 있다. 자주 듣는 얘기에 익숙해지고 그 입장을 동정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모두를 동정하고 싶으면 모든 얘기를 들어야 한다. 모순되는 현상들이 있어 정리해야 하고 사실 확인해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피곤하지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다.

(8) 경제민주화를 시장구조에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면, 경쟁의 완화 또는 경쟁의 심화가 잠재 성장력에 줄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9) 경제 민주화를 공정성이라는 외부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본다면, 가급적 비용 없는 긍정적 스필오버 효과를 노려야 한다. 조세를 도입하고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외부성이라면 최적 수준을 찾아야 한다

(10) 계량화되고 이론화될 때는 구성원의 각기 다양한 사연이 묻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하나 하나 모두 소중하지만, 결과는 결국 요약되고 종합된다.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고, 유능한 정부와 학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경제가 예측 가능하며, 거래비용을 줄여 더 행복하게 성장하자는 데 있다.

참고문헌

김선빈(2012a),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이슈와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김선빈(2012b), 늘어나는 생계형 자영업자, 원인은?, 이슈와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배미경(2009), 한국 42대 제조업의 성장잠재력 추정과 그에 따른 성장고도화 전략 모색

여의도 연구소(2012), 경제민주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9.11. http://www.ydi.or.kr

여의도 연구소(2012),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9.11.,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이상승 발제 유진수, 최병일, 김동선, 정중원, 박인례 토론, 강석훈 사회.

오형석(2007),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 및 경기변동에 관한 분석, 금융연구 21권 1호, 19~53

이상승(2012):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인권, 김현종(2004),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2006),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쟁정책의 모순: 설계지향적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질서,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1

Barro, R.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endogenous growth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S103-S125

Berg, Andrew; Ostry, Jonathan D.; Zettelmeyer, Jeromin(2012), What Makes Growth Sustaine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8(2), 149~166

Bresnahan, T. F. and P.C. Reiss(1993), "Measuring the Importance of Sunk Costs, Annales D'Economie et de Statistique 31, 181~217

Denicolo, V. and P. Zanchettin (2010). "Competition, Market Selection and Growth", Economic Journal 120(545): 761-785.

Dixit, A.(1980), "The Role of Investment in Entry-Deterrence", The Economic Journal, 90, 95~106

Dixit, A.(1989), "Entry and Exit Decisions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3), 620~638

Eaton, B.C. and Ware, R. (1987), "A Theory of Market Structure with Sequential Entry", Rand Journal of Economics, 18, 1~16

Lee, Jong Eun(2010), "Inequality in the Globalizing Asia, Applied Economics Volume 42 Number 23: 2975-2984, September

Lee, Jong Eun(2006), "Inequality and Globalization in Europe", Journal of Policy Modeling 28: 791-796

Mourmouras, Iannis A. and Jong-Eun Lee(1999), Government Spending on Infrasructure in an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Finite Horizons

Shin, I.(2012),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Modelling, 29(5), 2049~2057

생텍쥐베리(1943), 어린 왕자

시오노 나나미(2006), 로마인 이야기 15권, 로마 세계의 종언

부록 1. 잠재성장률과의 상관관계

한국경제변수들	잠재성장율과의 상관계수
초등교육	-0.974
중등교육	0.561
고등교육	-0.988
실업률	0.477
vulnerable employment	0.972
WAGECONSENSUS	0.804
Labor force	-0.985
광공업 급여액	-0.928
광공업 중소기업 급여액	-0.660
Gross capital Formation	-0.448
규제의 수준	-0.063
법치	-0.222
부패통제	0.028
CR10	-0.888
CR100	-0.990
CR200	-0.953
CR3(단순평균)	-0.911
CR3(가중평균)	-0.933
HHI(단순평균)	-0.917
HHI(가중평균)	-0.839
실제성장률	0.450

제4부

종 합 토 론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